202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IV)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 문화체육관광부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8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

Ⅱ. 사업별 검토 ····· 12

【일반회계】

<세 출> ····· 12

1. 재해복구비 사업: 연례적 이·전용을 통한 예산 집행 및 실집행부진 부적정 ····· 12

2.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사업: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부적정 등 ····· 15

3.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신규): 법정기한 내 방화막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0

4.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ODA): 구체적인 사업내용 확정 전 기자재 사전 구입 부적정 ····· 23
5.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ODA):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교부로 인한 건립사업 무산 부적정 ····· 27
6.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 31
7.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신규):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필요 ····· 34
8.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 리스크관리 강화 및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 ····· 36
9.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 사업 성과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39
10.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 조화로운 공익성과 수익성 달성을 위한 대관 및 대관료 부과 방식 개선 필요 ····· 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 46

11.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연례적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4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49

1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49

【문화예술진흥기금】

<지 출> ····· 53

13.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 53

14.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신규): 이용률 저조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부적정 등 ····· 58

【관광진흥개발기금】

<지 출> ····· 60

15.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 ····· 60

1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등 ····· 63

17.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융자지원 대비 이차보전 운영지원 집행실적 부진 ····· 67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 출> ····· 70

18. 축구 국가대표 전용숙소 건립 사업: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 70

19.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실제 수요 및 기금 여유자금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74

20.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연례적 실집행부진 개선 필요 ····· 76

21.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신규): 사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집행 부진 ····· 80

【기 타】

2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자펀드 결성 지연 및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 개선 필요 ····· 83

❖ 국가유산청 ····· 87

Ⅰ. 개 관 ····· 87

1. 결산 개요 ····· 87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92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3

Ⅱ. 사업별 검토 ····· 94

【일반회계】

<세 입> ····· 94

1.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 94

<세 출> ····· 97

2. 연구개발사업관리 사업: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홍보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 97
3.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신규): 적정 비축량 및 공급 기준 마련 필요 ····· 99
4.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 ····· 101
5.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사업 성과의 면밀한 추적·관리를 통한 사업 방식 점검·개선 필요 ····· 104
6.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106
7.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 사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110
8.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종료):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113

9.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및 면밀한 사업점검 필요 ····· 116
10.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신규):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 119

【기 타】

1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 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127

Ⅰ. 개 관 ····· 127

1. 결산 개요 ····· 127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33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5

Ⅱ. 사업별 검토 ····· 136

【총 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부족: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세출사업 구조조정 필요 ····· 136
2. 청년농업인지원 사업들의 예산집행 부진사유 검토를 통한 사업 개선방안 모색 필요 ····· 140
3. 한국농어촌공사: 공사부채비율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148
4. 연례적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부진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실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 반영 필요 ····· 151

【일반회계】

<세 출> ····· 165

5. 국제농업협력(ODA): 외교부 ODA사업과 차별화 필요 등 ····· 16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172

6. 농업자금이차보전: 이차보전과 직접융자사업의 차별화 필요 등 ····· 172

7. 농축산물 할인지원: 적정예산 편성 및 농축산물 수요 증가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177

【양곡관리특별회계】

<세 출> ····· 179

8.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정산: 정밀한 사전수급계획 마련 및 성과지표 개발 필요 ····· 17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 입> ····· 183

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 기금수입 감소 추세를 고려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사업구조조정 필요성 검토 등 ····· 183

<지 출> ····· 189

1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가락시장현대화사업 등): 공사지연에 따른 적정 사업비 편성 필요 ····· 189

11.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비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 194

【농업 · 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 출> ····· 197

12. 공익기능증진직불: 이행준수사항 합리적 개선 및 공익기능 제고 위한 제도보완 필요 ····· 197

【축산발전기금】

<지 출> ····· 204

1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장개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설계 필요 등 ····· 204

【기 타】

1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07

❖ 농촌진흥청 ·····208

Ⅰ. 개 관 ····· 208

1. 결산 개요 ····· 20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12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13

Ⅱ. 사업별 검토 ····· 214

【총 괄】

1. 연례적 사업진행 지연 및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다음연도 예산안 검토 필요 ····· 214

【일반회계】

<세 출> ····· 224

2.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외교부 ODA사업과의 차별화 및 연계 필요성 등 ····· 224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부처간 사업 일원화 추진 검토 및 지자체 사업 독려 필요 ····· 230

4.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조사항목 효율화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강구 필요 ····· 2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237

5. 고객현장지원: 일반회계로 적정 계상 필요 ····· 237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239

❖ 산 림 청 ·····240

Ⅰ. 개 관 ····· 240

1. 결산 개요 ····· 24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44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45

Ⅱ. 사업별 검토 ····· 246

【총 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및 세출사업 구조조정 필요 ····· 246

【일반회계】

<세 출> ····· 249

2.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통합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49
3. 산림헬기 도입·운영: 국산헬기 도입의 적극추진 필요성 등 ····· 252
4. 산불방지대책: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사업비의 미집행 과다 등 ····· 255
5. 국제산림협력 및 국제산림협력공적개발원조: 외교부 ODA사업과의 차별화 및 연계 필요성 등 ····· 259
6. 산림생물다양성증진: 내역사업 정비를 통한 세부사업화 필요 등 ····· 26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계정)】

<세 출> ····· 270

7. 조림: 경제적 이익과 산불방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등 ····· 270

8.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산출 정확성 제고 및 공익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75
9. 목재산업육성: 내역사업 구조조정 및 목재펠릿 보일러보급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84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291

❖ 해양수산부 ·····292

Ⅰ. 개 관 ····· 292

1. 결산 개요 ····· 29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97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98

Ⅱ. 사업별 검토 ····· 299

【총 괄】

1.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펀드 사업: 회수된 지원액 국고 반납 필요 ····· 299
2. 시험연구비: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집행 부적정 ····· 308

【일반회계】

<세 출> ····· 313

3.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신규): 근거 법률 제정 전 연구용역 발주 부적정 등 ····· 313
4.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317
5.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 국고부담 개선을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320
6. (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사업(신규, 종료): 부처 간 협의 미흡으로 예산 전액 불용 부적정 ····· 322
7.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적정 규모의 출연금 편성을 통한 인건비의 과다이월 방지 필요 ····· 324
8. 침몰선박 관리사업: 사업계획 부실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간 불일치 발생 ····· 328

9.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재이월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3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총 괄> ····· 336

10. 세입 총괄: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증가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3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343

11.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연도 중 사업 내용 확대·변경 부적정 ····· 343

12.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을 위한 점검 및 관리 필요 등 ····· 348

13.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수검 실적 제고 노력 필요 ····· 352

14.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등 ····· 35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 359

15.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지원대상 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 359

16.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집행가능액을 초과한 이월액 즉시 반납 필요 ····· 365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세 출> ····· 368

17.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총괄: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 다수 발생 부적정 ····· 368

18.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 375

19. 마리나 항만 사업: 관계기관 간 협의 강화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리 필요 ····· 379
20. 무역항(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신규): 신규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 준비 및 검토 필요 ····· 38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385

21. 혁신어촌조성 사업(종료)·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사업기간 현실화 및 실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등 ····· 385
22. 귀어귀촌촉진 사업: 연말에 불용 예상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충전한 캐시 등의 국고 반납 필요 ····· 392

【수산발전기금】

<지 출> ····· 395

23.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연으로 인한 직불금 연내 미지급 문제 ····· 395

【기 타】

24.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연례적 이월 시정 필요 ····· 400

❖ 해양경찰청 ·····403

Ⅰ. 개 관 ····· 403

1. 결산 개요 ····· 40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07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08

Ⅱ. 사업별 검토 ····· 409

【일반회계】

<세 출> ····· 409

1. 마약수사역량강화 사업: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 규모 임의적 조정 지양 필요 ····· 409
2.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 불용예상액을 활용한 신규 장비 구매 부적정 등 ····· 413
3.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사업: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등 ····· 417
4. 대형헬기(5호기) 1대 사업: 사업의 추가적 지연 방지 필요 등 ····· 422
5. 함정건조·항공기도입 사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준수 노력 필요 ····· 426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4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433

Ⅰ. 개 관 ····· 433

1. 결산 개요 ····· 43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38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40

Ⅱ. 사업별 검토 ····· 441

【총 괄】

1. 산업·에너지분야 R&D: R&D 종료과제 정산금 미납액 및 제재처분에 따른 미환수금 관리 필요 등 ····· 441
2. 자본잠식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448

【일반회계】

<세 출> ····· 457

3.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높은 보전금리과 도덕적해이가 결합함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필요 등 ····· 457
4.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 공모 접수율 저조에 따른 사업 지연사례 재발 방지 필요 등 ····· 462
5.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사업: 법령상 과제시작일과 실제 협약체결일의 간극의 최소화 필요 등 ····· 467

6.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 실집행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4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475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투자처 재선정으로 인한 청산시점 지연 가능성 최소화 필요 등 ····· 475

8. 주요 기반시설 지원 사업: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법정기한 미준수 등 ····· 48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세 입> ····· 486

9. 정부출자수입: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기관이 제출한 최신 자료에 근거하여 세입예산안 편성 필요 ····· 486

10. 석유수입부과금: 세입예산안 산출의 정확도 개선 필요 ····· 489

<세 출> ····· 492

11. 에너지 국제공동연구(R&D) 사업: 해외정부와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집행 부진 ····· 492

12.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법령상 규정된 국고보조금 재이월 사유의 제한적 해석 필요 ····· 49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융자계정)】

<세 출> ····· 501

13.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 ····· 501

14.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연례적인 이차보전금 불용 방지 필요 ····· 504

【소재 · 부품 · 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세 입> ····· 507

15. 일반회계전입금: 과다한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 507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수 입> ····· 511

16.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기술료 징수 노력 강화 및 법정기한 내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필요 ····· 511

【전력산업기반기금】

<총 괄> ····· 515

17. 전력산업기반기금 총괄: 기금운용계획변경내역 국회제출 법정기한 준수 필요 ····· 515

<지 출> ····· 518

18. 해상풍력산업지원 사업(종료): 계획상 사업종료연도를 도과하여 재이월된 사업출연금의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등 ····· 518

19. 원전수출보증 사업(신규, 종료):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단계적 자금교부 등 금융성기금 출연금의 보다 투명한 관리 필요 ····· 523

20.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사업: 신규인력 적기 확보에 따른 과제 수행 차질 발생 방지 필요 등 ····· 526

21.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신규): 융자금 사용용도의 사업목적 부합성 여부 검토 필요 ····· 53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 출> ····· 538

22.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 추가적인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538

【무역보험기금】

<지 출> ····· 541

23.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보다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 필요 ·· 541

【기후대응기금】

<지 출> ····· 544

24.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의 정액 사업비 편성 필요 ····· 544

25.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실소요를 고려한 기평비 편성 및 철저한 정산관리 필요 ····· 547

【기 타】

2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551

❖ 특 허 청 ·····555

Ⅰ. 개 관 ····· 555

1. 결산 개요 ····· 55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55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60

Ⅱ. 사업별 검토 ····· 56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입> ····· 561

1. 과태료: 장기 미납과태료의 철저한 수납관리 필요 등 ····· 561

<세 출> ····· 565

2.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낙찰차액 사용 필요 ····· 565
3.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미집행된 사업출연금으로 발생한 이자금에 대한 관리규정 정비 필요 등 ····· 568
4. 모태조합 출자 사업: 민간투자의 유치 실적 제고 및 존속기간 만료된 자펀드의 조속한 청산 필요 ····· 575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 579

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세부내역 간 예산 변경 집행 시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579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83

❖ 중소벤처기업부 ·····584

Ⅰ. 개 관 ····· 584

1. 결산 개요 ····· 58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58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90

Ⅱ. 사업별 검토 ····· 591

【총 괄】

1. 연구개발(R&D) 사업: 기한 내 연구과제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 591

【일반회계】

<세 출> ····· 601

2. 수출지원기반활용: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및 서비스 미공급 수행기관 관리 필요 등 ····· 601
3.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데이터셋 등록·이용·거래 부진 개선 필요 등 ····· 607
4. 판로진출지원 사업: 연도 중 임의적 사업내용 변경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후 변경·승인 부적정 ····· 613
5. 공공구매제도운영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부진 ····· 617
6. 글로벌창업허브구축 사업(신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626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 출> ····· 631

7.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631
8. 기업진단 사업: 기업진단 성과 부진에 따른 사업체계 개편 검토 필요 ····· 636
9.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신규, 종료): 사업수요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등 ····· 641
10.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 사업: 구축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647
11. 개발기술사업화 사업(신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수요 과다예측으로 인한 불용 문제 ····· 651

【기술보증기금】

<수 입> ····· 657

12. 고정자산매각익: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회수액 현실화 필요 ····· 657

<지 출> ····· 660

13. 구상권회수지원 사업: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후 적극적인 회수조치 필요 ····· 66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 입> ····· 663

14.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및 지속가능한 수입·지출 구성방안 모색 필요 등 ····· 663
15. 기타경상이전수입: 보조금 반납 지체에 따른 국고반납 지연 부적정 ····· 671

<지 출> ·····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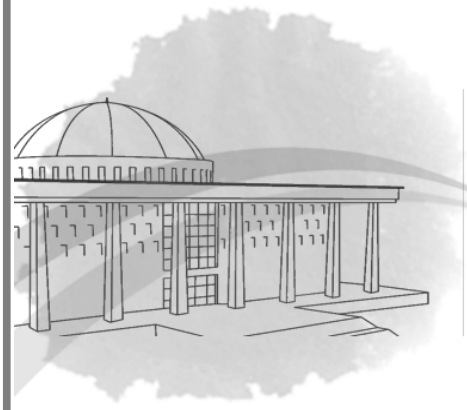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16.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사업(신규, 종료): 수요예측 미흡으로 인한 연도 중 잦은 사업변경 부적정 등 ····· 678

17.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오픈 지연 부적정 ····· 683
18.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 등 ····· 687
19.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역과 다른 집행 및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전환 문제 등 ····· 693

【기 타】

2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7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66억 6,700만원(0.9%)이 많은 4조 214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54억 2,400만원(11.8%)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6,449	96,449	137,611	41,162	98,929	98,929	200,193	101,264	62,582
기 금	3,531,160	3,531,199	3,458,423	△72,776	3,885,862	3,885,862	3,821,265	△64,597	362,842
총수입	3,627,609	3,627,648	3,596,034	△31,614	3,984,791	3,984,791	4,021,458	36,667	425,424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447억 3,800만원(△3.5%)이 적은 6조 7,483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0억 9,200만원(1.6%)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494,095	3,494,095	3,390,540	△103,555	3,696,044	3,696,044	3,563,105	△132,939	172,565
기 금	3,246,728	3,306,098	3,253,689	△52,409	3,258,406	3,297,015	3,185,216	△111,799	△68,473
총지출	6,740,823	6,800,193	6,644,229	△155,964	6,954,450	6,993,059	6,748,321	△244,738	104,092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146억 3,200만원으로, 3,597억 3,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281억 2,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2%)되고 316억 1,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76,857	76,857	-	76,857	166,780	144,003	22,77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7,980	117,980	-	117,980	134,872	134,826	4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795	19,795	-	19,795	58,086	49,295	8,792	-
- 지역자율계정	13,681	13,681	-	13,681	37,218	30,444	6,774	-
- 지역지원계정	5,777	5,777	-	5,777	15,310	13,437	1,873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27	327	-	327	3,619	3,619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	10	-	10	1,939	1,795	145	-
합 계	214,632	214,632	-	214,632	359,739	328,124	31,615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9,406억 6,100만원으로, 이 중 3조 7,189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4%)되고 1,105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11억 3,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347,258	3,347,258	72,910	-	1,940	3,422,106	3,256,711	93,824	71,57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17,980	117,980	11,704	-	-	129,684	105,193	15,211	9,28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6,796	386,796	2,075	-	-	388,871	357,085	1,505	30,281
- 지역자율계정	113,780	113,780	-	-	-	113,780	98,324	-	15,456
- 지역지원계정	263,222	263,222	2,075	-	-	265,297	249,274	1,505	14,517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569	8,569	-	-	-	8,569	8,545	-	24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225	1,225	-	-	-	1,225	941	-	284
합 계	3,852,034	3,852,034	86,689	-	1,940	3,940,661	3,718,990	110,540	111,131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5조 8,027억 700만원으로, 5조 3,323억 8,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조 3,170억 6,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7%)되고, 153억 1,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79,821	579,821	493,331	493,331	-	-
영화발전기금	137,795	137,795	69,189	68,858	332	-
지역신문발전기금	9,837	9,837	12,618	12,526	91	-
언론진흥기금	47,958	47,958	75,411	75,071	340	-
관광진흥개발기금	1,622,181	1,622,181	1,392,714	1,389,158	3,556	-
국민체육진흥기금	3,405,115	3,405,115	3,289,118	3,278,119	10,999	-
합 계	5,802,707	5,802,707	5,332,381	5,317,063	15,318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5조 8,040억 4,500만원으로, 이 중 5조 3,170억 6,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1.6%)되고 126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17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문화예술진흥기금	579,821	579,821	-	579,821	493,331	9,581	5,750
영화발전기금	137,795	137,795	192	137,987	68,858	1,044	2,279
지역신문발전기금	9,837	9,837	-	9,837	12,526	-	304
언론진흥기금	47,958	47,958	-	47,958	75,071	-	606
관광진흥개발기금	1,622,181	1,622,181	204	1,622,385	1,389,158	362	11,221
국민체육진흥기금	3,405,115	3,405,115	942	3,406,057	3,278,118	1,648	81,608
합 계	5,802,707	5,802,707	1,338	5,804,045	5,317,063	12,635	101,76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5,063억 3,000만원이 증가한 18조 8,387억 9,8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44억 4,100만원, 투자자산이 1조 3,137억 3,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523억 4,200만원, 무형자산이 49억 4,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8억 6,3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522억 6,400만원 감소한 2조 4,903억 4,900만원으로 유동부채 1,013억 4,1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6,585억 9,400만원이 증가한 16조 3,484억 4,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조 7,558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30억 6,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705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22억 8,0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8,838,798	17,332,468	1,506,330	8.7
		유동자산	2,630,244	2,595,803	34,441	1.3
		투자자산	9,035,147	7,721,412	1,313,735	17.0
		일반유형자산	7,051,563	6,899,221	152,342	2.2
		무형자산	110,343	105,396	4,947	4.7
		기타비유동자산	11,499	10,636	863	8.1
	부 채		2,490,349	2,642,613	△152,264	△5.8
		유동부채	45,857	147,198	△101,341	△68.8
		장기차입부채	2,381,556	2,431,163	△49,607	△2.0
		장기충당부채	9,269	10,558	△1,289	△12.2
		기타비유동부채	53,667	53,694	△27	△0.1
	순자산		16,348,449	14,689,855	1,658,594	11.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755,867	5,188,933	△433,066	△8.3
	재정운영순원가		4,988,353	5,368,114	△379,761	△7.1
	재정운영결과		2,070,547	2,542,827	△472,280	△18.6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1,006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244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억원이 각각 전출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9억원이 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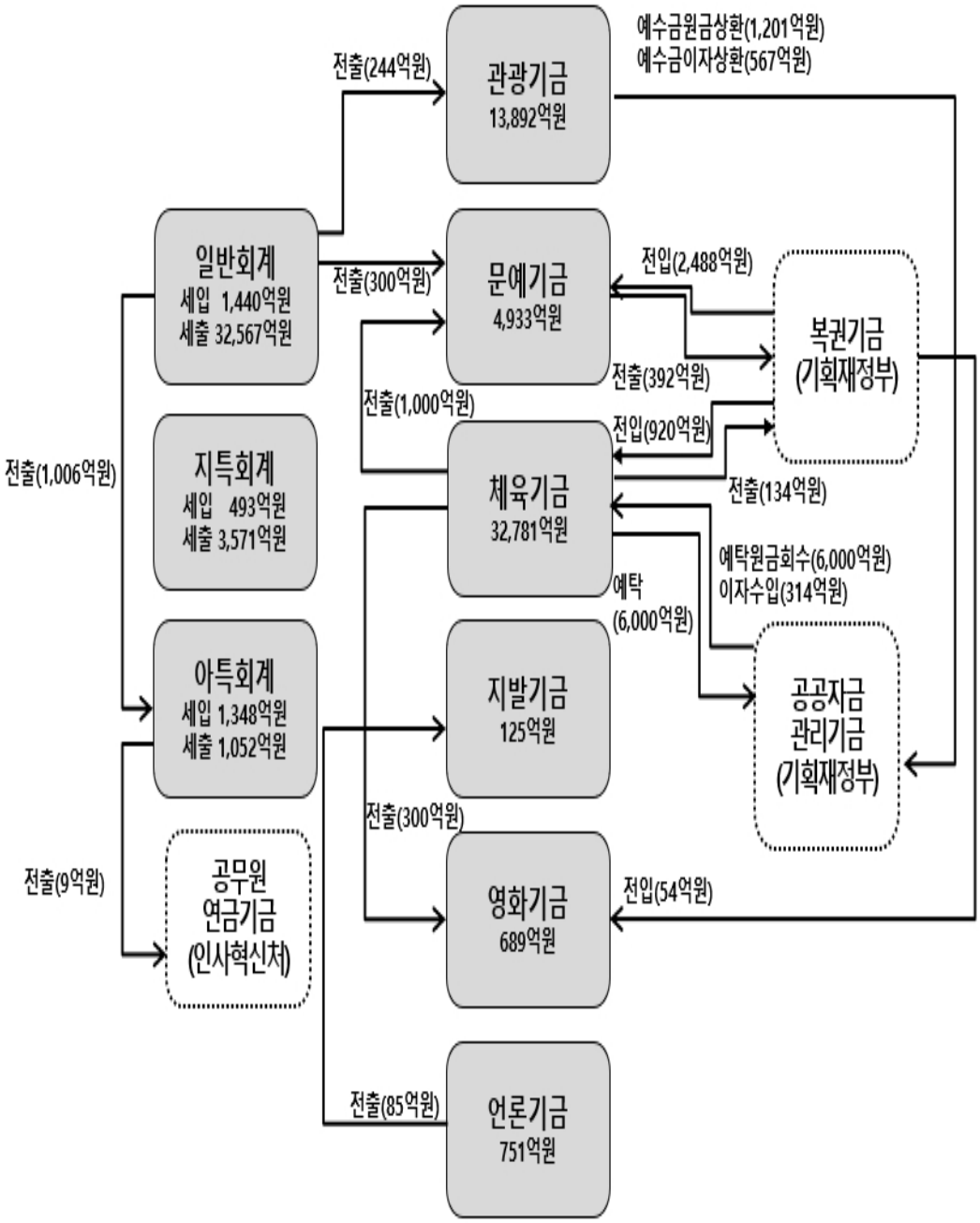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원금 1,201억원과 예수금이자 567억원을 상환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1,000억, 복권기금으로부터 2,488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사업 잔액 392억원을 반환하였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920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사업 잔액 134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회수 6,00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314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0억원을 예탁하였음.

영화발전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3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54억원을 전입받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85억원을 전입받았음.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흐름도]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를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369개 세부사업에서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기반 강화, 관광업계 전략적 육성 및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국민일상 속 체육활동 참여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였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재해복구비 사업을 매년 이·전용 등을 통해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교부된 예산의 연내 실집행 또한 부진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및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실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의 별도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역 예술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은 공연장 휴관 부담 및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는데, 동일한 사유로 남은 공연장에 대한 사업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기한 내 모든 지원대상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ODA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손망실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기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2022년~2024년 3개년에 걸쳐 예산에 총사업비를 전액 반영하고 교부함에 따라, 2024년 약 15억원이 불용처리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건립사업이 무산되고 설계비 등은 매몰비용이 되었음.

여섯째,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은 최근 정원 미달 규모 및 중도 탈락률이 계속 증가

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적정 인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성과가 저조한 원인을 점검·분석하여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을 기금변경 등을 통해 추진한 것은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이용률이 저조하자 사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이용 분야에 대중음악 장르(콘서트, 페스티벌)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집행률 및 이용률도 부진하므로, 동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모두 집행률이 70% 내외로 저조하여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체육기금의 상당한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과 병행하기보다 직접융자 방식으로만 추진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재해복구비 사업: 연례적 이·전용을 통한 예산 집행 및 실집행 부진 부적정

가. 개 요

‘재해복구비(종교)’ 사업은 산불, 태풍, 집중호우, 대설, 폭설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종교 분야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억 5,300만원 중 2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4%)되고,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2)]

‘재해복구비(관광)’ 사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 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억 9,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

‘재해복구비(체육)’ 사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4억 7,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4)]

[2024년도 재해복구비(종교, 관광, 체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해복구비(종교)	-	-	-	253	253	201	-	52	-
재해복구비(관광)	-	-	-	293	293	293	-	-	-
재해복구비(체육)	-	-	-	3,470	3,470	3,470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재해복구비(종교)(1131-304)(종무실)

3) 일반회계-재해복구비(관광)(4131-300)(관광산업정책관)

4) 일반회계-재해복구비(체육)(5131-302)(체육국)

나. 검토의견

재해복구비 사업을 매년 이·전용 등을 통해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교부된 예산의 연내 실집행 또한 부진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및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실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종교, 관광, 체육 분야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매년 이·전용 등을 통해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음.[5)]

[최근 5년간 재해복구비(종교, 관광, 체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재해복구비(종교)					재해복구비(관광)					재해복구비(체육)				
	본예산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0	-	364	364	364	-	-	6,256	6,256	6,256	-	-	5,395	5,395	5,395	-
2021	-	-	-	-	-	-	-	-	-	-	-	30	30	30	-
2022	-	181	181	181	-	-	988	988	988	-	-	2,032	2,032	2,032	-
2023	-	2,424	2,424	2,424	-	-	1,700	1,700	1,700	-	-	6,442	6,442	6,442	-
2024	-	253	253	201	52	-	293	293	293	-	-	3,470	3,470	3,47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2024년 재해복구비 관련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으로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내역변경 ('24.9.10.)	종교문화시설 건립 (1131-302)	330-03	253	재해복구비(종교) (1131-304)	330-03	253
이용 ('24.9.10.)	종교문화시설 건립 (1131-302)	330-03	293	재해복구비(관광) (4131-300)	330-03	293
이용 ('24.9.10.)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건립(대전) (3331-319)	420-03	410	재해복구비(체육) (5132-302)	330-03	979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831-372)	420-02	200			
	국립극장 운영 (3231-300)	320-09	269			
	국립국악원 인건비 (7102-109)	110-01	100			
이용 ('24.12.23.)	종교문화시설 건립 (1131-302)	330-03	2,164	재해복구비(체육) (5132-302)	330-03	2,491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632-324)	330-03	3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비록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도, 이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세부사업을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을 통해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최근 3년간 재해복구비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종교 및 관광 분야의 교부액(각 2억 100만원 및 2억 9,300만원) 중 실집행액이 없고, 체육 분야 또한 교부액 34억 7,000만원 중 실집행액이 1,100만원에 그치는 등 당해연도 교부액의 실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재해복구 실적 또한 부실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재해복구비(종교, 관광, 체육)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연도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당해연도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 (D/C)	당해연도 교부액 실집행률 (E/A)
						당해연도 교부액	실집행액 (E)				
재해 복구비 (종교)	2022	181	-	181	-	181	-	181	-	-	-
	2023	2,424	181	2,605	178	2,424	-	2,424	3	6.8	-
	2024	201	2,424	2,625	1,013	**201**	**-**	1,547	65	38.6	-
재해 복구비 (관광)	2022	988	-	988	448	988	448	540	-	45.3	45.3
	2023	1,700	540	2,240	516	1,700	40	1,660	64	23.0	2.4
	2024	293	1,660	1,953	752	**293**	**-**	1,062	138	38.5	-
재해 복구비 (체육)	2022	2,032	30	2,062	104	2,032	75	1,957	1	5.0	3.7
	2023	6,442	1,957	8,399	2,054	6,442	263	6,134	211	24.5	10.7
	2024	3,470	6,134	9,604	5,670	**3,470**	**11**	3,740	194	59.0	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해 발생 후 재해복구비 산정을 위한 부처 합동 조사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복구계획 심의·확정 등을 거쳐 예산을 교부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소규모 피해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문체부의 설명대로 소규모 피해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다면,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공사비 등 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재해복구비 사업을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및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실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사업: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 공연 지원 부적정 등

가. 개 요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사업은 다양한 규모별 공연·전시 유통 및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90억원 중 474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15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4년도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51,350	51,350	-	-	51,350	49,765	-	1,585	58,000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49,000	49,000	-	-	49,000	47,415	-	1,585	56,12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동 사업에서는 국립예술단체가 보유한 공연을 권역별 지역대표 공연장과 매칭하여 전막 공연형태로 유통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예술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음.

국립오페라단 등 8개 국립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약 10억원 내외의 공연 제작·유통비를 단체별 공연 규모·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협력 문예회관에게 10% 이상의 자부담을 요구하였음.

6) 일반회계-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1632-327)(예술정책관)

[2024년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국립예술단체(지정보조) *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극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정동극장(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등 8곳 ○ (지원내용) 공연 제작·유통비 ○ (지원규모) 국립단체별 약 10억 내외 지원 * 단체별 협업 사업 내 공연 규모·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협력 문예회관 최소 10% 자부담금 책정 필수 ○ (신청대상 사업)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기 창제작 및 신작 등을 활용하여 공연장과의 협업을 통한 초대형 공연의 지역 개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의 별도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지역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역 예술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오페라단 등 8개 단체에 총 51억 8,600만원이 지원되어, 단체별로 각 2~6회의 지역 전막공연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2024년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 금액	공연 실적			
		작품명(횟수)	지역	장소(횟수)	일자
국립오페라단	1,260	〈라트라비아타〉,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6)	세종	세종예술의전당(2)	8.16.
			대구	대구오페라하우스(2)	10.25.
			당진	당진문예의전당(2)	11.1.
국립발레단	375	〈돈키호테〉(2)	당진	당진문예의전당	9.11.
			대구	대구오페라하우스	10.1.
국립합창단	310	〈전쟁 그리고 평화〉, 〈카르미나 부라나〉(2)	당진	당진문예의전당(1)	7.12.
			창원	3.15아트센터(1)	12.14.
서울예술단	800	창작가무극 〈천개의 파랑〉(2)	제주	제주문예회관(2)	12.7.~12.8.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 금액	공연 실적			
		작품명(횟수)	지역	장소(횟수)	일자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486	〈ECO & ECHO 콘서트〉(2)	세종	세종예술의전당(1)	9.13.
			경남	통영국제음악당(1)	11.30.
국립정동극장	855	판소리뮤지컬 〈적벽赤壁〉(4)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4)	11.22.~11.24.
국립현대무용단	400	코레오 커넥션(6)	세종	세종예술의전당(5)	9.25., 9.28., 10.1., 10.5.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1)	11.1.
국립극단	700	〈십이야〉(6)	대전	대전예술의전당(6)	12.21.~12.27.
합계	5,1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상기 8개 국립예술단체들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경상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사업비 내에 각 단체의 지역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음.[7)]

[2024년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 내 8개 국립예술단체 운영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액					
	합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지역공연	편성내역
국립오페라단	13,324	1,549	772	11,003	950	67.9백만원 × 14지역 = 950백만원
국립발레단	13,374	3,481	848	9,045	2,000	100백만원 × 20지역 = 2,000백만원
국립합창단	7,435	2,790	384	4,261	1,311	65.6백만원 × 20회 = 1,311백만원
서울예술단	8,439	2,723	706	5,010	735	183.7백만원 × 4지역 = 735백만원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10,838	4,171	386	6,281	1,000	100백만원 × 10회 = 1,000백만원
국립정동극장	9,231	2,326	1,358	5,547	800	100백만원 × 8개지역 = 800백만원
국립현대무용단	7,015	630	779	5,606	880	44백만원 × 20지역 = 880백만원
국립극단	14,102	3,227	3,911	6,964	1,000	100백만원 × 10지역 = 1,000백만원
합계	83,758	20,897	9,144	53,717	8,67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사업과 '지역공연' 사업 모두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복됨.

7) 일반회계-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1631-300)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및 '지역공연' 사업 비교]

구분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	지역공연 사업
세부사업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1632-327)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1631-300)
지원대상	국립예술단체	국립예술단체
지원대상	지역 전막공연	지역 공연
추진방식	민간경상보조(협력 문예회관 자부담 10%)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24 지원금액	51억 8,600만원	86억 7,6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로 2024년 각 사업의 공연 실적을 살펴보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 동일 날짜의 동일한 공연이 각 사업의 실적으로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국립발레단 및 국립합창단의 경우에도 두 사업에서 같은 작품을 공연하고 있음.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및 '지역공연' 사업 중복 사례]

단체명	작품명	공연 장소(일자 또는 횟수)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	지역공연 사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ECO & ECHO 콘서트〉	세종예술의전당(9.13.)	
		통영국제음악당(11.30.)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당진문예의전당(9.11.)	안동문화예술의전당(5.24.~5.25.)
		대구오페라하우스(10.1.)	국립극장 해오름(10.23.)
국립합창단	〈전쟁 그리고 평화〉, 〈카르미나 부라나〉	당진문예의전당(7.12.)	〈전쟁 그리고 평화〉 8회 (수성, 용인, 광주 등), 〈카르미나부라나〉 1회(의정부)
		창원3.15아트센터(12.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동일한 단체를 대상으로 중복되는 사업 내용에 대한 보조금이 서로 다른 사업에서 지원될 경우, 사업 간 집행 용도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움에 따라 예산이 혼용되거나 중복 집행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각 사업별 성과를 점검하여 환류하기에도 곤란한 문제가 있음.[8)]

한편 국립예술단체의 지역공연 개최는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의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고 문화적 소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기존의 지역 예술단체가 경쟁에서 밀려 관객 유치나 지원금 배분 등에서 불리해짐에 따라 자생력이 약화되고 결국 지역의 고유한 문화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도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의 별도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지역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역 예술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신규): 법정기한 내 방화막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은 지자체 소관 공립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4억 7,500만원 중 11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47.3%)되고, 13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4년도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22,197	22,197	180	△265	22,112	18,015	-	4,096	25,484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	7,842	7,842	-	-	7,842	6,537	-	1,305	8,150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2,475	2,475	-	-	2,475	1,170	-	1,305	2,88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2년 5월 「공연법」 개정[10)]으로 2026년 5월 3일까지 1천석 이상의 국·공립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 소관 공립공연장에 방화

9) 일반회계-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예술정책관)

10) 「공연법」(법률 제18855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법률 제18855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율 50%) 사업임.

나. 검토의견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은 공연장 휴관 부담 및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는데, 동일한 사유로 남은 공연장에 대한 사업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기한 내 모든 지원대상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4년에 19개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5개 지자체에서 8개 공연장에 대해 11억 7,000만원의 보조금만 신청함에 따라 13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한편 보조사업자 단계에서는 8개 공연장 중 2개 공연장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1개 공연장은 향후 리모델링 계획을 이유로 사업을 미실시함에 따라, 교부액 11억 7,000만원 중 6억 8,260만원만 집행(실집행률 58.3%)되고, 2억 2,16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6,580만원이 불용되었음.[11]

11) 2024년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 각 공연장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지자체	공연장명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집행부진사유
1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50	138	-	12	92.0	
2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180.5	8.9	171.6	-	4.9	설계 및 공사계약 지연
3	충청남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114.5	80.7	-	33.8	70.5	
4	경상남도	성산아트홀 대극장	150	-	-	150	-	사업미실시
5		3·15아트센터 대공연장	50	-	50	-	-	사업진행 및 공사계약 지연
6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50	111	-	39	73.8	
7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250	228	-	22	91.3	
8	울산광역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5	116	-	9	92.9	
합계			1,170	682.6	221.6	265.8	5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본예산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4년	2,475	1,170	1,305	1,170	-	1,170	682.6	221.6	265.8	5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방화막 설치 공사기간(2~3개월) 중 공연장 휴관 부담 및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연장 휴관 부담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로, 사전에 보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한편 문체부가 동 사업을 통해 방화막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 공연장은 총 33개소로, 2024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한 7개 공연장을 제외하면 추가로 26개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가 필요함.[12)]

그러나 2024년과 마찬가지로 남은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 또한 2~3개월의 공사기간 중 휴관 부담 및 지자체의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기한 내 모든 지원대상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2) 현재 문체부는 2025년 예산 28억 8,000만원으로 15개 공연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으로 연내 해당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남은 11개 공연장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 지원하여 법정기한('26.5.3.) 내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임.

4.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ODA): 구체적인 사업내용 확정 전 기자재 사전 구입 부적정

가. 개 요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인도네시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조성(6개소) 및 디지털콘텐츠 창작자 양성을 통해 콘텐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7억 6,000만원 중 7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4년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760	760	-	-	760	754	-	6	1,830
인도네시아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760	760	-	-	760	754	-	6	1,83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이고,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임.

나. 검토의견

ODA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손망실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기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3) 일반회계-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1231-327)(국제문화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인도네시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2개소씩 총 6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중앙-지방 정부 간 업무협의 및 협의의사록(RD)[14]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1차년도인 2023년에는 양성센터 구축이 불가능하였음.

이후 2024년 1월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2024년 8월 자카르타 양성센터가 제일 먼저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이나, 두 번째로 구축하려던 시카 양성센터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요청에 따라 마카사르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되면서 2025년 5월에 개소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연내 남은 4개 지역(잠비, 치르본, 시카, 바둥)의 양성센터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재까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자카르타 양성센터 구축 현황 점검(답사): '23. 6. 12. - 시카 양성센터 구축 현황 점검(답사): '23. 6. 13. **- 양국 협의의사록(ROD) 체결: '24. 1. 31.** - 자카르타 양성센터 사전답사: '24. 5. 13. - 자카르타 양성센터 리모델링 공사: '24. 6. 3. ~ '24. 8. 8. **- 자카르타 양성센터 개소식 개최: '24. 9. 6.** **- 인도네시아로부터 '24년 시카 양성센터 연기 희망 서한 수신: '24. 4. 26.** - 인도네시아로부터 '24년 시카 양성센터 구축 불가능(연기 희망) 서한 수신(1차 PSC 회신): '24. 8. 17.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간담회를 통한 시카 대체지 논의: '24. 9. 6.**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및 지방정부, 2024년 잠비 또는 마카사르 양성센터 구축 희망 - 마카사르 양성센터 리모델링 공사: '24.11.1.~12.31. **- 인도네시아로부터 '24년 시카 양성센터 구축 연기 및 마카사르 양성센터 대체 구축 요청 희망 서한 수신: '24. 12. 13.** - 외교부 제출 무상원조시행계획 변경 확정: '24.12.17. ※ 최종 사업대상지 반영(암본 → 바둥 / 무아로잠비 → 잠비) **-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에 따른 한→인니 서한 발송 및 양국 간 최종 사업대상지 확정: '25.1.24.** ※ 최종 사업대상지: 자카르타, 시카, 치르본, 마카사르, 잠비, 바둥 - 마카사르 양성센터 기자재 설치 및 인수인계: '25.2.21.~2.28. **- 마카사르 양성센터 개소식 개최: '25. 5. 3.**
- 4개 지역(시카, 치르본, 잠비, 바둥) 교육 프로그램 개발: '25년 중 - 4개 지역(시카, 치르본, 잠비, 바둥) 조성(리모델링, 기자재 구매 등): '25년 중 - 4개 지역(시카, 치르본, 잠비, 바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시: '25년 중 순차 예정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s): 수원국과 ODA 사업의 목적 및 기간, 대상 분야, 공여국측 지원사항, 협력대상국측 부담사항 등 협력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23~'24년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위탁용역업체의 실집행률은 100%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2024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위탁용역업체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탁용역업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계약금	지급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3년	730	728	725	720	706	706	706	100
2024년	760	754	750	737	680	676	676	100

주) 2025년 2월말 기준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는 2023년 하반기에 자카르타와 시카 양성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의 기자재를 미리 구입한 것에 이어, 2025년 2월 잠비 양성센터에서 사용할 기자재 중 일부를 미리 구입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용목적 기자재 구매·설치 등 추진 경과]

구분	기자재 구매내역(금액)	추진 경과
2023년 예산	자카르타 양성센터 기자재 (194,862,733원)	1) **자카르타·시카 양성센터 사용목적 기자재 구매 및 입고: '23.9.~'23.11.** 2) 기자재 수출: '24.5.23.(한국 내륙 운송)→'24.5.27.(한국 부산)→'24.6.8.(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 **자카르타 양성센터 기자재 설치 완료: '24.8.29., 기자재 활용(교육 개시): '24.8.30.** ※ 시카 양성센터 사용목적 기자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보관(교육문화연구기술부 건물 내) 4) **시카 양성센터 사용목적 기자재 일부 전용(시카→마카사르): '24.12.27.** ※ 전용되지 않은 시카 양성센터 기자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계속 보관 중(향후 잠비, 치르본, 시카, 바둥으로 이관 예정) 5) 마카사르 양성센터 사용 목적 기자재 구매 및 입고: '25.1.~2. 6) **마카사르 양성센터 기자재 설치 및 인수인계: '25.2.21.~2.28.** 7) **잠비 양성센터 기자재 일부 구매 및 입고: '25.2.28.**
	시카 양성센터 기자재 (148,237,267원)	
2024년 예산	마카사르 양성센터 기자재 (61,656,000원)	
	잠비 양성센터 기자재 (78,615,000원)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사업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함에 따라, 구입한 기자재는 포장 후 창고에 장기간 보관(창고 이용료 발생)하게 되었음.

먼저 2023년 하반기 구입한 기자재 중 자카르타 양성센터의 기자재는 약 1년 후인 2024년 8월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당초 시카 양성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이었던 기자재의

경우에는 2024년 연말 일부를 전용하여 2025년 초 마카사르 양성센터에 설치되었고, 남은 기자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계속 보관하는 중으로 향후 다른 양성센터로 이관될 예정임.

다음으로 2025년 2월 구입한 기자재 중 마카사르 양성센터의 기자재는 바로 설치 및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으나, 잠비 양성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기자재는 현재 창고에 보관되고 있음.

그런데 ODA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손망실 위험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자재 구입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마카사르 양성센터와 같이 각 양성센터별 리모델링 공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구체화된 후 기자재 구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이와 같이 기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장기간 창고에 보관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ODA):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교부로 인한 건립사업 무산 부적정

가. 개 요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캄보디아 예술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교육연구원 건립과 현지 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9,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5]

[2024년도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107	1,107	-	-	1,107	1,107	-	-	-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398	398	-	-	398	398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캄보디아 예술교육연구원을 건립하고, 집중연수 추진 및 맞춤형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2024년(3개년), 총사업비는 70억 5,000만원[16]으로 계획되었음.

나. 검토의견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2022년~2024년 3개년에 걸쳐 예산에 총사업비를 전액 반영하고 교부함에 따라, 2024년 약 15억원이 불용처리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건립사업이 무산되고 설계비 등은 매몰비용이 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 일반회계-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1534-301)(국제문화정책관)

16) (’22년) 21억 4,200만원, (’23년) 45억 1,000만원, (’24년) 3억 9,800만원 (캄보디아는 건립부지 제공)

동 사업은 캄보디아가 신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에 주목하면서[17]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ODA 사업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22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2024년 예산에는 3차년도 사업비 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수원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고, 건축 보조사업자 공모 및 건축사업 기획운영(PM) 업체 선정 등도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실집행률이 2022년 1.8%, 2023년 5.9%, 2024년 10.9% 등으로 매년 부진하여 이월이 계속되었음.[18]

[연도별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2,142	2,142	-	2,142	-	2,142	38	2,104	-	1.8
2023년	4,510	4,510	-	4,510	2,104	6,614	388	6,226	-	5.9
2024년	398	398	-	398	6,226	6,624	722	4,401.2	1,500.8	1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7) 캄보디아 국가발전전략 제4기 사각전략('19-'23)을 통해 인적자원 양성 및 신 경제성장 동력 개발 추진(주요 산업인 농업, 의류제조, 건설 외에 문화산업 진흥으로 다변화)

18)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경과

일자	추진 경과	비고
2020. 11.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2021. 4.	사업요청서(PCP) 접수	
2022. 3.	사업 기본계획 및 방향성 수립, 건축 보조사업자 공모 준비	
2022. 6.	건축 보조사업자 공모 / 건축 예비조사 실시, 수원기관 방문 / 전문가 자문	
2023. 2.	**협의의사록(RoD) 체결(2. 8.) / 건축 PM 선정**	
2023. 3~5.	건축 기획조사 실시	
2023. 7.	건축 CM 입찰	
2023. 8.	건축 CM 계약 / 역량강화 연수 대행 용역 입찰, 계약	
2023. 9.	설계·감리사 입찰 / 현지기초연수 실시	
2023. 10.	설계·감리사 계약 / 설계 착수	
2023. 12.	국내 초청 심화연수 실시	
2024. 1.	기초설계(Preliminary Design) 완료(1. 25.)	
2024. 2.	캄보디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 개발 용역 입찰, 계약	
2024. 3~10.	캄보디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5종 연구 · 개발	
2024. 5.	중간설계(Schematic Design) 완료(5. 28.)	기본설계 완료
2024. 9.	캄보디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지 시범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계약	
2024. 10~12.	캄보디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지 시범운영 실시	
2024. 12.	**실시설계(Detailed Design) 완료(12. 30.)**	
2024. 11~12.	**시공사 입찰 추진 (유찰)**	
2025. 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무상원조사업 변경 추진	외교부 검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국 2022년 교부된 예산이 2024년까지 집행되지 못하면서 약 15억원이 불용처리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건립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문체부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19] 2025년 5월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건립사업 대신 기자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2025년 5월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업기간	7,050백만원	3,070백만원
총사업비	2022~2024년(3개년)	2022~2026년(5개년)
사업내용	예술교육연구원 건립, 집중연수 추진 및 맞춤형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등	캄보디아 예술교육 환경개선(실습실 조성)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대학생 역량 강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수행한 설계비 등은 매몰비용이 되었는데, 당초 문체부가 협의의사록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면, 이와 같이 불용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건립사업이 무산되고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20]

그러나 캄보디아와의 협의의사록이 2차년도인 2023년 2월에 체결되고, 건축 기획조사, 설계 용역 등의 일정도 전체적으로 순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다음과 같이 당초 계획대로 2022년~2024년 3개년에 걸쳐 예산에 총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였고, 매년 형식적으로 2차례로 분할하여 보조사업자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전액 교부해왔음.

1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무상원조사업계획 변경 추진

20)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원기관인 캄보디아 문화부 및 왕립예술대학교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수원국 측에서 건립사업 미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였으나,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캄보디아 문화부에서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내용 변경 관련 문체부 명의의 공식 서한을 요청한바, 사업 진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연도별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1차 교부		2차 교부	
			교부일	교부액	교부일	교부액
2022년	2,142	2,142	2022.3.2.	1,705	2022.10.11.	437
2023년	4,510	4,510	2023.6.20.	3,000	2023.9.20.	1,510
2024년	398	398	2024.6.4.	265	2024.9.4.	1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원국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여건,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ODA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가. 개 요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은 한국관광 발전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ODA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5억 4,000만원이 전액 교부(집행률 100.0%)되었음.[21]

[2024년도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540	540	-	-	540	540	-	-	-
필리핀 루손섬 관광 두레 시범마을 조성	540	540	-	-	540	540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전액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음.

이 사업은 한국형 지역개발 프로그램인 “두레” 사업[22]을 현지에 적용하여 필리핀 농촌 공동체 주도로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2026년(4개년), 총사업비는 약 38.7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음.

21) 일반회계-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4331-308)(관광정책국)

22) 한국형 관광 두레 사업: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두레 PD 공모·선정, 해당 지역 내 관광 분야 주민사업체 발굴,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나. 검토의견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은 관행적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의 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ODA 사업 예산을 편성 및 교부하여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3월 필리핀에 관광개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23년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종합계획 수립, 관광두레 구성, 관광 방문객센터 조성 등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종합계획 완결, 관광두레 구성, 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 연수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6,500만원이 감액된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4년 4월에야 협의의사록이 체결되는 등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수행사(PMC) 선정 및 계약체결 또한 순연되어 2024년 12월 17일에 선금 8억원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음.[23)]

[2023년~2024년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년	805	805	-	805	-	805	-	805	-	-
2024년	540	540	-	540	805	1,345	805	540	-	5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3) 2023년~2024년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 경과

일자	추진 경과
2023. 3.	공사 → 필리핀 관광부, 협의의사록(RD) 발송
2023. 4.	문체부 → 필리핀 관광부, 사업수행알림 공문 발송
2023. 5.	필리핀 정부, 협의의사록(RD) 검토 시작
2023. 9.	필리핀 경제개발청* 사업승인, 대통령궁 승인 요청 * 경제개발청(NEDA): 필리핀 내 ODA 사업 승인 기관
2024. 3.	필리핀 대통령궁 사업승인 완료, 공사 협의의사록(RD) 서명
2024. 4.	필리핀, 협의의사록(RD) 최종 서명 완료
2024. 12.	필리핀 사업수행사(PMC) 선정 및 계약체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국 2023년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어 2024년 12월 사업수행사(PMC) 선금으로 지급된 것에 이어, 2024년 교부된 예산 또한 전액 2025년으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는 보조금의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24]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교부임.

특히 동 사업은 ODA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이 관행적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교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2022년 예산이 편성되었던 '몽골 관광종합 교육센터 건립 사업'[25] 및 2021년~2022년 예산이 편성되었던 '스리랑카 중부-동북부 지역사회 기반 관광육성 사업'[26] 또한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교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실집행은 부진하여 각각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2024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된 상황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의 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ODA 사업 예산을 편성 및 교부하여,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25) 연도별 몽골 관광종합 교육센터 건립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9년	564	564	-	564	-	564	274	290	-	48.6
2020년	2,303	2,303	-	2,303	290	2,593	704	1,874	15	27.2
2021년	1,989	1,989	-	1,989	1,874	3,863	18	3,845	-	0.5
2022년	1,194	1,194	-	1,194	3,845	5,039	1,519	3,179	341	30.1
2023년	-	-	-	-	3,179	3,179	1,787	1,194	198	56.2
2024년	-	-	-	-	1,194	1,194	1,186	-	8	99.3

26) 연도별 스리랑카 중부-동북부 지역사회기반 관광육성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400	400	-	400	-	400	-	400	-	-
2022년	1,772	1,772	-	1,772	400	2,172	-	2,172	-	-
2023년	-	-	-	-	2,172	2,172	423	1,749		19.5
2024년	-	-	-	-	1,749	1,749	1,723		26	98.5

7.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신규):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필요

가. 개 요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투자대상의 제한 없이 시장 수요에 기반한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모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5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7)]

[2024년도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K-콘텐츠 펀드 출자	340,000	340,000	-	-	340,000	340,000	-	-	295,000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45,000	45,000	-	-	45,000	45,000	-	-	15,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모펀드 및 자펀드 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출자한 자금이 민간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보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운용상 제한이 없는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하여 자펀드 규모 대형화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5년간 정부 출자 1,5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9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0억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음.

이를 위해 1차년도인 2024년에는 정부 출자 8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4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억원)과 민간 출자 1,200억원으로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자펀드 조성 단계에서 4,000억원 규모의 민간 출자를 모집하여 총 6,000억원

27) 일반회계-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콘텐츠정책국)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민간 참여기관들과의 출자 여부 및 규모, 참여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모펀드 조성이 지연되었고, 민간 출자 규모 또한 목표의 절반 수준인 600억원만 모집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감소한 1,4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다음과 같이 조성되었으며 자펀드 조성 목표를 당초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축소하였음.

[2024년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모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펀드 결성일	결성총액(A)	출자자 구성		
			기관명	약정금액(B)	약정비율(B/A)
재정 펀드	'24.11.28.	800	문화체육관광부	450	56.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	43.75
비재정 펀드	'25.3.31.	600	㈜씨제이이엔엠	200	33.33
			메가박스중앙㈜	30	5.00
			에스엘엘중앙㈜	70	11.67
			중소기업은행	100	16.67
			한국방송공사	100	16.67
			한국산업은행	100	16.6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실상 2025년 3월말 모펀드 조성이 완료되면서 2025년 7월 현재 자펀드 결성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이처럼 모펀드 및 자펀드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출자한 자금이 민간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보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 리스크관리 강화 및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은 완성보증계정 출연(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원으로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시 제작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50억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8)]

[2024년도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34,520	34,520	-	-	34,520	34,482	-	38	33,268
완성보증계정 출연	25,000	25,000	-	-	25,000	25,000	-	-	25,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완성보증은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프로젝트성 보증(기업 재무구조를 기준으로 한 일반기업 보증과 차별)으로, 콘텐츠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제작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09.9월 시행)임.

나. 검토의견

최근 완성보증계정의 사고율 및 보증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리스크관리 강화 및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해 동 계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완성보증계증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 모두에서 2023년~2024년 사고율 및 보증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5년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연간 채권회수 실적은 대위변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28) 일반회계-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1231-306)(콘텐츠정책국)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2024년 대위변제액이 229억 7,000만원으로 2020년 30억 6,000만원 대비 7.5배 증가하였음. 이에 비해 2024년 채권회수 실적은 10억 1,000만원으로 2024년 대위변제로 인한 지출액의 4.4%만 구상권을 통해 회수한바 부실이 우려됨.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2024년 대위변제액이 87억원으로 2020년 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비해 채권회수 실적은 5억원에 불과하여 대위변제액 대비 5.7%만 회수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완성보증계정(기술·신용보증기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술보증기금	기본재산	341.3	476.5	657.8	767.4	722.8
	보증잔액(A)	759.4	1,034.6	1,208.5	1,558.7	1,860.1
	대위변제액(B)	30.6	43.6	41.9	96.6	229.7
	대위변제율(B/A)	4.0	4.2	3.5	6.2	12.3
	보증사고 금액	55.1	21.0	43.4	147.5	232.0
	사고율	7.3	2.0	3.6	9.5	12.5
	채권회수 실적(C)	3.2	3.8	0.7	15.3	10.1
	대위변제액 대비 채권회수금액(C/B)	10.5	8.7	1.7	15.8	4.4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84	132	203	193	151
	보증잔액(a)	139	354	613	821	965
	대위변제액(b)	4	5	16	55	87
	대위변제율(b/a)	3.0	1.4	2.6	6.7	9.0
	보증사고 금액	9	-	17	86	116
	사고율	6.4	-	2.7	10.5	12.0
	채권회수 실적(c)	-	-	-	0.4	5
	대위변제액 대비 채권회수금액(c/b)	-	-	-	0.7	5.7

주 1) 기본재산 = 전년도 결산 자본총계 + 당해연도 출연금 - 대위변제금 + 회수 등
2) 사고율 = 보증사고 금액 / 보증잔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콘텐츠 산업의 잠재적 부실이 표면화되고, 코로나19 유예조치 종료[29]에 따른 만기연장 기업의 상환 재원 부족,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등으로 인해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 신용도 및 재무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29) '22.10월 신용도 하락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잠정조치 적용 제외

그러나 대위변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되고, 기본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를 증가시키는데, 기금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될 요인이 될 수 있음.

실제로 2024년 기술보증기금에 175억원, 신용보증기금에 75억원이 출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가 증가함에 따라 각 기금 완성보증계증의 기본재산은 전년 대비 각각 44억 6,000만원 및 42억원 감소하여 부실이 심화되고 있음.

[2024년 완성보증계정(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기본재산 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3년말 기본재산(A)	2024년 출연금	2024년말 기본재산(B)	증감 (B-A)
기술보증기금	767.4	175	722.8	△44.6
신용보증기금	193	75	151	△42
합계	960.4	250	873.8	△86.6

주) 기본재산 = 전년도 결산 자본총계 + 당해연도 출연금 - 대위변제금 + 회수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계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 사업 성과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은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게임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숙련도를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게임인재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53억 6,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0]

[2024년도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게임산업 육성	67,915	67,915	-	6	67,921	67,920	-	1	71,289
게임인재원 운영	5,360	5,360	-	-	5,360	5,360	-	-	5,20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은 최근 정원 미달 규모 및 중도 탈락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적정 인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성과가 저조한 원인을 점검·분석하여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게임인재원은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2019년 8월 개원하여 2021년 8월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였음.[31]

그런데 사업 시작 이후 연도별 교육생 모집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제4기 교육생 65명을 모집할 때 선발인원이 56명으로, 9명이 미달되어 처음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음.

30) 일반회계-게임산업 육성(1232-302)(콘텐츠정책국)

31) 게임인재원 개요

이후 2023년 제5기 교육생부터 모집인원이 120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선발된 인원은 2023년 106명, 2024년 94명, 2025년 91명으로, 정원 미달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 교육생 모집 및 선발 현황]

(단위: 명)

입학연도 (기수)	전공	모집인원(정원) (A)	지원인원	경쟁률	선발인원 (B)	미달인원 (B-A)
2019년 (1기)	기획	20	43	2.2 : 1	21	(+1)
	아트	20	41	2.1 : 1	23	(+3)
	프로그래밍	25	41	1.6 : 1	21	△4
	소계	**65**	**125**	**1.9 : 1**	**65**	**-**
2020년 (2기)	기획	15	30	2.0 : 1	19	(+4)
	아트	20	38	1.9 : 1	23	(+3)
	프로그래밍	30	29	1.0 : 1	23	△7
	소계	**65**	**97**	**1.5 : 1**	**65**	**-**
2021년 (3기)	기획	15	45	3 : 1	16	(+1)
	아트	20	33	1.7 : 1	19	△1
	프로그래밍	30	51	1.7 : 1	30	-
	소계	**65**	**129**	**2.0 : 1**	**65**	**-**
2022년 (4기)	기획	15	17	1.1 : 1	11	△4
	아트	20	25	1.3 : 1	15	△5
	프로그래밍	30	47	1.6 : 1	30	-
	소계	**65**	**89**	**1.4 : 1**	**56**	**△9**
2023년 (5기)	기획	30	50	1.7 : 1	29	△1
	아트	40	49	1.2 : 1	27	△13
	프로그래밍	50	92	1.8 : 1	50	-
	소계	**120**	**191**	**1.6 : 1**	**106**	**△14**
2024년 (6기)	기획	30	65	2.2 : 1	31	(+1)
	아트	40	63	1.6 : 1	23	△17
	프로그래밍	50	63	1.3 : 1	40	△10
	소계	**120**	**191**	**1.6 : 1**	**94**	**△26**
2025년 (7기)	기획	30	52	1.7 : 1	32	(+2)
	아트	40	38	1.0 : 1	21	△19
	프로그래밍	50	63	1.3 : 1	38	△12
	소계	**120**	**153**	**1.3 : 1**	**91**	**△29**
계		620	975	1.6 : 1	542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 교육대상: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예비 취·창업자
○ 학과: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3개 학과
○ 학제: 2년 8학기제(1학기 평균 12주, 주 5일 수업)
○ 교육생 선발: 1차 서류평가 및 2차 프리스쿨을 통해 선발
○ 교육내용
- (1년차) 미니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실무교육(게임개발자의 기초능력 배양)
- (2년차)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현장 중심형 게임제작 전문교육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교육생 중도 탈락 및 졸업 현황을 보면, 제2기 교육생부터 중도 탈락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졸업생 수가 목표인원(정원) 대비 2022년(제4기)은 64.6%, 2023년(제5기)은 57.5%에 불과하여 사업의 성과가 저조함.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 1~5기 교육생 중도 탈락 및 졸업 현황]

(단위: 명, %)

입학년도 (기수)	교육기간	모집 인원 (A)	입학 (B)	자퇴 (C)	제적 (D)	중도 탈락 (E=C+D)	중도 탈락률 (E/B)	졸업 (F)	휴학	목표 달성률 (F/A)
2019년 (1기)	'19.9.~'21.8.	65	65	14	3	17	26.2	48	-	73.8
2020년 (2기)	'20.9.~'22.8.	65	65	12	0	12	18.5	53	-	81.5
2021년 (3기)	'21.9.~'23.8.	65	65	14	0	14	21.5	51	-	78.5
2022년 (4기)	'22.9.~'24.8.	65	56	12	2	14	25.0	42	-	64.6
2023년 (5기)	'23.3.~'25.2.	120	106	28	7	35	33.0	69	2	57.5

주) 2025년 2월말 기준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는 현재 교육 중인 제6기(교육기간 : '24.3. ~ '26.2.)에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1년차 교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24년 12월말 기준 입학인원 94명 중 27명(28.8%)이 중도 탈락하여 67명만 교육 중에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이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게임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교육생 1명에게 투입되는 2년 동안의 교육비가 4,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32] 이와 같은 계속되는 정원 미달 및 높은 중도 탈락률은 현재의 교육방식이 당초의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그렇다고 교육생 선발 기준 및 교육과정 수준을 완화하여 정원을 채우거나 중도 탈락률을 낮추는 것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당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선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적정 인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교육과정의 50% 이상이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교육생에게 상당한 수준의 실무 능력을 요구하는 교육인 점을 고려할 때, 잠재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육생 선발 시 교육 수행 능력 및 의지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동 사업의 정원 미달 규모 및 중도 탈락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점검·분석하여, 당초 목적인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32) 2024년 기준 교육생 1인당 연간 예산은 약 2,230만원임(2024년 예산 53억 6000만원 ÷ 교육생 수 240명).

10.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 조화로운 공익성과 수익성 달성을 위한 대관 및 대관료 부과 방식 개선 필요

가. 개 요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의 창달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67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3]

[2024년도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예술의전당 지원	16,701	16,701	-	-	16,701	16,701	-	-	17,07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예술의전당은 기초예술 보호 및 재무구조 개선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대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운영을 기획 공연·음악·전시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지나친 장기 대관을 지양하는 한편, 뮤지컬·장기 공연 등 상업 공연 대상으로 대관료 현실화와 함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고려한 대관료 부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예술의전당을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자주 접하기 어려운 순수예술, 비인기장르 등 다양한 공연·음악·전시에 대한 향유기회 제공과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공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임.[34] 이러한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예술의전당은 다양한 장르예술 육성이라는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음.

---

33) 일반회계-예술의전당 지원(1631-304)(예술정책관)

34)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 전당) 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한편으로 예술의전당은 국가로부터 인건비·경상비 등 예산을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35]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는바,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먼저 공익성 차원에서 최근 예술의전당 공연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보다 시설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지나치게 공연장이 장기 대관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024년 시설별 사용일수를 살펴보면, 총 사용일수 중 대관공연에 제공된 비율이 80.2%로 월등히 높았음. 반면 예술의전당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에 사용된 비율은 9.7%에 불과하고, 외부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음악·전시 등을 포함하더라도 19.8%에 그쳤음.

[2024년 예술의전당 시설별 기획, 공동주최, 대관공연 실시 현황]

시설	전체 사용일수 (A)	기획		공동주최		대관	
		실시일자 (B)	비중 (B/A)	실시일자 (C)	비중 (C/A)	실시일자 (D)	비중 (D/A)
오페라하우스	913일	129일	14.1%	152일	16.6%	632일	69.2%
음악당	1,203일	109일	9.1%	5일	0.4%	1,089일	90.5%
미술관/박물관	3,826일	340일	8.9%	441일	11.5%	3,045일	79.6%
합계	5,942일	578일	9.7%	598일	10.1%	4,766일	80.2%

주)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 CJ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음악당(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 인춘아트홀), 미술관/박물관(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자료: 예술의전당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함께 현재 계획된 2025년~2026년 오페라하우스 연간 공연 일정(안)을 살펴보면, 3주 이상 장기 대관되고 있는 공연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6주 이상 장기 대관되고 있는 공연도 다음과 같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2025년~2026년 오페라하우스 6주 이상 장기 대관 공연(안)]

구분	작품명	공연기간
오페라극장	뮤지컬 〈웃는 남자〉	'24.12.27. ~ '25.3.10. (74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LIVE 오리지널 투어	'25.12.27. ~ 26.3.16. (80일)
CJ토월극장	뮤지컬 〈시라노〉	'24.11.19. ~ '25.2.24. (98일)
	셰익스피어 인 러브 (쇼노트)	'25.6.27. ~ '25.9.15. (84일)
	뮤지컬 〈팬레터〉	'25.11.25. ~ '26.2.23. (91일)

35) 수지차 보전기관은 기관의 지출예산 전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

구분	작품명	공연기간
	샘 컴퍼니 유미의 세포들	'26.6.16. ~ '26.8.24. (70일)
	토월 정통연극	'26.10.6. ~ '26.11.23. (49일)
자유소극장	대학살의 신	'24.11.26. ~ '25.1.6. (42일)
	바닷마을 다이어리	'25.1.7. ~ '25.3.24.(77일)
	우리 시대 연극 시리즈 〈랑데부〉	'25.4.1. ~ '25.5.12. (42일)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얍!얍!얍!, 달샤베트	'25.7.15. ~ '25.8.25. (42일)
	2025 공유생 〈리:바운드〉 프로젝트	'25.10.14. ~ '25.11.17. (42일)
	연우무대 50주년 기념 여행연극 시리즈 스페셜 시즌	'25.10.9. ~ '26.3.15. (97일)
	우리시대 연극 시리즈	'26.3.31. ~ '26.5.11. (42일)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26.7.14. ~ '26.8.24. (42일)
	리:바운드 사업	'26.10.13. ~ '26.11.23. (42일)

자료: 예술의전당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현상은 자체수입 재원이 한정적이고[36] 국고보조금 중 예술 및 공익사업 예산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37] 비용이 수반되는 기획사업보다 대관사업에, 그리고 대중에게 익숙한 인기 공연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수익성 차원에서 최근 예술의전당의 수지차를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하고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38] 2025년 2월 기준 차입금이 102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적자 구조 개선 및 차입금 상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데 현재 책정된 공연장별 대관료를 보면, 우선 대관료가 2012년에 산정된 대관원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36) 당초 식음료/매표사업 직영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으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근거하여 2015년~2016년에 걸쳐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되었음. 현재 예술의전당의 주요 수입원은 대관사업·예술사업·부대사업 및 임대사업으로, 부대사업으로는 주차장과 회원제 사업이 있음.

37) 최근 5년간 예술의전당 국고보조금 구성

(단위 : 백만원)

연도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	예술사업	공익사업	합계
2021	6,878	2,527	2,430	2,529	14,364
2022	6,878	2,662	1,937	3,013	14,490
2023	21,209	2,662	2,720	1,573	28,164
2024	10,583	3,113	1,432	1,573	16,701
2025	10,575	3,806	1,032	1,666	17,079

주) 공익사업은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익목적 사업(영상화 사업 등)을 말함

38) 최근 5년간 예술의 전당 수지차: ('20년) △104억 3,700만원, ('21년) △35억 3,600만원, ('22년) △9억 1,700만원, ('23년) 7억 1,100만원, ('24년) △18억 2,000만원

[2024년 예술의전당 공연장별 대관료]

(단위: 원 / VAT 별도)

구분	구분	장르/대상	2012년 대관 원가	2024년 대관료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극장	기초예술(오페라, 발레, 연극, 무용 등)	23,583,722	5,250,000
		뮤지컬, 3주 이상 장기공연		9,800,000
	CJ 토월극장	기초예술(오페라, 발레, 연극, 무용 등)	9,610,440	1,900,000
		뮤지컬, 3주 이상 장기공연		3,700,000
	자유소극장	모든 공연	3,713,018	700,000
음악당	콘서트홀	일반	11,005,474	7,920,000
		기업		15,840,000
	IBK챔버홀	일반	9,579,112	2,970,000
		기업		5,940,000
	리사이틀홀	일반	2,894,517	1,770,000
		기업		1,770,000
	인춘아트홀	전체		864,000
미술관/ 박물관	한가람미술관	-		820,286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671,000
	서울서예박물관	-		326,500

주) 2012년 원가 분석 자료: 타 기관 시세, 대관사업 비용, 공통 운영비, 객석 규모를 반영하여 1일당 대관 원가 산정(「예술의전당 주요 예술사업(기획/대관) 원가분석 자료」, 삼정 KPMG, 2012.11.)

자료: 예술의전당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낮게 고정된 대관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초예술의 진흥 및 보호를 위한 공익 차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뮤지컬·장기 공연 등 상업 공연을 대상으로도 정해진 대관료 외에 매출액 등에 비례하는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수입 확대를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예술의 전당은 공익성 차원에서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대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운영을 기획 공연·음악·전시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지나친 장기 대관을 지양하는 한편, 수익성 차원에서 뮤지컬·장기 공연 등 상업 공연을 대상으로 대관료 현실화와 함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고려한 대관료 부과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초예술 보호 및 재무구조 개선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11.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연례적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주민 문화 향유 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13억 1,500만원 중 164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52.4%)되고, 148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39)]

[2024년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31,315	31,315	-	-	31,315	16,423	-	14,892	20,72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연례적으로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추진 상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2151-302)(지역문화정책관)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단계에서 2022년 34억원, 2023년 53억 2,000만원, 2024년 148억 9,200만원이 불용되는 등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률은 2022년 33.8%, 2023년 32.1%, 2024년 35.8% 등 30%대에 불과하여, 해당연도의 실집행액이 전년도 이월액보다 많은 해가 1회도 없는 등 연례적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본예산 (A)	집행액 (B)	불용액	교부율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0	14,843	13,873	970	93.5	13,873	9,061	22,934	8,022	13,414	1,498	35.0
2021	10,690	10,290	400	96.3	10,290	13,414	23,704	8,524	14,618	562	36.0
2022	12,023	8,623	3,400	71.7	8,623	14,618	23,241	7,863	13,342	2,036	33.8
2023	23,531	18,211	5,320	77.4	18,211	13,342	31,553	10,121	21,198	235	32.1
2024	31,315	16,423	14,892	52.4	16,423	21,198	37,621	13,456	20,585	3,580	35.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근본적으로 동 사업 예산이 연내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 및 교부되기 때문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2024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이 편성된 16건의 내역사업 중 실집행률 10% 미만인 사업이 총 9건으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지자체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전액 미교부된 사업이 3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은 교부되었으나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대부분 이월 또는 불용된 사업이 6건에 달하고 있음.

[2024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중 주요 실집행부진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실집행 부진 사유
(광주, 본청) 상무 소각장 문화재생	12,655	-	-	-	-	-	-	-	중간설계 결과 총사업비 증액으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이행
(경기, 부천시) 부천 작동부대 문화재생 사업	900	-	-	-	-	-	-	-	지자체의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 이행 한계 등으로 사업 포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실집행 부진 사유
(전남, 나주시) 옛 화남산업부지 아트스페이스 조성	500	-	-	-	-	-	-	-	토지 소유자측 법적 소송으로 인한 부지 매입 지연
(강원, 속초시) (옛) 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사업	1,196	359	924	1,283	-	-	1,283	-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사업 포기
(충남, 보령시) 거미·로봇·민화 문화테마파크 조성	1,000	1,000	-	1,000	-	1,000	-	-	실시설계 단계에서 테마파크 의견 조정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경기, 본청) 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	2,350	2,350	-	2,350	12	2,338	-	0.5	건축기획, 설계공모 등 사전 절차 이행
(전북, 임실군) 폐교 활용복합문화공간 조성	1,500	1,500	-	1,500	12	1,448	40	0.8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경기, 본청) 경기 창작캠퍼스 창작 기회공간 조성	810	810	-	810	11	799	-	1.4	건축기획, 설계공모 등 사전 절차 이행
(강원,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쇄석장 유휴공간문화재생	1,000	1,000	-	1,000	22	978	-	2.2	건축기획용역,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진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보조금은 국가정책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전에 사업의 제반 여건을 파악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실제 수요를 추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추진 상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40)]

40) 지자체의 장이 예산 신청을 하고 문체부는 이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지특회계의 절차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 · 제79조제2항 · 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31억 8,300만원 중 221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5%)되고, 1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41)]

[2024년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3,183	23,183	-	-	23,183	22,131	198	854	15,18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사업으로, 2024년 예산 231억 8,300만원은 대전 효문화뿌리마을 등 24개 계속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27억 8,300만원 및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 실행계획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으로 구성되었음.

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4153-309)(관광산업정책관)

나. 검토의견

사업의 추진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 예산 231억 8,300만원 중 219억 3,300만원을 교부하여 편성된 예산 대부분을 교부하였음.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83억 700만원 중 245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42.1%에 불과하고, 당해연도 본예산 231억 8,300만원 보다 더 큰 337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음.

최근 5년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비록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률이 2021년 12.1%에서 2024년 42.1%로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실집행액이 전년도 이월액이나 다음연도 이월액보다 많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은 매년 당해연도 본예산 및 교부액보다 큰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본예산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0	11,988	4,668	4,510	4,668	2,168	6,836	2,015	4,821	-	29.5
2021	24,178	20,118	6,870	20,118	4,821	24,939	3,025	21,914	-	12.1
2022	20,427	16,427	4,000	16,427	23,149	39,576	9,158	29,888	530	23.1
2023	34,031	29,006	5,025	29,006	29,183	58,189	21,815	36,374	-	37.5
2024	23,183	22,131	854	21,933	36,374	58,307	24,544	33,763	-	4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당초 각 사업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하였어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과 같이 이미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2회에 걸쳐 예산을 교부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2024년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큰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추경)	교부액(교부일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A)	집행액(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효문화뿌리마을(대전 중구)	1,300	1차: 1,000 (12.2.) 2차: 300 (12.10.)	1,300	3,499	4,799	14	4,785	-	0.3
명승문화마을(단양)	1,076	1차: 565 (3.29.) 2차: 511 (4.26.)	1,076	4,728	5,804	3,204	2,600	-	55.2
입신양명 과거길(제천)	1,807	1차: 480 (3.29.) 2차: 1,077 (4.26.) 3차: 250 (11.29.)	1,807	1,511	3,318	428	2,890	-	12.9
옥야동천 유토피아(옥천)	500	1차: 300 (10.21.) 2차: 200 (11.29.)	500	929	1,429	429	1,000	-	30.0
초평 책마을(진천)	1,500	1차: 600 (3.29.) 2차: 900 (6.21.)	1,500	2,058	3,558	667	2,891	-	18.7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논산)	1,000	1차: 600 (10.21.) 2차: 400 (11.29.)	1,000	511	1,511	421	1,090	-	27.9
외암마을 인문학서당(아산)	350	1차: 250 (6.21.) 2차: 100 (10.21.)	350	299	649	-	649	-	-
밤하늘산책원(서산)	800	1차: 600 (10.21.) 2차: 200 (11.29.)	800	842	1,642	356	1,286	-	21.7
여민동락 역사누리(당진)	1,300	1차: 500 (3.29.) 2차: 800 (6.21.)	1,300	1,776	3,076	995	2,081	-	32.3
사신들의 바다순례길(태안)	900	1차: 680 (6.21.) 2차: 220 (8.7.)	900	1,532	2,432	229	2,203	-	9.4
금강누정 선유(船遊)길(부여)	500	1차: 300 (6.21.) 2차: 200 (11.29.)	500	976	1,476	-	1,476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42]에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

4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

부하도록 한 취지는 단순히 분할 교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실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교부하라는 것으로,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방비 확보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함으로써 동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및 이월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　출〉

13.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가. 개　요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국내·외 민간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한국 예술인 및 단체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55억 3,300만원 중 55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현장 수요에 맞는 창작 단계별 과정 및 창작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343억 6,700만원 중 336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43]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178억 3,300만원 중 176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1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4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 등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예술창작지원	58,814	59,329	-	59,329	58,297	70	962	64,677
국제예술교류지원	4,738	5,533	-	5,533	5,528	-	5	4,362
공연예술창작육성	34,447	34,367	-	34,367	33,667	70	630	37,125
문화예술향유지원	275,149	274,544	-	274,544	261,574	9,510	3,460	280,581
신나는 예술여행	18,487	17,883	-	17,833	17,695	-	187	-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43)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창작지원(1761-300)(예술정책관)

44)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예술정책관)

나. 검토의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을 기금변경 등을 통해 추진한 것은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2024년 국제예술교류지원 등 상기 3개 사업에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음.

① 먼저,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에서는 자체 계획변경한 일반수용비 7억 9,500만원[45] 등을 활용하여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이하 “제10차 총회”라 함) 개최를 위한 개최분담금으로 1억 979만원, 행사 대행 용역비 선금으로 7억 6,010만원 등 약 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분담금 및 행사 대행 용역비 선금 집행내역]

지출 적요	지출일자	집행액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운영을 위한 1차 개최분담금	’24.10.28.	67,915,520원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운영을 위한 2차 개최분담금	’24.10.28.	41,876,600원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및 부대행사 운영 대행 계약 1차 선금	’24.7.25.	362,500,000원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및 부대행사 운영 대행 계약 2차 선금	’24.12.19.	397,600,000원
합계		869,892,120원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5) 2024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 일반수용비 증액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으로			비고
	세부사업-내역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내역사업	비목	금액	
자체변경 (’24.9.19.)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210-01	△515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210-01	515	
자체변경 (’24.10.7.)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210-01	△80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210-01	80	세부사업 내 내역조정
자체변경 (’24.10.7.)	예술창작지원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210-01	△200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210-01	200	
합계			△795	합계		795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제10차 총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된 시점('23.10.31.)에 '24년 예산 정부안 반영이 불가능한바, 기금계획 수립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 부득이 자체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3년 11월 한국 개최 선정 결과를 전달받은 후, 협상을 거쳐 2024년 1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5월 제10회 총회 개최를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을 확보한 이후 2026년을 전후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이전 9차례의 총회가 대부분 3년 주기로 개최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46]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2025년 개최를 확정하고 자체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행사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5년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예산 집행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임.[47]

한편 위원회는 2025년 제10차 총회 행사 대행을 위한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2024년 5월에 18억원 규모로 체결하였음.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행사 대행을 위한 2024년 용역 계약 현황]

(단위: 천원)

계약일	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수행기관	계약기간	집행액	
						지출일	지급액
'24.5.30.	2025년 IFACCA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및 부대행사 운영 대행	1,800,000	1,800,000	㈜엠씨아이 코리아	'24.5.30. ~'25.7.31.	'24.7.25. (1차 선금)	362,500
						'24.12.19. (2차 선금)	397,600
						'25.6.5. (3차 선금)	499,900
						'25.8월 중 (4차 잔금)	540,0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6)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내역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개최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1	2014	2016	2019	2023	2025
개최국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남아공	호주	칠레	몰타	말레이시아	스웨덴	대한민국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체결은 각종 정부 예산 및 기금사업의 수행과 경비 지출을 위한 지출원인 행위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고금관리법」 제20조[48]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된 제10차 총회 관련 예산이 총 6억원(행사운영 4억 6,100만원)에 불과하여,[49] 용역비용 충당을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기금변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50]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②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예산 3억 8,000만원 및 공연예술창작 육성 사업 예산 4,800만원 등 2개 사업 예산을 통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을 기금변경 절차 없이 추진하였음.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계약일	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집행액)	수행기관	계약기간
문화예술 향유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24.5.10.	202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 용역	400	380	㈜스톤인테그리티	’24.5.10. ~’24.12.6
예술창작 지원	공연예술 창작육성			51	48		
합계				451	428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위원회가 운영해오던 17개 누리집을 연계·통합하여 일원화된 통합검색기능과 결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통폐합 정책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폐지 예정 사업 등의 플랫폼을 통폐합하였고, 그 중 비중이 가장 큰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예산 등을 일부 사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은 각 시스템의 기능·활용도 및 유지보수·관리 측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면밀히 비교한 후 추진하는 것이

48)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49) 2025년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예산 6억원 세부 편성내역

- IFACCA 본부 협력 87백만원(개최분담금 52백만원, 해외본부 전담 인력 인건비 분담금 35백만원)
- 국내외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운영 52백만원(국내 10백만원, 해외 10백만원, 사전발제문 32백만원)
- **총회 행사운영 461백만원**

50) 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변경 없이 기부금 유치 등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적절하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재정당국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동 사업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정리하면,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 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은 202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위원회가 임의로 추진한 것으로, 이에 국회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신규): 이용률 저조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부적정 등

가. 개 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19세 청년 대상 생애 단 한번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함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170억원 중 42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24.9%)되고, 95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51]

[2024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문화예술향유지원	275,149	274,544	-	274,544	261,574	9,510	3,460	280,581
청년문화예술패스	17,000	17,000	-	17,000	4,240	9,510	3,249	17,0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52]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순수예술(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이용률이 저조하자 사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이용 분야에 대중음악 장르(콘서트, 페스티벌)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집행률 및 이용률도 부진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1)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문화정책관)

52) 국비 10만원, 지방비 별도(최대 5만원)

동 사업은 청년세대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감수성·창의성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2025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협력예매처 공모, 지자체 대상 설명회, 관련 고시 제정 등 사업 준비절차를 거쳐[53] 2024년 3월 28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기간을 2025년 2월말까지로 연장하면서, 2024년 11월 22일부터 이용 분야에 대중음악 장르(콘서트, 페스티벌)를 추가하였음.

그러나 이는 공연 및 전시 등 순수예술에 사용가능한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이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이용 분야에 대중음악 장르를 추가하였음에도 최종 사업비 실집행률이 34.1%, 이용률은 55.4%에 불과한 바, 동 사업이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향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업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54]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최종 이용 실적]

(단위: 명, 백만원)

대상인원 (A)	신청인원 (B)	신청률 (B/A)	이용인원 (C)	이용률 (C/B)	사업비 예산 (D)	이용금액 (E)	실집행률 (E/D)
160,000	127,706	79.8%	70,812	55.4%	16,000	5,455	34.1%

주) 2025년 2월말 기준, 이용금액은 국비 집행액(매칭 지방비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3) ① 협력예매처 공모(1.30~2.8) 및 선정(2.16.): 청년 결제 선호방식인 온라인 포인트 결제 방식 도입(인터파크, 예스 24), ②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2월), 지방비 매칭조사(3월): 청년에게 보다 많은 혜택 제공 위해 국비(10만원)에 추가 지방비(5만원) 재원 마련, ③ 고시제정(2.28.): 대상자 확인 등 행정정보 이용을 위한 근거 마련

54)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은 발급률에 비해 낮은 이용률('24.10월말 발급률 75.2%, 이용률 15.0%), 실제 청년 수요에 부적합하다는 외부 지적(문체위 국감) 등에 대한 개선안으로, 이용자 설문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이용 분야 확대를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또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이용장르 추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경험 축적으로 향후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한정된 공적 재원으로 청년이 자발적으로 소비할 가능성이 큰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경험 축적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중음악 장르 소비 경험이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취향 형성 및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　출〉

15.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

가. 개　요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지역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254억 9,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5]

[2024년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내관광 역량 강화	53,129	86,171	-	86,171	86,093	-	78	105,439
국내관광 캠페인	10,424	37,466	-	37,466	37,415	-	51	54,453
숙박할인권 지원	-	25,495	-	25,495	25,495	-	-	46,259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매년 대규모의 기금변경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계획이 실제 소요와 부합하지 않게 편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사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계획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1,000명에 대해 숙박할인 3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역사업 ‘국내관광 캠페인’의 내내역사업인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55) 관광진흥개발기금-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관광산업정책관)

[2024년 숙박할인 지원을 위한 당초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계획액	산출근거
국내관광 역량 강화 (4264-309)	국내관광 캠페인	여행가는 달 캠페인	1,850	여행할인혜택: 숙박 3만원×6.1만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2024년 설·추석 민생안정대책('24.1.16., '24.8.28.),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등의 일환으로 4차례의 기금변경을 통해 총 254억 9,500만원을 계획변경하여, 당초 계획(6.1만장) 대비 15.6배 증가한 총 95만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하였음.

[2024년 숙박할인권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으로		비고
	세부사업	금액	세부사업	금액	
기재부협의 ('24.2.2.)	비통화금융 예치금	△3,385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내관광 캠페인)	3,385	○ 숙박할인권 지원(2~3월, 11만장) *「설 민생안정대책」('24.1.16.)
기재부협의 ('24.4.24.)		△7,240		7,240	○ 숙박할인권 지원(6월, 25만장)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기재부협의 ('24.8.23.)		△5,990		5,990	○ 숙박할인권 지원(9월, 20만장)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기재부협의 ('24.9.23.)		△8,880		8,880	○ 숙박할인권 지원(9월, 추가 30만장) *「추석 민생안정대책」('24.8.28.)
합계		△25,495	합계	25,4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 2023년 기금계획에는 45,000명에 대해 숙박할인 3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수활성화 대책 등의 일환으로 총 373억원을 계획변경하여 숙박할인권 130만장을 배포하였음.[56]

56) 2023년 숙박할인권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구분 (날짜)	~에서		~으로		비고
	세부사업	금액	세부사업	금액	
기재부협의 ('23.4.13.)	비통화금융 예치금	△28,000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내관광 캠페인)	28,000	○ 숙박할인권 지원(상·하반기 90만장)
기재부협의 ('23.9.21.)		△9,300		9,300	○ 숙박할인권 지원(추석, 30만장)
합계		△37,300	합계	37,3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에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숙박할인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숙박할인권 100만장 지원을 위해 1월 및 5월 2차례에 걸쳐 총 315억 8,000만원을 계획변경한 것에 이어,[57] 50만장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제2회 추경을 통해 146억 7,900만원을 계획변경하여, 동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50만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할 계획임.

[2023년~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예산	403억원 (본예산 30억* + 기금변경 373억)	282억원 (본예산 27억* + 기금변경 255억)	463억원 (기금변경 316억 + 추경 147억)
당초 수량	4.5만장	6.1만장	-
지원 수량	130만장	95만장	150만장
적용	전국 숙박시설	비수도권 숙박시설(서울·인천·경기 제외)	

주) 숙박할인을 위해 편성된 예산 2023년 13억 5,000만원, 2024년 1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내내역사업 '여행가는 달 캠페인' 예산을 활용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대규모의 기금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이 실제 소요와 부합하지 않게 편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사업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져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당초 편성 단계에서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계획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57) 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구분 (날짜)	~에서		~으로		비고
	세부사업	금액	세부사업	금액	
기재부협의 ('25.1.23.)	비통화금융 예치금	△29,780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내관광 캠페인)	29,780	○ '25년 경제정책방향,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숙박할인권 지원
기재부협의 ('25.5.20.)	비통화금융 예치금	△1,800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내관광 캠페인)	1,80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할인권 추가 지원
합계		△31,580	합계	31,5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등

가. 개 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근로자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59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8]

[2024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내관광 역량 강화	53,129	86,171	-	86,171	86,093	-	78	105,439
국민관광지원	34,770	40,770	-	40,770	40,770	-	-	43,286
근로자 휴가지원	9,900	6,000	-	15,900	15,900	-	-	15,9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59]이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자부담 20만원에 기업분담금 10만원과 정부분담금 10만원을 합한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포인트로 부여하여, 근로자가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됨.[60]

나. 검토의견

첫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기금변경을 통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기금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8) 관광진흥개발기금-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관광정책국)

59) 참여대상: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속 근로자 및 소상공인

60) 참여절차: 참여신청(기업) → 참여근로자 확정(관광공사) → 분담금 적립(근로자・기업・정부) → 국내여행 경비 적립금 포인트로 사용(근로자)

최근 동 사업의 지원규모는 2020년 9.6만명에서 2024년 14.3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던 2021년~2022년을 제외하고 기금변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지원규모
	당초	수정							
2020년	8,500	16,000	3,430	19,430	9,203	8,770	1,457	47.4	9.6만명
2021년	11,000	11,000	8,770	19,770	7,328	7,381	5,061	37.1	8.6만명
2022년	11,000	11,000	7,381	18,381	13,492	1,955	2,934	73.4	10.1만명
2023년	9,900	14,900	1,956	16,855	15,185	891	779	90.1	14.1만명
2024년	9,900	15,900	891	16,791	14,233	807	1,751	84.8	14.3만명

주) 2020년~2024년의 지원규모는 계획 기준이 아닌 실제 지원 실적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에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예년보다 축소된 7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과 같은 규모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제2회 추경을 통해 159억원으로 계획변경하였음.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계획변경 세부내역]

○ 근로자 휴가 지원: (당초) 70억원 → (변경) 159억, 89억원 증액
- 정부지원금: (당초) 100,000원×6.5만명 → (변경) 100,000원×15만명
- 사업 운영·관리 등: (당초) 500백만원 → (변경) 90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례적으로 기금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기금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최근 소상공인·소기업보다 중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참여기업보다 재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국내 여행 활성화라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최근 실적 및 참여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소기업보다 중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특히 2024년에는 신규 참여기업의

비율이 30.4%에 그쳐 전년에 비해 재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최근 3년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실적]

(단위: 개소,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기업	참여 기업	참여 근로자	전체기업	참여 기업	참여 근로자	전체기업	참여 기업	참여 근로자
소상공인	7,657,000	4,786 (42.9%)	12,901 (12.7%)	-	7,124 (48.9%)	20,481 (14.5%)	-	5,710 (42.5%)	18,099 (12.6%)
소기업	262,000	3,597 (32.2%)	27,929 (27.6%)	-	3,319 (22.8%)	30,690 (21.7%)	-	3,288 (24.5%)	28,765 (20.1%)
중기업	124,000	1,940 (17.4%)	45,606 (45.0%)	-	3,063 (21.0%)	68,442 (48.4%)	-	3,446 (25.7%)	72,753 (50.8%)
중견기업	5,576	132 (1.2%)	8,738 (8.6%)	5,868	210 (1.4%)	13,708 (9.7%)	-	226 (1.7%)	15,894 (11.1%)
비영리 민간단체 등	15,428	710 (6.4%)	6,155 (6.1%)	15,115	858 (5.9%)	8,024 (5.7%)	13,921	761 (5.7%)	7,622 (5.3%)
합계	8,064,004	11,165 (100%)	101,329 (100%)	20,983	14,574 (100%)	141,345 (100%)	13,921	13,431 (100%)	143,133 (100%)

주 1) 전체기업 수 출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통계, 중기부), 중견기업(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업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행안부)
2) '23년, '24년 미발표 통계 미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규 참여기업 비율]

구분		1년차 (신규 참여)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합계
2018	기업 수	2,441	-	-	-	-	-	-	2441
	비율	100	-	-	-	-	-	-	100
2019	기업 수	6,047	1,471	-	-	-	-	-	7,518
	비율	80.4	19.6	-	-	-	-	-	100
2020	기업 수	8,087	2,778	1,066	-	-	-	-	11,931
	비율	67.8	23.3	8.9	-	-	-	-	100
2021	기업 수	3756	2,592	1,795	763	-	-	-	8,906
	비율	42.2	29.1	20.2	8.6	-	-	-	100
2022	기업 수	5,147	1,850	1,899	1,591	678	-	-	11,165
	비율	46.1	16.6	17.0	14.2	6.1	-	-	100
2023	기업 수	6,918	2,701	1,426	1,549	1,389	591	-	14,574
	비율	47.5	18.5	9.8	10.6	9.5	4.1	-	100
2024	기업 수	4,084	3,175	1,893	1,149	1,335	1263	532	13,431
	비율	30.4	23.6	14.1	8.6	9.9	9.4	4.0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휴식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같이 중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참여 기업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에 대한 기업분담금을 인상(기업분담금 인상 10만원→15만원, 정부지원금 축소 10만원→5만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는 기존 참여기업에 대한 제약을 통해 신규 참여기업의 유입 여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나, 소상공인·소기업 및 신규 기업의 참여 유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없어 이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미참여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권 부여, 최초 참여 시 자부담 비율 완화 등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에 대한 기업분담금을 5만원 인상하였으나, 더 나아가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한 기업에 대한 참여 주기를 조절하거나, 신청기업의 재정 능력 및 기존 참여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업분담금 및 정부분담금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여, 보다 다양한 기업의 근로자가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17.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융자지원 대비 이차보전 운영지원 집행실적 부진

가. 개 요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사업은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전대하는 ‘융자지원’과 시중 대출금리 중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운영지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4년 계획현액 5,417억 3,300만원 중 5,380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36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61)]

[2024년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541,733	541,733	-	541,733	538,086	-	3,647	591,863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536,500	536,500	-	536,500	536,500	-	-	586,500
이차보전 운영지원 (이차보전금)	5,000	5,000	-	5,000	1,401	-	3,599	5,0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예산의 일부를 이차보전 운영지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집행실적이 융자지원 대비 매우 저조하므로, 당장의 재정절감 규모만을 고려하기보다 현장의 대출 수요 및 정책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융자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별 적정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융자·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세 가지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61)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300)(관광정책국)

2024년 지원규모는 융자지원 5,365억원, 이차보전 운영지원 5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억원 순임.

[2024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융자, 이차보전, 신용보증 비교]

구 분	융자지원	이차보전 운영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지원방식	은행을 통해 융자금 전대	시중 대출금리 중 일부 보전	신용보증
적용이율	기준금리 또는 기준금리에서 0.75~1.25%p 차감	은행 규정에 따른 금리 중 3% 또는 2.5%p 보전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융자분야	시설・운영자금	시설・운영자금	운영자금
융자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12년(거치기간 5년 포함)	3년(만기일시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6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	최대 150억원 이내	최대 150억원 이내	최대 2억원 이내
지원규모 (2024년)	5,365억원	50억원	10억원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국민은행 등 12개 은행	농협은행

주)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융자지원은 1973년부터,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차보전 운영지원은 2023년부터 재정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를 유지・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융자지원의 예산 일부를 전환하여 신규 추진하였음.

그런데 이차보전 운영지원은 2023년 사업준비기간 소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1.5%에 그쳤고, 2024년에도 계획현액 50억원 대비 14억 1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집행률 28.0%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2023년~2024년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2,500	-	-	2,500	37	-	2,463	1.5
2024	5,000	-	-	5,000	1,401	-	3,599	2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반면 융자지원은 2024년 상반기 집행률이 70.9%에 달하고,[62] 신규 신청접수가 8월부터 중단되는 등 2024년 계획현액 5,365억원이 조기에 소진되었음.

62) 연도별 상반기 융자 집행률 현황

[최근 5년간 융자지원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0	545,000	-	95,000	640,000	640,000	-	-	100.0
2021	594,000	-	-	594,000	441,706	-	152,294	74.4
2022	649,000	-	△123,600	525,400	472,616	-	52,784	90.0
2023	446,500	-	-	446,500	446,336	-	164	99.9
2023	536,500	-	-	536,500	536,500	-	-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차보전 운영지원은 시중은행의 대출심사를 이미 거친 융자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지원대상의 신용부실로 인한 결손 위험이 적고, 재정규모 대비 수혜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음.

그러나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발생 이자가 수입으로 편입되어 기금 사업에 다시 쓰일 수 있는 직접융자와 달리, 융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기금 재원 확보에 불리하고,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초기 단계 기업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간과할 수 없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순히 당장의 재정 절감 규모만을 고려하기보다 현장의 대출 수요 및 정책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융자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 방식별 적정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집행률	78.0%	48.9%	41.8%	66.4%	7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　출〉

18. 축구 국가대표 전용숙소 건립 사업: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축구 국가대표 전용숙소 건립’ 사업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선수 숙소동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60억원이 전액 불용(집행률 0%)되었음.[63]

[2024년도 축구 국가대표 전용숙소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우수선수 양성지원	146,030	146,030	-	146,030	140,030	-	6,000	139,780
선수촌 운영	54,441	54,441	-	54,441	48,441	-	6,000	42,143
축구 국가대표 전용숙소 건립	6,000	6,000	-	6,000	-	-	6,000	-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선수 숙소동은 부지면적 2,861㎡, 건축연면적 8,48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천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건립될 예정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보조사업(보조율 100%)임.

나. 검토의견

2023년 축구종합센터 사업의 보조금 허위신청 문제가 지적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2024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축구 국가대표 전용숙소 건립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2023년 축구종합센터 사업의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3) 국민체육진흥기금-우수선수 양성지원(5261-312)(체육국)

대한축구협회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함께 전문 축구훈련시설 및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역사업 ‘선수촌 운영’을 통해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국고보조금 77억원(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선수 숙소동 건립을 위해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축구종합센터 건립 계획]

구분		합계	축구종합센터(대한축구협회 공사분)				
			미니 스타디움	인도어 스타디움	선수 숙소동	축구장	기타시설, 토지비 등
연면적		32,937㎡	13,154㎡	10,066㎡	8,541㎡	-	1,176㎡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4층	-	지상 1층
주용도		축구종합센터	축구장·관람석 선수지원시설	실내 축구장	선수 숙소	잔디구장 5면	잔디관리시설, 장비창고 등
총사업비		1,549억원	416억원	193억원	379억원	194억원	367억원
재원	자체	1,182.5억원	339억원	83억원	319억원	154.5억원	287억원
	지원	366.5억원	**77억원**	110억원	**60억원**	39.5억원	80억원
			문체부 보조금 ('22~'23)	천안시 보조금	**문체부 보조금 ('24)**	FIFA U-20 잉여금	FIFA 포워드 지원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24. 7. ~ 11.)에서 2023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사업의 보조금 허위신청 문제가 지적되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2024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선수 숙소동 건립 예산 6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문체부와 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종목단체의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어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미니스타디움에 축구협회의 사무공간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2022년 5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축구협회는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협의하였음.

이후 2022년 12월 축구협회는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기협의한 내용대로 미니스타디움에는 지도자 및 축구선수를 위한 용도의 공간만을 배치하고, 사무공간은 별도의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

그런데 2023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구협회는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별도의 사무동에 계획했던 사무공간을 미니스타디움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하여, 미니스타디움 3층에 사무공간 1,409.96㎡를 배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승인받았고, 그럼에도 2023년 12월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보조금 신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음.

또한 2024년 6월 보조사업 정산을 위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미니스타디움 3층에 축구협회 사무공간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받은 도면이 아닌 사무공간 표기가 없는 허위 도면을 정산서류로 제출하였음.

이와 같이 축구협회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실제 추진 사실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정산서류도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것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함.[64)65)]

---

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5)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23년 보조금(56억원)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를 위해 '25.1.22. 교부결정 취소 사전통지를 하였음. 대한축구협회는 '25.1.21. 감사 결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5.2.11.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현재 가처분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으로 환수를 위한 절차는 중지된 상황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에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축구협회가 설계 및 건축허가를 진행한 후 2023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정산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문체부는 현장 조사 및 보조금 교부 시 중간 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66]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9.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실제 수요 및 기금 여유자금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국내 체육 관련 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1,637억 3,000만원 중 1,162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0%)되고, 474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67]

[2024년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163,730	163,730	-	163,730	116,267	-	47,463	163,730
융자금	157,880	157,880	-	157,880	112,351	-	45,529	157,180
이차보전	5,850	5,850	-	5,850	3,916	-	1,934	6,55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모두 집행률이 70% 내외로 저조하여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체육기금의 상당한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사업에 대해 이차보전과 병행하기보다 직접융자 방식으로만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국내 체육 관련 업체[68]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비 조달을 지원하여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융자와 이차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199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직접융자 사업은 2020년~2023년 4년간은 계획액이 전액

67)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5365-300)(체육국)

68) 지원대상: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등

집행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계획현액 1,578억 8,000만원 중 1,123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2%)되어 455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최근 5년간 융자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0	126,100	-	-	126,100	126,100	-	-	100.0
2021	136,100	-	-	136,100	136,100	-	-	100.0
2022	228,900	-	-	228,900	228,900	-	-	100.0
2023	76,100	-	-	76,100	76,100	-	-	100.0
2024	157,880	-	-	157,880	112,351	-	45,529	7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 계획현액 58억 5,000만원 중 39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9%)되어 2023년보다는 집행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2024년 이차보전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3,900	-	-	3,900	818	-	3,082	21.0
2024	5,850	-	-	5,850	3,916	-	1,934	66.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2024년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모두 집행률이 70% 내외로 나타난 것은 당초 대출 수요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차보전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금융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어 중장기적인 기금 재정의 확보 측면에서는 원금회수와 이자수입이 가능한 융자 대비 불리함.

그런데 체육기금의 경우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69] 당장의 재정 절감을 위해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융자 방식으로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69) 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여유자금 규모는 연말잔액 기준 3조 2,410억 1,600만원으로, 연중평잔 기준으로도 2조 5,753억 8,200만원에 달하고 있음.

20.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연례적 실집행부진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기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847억 8,700만원 중 787억원이 집행(집행률 92.8%)되고 60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70]

[2024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85,137	85,137	-	85,137	79,046	-	6,091	72,624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84,787	84,787	-	84,787	78,700	-	6,087	72,074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체육센터의 유형에 따라 지자체에 일정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2024년 계획액에는 생활권형 34개소, 생활권 장애인형 42개소, 시니어친화형 11개소, 유아친화형 3개소 등 총 90개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도 실집행이 저조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지속적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실집행 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문체부 차원의 평균 집행률은 97.2%로 계획된 예산 대부분이 교부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평균 실집행률은 33.9%에 불과하여, 매년 당해연도 교부액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70)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5163-300)(체육국)

특히 2021년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당초 계획액은 848억원인데, 이 중 787억원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어 1,508억원이 실집행되었음에도 2,217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39.4%에 그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본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0년	248,540	245,404	98.7	245,404	206,650	452,054	91,164	353,280	7,610	20.2
2021년	251,032	245,532	97.8	245,532	353,280	598,812	190,168	406,484	2,160	31.7
2022년	202,568	202,368	99.9	202,368	406,484	608,852	223,380	375,359	10,113	36.7
2023년	165,473	160,083	96.7	160,083	375,359	535,442	221,420	304,552	9,470	41.4
2024년	84,787	78,700	92.8	78,700	304,552	383,252	150,832	221,743	10,676	39.4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에 구체적으로 2024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27개 센터의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실집행액이 0원인 센터가 14개로 절반이 넘고, 6개 센터는 실집행률 10% 미만으로, 전체 실집행률이 19.9%에 그치고 있음.

[2024년 신규 선정된 국민체육센터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지역	센터명(사업기간)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교부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생활밀착형(생활권형)	부산 수영구	망미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200	-	-	100.0
	강원 평창군	**진부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9	191	-	4.5
	충남 천안시	**동부스포츠센터('24~'27)**	200	200	-	200	-	-
	전남 여수시	**죽림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경북 경주시	충효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200	-	-	100.0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광주 광산구	**광산구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대전 서구	**서구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경기 용인시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24~'27)**	1,000	1,000	-	1,000	-	-
	강원 삼척시	삼척시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200	-	-	100.0
	충남 금산군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200	-	-	100.0
	전북 전주시	**전주 건지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전남 담양군	**담양군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20	180	-	10.0
	전남 완도군	**완도군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전남 보성군	**보성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경북 경주시	**경주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경북 울진군	**울진 반다비 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지역	센터명(사업기간)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교부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시니어친화형	대구 군위군	**군위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울산 중구	실내종합체육관('24~'27)	200	200	25	175	-	12.5
	경기 이천시	**중리지구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7	193	-	3.5
	강원 동해시	**동해시 백세건강 스포츠센터('24~'27)**	200	200	14	186	-	7.0
	충북 보은군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충남 본청	도립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200	-	-	100.0
	경남 진주시	**명석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15	185	-	7.5
	제주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45	155	-	2.5
유아친화형	경기 파주시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충북 청주시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	200	-	-
	경남 하동군	국민체육센터('24~'27)	200	200	100	100	-	50.0
합계			6,200	6,200	1,235	4,965	-	19.9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에서도 지자체 단계에서 이월 및 재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하여, 문체부의 사업 관리 및 보조금 교부 전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2022년에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24년에 3년차 사업을 수행한 29개 국민체육센터의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건은 사업이 취소되고, 14건은 교부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아 이월 및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3건은 당해연도 교부액은 없으나 전년도 이월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재이월되는 등 전반적으로 실집행이 상당히 부진함.

[2022년도에 신규 선정된 국민체육센터별 2024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지역	센터명(사업기간)	문체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A)	집행액(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생활밀착형(생활권형)	광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사업취소)**	-	-	177	177	-	-	177	-
	서울 강서구	강서구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2,600	**2,600**	1,267	3,867	1,196	**2,671**	-	30.9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	2,500	**2,500**	469	2,969	67	**2,902**	-	2.3
	경기 시흥시	서울대 내 배곧시민다목적체육관	1,400	**1,400**	1,600	3,000	22	**2,978**	-	0.7
	경기 고양시	삼송역국민체육센터	100	**100**	1,231	1,331	-	**1,331**	-	-
	충남 서산시	서산시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2,700	**2,700**	1,272	3,972	366	**3,606**	-	9.2
	전남 여수시	돌산 국민체육센터	1,600	**1,600**	2,320	3,920	1,893	**2,028**	-	48.3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지역	센터명(사업기간)	문체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전남 구례군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	1,200	**1,200**	2,649	3,849	952	**2,897**	-	24.7
	부산 강서구	강서구 명지 국민체육센터	1,700	1,700	762	2,462	762	1,669	31	31.0
	경기 성남시	성남 대장종합사회복지관	400	400	300	700	300	400	-	42.9
	강원 홍천군	내면 국민체육센터	2,600	2,600	1,400	4,000	2,600	1,400	-	65.0
	경기 하남시	하남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1,700	1,700	655	2,355	1,638	717	-	69.6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2,600	2,600	832	3,432	3,403	29	-	99.2
	대전 서구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	-	**3,000**	3,000	-	**3,000**	-	-
	경기 안산시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	-	**2,930**	2,930	135	**2,795**	-	4.6
	경기 하남시	하남시 (가칭)위례 복합체육시설	-	-	**3,099**	3,099	1,027	**2,072**	-	33.1
	경기 포천시	포천시 태봉공원 국민체육센터	-	-	4,000	4,000	3,266	734	-	81.7
	전남 함평군	함평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	-	1,700	1,700	1,700	-	-	100.0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광주 서구	서구반다비 체육센터**(사업취소)**	-	-	200	200	-	-	200	-
	경기 양평군	양평 반다비 체육센터	400	**400**	2,000	2,400	-	**2,400**	-	-
	충남 태안군	태안 반다비 체육센터	1,200	**1,200**	1,792	2,992	399	**2,593**	-	13.3
	전북 임실군	임실 반다비 체육센터	1,400	**1,400**	1,259	2,659	76	**2,583**	-	2.9
	전남 장흥군	장흥군 반다비 체육센터	1,200	**1,200**	1,732	2,932	663	**2,270**	-	22.6
	전남 영암군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1,200	**1,200**	1,600	2,800	198	**2,602**	-	7.1
	경북 김천시	반다비 어울림센터 생활 SOC복합화 사업	1,400	**1,400**	1,626	3,026	273	**2,753**	-	9.0
	경북 청도군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1,900	**1,900**	1,922	3,822	122	**3,700**	-	3.2
	강원 속초시	속초 반다비 체육센터	2,000	2,000	1,972	3,972	2,440	1,532	-	61.4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1,200	1,200	862	2,062	1,649	413	-	80.0
	전남 강진군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1,200	1,200	1,403	2,603	2,603	-	-	100.0
합계			34,200	34,200	46,031	80,231	27,750	52,075	408	34.6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대부분 중앙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기획 심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해당하여, 문체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당시에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임.

그러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 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1.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신규): 사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집행 부진

가. 개 요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은 1986년 조성 후 3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올림픽공원의 기념시설 및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53억 5,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71]

[2024년도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24,611	24,611	-	24,611	23,537	235	839	23,233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	15,352	15,352	-	15,352	15,352	-	-	4,893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이용객 불편 등을 초래하는 올림픽공원 기념시설(평화의문, 평화의 광장 바닥판석) 및 기반시설(공원 내 지중선로·관로)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보조사업(보조율 100%)임.

나. 검토의견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평화의 문 재도색 및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사업은 2024년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예산이 2024년 계획액에 모두 반영되었고, 지중선로·관로 개보수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2024년 계획액에는 설계비 등이 반영되었음.

71) 국민체육진흥기금-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5364-303)(체육국)

그런데 보조사업자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몽촌해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올림픽공원 내 굴착 등 공사 추진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24년 교부현액 153억 5,200만 중 5억 7,200만원만 집행(실집행률 3.7%)되고 147억 8,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4년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 내역사업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국민체육진흥공단)						
	계획액 (A)	집행액 (B)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평화의 문 재도색	859	859	859	-	859	40	819	-	4.7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12,571	12,571	12,571	-	12,571	311	12,260	-	2.5
지중선로 개보수	767	767	767	-	767	-	767	-	-
지중관로 개보수	1,155	1,155	1,155	-	1,155	221	934	-	19.1
합계	15,352	15,352	15,352	-	15,352	572	14,780	-	3.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후 2025년 1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가는 완료되었으나, 조달청 계약 의뢰 및 계약체결에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2024년 완료되었어야 할 각 내역사업들은 2025년 하반기 공사 시행 후 준공될 예정임.

[2024년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 내역사업별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

구분	당초 계획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평화의 문 재도색	○ 원작자(백금남) 설계 자문 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 ('24. 3. ~ 5.)	○ ('24. 3. ~ '24. 11.) 평화의 문 재도색 자문위원회 구성 ○ ('24. 7. ~ '24. 10.) 실시설계 용역 ○ ('25. 4. ~ '25. 5.) 조달청 계약 의뢰 및 계약체결 ○ ('25. 6. ~ '25. 9.) 재도색 시행 및 준공 예정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 공원 조성 당시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여 올림픽레거시 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의 설계 후 시공 ('24. 3. ~ 12.)	○ ('24. 3. ~ '24. 6.) 기본구상 용역 * ('24. 4. ~ 5.)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행 및 선정 ○ ('24. 10. ~ '25. 2.) 설계용역 ○ ('25.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가 (평화의 광장 개선 사업, 송파구청) ○ ('25. 3.)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심의 ○ ('25. 4. ~ '25. 6.) 조달청 계약 의뢰 및 계약체결 ○ ('25. 6 ~ '25. 12.) 판석교체 공사 시행 및 준공
지중선로 개보수	○ 공원 옥외 지구변전실, 가로등 설비, 통신・방송설비 전체 개보수를 위한 설계 추진 ('24. 3. ~12.)	○ ('24. 8 ~ '25. 3.) 올림픽공원 옥외 노후설비 개보수 공사 설계 용역 ○ ('25. 4. ~ '25. 6.) 조달청 계약 의뢰 및 계약체결 ○ ('25. 6. ~ '25. 12.)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구간 지중선로 공사 시행 및 준공 예정

구분	당초 계획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지중관로 개보수	○ 지중관로 노후도 정밀진단, 상수도 제수밸브(72개소), 역구배 개선(220m), 관로 준설 등 시행 ('24. 3. ~ 12.)	○ ('24. 9. ~ '25. 3.) 올림픽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보수공사 설계 용역 ○ ('25. 4. ~ '25. 6.) 조달청 계약 의뢰 및 계약체결 ○ ('25. 6. ~ '25. 12.)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구간 지중관로 공사 시행 및 준공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전 행정절차 및 조달청 계약 의뢰 소요기간 등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사업 지연 및 대규모 예산의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72)]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향후 사업의 제반 여건을 철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지연 및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2)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다수의 건립사업에서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행정 소요기간의 예측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기　타】

2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자펀드 결성 지연 및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회는「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시정요구 110건(중복 7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징계 1건・시정 11건・주의 47건・제도개선 58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1	10	46	58	7	108
예비비	-	-	1	1	-	-	2
합계	-	1	11	47	58	7	110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요구사항 110건에 대해 77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0.0%)하고 3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08	75	69.4	33
예비비	2	2	100.0	-
합계	110	77	70.0	33

국회가「2024년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문화체육관광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8) 정부는 평창동계훈련센터 보조금 지원방식을 정률에서 정액으로 변경한다.
	(1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장 시설공사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한다.
	(40)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20)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권도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21)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22)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한다.
	(23)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영화 및 지역영화제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나. 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펀드 출자와 관련해 향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자펀드 조기 결성을 통하여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자펀드 결성지연 및 투자소진율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시정요구에 대해 '23년 결성 펀드의 '24.8월 기준 투자소진율이 25.8%로 투자기간 경과율(21.9%) 대비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25년 문화계정 예산이 2,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 감액되어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2024년 출자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던 16개 자펀드 중 12개 자펀드만이 연내 결성되었고, 2024년 12월말 기준 총 결성규모(목표) 7,119억원 대비 실제 투자액은 481억원에 불과하여 연내 투자소진율이 6.8%로 저조하였음.[73)]

73) 연내 결성된 자펀드 12개의 총 결성규모 5,717억원 기준으로 산출한 연내 투자소진율 또한 8.4%로 부진한 측면이 있음.

[2024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자펀드 연번	분야	펀드 결성일	최초 투자일	결성규모(목표)		투자금액 (B)	투자 소진율 (B/A)
				정부 출자금	총액(A) (민간출자 포함)		
1	IP	'24.07.10.	'24.08.07.	300	510	71	13.9
2	IP	'24.09.02.	'24.12.20.	300	600	20	3.3
3	IP	'24.09.11.	'24.10.30.	300	500	42	8.3
4	IP	'24.08.07.	'24.10.04	300	501	60	11.9
5	M&A-세컨더리	'24.05.30.	'24.10.04	200	1000	152	15.2
6	문화일반	'24.10.30.	'25.03.19.	200	400	-	-
7	수출	'24.07.26.	'24.08.27.	225	384	58	15.1
8	수출	'24.11.18.	'24.12.17	225	375	29	7.7
9	수출	'24.11.26.	-	225	375	-	-
10	수출	'24.10.25.	'25.03.18.	225	400	-	-
11	신기술	'24.07.26.	'24.10.04.	200	334	30	9.0
12	신기술	'24.07.26.	'24.09.13.	200	338	20	5.9
(연내 결성 자펀드) 소계 (C)				**2,900**	**5,717**	**481**	**8.4**
1	M&A-세컨더리	'25.02.24.	'25.04.30.	200	334	-	-
2	M&A-세컨더리	결성지연	-	200	334	-	-
3	문화일반	'25.02.21.	'25.04.10.	200	400	-	-
4	신기술	'25.06.05.	-	200	334	-	-
(연내 미결성 자펀드) 소계 (D)				**800**	**1,402**	**-**	**-**
합계 (C+D)				**3,700**	**7,119**	**481**	**6.8**

주) 투자금액 및 투자소진율은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펀드 출자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펀드 결성 지연 등으로 인하여 투자가 늦어지는 경우, 특히 출자연도에 전혀 투자되지 못한 자펀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 예산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인 유동성의 적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자펀드 결성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당해 출자금의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74]

74) 그러나 가치평가에 따른 선별적 투자를 위해서는 운용사 선정이나 펀드 모집 등의 절차를 조기 투자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단축해서도 안 될 것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70) 자펀드 결성지연에 따른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 주의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펀드 출자와 관련해 향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자펀드 조기 결성을 통하여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주의)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24.8월 기준 '23년 결성 펀드의 투자 소진율은 25.1%로, 투자기간 경과율(21.9%) 대비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25년 문화계정 예산은 2,050억원으로, 전년대비 24.1% 감액

국가유산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8억 5,300만원(4.4%)이 많은 671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6,200만원(23.7%)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1,272	51,272	46,928	△4,344	53,417	53,417	50,068	△3,349	3,140
기 금	7,340	7,340	7,346	6	10,866	10,866	17,068	6,202	9,722
총수입	58,612	58,612	54,275	△4,337	64,283	64,283	67,136	2,853	12,862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14억 200만원(△1.6%)이 적은 1조 3,446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8억 2,500만원(4.1%)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189,925	1,189,925	1,132,488	△57,437	1,206,701	1,206,701	1,187,158	△19,543	54,670
기 금	160,869	160,869	159,326	△1,543	159,179	159,341	157,482	△1,859	△1,845
총지출	1,350,794	1,350,794	1,291,814	△58,980	1,365,880	1,366,042	1,344,640	△21,402	52,825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34억 1,700만원으로, 705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00억 6,800만원이 수납(수납률 71.0%)되고 203억 1,2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억 4,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2,515	52,515	-	52,515	70,493	50,068	20,285	14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02	902	-	902	27	-	27	-
- 지역지원계정	-	-	-	-	14	-	14	-
- 지역자율계정	902	902	-	902	13	-	13	-
합 계	53,417	53,417	-	53,417	70,520	50,068	20,312	140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2,390억 3,900만원으로, 이 중 1조 1,871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254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4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206,701	1,206,701	32,338	±4,860	-	1,239,039	1,187,158	25,467	26,4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
합 계	1,206,701	1,206,701	32,338	±4,860	-	1,239,039	1,187,158	25,467	26,41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699억 8,200만원으로, 1,906억 5,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890억 6,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2%)되고 15억 9,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국가유산보호기금	169,982	169,982	190,652	189,062	1,590	-
합 계	169,982	169,982	190,652	189,062	1,590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699억 8,200만원으로, 이 중 1,890억 6,200만원이 지출(집행률 111.2%)되고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억 1,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가유산보호기금	169,982	169,982	-	169,982	189,062	49	1,811
합 계	169,982	169,982	-	169,982	189,062	49	1,811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유산청 자산은 전년 대비 708억 3,200만원이 증가한 1조 1,602억 5,1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538억 2,300만원, 무형자산이 185억 6,8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억 2,500만원 증가한 951억 5,3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가 82억 800만원 감소했으나 유동부채가 87억 3,3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03억 700만원 증가한 1조 650억 9,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2,465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1,689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2,5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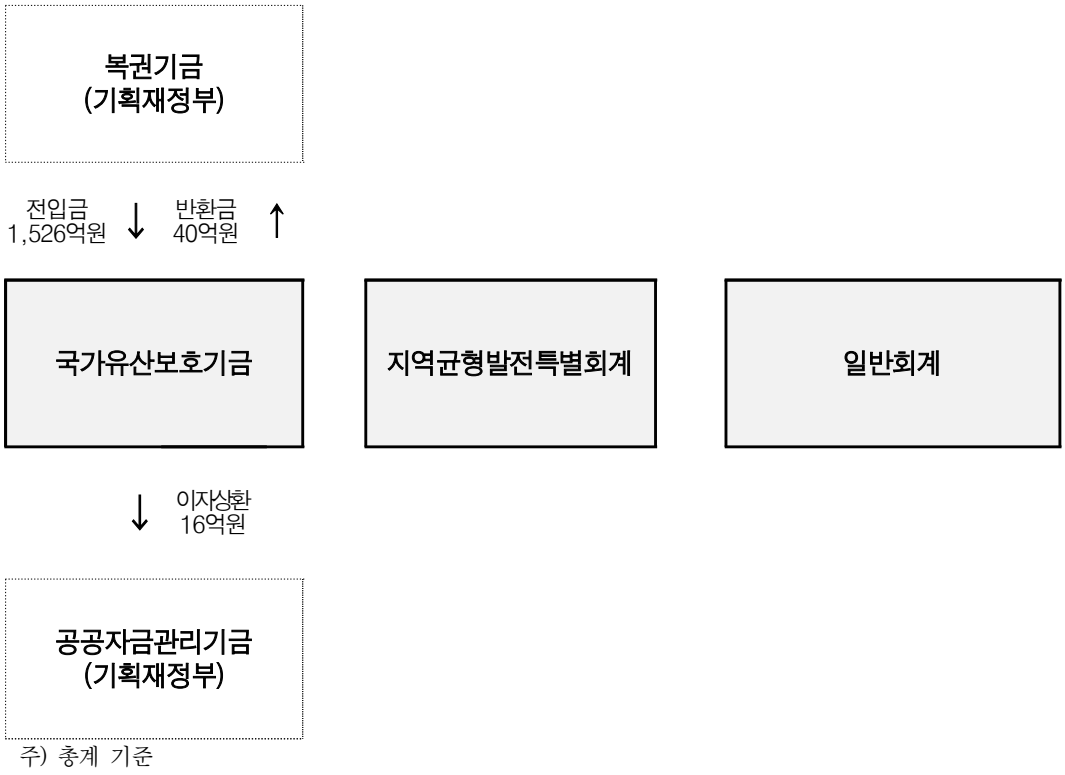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160,251	1,089,419	70,832	6.5
		유동자산	70,815	72,216	△1,401	△1.9
		투자자산	4,518	3,686	832	22.6
		일반유형자산	1,034,725	980,902	53,823	5.5
		무형자산	48,520	29,952	18,568	62.0
		기타비유동자산	1,674	2,663	△989	△37.1
	부 채		95,153	94,628	525	0.6
		유동부채	11,723	2,990	8,733	292.1
		장기차입부채	83,430	91,600	△8,170	△8.9
		장기충당부채	-	38	△38	△100.0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065,098	994,791	70,307	7.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246,530	1,243,754	2,956	0.2
	재정운영순원가		1,317,618	1,317,577	41	0.0
	재정운영결과		1,168,953	1,161,928	7,025	0.6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와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가유산보호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526억 1,100만원을 전입 받고, 40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5억 8,5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체제 전면도입을 통한 국민과 상생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①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② 국민이 공감·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③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 총 101개 세부사업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연구개발사업관리’ 사업은 세목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전시부스 제작·설치 용역비 등 홍보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한 집행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은 체계적인 전통재료 비축 및 비축 재료의 적시 공급을 위해, 재료별 적정 비축량 및 비축 재료의 공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전액 불용에 따른 국가예산의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국가유산청은 사업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과「국유재산법」제73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440억 3,800만원 중 286억 3,300만원이 수납(수납률 65.0%)되고 불납결손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음.[2)]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30,000	30,000	44,038	28,633	15,386	19	65.0	3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3)]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후 보조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2)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액(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 제4항[4]에 따르면,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낮음에 따라 미수납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미수납 국고보조금 정산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의 최근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021년 87.3%에서 2024년 65.0%로 낮아지는 추세로, 이에 따라 미수납액 또한 2021년 41억 6,700만원에서 2024년 153억 8,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21년~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5,000	25,000	-	25,000	32,837	28,670	114.7	87.3	4,167	-
2022	30,000	30,000	-	30,000	40,182	29,551	98.5	73.5	10,625	6
2023	30,000	30,000	-	30,000	43,985	28,066	93.6	63.8	15,884	35
2024	30,000	30,000	-	30,000	44,038	28,633	95.4	65.0	15,386	19

자료: 국가유산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완료 시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및 보조사업 수익금을 반납하고, 국가유산청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집행잔액 74억 2,600만원이 2024년 12월말 기준 반납되지 않고 있음.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주요 미수납 현황]

(단위: 천원)

교부연도	결의내용	최초 결의일자	징수결정 금액	미수납 금액
2023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경상북도)	2024-03-28	2,474,083	2,474,083
		2024-05-13	8,518	8,518
		2024-06-20	37,609	37,609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충청남도)	2024-03-28	1,726,472	1,726,472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경상남도)	2024-03-28	1,342,252	1,342,252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강원도)	2024-03-28	993,273	993,273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전라북도)	2024-03-28	547,662	547,662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전라남도)	2024-03-28	285,526	285,526
		2024-05-13	4,703	4,703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충청북도)	2024-03-28	5,773	5,773
	합계		7,425,871	7,425,871

주) 2024년 12월말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광역지자체가 관할 기초지자체의 정산반환액을 취합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국가유산청은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 및 추경 편성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정산반환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납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미수납률과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장기 미수납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유산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책임이 요구됨.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별 미납사유 및 납부계획 관리를 통해 반납을 독려하고, 미납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보조금 반납 독려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등을 통해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연구개발사업관리 사업: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홍보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가. 개　요

‘연구개발사업관리’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위한 사업관리 예산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7,500만원 중 3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7%)되고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연구개발사업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	8,195	8,195	-	±48	8,195	8,164	-	31	9,272
연구개발사업관리	375	375	-	±48	375	344	-	31	37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연구개발사업관리 사업에서 세목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전시부스 제작・설치 용역비 등 홍보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한 집행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에서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해 2024년 4,400만원, 2023년 2,200만원을 세목변경하였고, 2022년에는 문화유산 연구개발사업(R&D)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2,000만원을 세목변경하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음.

---

5) 일반회계-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1131-314)(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2년~2024년 연구개발사업관리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목조정 ('22.7.25.)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 (1131-314)	일반수용비 (210-01)	20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 (1131-314)	일반용역비 (210-14)	20	문화유산 연구개발사업(R&D)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
세목조정 ('23.9.11.)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 (1131-314)	일반수용비 (210-01)	22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 (1131-314)	일반용역비 (210-14)	22	문화유산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를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
세목조정 ('24.8.13.)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 (1131-314)	일반수용비 (210-01)	39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 (1131-314)	일반용역비 (210-14)	44	국가유산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를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
		임차료 (210-07)	5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시부스와 홍보영상 제작은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관리 차원에서 연구개발성과 홍보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는 입장임.[6)]

그런데 '연구개발사업관리'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위한 사업관리 예산인 점 및 당초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7)]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세목변경을 통한 전시부스 제작·설치 및 홍보영상 제작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8)]에 비추어 다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연구개발사업관리 예산 집행 시 국회의 예산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6) 특히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설치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전시·홍보뿐만 아니라 산업전 참여업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계약 등과 이어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확산 및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7) 2024년 연구개발사업관리 예산 세부 편성내역

□ 연구개발사업관리: 375백만원
- ○ 사업 또는 과제 기획과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비: 250백만원
- ○ 기획위원회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96백만원
- ○ 관리 및 평가 관련 물품 구입, 임차 등: 29백만원

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신규): 적정 비축량 및 공급 기준 마련 필요

가. 개 요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은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사전에 확보·비축하여 국가유산 수리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억 6,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9)]

[2024년도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문화재수리기술진흥	8,837	8,837	14,041	△28	22,850	21,808	96	946	8,995
문화재수리재료 센터 운영	3,308	3,308	-	-	3,308	3,308	-	-	2,929
전통재료 비축·공급	560	560	-	-	560	560	-	-	19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유산청은 체계적인 전통재료 비축 및 비축 재료의 적시 공급을 위해, 재료별 적정 비축량 및 비축 재료의 공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10)] 수리현장에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재료의 수요 충당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9) 일반회계-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문화유산국)

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당초 국가유산청은 2024년 국내산 소나무 목재(특수재, 특대재) 37,326재를 구매·비축할 계획이었으나, 비축 기준을 충족하는 목재 수급이 곤란함에 따라 목재 구입은 원목 4,197재(8본)에 그쳤음.

한편 비축 대상으로 적합한 자연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없던 석재 113톤을 구매·비축하였고, 잔여 예산 3억 2,500만원은 간접보조사업자 단계에서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전통재료 구매·비축 현황]

구분	유형	수종/암종	단위	비고
계획	목재	국내산 소나무(특수재, 특대재)	37,326재	
실적	목재	소나무	4,197재	원목 8본
	석재	흑운모 화강암	113톤(43.4㎥)	자연석

주 1) 재(材) : 문화유산 혹은 목공사 현장에서 목재 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단위로, 1재는 1치(3.0303cm) × 1치(3.0303cm) × 12자(12×10×3.0303) = 0.0033㎤인데 현장에서는 1㎥ = 300재, 또는 1재 = 1/300㎥로 환산하여 사용

2) 본(本) : 문화유산 혹은 목공사 현장에서 목재 수량을 낱개로 셀 때 사용하는 단위로, '개'로 바꿔 사용가능한 단위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비축 대상이 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마련된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소량생산 또는 수요-공급 시기가 불일치한 것으로, 수리 현장에 적기에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 상황에 따라 재료를 탄력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아직까지 재료별 적정 비축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 재료의 비축량이 과다하거나 부족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비축한 재료의 공급가격 및 수량 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공급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장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재료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체계적인 전통재료 비축 및 비축 재료의 적시 공급을 위해 재료별 적정 비축량 및 비축 재료의 공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11]

11)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통재료 시장에 대한 개입 최소화, 수급 가능량, 보관 시설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내 적정 비축량을 산정할 예정이고, 비축 재료의 공급 또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공급을 진행할 계획으로 공급방식 및 가격결정 절차 등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4.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

가. 개 요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은 무형유산의 거점별 가치 확산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의 분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4억 3,000만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되었음.[12)]

[2024년도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무형유산원 운영	52,653	52,653	-	20	52,673	42,494	-	10,179	44,828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8,430	8,430	-	-	8,430	-	-	8,43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립무형유산원 분원은 경남 밀양에 설립될 예정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 총사업비는 457억원이었음.

나. 검토의견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은 2023년 예산현액 대비 86.1%인 24억 6,700만원이 불용된 것에 이어, 2024년 타당성 재조사로 인해 예산 84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대규모 불용에 따른 국가예산의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당초 2021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초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매년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12) 일반회계-무형유산원운영(1132-303)(무형유산국)

사업 시작 이후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수시배정 사업 지정 및 설계공모 유찰[13]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수립('22.3.)과 설계계약 체결('22.10.)[14]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1년 기본계획 수립비 중 8,600만원과 2022년 실시설계비 중 4억 6,500만원이 연이어 이월되었음.

2023년에는 공사비 등 예산 2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도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3억 9,800만원만 집행(집행률 13.9%)되고, 나머지 24억 6,700만원은 모두 불용되었음.[15]

이후 2024년에는 공사비 등 예산 8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3.5~'23.11.)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457억원→507억원)[16]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24.4~)하게 되면서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17]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년	200	200	-	-	200	112	86	2	56.0
2022년	1,700	1,700	86	-	1,786	1,301	465	-	72.8
2023년	2,400	2,400	465	-	2,865	398	-	2,467	13.9
2024년	8,430	8,430	-	-	8,430	-	-	8,430	-

자료: 국가유산청

이와 같이 동 사업이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보인 이유는 수시배정 사업 지정·설계공모 유찰 및 총사업비 증가 등 사업 추진 지연 사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더불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에 기인함.

특히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국가유산청은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4월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24년 5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설명하였으나,

13) 1차 공모: 2022.6.15. ~ 8.4.(단독응찰로 유찰) / 2차 공모: 2022.8.8. ~ 9.22.

14)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기간: (당초) 2022.10.21. ~ 2023.7.19. / (1차 변경) 2022.10.21. ~ 2023.9.19. / (2차 변경) 2022.10.21. ~ 2024.1.19.

15) 불용액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된 실시설계비 1억 3,900만원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 못하여 불용된 공사비 등 23억 2,800만원임.

16) 계획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후 실시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24.1월) 결과, 사업기간 연장(2026년까지 1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50억원)이 결정되었음.

17) 사업규모 조정 등의 사유로 2024년 12월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되고, 2025년 2월 총사업비가 457억원으로 재결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기간 및 공사업체 선정기간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당초 총사업비는 457억원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어 타당성 재조사[18] 대상이 되면 공사 착공이 더욱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대규모 예산의 불용 등은 국가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이와 같은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8)「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5.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사업 성과의 면밀한 추적·관리를 통한 사업 방식 점검·개선 필요

가. 개 요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은 국가유산 관련 분야 취업준비 청년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 및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유산 관련 분야 수요기관에 필요한 청년 인턴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4억 3,300만원 중 14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4년도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문화재보존관리 정책강화	62,255	62,255	-	34	62,289	61,921	-	368	60,738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1,433	1,433	-	-	1,433	1,432	-	1	1,52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취업 유지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국가유산 산업 분야로의 취창업 현황 및 유지 기간 등은 파악되고 있지 않아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사업 성과의 면밀한 추적·관리를 통해 사업 방식을 점검·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2년부터 국가유산진흥원에 민간위탁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턴 수요기관과 인턴을 모집하여 희망직무 등을 고려해 연계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2024년 기준 인턴 수요기관에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206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수요기관이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19) 일반회계-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1131-301)(유산정책국)

사업 시작 이후 인턴의 정규직 전환 및 취업 유지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수료 인원 158명 중 39명(24.7%)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7명(10.8%)이 사업종료 익년 4월 기준 취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년에는 수료 인원 93명 중 4명(4.3%)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명(2.1%)만 익년 4월에 취업을 유지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 및 취업 유지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취업 유지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수료 인원(A)	158	168	93
정규직 전환 인원(B)	39	33	4
정규직 전환 비율(B/A)	**24.7**	**19.6**	**4.3**
취업 유지 인원(C)	17	13	2
취업 유지 비율(C/A)	**10.8**	**7.7**	**2.1**

주) 취업 유지 현황은 사업종료 익년 4월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임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현재 사업종료 익년 4월에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취업 유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외에 국가유산 산업 분야로의 취·창업 현황 및 유지 기간 등은 파악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 분야 취·창업 기회 확대라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인턴을 신청하는 인턴 운영기관 및 취업준비 청년 수 또한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인턴 운영기관 및 인턴 모집·선정 결과]

(단위: 개,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청기관 수	**191**	**183**	**173**	**126**
모집인원 수(A)	200	200	100	100
신청인원 수(B)	**977**	**982**	**672**	**473**
경쟁률(B/A:1)	4.9:1	4.9:1	6.7:1	4.7:1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이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성과의 면밀한 추적·관리를 통해 사업 방식을 점검·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근대역사문화공간[20] 내 등록문화자원[21] 정비 및 경관회복, 관람 편의시설 조성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2억 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2]

[2024년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3,864	3,864	-	12	3,876	3,852	-	24	5,290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2,207	2,207	-	-	2,207	2,207	-	-	1,62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사업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중 신청을 받아 당해 지원대상을 선정함. 현재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근대역사문화공간 9개소[23] 중 2024년 지원대상은 익산시・목포시・영주시・영덕군・창원시 및 통영시 총 6개 지방자치단체임.

---

20)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근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곳으로 근현대기에 형성(50년 이상 경과)된 거리, 마을, 지구 등 공간 단위의 보존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

21)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주요 경관 구성요소로서 보존과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물

22) 일반회계-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2135-302)(문화유산국)

23) (2018년 등록)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2019년 등록)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2020년 등록)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2021년 등록)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2024년 등록)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나. 검토의견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추진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 예산현액 22억 7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교부율은 100%이나,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9억 5,000만원 중 33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48.7%에 불과하고, 당해연도 예산 22억 700만원 보다 더 큰 33억 1,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4년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024년 지원대상 지자체	최초 사업시행 연도	예산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목포시	2021	200	200	410	610	449	161	1	73.5
영덕군		107.6	107.6	1,315	1,422	1,325	97	-	93.2
익산시		345	345	509	854	562	239	53	65.8
군산시	2022	-	-	484	484	483	-	1	99.9
영주시		26.5	26.5	740	767	139	448	180	18.1
통영시		957.9	957.9	335	1,293	328	948	17	25.3
창원시	2023	570	570	950	1,520	98	1,422	-	6.5
계		**2,207**	**2,207**	**4,743**	**6,950**	**3,384**	**3,314**	**252**	**48.7**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당해연도 예산액(교부액)보다 큰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연도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추경)	교부액 (교부일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3,200	1차: 1,000 (1.22.) 2차: 2,200 (6.1.)	3,200	-	3,200	1,266	1,934	-	39.6
2022년	**5,500**	1차: 2,351 (1.26.) 2차: 3,149 (5.11.)	5,500	1,934	7,434	1,824	**5,610**	-	24.5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추경)	교부액 (교부일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년	**3,000**	1차: 1,746 (2.10.) 2차: 1,254 (5.12.)	3,000	5,610	8,610	3,445	**4,743**	420	40.0
2024년	**2,207**	1차: 1,324 (3.5.) 2차: 883 (5.31.)	2,207	4,743	6,950	3,384	**3,314**	252	48.7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당초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하였어야 하나, 국가유산청이 매년 상반기 2회에 걸쳐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기 때문임.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미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은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영주·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사업 실시 이후 보조사업자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연도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실집행 부진 사유
영주시	2022	318	318	-	318	28	290	-	8.9	관계기관 협의, 자문 의견 반영 및 설계 용역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2023	698	698	**290**	988	238	740	10	24.1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
	2024	26.5	26.5	**740**	767	139	448	180	18.1	지방비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창원시	2023	950	950	-	950	-	950	-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지연 (과도한 사업비 증가에 따라 지중화사업→가로통합정비)
	2024	570	570	**950**	1,520	98	1,422	-	6.5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지연 ('23.12.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경관조명→진해역 휴게공간, 원해루 보수)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24]에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단순히 분할 교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실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교부하라는 것으로,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지방비 확보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지방비가 미확보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상황을 확인한 후 교부를 시행했어야 할 것이고, 사업내용 변경 및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이월 소요가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교부를 시행했어야 함.

참고로,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국회 결산 심의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교부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되어 왔음.[25]

그럼에도 여전히 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함으로써 집행률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을 개선하고,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자체의 종합정비계획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강구할 것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국가유산청은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제도개선): 국가유산청은 관계전문가 자문과 이에 따른 보완 등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7.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 사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 제고 및 활력 증진을 위해 종합적·전문적으로 정책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원이 전액 불용(집행률 0%)되었음.[26)]

[2024년도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동아시아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100	100	-	-	100	-	-	10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은 대지면적 28,107㎡, 연면적 6,807㎡, 지상 3층 규모로 충남 부여에 건립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이고, 총사업비는 329억원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70%)로 추진됨.

나. 검토의견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국가유산청은 사업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당초 2023년에 건축기획 및 설계 공모, 2024년에 설계 및 공사업체 선정 후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1월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차례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계속 반려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26) 일반회계-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2132-314)(역사유적정책관)

우선, 2023년 6월 신청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2023년 8월 행정안전부는 진흥원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비를 부담하여 국가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27]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고, 이에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2023년 교부현액 12억 5,000만원 중 6,000만원만 집행(실집행률 4.8%)되고, 11억 9,0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2024년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부여군)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2023년	1,250	1,250	1,250	-	1,250	60	1,250	60	1,190	-	4.8
2024년	100	-	-	1,190	1,190	12	-	-	-	1,178	1.0

자료: 국가유산청

이후 2023년 12월에 기관운영(국가유산청), 시설관리(부여군)으로 보완하여 2024년 정기 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024년 3월 행정안전부는 이전과 같은 사유로 재차 반려하였음.

이에 따라 2024년 예산 1억원은 전액 불용[28]되었고,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이월된 예산 11억 9,000만원 또한 대부분 불용되어 국고로 반납될 예정임.[29]

---

27)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28) 2024년 예산 1억원 중 7,000만원이 2024년 1월 30일 부여군으로 교부되었으나, 2024년 11월 28일 국고로 반납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음. 그런데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보조금 교부 및 반납은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하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보조금은 국가정책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전에 사업의 제반 여건을 파악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실제 수요를 추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결국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9)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향후「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후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동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임.

8.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종료):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은 백제무왕(서동)과 관련된 탄생설화지(생가터, 마룡지 등) 정비를 통해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6억 5,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0]

[2024년도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도 보존 및 육성	20,161	20,161	-	-	20,161	20,062	-	99	25,108
고도 역사도시 조성	9,256	9,256	-	-	9,256	9,256	-	-	6,333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3,652	3,652	-	-	3,652	3,652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서동생가(생가터, 마룡지, 축실지, 용샘 등) 유적정비, 유적정원 조성 및 편익시설 정비를 통해 고도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이고, 총사업비는 186억 8,400만원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70%)로 추진됨.

나. 검토의견

2024년 종료사업인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이 보조사업자인 지자체 단계에서 완료되지 않아 계속 추진되는 중이므로,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30) 일반회계-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역사유적정책관)

동 사업은 당초 2023년까지 발굴조사 및 1단계 정비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역사공원 조성 등 2단계 정비를 완료하여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매장유산 발굴조사 추진 중 백제시대 석축저온저장고와 오행대포[31]가 국내 최초로 발견되면서, 국가유산청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을 보존하고 발굴조사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발굴조사가 장기화[32]되었고 정비 사업도 지연되어, 2023년 교부현액 56억 700만원 중 37억 5,5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실집행률 33.0%)된 것에 이어, 2024년에도 교부현액 74억 800만원 중 46억 5,9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실집행률 36.4%)되었음.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연도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추경)	교부액 (교부일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560	1차: 392 (2.26.) 2차: 168 (4.19)	560	-	560	518	42	-	92.5
2022년	4,690	1차: 2,345 (1.24.) 2차: 2,345 (6.17.)	4,690	42	4,732	3,301	1,431	-	68.9
2023년	4,176	1차: 2,088 (1.27.) 2차: 2,088 (6.20.)	4,176	1,431	5,607	1,851	3,756	-	33.0
2024년	3,652	1차: 2,557 (1.31.) 2차: 1,095 (6.26)	3,652	3,756	7,408	2,697	4,659	52	36.4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2023년까지 완료되었어야 할 1단계 정비 사업이 2025년 4월에 완료되었고, 현재 2단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5년 연내 설계 및 공사 등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31) 북주(北周)시대 주조한 화폐

32) 2차 발굴조사('23.3.13.~'23.8.9.), 3차 발굴조사('23.5.22.~'23.10.18.), 4차 발굴조사('23.11.27.~'24.10.13.), 5차 발굴조사('24.4.4.~'24.10.31.)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경과]

당초 계획	실제 추진경과	
ㅇ 사업계획부지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21~'22년) ㅇ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22~'23년) 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2년) ㅇ 서동생가터 유적 1단계(용샘, 연꽃단지 등) 정비('23년) ㅇ 서동생가터 유적 2단계(서동생가 재현 및 역사공원 등) 정비('24년)	추진 완료	ㅇ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완료('24.10) ㅇ서동생가터 유적 1단계 정비 완료('25.4) ▸용샘, 연꽃단지, 산책로 조성, 식재 등
	향후 계획	서동생가터 유적 2단계 설계 및 공사 추진('25.4~) ▸서동생가 재현, 석축저온저장고 보존처리, 공원 조성 등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9.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및 면밀한 사업점검 필요

가. 개 요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은 부여 백제왕도 유적의 중심축인 성왕로를 백제 이미지의 역사가로로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4억 7,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3]

[2024년도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도 보존 및 육성	20,161	20,161	-	-	20,161	20,062	-	99	25,108
고도 역사도시 조성	9,256	9,256	-	-	9,256	9,256	-	-	6,333
부여 고도 경관개선	1,470	1,470	-	-	1,470	1,470	-	-	7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한옥회랑 및 유적정원 등 백제이미지 특화경관을 조성하여 세계유산 고도의 이미지 브랜딩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이고,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70%)로 추진됨.

나. 검토의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2회에 걸쳐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33) 일반회계-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역사유적정책관)

동 사업은 당초 관북리유적 주변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개 구역씩 한옥회랑 및 전통가로경관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된 구역이 없고, 지자체 실집행률은 2023년 3.7%, 2024년 19.4%로 2년 연속 부진한 상황임.

[연도별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부여군)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2023년	700	700	700	-	700	26	700	26	674	-	3.7
2024년	1,470	1,470	1,470	674	2,144	417	1,470	-	1,727	-	19.4

자료: 국가유산청

이는 고도지역심의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거나 관계부서 협의불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등에 기인한 것인데,[34]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초기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경과를 면밀히 살펴 집행여력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었음.

34)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연차별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 경과

구분		추진내용	당초 계획	실제 추진 경과	지연 사유
2023년 (1구역, 성왕 회전교차로 주변)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	'23.6.	'23.7.	
		용역수행	'23.6.~'23.8.	'23.7.~'24.8.	고도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보류 (교통문제 및 시공방법 보완)
	심의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	'23.7.	'24.6.	고도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보류 (교통문제 및 시공방법 보완)
	공사추진	입찰계약 및 공사	'23.8.~'23.12.	'24.12.~'25.6.	인도 상 회랑신축(영구시설물)에 대한 도시건축과 건축협의 지연
2024년 (2구역, 관북리유적 주변)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	'24.1.	'24.9.	회랑신축 관련 도시건축과 협의 불발 및 관북리유적 발굴조사 등으로 사업대상지 재검토
		용역수행	'24.2.~'24.4.	'24.9.~'25.4.	사업대상지 변경 등 경관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연
	심의	현상변경허가	'24.4.	'24.12.~'25.4.	경관심의 및 관계전문가 자문, 건축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공사추진	입찰계약 및 공사	'24.5.~'24.12.	'25.10.(예정)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후 한옥회랑 공사 완료 예정

주) 2025년 4월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그럼에도 2024년 예산액 14억 7,000만원을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전액 교부(교부율 100%)한 결과,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전년도 이월액 중 일부만 집행되고 2024년 교부액은 모두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35]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집행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보조사업자별 집행여력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단순히 예산을 2차례로 나누어 교부하는 것은 기계적, 형식적인 분할교부로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형식적 분할교부를 지양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집행점검을 근거로 보조사업자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신규):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간직한 고유 특성을 유적 정비 및 유적 간 연계, 향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경관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8억원 중 17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36]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도 보존 및 육성	20,161	20,161	-	-	20,161	20,062	-	99	25,108
역사문화권 정비	6,650	6,650	-	-	6,650	6,602	-	48	13,033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1,800	1,800	-	-	1,800	1,791	-	9	9,98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37]에 따라 역사문화권[38]을 종합적으로 정비·육성하려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정비사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사업임.

36) 일반회계-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역사유적정책관)

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8) 역사문화권 현황(총 9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나. 검토의견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은 당초 2024년 추진하려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에 수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소(나주・해남・강릉・함안)에 3년간('24~'26) 국비 총 242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이를 위해 2024년 예산에 1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역사문화권정비법」 지원근거 미비[39]를 이유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28일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고,[40] 이후 2024년 9월 12일 예산이 배정되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은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당초 2024년 추진하려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에 수행됨에 따라,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인 1차년도 정비사업 또한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41]

---

39)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었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 받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 · 연구 · 발굴 · 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
2.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정비 · 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1)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고자 먼저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27년까지)하고, 2026년 예산으로 당초 계획(124.5억원)보다 34.5억원을 감한 90억원을 요청하였으며, 더불어 기 배부된 예산의 수시 집행 관리를 통해 함안군 등 4개 지자체로 하여금 2025년 3분기 내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연내 공사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70%)하도록 하여 실집행률을 80%까지 높일 예정이고, 더욱 해당 사업은 편의시설・보호울타리・안내판 설치 등 비교적 공사 난이도가 낮아 착공 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 지연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4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보조사업자 등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예산액	교부액	교부 현액(A)	집행액 (재교부액)	이월액	불용액	교부 현액	집행액		
나주	450	450	450	5	445	-			5	1.1
해남	441	441	441	-	441	-			-	-
강릉	450	450	450	-	450	-			-	-
함안	450	450	450	450	-	-	450	3	3	0.7
계	1,791	1,791	1,791	455	1,336	-	450	3	8	0.4

주) 함안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동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　타】

1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가유산청에 대해 시정요구 31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5건・주의 16건・제도개선 10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5	16	10	-	31
예비비	-	-	-	-	-	-	-
합계	-	-	5	16	10	-	31

국가유산청은 시정요구사항 31건에 대해 2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7.4%)하고 7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31	24	77.4	7
예비비	-	-	-	-
합계	31	24	77.4	7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국가유산청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국가유산청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1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검토의견

국가유산청은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및 사전준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등 개선 방안 강구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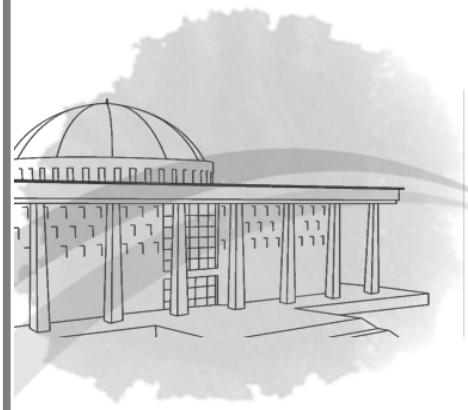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은 동 시정요구에 대해 집행률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점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집행현황 및 이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을 분할 교부하였으며, 실집행률이 48.7%로 전년 대비 제고되었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실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여전히 집행이 부진하고,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당해연도 예산액(교부액)보다 큰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음.[42)]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9)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및 사전준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등 개선 방안 강구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함으로써 집행률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을 개선하고,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자체의 종합정비계획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강구할 것(주의)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월별 집행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ㅇ 집행현황, 이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4년 예산 분할 교부(’24년 3월, 5월) ㅇ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예산 배정에 반영 ㅇ 실집행률 제고 (’22년)24.5% → (’23년)40.0% → (’24년)48.7%

42) ‘6.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 검토의견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조 4,257억 2,900만원(△10.6%)이 적은 12조 805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4억 9,200만원(1.7%)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706,374	7,706,374	7,340,853	△365,521	8,464,230	8,464,230	8,016,367	△447,863	675,514
기 금	5,342,263	5,342,263	4,532,233	△810,030	5,042,077	5,042,077	4,064,210	△977,867	△468,023
총수입	13,048,637	13,048,637	11,873,086	△1,175,551	13,506,307	13,506,307	12,080,578	△1,425,729	207,492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7,249억 5,300만원(△3.9%)이 적은 17조 7,461억 5,800만원이고 전년 대비시에는 7,135억 1,100만원(4.2%)이 증가함.

문의 : 강영옥 예산결산조사관 kang052@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214,238	9,214,238	9,210,120	△4,118	9,896,323	9,896,323	9,551,049	△345,274	340,929
기 금	8,143,107	8,143,107	7,822,527	△320,580	8,574,788	8,574,788	8,195,109	△379,679	372,582
총 지 출	17,357,345	17,357,345	17,032,647	△324,698	18,471,111	18,471,111	17,746,158	△724,953	713,511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7조 3,126억 5,700만원으로, 16조 6,399억 5,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6조 6,069억 6,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329억 9,300만원이 미수납되어 2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1,216	21,216	-	21,216	17,175	10,916	6,257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490,553	14,490,553	-	14,490,553	13,729,308	13,707,888	21,419	-
- 구조개선사업계정	6,273,131	6,273,131	-	6,273,131	6,144,298	6,127,663	16,635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8,217,422	8,217,422	-	8,217,422	7,585,010	7,580,225	4,78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047	43,047	-	43,047	5,716	5,667	49	-
- 투자계정	21,033	21,033	-	21,033	2,472	2,423	49	-
- 융자계정	22,014	22,014	-	22,014	3,244	3,244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51	50	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822	11,822	-	11,822	16,361	12,053	4,308	-
- 지역자율계정	-	-	-	-	648	648	-	-
- 지역지원계정	11,290	11,290	-	11,290	15,159	10,932	4,226	-
- 제주계정	532	532	-	532	554	473	82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0.1	0.1	-	-
양곡관리특별회계	2,746,019	2,746,019	-	2,746,019	2,871,348	2,870,389	959	-
- 손익계정	2,746,019	2,746,019	-	2,746,019	2,871,347	2,870,388	959	-
- 자본계정	-	-	-	-	1	1	-	-
합 계	17,312,657	17,312,657	-	17,312,657	16,639,958	16,606,963	32,993	2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조 9,816억 4,400만원으로, 20조 7,071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1%)되고 1조 7,856억 2,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889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804,217	5,804,217	9,716	6,144 △6,144	70,200	5,884,133	5,736,362	4,841	142,9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799,379	12,799,379	561,429	11,287 △11,287	58,700	13,419,508	11,466,360	1,611,977	341,171
- 구조개선사업계정	5,280,241	5,280,241	380,381	7,839 △7,839	58,700	5,719,322	4,656,679	1,003,089	59,554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7,519,138	7,519,138	181,048	3,448 △3,448	-	7,700,186	6,809,681	608,888	281,61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363	17,363	-	-	-	17,363	16,873	-	490
- 투자계정	17,363	17,363	-	-	-	17,363	16,873	-	49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95,256	795,256	101,493	-	-	896,749	727,145	167,803	1,801
- 지역자율계정	707,025	707,025	101,493	-	-	808,518	638,914	167,803	1,801
- 지역지원계정	71,755	71,755	-	-	-	71,755	71,755	-	-
- 제주계정	12,272	12,272	-	-	-	12,272	12,272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4,204	4,204	-	-	-	4,204	4,204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817	17,817	-	-	-	17,817	15,297	-	2,520
양곡관리특별회계	2,746,019	2,746,019	55	225,844 △225,844	-	2,746,073	2,745,073	1,000	-
- 손익계정	2,746,019	2,746,019	55	225,844 △225,844	-	2,746,073	2,745,073	1,000	-
합 계	22,180,051	22,180,051	672,693	243,275 △243,275	128,900	22,981,644	20,707,111	1,785,621	488,91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2조 8,974억 2,000만원으로, 18조 8,407억 9,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7조 6,294억 9,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3.6%)되고 1조 2,113억 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3,019,399	3,019,399	5,432,394 (2,974,467)	5,428,194 (2,970,267)	4,200	-
양곡증권정리기금	1,531,096	1,531,096	1,572,618 (1,550,413)	1,572,618 (1,550,413)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94,770	2,419,570	3,785,088 (2,203,261)	3,781,719 (2,199,892)	3,369	-
농지관리기금	4,006,330	4,006,330	5,264,100 (4,064,658)	4,067,606 (2,868,163)	1,196,495	-
축산발전기금	962,087	962,087	1,705,771 (920,179)	1,698,546 (912,954)	7,225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588,566	588,566	633,559 (365,557)	633,543 (365,542)	15	-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370,372	370,372	447,268 (408,497)	447,268 (408,497)	-	-
합 계	12,872,620	12,897,420	18,840,798 (12,487,033)	17,629,493 (11,275,728)	1,211,304	-

주1) 총계 기준
2) 괄호안의 금액은 징수결정액(순계), 수납액(순계)임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2조 9,062억 1,700만원으로, 11조 2,757억 2,800만원이 지출(집행률 87.4%)되고 226억 8,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855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3,019,399	3,019,399	36	3,019,435	2,970,267	-	292,079
양곡증권정리기금	1,531,096	1,531,096	-	1,531,096	1,550,413	-	17,98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94,770	2,419,570	5,285	2,424,855	2,199,892	6,367	21,580
농지관리기금	4,006,330	4,006,330	500	4,006,830	2,868,163	-	600,540
축산발전기금	962,087	962,087	2,976	965,063	912,954	1,321	52,458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588,566	588,566	-	588,566	365,542	15,000	925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370,372	370,372	-	370,372	408,497	-	1
합 계	12,872,620	12,897,420	8,797	12,906,217	11,275,728	22,688	985,56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자산은 전년 대비 3,274억 100만원이 증가한 79조 2,052억 4,3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1,471억 4,4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2,494억 1,200만원 증가하고 기타비유동자산이 1,879억 4,6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572억 500만원 증가한 10조 367억 5,7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1조 2,691억 6,4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701억 9,700만원이 증가한 69조 1,684억 8,7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1조 5,415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53억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조 1,812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76억 9,9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9,205,243	78,877,842	327,401	0.4
		유동자산	7,303,911	7,296,453	7,458	0.1
		투자자산	14,459,425	14,210,013	249,412	1.8
		일반유형자산	56,438,873	56,586,017	△147,144	△0.3
		무형자산	65,813	36,084	29,729	82.4
		기타비유동자산	937,221	749,275	187,946	25.1
	부 채		10,036,757	9,879,552	157,205	1.6
		유동부채	1,700,749	2,732,715	△1,031,966	△37.8
		장기차입부채	5,128,167	3,859,003	1,269,164	32.9
		장기충당부채	386,692	318,261	68,431	21.5
		기타비유동부채	2,821,148	2,969,572	△148,424	△5.0
	순자산		69,168,487	68,998,290	170,197	0.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1,541,511	12,106,814	△565,303	△5
	재정운영순원가		12,304,320	13,038,808	△734,488	△6
	재정운영결과		11,181,234	11,938,933	△757,699	△6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결산은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 등 6개 회계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축산발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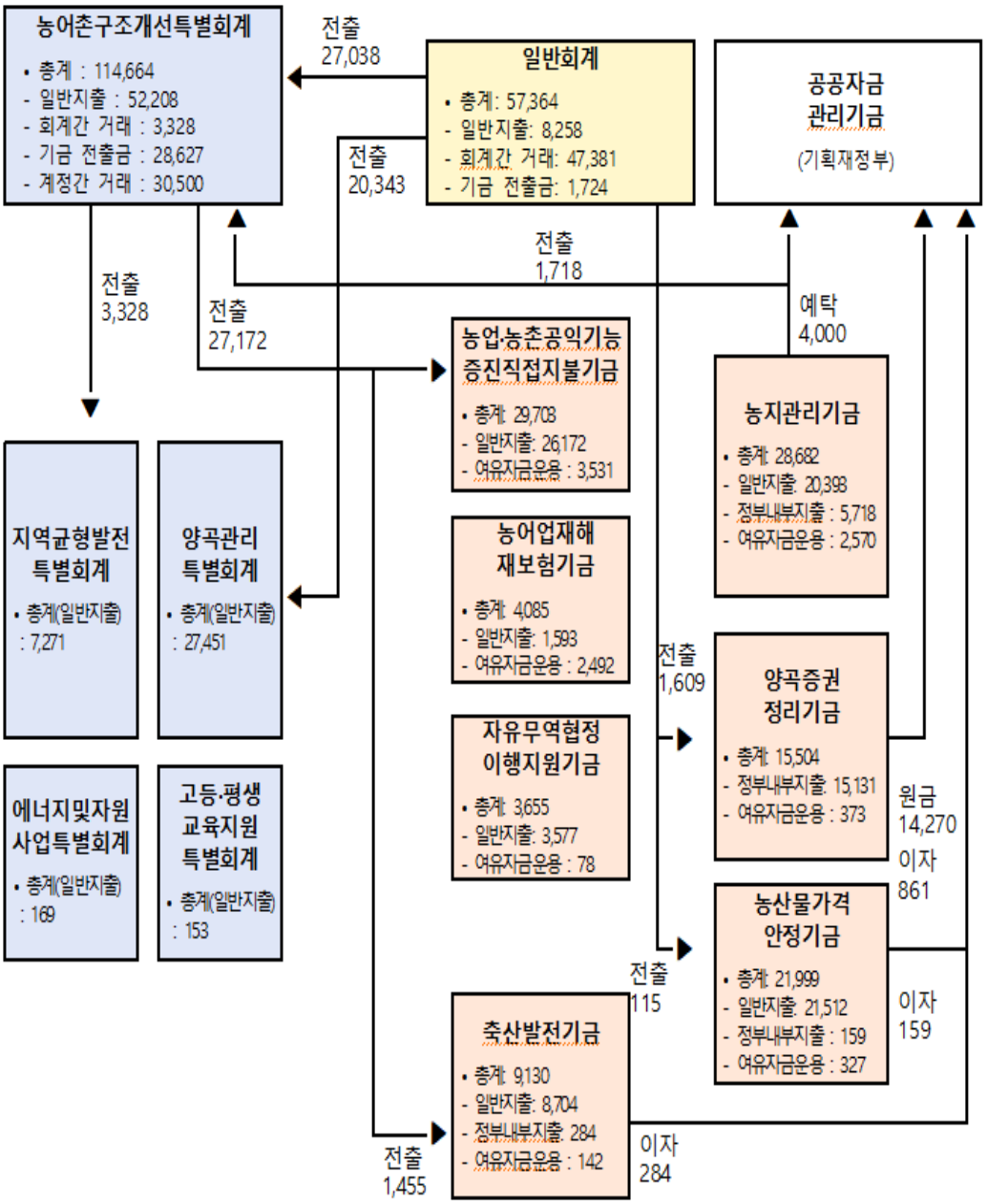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2조 7,038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2조 343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609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115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328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2조 7,172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455억원이 전출되었으며, 농지관리기금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1,718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농지관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000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양곡증권정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원금 1조 4,270억원, 이자 861억원이 상환되었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는 이자 159억원 및 축산발전기금에서는 이자 284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상환되었음.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흐름도]

(단위:억원)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식량주권 확보 및 쌀 수급안정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수출 및 ODA 확대’를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313개 세부사업에서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복지·지역개발, 양곡관리·유통혁신, 재해대비·기반정비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감소 추세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과 함께 세출사업들의 사업비를 적정 편성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청년농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농의 영농은퇴와 농지매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농에 대한 농지공급 확대 및 육성이라는 사업목표만을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농지이양은퇴직불금과 은퇴직불형연금사업비 등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는 바, 고령농의 영농 유지 의사를 반영한 점진적 사업 추진과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하고, 지자체의 재정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재원을 교부하여야 하며, 편성된 사업비가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넷째, 이차보전지원 내역 선정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차보전지원사업의 총규모가 급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차보전과 융자방식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

다섯째,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계속된 공사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2025년 7월 현재 사업진행이 중지된 제2공구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사업비 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부족: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세출사업 구조조정 필요

가. 개 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조 4,905억 5,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조 7,078억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7,826억 6,500만원 적게 수납됨.

일반회계 전입금(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587억원 증가) 및 기타경상이전수입등(예산액 대비 4,740억 1,200만원 증가)의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증가하였지만, 농어촌특별세(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5,950억 2,700만원 감소) 및 전년도 세계잉여금(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2,457억 9,400만원 감소)의 결산액이 크게 감소되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부족이 발생하였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주요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액	2023년 결산액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A)	수납액(B)	증감(B-A)	
합 계	15,027,551	14,242,220	14,490,553	13,707,888	△782,665	14,005,522
농어촌특별세	7,013,196	6,562,807	7,619,900	7,024,873	△595,027	7,415,300
일반회계전입금	1,261,885	2,824,926	2,645,122	2,703,822	58,700	3,901,579
계정간전입금	3,807,672	3,258,500	3,477,888	3,050,039	△427,849	2,501,932
기타경상이전수입	179,210	558,381	126,535	600,547	474,012	128,090
농지기금전입금	203,533	171,797	171,797	171,797	-	-
전년도세계잉여금	2,503,800	815,436	362,586	116,792	△245,794	-
기타민간융자금회수	58,255	50,373	86,725	40,018	△46,707	58,62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재작성

세입 부족으로 인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다수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2024년 6개 세부사업에서 5,565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2022년(5개 세부사업에서 3,032억 5,000만원), 2023년(5개 세부사업에서 3,744억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서, 세입 부족으로 인한 이월 규모가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2022	농업재해보험(1031-300)	632,413	632,413	552,413	80,000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5)	291,367	294,374	244,458	49,250
	농촌용수개발(4046-300)	283,900	283,900	228,900	55,000
	배수개선(4031-300)	375,590	360,590	310,590	50,000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651,009	651,009	582,009	69,000
	합 계	**2,234,279**	**2,222,286**	**1,918,370**	**303,250**
2023	농업재해보험(1031-300)	730,922	810,922	726,447	84,475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5)	451,942	500,711	462,922	34,768
	배수개선(4031-300)	370,306	420,306	348,375	71,931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651,832	720,832	593,423	127,409
	농촌용수개발(4046-300)	282,200	337,200	281,383	55,817
	합 계	**2,487,202**	**2,789,971**	**2,412,550**	**374,400**
2024	농업재해보험(1031-300)	657,104	741,579	711,892	29,687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5)	557,722	592,490	403,661	188,829
	배수개선(4031-300)	453,525	525,456	419,747	105,709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746,169	873,578	694,085	174,000
	농촌용수개발(4046-300)	251,348	307,165	243,865	56,000
	농업기반시설차수능력확대(4034-308)	14,606	14,606	12,315	2,291
	합 계	**2,680,474**	**3,054,874**	**2,485,565**	**556,5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농특회계 세입 부족으로 인한 이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안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함께 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시급하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농특회계 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2024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크게 감소한 농어촌특별세[2]의 경우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과거 수납실적 및 2023년 7월 기준 수납액을 고려할 때 세입 규모가 과다 책정되었음이 지적되었으나[3],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입예산안의 적정성을 주장하여 정부안과 같이 의결되었음.

그러나 실제 2024년 결산결과 농어촌특별세 징수실적은 정부안보다 5,950억 2,700만원 적게 수납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안 추계가 부적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세외수입의 경우도 전년도세계잉여금이 2024년 예산액 3,625억 8,600만원 대비 수납액이 1,167억 9,200만원으로 2,457억 9,400만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고, 기타민간융자금회수 또한 2024년 예산액 867억 2,500만원 대비 467억 700만원 감소된 400억 1,800만원이 수납되는 등 농특회계 주요 세입재원 대부분에서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부족으로 인한 세출사업 이월이 대규모로 초래된 상황임.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체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2022년 1조 2,618억 8,500만원에서 2025년 3조 9,015억 7,9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농지관리기금의 재원부족[4]으로 인해 동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규모가 2022년 2,035억 3,300만원, 2023년 및 2024년 1,717억 9,7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가 감소추세(2022년 15조 275억 5,100만원 → 2023년 14조 2,422억 2,000만원 → 2024년 13조 7,078억 8,800만원)에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조세감면액 및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징수결정

2)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의 조세감면액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함.

3) 제410회 예산결산특별휘원회 제2차 소위원회(2023.11.15.)

4) 농지관리기금 총규모가 2023년 결산액 3조 1,532억 8,900만원 →2024년 결산액 2조 8,681억 6,300만원 →2025년 예산액 2조 3,289억 1,5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세입예산편성시점)과 국고귀속(세입결산시점)의 시간상 격차가 있는 세수 등을 기반으로 있는 점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과 함께 세입과 세출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출 측면에서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특히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과 예산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출 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동 특별회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청년농업인지원 사업들의 예산집행 부진사유 검토를 통한 사업 개선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영농종사,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및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청년농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청년농 육성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결산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농특, 1120-436)	95,724	-	-	95,724	95,691	-	33	113,662
-영농정착지원금	**83,370**	**-**	**-**	**83,370**	**83,370**	**-**	**-**	**101,545**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특,1038-301)	557,722	34,768	-	592,490	403,661	188,829		682,500
경영이양직불사업 (농특, 1070-302)	30,500	-	-	30,500	28,000	-	2,500	28,968
-농지이양은퇴직불	**12,600**	**-**	**-**	**12,600**	**11,130**	**-**	**1,470**	**15,473**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지기금, 1160-350)[5]	1,241,280	-	△35,200	1,206,080	1,206,080	-	-	1,113,440
-임차임대	**49,500**	**-**	**△35,200**	**14,300**	**14,300**	**-**	**-**	**17,820**
농지연금사업 (농지기금, 4130-410)[6]	242,309	-	20,252	262,561	262,561	-	-	246,877
-은퇴직불형	**22,679**	**-**	△21,741	**938**	**938**	**-**	**-**	**7,26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재작성

5)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임차임대 수요 부족 및 농지연금 수요 증가·농지은행 제세공과금 추가소요로 인해 352억원 감액 기금계획변경함.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청년농 유입을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관련 사업들 간의 연계 미흡 및 사업 대상자인 고령 농업인들의 공감 및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 등을 나타내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사업의 2024년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

나. 검토의견

(1)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청년농 융자 사업들 간의 예산안 편성 및 사업 연계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의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영농정착지원금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2024년 예산액은 833억 7,000만원, 집행액은 643억 2,900만원(집행률 77.1%)임.[7]

사업시작 첫년도인 2018년 예산액은 77억 9,400만원이었으나, 2024년 예산액은 833억 7,000만원으로 동 기간 10배 이상 급증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불용액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190억 4,10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의 23.3%가 불용되었는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농 대상 융자자금 조기 소진으로 청년농들의 영농기반(농지 등) 마련이 지연되어 농업경영체 등록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의 불용액이 큰 규모로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청년농 육성정책의 빠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금리(2.0%→1.5%), 융자기간(5년 거치 10년 상황→5년 거치 20년 상환) 등 타 사업에 비해 완화된 융자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청년농들이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자금이 조기 소진되었다는 것임.

그러나 정책자금 융자와 정착지원금 지급사업이 청년농 지원 단계별로 서로 연계되어 집행되는 사업이란 점에서 한 사업은 수요 증가로 조기에 소진된 반면, 다른 사업에서는 대규모로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양 사업간 예산안 편성이 면밀히 연계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6) 농지연금사업은 타 세부내역 사업비 부족액 발생으로 202억 5,200만원 증액 기금계획변경함.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11120-436)(농업정책국)

[연도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예산액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산출근거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내역	불용액
2018	7,794	1,200명×9개월×1백만원×0.9×70% 400명×3개월×1백만원×70%	7,231	7,000	1,200명×8.6개월×1백만원×0.9×70% 400명×2개월×1백만원×70%	325
2019	20,132	3,200명×10개월×0.9백만원×70%	19,066	17,990	3,200명×8.9개월×0.9백만원×70%	1,076
2020	30,199	4,800명×10개월×0.9백만원×70%	29,651	26,165	4,800명×8.7개월×0.9백만원×70%	3,486
2021	32,188	5,000명×10개월×0.9백만원×70%	32,188	31,145	5,000명×9.9개월×0.9백만원×70%	1,043
2022	37,549	6,684명×9개월×0.9백만원×70% ('18: 86명, '19: 1,324명, '20: 1,474명, '21: 1,800명, '22: 2,000명)	37,549	33,835	6,684명×8개월×0.9백만원×70% ('18: 86명, '19: 1,324명, '20: 1,474명, '21: 1,800명, '22: 2,000명)	3,714
2023	52,458	4,000명×9개월×1.1백만원×70% 2,000명×12개월×1.0백만원×70% 1,050명×12개월×0.9백만원×70%	52,458	47,070	4,000명×7.3개월×1.1백만원×70% 2,000명×12개월×1.0백만원×70% 1,050명×12개월×0.9백만원×70%	5,388
2024	83,370	5,000명×9개월×1.1백만원×70% 4,000명×12개월×1.0백만원×70% 2,000명×12개월×0.9백만원×70%	83,370	64,329	5,000명×4개월×1.1백만원×70% 4,000명×12개월×1.0백만원×70% 2,000명×12개월×0.9백만원×70%	19,04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 유입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년농 보조금정책(영농정착지원금 등) 및 금융지원정책(이차보전사업 등)들이 서로 연계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각 사업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융자금 지급 규모에 맞추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 단계별로 재정 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여야 할 것임.

추가적으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를 검토해보면, 사업대상자가 누적되어 증가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의무이행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의무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독립경영 유지, 성실신고, 지원금 지급의무 및 성실사용, 의무영농 기간 등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기간차감·일시정지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등 조치가 취해짐.

의무이행점검 대상인원(누적 12,600명)이 급증한 202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의무교육 위반 건수(665건→1,490건), 경영장부 미기록(100건→241건), 영농계획 미이행(16건→64건) 등 유형별 위반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정된 재원으로 청년농들에게 영농보조금 및 금융혜택을 지원하는 사유는 농업·농촌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임. 이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들이 국가 재정지원을 받아 농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철저한 의무이행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위반시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교육하고, 이러한 의무위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위반 현황]

(단위: 명, 건수)

구 분	대상인원 (누적)	유형별 위반 건수					
		의무교육 미이수	재해보험 미가입	자조금 미가입	경영장부 미기록	영농계획 미이행	전업적영농 미유지
2019	1,600	93	70	24	21	1	11
2020	3,200	303	162	25	44	22	35
2021	4,800	682	331	54	89	44	68
2022	6,600	883	204	27	118	21	32
2023	8,600	665	199	22	100	16	25
2024	**12,600**	**1,490**	**344**	**46**	**241**	**64**	**5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및 은퇴직불형농지연금사업, 임차임대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및 은퇴직불형농지연금사업, 임차임대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하였으므로,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농 등의 영농유지 여부 의사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사업비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청년농 육성사업의 사업의 진행상황 및 성과검토 등을 통해 관련된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경영이양직불(농특, 1070-302)의 내역사업으로, 고령 농업인(65-84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매도 또는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1년-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2024년 신규내역사업이며, 예산액

은 126억원, 집행액은 20억 9,400만원(집행률 16.6%)임.[8)]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합 계	30,500	18,455
경영이양직불(기존)	13,800	12,261
	(매도・임대) 8,793	(매도・임대) 7,810
	(매도) 1,293	(매도) 1,137
	(임대) 3,714	(임대) 3,314
농지이양은퇴직불 (신규)	**12,600**	**2,094**
	(매도) 9,000	(매도) 1,942
	(매도 조건부 임대) 3,600	(매도 조건부 임대)152
사업운영비	4,100	4,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은퇴직불형농지연금은 농지연금사업(농지기금, 4130-410)의 내역사업으로,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농지 자산 유동화 및 고령・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농지이양은퇴직불과 연계되어 실시되었으며, 2024년 신규내역사업이고, 계획액은 226억 7,900만원, 집행액은 9억 3,800만원(집행률 4.1%)임.[9)]

특히 당초 계획보다 지급단가가 증가(163.8만원 → 207.9만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건수는 계획(2,130건) 대비 0.4%인 94건에 불과하였음.

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경영이양직불(1070-302)(농업정책국)

9) 농지관리기금-농지연금(4130-410)(농업정책국)

[기존 농지연금상품과 은퇴직불형 연금사업의 비교]

구분	기존 농지연금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운영방식	‣ 농지이양은퇴직불 미연계	‣ 농지이양은퇴직불 연계
사업목적	‣ 고령농 소득안정, 영농규모화 촉진	‣ 고령농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 청년농 농지 공급으로 농업구조조정 기여
가입연령	‣ 60세 이상	‣ 65세 이상 ~ 80세 이하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10년 이상
지급기한	‣ 종신형 ‣ 기간형(5년, 10년, 15년, 20년)	‣ 5~10년 *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기간과 연계
담보농지 활용	‣ 직접 경작 또는 임대	‣ 임대(직접 경작 불가능)
담보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적합한 농지 * 진흥지역 우선, 경지정리 비진흥 지역 포함
지급한도	‣ 3백만원/월	‣ 좌 동
경작허용면적	‣ 제한 없음	‣ 1,000㎡ 미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두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및 은퇴직불형농지연금사업 시행 첫 해로, 2024년 목표인 3,000ha[10]는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공급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적극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목표 물량을 조기(2024년 4월)에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고 설명함.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및 은퇴직불형농지연금사업의 예산산출근거인 농지공급량 설정 기준]

2024년 목표(3,000ha) 산출근거 : 16,900ha(2023~2027년 동안 신규 유입 청년농 16.9천명에게 1인당 1ha 농지 공급 가정 시 필요면적) ÷ 5년 = 3,380ha ≒ 3,000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임차임대사업은 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 1160-350)의 내역사업으로, 고령·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장기임차하고 이를 청

10) 최근 10년(2014년~2020년)간 체결한 평균 약정면적(1,203ha)과 비교하여 보면 2.5배로 과다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년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액은 495억원이었으나 사업수요 부족으로 143억으로 감액 변경하였으며, 집행액은 133억 1,100만원(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 26.9%)임.[11)]

임차임대사업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 계획액 224억 1,300만원 중 105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47.1%)되었으며, 2022년은 당초 계획액 224억 1,300만원에서 감액 변경하여 72억 9,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2023년 또한 당초 계획액 212억 9,300만원에서 감액하여 84억 8,2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24년 495억원을 계획변경하여 143억원으로 감액하였음.

[연도별 임차임대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계획액		실집행액(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A)	수정			
2021	맞춤형농지지원	771,785	771,785	759,806	-	11,979
	-임차임대	**22,413**	**22,413**	**10,547 (47.1%)**	**-**	**11,866**
2022	맞춤형농지지원	812,314	782,131	781,981	-	150
	-임차임대	**22,413**	**7,291**	**7,239 (32.3%)**	**-**	**52**
2023	맞춤형농지지원	857,726	844,915	844,763	-	153
	-임차임대	**21,293**	**8,482**	**8,435 (39.6%)**	**-**	**47**
2024	맞춤형농지지원	1,241,260	1,206,060	1,174,533	29,941	1,587
	-임차임대	**49,500**	**14,300**	**13,311 (26.9%)**	**-**	**989**
2025	맞춤형농지지원	1,113,440	1,113,440	-		
	-임차임대	17,820	17,820			

주 1)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집행률은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액으로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재작성

이와 같은 집행계획 축소변경 사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①공익기능증진직불제 확대 실시 및 단가 인상(2025년 기준 면적직불금 전구간 단가 인상-기존: 100~205만원

11)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1160-350)(농업정책국)

/ha→ 변경: 136~215만원/ha) 및 기존 농지연금 수요증가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② 농지이양직불사업 중 연계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2024년 신규사업)의 수요 부족 및 기존의 경영이양직불 신규가입 중단 등으로 임차임대 사업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함.

이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및 은퇴직불형연금사업, 임차임대사업의 사업비 편성시 동 사업들의 직접적 수혜자(연금수급 및 은퇴직불금 수령 대상자)인 고령농 등의 영농은퇴·농지매도 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사업비와 농지공급량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농 육성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층 농지수요량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사업수행 결과 영농에서 은퇴하려는 고령농 등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으며, 이에 해당 사업들의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고령농들이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및 은퇴직불형연금 등을 수급하려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농협조합원 회원자격 박탈, 각종 농업 관련 지원 배제 및 지역사회에서의 고립감 등 물리적·심리적 불이익이 있는 점,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및 은퇴직불형연금의 경우 분할지급형으로만 가능하여 목돈 선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농지는 자산으로 인식되어 상속 경향이 크다는 점 등이 동 사업들의 수요 부진 사유로 들 수 있음.

결과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에게 제공할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및 은퇴직불형연금, 임차임대 등 고령농 영농은퇴 유도사업 설계시 사업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 및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청년농 육성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공익기능증진직불금사업 확대 및 단가 인상, 농업경영체 유지시 농업인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및 관련 지원사업들은 오히려 영농을 지속하게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정책 사업들간의 부조화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 및 성과검토 등을 통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농 뿐만 아니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농 등의 영농유지 여부 의사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할 것임.[12)]

1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양은퇴직불 및 은퇴직불형연금, 임차임대 등의 사업을 2025년부터는 현장수요에 맞는 적정 농지물량 및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3. 한국농어촌공사: 공사부채비율 개선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한국농어촌공사’ 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등을 시행하는 등 농업분야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24.9.2.)에 따르면, 35개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비율이 제일 높음(2024년 648.2%, 2028년 771.9%(전망)).

[한국농어촌공사 10년간 부채 내역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 자산	106,646	112,977	122,846	129,116	141,919	156,903	168,491	176,594	188,382	189,223	202,734
2. 부채	85,839	91,734	101,550	107,412	119,657	134,514	145,972	153,863	165,508	166,074	179,483
-공사 부담부채	6,157	6,110	7,092	6,977	7,941	10,703	11,624	11,683	13,018	13,657	13,700
3. 부채비율	**412.5**	**431.8**	**476.8**	**494.9**	**537.5**	**600.8**	**648.2**	**676.9**	**723.6**	**717.4**	**771.9**
-공사 부담부채	29.6	28.8	33.3	32.1	35.7	47.8	51.6	51.4	56.9	59.0	5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규모화 사업 및 청년농 정책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동 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 사업수행 구조가 농지관리기금을 차입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확대에 따라 부채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함.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맞춤형농지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사업(융자) 및 새만금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국정과제로서 청년농 3

만명 육성 등을 빠른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및 농지연금 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공사 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융자액이 2023년 8,447억 6,200만원에 비해 2024년 1조 1,742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했고, 이로 인해 농지은행사업 전체 융자 규모가 2023년 1조 3,985억 900만원에서 2024년 1조 6,703억 4,300만원으로 2,718억 3,400만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4% 증가했음.

[연도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집행(융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합계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연금
2018년	728,910	346,661	281,952	100,297
2019년	896,206	449,111	293,299	153,796
2020년	1,088,032	632,533	278,777	176,722
2021년	1,186,692	758,366	243,512	184,814
2022년	1,345,852	781,981	323,120	240,751
2023년	1,398,509	844,762	290,689	263,058
2024년	1,670,343	1,174,112	233,679	262,552
합계	8,314,544	4,987,526	1,945,028	1,381,990

주) 맞춤형농지지원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규모화(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 지원), 선임대 후매도 지원(2023년 신규) 등 주로 고령농의 영농은퇴를 독려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정비한 후 규모화 등을 통해 청년농에게 임차·매매하는 사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 육성 등 농지은행 사업 확대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차입지속 증가에 따라 부채규모가 확대되었으나, 공사부담부채비율은 2024년 51.6%, 2028년 58.9%로 건전하며,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재무위험기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향후 농지은행사업 부실채권을 방지하고, 종전부동산사업의 신속한 개발로 조기분양 추진 및 투자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명대로 공사부담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나, 공사부담부채비율은 2018년도 29.6%에 비해 2028년 58.9%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육성 확대 및 영농규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새만금산업단지개발사업이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점(총사업비 2조 6,203억원, 사업기간 2008~2030년)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연례적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부진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실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 반영 필요

가.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 2024년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 있으며, 이 중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도 존재함.

이하에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농업농촌RE실증지원사업,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 기능성HMR실증실용화지원센터 및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사업, 원예시설현대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등의 최근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사업 지연 사유를 살펴보고, 예산안 편성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당해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고, 지자체의 재정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재원을 교부하여야 하며, 편성된 사업비가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사업의 예산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주민동의·부지확보·인허가 및 시공계약 등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지자체의 재원 미확보 및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사업 중지, 공사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 및 해당 지자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설명함.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집행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지확보·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집행 측면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당해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고, 지자체의 재정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재원을 교부하여야 하며, 편성된 사업비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1)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사업의 세부내역으로, 농촌재구조화에 필요한 난개발요소 철거·이전 등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함.[13)]

구체적으로 2022년 예산현액 305억 7,800만원 중 125억 2,800만원 집행(집행률 41.0%), 2023년 예산현액 897억 1,700만원 중 539억 3,100만원 집행(집행률 60.1%), 2024년 예산현액 1,037억 6,200원 중 716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1%)되었음.

[연도별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액 및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2,500	-	2,500	**2,000**	500	-	**80.0**
2022	30,078	500	30,578	**12,528**	18,050	-	**41.0**
2023	71,667	18,050	89,717	**53,931**	35,762	24	**60.1**
2024	68,000	35,762	103,762	**71,656**	32,066	40	**69.1**
2025	104,450	-	-	**-**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추경 편성 지연 등으로 인한 매칭 지방비 확보 지연·소유주 등 관계자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14)]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공간계획과 사업연계를 강화하는

1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사업(4160-431)(농촌정책국)

14)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4.7.)

방향으로 추진되며, 주요 내용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공원 등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임대주택 등의 조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빈집·폐창고 등 장기방치건물 등을 정비대상 시설범위로 확대할 계획임.

동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농촌 난개발 방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활성화 등 농촌공동화(空同化)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례적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사업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에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지자체 보조 예산액 33억원 중 19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59.9%)되었음[15].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예산액 및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B+C)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4,300	4,300	-	-	4,300	2,961	-	1,339	6,500
지자체경상보조	3,300	3,300	-	-	**3,300**	**1,978 (59.9%)**	-	1,322	5,5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2022년 및 2023년에는 1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액이 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2023년 9천명/18개 시·군 → 2024년 3만명/50개 시·군). 그러나 실제 검진인원은 18,687명으로 당초 계획상 3만명의 62% 수준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사업방식이 변경(민간보조 → 지자체보조)되어 지방비 확보가 늦어져 검진사업 시작이 지연(4~8월 시작)되었으며,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4135-397)(농촌정책국)

수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사업량을 신청하여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첫 해였던 만큼 지자체별 신청을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과거 사례를 감안한 실제 집행가능 소요 등을 면밀하게 추계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음.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 또한 55억원으로 2024년도에 비해 66.6% 증액된 만큼, 사업집행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임.

(3)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스마트팜 진입이 어려운 청년농 등을 위해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임대하는 사업임. 세부내역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이 있는데,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함.[16)]

2024년 예산현액 1,285억 7,200만원 중 681억 700만원 집행(집행률 52.9%)에 그쳤으며 2021~2023년에도 집행률이 40%에 미치지 못하였음.

1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대형 스마트팜(2220-383)(농식품혁신정책관실)

[연도별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액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내역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최종 보조사업자(농어촌공사)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21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2,600	12,600	7,980	**20,580**	**1,461**	19,119	-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35,096	32,596	29,867	**62,463**	**26,608**	35,855	-
	합 계	47,696	45,196	7,980	**83,043**	**28,069 (33.8%)**	54,974	-
2022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3,000	33,000	19,119	**52,119**	**9,471**	42,648	-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8,000	8,000	-	**8,000**	**89**	7,911	-
	합 계	41,000	41,000	19,119	**60,119**	**9,560 (15.9%)**	50,559	-
2023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49,000	49,000	42,648	**91,648**	**18,737**	72,911	-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11,000	11,000	7,911	**18,911**	**2,642**	16,269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4,500	4,500	-	**-**	**2,108**	2,392	
	합 계	64,500	64,500	50,559	**110,559**	**23,487 (21.2%)**	91,572	-
202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000	28,000	72,911	**100,911**	**45,526**	55,385	-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3,000	3,000	16,269	**19,269**	**18,022**	1,247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6,000	6,000	2,392	**8,392**	**4,559**	3,831	2
	합 계	37,000	37,000	91,572	**128,572**	**68,107 (52.9%)**	60,463	2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조정 및 설계변경, 지자체 추경 편성 지연, 청년농들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 등을 사업 지연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준비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하고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금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농업농촌RE100실증지원

‘농업농촌RE100실증지원’ 은 농촌 마을별 에너지 진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을 실증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17]

2022년 예산현액 18억원 중 집행액은 13억 9,000만원(집행률 77.2%)이고, 2023년 예산현액 40억 8,200만원 중 집행액은 16억 2,900만원(집행률 39.9%)이며, 2024년 예산현액 45억 7,400만원 중 집행액은 5억 8,400만원(집행률 12.8%)에 불과함.

[연도별 농업농촌RE100실증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22	1,800	1,800	1,800	**1,800**	**1,390 (77.2%)**	410	-
2023	3,672	3,672	3,672	**4,082**	**1,629 (39.9%)**	2,450	3
2024	2,766	2,124	2,124	**4,574**	**584 (12.8%)**	3,989	1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수요 부족으로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자자체 기본계획 수립 순연 및 전력계통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마을 발전소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사업은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 등에서 여러 차례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목표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행실적 부진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관리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지자체의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1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동물복지환경정책관)

(5)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실증 및 인프라시설 임대, 기후변화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2023년 및 2024년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함.[18)]

2023년 예산액 21억 3,500만원 중 9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4%)되었고, 2024년 예산현액 30억 100만원 중 21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9%)되었음.

[연도별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2,135	2,135	-	**2,135**	**927 (43.4%)**	1,207	1
2024	1,794	1,794	1,207	**3,001**	**2,188 (72.9%)**	788	24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지 확보 및 보상 과정의 지연 등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연내에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사업부지 감정평가	2023. 5. ~ 7.
건축 기본계획 수립	**2023. 7. 5. ~ 12. 28.**
국공유지 협의 보상	2023. 10.
잔여 사업부지 협의 완료(해남군 매입)	2023. 6. ~ 12.
공공건축 심의	2023. 11.
조달청 설계공모 공고	**2024. 2. 6.**
공유재산 매각심의	2024. 4.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360일)	**2024. 5. 21.**
잔여 부지 분할 및 보상 등기 이전	2024. 5.
설계완료	**2025. 5.**
시공사 선정의뢰	2025. 6.
착공	**2025. 8. 이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2240-410)(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 사업 2025년도 예산에는 공사비로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착공이 2025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 공사비도 일부 이월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동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한도 안에서 공사비를 편성하여야 할 것임.

(6) 기능성HMR실증실용화지원센터 및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기능성HMR실증실용화지원센터구축' 사업은 기능성 HMR[19] 관련 식품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은 친화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체험·소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동 사업들은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20]

기능성HMR실증실용화지원센터구축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집행률을 검토해보면, 2021년 예산액 5억원 중 2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52.6%)되었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3년에도 46억 5,500만원 중 1억 5,0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3.2%)되었으며, 2024년도 17억 4,500만원 중 1억 8,9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10.8%)되었음.

[연도별 기능성HMR실증실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당해연도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21년	500	263 (52.6%)	230	7
2022년	2,970	2,000 (67.3%)	970	-
2023년	4,655	150 (3.2%)	4,505	-
2024년	1,745	189 (10.8%)	1,556	-

주) 전년도 이월액 제외한 2024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9)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식품산업인프라강화(2832-380)(농업혁신정책관)

다음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액 120억 8,400만원 중 42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35.2%)되었고, 2023년 113억원 중 41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36.4%)되었으며, 2024년에는 73억원 중 6억 5,4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9.0%)되었음.

[연도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2022년	12,084	4,251 (35.2%)	7,833
2023년	11,300	4,110 (36.4%)	7,190
2024년	7,300	654 (9.0%)	6,646

주) 전년도 이월액 제외한 2024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계 지연 및 설계 확정 전 여러 법정 절차 등의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공사 순연 등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들의 당해연도 예산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교부할 필요성이 있음.

(7)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은 바이오분야 소재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장비 도입 및 바이오 소재화를 위한 원료공급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2024년 신규사업이고,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함.[21]

동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액 51억원 중 24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48.9%)되었음.

2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2832-452)(농업혁신정책관)

[2024년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구축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합 계	5,100	2,494 (48.9%)	2,606	-	6,950
그린바이오소재첨단분석시스템구축	4,950	2,475	2,475	-	4,950
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시설	150	19	131	-	2,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내역 중 그린바이오소재첨단분석시스템구축사업은 동물용의약품 분야(포항) 장비도입 위한 공고 후 유찰 발생으로 이월되었으며,[22] 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시설사업은 조성부지 관련 소유권 이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대체조성지 결정 필요로 인해 후속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작연도부터 사업진행지연 및 과다한 사업비 이월은 추후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2024년 51억원→2025년 69억 5,000만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및 예산안 편성을 보다 면밀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8)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사업은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기반을 조성하여 푸드테크 신기술 실증 및 적응모델 구축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신규사업이며,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함.[23]

동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액 3억 7,500만원 중 1억 7,910만원이 집행(집행률 47.7%)됨에 불과함.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 실시설계 용역이 종료되지 않아 사업비가 이월되었다고 설명함.

22)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초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 추진(2025.2월)하여, 계약체결(3.4) 및 이월액을 집행 완료(3.14)하였으며, 장비설치(3.17, 약 3주)후 검사・검수(4월)하였다고 함.

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2832-401)(식품산업정책관실)

[2024년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산출근거
2024	375	179.1 (47.7%)	195.9	-	(1년차) 3개소×10,500백만원×국비50%×2.4%
2025	4,186	-	-	-	(2년차) 3개소×10,500백만원×국비50%×25% (1년차) 2개소×10,500백만원×국비50%×2.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시작년도부터 사업진행지연 및 과다한 사업비 이월 발생은 추후 사업의 집행부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2년차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편성한 결과 2025년 예산액이 크게 증액편성된 점(2024년 3억 7,500만원→2025년 41억 8,600만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9) 원예시설현대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상황에 대응하여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및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함.[24)]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의 2022년 계획현액 34억 7,500만원 중 19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55.9%)되었고, 2023년 34억 5,800만원 중 19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55.4%)되었으며, 2024년 26억 4,600만원 중 19억 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0%)되었음.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은 2022년 계획현액 130억 5,300만원 중 56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2%)되었고, 2023년 163억 4,600만원 중 79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48.6%)되었으며, 2024년 141억 6,900만원 중 50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35.4%)되었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내역사업들은 사업비 자부담분 부담(국고 20%~50% 지원)으로 인한 사업포기 및 공사기간 부족,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함.

2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원예시설현대화(3034-350)(유통소비정책관)

[연도별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세부내역별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계획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3,300	-	3,300	175	3,475	1,944 (55.9%)	488	1,043
	특용작물시설현대화	11,540	1,200	10,340	2,713	13,053	5,644 (43.2%)	6,444	965
	합 계	14,840	1,200	13,640	2,888	16,528	7,588 (45.9%)	6,932	2,008
2023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2,970	-	2,970	488	3,458	1,917 (55.4%)	573	968
	특용작물시설현대화	9,903	-	9,903	6,443	16,346	7,951 (48.6%)	6,938	1,458
	합 계	12,873	-	12,873	6,931	19,804	9,868 (49.8%)	7,511	2,426
2024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2,079	6	2,073	573	2,646	1,906 (72.0%)	175	564
	특용작물시설현대화	7,270	39	7,231	6,938	14,169	5,010 (35.4%)	8,280	879
	합 계	9,349	45	9,304	7,511	16,815	6,916 (41.1%)	8,455	1,443

주)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산정책처 등에서 사업비 집행실적 부진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성 등이 지적되어 왔으나, 집행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 사업 차년도 이월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년도 계획안 작성 시 지자체별 이월 규모 및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생산기반정비 후 농업법인에게 매도하여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24년 30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사업지원대상이 변경되었고, 그 결과 사업비 집행실적이 5,900만원(0.2%)으로 저조함.[25)]

동 사업은 ‘청년창업형스마트농업단지’라는 내역사업명으로 2023년에 신규 편성되었고, 2024년 사업 수행 도중 기획재정부의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원대상을 청년농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 검토단계 지연으로 사업비 300억원 중 5,9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0.2%)되었음.

[2024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의 사업변경 내용]

(당초) 40ha(20ha/개소) 토지를 청년농 당 0.5ha 이내 분양 → (변경) 40ha(20ha/개소) 토지 농업법인 일괄 매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업명	계획액		실집행액(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A)	수정			
2023	맞춤형농지지원	857,726	844,915	844,763	-	153
	-청년창업형스마트농업단지	5,448	5,448	5,404 (99.1%)	-	44
2024	맞춤형농지지원	1,241,260	1,206,060	1,174,533	29,941	1,587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30,000**	**30,000**	**59 (0.19%)**	29,941	-
2025	맞춤형농지지원	1,113,440	1,113,440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18,000	18,000	-	-	-

주 1)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집행률은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액으로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재작성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규모 확대로 청년농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스마트팜 시설 투자가 가능한 농업법인으로 변경하였고, 부지의 일정 면적(2023년: 6ha → 2024년: 6ha로 동일)은 지자체 기부채납[26)]

25)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1160-350, 융자)(농업정책관실)

을 통해 청년농에게 지원할 계획이므로 당초 사업 취지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당초 국회에서 동 사업을 확대(2023년 6ha→2024년 40ha)하고 사업비를 증액(2023년 54억 4,800만원 →2024년 300억원)한 것은 더 많은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업지원대상에 농업법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국회 심의 시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 사업비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2025년도에도 18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6년도 계획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26)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지 매각 농업법인 선정 단계에서 일정 부지(약 3ha)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함을 명시하여 공모하고, 농업법인과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이행 준수를 강화할 계획임.

【일반회계】

〈세 출〉

5. 국제농업협력(ODA): 외교부 ODA사업과 차별화 필요 등

가. 개 요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개도국과의 농업협력 증진 및 우리나라 농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24억 6,100만원 중 1,602억 4,000만원이 집행(98.6%)되고 2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4년도 국제농업협력(ODA)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농업협력 (ODA)	162,128	162,128	333	-	162,461	160,240	2,200	21	243,92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협력협상(5031) 프로그램의 4개 주요 사업(국제농업협력(ODA), 농업협상대응, 국제기구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ODA))의 예산총액은 2021년 1,077억 1,300만원, 2022년 1,090억 7,200만원, 2023년 1,169억 3,000만원, 2024년 1,906억 2,700만원, 2025년 2,798억 2,900만원임. 2024년 국제농업협력(ODA, 5031-300)사업 예산이 2023년에 비해 76.8%로 급증하였고, 2025년에는 2,439억원이 편성되었음.

27) 일반회계-국제농업협력(ODA)(5031-300)(국제협력관)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협상(5031 프로그램) 주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사업코드)	예산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제농업협력(ODA)(5031-300) (전년대비 증가율)	82,791	84,859 **(2.5%)**	91,691 **(8.0%)**	162,128 **(76.8%)**	**243,926** **(50.5%)**
농업협상대응(5031-301)	2,949	3,328	2,556	2,559	4,389
국제기구분담금(5031-530)	2,154	2,005	2,198	2,688	3,123
국제기구분담금(ODA)(5031-531)	19,819	18,880	20,485	23,252	28,391
합 계 (전년대비 증가율)	107,713	109,072 (1.2%)	116,930 (7.2%)	190,627 (63.0%)	279,829 (46.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ODA사업 규모가 최근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외교부(KOICA) 사업 및 농촌진흥청 ODA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므로, 사업 방향성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ODA 사업수행이 필요함.

국제농업협력(ODA)(5031-300)사업 예산은 2023년 916억 9,100만원, 2024년 1,621억 2,800백만원, 2025년 2,439억 2,600백만원으로, 2024년과 2025년에 대폭 증가하였음.

대외무상협력(ODA) 사업의 총괄 부처는 외교부(수행기관: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임. KOICA에서는 다양한 분야(교육, 보건, 거버넌스, 농촌개발, 교통·에너지, 과학기술, 성평등 등 13개 분야)에 걸쳐 무상원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 개발과 관련하여 농업 관련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 농업기술 전수 및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종자개발·확산 지원 등을 수행 중이며,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농업가치사슬(제도정비-생산인프라구축-가공·유통 활성화- 참여주체 역량강화 등)에 기반한 세부사업(생산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전문가 파견 - 역량·기술 강화교육 - 사업모니터링 등) 수행으로 여러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중임.

[외교부(KOICA) 농촌개발 중기전략 주요 내용]

전략목표	주요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증대 및 시장성 강화	(농림수산업 생산성 강화 프로그램) -농림수산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 -영농 역량강화 교육・연구
	(농업 가치사슬 강화 프로그램) -농업조합강화 -유통(보관・가공・마케팅 등) 지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개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농촌소득 증대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 금융 접근성 개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생산체계 구축 및 자연자원 보전	(기후변화 대응 농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종자 개발・확산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지원
	(지속가능 산림경영 프로그램) -혼농임업 기술 지원 -산림 조성 지원

자료: 2024년 KOICA 대외무상협력 사업계획(2024.3)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ODA)으로 수행 중인 주요 사업들에는 관개시설구축 및 경지정리,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진단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시설 구축, 농기자재 지원 등 농업전후방산업 지원, 농업생산기반 관련 연수・교육 등인데, 이러한 사업내용들은 외교부(KOICA) 및 농촌진흥청 등이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등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농촌진흥청의 농업관련 ODA 사업 비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규모 및 주요 사업	-2,439.2억원, 19개국; 9개 국제기구(2025)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관개시설구축 및 경지정리,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진단 등 -농업전후방산업 지원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시설 구축, 농기자재 지원 등	-13,644.5억원, 57개국(2025) -ODA 플랫폼 사업, 농촌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 가치사슬사업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농림수산 인프라, 기자재지원, 생활인프라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현지 지원을 위한 개발조사	-301.1억원, 22개국(2025) -농업기술 개발 및 전수 -기술개발+농가실증+시범마을 ・식량(벼, 밀, 감자, 옥수수), 원예(과수, 채소), 축산(육우, 양계, 사료) 등 -자원 공동개발 및 탐색 ・유전자원, 농업자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 농업생산기반 교육·연수 -디지털농업시스템 구축 사업 -식량위기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 -국제기구 연계 협력사업 등	-긴급구호, 물자, 자금, 시설지원 -민간단체 국제협력활동지원 -외국원조기관 및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등	·현지 적용기술 공동개발 -전문가 장기파견 및 시험포장 운영 -글로벌인재양성사업(청년인재양성) -부처간 협업사업으로 시너지창출 등
협력 대상	-상대국 농업관련 정부기관, 지방정부, 대학, 국제기구 ·농업부, 농업개발부 등 농업담당 부서	-상대국 정부기관, 지방정부, 대학 ·마을 공동체개발 담당부서	-상대국 정부기관 ·농업부 또는 농업연구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2024년 KOICA 대외무상협력 사업계획(2024.3)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외교부(KOICA)에서 수행중인 농업관련 해외원조프로그램 예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4년)	사업내용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평화마을 조성사업	11,300 (2,350)	소득작물 전문가 파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키트 지원 등, 농가 대상 관수파이프 등 기자재 지원
필리핀 퀴리노주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	12,606 (520)	과수·경제수·송아지·사료종자 관련 기자재 지원, 축산·가공 등 기술자문 및 역량강화 연수, 가축번식센터 건립
라오스 농촌개발 실행전략 수립 및 중북부지역 농가소득증대 시범사업	15,125 (2,269)	마을별 관개시설, 농산물저장용 창고 및 판매시설, 축산사료저장 관련 기자재 지원
가나 센트럴 주 쌀가치사슬체계 향상 사업	8,800 (1,397)	우량종자 보급 등 종자생산단지 육성, 역량강화 교육, 농기계 지원, 경지정비, 시설지원 등
우간다 주요 채소작물 종자 가치사슬 역량강화사업	9,680 (1,300)	육종 연구 온실 및 포장 구축, 종자생산 기반시설 구축, 농기계 등 지원, 초청연수 실시 등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13,090 (4,100)	쌀 생산량 증대 위한 기반 시설지원, 농기계서비스센터 설계 및 시공, 농기자재 기원, 영농기술 역량강화 연수 등
세네갈 콜다 주 통합적 접근을 통한 미곡가치사슬 강화사업	16,250 (2,206)	관개지 조성, 농기계, 농민종합센터 사무용기자재 등 지원

자료: 2024년 KOICA 대외무상협력 사업계획(2024.3)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ODA) 주요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4년)	사업내용
캄보디아 끄라체 영농센터 지원사업	3,788 (238)	농업 분야 기술교육·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책 영농 교육센터·시범포 등 구축, 역량 강화, 기자재 지원 등
캄보디아 산지지역의 고부가가치 채소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사업	5,720 (674)	현지 적합 품종 개발 등 농업 가치사슬 발전을 위한 산지채소연구소·시범포·용수공급시설 구축,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4년)	사업내용
캄보디아 칸달주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사업	4,920 (657)	고온 저지대 채소 과채류 재배용 스마트 시설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역량 강화, 공동브랜드 개발, 스마트팜 확산 정책 수립 지원
필리핀 고품질 쌀 종자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6,474 (1,400)	고품질 쌀 종자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쌀 정선·저장 복합시설 및 저장고 구축, 정선설비 등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
필리핀 농가정보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4,000 (1,742)	농업행정 정보화 경험 전수를 위한 농업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플랫폼 구축, 역량 강화, 농업정보 시스템 시범 운영
라오스 비엔티안주 농업서비스센터 내 현지 농기계활용도 제고 지원사업	4,688 (125)	농기계 활용 시범단지 운영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벼 저온저장고 구축·시범단지 생산 기반 시설 개보수,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
라오스 관개기술교육센터(ITTC) 조성사업	6,875 (1,000)	우리나라 선진 농업용수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한 관개기술교육센터 설치, 실험실 설비 등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
라오스 비엔티안주 디지털정보를 활용한 수자원관리 및 농업용수 지원사업	8,083 (1,160)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술 전수를 위한 스마트 물 관리시스템·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
아프리카 라이스벨트 구축사업 * 6개국: 세네갈, 감비아, 기니, 우간다, 카메룬, 케냐	43,461 (9,000)	벼 종자 생산단지 조성(양수장·관배수 등), 기자재 지원, 기술이전, 교육훈련 및 연수 추진, 종자 시범 생산 및 보급 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특성에 맞는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및 사업효과 확대 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조정실)’ 및 ‘무상원조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에서 사업을 심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비록 각 부처의 ODA사업이 동일 국가·동일 지역 및 동일 사업으로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외교부(KOICA) 등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ODA)의 대상국가·사업내용·구체적 지원 내역에 있어 일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교부(KOICA)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간 연결고리인 가치사슬을 구성하여 영역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 부처는 부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외교부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사업들 간의 방향성 및 사업 간 세부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ODA 지원과제 선정 및 현지에서의 사업운영시 부처(기관)간 정보공유 및 사

업단계별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는 ODA 사업들이 사업수행 부처(기관)이 다르다는 사유로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수혜대상 차이 등이 발생하는 경우 ODA사업의 수행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ODA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ODA사업은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내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에 대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무소가 FAO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 정부가 FAO에 매년 납부하는 분담금 규모가 상당한 점, FAO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국가가 7개국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 시 그 운영비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28)]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는 우리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FAO를 대신하여 FAO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2024년 예산액은 비ODA 국제기구분담금(5031-530)에서 공공요금및제세(210-02) 및 임차료(210-07) 등 1억 4,000만원(사무실 운영비)이 편성・집행되었고, 이와 별도로 운영비 70만 달러가 자발적 분담금 형태로 ODA 국제기구분담금(5031-531)에서 지원되고 있음.[29)]

한편 ‘FAO한국협회’는 우리나라와 FAO 본부 및 회원국 간의 협력, 국제 농수산 자료의 수집・교환・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임. 2024년 동 협회 운영 예산액은 ODA 국제기구분담금(5031-531)에서 민간경상보조(320-01)로 6억 6,200만원(사업비 및 인건비 등)이 편성・집행되었음.

‘FAO한국협회’와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두 기관의 주요 업무는 FAO와 한국정부와의 협력, 행사개최, 농림식품분야 정보・정책자료 수집 등으로 유사하며, 한국정부는 FAO에 매년 납부하는 의무분담금(2024년 147억 7,500만원) 이외에도 자발적 분담금(2024년 10억 9,100만원) 등 FAO에 지급하는 분담금 규모가 상당한 상황임.

특히 FAO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국가가 전 세계에 아제르바이잔, 카메론,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멕시코 등 7개국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동 기구가 한국정부의 업무가 아니라 FAO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FAO 분담금과 별도로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운영비까지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28)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agnization of the UN)

29)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FAO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2412호) 및 보충약정(2019.5.)에 따라,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를 설치(2019년)하고 자발적 기여금으로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 70만 달러와 임차료 등을 납부하고 있음,

[FAO 한국협회와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 비교]

FAO한국협회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 우리정부를 대신하여 업무 수행 -FAO 정책에 우리정부 의견 반영 추진 등 -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구로 설치 - 일본 등 59개국에 설치	○ FAO를 대신하여 업무 수행 -FAO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기관·기금 마련 등 - 국제기구로 설치 - 한국, 아제르바이잔, 카메론,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멕시코에 설치(7개국)
○ FAO 총회 등 국제회의 모니터링 및 정부 지원 - 의제 검토, 정부 미참석 회의 내용종합 등 ○ 국제기구 및 주요국 농림수산식품 정보·정책자료 수집 및 국내 전파 ○ 국제회의·세미나 개최 지원 ○ 농식품분야 해외 일자리 창출 - 해외인턴십사업,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 ○ 국제농업 관련 연구용역 실시 ○ 국민의 이해 · 인식 제고 활동 - 세계 식량의 날 캠페인 등 ○ 국제기구 주요 간행물 발간·배포 ○ 개도국 농촌개발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	○ FAO와 한국정부간 연락 및 협력 확대 ○ 식량안보, 빈곤퇴치 등 인식 제고 ○ FAO 관련 국내 행사 개최 및 지원 ○ FAO 방한 인사 안내 ○ 한국기업·대학·시민사회 등을 통한 FAO 사업 재원 확보
○ 설립근거: FAO 총회 결의사항(19/51) ○ 연간예산: 662백만원(2025년, 국비 80%)	○ 설립근거: 한국-FAO 간 협정 ○ 연간예산: 70만달러+140백만원(2025년, 국비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6. 농업자금이차보전: 이차보전과 직접융자사업의 차별화 필요 등

가. 개　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은 농업자금 저리(低利)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924억 9,000만원 중 4,036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1%)되고, 농특세 세입 부족으로 인해 1,888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음.[30] 2024년 기준 27개 내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기관은 농협은행·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임.

[2024년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업자금이차보전	557,722	557,722	34,768	-	592,490	403,661	188,829	-	682,5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차보전지원 내역 선정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차보전지원사업 총규모가 급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 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차보전과 융자방식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2,975억 1,400만원 규모였으나, 2023년 4,519억 4,200만원, 2024년 5,577억 2,200만원, 2025년 6,825억원 규모로 최근 매년 1,000억원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음.

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농업정책국)

[연도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비 증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297,514**	5,331	△35,120	267,725	244,744 [244,744]	82.3	91.4	3,007	19,974
2022	**291,367**	3,007	-	294,374	244,458 [244,458]	83.9	83.0	49,250	666
2023	**451,942**	49,250	△481	500,711	462,923 [462,923]	102.4	92.5	34,768	3,020
2024	**557,722**	34,768	-	592,490	403,661 [403,661]	72.4	68.1	188,829	-
2025	**682,500**	188,829	7,690	879,01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 내역사업 수 또한 2022년에는 16개, 2023년에는 23개, 2024년에는 27개, 2025년에는 29개 사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세부내역 및 융자규모]

(단위: 백만원)

자금명	2022년융자규모 (16개내역)	2023년융자규모 (23개내역)	2024년융자규모 (27개내역)	2025년융자규모 (29개내역)
1.농축산경영자금	1,420,000	1,200,000	1,200,000	1,200,000
2.RPC운영자금	1,230,800	1,230,800	1,330,800	1,330,800
3.농업종합자금	3,302,300	3,434,926	3,196,726	3,196,726
4.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405,000	800,000	800,000	600,000
5.농촌주택개량자금	550,000	400,000	280,000	200,000
6.협동조합합병자금	24,000	24,000	16,800	5,000
7.귀농인창업지원	300,000	259,000	181,300	150,000
8.긴급경영안정자금	-	-	-	-
9.도축가공업체지원	119,000	119,000	119,000	80,000
10.시설현대화자금(축사)	**122,500**	**77,500**	**54,300**	**69,000**
11.축산경영종합자금	110,000	94,600	94,600	94,600
12.인삼계열화수매	23,500	23,500	53,500	20,000
13.6차산업창업지원자금	15,000	15,000	15,000	15,000
14.농업경영회생자금	30,000	15,000	15,000	30,000

(단위: 백만원)

자금명	2022년융자규모 (16개내역)	2023년융자규모 (23개내역)	2024년융자규모 (27개내역)	2025년융자규모 (29개내역)
15.특별사료구매자금('22년추경)	1,145,000	-	-	-
16.축산물수급관리('22년추경)	20,000	-	-	-
17.재해대책비	-	20,000	20,000	10,000
18.인삼계열화계약	-	22,600	25,100	25,100
19.산지유통활성화지원	-	320,000	320,000	320,000
20.특용작물계열화자금	-	2,065	2,065	1,239
21.특용작물시설현대화	-	2,517	2,517	1,258
22.온실현대화지원자금	-	6,263	6,263	2,000
23.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자금	-	9,000	9,000	9,700
24.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자금	-	74	74	74
25.해외곡물망	-	50,000	50,000	50,000
26.사료구매자금	**-**	**645,000**	**700,000**	**700,000**
27.축산물수급안정자금	-	-	34,400	13,200
28.외식업체경영자금	-	-	15,000	-
29.식품소재업계 경영자금	-	-	450,000	450,000
30.쌀가루원료구매자금	-	-	25,000	25,000
31.청년2막자금	-	-	-	20,000
32.농산업수출업체 제조시설현대화	-	-	-	5,000
33.농산업수출업체 운영지원	-	-	-	15,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업자금이차보전 지원 내역 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연번 10)' 및 '사료구매자금(연번 26)' 은 각각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및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사업으로도 지원되고 있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융자사업 계획액은 2024년 512억원, 2025년 679억 4,600만원이며, 사료구매자금(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업 계획액은 2024년·2025년 각각 3,000억원이 집행되고 있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이차보전(농특회계)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시설현대화자금(축사시설) (농어촌구조개선특회계, 이차보전사업 내 편성)				축사시설현대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편성)			
예산액		대상자	금리 및 거치기간	계획액		대상자	금리 및 거치기간
2024	2025			2024	2025		
54,300 (11,472)	49,000 (11,048)	축산업농가 (대규모농가)	고정 2.0%, 5년거치 10년상환	51,200	67,946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영위한 중·소규모농가	고정 1.0%, 5년거치 10년상환

주) 이차보전은 융자규모 기준으로 작성, 이차보전 예산액은 ( )에 기재 /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內 육견농가전업 지원 자금(융자규모 20,000백만원, 이차보전액 22백만원)은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구매자금의 이차보전 및 축산발전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료구매자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사업 내 편성)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축산발전기금에 편성)			
예산액		대상자	금리 및 거치기간	계획액		대상자	금리 및 거치기간
2024	2025			2024	2025		
700,000 (20,834)	700,000 (31,335)	축산농가	고정 1.8%, 2년이내 상환	300,000	300,000	축산농가	고정 1.8%, 2년이내 상환

주) 이차보전은 융자규모 기준으로 작성, 이차보전 예산액은 ( )에 기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금 등에서 직접 융자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직접융자"는 담보능력·신용 등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대출을 시행하고 원금손실위험을 직접 감수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정책대상에 대해 지원하는 것임. 이에 반해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이 위험을 안게 되는 대신 국가가 이자 차액 및 수수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자금을 이용하여 정책목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각 정책대상과 목표가 다름.

그러나 직접융자사업이 존재함에도 각 기금의 재원부족을 사유로 유사한 목적·내용의 이차보전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31]

31)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기금에 편성된 융자는 20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이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특에 편성된 이차보전은 기금 지원 농가를 제외한 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료구매자금의 경우는 기금재원부족으로 인해 이차보전으로 추가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특히 이차보전의 경우 정부는 융자에 필요한 대규모 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초기에는 작은 규모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출만이 발생하므로 초기 재원부담이 적어 사업 신설 및 증액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직접융자와 달리 원리금회수가 없고 지출소요가 계속 누적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음.

따라서 이차보전은 직접융자와 정책대상과 목표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사업 신설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차보전지원사업의 총규모가 급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차보전과 융자방식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

7. 농축산물 할인지원: 적정예산 편성 및 농축산물 수요 증가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농축산물 할인지원’ 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대형유통경로(대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및 중소유통경로(중소마트 및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지정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시 1인당 1만원 한도내에서 품목당 20% 할인 지원(전통시장은 2만원 한도, 30% 할인)하는 것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1,080억원이었으나, 예비비 587억원을 추가지원받아 예산현액은 1,667억원이고 전액 집행되었음.[32)]

[2024년도 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3.649	123.649	-	58,700	182,349	182,339	-	10	223,424
농축산물할인지원	108,000	108,000	-	58,700	166,700	166,700	-	0	228,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예비비 등을 추가로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수혜 편차 및 유통업체 등을 고려한 사업 설계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재원을 추가배정받아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2022년에는 추경 및 예비비를 통해 690억원을, 2023년에는 예비비로 225억원을, 2024년에는 587억원의 재원을 예비비로 추가지원받아 집행하여 왔고, 2025년에도 추경을 통해 1,200억원이 증액되었음.

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소비기반조성(3041-385)(유통소비정책관)

이는 실제 정책 소요 대비 예산안 편성이 연례적으로 과소했음을 의미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 예비비를 통해 매년 추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연도별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B)	실집행액 (C)	집행률 (C/A)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39,000	**78,000**	**30,000**	108,000	107,819	99.8	181
2023	108,000	-	**22,500**	130,500	130,419	99.9	81
2024	108,000	-	**58,700**	166,700	166,103	99.6	597
2025	108,000	228,000	-	228,000	114,130	50.1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및 실집행액은 2025년 7월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작성

둘째, 참여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 할인지정 품목을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1인당 할인혜택을 받은 규모 등이 공유되고 있지 않아[33] 소비자가 실제 여러 유통업체 등을 통해 할인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거나 이와 반대로 정부의 할인혜택 정책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참여 유통업체가 주거지 인근에 없다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정책수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34]

셋째, 예산산출근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주일 1인당 최대 1만원 미만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행사들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어,[35] 매년 1,000억원 이상(2025년 1,580억원)의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소비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할인지원을 통한 수요 증가가 소비자 혜택 보다는 유통업체의 이익 증가로 귀착될 우려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사유 등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함.

34) 특히 온라인몰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과 유통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격오지 주민 등은 더욱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35)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자체적으로 전단행사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공품, 공산품 등을 매주 정기적으로 세일행사하고 있음.

【양곡관리특별회계】

〈세　출〉

8.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정산: 정밀한 사전수급계획 마련 및 성과지표 개발 필요

가. 개　요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정산’ 은 양곡수급조절대책(쌀 시장격리) 시행에 따라 농협이 지출한 시장격리곡 매입·운송·보관료 등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858억 2,3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36)]

[2024년도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정산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부양곡매입비	1,712,421	1,712,421	-	△100,000 100,000	1,712,421	1,712,421	-	-	1,732,193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정산	485,823	485,823	-	100,000	585,823	585,823	-	-	545,21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시장격리곡 사업수행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채무를 예산 확보 없이 미리 부담하는 구조이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수행할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의 사전계획 마련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36) 양곡관리특별회계-정부양곡매입비(2131-360)(식량정책관실)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2025년 8월 4일)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하게 과잉생산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음.[37]

양곡수급조절대책(쌀 시장격리)는 양곡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일정물량을 매입·격리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를 판매하여 양곡의 수급을 관리하는 제도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자체 자금으로 이를 수행하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후 정산(분할상환)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집행내역은 2009년산·2014년산·2015년산·2016년산·2017년산·2021년산·2022년산·2023년산 시장격리곡 보전금 및 보관료 등 5,858억 2,300만원임.

[2024년 정부양곡매입비 집행 세부내역]

세사업 명	집행내역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 매입비	○ 1,126,598백만 원 - 공공비축미곡 504천톤 매입비 1,126,598백만원* * 504천톤(매입량) × 178,825원/80kg(단가) × 12.5(톤 환산 수치)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 **585,823백만원** - 2009년산 시장격리곡: 51,016백만원 - 2014년산 시장격리곡: 52,992백만원 - 2015년산 시장격리곡: 73,675백만원 - 2016년산 시장격리곡: 55,492백만원 - 2017년산 시장격리곡: 84,127백만원 - 2021년산 시장격리곡: 51,082백만원 - 2022년산 시장격리곡: 60,616백만원 - 2023년산 시장격리곡: 99,995백만원 - 보관료 등: 56,829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7)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전체 양곡에 대한 양곡수급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양곡수급계획과 함께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안 제3조 신설 및 안 제6조)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 정부관리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대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급불안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재까지 시장격리곡 매입은 총 12개 연산에 대해 집행되었고, 2024년말 기준으로, 2005년산・2008년산・2009년산・2010년산 등 4개년도 시장격리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농협에 상환해야 할 잔액은 3조 5,047억 6,500만원임.

시장격리곡 사업수행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채무를 예산 확보 없이 미리 부담하는 구조이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정산 현황]

(단위: 천톤, 백만원)

연번	구분	격리 물량	상환액			기 지급 이자	상환(정산)기간 및 방식
			원금 합계 (A+B)	누적상환액 (A)	잔액 (B)		
1	2005년산	144	243,339	243,339	-	55,141	2006년~2016년
2	2008년산	100	171,410	171,410	-	37,388	2014년~2023년
3	2009년산	566	929,884	929,884	-	193,232	2015년~2024년
4	2010년산	86	141,108	141,108	-	2,683	2011년(공매 후 정산)
5	2014년산	240	471,525	285,862	185,663	99,599	2019년~2027년
6	2015년산	357	627,235	313,620	313,615	127,344	2020년~2027년
7	2016년산	299	458,701	183,648	275,053	92,987	2021년~2027년
8	2017년산	370	668,448	200,535	467,913	133,354	2022년~2028년
9	2021년산	448	932,196	56,830	875,366	85,666	2022년~2031년
10	2022년산	324	732,181	-	732,181	60,616	2027년~2031년
11	2023년산	150	329,114	96,840	232,274	3,155	2024년~2029년
12	2024년산	191	422,700 (추정)	-	422,700 (추정)	-	미정
합계		3,275	6,127,841	2,623,076	**3,504,765**	891,165	-

주) 음영부분은 정산완료(2024년말 기준)

자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5.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또한 정부양곡매입사업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쌀값 안정화 등을 위해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비축하거나 시장격리제도를 실시한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인데,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매입품종 일치율' 로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등을 통해 매입한 양곡의 단일 품종 매입 여부를 측정하는 것일 뿐 사업의 성과인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쌀값 가격 안정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므로,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달성률' 등과 같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정부양곡매입비사업의 성과지표]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매입품종 일치율 (%)	목표	90.0	90.5	91.5	91.8	92.0	타 품종 혼입허용 범위 20%이하로 규정	(품종일치농가 /품종검정농가)×100	공공비축 매입시 샘플채취, 민간품종검정기관분석
	실적	90.3	91.6	91.5	92.0	-			
	달성도	100.3	101.2	100.0	100.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　입〉

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 기금수입 감소 추세를 고려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사업구조조정 필요성 검토 등

가. 개　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운용중인 기금임. 2024년 동 기금의 계획액은 2조 3,947억 7,000만원이나 결산액은 2조 1,998억 9,200만원으로, 농특회계(2,100억원) 및 공자기금(3,797억 5,800만원)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은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계획액보다 결산액이 감소하고 있음.

[2024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계획액 및 결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총계	2,605,118	2,222,826	2,584,159	2,766,768	2,327,368	2,188,578	2,394,770	2,199,892
토지대여료	28	129	41	47	42	19	45	19
기타민간이자수입	13,195	2,290	831	1,273	1,371	2,017	1,335	2,462
기타재산수입	13,440	4,570	-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	-	11,966	5,108	11,966	7,813	9,869	4,472
몰수금및추징금	32	57	32	-	23	-	32	19
위약금	5,381	432	5,381	2,541	2,338	7,762	2,575	4,344
법정부담금	52,091	58,022	58,465	87,999	58,465	50,113	57,519	56,643
기타경상이전수입	201,656	129,677	199,601	45,556	120,726	86,898	65,599	13,151
기타잡수입	-	57	-	118	-	117	-	104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4	-	14	-	-	-	-	-
토지매각대	-	135	-	-	-	-	-	-
재고자산매각대	797,816	582,816	794,567	675,984	789,248	667,577	773,459	582,721
기타민간융자금회수	1,198,785	1,160,336	1,358,413	1,337,176	1,343,189	1,324,923	1,363,969	1,478,900
기타유가증권매각대	5,085	-	-	-	-	-	-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109	-	2	-	151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3,206	-	58,200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64,389	104,195	96,648	21,205	-	41,188	120,368	32,257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일반회계전입금	-	-	-	-	-	-	-	11,500
특별회계전입금	-	-	-	210,000	-	-	-	-
기금예수금	-	180,000	-	379,758	-	-	-	13,3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기금운용 규모와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수입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기금 수입과 지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은 자체재원인 법정부담금,[38] 융자원금회수, 재고자산매각대, 여유자금회수 등이 있으며, 정부이전수입으로 일반회계·농특회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증가 및 여유재원 부족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회계, 농특회계, 공자기금으로부터 당초 계획액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재원을 매년 전입받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1년 공자기금으로부터 1,800억원, 2022년 농특회계로부터 2,100억원 및 공자기금으로부터 3,797억 5,800만원, 2024년 일반회계로부터 115억원 및 공자기금으로부터 133억원을 전입받았음.

또한 기금의 수입 결손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규모도 연례적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축소되고 있는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기준으로 2024년 계획액은 2,297억 4,200만원이나 실제 예치 규모는 327억 2,500만원(집행률 14.2%)에 불과하였음.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 「양곡관리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농산물 또는 양곡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연도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계획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실집행액 (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1	349,763	492,185	21,206	**4.3**
2022	150,034	186,544	41,340	**22.2**
2023	120,368	120,368	32,257	**26.8**
2024	237,033	229,742	32,725	**1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렇듯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기금운용 규모 및 여유자금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나,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국내 농산물의 생산, 수매, 보관, 유통 등 기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기금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과 함께 지출사업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정적인 세입재원 발굴 뿐 아니라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직접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지출계획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39)]

일례로 2024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4.5.)는 동 기금에 편성된 '식품외식종합자금(2851-324, 융자)' 사업의 목적인 "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기금 설치 근거와 직접적 관련성이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런 사업들을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9)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에 3개 보조사업(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전통발효식품육성 등)을 농특회계로 이관하였고,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개 융자사업(산지유통활성화지원, 인삼특용작물계열화)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식품외식종합자금(2851-345,융자) 사업 주요 목적, 내용, 세부내역]

○사업 내용 및 목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융자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강화,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수급조절 도모 등

○2024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계획액	지원 내용
식품가공원료매입	96,833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지원
농식품시설현대화	9,000	식품제조·가공·신선편이·전통발효 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
외식업체육성	15,000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식재료 가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	23,800	농림축산식품부와 중기부가 공동지정한 중소기업의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
합 계	144,63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종자수매·공급(6435-334)' 사업도 주요 식량작물[40]의 고품질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수요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종자매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구조 개선 등 기금 설치목적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미흡함.

[종자수매·공급(6435-334) 사업 주요 목적, 내용, 세부내역]

○사업 내용 및 목적: 주요 식량작물의 고품질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수요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에 기여

○2024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계획액
종자매입(일반벼, 가루쌀, 겉보리, 쌀보리, 청보리, 밀, 호밀, 콩, 팥)	66,669
종자홍보비	90
손실보상금	65
종자(밀) 구입비 지원	1,920
합 계	68,74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물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제2항[41]에 따라 종

40) 일반벼, 가루쌀,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콩, 팥 등

자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 기금의 기본적 설치 목적이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이고, 다수의 종자진흥 관련 사업들이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에서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 회계·기금으로의 이관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종자산업 지원 관련 사업 예산 및 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명 (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4년 예산액 (계획액)	사업주요내용
일반회계	종자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6,819	-종자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6432-300)	8,600	-노후화된 정선기자재 교체 및 최신시설 도입,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위한 각종 검사 기자재 및 검사원 지원, 직원역량 강화 등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6432-301)	6,598	-품종보호 출원품종 설 및 재배시험 등 심사, 국제회의 대응,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등 운영
	원원종 및 원종생산 (6432-302)	6,328	-보급종 상위단계 종자(원원종, 원종)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 지원하여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순도 높은 고품질 보급종 공급 위한 생산기반 마련
	종자산업 활성화지원 (6432-304)	11,045	-종자업체 대상으로 마케팅·홍보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종자유통조사 및 종자산업통계조사 등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6432-305)	2,205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체계 구축 위해 생산지원비·기반조성비 등 지원

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 · 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 · 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 · 거래대금정산 · 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제9조,제9조의2,제13조및「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 · 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명 (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4년 예산액 (계획액)	사업주요내용
	종자산업교육 인프라구축 (6432-307)	2,116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교육수요 확대 등을 위해 교육인프라(생활관, 교육용 온실 등) 확충
	종자원정보화 (6433-522)	1,442	-식품신품종 출원·심사·등록 업무화 재배시험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종자산업기반 구축 (2261-322)	10,296	-우수종묘 증식·보급 시설·장비 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비 지원,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및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지원 등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종자수매·공 급(6435-334)	68,744	-고품질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수요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주요 식량작물 종자매입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 출〉

1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가락시장현대화사업 등): 공사지연에 따른 적정 사업비 편성 필요

가. 개 요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은 가락시장 및 지역공영도매시장의 노후된 시설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3033-311)는 가락시장 현대화를 위한 융자사업이고,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보조, 3033-330)는 가락시장 및 타 지역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임.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가락시장, 3033-311)의 2024년 계획현액 68억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보조, 3033-330)의 2024년 당초계획액은 169억 700만원이었으나 29억 1,000만원이 감액 변경되어 계획현액 139억 9,700원 중 138억 2,400만원이 교부되었고, 1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42)]

[2024년도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융자, 가락시장)	6,800	6,800	-	6,800	-	-	-	2,40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보조)	16,907	13,997	-	13,997	13,824	-	173	15,200
가락시장	5,100	5,100	-	5,100	5,100	-	-	1,800
안동시장	1,307	1,307	-	1,307	1,307	-	-	-
청주시장	6,600	6,600	-	6,600	6,600	-	-	-
삼산시장	300	300	-	300	300	-	-	674
상품화지원확대(서울, 포항)	3,600	690	-	690	517	-	173	3,600

주)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융자, 가락시장) 세부사업코드: 3033-311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보조) 세부사업코드: 3033-330

42)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3033-311, 3033-330)(유통소비정책관)

나. 검토의견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사업진행이 중지된 제2공구(채소1동 및 수산동)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사업비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가락시장현대화사업, 3033-311)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어 왔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연도별 계획액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2023년에는 집행률이 36.5%~53.9% 수준에 머물렀으며 2024년의 경우 집행실적이 일부 개선되어 계획현액 299억 8,800만원(당초 계획액은 68억원) 중 243억 4,000만원(집행률 81.2%)이 집행되었음.

[연도별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가락시장, 3033-311)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가락 시장	계획액			지출액		불용액
		계획액 (A)	전년도이월액 (B)	계획현액 (A+B)	지출액(D) (집행률,D/A+B)	다음연도 이월액	
2021년	합계	7,138	1,710	8,848	**4,860 (52.9%)**	3,988	-
	설계비	47	-	47	45	2	-
	공사비	6,605	1,609	8,214	4,359	3,855	-
	감리비	466	101	567	437	130	-
	시설부대비	20	-	20	19	1	-
2022년	합계	20,274	3,988	24,262	**13,085 (53.9%)**	10,860	317
	설계비	2,121	2	2,123	1,827	294	2
	공사비	17,000	3,855	20,855	10,332	10,210	313
	감리비	1,128	130	1,258	902	355	1
	시설부대비	25	1	26	24	1	1
2023년	합계	25,630	10,860	36,490	**13,302 (36.5%)**	23,188	-
	설계비	2,339	294	2,633	848	1,784	-
	공사비	22,250	10,210	32,460	11,780	20,681	-
	감리비	991	355	1,346	674	672	-
	시설부대비	50	1	51	-	51	-

(단위: 백만원, %)

연도	가락 시장	계획액			지출액		불용액
		계획액 (A)	전년도이월액 (B)	계획현액 (A+B)	지출액(D) (집행률,D/A+B)	다음연도 이월액	
2024년	합계	6,800	23,187	29,987	24,340 (81.2%)	2,955	2,692
	설계비	96	1,783	1,879	135	75	1,669
	공사비	5,904	20,682	26,586	22,733	2,674	939
	감리비	720	671	1,391	1,395	203	33
	시설부대비	80	51	131	77	3	51
2025년	합계	2,400	2,954	5,354	230	-	-
	설계비	1,800	75	1,875	6	-	-
	공사비	-	2,674	2,674	224	-	-
	감리비	480	203	683	-	-	-
	시설부대비	120	2	122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제1공구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되었으나(당초 2023년 10월 → 2024년 11월) 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바닥 갈라짐 현상 등 다수의 하자보수 사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임.[43]

43)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가락시장, 3033-311)사업 제1공구(채소2동) 시설물 하자 신청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합 계	방수	골조	미장	도장	코킹	기타
1차(2024.1.22)	321	6	163	33	29	23	67
2차(2024.2.20)	6	2	-	-	-	-	4
합계	327	8	163	33	29	23	7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가락시장, 3033-311)사업 제1공구(채소2동) 준공지연 현황 및 사유]

구 분	최초계약	1차 공기연장	2차 공기연장	최종 준공 일자
공사 기간	2021.2.22 ~ 2023.10.19	2021.2.22 ~ 2023.12.19	2021.2.22 ~ 2024.03.12	2021.2.22 ~ 2024.11.22
사유		- 공기연장: 61일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레미콘 수급 불안정	- 공기연장: 84일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시멘트공장 친환경설비 교체로 인한 레미콘 수급 불안정 종합 고려	
지연 일수		당초대비 61일 지연	당초대비 145일 지연	**당초대비 400일 지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가 9,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44]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공기지연 등에 따라 사업비가 연례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사업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1공구(채소2동) 완공 이후 2024년 말부터 사업진행 중인 제2공구(채소1동 및 수산동) 현대화사업의 경우도 관련 예산이 2024년부터 일부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으로 설계 등 사업 진행이 2025년 7월 현재까지 전면 중지된 상태임에 따라 제2공구의 2024년 사업비가 2025년으로 전액 이월되었음.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유통인 이전 → 기존 시설물 철거 → 건물 신축 → 유통인 입주' 과정을 반복하는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 중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 지역주민, 상인 등의 이해관계 충돌과 잦은 공사지연이 발생하여왔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자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등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업이 중지된 제2공구(채소1동 및 수산동) 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및 이월예산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영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현대화 융자사업 외에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로도 가락시장, 안동시장, 청주시장, 울산시장, 상품화지원 확대(가락시장, 포항

44) 융자 및 보조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는 9,942억원, 사업기간 2009년-2031년이며, 공사지연·연장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대한상사중재원아 중재 중임(2025년 5월 기준).

시장)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청주시장 이외에는 사업 공정률 및 집행률이 저조함.

2024년 안동시장의 경우 계획액 13억 700만원 중 3,300만원만 집행(집행률 2.5%)되었으며, 삼산시장의 경우 3억원 전액 미집행, 상품화지원확대사업(가락시장, 포항시장)은 당초 계획액은 36억원이나 감액 변경된 계획액 6억 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집행(집행률 1.9%)되었음.

[2024년 공영시장시설현대화사업(보조, 3033-330)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실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가락시장	5,100	5,100	2,997 (58.8%)	-	-	1,800
· 안동시장	1,307	1,307	33 (2.5%)	-	-	-
· 청주시장	6,600	6,600	6,600 (100.0%)	-	-	8,716
· 삼산시장	300	300	- (0%)	-	-	674
· 울산시장	-	-	-	-	-	410
· 상품화지원 확대 (가락, 포항시장)	3,600	690	70 (1.9%)	-	173	3,600
합 계	16,907	13,997	9,700	-	173	15,200

주 1)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상품화지원 확대지원 사업 계획액 36억원 중 29억 1,000만원은 비축사업지원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됨
3) 집행률은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액액 기준으로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공사대금 이월 및 공사계약 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규모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동 사업 계획안 편성시 당해연도 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사업비를 편성했어야 했고, 향후 공영시장현대화사업 진행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11.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비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가. 개 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노지채소 등 수급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들에게 면적조절·출하정지 및 조기출하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전 및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24년 당초 계획액은 551억 9,000만원이었으나 35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억 9,000만원 중 58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7%, 당초계획액 기준)되고 143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45)]

[2024년도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55,590	20,590	-	20,590	6,090	-	14,500	21,116
채소가격안정지원	55,190	20,190	-	20,190	5,880	-	14,310	20,716

나. 검토의견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해 봄철에는 저온 피해가,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의 가입률 제고 및 예산 집행실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

채소가격안정지원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고 2024년 또한 계획액 551억 9,000만원 중 53억 5,700만원만 실집행(실집행률 9.7%)되었음.

45)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생산유통지원(3031-326)(유통소비정책관)

[연도별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및 산출근거	실집행액 (집행률)
2021	농협, aT	**34,063**(농협 32,063, aT 2,000) -863천톤×877천원/톤×15%(사업비 조성률)×30%(국비)	**7,896** **(23.2%)**
2022	농협, aT	**45,145**(농협 42,145, aT 3,000) -974천톤×1,030천원/톤×15%(사업비 조성률)×30%(국비)	**5,032** **(11.2%)**
2023	농협	**50,248** -1,120천톤×1,246천원/톤×12%(사업비 조성률)×30%(국비)	**3,924** **(7.8%)**
	aT	**4,942** -107천톤×768천원/톤×12%(사업비 조성률)×30%(국비)+행정비용 10백만원	**1,417** **(28.6%)**
	합계	**55,190**	**5,341** **(9.7%)**
2024	농협	**50,248** -1,120천톤×1,246천원/톤×12%(사업비 조성률)×30%(국비)	**2,949** **(5.8%)**
	aT	**4,942** -107천톤×768천원/톤×12%(사업비 조성률)×30%(국비)+행정비용 10백만원	**2,408** **(48.7%)**
	합계	**55,190**	**5,357** **(9.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에의 평년 생산량 대비 가입률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가입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19.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평년 생산량 대비 가입률 현황]

(2016) 5.3% → (2017) 8.0% → (2018) 9.6% → (2019) 12.1% → (2020) 15.2% → (2021) 15.5% → (2022) 16.5%→ (2023) 17.7% → (2024) 19.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례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은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가격등락시 발동되는 수급안정 대책 수요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고,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물량이 확대(2017년 36만톤 → 2024년 64만톤)되면서 주산지 농협의 부담액[46]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물량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함.

46) 사업비 분담률(%): 국비30, 지방비30, 농협20, 자부담20

[연도별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수행기관별 사업비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농협					aT		
	합계	국비	지방비	농협	농업인	합계	국비	산지유통인
2020	79,953	23,986	24,059	22,405	9,503	3,000	1,500	1,500
2021	75,483	22,645	22,733	21,796	8,309	2,850	1,425	1,425
2022	66,201	21,107	19,860	18,264	6,969	7,600	3,800	3,800
2023	73,171	21,951	22,055	21,310	7,855	9,874	4,942	4,932
2024	80,052	24,422	24,534	23,285	7,810	9,874	4,942	4,9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그에 따라 채소 등 농산물 생산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급안정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산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례적 사업실적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집행실적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농업 · 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 출〉

12. 공익기능증진직불: 이행준수사항 합리적 개선 및 공익기능 제고 위한 제도보완 필요

가. 개 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면적기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불과 친환경농업·경관보전농업 등 공익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택형공익직불로 구성되어 있음.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 2조 6,334억 8,700만원 중 2조 3,734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1%)되었고, 2,600억원이 불용되었음. 선택형공익직불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 2,366억 9,700만원 중 2,048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5%)되었고, 318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47)]

[2024년도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익기능증진직불	2,870,184	2,870,184	-	2,870,184	2,578,339	-	291,845	2,953,622
기본형공익직불	2,633,487	2,633,487	-	2,633,487	2,373,487	-	260,000	2,633,487
선택형공익직불	236,697	236,697	-	236,697	204,852	-	31,845	320,135

주 1)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선택형공익직불사업은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전략작물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됨

47)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1071-302)(농업정책관실)

나. 검토의견

첫째, 공익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행준수사항(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는 교육·홍보대책 마련이 필요함.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의 계획액 대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9.8%, 2022년 97.6%, 2023년 92.0%, 2024년 89.8%로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불용률이 2020년 0.1%, 2022년 2.4%, 2023년 8.0%, 2024년 10.2%로 증가하고 있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2020년~2024년의 집행액 및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계획액	2021년 계획액	2022년 계획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계획액(A)	2,360,984	2,360,984	2,360,984	2,726,884	2,870,184	2,953,622
집행액(B) **(집행률)**	2,358,736 **(99.9%)**	2,339,968 **(99.1%)**	2,303,728 **(97.6%)**	2,508,129 **(92.0%)**	2,578,339 **(89.8%)**	-
불용액(D) **(불용률)**	2,248 **(0.1%)**	21,016 **(0.9%)**	57,256 **(2.4%)**	218,755 **(8.0%)**	291,845 **(10.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농약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이행 등 준수사항 위반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24년 지급 대상자의 약 1.1%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직불금이 감액 지급되었다고 설명함.

[기본형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건수]

(단위: 건수, %)

준수사항		2020	2021	2022	2023	2024
위반건수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11,938	14,228	7,549	5,254	7,691
	• 교육 이수	-	-	2,703	3,929	4,602
	• 농약 사용기준	219	380	477	524	632
	• 마을공동체 활동	-	-	778	221	1,464
	• 기타 타법 위반	55	50	53	62	100
	17개 준수사항 합계	12,212	14,658	11,560	9,990	14,489
지급대상자수 대비 비율(%)		**1.1%**	**1.5%**	**1.0%**	**0.7%**	**1.1%**
감액 금액(억원)		49	35	21	17	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약 5만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10.7%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공익기능증진직불금 대상자 신청등록 취소 및 3~5년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결과]

○(점검대상)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약 5만명
○(점검기간) 2023.5.30~10.6 / (점검방법) 합동(농관원-지자체) 및 자체(지자체) 점검
○(점검결과) 5,334명(착오 신청 5,179, 실경작 위반 155) 부적합
* 착오 신청자는 2023년 신청등록 취소, 실경작 위반자는 3~5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

(단위: 건, %)

구분	점검 대상	적합	부적합			기타
			합계	착오신청	실경작위반	
합계	49,949 (100.0%)	41,774 (83.7%)	5,334 **(10.7%)**	5,179 -	155 -	2,801 (5.6%)
자체점검	47,500	40,141	4,520	4,441	66	2,799
합동점검	2,449	1,633	814	725	89	2

-(착오 신청) 이장 등을 통해 신청하여 경작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되어 신청 등
-(기타) 사망, 경영체 삭제, 자격요건 미충족(0.1ha 미만 등), 농지 소유권 변동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3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공익기능증진직불금사업이 사업목적 및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수급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사는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48]

다만 동 사업이 공익증진 및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효율성이 낮은 이행준수사항[49]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직불금의 공익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8) 관련 사업으로 직불제이행점검(2024년 계획액 284억 2,100만원)이 동 기금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49) 농업인, 지자체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의 항목이 준수사항 적합성이 낮다고 평가함(「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2024.11.)).

둘째, 공익직접지불제도가 농가소득 안정화 뿐만 아니라 공익기능(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공익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2024.11.)에 따르면, 공익기능증진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공익직불금 평균 지급액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건당 지급액은 2019년 109만원→2024년 180만원, ha당 지급액은 2019년 106만원→2024년 215백만원)하였고, 경지면적 감소추세가 둔화(경지면적 감소율이 2016년~2019년 연평균 -1.49% → 2020년~2023년 연평균 -1.11%)되고 있어, 공익기능증진직불의 사업목적인 소득안정 및 농업유지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공익기능증진직불금 도입 이후 기본형공익직불금 평균 지급액 증가 및 경지면적 감소 추세 현황]

○ 기본형공익직불금 평균 지급액
-건당 지급액: **(2019) 109만원** → (2020) 203만원→ (2021) 198만원 → (2022) 194만원→ (2023) 179만원 → **(2024) 180만원**
-ha당 지급액: **(2019) 106만원** → (2020) 202만원→ (2021) 206만원 → (2022) 207만원 → (2023) 208만원 → **(2024) 215만원**

○ 경지면적 감소추세
-경지면적 감소율(전년대비) : **(2016~2019 연평균) -1.49% → (2020~2023 연평균) -1.11%**
-논: (2016~2019) 평균 -2.23% → (2020~2023) -2.03%
-밭: (2016~2019) -0.63% → (2020~2023) -0.0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공익기능증진직불의 또다른 사업목표인 공익기능 측면에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① 환경보전 관점에서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이행사항으로 “농약 사용기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2020년 129건→2024년 632건), 농약·화학비료 판매량이 2020년 이후 공익직불제로 개편된 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점(농약판매량: 11.6kg/ha→11.9kg/ha, 비료판매량: 266kg/ha→262kg/ha) 및 우리나라 농약·비료 사용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FAO 통계상 3위)이라는 점 등은 공익직불제 시행에도 농약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보전 효과가 미진함을 보여주고 있음.

[농약 및 화학비료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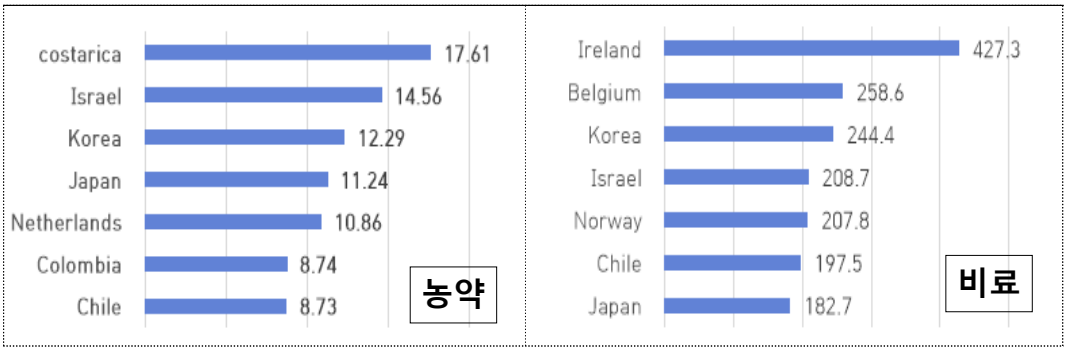
(단위: kg/ha)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16~2019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0~2023평균
농약	11.8	12.2	11.3	10.2	11.6	10.5	11.8	12.4	12.7	11.9
비료	268	270	262	268	266	266	286	255	242	2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별 농약·비료 사용량]

(단위: kg/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② 공익기능증진직불제 도입 이후 직불금 지급건수는 증가(2020년 1,121천건→2024년 1,284천건)했지만, 지급건당 평균면적은 감소(2020년 1.01ha/건→2024년 0.84ha/건)하여 형평성은 개선되었지만, 농지규모화에는 역행하였음.

[연도별 기본형공익직불금 평균 지급면적]

(단위: 천건, 천ha, ha/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상자(천건)	1,135	**1,121**	1,122	1,129	1,285	**1,284**
대상면적(천ha)	1,162	1,128	1,083	1,058	1,109	1,076
평균 면적(ha/건)	1.02	**1.01**	0.97	0.94	0.86	**0.84**
소농직불	0.27	0.33	0.32	0.32	0.31	0.31
면적직불	1.71	1.43	1.39	1.35	1.20	1.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60~70대 이상 고령농의 소농직불금 지급 건수가 2020년 352건(122건+230건)에

서 2023년 629건(300건+3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소농직불금이 고령농의 은퇴를 지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65세 이상 농업경영주는 증가(2010년 564천호→2020년 579천호)하고 40세 미만은 감소(2010년 33천호→2020년 12천호)하는 상황 등은 청년농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지의 공급 부족 등을 초래하여 청년농 유입정책과 부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연도별·연령별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결과]

(단위:천건, 억원)

구분		20~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소농	면적	소농	면적	소농	면적	소농	면적	소농	면적	
2020	건수	3	15	16	46	59	133	**122**	229	**230**	266	1,120
	금액	39	462	194	1,260	704	3,653	1,464	6,302	2,761	5,773	22,612
2021	건수	3	13	13	39	50	111	**128**	224	**257**	283	1,121
	금액	30	470	156	1,170	599	3,239	1,530	6,180	3,085	5,646	22,105
2022	건수	2	16	11	43	45	118	**126**	230	**267**	271	1,129
	금액	28	457	137	1,129	541	2,960	1,496	6,028	3,204	5,793	21,773
2023	건수	2	16	10	43	43	130	**134**	276	**300**	329	1,284
	금액	28	576	122	1,260	512	3,212	1,605	6,312	3,586	5,589	22,80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0대 미만 경영자 농가 수 및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수 현황]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수(비중): (1990) 258천호(14.6%) → **(2010)** 33천호**(2.8%)** → **(2020)** 12천호**(1.2%)**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수(비중): (1990) 323천호(18.3%) → **(2010)** 546천호**(46.4)** → (2020) 579천호**(55.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③ 2024년 기준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중 소농과 면적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직불제 사업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제 비중은 9%에 불과함.[50]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도가 농가소득 안정화와 더불어 공익기능(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50) 다만. 2025년 계획액에서는 선택형 직불제 사업비 비중이 12.2%로 증가함.

[연도별 기본형직불제과 선택형직불제 계획액 현황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 계획액	2,281,567	2,280,487	2,280,487	2,580,487	2,633,487	2,633,487
선택형 공익직불 계획액 **(기본직불 대비 비율)**	79,417 **(3.5)**	80,497 **(3.5)**	80,497 **(3.5)**	146,397 **(5.7)**	236,697 **(9.0)**	320,135 **(12.2)**
- 경관보전직불	8,800 (0.4)	9,880 (0.4)	9,880 (0.4)	9,880 (0.4)	16,830 (0.6)	16,830 (0.6)
- 친환경농업직불	22,832 (1.0)	22,832 (1.0)	22,832 (1.0)	22,832 (0.9)	22,832 (0.9)	31,913 (1.2)
- 친환경축산직불	1,585 (0.1)	1,585 (0.1)	1,585 (0.1)	1,585 (0.1)	1,585 (0.1)	4,085 (0.2)
- 전략작물직불	- (-)	- (-)	- (-)	112,100 (4.3)	186,450 (7.1)	244,000 (9.3)
- 논활용직불	46,200 (2.0)	46,200 (2.0)	46,200 (2.0)	- (-)	- (-)	- (-)
- 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	- (-)	- (-)	- (-)	- (-)	9,000 (0.3)	23,307 (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현재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의 성과지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 수령액 십분위수 감소율(%)[51] 뿐인데 이는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만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로서, 동 사업이 공익기능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성과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가소득 안정화와 공익기능 활성화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52]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의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직불금 수령액 십분위수 감소율(%)	목표	신규	신규	8.2	10.5	10.3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강화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사연연도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하위 10%비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결과/KREI
	실적	8.426	8.929	11.064	10.96	-			
	달성도	-	-	65.1	95.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1) 십분위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전·후의 소득형평성 개선효과 평가지표임.

52)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2024.11.)에서 공익직불제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 성과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축산발전기금】

〈지　출〉

1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장개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설계 필요 등

가. 개　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료 생산비 및 시설·기계·장비 지원, 방목생태 초지조성 교육·컨설팅, 융자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계획현액은 858억 9,800만원 중 853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5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53)]

[2024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85,898	85,898	-	85,898	85,369	-	529	85,652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574	-	-	574	493	-	81	483
조사료 및 방목생태(융자)	1,040	-	-	1,040	630	-	410	914

53) 축산발전기금-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3735-315, 3735-321)(축산정책관)

나. 검토의견

지속적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조사료 자급률이 감소하는 등 시장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사료 및 방목생태 융자' 사업의 2024년 집행률이 낮으므로 지출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산 조사료에 대한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지원에 매년 800~9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2023년 915억 8,100만원, 2024년 853억 6,800만원),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조사료 자급률(%) 목표(2023・2024년 82.4%→2025년 80.0%)와 실적(2023년 82.4%→2024년 79.0%(p))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3,679	80,170	80,506	91,581	85,36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성과지표 및 실적 현황]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조사료 자급률(%)	목표	81.2	82.1	82.4	82.4	80.0
	실적	82.7	81.3	82.4	79.0(p)	-
	달성도	101.8	99.0	100.0	95.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수입 조사료에 대한 고정적 수요가 있고, 사료작물 재배 면적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조사료 수입량 증가 및 볏짚 생산량 감소 등으로 자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국내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형태이고, 수입 조사료는 건조 형태로 유통되어 수입 건초가 유통 및 보관이 용이한 점,[54] FTA 체결에 따라 조사료 수입할당이 곧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캐나다 2024년, 미국 2026년, 호주 2028년 예정) 등을 고려 시 조사료

54) 국내 조사료는 수확기가 짧고, 비도 많이 내리는 시기에 수확하면서, 섬유질 발효사료 형태로 유통되는 반면, 자연건조가 가능한 수입산은 대부분 건초로 유통됨. 또한 사일리지가 롤당 400kg 내외이고, 수입 조사료는 사각 베일로당 25kg 내외로서 수입 건초가 이동과 유통에 용이함.

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대응하고 재정지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한편 동 사업의 세부내역 중 ‘조사료 및 방목생태 융자’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지출조정 등을 통한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세부내역별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액	실집행액	계획액	실집행액	계획액	실집행액	계획액	실집행액	계획액
조사료생산	62,711	60,516	64,432	60,350	76,077	70,272	77,213	70,053	77,080
시설 및 기계장비	11,900	8,978	9,650	4,409	9,970	7,242	6,050	4,882	6,000
조사료 유통	1,833	1,806	3,062	2,129	2,600	2,488	1,021	1,014	1,175
방목생태 축산농장조성	335	286	814	491	814	379	574	282	483
조사료 및 방목생태 융자	**3,391**	**705**	**2,548**	**742**	**2,079**	**1,032**	**1,040**	**334**	**9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 타】

1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시정요구 70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2건·제도개선 58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2	58	-	70
예비비	-	-	-	-	-	-	-
합계	-	-	-	12	58	-	70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정요구사항 70건에 대해 57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1.4%)하고 1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70	57	81.4	13
예비비	-	-	-	-
합계	70	57	81.4	13

농촌진흥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억 6,500만원(2.4%)이 많은 156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2,800만원(8.0%)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5,943	15,943	10,523	△5,420	15,286	15,286	15,651	365	5,128
총수입	15,943	15,943	10,523	△5,420	15,286	15,286	15,651	365	5,128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31억 2,800만원(△3.0%)이 적은 1조 642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8억 4,500만원(△13.7%)이 감소함.

문의 : 강영옥 예산결산조사관 kang052@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254,668	1,254,668	1,233,091	△21,577	1,097,374	1,097,374	1,064,246	△33,128	△168,845
총지출	1,254,668	1,254,668	1,233,091	△21,577	1,097,374	1,097,374	1,064,246	△33,128	△168,845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2억 8,600만원으로, 169억 2,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56억 5,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2.5%)되고 12억 7,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1,722	11,722	-	11,722	11,913	11,269	64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18	1,118	-	1,118	327	295	32	-
- 구조개선사업계정	1,118	1,118	-	1,118	327	295	32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1,593	1,593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46	2,446	-	2,446	3,090	2,494	596	-
- 지역자율계정	1,845	1,845	-	1,845	1,970	1,473	497	-
- 지역지원계정	546	546	-	546	950	851	99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3	53	-	53	128	128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	2	-	2	42	42	-	-
합 계	15,286	15,286	-	15,286	16,923	15,651	1,272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029억 4,200만원으로, 1조 642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109억 4,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77억 5,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004,622	1,004,622	5,568	8,811 △8,811	-	1,010,190	971,571	10,943	27,67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18	7,518	-	-	-	7,518	7,452	-	66
- 구조개선사업계정	7,518	7,518	-	-	-	7,518	7,452	-	6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5,234	85,234	-	-	-	85,234	85,223	-	11
- 지역자율계정	67,585	67,585	-	-	-	67,585	67,585	-	-
- 지역지원계정	14,675	14,675	-	-	-	14,675	14,664	-	1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474	2,474	-	-	-	2,474	2,474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00	500	-	-	-	500	500	-	-
합 계	1,097,374	1,097,374	5,568	8,811 △8,811	-	1,102,942	1,064,246	10,943	27,753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농촌진흥청 자산은 전년 대비 677억 1,300만원이 증가한 3조 2,752억 800만원으로, 이는 기타비유동자산이 4억 8,1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673억 8,4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1억 7,500만원 증가한 42억 4,2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9억 6,0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65억 3,800만원이 증가한 3조 2,709억 6,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604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5억 1,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9,977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2억 4,5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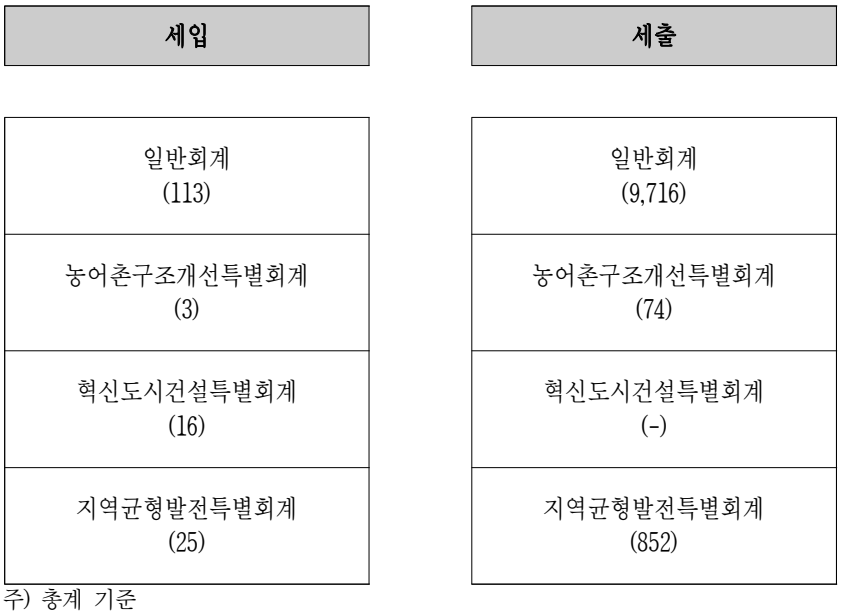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275,208	3,207,495	67,713	2.1
		유동자산	3,259	2,020	1,239	61.3
		투자자산	-	252	△252	△100.0
		일반유형자산	3,253,152	3,185,768	67,384	2.1
		무형자산	18,777	18,954	△177	△0.9
		기타비유동자산	20	501	△481	△96.0
	부 채		4,242	3,067	1,175	38.3
		유동부채	1,301	1,071	230	21.5
		장기차입부채	2,931	1,971	960	48.7
		장기충당부채	10	25	△15	△60.0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3,270,966	3,204,428	66,538	2.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60,465	979,977	△119,512	△12.2
	재정운영순원가		997,792	1,119,037	△121,245	△10.8
	재정운영결과		997,792	1,119,037	△121,245	△10.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구조는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 내역은 없음.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를 비전으로 첨단 융복합 농업과학 기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 총 98개 세부 사업에서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 및 그린바이오 융복합화로 농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먹거리 안정 공급 및 탄소중립·환경친화적 기술개발과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지역농업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 치유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연례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당해연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지자체의 재정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재원을 교부하여야 하며, 편성된 사업비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둘째, 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은 복잡한 조사항목 등의 단순화·효율화 및 모바일·인터넷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조사비용의 절감 가능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연례적 사업진행 지연 및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다음연도 예산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농촌진흥청 사업 중 연례적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 있음. 이하에서는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사업,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 등의 최근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사업진행 지연 사유를 살펴보고, 다음연도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자 함.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의 2024년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과수디지털농업실증 연구소 기반구축	3,228	3,228	-	-	3,228	1,757	-	1,471	630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 실증센터기반구축	7,442	7,442	-	-	7,442	3,813	3,620	9	3,610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68,275	68,275	2,471	4,426 △4,426	70,746	54,335	3,000	13,411	40,254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67,585	67,585	40,689	-	108,274	50,161	57,239	874	58,5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농촌진흥청은 다수의 사업에서 연례적 집행부진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내에 실제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예산안에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농촌진흥청은 상기 서술된 사업들의 예산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주민동의·부지확보·인허가 및 시공계약 등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지자체의 대응재원 미확보,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사업 중지, 공사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 및 해당 지자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이와 같이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사유를 예산안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지확보 또는 사전절차이행 등 사업수행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당해연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비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관리 강화노력이 필요함.

(1)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사업기간: 2023년-2027년, 총사업비: 387.91억원)은 디지털 재배기술 등의 농업현장 구현을 위한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2억 2,800만원 중 17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54.4%)되고, 14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과수디지털농업실증 연구소 기반구축	3,228	3,228	-	-	3,228	1,757	-	1,471	63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사업(1131-307)(국립농업과학원)

동 사업은 2024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건설보상비 3억원이 전액 불용되고 총사업비 조정 및 암반 발견 등으로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등의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했음.

또한 이와 같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2024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45.6%)되면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에 편성된 건설보상비 집행 등 향후 사업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연도별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이·불용 등 사유
2022	일반연구비 (260-01)	150	-	150	149	1	·(불용)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백만원
	합 계	150	-	150	149	1	
2023	기본조사설계비 (420-01)	762	-	762	615	147	·(불용)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47백만원
	시설부대비 (420-05)	21	-	21	21	-	
	합 계	783	-	783	636	147	
2024	**건설보상비 (410-00)**	**300**	**-**	**300**	**-**	**300**	**·(불용) 토지보상 단계 미도래로 인한 300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267	△20	1,247	756	491	·(불용) 부지내 암반발견에 따른 사업순연으로 491백만원
	실시설계비 (420-02)	1,268	20	1,288	644	644	·(불용) 부지내 암반발견에 따른 사업순연으로 644백만원
	감리비 (420-04)	353	-	353	353	-	
	시설부대비 (420-05)	40	-	40	5	35	·(불용) 부지내 암반발견에 따른 사업순연으로 35백만원
	합 계	3,228	-	3,228	1,757	1,471	
2025	**건설보상비 (410-00)**	**600**	**-**	**600**			
	시설부대비 (420-05)	30	-	30			
	합 계	630	-	630			

자료: 농촌진흥청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사업의 당초 계획일정 대비 실제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 고 (변동 사유 등)
기본설계	2024년 2월	2025년 3월	암반발견에 따른 부지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간 소요
중간설계	2024년 5월	2025년 9월	
실시설계	2024년 9월	2026년 5월	
공사 입찰 및 계약	2025년 3월	2027년 1월	
착공	2025년 4월	2027년 2월	
준공	**2026년 12월**	**2028년 12월**	

주) 총사업비에 반영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나, 농촌진흥청은 중간설계 완료후 사업기간(2028년으로 연장) 조정을 신청할 예정임.
자료: 농촌진흥청

(2)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반구축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반구축’ 사업(사업기간: 2020년-2025년, 총사업비: 370억 100만원)은 아열대작물 재배기술의 체계적 실증 및 확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4억 4,200만원 중 38억 1,300만원이 집행(집행률 51.2%)되고, 36억 2,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9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4년도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 실증센터기반구축	7,442	7,442	-	-	7,442	3,813	3,620	9	3,61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된 2022년부터 사업진행이 매우 저조함. 2022년 예산현액 15억 9,600만원 중 12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8%)되었고, 2023년 예산현액 89억 6,000만원 중 47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52.8%)되었으며, 2024년 예산현액 74억 4,200만원 중 38억 1,300만원이 집행(집행률 51.2%)되었음.

3) 일반회계-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1136-318)(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기반구축사업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9,038	9,038	956	-	-	9,994	9,556	105.7	95.6	186	252
2022	5,610	1,410	186	-	-	1,596	1,209	85.8	**75.8**	150	237
2023	8,810	8,810	150	-	-	8,960	4,729	53.7	**52.8**	-	4,231
2024	7,442	7,442	-	-	-	7,442	3,813	51.2	**51.2**	3,620	9
2025	3,610	3,610	3,620	-	-	7,230	-	-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사업지연사유로 예정부지 내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지연, 현장여건(암반)에 따른 설계변경 및 조정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준공시점이 당초 2025년 10월에서 1년 지연된 2026년 10월로 순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기반구축사업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 고 (변동 사유 등)
기본계획 수립		2020.1.~2020.2.	2020.1.~2020.2.	-
부지 선정		2020.4.~2020.6.	2020.4.~2020.6.	-
공공건축 사전검토		2020.8.~2020.10.	2020.8.~2020.10.	-
군관리계획		2020.12.~2022.11.	2020.12.~2022.11.	-
실시설계 용역	계획설계	2021.2.~2022.1.	2021.2.~2022.1.	-
	중간설계	2022.2.~2022.9.	2022.2.~2022.9.	-
	실시설계	2022.10.~2023.5.	2022.10.~2023.12.	현장여건(암반)에 따른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 적정성 검토기간 소요
토지보상		2021.3.~2023.10.	2021.3.~2024.7.	〃
착공		2023.10.	2024.7.	〃
준공		**~2025.10.**	**~2026.10.**	〃

자료: 농촌진흥청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2023년에는 42억 3,100만원이 불용되고, 2024년에는 36억 2,0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예산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

은 202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36억 2,000만원 및 지연되고 있는 사업진행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 및 예산집행 부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사업기간: 2021년-2029년, 총사업비: 8,153억 1,800만원)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에 축산자원개발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07억 4,600만원 중 543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76.8.%)되고, 30억원은 이월되었으며, 134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4년도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68,275	68,275	2,471	4,426 △4,426	70,746	54,335	3,000	13,411	40,25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사업시작년도인 2021년부터 사업의 가장 첫단계인 건설보상비(410-00목)를 편성하지 않았고, 이에 감리비(420-04목)에서 1억원을 전용받아 집행했으며, 2022년에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125억 2,500만원 중 53억 6,400만원만 집행(집행률 42.8%)되었으며, 2023년에는 주민 집단민원 등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예산현액 58억 9,800만원 중 30억 5,200만원(집행률 51.7%)만 집행되었고, 실시설계비 등은 전액 미집행되었음.

또한 2024년에는 토지보상을 위해 공사비(420-03목, 32억 1,900만원)·감리비(420-04목, 12억 700만원)로부터 재원을 전용하여 건설보상비로 집행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20억 9,300만원 중 15억 500만원 및 실시설계비(420-02목) 105억 800만원 등은 불용처리하였음.

4) 일반회계- 축산자원개발부사업(1232-305)(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 건설보상비(410-00)	-	-	100	100	100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3,800	-	-	3,800	3,472	-	328
	· 감리비(420-04)	300	-	△100	200	200	-	-
	· 시설부대비(420-05)	200	-	-	200	100	-	100
	합 계	4,300	-	-	4,300	3,872		428
2022	· 건설보상비(410-00)	2,000	-	-	2,000	1,842	158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2,525	-	-	12,525	5,364	2,098	5,063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공사비(420-03)	-	-	-	-	-	-	-
	· 감리비(420-04)	1,876	-	-	1,876	1,475	35	366
	· 시설부대비(420-05)	275	-	-	275	275	-	-
	합 계	16,676	-	-	**16,676**	**8,956**	**2,291**	**5,429**
2023	· 건설보상비(410-00)	**85,781**	**158**	**2,662**	**88,601**	**88,309**	**292**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3,800	2,098	-	5,898	3,052	2,093	753
	· 실시설계비(420-02)	**1,255**	**-**	**-**	**1,255**	**-**	**-**	**1,255**
	· 공사비(420-03)	-	-	-	-	-	-	-
	· 감리비(420-04)	2,950	35	△2,662	323	236	86	-
	· 시설부대비(420-05)	190	-	-	190	106	-	84
	합 계	93,976	2,291	-	96,266	91,703	2,471	2,092
2024	· 건설보상비(410-00)	51,548	292	4,426	56,266	53,266	3,000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093**	**-**	**2,093**	**588**	**-**	**1,505**
	· 실시설계비(420-02)	**10,508**	**-**	**-**	**10,508**	**-**	**-**	**10,508**
	· 공사비(420-03)	**3,219**	**-**	**△3,219**	**-**	**-**	**-**	**-**
	· 감리비(420-04)	**2,500**	**86**	**△1,207**	**1,379**	**446**	**-**	**933**
	· 시설부대비(420-05)	500	-	-	500	35	-	465
	합 계	68,275	2,471	-	70,746	54,335	3,000	13,411
2025	· 건설보상비(410-00)	-	3,000	7,288	10,288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96	-	-	96	-	-	-
	· 실시설계비(420-02)	1,912	-	-	1,912	-	-	-
	· 공사비(420-03)	34,188	-	△7,288	26,900	-	-	-
	· 감리비(420-04)	3,558	-	-	3,558	-	-	-
	· 시설부대비(420-05)	500	-	-	500	-	-	-
	합 계	40,254	3,000	-	43,254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동 사업 집행과정에서 사업부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의 토지출입 부동의 및 토지보상비 협의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 저조,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로 과다한 비목간 재원 조정, 예산집행률 부진, 사업진행저조 및 완공

지연(당초 2027년 2월 → 2029년 5월)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왔음.

2025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비가 편성된 만큼, 토지보상업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2026년 예산안 편성시 사업지연 및 사업비 이월가능성 등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예비타당성 조사		'20. 11	-	-
인허가	군관리계획 결정	'21.9.～'23.6.	'21.9.～'23.12.	구획계 조정 및 초지면적 확보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입안지연
	문화재지표조사	'21.5.～'21.10.	'21.5.～'21.12.	완료
	전략환경영향평가	'21.11.～'22.9.	'21.11.～'23.12.	완료
	재해영향평가	'21.11.～'22.9.	'21.11.～별도통보시	사업순연('23.8.1.일시정지중) 실시설계 시 재개
	석면조사	'22.11.～'23.4.	'22.11.～'24.12.	조사 등 주민들의 출입 부동의
	환경영향평가	'22.12.～'23.11.	'22.12.～별도통보시	사업순연('23.2.20. 일시정지중), 실시설계 시 재개
기본설계	기본설계 (토목 및 건축 등)	'21.9.～'23.6.	'21.9.～'24.12.	총사업비 확보 지연
	연구시설 설계공모	'22.6.～'23.6.	'22.6.～'24.12.	
	지반조사 및 토질조사	'21.9.～'23.3.	'22.8.～'23.9.	완료
	철거설계(폐기물) 조사	'21.9.～'23.3.	'22.12.~'23.9.	완료
건설사업관리(CM) 계약		'22.12.～'27.10.	'22.12.～28.11.	기본설계 지연에 따른 순연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23.9.～'24.10.	'25.9.～'26.4.	사업순연
착공	우선시공	'24.10.～'24.12.	'26.1.～'26.4.	사업순연
	토목·건축 등 본공사	'25.1.～'27.12.	'26.11.～'29.10.	
토지보상	토지 및 지장물조사	'22.9.～'23.2.	'22.9.～완료시	지장물조사 거부, 토지출입 부동의 등 민원 발생으로 지연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	'23.3.～'23.6.	'23.4.～완료시	보상계획공고('23.4.) 이후, 1~2차 완료, 감정평가 수행 중
	토지보상	'23.7.～'23.12.	'23.9.～완료시	협의계약 및 보상금 지급 중
	재 결	'24.1.～'24.8.	'26.5.～'26.11.	사업순연
이주단지조성	이주단지 조사설계	'21.11.～'22.10.	'21.11.～별도통보시	총사업비 확보 지연
	부지 매입	'22.8.～'23.10.	'22.8.～완료시	협의계약 및 보상금 지급 중
	이주단지조성 공사	'23.12.～'24.11.	'25.1.～'26.12.	총사업비 확보 지연
	분양 및 입주	'24.12.～'25.6.	'27.1.～'27.6.	사업순연
완 공		**'27.12.**	**'29.11.**	**사업순연**

자료: 농촌진흥청

(4)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은 과학영농기술 시설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82억 7,400만원 중 501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46.3%)되고, 572억 3,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8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67,585	67,585	40,689	-	108,274	50,161	57,239	874	58,5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현액 847억 4,100만원 중 229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1%), 2022년 예산현액 888억 1,300만원 중 546억 5,800만원 집행(집행률 61.5%), 2023년 예산현액 864억 5,100만원 중 443억 1,300만원 집행(집행률 51.3%), 2024년 예산현액 1,082억 7,400만원 중 501억 6,100만원(집행률 46.3%)이 집행되는 등 매년 예산집행률이 감소되고 있음.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55,810	53,259	53,259	31,482	84,741	60,221	22,920	1,600	**71.1**
2022년	63,342	65,893	65,893	22,920	88,813	54,658	32,755	1,400	**61.5**
2023년	53,696	53,696	53,696	32,755	86,451	44,313	40,689	1,449	**51.3**
2024년	67,585	67,585	67,585	40,689	108,274	50,161	57,239	874	**46.3**

자료: 농촌진흥청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2233-300)(농촌지원국)

농촌진흥청은 연례적인 예산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지자체의 사전행정절차 지연, 사업부지 및 계획변경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자체의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시 사업관리 철저로 지자체가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외교부 ODA사업과의 차별화 및 연계 필요성 등

가. 개 요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실증·보급으로 농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KOPIA[6]사업과 대륙별 농업 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예산현액 407억 6,600만원 중 402억 8,000만원이 집행(98.8%)되고, 4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R&D, ODA)	40,766	40,766	-	-	40,766	40,280	-	486	43,843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30,028	30,028	-	-	30,028	29,571	-	457	30,113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AFACI)	4,484	4,484	-	-	4,484	4,476	-	8	4,487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3,821	3,821	-	-	3,821	3,808	-	13	6,228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oLFACI)	1,786	1,786	-	-	1,786	1,779	-	7	2,59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7) 일반회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1136-312)(기술협력국)

나. 검토의견

농촌진흥청 ODA사업 규모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므로, 사업 방향성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ODA 사업수행이 필요함.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사업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음. 특히 세부내역 중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은 2024년에는 300억 2,800만원으로 2023년 228억 1,000만원 대비 31.6% 급증하였음. 또한 아프리카(2024년 38억 2,100만원→2025년 62억 2,800만원), 중남미(2024년 17억 8,600만원→2025년 25억 9,100만원) 대륙별 사업비가 각각 2024년 대비 2025년 63.0%, 45.1% 급증하였음.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R&D, ODA)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26,081	26,797	33,417	40,766	43,843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17,351**	**17,763**	**22,810**	**30,028**	**30,113**
-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3,658	3,745	4,480	4,484	4,487
-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2,990**	**2,999**	**3,815**	**3,821**	**6,228**
-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1,460**	**1,668**	**1,690**	**1,786**	**2,591**
- 국제기관/기구 분담금	428	407	407	410	424
- RDA연수생 연합체	194	215	215	237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대외무상협력(ODA) 사업의 총괄 부처는 외교부(수행기관:한국국제협력단, KOICA)임. KOICA에서는 다양한 분야(교육, 보건, 거버넌스, 농촌개발, 교통·에너지, 과학기술, 성평등 등 13개 분야)에 걸쳐 무상원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촌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농업 관련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 영농 역량강화·교육, 종자개발·확산 지원 등을 수행 중임.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들을 가치사슬(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전문가 파견 - 역량·기술 강화교육 - 사업모니터링 등 직접수행)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의 주요 사업은 맞춤형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사업 추진 시 외교부(KOICA)가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지원대상 기관, 대

상 국가 등이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함.

[외교부(KOICA) 농촌개발 중기전략 주요 내용]

전략목표	주요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농림수산업 생산성 강화 프로그램) -농림수산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 -영농 역량강화 교육·연구
	(농업 가치사슬 강화 프로그램) -농업조합강화 -유통(보관·가공·마케팅 등) 지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개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농촌소득 증대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 금융 접근성 개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생산체계 구축 및 자연자원 보전	(기후변화 대응 농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종자 개발·확산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지원
	(지속가능 산림경영 프로그램) -혼농임업 기술 지원 -산림 조성 지원

자료: 2024년 KOICA 대외무상협력 사업계획(2024.3)

[농촌진흥청,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관련 ODA 사업내용 비교]

구분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규모 및 주요 사업	-301.1억원, 22개국(2025) -농업기술 개발 및 전수 -기술개발+농가실증+시범마을 ·식량(벼, 밀, 감자, 옥수수), 원예(과수, 채소), 축산(육우, 양계, 사료) -자원 공동개발 및 탐색 ·유전자원, 농업자원 ·현지 적용기술 공동개발 -전문가 장기파견 및 시험포장 운영 -글로벌인재양성사업(청년인재양성) -부처간 협업사업으로 시너지창출 등	-13,644.5억원, 57개국(2025) -ODA 플랫폼 사업, 농촌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 가치사슬사업 ·공공체 역량강화 지원, 농림수산 인프라, 기자재지원, 생활인프라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현지 지원을 위한 개발조사 -긴급구호, 물자, 자금, 시설지원 -민간단체 국제협력활동지원 -외국원조기관 및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등	-2,685.9억원, 19개국, 9개 국제기구(2025)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관개시설구축 및 경지정리,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진단 등 -농업전후방산업 지원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시설 구축, 농기자재 지원 등 -디지털농업시스템 구축 사업 -식량위기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 -국제기구 연계 협력사업 등
협력 대상	-상대국 정부기관 ·농업부 또는 농업연구청	-상대국 정부기관, 지방정부, 대학 ·마을 공동체개발 담당부서	-상대국 농업관련 정부기관, 지방정부, 대학, 국제기구 ·농업부, 농업개발부 등 농업담당부서

자료: 농촌진흥청

[외교부(KOICA)에서 수행중인 농업관련 해외원조프로그램 예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4년사업비)	사업내용
필리핀 스마트농업을 적용한 시비사야스 지역 고소득작물 가치사슬 강화사업	9,040 (1,500)	스마트농업 마스터플랜 수립, ICT기반 스마트농업 시범농장 구축, 스마트농업 역량강화
라오스 남부 3개주 농촌개발 사업	10,710 (2,650)	농업기술훈련센터 구축, 초청연수 및 현지 연수, 농기자재 공급
라오스 직영 채소 종자 생산지 구축 및 종자 생산 기술 보급 사업	2,691 (396)	종자생산 기지 구축, 관련 기술 전수, 고품질 종자 자체 생산 및 농가 보급
우간다 주요 채소작물 종자 가치사슬 역량강화 사업	9,680 (1,300)	5개작물(토마토,피망,시금치,감자,니카티) 우량종자 증식 및 구축체계 구축(육종 연구 온실, 종자인증 및 생산기반 구축),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 교육 등
우간다 카센타지역 조합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지원사업	800 (225)	파종기 종자확보, 염소은행 운영, 조합원 영농기술 교육
가나 토마토 하우스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영양 개선사업	3,571 (422)	토마토 재배기술교육 및 제반시설 구축
가나 센트럴 주 쌀가치사슬체계 향상 사업	8,800 (1,397)	쌀 생산성 증대 위한 우량종자 보급, 종자생산단지 육성,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세네갈 콜다 주 통합적 접근을 위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	18,705 (2,206)	농기계 및 농업기술학교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파라과이 농민조합 육성 통한 원예경쟁력 강화사업	15,480 (1,620)	원예생산기반구축, 원예농자재 셋넷 설치, 공동 양묘장 설치, 씨감자 저장시설 구축 등
볼리비아 감자생산 선진화 위한 스마트팜 적용 시범사업	15,600 (178)	씨감자 생산 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스마트팜 운영 교육, 관련 기자재 지원

자료: 2024년 KOICA 대외무상협력 사업계획(2024.3)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 (국격제고)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으로 아프리카 식량안보 개선에 기여
- 라이스피아 사업 본격 추진으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2,321톤 첫 수확('24.3.)
* 관행재배 대비, 벼 종자 생산성 증가(2.2톤→3.7톤)로, 생산목표(2,040톤) 14% 초과 달성
□ (기술공여)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성과를 수원국의 농업정책으로 확산
- 수요국 맞춤형 KOPIA 시범마을·농가실증 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 (파키스탄) 무병씨감자 생산시스템(수경재배온실 5동, 망실하우스 32) 구축('24.7.)으로 전국단위 보급기반 마련
* (우즈벡) 벼 생산성 향상 성과를 기반으로 '벼 우량종자 생산센터' 건립('24.12.)
- 신규개소·겸임국 농업기술 수요 및 UN SDGs 부합한 사업발굴
* 카메룬 신규 KOPIA 센터 개소 MOU체결(9월), 감비아·기니 협력의향서 체결(2월)
□ (혁신전략) 선진국형 ODA 전환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
-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을 통한 국제기구와의 사업협력 강화(3월)
* (WFP) 아프리카 벼 종자 보급 협력방안, (CGIAR) 기후변화 대응 유전자원 현지 적응성 검정, (JIRCAS) 아프리카 현지 협력을 통한 장애요인 극복방안 마련
* (중점과제) 아시아 시설채소, 중남미 씨감자 등 대륙별 대표사업 발굴·육성
- 아프리카·중남미를 중심으로 농업기술 ODA 협력 네트워크 확대
* KAFACI(아프리카) 회원국 확대: ('23) 23개국→('24) 37, 에콰도르 KoLFACI 가입 MOU 체결(4월)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특성에 맞는 ODA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및 사업효과 확대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에서 사업을 심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두 부처의 ODA사업이 동일 국가에 동일 사업으로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외교부(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ODA) 사업의 대상국가·사업내용 및 구체적 지원 내역이 유사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외교부(KOICA)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간 연결고리인 가치사슬을 구성하여 영역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농촌진흥청 등 개별 부처는 부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영역에 대해서만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외교부 사업과 농촌진흥청 등 개별부처 사업들간의 방향성 및 사업간 세부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ODA 지원과제선정 및 현지에서의 사업운영시 부처(기관)간 정보공유 및 사업단계별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지 여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는 ODA 사

업들이 사업수행 부처(기관)이 다르다는 사유로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수혜대상 차이 등이 발생하는 경우 ODA사업의 수행효과가 중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ODA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농촌진흥청 ODA사업은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내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8)]

8)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2026년 부처간 융합사업인 '혁신적농촌공동체 개발사업' (KOICA-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지자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부처간 사업 일원화 추진 검토 및 지자체 사업 독려 필요

가. 개 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은 불법소각 근절 통한 미세먼지·병해충 저감 및 산불예방 위해 농작물 재배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신규내역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현액 58억 4,400만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었으나 46억 7,700만원이 실집행(80.0%)되었음.[9)]

[2024년도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47,671	47,671	-	2,475	50,146	50,136	-	10	54,686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5,844	5,844	-	-	5,844	5,844 (4,677)	-	-	5,83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산림청의 산불위험지관리 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이 내용상 유사하고, 산림인접 영농지 구분의 모호함 등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장비 운영,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부처간 사업일원화 추진을 검토하고, 산불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집행률은 70~8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최종 예산확정이 늦어져 지자체별 추경 편성 지연 등으로 대부분 상반기(1월-5월)에 수행되어야 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진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9) 일반회계-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2231-301)(농촌지원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의 2024년 지자체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명, 개, 개소, %)

사업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계 (139개소)	5,844	5,844	5,844	5,844	4,677	1,167	**80.0**
부산시농업기술센터(1개소)	42	42	42	42	42	0	**100.0**
대구시농업기술센터(1개소)	42	42	42	42	40	2	**95.2**
인천시농업기술센터(2개소)	84	84	84	84	84	0	**100.0**
광주시농업기술센터(1개소)	42	42	42	42	32	10	**76.2**
대전시농업기술센터(1개소)	42	42	42	42	34	8	**81.0**
울산시농업기술센터(1개소)	42	42	42	42	23	19	**54.8**
경기도농업기술원(16개소)	673	673	673	673	586	87	**87.1**
강원도농업기술원(16개소)	673	673	673	673	507	166	**75.3**
충북도농업기술원(11개소)	462	462	462	462	417	45	**90.3**
충남도농업기술원(15개소)	630	630	630	630	517	113	**82.1**
전북도농업기술원(14개소)	589	589	589	589	440	149	**74.7**
전남도농업기술원(20개소)	841	841	841	841	662	179	**78.7**
경북도농업기술원(22개소)	925	925	925	925	699	226	**75.6**
경남도농업기술원(17개소)	715	715	715	715	552	163	**77.2**
제주도농업기술원(1개소)	42	42	42	42	42	0	**100.0**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은 농번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산림청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산불위험지 관리사업)을 이미 2016년부터 수행해왔던 점,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산불 등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사업집행을 적극 독려하여 수행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각 지자체의 재원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였어야 했음에도 전액 교부하여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은 농촌진흥청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가 면밀하지 못했음을 보여줌.

현재 산불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일차적 목적이 농촌진흥청은 병해충 발생 경감과 초미세먼지 저감, 산림청은 산불예방으로 서로 차이가 있지만, 파쇄기 임차 및 인력지원 등의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산림인접 영농지 구분의 모호함 등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장비 운영, 예

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을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일반농가는 자체적인 파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읍면단위 교육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

[농촌진흥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및 산림청의 산불위험지 관리사업 내용]

구 분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산림청 (산불위험지 관리사업)
목적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통한 산불예방
사업내용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전문 작업팀 운영)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 진화인력 등을 활용하여 작업)
지역	전국 영농지	산림 100m 이내 인접 영농지
사업연도	2024년부터 시작	2016년부터 시작
사업기간	5개월	6개월
예산(2024년)	5,844백만원	468백만원
사업실행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파쇄기 2,481대 / 파쇄인력 834명)	산불위험지역 10개 시·도 (파쇄기 100대/산불진화요원 13,000여명)

주) 농식품부는 파쇄기 구입 및 보급 사업 수행.
자료: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제출자료 재작성

4.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조사항목 효율화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강구 필요

가. 개 요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은 지역별·작목별 농업소득을 매년 조사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 위한 정책설계 및 영농손실보상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024년도 예산현액 32억 5,100만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어 31억 4,400만원이 집행(96.7%)되었음.[10)]

[2024년도 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촌통계조사분석	3,604	3,604	-	-	3,604	3,604 (3,477)	-	-	3,806
농산물소득조사분석	3,251	3,251			3,251	3,251 (3,144)	-	-	3,45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농촌진흥청은 유사 통계를 조사·산출하고 있는 통계청 사례 등에 비추어 복잡한 조사항목 등의 단순화·효율화 및 모바일·인터넷의 적극 활용 등으로 조사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는 농업관련 통계조사 목적 및 대상을 비교해보면, 농림어업조사(통계청)는 작목과 무관하게 농가와 인구규모, 분포 등 경영특성 변화 추이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농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는 12개 작목(농산물 5종 및 축산물 7종)에 대한 생산비를, 농산물소득조사(농촌진흥청)는 농산물 51개 작목에 대한 소득을 조사하고 있음.

10) 일반회계-농촌통계조사분석사업(2334-300)(기술협력국)

조사내용의 경우, 농산물소득조사(농촌진흥청)가 관련 항목이 가장 세부적이고 다양하나, 여러 항목에서 유사·중복되는 내용도 있음. 예를 들어 농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와 농산물소득조사(농촌진흥청)의 경우 작목별 수확량, 종묘비, 농약비, 수도광열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 다수의 항목에서 유사함.

조사방법의 경우 농림어업조사(통계청)는 방문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농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는 조사표(일계부) 기록 및 방문면접조사를, 농산물소득조사(농촌진흥청)는 경영기록장 기록조사 및 소득조사표 면접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표본규모를 보면 농림어업조사(통계청)는 49,087농가, 농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는 1,530농가, 농산물소득조사(농촌진흥청)는 5,300농가임.

[농업관련 통계조사 비교]

구분	농림어업조사(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	농산물소득조사(농촌진흥청)
목적	농가와 인구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 변화 추이 파악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업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정책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축산물생산비조사] 축산경영 규모 결정, 양축 시설 개선 및 경영지도	작목별 소득을 조사해 농가의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R&D 및 지도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 대상	〈 작목무관 〉 ① 경지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파종 등 농업 관련 일을 한 가구 ② 농한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경하고 있는 가구 ③ 조사시점(12월 1일) 이후에 농사를 그만둔 가구	〈 12작목 〉 [농산물(5)] 벼, 콩, 고추, 마늘, 양파 [축산물(7)] 한우(번식우, 비육우), 육우, 젖소, 비육돈, 육계, 산란계	〈 51작목 〉 [일반(7)]고구마, 감자, 밀, 보리 등 [노지채소(12)]대파, 당근, 배추, 무 등 [시설채소(17)]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수(10)]사과, 배, 노지/시설포도 등 [화훼(1)] 장미 [특용(4)] 참깨, 들깨, 인삼, 오미자
조사 내용	농가 가구규모, 가구원 현황, 작목별 재배면적, 농업경영형태, 판매금액, 판매처, 전·겸업, 농업고용, 정보화기기 보유 등	[농산물생산비조사] 작물별 재배면적, 총수입, 수확량,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수도광열비, 기타 재료비, 자동차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노동비, 생산 관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기타비용,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고정/유동)	작목별 생산량, 수취단가, 부산물 평가액, 종자종묘비, 조성비, 비료비, 농약비, 수도광열비, 대농기구/시설상각비, 수리유지비, 기타재료비, 기타비용, 임차료, 노동비(자가/고용/위탁), 자본용역비(토지/고정/유동)
조사 체계	통계청⇄지방통계청⇄농가	통계청⇄지방통계청⇄농가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농가

구분	농림어업조사(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	농산물소득조사(농촌진흥청)
조사 방법	**방문면접조사+ 인터넷조사**	**조사표(일계부) 기록+ 방문면접조사**	**경영기록장 기록조사+ 소득조사표 면접조사**
모집단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표본 규모	**총 49,087농가**	**[농산물(5)] 총 1,530농가**	**전국조사 기준 4,176농가 (지역조사 포함 총 5,300농가)**
조사 횟수	1회+@(재방문)	월평균 2회 이상 방문	영농단계 고려 평균 5회
목표 CV	1.5~6.5%	3% 이내	10% 이내

자료: 농촌진흥청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의 조사관련 예산편성 단가 등을 비교해보면, 조사인력 인건비의 경우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는 조사를 실시하는 일(日) 단위로 인건비를 산출하는 반면,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는 12개월 연중고용(퇴직금 1개월 추가)하고, 조사를 위한 12개월분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음. 또한 농가사례비의 경우 통계청은 1인당 3만원이나, 농촌진흥청은 농가당 4만원씩 5회, 총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2025년 세부내역별 예산산출내역 일부 발췌]

○ 일용임금(110-04) 중
- 관리자수당 : 총관리자 83,280원 × 266명 ×**26일** = 575,964천원
  조사관리자 : 83,280원 × 2,572명 × **26일** = 5,569,100천원

○ 일반수용비(110-04) 도급조사원 인건비 중
- 조사원 80,240원 × 23,100명 × **19일** =35,217,336천원
- 예비조사원 80,240원 × 2,310명 × **2일** = 370,709천원
- 조사원 교통지원비 **6,000원** × 23,100명 × **19일** = 2,633,4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중
- 총관리자 83,280원 × 266명 ×**26일** ×11.22% = 64,623천원
- 조사관리자 83,280원 × 2,572명 × **26일** ×11.22% = 624,853천원
- 업무보조원 80,240원 × 337명 × **28일** ×11.22% = 84,952천원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사업 2024년 세부내역별 예산산출근거]

○ 농산물소득조사분석 : 3,251백만원
가. 농가사례비(1,060백만원)
· 경영기록 조사농가 : **40,000원×5회**×5,300농가=1,060백만원
나. 조사여비(784백만원)
· 기록농가 조사여비 : **20,000원**×4회×5,300농가=424백만원

· 보완조사여비 : 150,000원×2회×1,200지역=360백만원
다. 조사인건비(1,299백만원)
· 인건비 : 44명×2,271천원×**12개월**=1,199백만원
· 퇴직금 : 44명×2,271천원×**1개월**=100백만원
라. 사무관리비(108백만원)
· 운영비 : 9개소×1,000천원×**12개월**=108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림어업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비해 농산물소득조사는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에서 작목수 및 조사항목이 다양하고 세부적이며, 조사방법 또한 경영기록장 기록조사 및 소득조사표 면접조사를 병행하며, 표본규모가 크다는 점 등에서 조사분석 인건비(퇴직금)·농가사례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통계청에 비해 다소 높게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①최근 통계청은 인터넷조사율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에서 조사인력을 2,000명 감축한 점,[11] ②경영(영농)기록장 작성은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사항이고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초 제출자료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주조사를 하고 면접조사 횟수를 줄이는 방안, ③경영(영농)기록장 및 소득조사표 항목의 단순화 및 도식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④모바일 경영(영농)기록장과 관련 어플리케이션 활용시 사례금 등으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⑤통계청에서 수행한 농림어업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항목과 유사한 내용에 대한 별도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촌진흥청은 이를 통해 조사인력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1) 통계청은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예산액 산출시 행정자료 현장확인 소요를 반영하되, 전(前)주기 인터넷조사율(7.5%, 20만 가구)을 고려하여 조사인력을 2천명 축소하였음.(통계청 2025년 예산안 설명자료 Ⅱ-1, p.4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5. 고객현장지원: 일반회계로 적정 계상 필요

가. 개　요

‘고객현장지원’ 은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기술 종합민원 처리를 위한 콜센터 및 농업현장 기술지원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억 5,700만원 중 12억 9,200만원 집행(집행률 95.2%)되었고,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4년도 고객현장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객현장지원	1,357	1,357	-	-	1,357	1,292	-	65	1,28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고객현장지원’ 예산은 민원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일반회계성 사업이고 사업분류코드 또한 행정지원 프로그램(7100)에 해당하여 농촌진흥청 기관고유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특회계 구조개선계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적정 계상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이 편성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계정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13)]에 따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 출자 · 보조 · 출연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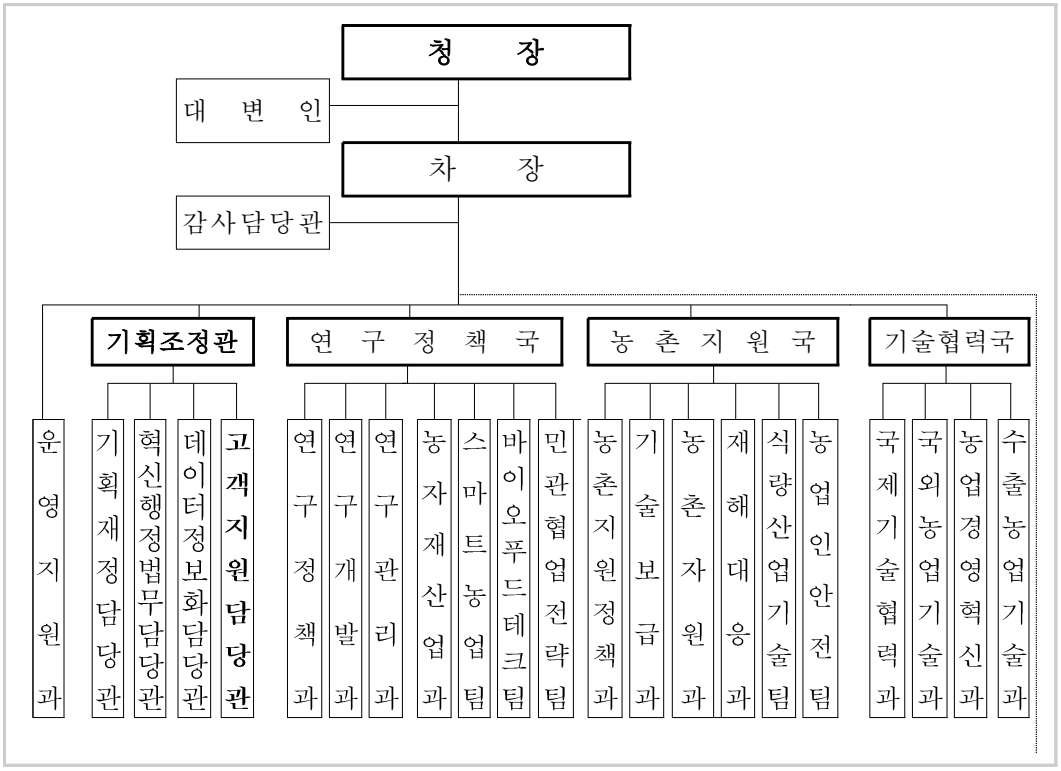
12)농어촌구조개선회계-고객현장지원(7136-300)(고객지원담당관실)

1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융자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이 농업 기술관련 상담 등을 위한 콜센터 및 고객·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농특회계구조개선계정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민원콜센터, 농업현장기술지원 등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인 점, 사업분류코드 또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코드(7100)인 점 고려시, 농특회계에 부합하는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로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임.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 직제 현황]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 출자 · 보조 · 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농촌진흥청에 대해 시정요구 10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4건·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4	6	-	10
합계	-	-	-	4	6	-	10

농촌진흥청은 시정요구사항 10건에 대해 9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0.0%)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0	9	90.0	1
합계	10	9	90.0	1

산림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89억 7,700만원(△10.7%)이 적은 4,072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 3,800만원(8.1%)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20,338	420,338	376,627	△43,711	456,242	456,242	407,265	△48,977	30,638
총수입	420,338	420,338	376,627	△43,711	456,242	456,242	407,265	△48,977	30,638

문의 : 강영옥 예산결산조사관 kang052@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36억 4,500만원(△1.7%)이 적은 2조 5,689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 5,600만원(1.3%)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483,663	2,483,663	2,536,590	52,927	2,612,591	2,612,591	2,568,946	△43,645	32,356
총지출	2,483,663	2,483,663	2,536,590	52,927	2,612,591	2,612,591	2,568,946	△43,645	32,356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1,565억 4,400만원으로, 1조 2,430억 4,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1,179억 3,600만원이 수납(수납률 89.9%)되고 1,240억 500만원은 미수납되어 11억 7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97,004	97,004	-	97,004	151,465	105,920	44,438	1,10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86,698	986,698	-	986,698	998,934	926,903	72,031	-
- 임업진흥사업계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2,024	2,024	-	-
- 투자계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8,997	3,426	5,571	-
- 지역자율계정	-	-	-	-	8,858	3,331	5,527	-
- 지역지원계정	-	-	-	-	61	61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65	21	44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13	13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842	72,842	-	72,842	81,628	79,663	1,965	-
- 손익계정	36,315	36,315	-	36,315	40,899	38,934	1,965	-
- 자본계정	36,527	36,527	-	36,527	40,729	40,729	-	-
합 계	1,156,544	1,156,544	-	1,156,544	1,243,048	1,117,936	124,005	1,107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6,489억 4,700만원으로, 3조 5,166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4%)되고 744억 2,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78억 7,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2,144,531	2,144,531	50,116	50,812 △50,812	-	2,194,647	2,153,966	20,196	20,48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86,698	986,698	9,295	4,065 △4,065	-	995,993	918,370	46,692	30,931
- 임업진흥사업계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 투자계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76,292	376,292	597	320 △320	-	376,889	371,260	1,076	4,553
- 지역지원계정	167,369	167,369	-	-	-	167,369	167,369	-	-
- 지역자율계정	199,313	199,313	597	320 △320	-	199,910	194,281	1,076	4,553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538	3,538	-	-	-	3,538	3,538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6,072	6,072	-	-	-	6,072	6,072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842	72,842	7,790	1,596 △810	-	81,418	73,048	6,461	1,909
- 손익계정	36,315	36,315	-	1,596 △810	-	37,101	36,590	-	511
- 자본계정	36,527	36,527	7,790	-	-	44,317	36,458	6,461	1,398
합 계	3,580,363	3,580,363	67,798	56,793 △56,007		3,648,947	3,516,644	74,425	57,878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산림청 자산은 전년 대비 3,722억 800만원이 증가한 31조 6,753억 9,8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141억 7,7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178억 7,8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3,855억 8,0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22억 600만원 증가한 572억 7,800만원으로 유동부채 318억 8,8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400억 200만원이 증가한 31조 6,181억 2,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산림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조 824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 9,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1,184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7억 5,4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산림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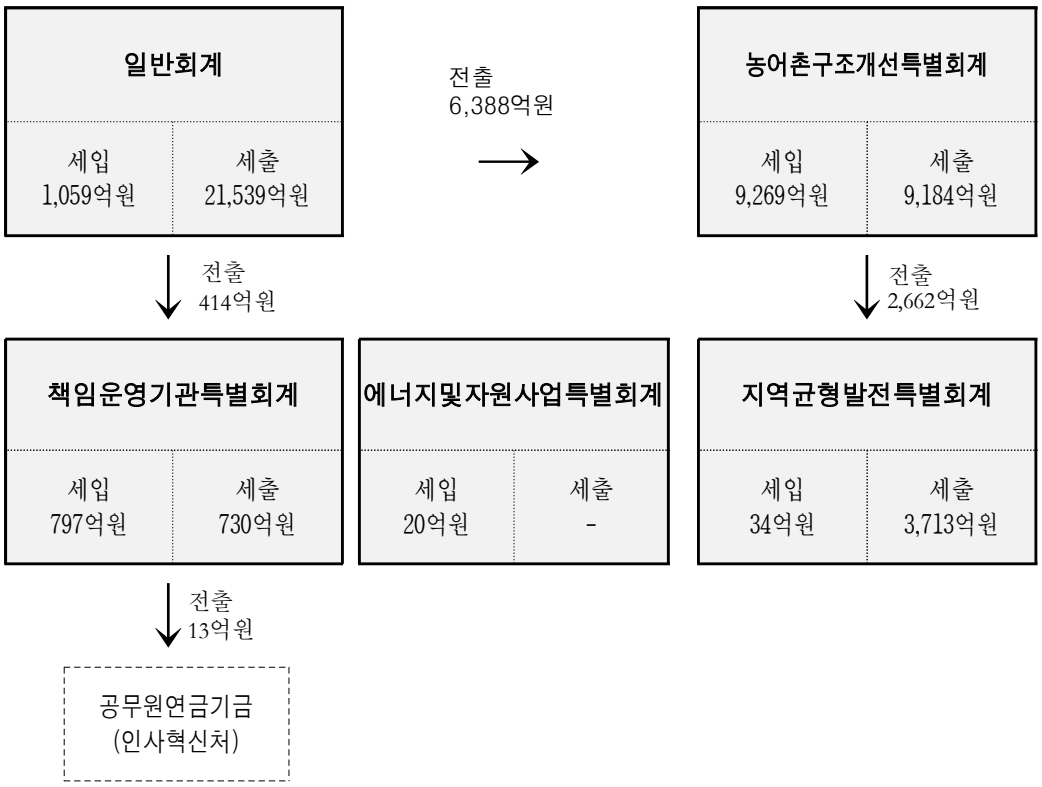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1,675,398	31,303,190	372,208	1.2
		유동자산	204,020	186,142	17,878	9.6
		투자자산	318,117	332,294	△14,177	△4.3
		일반유형자산	31,116,202	30,730,622	385,580	1.3
		무형자산	29,724	37,552	△7,828	△20.8
		기타비유동자산	7,335	16,580	△9,245	△55.8
	부 채		57,278	25,072	32,206	128.5
		유동부채	56,946	25,058	31,888	127.3
		장기차입부채	325	-	325	순증
		장기충당부채	-	5	△5	△100.0
		기타비유동부채	7	9	△2	△22.2
	순자산		31,618,120	31,278,118	340,002	1.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082,461	2,121,160	△38,699	△1.8
	재정운영순원가		2,118,595	2,160,383	△41,788	△1.9
	재정운영결과		2,118,445	2,160,199	△41,754	△1.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산림청 결산은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5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6,388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14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662억원이 전출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림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경제·사회·환경적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이용하며 임업을 육성함으로써 국토보전과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를 위하여 산림청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에너지및자원사업, 지역균형발전, 책임운영기관)에서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국제산림협력, 산림과학기술개발,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산림재난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산림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인해 세출사업 이월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세입산출 정확성 제고 뿐만 아니라 집행부진 및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실시하여 특별회계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ODA)과 외교부(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의 대상국가, 사업내용, 구체적 지원 내역 등이 유사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ODA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 및 검토가 필요하며,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내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세입재원 부족을 사유로 다음연도로 사업집행을 이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지불금 지급 대상자 산출 시 소규모임가 가구수 및 육림업 면적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지불금이 공익적 역할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임업 발전·탄소흡수·산림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수종에 대한 선택적지불제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및 세출사업 구조조정 필요

가. 개 요

2024년 산림청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계정) 세입예산액은 9,866억 9,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269억 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597억 9,500만원 적게 수납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계정)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예산액(A)	856,346	937,154	1,005,803	**986,698**	1,093,740
결산액(B)	933,105	1,112,230	1,030,386	**926,903**	-
증감(B-A)	76,759	175,076	24,583	**△59,795**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계정)의 주요 세입 실적을 살펴보면, 법정부담금(59-593)[2]은 2022년 2,664억 9,700만원, 2023년 2,068억 4,000만원, 2024년 2,009억

8,0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전년도 세계잉여금(89-893) 또한 2022년 750억 5,700만원, 2023년 1,792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2024년 세입예산액 97억 6,000만원 중 수납액은 56억 1,600만원(수납율 57.5%)으로 저조한 수납실적으로 보이고 있음.

이에 일반회계 전입금(91-911)이 2022년 6,465억 6,200만원, 2023년 5,698억 6,600만원, 2024년 6,388억 800만원, 2025년은 7,869억 6,700만원(예산액) 편성되는 등 세입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계정) 주요 세입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법정부담금(59-593)	266,497	206,840	230,496	230,496	200,980	87.2	219,728
전년도 세계잉여금(89-893)	75,057	179,220	9,760	9,760	5,616	57.5	13
일반회계 전입금(91-911)	646,562	569,866	638,808	638,808	638,808	100.0	786,96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한편 세입재원 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한 2024년 세부사업은 총 12개로써, 이월액 총액은 390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2024년 세입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사업코드)	예산현액	이월액
(1)숲가꾸기(1534-302)	251,610	7,878
(2)조림(1534-300)	125,525	2,035
(3)산림병해충방제(2335-300)	117,357	2,838
(4)임업기능인양성(1540-301)	15,075	1,586
(5)임산물수출촉진(1332-300)	7,419	1,096
(6)임업통계조사(7037-300)	5,700	630
(7)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1538-306)	61,984	19,546
(8)청정임산물이용증진(1535-300)	14,628	434
(9)임산물생산기반조성(1535-301)	49,569	151
(10)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1538-301)	12,431	1,264
(11)목재산업육성(1535-303)	32,264	404
(12)목재이용증진(1535-304)	8,826	1,158
합 계	702,388	**39,020**

자료: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8조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3] 일반회계 세수환경 어려움, 법정부담금의 지속적 감소 및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게 한 「국가재정법」 취지 등을 고려시, 안정적인 세입재원 발굴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 예산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고, 임업진흥에 직접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세입여건 하에서 특별회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 출>

2.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통합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산림재난 취약시기별로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피해예방 등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예찰·방제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산림분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61억 5,000만원 중 1,048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13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4년도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림재해일자리	107,050	107,050	-	241 △1,141	106,150	104,830	-	1,320	108,707
산림재해일자리(단기)	82,262	82,262	-	130 △779	81,613	78,081	-	1,053	83,56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816억 1,300만원 중 780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6%)되었음.

4) 일반회계-산림재해일자리(2331-301)(산림보호국)

나. 검토의견

산불 진화 업무의 중요성 및 생명과 관련된 안전사고발생 우려, 대형산불발생시 진화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산불재난에 전문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진화 역량을 제고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통합운영하는 등 산불대응 지휘체계의 유기적 연계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산림청 및 지자체 소속 진화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공중진화대(산림청 항공본부소속, 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방지대책사업(일반회계, 2332-300) 내 인건비편성, 공무직+기간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림재해일자리사업(일반회계, 2331-301) 내 인건비편성, 기간제) 등임.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내 험준한 산악지역 산불진화를 주로 수행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인건비가 편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내 중·저지대 산불 및 잔불 진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진화작업시에는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선발 및 채용 기간 내에 체력검증을 실시하지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대다수임(전체 9,446명 중 60대 이상이 7,071명, 74.9%).

산불 진화 업무의 중요성 및 생명과 관련된 안전사고발생 우려(금번 경북·경남·울산 산불 진화시 창녕군청 소속 예방진화대원 3명이 작업도중 사망)[5], 대형산불발생시 진화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산불재난에 전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진화 역량을 제고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산불 대응 지휘 체계의 유기적 연계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5) 평균 61세·최고령 81세…산불 최전선에 선 위험한 노인들(노컷뉴스, 2025.3.25.) /매년 산불 덩치 커지는데…진화대 95%는 비전문 인력인 현실(한겨레, 2025.4.2.) / 대형화 되는 산불…진화 인력 전문화 시급(KBS뉴스, 2025.4.2.)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현황]

구분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규모	104명 (공무원)	435명 (공무직 413, 기간제 22)	**9,604명 (국가 1,405, 지자체 8,199)**
신분	공무원(5~9급)	공무직, 기간제	**기간제**
운영 주체	국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국가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가 + 지자체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자체)**
운영 기간	연중(~정년)	연중(~정년)	**6개월(산불조심기간)**
주요 임무	산림내 험준한 산악지역 산불진화	산림내 험준지 또는 중·저지대 산불진화	**산림내 중·저지대 산불 및 잔불 진화**
보수 (처우 수준)	위험수당, 가족수당 지급, 출동수당 없음 (출장비 지급)	위험수당, 가족수당, 출동수당 없음 (출장비 지급)	**위험수당, 가족수당, 출동수당 없음**
자격 요건	임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요건 없음	**자격요건 없음**
교육 훈련	자체 직무교육 100시간 이수	산불방지 전문교육 10시간 이수	**산불방지 전문교육 10시간 이수**
체력 검증	실시시험(육상단거리, 중거리, 사낭나르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실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채용 및 운영지침'에 따라 체력검증(육상중거리, 사낭나르기, 호스끌어당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실시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선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자료: 산림청, 2025년 2월 정원 기준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별 연령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공중진화대	103	4	48	21	30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10	122	103	56	110	19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46	60	139	527	1,649	**7,071**

자료: 산림청(25년 2월 현원 기준)

3. 산림헬기 도입·운영: 국산헬기 도입의 적극추진 필요성 등

가. 개 요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은 산림재난(산불,산림병해충 등)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10억 3,900만원 중 941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2%)되고, 14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4년도 산림헬기 도입·운영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림헬기 도입・운영	112,344	112,344	5,740	2,766 △19,811	101,039	94,158	5,407	1,474	213,448
산림헬기도입・교체	72,500	72,500	-	△15,160	57,340	52,838	4,502	-	149,300
외주정비	13,629	13,629	1,057	△8,008	6,678	6,534	123	21	16,313
항공보험	5,400	5,400	-	△3,174	2,226	2,226	-	-	3,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산림헬기도입・교체’** 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725억이었으나 151억 6,000만원이 이・전용 또는 세목변경으로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2.8%인 528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음.

내역사업인 **‘외주정비’** 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136억 2,900만원이었으나 80억 800만원이 이・전용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47.9%인 65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음.

내역사업인 **‘항공보험’** 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54억원이었으나 31억 7,400만원이 이・전용 또는 세목변경으로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41.2%인 22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6)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산림항공본부)

산림헬기도입·교체, 외주정비 및 항공보험 예산의 타사업 또는 타목적으로의 과다한 이·전용이나 세목변경은 산불방지대책마련 및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산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헬기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주요 세부내역 사업인 산림헬기도입·교체, 외주정비, 항공보험 등의 재원을 타사업으로 이·전용 또는 타 목적으로 세목변경 하였음(산림헬기도입·교체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20.9%인 151억 6,000만원, 외주정비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58.8%인 80억 800만원, 항공보험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58.8%인 31억 7,400만원).

이에 대해 산림청은 외국산 대형헬기 도입시 집행될 수입부가세 연례적 이월(산림헬기 도입·교체), 러시아산 부품 수급 불가에 따른 사업집행 어려움(외주정비), 최저 낙찰가 적용(항공보험) 등의 사유로 당초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웠고, 산림병해충 등의 소요가 있어 사업비를 이전용 또는 세목변경 했다고 설명하나, 이는 금년 경북·경남·울산 산불(2025.3.21.~3.30.)과 같이 대형화되는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한 산림청의 사전준비대책이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2024년 산림헬기 도입·운영 주요 내역사업 이·전용 등 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A)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B)	이전용 등 비율(B/A)
산림헬기 도입·교체	72,500	-	△15,160	20.9
외주정비	13,629	1,057	△8,008	58.8
항공보험	5,400	-	△3,174	58.8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재작성

산림헬기 외주정비 예산의 실집행률 부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품수급 곤란 등 외국산 헬기 기종의 부품수급 및 정비를 위한 계약 및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음.

이러한 상황은 산림헬기의 노후화 뿐만 아니라 산림헬기 주력기종인 러시아산(KA-32)헬기 다수가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켜 헬기의 산불진화 능력 제고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7)]

7) 2025년의 경우 KA-32 헬기 예상 가동 중단 대수가 9대에 이르고 있음.

[KA-32헬기 가동중단 예측 및 현황]

(단위: 대)

구 분 (대, 누적)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예상 가동중단	8	8	8	8	8	8	8	9	14	14	14	14	15	15	15	15
실제 가동중단	**8**	**8**	**8**	**8**	-	-	-	-	-	-	-	-	-	-	-	-

주) 2025년 3월 기준
자료 : 산림청

참고로,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대외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산헬기 도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부대의견에서도 산림헬기의 외주정비 안정적 운용 및 향후 임차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헬기의 구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4. 산불방지대책: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사업비의 미집행 과다 등

가. 개 요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감시, 산불위험지관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57억 8,100만원 중 530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2%)되고, 19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4년도 산불방지대책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불방지대책	62,434	62,434	1,347	670 △8,670	55,781	53,086	729	1,966	101,499
산림재해드론활용	1,120	1,120	-	-	1,120	593	517	10	1,120
고정익항공기물탱크도입	8,000	8,000	-	△8,000	-	-	-	-	8,000
산불위험지관리	667	667	-	-	667	531	-	-	66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산림재해드론활용’**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감시 및 효율적인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1억 2,000만원 중 5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52.9%)되었음.

내역사업인 **‘고정익항공기물탱크도입’** 사업은 고정익항공기에 부착하는 물탱크를 도입하여 공중진화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80억원을 전액 불용하여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음.

내역사업인 **‘산불위험지관리’** 사업은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파쇄기지원, 위험지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6억 6,700만원 중 5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6%)되었음.

8)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산림재난통제관)

나. 검토의견

첫째, 산림재해드론 구입비 및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사업의 2024년 예산액 미집행액이 과다하였는데 이는 산림청의 관련 사업 계획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5년 추경에서 반영된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사업의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함.

동 사업 세부내역 중 산림재해드론 구입비(자산취득비 5억 2,000만원)의 대부분인 5억 1,700만원이 계약지연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점(집행액 300만원), 2024년 신규사업인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사업(80억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타 사업으로 이·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매년 산불이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 수립·집행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짐.

특히 2024년 신규로 편성되었던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사업은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서 물탱크를 장착할 군 수송기 및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부·공군 등과의 협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 국방부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연도별 산림재해드론(자산취득비 430-01)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년	4,435	4,435	-	**4,435**	**3,574**	**816**	45
2022년	520	520	816	**1,336**	**1,039**	**297**	-
2023년	520	520	297	**817**	**744**	**-**	73
2024년	520	520	-	**520**	**3**	**517**	-

자료: 산림청

[2024년 고정익항공기물탱크도입(자산취득비 430-01)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내역)	2024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이전용등)	실집행액 (B)	실집행율 (B/A)	이월액	불용액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8,000	-	- (△8,000)	-	-	-	-

자료: 산림청

금년 경북·경남·울산 산불(2025.3.21.~3.30.) 이후 대형화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예산이 다시 80억원 반영되었는데, 2025년에는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할 것임.

또한 산림청의 드론 보유 현황을 보면, 총 398개(2025.4월 기준)로 국내생산(47개, 전체 대비 11.8%) 및 중국산(348개, 전체 대비 87.4%), 미국·스위스·프랑스산(각 1대, 전체 대비 0.8%) 등이 존재함.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드론의 구입·부품 교체 및 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산불감시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로 도입하게 될 고성능 드론 구입 계획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드론 기술의 국산화 노력 및 제품과 부품 공급선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농촌진흥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과 산림청의 산불위험지관리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산림인접 영농지 구분이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장비 운영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부처간 사업일원화 추진을 검토하고, 산불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세부내역 중 각 지자체에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지원하는 '산불위험지관리(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 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률(지자체경상보조, 330-01)을 살펴보면, 매년 70~80%대의 낮은 사업집행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대해 산림청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집행이 저조했다고 설명함.

[연도별 산불위험지관리 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실집행액(집행률)	이월	불용
2021년	667	517(77.5)	-	150
2022년	667	563(84.4)	-	104
2023년	667	550(82.4)	-	117
2024년	667	531(79.6)	-	136

자료: 산림청

산불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일차적 목적이 산림청은 산불예방, 농촌진흥청은 병해충 발생경감

및 초미세먼지 저감으로 다르지만, 파쇄기 임차 및 인력지원 등의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산림인접 영농지 구분의 모호함 등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장비 운영,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을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일반농가는 자체적인 파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읍면단위 교육, 캠페인 등 지속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

[산림청의 산불위험지 관리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내용]

구 분	산림청 (산불위험지 관리사업)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목적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통한 산불예방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사업내용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 진화인력 등을 활용하여 작업)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전문 작업팀 운영)
지역	산림 100m 이내 인접 영농지	전국 영농지
사업연도	2016년부터 시작	2024년부터 시작
사업기간	6개월	5개월
예산(2024년)	468백만원	5,844백만원
사업실행	산불위험지역 11개 시·도 (파쇄기 100대/산불진화인력 13,000여명)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파쇄기 2,481대 / 파쇄인력 834명)

주) 농식품부는 파쇄기 구입 및 보급 사업 수행
자료: 산림청 및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작성

5. 국제산림협력 및 국제산림협력공적개발원조: 외교부 ODA사업과의 차별화 및 연계 필요성 등

가. 개 요

‘국제산림협력’ 사업과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국제협약 등에서 산림분야 주요 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 ODA 사업 확대로 글로벌 산림리더로서의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것임.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2024년도 예산현액 76억 5,700만원 중 75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9)]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은 2024년도 예산현액 265억 5,700만원 중 265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국제산림협력 및 국제산림협력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산림협력	7,657	7,657	-	46 △46	7,657	7,560	-	97	7,665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분담금	4,225	4,225	-	-	4,225	4,225	-	-	4,225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	200	200	-	-	200	196	-	4	200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	26,557	26,557	-	-	26,557	26,553	-	4	26,19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9) 일반회계-국제산림협력(1331-300)(국제산림협력관실)

10) 일반회계-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사업(ODA)(1331-301)(국제산림협력관실)

나. 검토의견

첫째, ‘아시아산림협력기구분담금’ 및 ‘한국형산림녹화프로그램확산’ 사업은 내용상 ODA 사업으로 편성·집행되었어야 하므로, 비ODA사업으로 예산편성된 동 세부내역들을 ODA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세부내역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11]분담금’ 및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 사업은 개도국 산림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사업(ODA)(1331-301)으로 편성되었어야함에도 비ODA사업인 국제산림협력(1331-300)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및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사업 주요 내용]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 사업내용: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술 및 정책을 구체화하여 아시아지역 내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기구 운영 - 회원국(15개국) : 대한민국,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타지키스탄 ○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사업 - 우수한 산림녹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사업

자료 : 산림청

산림청은 이에 대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분담금’ 사업비를 ODA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사업’ 사업은 ODA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 외교부 주관 ‘KOICA 글로벌연수사업’에 공모했으나(2024.10.) 미선정되어 2025년에 편성된 사업비 2억원을 정책교류 워크숍 등으로 집행하고, 차년도인 2026년에는 예산을 미편성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함.

‘아시아산림협력기구분담금’ 및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사업’은 내용적 측면에서 ODA사업이었음에도 그동안 비ODA사업으로 분류되어, ODA사업으로써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사업추진실적·성과 등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12]

---

11)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12)「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②시행기관은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

이에 산림청은 사업의 성격상 ODA 사업임에도 비ODA 사업에 편성하여 국가 ODA 사업 규모 및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ODA사업으로서의 심사절차 및 성과평가 등을 받지 않았던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ODA성격의 사업들은 ODA사업으로 이관·편성하고,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림청 일부 ODA사업은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므로, 사업 방향성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ODA 사업수행이 필요함.

대외무상협력(ODA) 사업의 총괄 부처는 외교부(수행기관:한국국제협력단, KOICA)임. KOICA에서는 다양한 분야(교육, 보건, 거버넌스, 농촌개발, 교통·에너지, 과학기술, 성평등 등 13개 분야)에 걸쳐 무상원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경영과 관련하여, 인프라·기자재 지원, 혼농임업 기술지원 및 산림조성 지원 등을 가치사슬(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전문가 파견 - 역량·기술 강화교육 - 사업모니터링 등 직접수행)로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교부(KOICA) 농촌개발 중기전략 주요 내용]

전략목표	주요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증대 및 시장성 강화	(농림수산업 생산성 강화 프로그램) -농림수산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 -영농 역량강화 교육·연구
	(농업 가치사슬 강화 프로그램) -농업조합강화 -유통(보관·가공·마케팅 등) 지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개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농촌소득 증대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 금융 접근성 개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생산체계 구축 및 자연자원 보전	(기후변화 대응 농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종자 개발·확산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지원
	(지속가능 산림경영 프로그램) -혼농임업 기술 지원, 산림 조성 지원

자료: 2024년 KOICA 대외무상협력 사업계획(2024.3)

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외교부(KOICA)에서 수행중인 기후변화 및 산림경영 관련 해외원조프로그램 예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4년 사업비)	사업내용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지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습지 생태계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 지원사업	15,600 (347)	훼손 산림·습지 생태계 복원 위한 계획 수립 및 장비지원, 생물다양성 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교육·연수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수립사업	11,500 (2,082)	맹그로브 숲 조림활동 및 역량강화센터 구축, 초청연수
몽골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13,000 (346)	폐광산지역 훼손지 지반침하방지 및 토양복원,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양묘장 설치 운영, 관련 기자재 지원
아세안 국가 대상 해외 온실간스 감축을 위한 산림 탄소 사업	1,000 (300)	탄소감축위한 현지 타당성 조사, REDD+ 사업개발, 현지 타당성 조사 실시 등
에디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복원 사업	14,520 (2,269)	산림·토지복원 위한 모니터링, 기술연수, 국가 측정·보고·검증 역량 강화
DR콩고 오트우렐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이니셔티브(REDD+)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사업	10,890 (2,600)	오트우엘레주의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위한 사업관리, 지역 내 산림 조정역량 강화, 농업 및 산림 그린인프라 조성
과테말라 GCF 서부고원지대 기후변화 복원력 강화사업	5,500 (20)	산림복원 시범사업 지원(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과테말라 키체주 농촌취약지역 기후회복력 강화사업	7,910 (2,904)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 및 기자재 지원 위한 산림복원 양묘장 구축, 토양(산림)복원 위한 기자재 지원

자료: 2024년 KOICA 대외무상협력 사업계획(2024.3)

산림청의 주요 사업은 토지황폐화·사막화 방지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혼농임업 생산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소득향상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교육 등인데, 이러한 사업내용들은 외교부(KOICA)가 수행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함.

[2024년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주요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사업비	사업내용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	2,300	맹그로브숲 조성 및 복원 관리,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운영, 주민소득증대 기반시설 구축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300	사막화방지 조림 및 기반시설구축, 사업지 관리 및 행정비용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	5,000	랜드마크 프로그램 사업 및 AFoCO 중점협력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사업비	사업내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기후복원력 강화(토고)	708	시어나무 조림 및 지역주민 소득향상 위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리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 이행	500	산림관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고용 등 행정비용
과테말라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 위한 산림복원 및 역량강화 사업	600	산림경관복원 및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생산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장비구축
온두라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력성 대책으로서 산림의 생산적 복원과 보전 촉진사업	522	프로젝트 관리,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생산시스템 구축 및 산림경관복원, 역량강화

자료: 산림청

이에 대해 산림청은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특성에 맞는 ODA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및 사업효과 확대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에서 사업의 심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두 부처의 ODA사업이 동일 국가에 동일 사업으로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외교부(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ODA) 사업의 대상국가·사업내용 및 지원 내역이 유사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외교부(KOICA)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간 연결고리인 가치사슬을 구성하여 영역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산림청 등 개별 부처는 부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영역에 대해서만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외교부 사업과 산림청 등 개별부처 사업들간의 방향성 및 사업간 세부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ODA 지원과제선정 및 현지에서의 사업운영시 부처(기관)간 정보공유 및 사업단계별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는 ODA 사업들이 사업수행 부처(기관)이 다르다는 사유로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수혜대상 차이 등이 발생하는 경우 ODA사업의 수행효과가 중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ODA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산림청 ODA사업이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내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산림생물다양성증진: 내역사업 정비를 통한 세부사업화 필요 등

가. 개 요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산림생물자원관리, 산림보호 예방·단속 등을 통해 산림의 생물의 다양성 확보·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54억 6,400만원 중 142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2%)되고, 4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4년도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림생물다양성증진	15,210	15,210	374	1,809 △1,929	15,464	14,258	478	728	15,828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교육지원	340	340	-	-	340	338	-	2	340
국가표준식물종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85	85	-	-	85	84	-	1	85
수목원 미래인재 양성사업	790	790	-	-	790	785	-	5	790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	-	-	-	-	-	-	-	-	380
국립산지생태원조성	1,700	1,700	-	1,579 △1,579	1,700	1,136	413	151	1,700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복원	100	100	-	-	100	32	-	68	100
산림보호단속선 운영	300	300	-	8	308	302	-	6	3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교육지원’**은 수목원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여 수목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4,000만원 중 3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3) 일반회계-산림생물다양성증진(1934-300)(산림보호국)

99.4%)되었음.

내역사업인 **‘국가표준식물종관리프로그램 운영·관리’**는 수목원 보유 식물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개발하기 위한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8,500만원 중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었음.

내역사업인 **‘수목원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수목원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수목원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7억 9,000만원 중 7억 8,500만원이 집행(99.3%)되었음.

내역사업인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는 전국 수목원이 보유한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구축·개방하여 학술적·산업적 활용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 내역사업임.

내역사업인 **‘국립산지생태원조성’**은 대형 산불피해지 관련 연구, 교육, 전시기능을 갖는 국가 거점 연구기관 설립으로 산림복원 및 지역주민 삶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7억원 중 11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8%)되었음.

내역사업인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복원’**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산림의 집단 고사지 복원을 위한 중장기 모니터링 및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억원 중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32.0%)되었음.

내역사업인 **‘산림보호단속선 운영’**은 도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 관리,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단속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800만원 중 3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동 세부사업에 속해 있는 내역사업의 개수가 과다하고 내역사업간의 연관성도 크지 않으므로, 사업관리의 효율화 및 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해 내역사업을 재분류하여 개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은 2025년 예산편성기준 1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별 연관성이 크지 않음에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의 내역사업 현황]

내역사업 및 주요내용
①산림보호단속선 운영 : 산림보호단속선의 원활한 운영으로 도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 관리,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산림재해 예방
②**산림보호구역 관리운영:**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 입간판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
③**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관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식생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분포조사 및 보호종(특별산림보호종, 희귀·특산식물)의 기능증진 사업 추진 등
④**전국사찰림실태조사**: 사찰 주변 산림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관리방안 및 향후 지속가능한 사찰림보전방안 제시
⑤**산림생태관리센터운영**: 산림생태관리센터 9개소 운영(관리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난방비, 사무용품 구입비, 차량임차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비 등)
⑥**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주변 생태 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유입현황조사 및 교란식물 제거사업)
⑦**기후변화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물종 개화 · 개엽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관측자료 구축 및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 증식을 통해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전
⑧**산림습원 보전사업**: 산림습원 발굴 · 평가, 환경 · 생물상 조사 및 모니터링, 경제적 가치평가 수행 등 산림습원 보전사업 추진
⑨**멸종위기 한국고유 침엽수보전 · 복원:**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의 생육 유형별 정밀조사 및 상호관계 분석으로 유지 · 갱신 · 쇠퇴 · 고사원인 구명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
⑩**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산림의 집단 고사지 복원을 위한 민관학 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중장기 모니터링 및 복원방안 마련
⑪**산림토양산성화조사**: 산림 환경보전을 위한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 구명 위해 전국 산림지역 토양 65개소, 강우 및 대기질(8개소) 모니터링
⑫**국립산지생태원조성**: 대형 산불피해지 관련 연구, 교육, 전시기능을 갖는 국가 거점 연구기관 설립으로 산림복원 및 지역주민 삶 회복에 기여
⑬**수목원교육프로그램선발 및 교육지원**: 수목원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 확산하고, 우수교육프로그램 · 교육기관 발굴 · 홍보 및 교육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선발 및 보급, 사업운영 경비 등)
⑭**국가표준식물종관리프로그램 운영**: 수목원 보유 식물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 개발하기 위한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점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⑮**국가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국가 희귀 · 특산식물의 수집 · 증식 및 안정적 중복보존 체계 구축
⑯**수목원 미래인재양성사업 :** 수목원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수목원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⑰**산림식물자원보전관리 :** 우리나라 중요 산림식물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보전 · 관리하기 위해 후계 · 보전원 조성
⑱**수목원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 :** 전국 수목원이 보유한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구축 · 개방하여 학술적 · 산업적 활용 제고
⑲**산림사범수사지원 :** 산림 내 발생하는 인위적 피해에 대한 엄정한 단속 및 사법처리 위해 산림특별사법관 운영, 산림사범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환경 개선, 숲사랑 시스템 운영 · 관리

자료: 산림청

특히 연번 ⑬의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교육지원, 연번 ⑭의 국가표준식물종 관리프로그램 운영·관리, 연번 ⑯의 수목원 미래인재 양성사업, 연번 ⑱의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 등은 수목원 관련 사업이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1934-300) 보다는 정원조성관리(1943-300)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편성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연번 ⑫의 국립산지생태원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96억원이고, 산불 관련 연구·교육 및 전시기능을 가진 국립 거점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특히 본격적 사업집행이 진행된 첫해인 2024년 예산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였고(예산액 17억원, 집행액 11억 3,600만원, 집행률 66.8%), 당초 민간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320-07)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산림청 직접 사업으로 비목을 변경하는 등 사업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립산지생태원조성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추경	이전용 등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국립산지생태원	**1,700**	**1,700**	**1,579 △1,579**	**1,700**	**1,136**	**413**	**151**	**1,700**
- 민간자본보조(320-07)	1,700	1,700	△1,579	121	121 [121]	-	-	-
- 실시설계비(420-02)	-	-	1,570	1,570	1,006	413	151	421
- 공사비(420-03)	-	-				-	-	1,117
- 감리비(420-04)	-	-				-	-	152
- 시설부대비(420-05)	-	-	9	9	9 [9]	-	-	1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둘째,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 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동 제련소의 산림훼손 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보호단속선운영사업의 경우 사업실적 및 성과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연번 ⑩의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사업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산림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억원 중 3,200만원만 집행되었음.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을 위해 민·관·학 위원회가 구성된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위원회는 단 8회 개최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피해지역의 안정적 식생 도입여부 판단을 위한 식생적응력 조사사업 및 모니터링을 사유로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산림청은 2019년 이후 매년 민·관·학 공동위원회 개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산림복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목표 달성이 지연되었음.

따라서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동 제련소의 산림훼손 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위한 민·관·학 공동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날짜	주요 내용 및 안건
2018.02.28.	· 제1차 석포 산림피해지 복원 대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용역과제 과업 지시서 검토
2018.09.04	· 제2차 석포 산림피해지 복원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 식생 · 대기 · 토양 등 조사범위 및 측정지점 등 논의
2018.10.24.	· 제3차 석포지역 산림피해조사 자문위원회 * 용역 추진계획 보고, 조사지점 및 대조구 설정 등 논의
2019.04.15.	· 제4차 석포 산림피해지 복원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 식생 · 대기 · 토양 조사 진행결과 보고 및 자문
2019.06.27.	· 제5차 석포 산림피해지 복원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현장토론회 개최 * 식생도 · 오염물질분포도 · 대기오염 측정결과 · 토양오염 측정 결과 등 진행 상황보고
2019.09.04.	· 제6차 석포 산림피해지 복원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 토양 · 식생 · 대기오염도 분석 결과 공유 및 복원방향 제시
2019.12.03.	· 제7차 석포 산림피해지 복원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 토양 · 식생 · 대기오염도 분석 결과 공유
2022.05.17.	· 2022년 석포 산림피해지 식생적응력조사 사업을 위한 현장토론회

자료: 산림청

한편, 연번 ①의 산림보호단속선운영사업의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3개 선박의 총 운행현황은 68건으로 월평균 5.7회, 선박당 월 1.9회에 불과하며, 단속실적 또한 2021년~2023년은 전무하고 2024년은 1건에 그치고 있음.

산림청은 이렇듯 연례적으로 ‘산림보호단속선운영’의 사업실적 및 성과가 매우 저

조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업 목적(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산림재해 예방)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림보호단속선 운행 및 단속 현황]

(단위: 회, 건)

선박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월
합 계	운행현황(회)	31	28	34	68	12
	단속내역(건)	-	-	-	1	-
북부청(춘천) (2010년 제조)	운행현황(회)	9	4	7	9	-
	단속내역(건)	-	-	-	1	-
중부청(충주) (2010년 제조)	운행현황(회)	22	16	15	23	7
	단속내역(건)	-	-	-	-	-
서부청(영암) (2022년 제조)	운행현황(회)	-	8	12	36	5
	단속내역(건)	-	-	-	-	-

자료: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계정)】

<세 출>

7. 조림: 경제적 이익과 산불방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등

가. 개 요

‘조림’ 은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55억 2,500만원 중 1,159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3%)되고, 81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4년도 조림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림	117,281	117,281	8,244	512 △512	125,525	115,911	8,146	1,468	107,722
경제림조성	48,398	48,398		217 △217	48,398	45,250	1,750	977	51,996
산불피해지복구조림	12,000	12,000	-	-	12,000	7,609	-	-	3,330
K-포레스트관건립	4,200	4,200	8,244		12,444	6,332	6,111	-	4,96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경제림조성’** 은 목재·바이오매스 등 산업용목재 공급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483억 9,800만원 중 452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5%)되었음.

내역사업인 **‘산불피해지복구조림’** 은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20억원 중 76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63.4%)되었음.

내역사업인 **‘K-포레스트관건립’** 은 첨단 산림사업의 체험 및 홍보관을 건립하는

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조림(1534-300)(산림산업정책국)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24억 4,400만원 중 63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9%)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산림청은 금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조림 사업 수종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제적 이익 및 산불 방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년 경북·경남·울산 산불(2025.3.21.~3.30.)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발생된 산불 확산 및 피해가 컸던 주요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정유(기름) 함유량이 높은 침엽수가 연료 역할을 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15)]

최근 10년간 경제림 조성의 연도별 주요 수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종 비율은 각각 55.7%와 44.3%였으나, 2024년에는 침엽수와 활엽수 수종 비율이 각각 62.2%와 37.8%로 나타나는 등 송이 및 목재 채취, 관리 편의성 등 경제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침엽수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산림청은 산불저항성이 높은 활엽수종으로 내화수림대(대형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산불에 강한 숲)를 조성하고, 중요시설 등 보호를 위해 산림방화선 및 완충지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특히 침엽수가 휘발성 물질 함유량이 높고 사철 잎이 달려 있어 산불이 번질 위험이 높아 산불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므로 침엽수 조림을 줄이고 활엽수 식재 비중을 높이자는 의견과, 침엽수가 생존율이 높고 척박하고 경사가 심한 산지에서도 생존력이 뛰어나며, 송이 생산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수종이라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산림청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공포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고, 내화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키는 효과적인 조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15)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러다 산불 키운다…가만뒀더니 오히려 살아난 숲 [지구, 뭐래?](헤럴드경제, 2025. 5. 22.) / ‘불쏘시개’ 침엽수 위주 숲가꾸기 사업, 산림청은 왜 귀닫고 있나(경향신문, 2025.3.30.) /침엽수림 산불 피해, 활엽수 섞인 숲의 1.5배(세계일보, 2025.5.21.) / “이 마을만 불이 비껴갔다” …혼합림이 지켜낸 주왕산(한국경제, 2025.5.23.) 등

[최근 10년간 경제림 조성 연도별 수종 현황]

(단위: ha)

연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218,367**	**23,178**	**23,919**	**23,673**	**23,089**	**23,413**	**23,170**	**20,599**	**19,169**	**21,114**	**17,043**
○ 침엽수	**133,339 (61.1%)**	**12,925 (55.7%)**	**13,355 (55.8%)**	**14,561 (61.5%)**	**14,584 (63.1%)**	**14,543 (62.1%)**	**14,620 (63.1%)**	**12,626 (61.3%)**	**12,073 (63.0%)**	**13,451 (63.7%)**	**10,601 (62.2%)**
소나무	37,379	5,341	4,873	4,459	3,587	3,984	3,947	2,715	2,302	3,504	2,667
편백	47,190	4,597	4,570	5,362	5,746	4,957	5,085	4,532	4,092	4,606	3,643
낙엽송	39,351	1,332	2,598	3,864	4,206	4,559	4,711	4,721	4,932	4,554	3,874
잣나무	2,979	647	513	301	293	288	240	188	187	222	100
해송	1,888	265	280	291	296	197	199	146	81	82	51
침엽수기타	4,552	743	521	284	456	558	438	324	479	483	266
○ 활엽수	**85,028 (38.9%)**	**10,253 (44.3%)**	**10,564 (44.2%)**	**9,112 (38.5%)**	**8,505 (36.9%)**	**8,870 (37.9%)**	**8,550 (36.9%)**	**7,973 (38.7%)**	**7,096 (37.0%)**	**7,663 (36.3%)**	**6,442 (37.8%)**
상수리나무	11,782	1,540	1,275	1,345	1,088	1,431	1,032	1,054	962	1,131	924
백합나무	15,668	2,115	2,074	1,642	1,520	2,040	1,449	1,239	1,167	1,084	1,338
자작나무	11,655	1,169	1,339	1,077	1,040	1,134	1,540	1,302	928	1,216	910
헛개나무	5,411	696	734	619	515	510	477	460	495	489	416
활엽수기타	40,512	4,733	5,142	4,429	4,342	3,755	4,052	3,918	3,544	3,743	2,854

자료: 산림청

둘째, ‘산불피해지복구조림’과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은 농특회계의 임업진흥 및 조림사업과 연관성이 낮고, 완공 후 일반회계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로의 이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부내역중 ‘산불피해지복구조림’ 사업과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 사업기간 2021년-2025년, 총사업비 214억원)은 연례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함.

‘산불피해지복구조림’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현액 88억 3,500만원 중 54억 9,100만원(집행률 62.2%), 2022년 83억 7,800만원 중 47억 9,600만원(집행률 57.2%), 2023년 291억 3,000만원 중 193억 4,300만원(집행률 66.4%), 2024년 120억원 중 76억 900만원(집행률 63.4%)의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보여주고 있음.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의 경우, 2022년 추경을 통해 당초 예산액 99억 7,700만원에서 25억 7,7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집행액이 6억 8,000만원(집행률 22.4%)에 불

과하였고, 2023년 예산현액 122억 4,200만원 중 28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23.2%)되었으며, 2024년 124억 4,400만원 중 63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9%)되었음.

[연도별 산불피해지복구조림사업과 K-포레스트관건립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년	산불피해지복구조림	8,835	8,835	-	**8,835**	**5,491 (62.2%)**	-	-
	K-포레스트관건립	943	943	-	**943**	**477 (50.6%)**	461	5
2022년	산불피해지복구조림	8,378	8,378	-	**8,378**	**4,769 (56.9%)**	-	-
	K-포레스트관건립	9,977	2,577	461	**3,038**	**680 (22.4%)**	2,265	93
2023년	산불피해지복구조림	29,130	29,130	-	**29,130**	**19,343 (66.4%)**	-	
	K-포레스트관건립	9,977	9,977	2,265	**12,242**	**2,836 (23.2%)**	8,244	1,162
2024년	산불피해지복구조림	12,000	12,000	-	**12,000**	**7,609 (63.4%)**	-	-
	K-포레스트관건립	4,200	4,200	8,244	**12,444**	**6,332 (50.9%)**	6,111	-

자료: 산림청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불피해지복구조림'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추경 편성 등 재원마련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고,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의 경우 사전행정절차 및 동절기 공사 순연 등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산불피해지가 신속히 복구되지 않아 산사태·병해충 등 또다른 산림재난에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산림청은 지자체 등을 독려하여 사업을 조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자체 재원이 확보되는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교부금을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은 산림에 나무를 식재하는 조림사업과 연관성이 높지 않고, 총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 용도인 임업진흥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16], 건축물 완공 이후 건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① (생 략)

축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세부사업화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 · 보조 · 출연 ·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8.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산출 정확성 제고 및 공익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은 산림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619억 8,400만원 중 419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7%)되고, 195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61,984	61,984	-	93 △93	61,984	41,972	19,546	466	57,580
직접지불금 지급	54,447	54,447	-	-	54,447	35,680	18,767	-	51,715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4,604	4,604	-	93 △93	4,604	4,150	-	454	4,649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933	2,933	-	-	2,933	2,142	779	12	1,21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세입재원 부족을 사유로 다음연도로 사업집행을 이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18)] 및 제12조[19)]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및 면적

1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1538-306)(산림산업정책국)

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유형]

구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소규모임가	면적	
정의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등을 생산하는 임업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지급 대상자	〈❶소규모임가, ❷면적〉 ① 직전1년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②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 ③ 농촌(산지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자 또는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① 직전1년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 종사 ②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 必 ③ 농촌(산지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❶소규모임가〉 ①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1~0.5ha 이하 ②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소유산지의 합 1.55ha 미만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 영농종사·농촌거주 3년이상 ④ 임가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⑤ 임가내 모든 구성원 농외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 ⑥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어느 하나 미충족시 면적직불금 신청 또는 지급		
지급 면적	0.1ha 이상~0.5ha이하	0.1ha이상~30ha이하 (농업법인 5ha이상~50ha 이하)	3ha이상~30ha이하 (농업법인 10ha이상~50ha 이하)
지급 단가 (ha당)	130만원/임가	① 0.1ha이상~2ha이하 : 94만원 ② 2ha초과~6ha이하 : 82만원 ③ 6ha초과 : 70만원	① 3ha이상~10ha이하 : 62만원 ② 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 ③ 20ha초과 : 32만원

자료: 산림청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임업지불금은 법률에 의해 국가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의무지출임에도 산림청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계정) 세입부족으로 인해 세출예산 187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음.

---

18)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은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19)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산림청장은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도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46,809	46,802	-	7
2023	46,809	46,809	-	-
2024	54,447	35,680	**18,767**	-

자료: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부족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의 우선순위 설정시, 재량사업이나 사업이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에 비해 법률에 의해 집행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으며, 동 지불금이 영세 임가의 생계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임.

둘째, 산림청은 지불금 지급 대상자 산출 시 소규모임가 가구수 및 육림업 면적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사업비 과다·과소 문제 및 전년도 부족분 지급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연도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유형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22년의 경우 임산물 생산업(소규모임가와 면적)과 육림업 대상자 산출추계와 실제 지급대상자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제도 시행 3년차인 2024년에는 지급대상자 산출과 실제 집행내역의 차이가 줄어들었음.

다만 수급자격이 되는 소규모임가 가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육림업 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4년 소규모임가에 대한 지불금 산출추계가 과다하였고, 육림업의 경우 과소추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소규모임가 대상 지불금은 216가구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차이가 발생하였고, 2023년 이후 육림업 대상 지불금은 전년도부족액이 매년 발생하여 다음연도 사업비로 지급하게 되었음.

이렇게 전년도부족 사업비를 다음연도 사업비로 지출하게 될 경우, 차년도 세출사업 또한 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비 이월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충분한 재원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등이 우려되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전년도 부족분 지급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연도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대상 가구수 및 면적의 산출근거와 실제집행 비교]

(단위: 가구수, ha)

연도	직불금 유형		산출근거 (A)	실제집행 (B)	차이 (B-A)	감소사유
2022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가구)	5,022	636	**△4,386**	제도시행을 앞두고 농림어업총조사 및 임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급대상자를 추계하였으나, 실제집행시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에 차이 발생
		면적(ha)	37,980	45,808	**7,828**	
	육림업(ha)		14,000	10,793	**△3,207**	농림어업총조사 및 임업경영체 등록현황을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급대상자를 추계하였으나, 실제 집행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급대상자 감소
2023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가구)	5,022	596	**118**	
		전년도부족액 (2024년 예산)	△4,308			
		면적(ha)	37,980	48,120	**△34**	-
		전년도부족액 (2024년예산)	**10,106**			
	육림업(ha)		14,000	14,022	**428**	2022년과 동일하게 2023년 예산편성 하였으며, 2024년 예산에 전년도 부족액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집행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급대상자 감소
	전년도부족액(육림업) (2024년예산)		**450**			
2024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가구)	714	498	**216**	2023년 등록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급대상자 감소
		면적(ha)	48,086	48,120	**△197**	-
	육림업(ha)		14,450	16,404	**△142**	-
	전년도 부족액(육림업) (2025년예산)		**1,812**			
2025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가구)	714	-	**-**	-
		면적(ha)	48,086	-	**-**	-
	육림업(ha)		8,381	-	**-**	-
	전년도 부족액(육림업) (2025년예산)		**1,05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셋째, 산림청은 공익직접지불제가 임업인 소득안정뿐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임업 발전·탄소흡수·산림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수종에 대한 선택적지불제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소규모임가 및 면적직불, 육림업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게 소득안정 목적으로 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산림을 이용해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직불금지급단가가 임가당 13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산림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육림업의 경우 직불금지급단가가 최고 62만원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대상 유형 및 단가]

지급유형		지급단가	지급 조건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	130만원/임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등을 생산하는 임업
	면적	0.1ha이상~2ha이하 94만원	
		2ha초과~6ha이하 82만원	
		6ha초과 70만원	
육림업		3ha이상~10ha이하 62만원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10ha초과~20ha이하 47만원	
		20ha초과 70만원	

자료: 산림청

또한 동 사업의 성과지표 또한 ‘임업직불금 수혜율’ 및 ‘지급대상 등록면적’ 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기능만을 강조하고 있고,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는 없음.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임업직불금 수혜율 (%)	목표	-	신규	신규	80	80	2023년 수혜율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	[금년 임업직불금 수혜자/금년 임업직불금 신청자]×100	지자체 실적보고서
	실적	-	81	79	86	-			
	달성도	-	-	-	108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등록면적 (ha)	목표	-	신규	신규	신규	63,500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등록 면적	지자체 실적보고서
	실적	-	56,840	62,354	64,791	-			
	달성도	-	-	-	-	-			

자료: 산림청

농식품부에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의 경우, 소규모농가 및 면적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이외에 친환경농업 및 전략작물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선택형 공익직접직불금’ 으로 구분되어 직불금이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공익”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농식품부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세부 내역]

유형	세부내역	주요내용
기본형 공익직접 직불[20]	소규모농가 직접직불금(정액)	0.1ha-0.5ha 이하 소규모농가에 정액 지급('24년 기준 130만원)
	면적 직접직불금(역진적)	0.5ha 초과 농가에 지역 및 면적에 따른 역진적 지급
선택형 공익직접 직불[2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 감소분 보전
	전략작물 직접지불제도[22]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시 지급

자료: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2024.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청이 수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제도가 2025년도에는 시행 4년차가 되어 초기 제도정착은 어느정도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농식품부 사례와 같이 공익직접

20)「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21)「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지불제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업 발전·탄소흡수·산림보호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는 전략수종에 대한 선택적지불제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이행점검 항목을 재정비하여 국고가 부정수급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검토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0~80%로 저조함(2022년 65.2%, 2023년 70.5%, 2024년 81.5%).

[연도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2022년	982	640	-	342	**65.2**	조사위원회 운영비 및 전산입력보조원 관련 예산 미집행 및 인건비 집행부진
2023년	1,051	741	-	310	**70.5**	
2024년	1,363	1,112	-	251	**81.5**	

자료: 산림청

이에 대해 산림청은 각 지자체별 조사위원회 운영비 및 인건비의 미집행을 주된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실제로 지자체의 전산입력보조인력 채용기간을 예산편성시에는 4개월로 산정했으나, 실제 채용기간은 평균 1.4개월로 계획 대비 짧은 점[23] 등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의 1%가 준수사항위반으로 직불금 수급액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항목에서의 위반행위가 가장 많았음. 또한 고위험군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결과 점검대상 5,334명 중 10.7%에 해당하는 비율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2024.11.)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수급 준수사항 위반 건수]

(단위: 건수)

준수사항		2020	2021	2022	2023	2024
위반건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11,938**	**14,228**	**7,549**	**5,254**	**7,691**
	-교육 이수	-	-	2,703	3,929	4,602
	-농약 사용기준	219	380	477	524	632
	-마을공동체 활동	-	-	778	221	1,464
	-기타 타법 위반	55	50	53	62	100
	17개 준수사항 합계	12,212	14,658	11,560	9,990	14,489
지급대상자수 대비 비율(%)		**1.1%**	**1.5%**	**1.0%**	**0.7%**	**1.1%**
감액 금액(억원)		49	35	21	17	25

자료: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기능증진직불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결과]

○ (점검대상)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약 5만명
○ (점검기간) 2023.5.30~10.6 / (점검방법) 합동(농관원-지자체) 및 자체(지자체) 점검
○ (점검결과) 5,334명(착오 신청 5,179, 실경작 위반 155) 부적합
* 착오 신청자는 2023년 신청등록 취소, 실경작 위반자는 3~5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

(단위: 건)

구분	점검 대상	적합	부적합			기타
			합계	착오신청	실경작위반	
합계	49,949 (100.0%)	41,774 (83.7%)	5,334 **(10.7%)**	5,179 -	155 -	2,801 (5.6%)
자체점검	47,500	40,141	4,520	4,441	66	2,799
합동점검	2,449	1,633	814	725	89	2

- (착오 신청) 이장 등을 통해 신청하여 경작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되어 신청 등
- (기타) 사망, 경영체 삭제, 자격요건 미충족(0.1ha 미만 등), 농지 소유권 변동 등

자료: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2024.11.),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추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행항목 준수율이 99.6%이며, 미준수 건수가 많은 항목이 산지형상 유지(3건)가 아닌, 대부분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미이수(189건)이라는 점 등에서 농식품부의 직불금 이행점검 조사결과와 차이점이 있으며, 산림청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부

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항목별 이행점검 결과]

(단위: 건수)

준 수 사 항		담당기관	계	준수	미준수
합 계			79,636	79,354(99.6%)	282
공통사항	소 계		72,148	71,904	244
	① 산림형상 유지	**지방청**	**4,004**	**4,001**	**3**
	②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이수	**지자체**	**19,829**	**19,640**	**189**
	③ 비료보관	지자체	4,635	4,635	-
	④ 농약 분뇨 배출금지	지자체	4,635	4,635	-
	⑤ 하천 사용관리	지자체	4,635	4,635	-
	⑥ 지하수 이용	지자체	4,635	4,635	-
	⑦ 퇴비액비 기준	지자체	4,635	4,635	-
	⑧ 생태교란 생물 수입금지	지자체	4,635	4,635	-
	⑨ 방제대상 병해충 신고	지자체	4,620	4,620	-
	⑩ 폐기물관리	지방청	4,003	4,003	-
	⑪ 경영정보 변경	지방청	4,004	3,994	10
	⑫ 영림기록 작성	지방청	4,004	3,997	7
	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지방청	3,874	3,839	35
임산물생산업	소 계		6,878	6,844	34
	① 농약 안전기준(생산단계)	지방청	1,143	1,109	34
	② 농약 안전기준(유통 단계)	지자체	3,654	3,654	-
	③ 비료사용기준	지방청	1,133	1,133	-
	④ 임산물 출하제한 및 폐기	지방청	948	948	-
육림업	소 계		610	606	4
	① 산림자원 관리	지자체	401	401	-
	② 임목유지	지방청	209	205	4

자료: 산림청, 2024년 11월말 기준

산림청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는 정당한 지불금 수급권을 가진 임업인이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고가 부정수급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

이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을 강화하고 이행점검 항목을 합리화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지불금 사업이 임업인의 소득안정기능과 산림기능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24]

24)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익기능증진관련 교육이수' 및 '마을 공동체참여'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9. 목재산업육성: 내역사업 구조조정 및 목재펠릿 보일러보급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목재산업육성’ 은 목재산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목재산업 활성화,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 사업, 목재에너지림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322억 6,400만원 중 316억 4,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4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4년도 목재산업육성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목재산업육성	32,264	32,264	-	235 △235	32,264	31,649	404	211	12,280
국산목재 활용촉진	1,000	1,000	-	-	1,000	1,000	-	-	1,000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480	480	-	-	480	480	-	-	-
목재산업단지조성	1,000	1,000	-	-	1,000	1,000	-	-	-
목재제품 시장조사	100	100	-	-	100	90	10	-	100
목재친화도시 조성	6,938	6,938	-	△40	6,898	6,897	-	1	6,945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11,550	11,550	-	-	11,550	11,400	150	-	-
친환경목조전망대조성	3,500	3,500	-	-	3,500	3,500	-	-	-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	4,060	4,060	-	-	4,060	4,060	-	-	1,572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1,000	1,000	-	40	1,040	806	221	13	1,000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보급	648	648	-	-	648	648	-	-	648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보급	200	200	-	-	200	174	-	26	200
목재펠릿보급 사후관리	528	528	-	155 △155	528	449	23	56	578
참숯가마조성	1,023	1,023	-		1,023	1,023	-	-	-
목재에너지림 조성	237	237	-	40 △40	237	122	-	115	23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목재산업육성(1535-301)(산림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동 사업 내역사업 중 일부는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산목재 활용촉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친화도시 조성,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 등 목재산업 활성화 관련 세부내역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저조함.

2021년 예산액 78억 3,500만원 중 31억 8,3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40.6%)되었고, 2022년 101억 6,900만원 중 34억 6,8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34.1%)되었으며, 2023년 226억 4,900만원 중 80억 9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35.4%)되었고, 2024년 322억 6,400만원 중 103억 3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31.9%)되었음.

[연도별 목재산업육성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액	실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업지연 구체적사유
2021	7,835	98 △98	**3,183 (40.6%)**	-	27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포기
2022	10,169	87 △87	**3,468 (34.1%)**	-	5	목조건축실연, 목재친화도시 지자체 예산편성 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
2023	22,649	105 △105	**8,009 (35.4%)**	-	116	목조건축실연, 목재친화도시 등 지자체 예산편성 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
2024	32,264	40 △40	**10,303 (31.9%)**	404	211	목조건축실연, 목재친화도시, 목조전망대 등 대부분의 사업이 연차사업이며, 사업실행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행정처리절차 지연

자료: 산림청

그 사유로 산림청은 주로 각 지자체 예산편성 및 사전행정절차를 제시하면서, 대응방안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2개 내역(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목재산업단지조성)은 종료, 2개 내역(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했다고 설명함.

[목재산업육성사업 2025년 예산편성 현황]

목재산업육성사업의 내역	2025년 예산편성 현황
목재산업시설현대화(지자체보조)	사업 종료
목재산업단지조성(지자체보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지자체보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친환경 목조전망대(지자체보조)	

목재산업육성사업의 내역	2025년 예산편성 현황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지자체보조)	목재산업육성 사업 내 편성
목재친화도시(지자체보조)	
산림목재클러스터(지자체보조)	
국내목조건축보급(직접)	
목재제품 시장조사(법정민간대행)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보급(지자체보조)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보급(지자체보조)	
목재펠릿보급 사후관리(직접, 민간위탁)	
참숯가마조성(지자체보조)	
목재에너지림 조성(직접)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예산집행 및 사업진행이 부진한 내역사업 일부를 종료하였으나, 2025년 목재산업육성 사업 내에 편성된 세부내역 사업들(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목재친화도시, 산림목재클러스터사업 등) 및 지역균형특별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사업들(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진행이 여전히 저조하고, 사업내용 및 사업목적 등이 유사하고 차별성이 크지 않는 실정임.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할 경우 사업추진 및 관리가 더 어려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역사업들을 통폐합하여 사업을 축소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연도별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등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500	339 (67.8%)	161	1,000	133 (13.3%)	867	1,000	359 (35.9%)	641	1,000	298 (29.8%)	697
-목재친화도시조성											
-	-	-	1,250	242 (19.4%)	1,008	4,750	953 (20.1%)	3,797	6,875	- (0%)	6,875
-산림 목재클러스터 조성											
-	-	-	-	-	-	700	55 (7.9%)	645	4,060	- (0%)	4,06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재작성

[2024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실집행률(B/A)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소계**	**11,400**	**7,291**	**18,691**	**7,084**	**11,607**	**37.9**
	서울특별시	1,500	500	2,000	95	1,905	4.8
	부산광역시	1,500	500	2,000	367	1,633	18.4
	대구광역시	350	-	350	-	350	-
	경기도	1,650	350	2,000	573	1,427	28.7
	강원특별자치도	2,000	2,862	4,862	3,729	1,133	76.7
	충청북도	3,650	3,079	6,729	2,235	4,494	33.2
	전북특별자치도	250	-	250	10	240	4.0
	전라남도	250	-	250	75	175	30.0
	경상북도	250	-	250	-	250	-
친환경목조 전망대 조성	**소계**	**3,500**	**-**	**3,500**	**3,010**	**490**	**86.0**
	대구광역시	500	-	500	10	490	2.0
	대전광역시	3,000	-	3,000	3,000	-	100

자료: 산림청

둘째,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사업의 질적 성과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세부내역 중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2년 86.8%에서 2024년 67.7%로 하락했음.

[연도별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률)
주택용	720	589 (81.8%)	648	563 (86.8%)	648	456 (70.3%)	648	439 (67.7%)
사회복지용	200	187 (93.5)	200	184 (92%)	200	179 (89.5%)	174	161 (92.5%)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재작성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추진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대수는 2024년말 기준 31,512대이나, 내용연수(10년)를 고려할 때 2015년부터 보급된 보일러 12,014대

(2015년~2024년) 중 8,716대가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가동률은 72.5%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연도별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현황]

(단위: 대)

구분	합계	보일러						난로			
		소계	주택용	사회복지용	일반시설용	산업용	국가공공기관	소계	주택용	사회복지용	국가공공기관
합계	**31,512**	**29,115**	**26,935**	**2,027**	**4**	**76**	**73**	**2,397**	**1,636**	**9**	**752**
2009	3,003	2,998	2,990	-	-	-	8	5	-	-	5
2010	3,896	3,891	3,875	-	-	-	16	5	-	-	5
2011	4,639	4,245	3,946	255	4	9	31	394	-	-	394
2012	2,688	2,608	2,430	151	-	27	-	80	-	-	80
2013	2,844	2,684	2,241	405	-	21	17	160	-	-	160
2014	2,428	2,320	2,190	119	-	10	1	108	-	-	108
소계	**19,498**	**18,746**	**17,672**	**930**	**4**	**67**	**73**	**752**	**0**	**0**	**752**
2015	1,867	1,867	1,716	142	-	9	-	-	-	-	-
2016	2,052	2,052	1,762	290	-	-	-	-	-	-	-
2017	1,475	1,475	1,389	86	-	-	-	-	-	-	-
2018	1,859	1,390	1,315	75	-	-	-	469	467	2	-
2019	1,385	1,100	989	111	-	-	-	285	285	-	-
2020	1,145	843	764	79	-	-	-	302	300	2	-
2021	727	496	404	92	-	-	-	231	227	4	-
2022	656	506	414	92	-	-	-	150	149	1	-
2023	457	339	270	69	-	-	-	118	118	-	-
2024	391	301	240	61	-	-	-	90	90	-	-
소계	**12,014**	**10,369**	**9,263**	**1,097**	**0**	**9**	**0**	**1,645**	**1,636**	**9**	**0**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의 예산액 및 집행률과 보일러 가동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난방용 목재펠릿 제조업체의 설비 노후에 따른 생산효율 저하 및 소비자들의 저렴한 수입연료 선택에 따른 목재펠릿 생산원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설명(목재펠릿 판매가격 2020년 393천원 → 2024년 443천원)하고 있음.

[연도별 주택용 목재펠릿 생산량 및 판매가격]

(단위: 톤,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산량(톤)	32,993	30,038	30,681	27,488	21.567
톤당 판매가격(천원)	393	352	418	454	443

자료: 산림청

실제 동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2023년 목재펠릿 생산량은 777톤이었으나 2024년 610톤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말 정부(산자부)는 목재 펠릿 수입을 제한하는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26] 2025년 목재 펠릿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목재펠릿 생산량 성과지표 및 실적]

(단위: 톤,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재펠릿 생산량(톤)	목표	348	572	726	859	변경	전년도 목재펠릿 생산량에 10% 이상 상향	당해연도 목재펠릿 생산량	실적보고서
	실적	658	737	777	610	-			
	달성도	189.1	128.8	107.0	71.0	-			
국산목재 우선 구매율(%)	목표	-	-	-	신규	50	목재이용법상 국산목재 우선구매 비율	{국산목재 사용금액(천원)/목재(국산목재+수입목재) 사용금액(천원)}*100	상반기, 하반기 국산목재우선구매 실적 조사
	실적	-	-	-	-				
	달성도	-	-	-	-				

자료: 산림청

이에 산림청은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목재펠릿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사업의 질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세부내역 중 목재제품 시장조사(2024년 예산액 1억원 중 9,000만원 집행)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업계 동향 파악과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연 4회)로 실시되고 있음.

동 조사 모집단 전체업체수 합계는 937개이나 동 조사결과보고서에는 678개로 적시되어 있어 전체모집단 산출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표본 설계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조사결과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개선이 필요함.[27]

---

26) 국회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재검토해야"(에너지경제, 2025.3.6.) / "수입 목재펠릿 REC 감축? 발전소 닫으라는 말" 발전업계 반발(전기신문, 2025.5.28.) / 산업부, 수입 목재펠릿 REC 패널티…발전사 노조 "적자 폭 확대"(산업일보, 2025.2.10.)

27) 표본집단 설계시 원목과 제재목 분야의 업체수가 각각 305개 및 480개로 제일 많으나, 표본집단을 각각 3.3%(10개), 6.3%(30개)의 비율로 선정하고, 전체 업체수가 가장 적은 합판 및 파티클보급(각각 2개), 성형숯(3개), 목재칩(보드용)(4개), 섬유판(5개) 분야는 100%의 비율로 모집단을 선정하는 등 업체수가 적은 분야의 품목들의 응답결과가 과대대표되는 구조로 표본집단을 설계한 것으로 조사됨.

[목재산업 동향조사 표본집단 설계 현황(4회 모두 동일)]

(단위: 개)

연번	품목	전체 업체수	조사모집단						
			업체수	비율	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1	**원목**	**305**	**10**	**3.3%**	-	-	-	-	-
2	**제재목**	**480**	**30**	**6.3%**	2	4	4	10	10
3	**합판**	**2**	**2**	**100.0%**	2	-	-	-	-
4	**섬유판**	**5**	**5**	**100.0%**	5	-	-	-	-
5	**파티클보드**	**2**	**2**	**100.0%**	2	-	-	-	-
6	목질바닥재	27	6	22.2%	-	2	-	-	-
7	방부목재	22	5	22.7%	-	1	1	1	2
8	목재플라스틱복합재	20	6	30.0%	-	-	-	2	4
9	집성재	8	4	50.0%	-	-	-	2	2
10	목재칩(펄프용)	14	5	35.7%	1	1	1	1	1
11	**목재칩(보드용)**	**4**	**4**	**100.0%**	-	1	1	1	1
12	목재칩(연료용)	27	6	22.2%	1	2	1	1	1
13	목재펠릿	18	6	33.3%	1	1	1	2	1
14	**성형숲**	**3**	**3**	**100.0%**	-	-	-	3	-
합 계		**678**[28]	94	13.9%	14	12	10	24	24

자료: 산림청

28) 전체 업체수 합계는 937개소임.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산림청에 대해 시정요구 50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6건·제도개선 34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6	32	-	48
예비비	-	-	-	-	2	-	2
합계	-	-	-	16	34	-	50

산림청은 시정요구사항 50건에 대해 50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0%)하였다고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48	48	100.0	-
예비비	2	2	100.0	-
합계	50	50	100.0	-

국회가「2023년도 결산」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산림청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산림청 관련 2023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26) 산림청은 산림헬기의 안정적 운용 및 향후 임차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헬기의 구입을 적극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72억 4,900만원(0.7%)이 많은 9,141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6억 4,600만원(9.3%)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29,814	329,814	232,479	△97,335	280,477	280,477	312,061	31,584	79,582
기 금	587,635	587,635	604,069	16,434	626,468	626,468	602,133	△24,335	△1,936
총수입	917,449	917,449	836,548	△80,901	906,945	906,945	914,194	7,249	77,646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028억 9,500만원(△6.0%)이 적은 6조 2,849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4억 5,800만원(1.2%)이 증가함.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763,357	5,763,357	5,623,981	△139,376	5,877,865	5,877,865	5,654,102	△223,763	30,121
기 금	669,925	669,925	583,542	△86,383	810,011	810,011	630,881	△179,130	47,339
총지출	6,433,282	6,433,282	6,207,523	△225,759	6,687,876	6,687,876	6,284,981	△402,895	77,458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8,497억 5,700만원으로, 1조 9,476억 9,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9,001억 6,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6%)되고 462억 3,0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3억 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3,279	53,279	-	53,279	63,633	58,179	5,441	1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820	31,820	-	31,820	66,734	50,436	16,298	-
- 구조개선사업계정	24,961	24,961	-	24,961	53,564	41,534	12,030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6,859	6,859	-	6,859	13,170	8,902	4,268	-
교통시설특별회계	1,753,070	1,753,070	-	1,753,070	1,808,700	1,786,484	20,928	1,289
- 항만계정	1,753,070	1,753,070	-	1,753,070	1,808,700	1,786,484	20,928	1,28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51	3,851	-	3,851	5,159	2,788	2,371	-
- 투자계정	3,851	3,851	-	3,851	5,159	2,788	2,37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737	7,737	-	7,737	3,465	2,273	1,193	-
- 지역자율계정	6,911	6,911	-	6,911	2,377	1,309	1,067	-
- 지역지원계정	778	778	-	778	1,089	963	125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8	48	-	48				-
합 계	1,849,757	1,849,757	-	1,849,757	1,947,691	1,900,161	46,230	1,301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조 6,899억 4,800만원으로, 7조 1,459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9%)되고 2,001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438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447,126	3,447,126	89,062	-	-	3,536,188	3,372,651	20,800	142,73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79,937	1,679,937	37,104	-	-	1,717,041	1,598,213	73,744	45,084
- 구조개선사업계정	1,011,469	1,011,469	18,291	-	-	1,029,760	932,249	66,715	30,796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668,468	668,468	18,813	-	-	687,281	665,964	7,029	14,288
교통시설특별회계	1,753,070	1,753,070	94,492	-	-	1,847,562	1,600,200	101,904	145,458
- 항만계정	1,753,070	1,753,070	94,492	-	-	1,847,562	1,600,200	101,904	145,45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3,251	63,251	-	-	-	63,251	57,869	-	5,382
- 투자계정	63,251	63,251	-	-	-	63,251	57,869	-	5,38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3,761	503,761	22,145	-	-	525,906	517,013	3,702	5,191
- 지역자율계정	61,075	61,075	-	-	-	61,075	61,075	-	-
- 지역지원계정	390,285	390,285	22,145	-	-	412,430	403,537	3,702	5,19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2,401	52,401	-	-	-	52,401	52,401	-	-
합 계	7,447,145	7,447,145	242,803	-	-	7,689,948	7,145,946	200,150	343,85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8,434억원으로, 8,944억 9,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784억 6,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2%)되고 160억 2,5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수산발전기금	843,400	843,400	894,495	878,467	16,025	3
합 계	843,400	843,400	894,495	878,467	16,025	3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8,472억 6,600만원으로, 8,784억 6,7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3.7%)되고 161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88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수산발전기금	843,400	843,400	3,866	847,266	878,467	16,133	168,864
합 계	843,400	843,400	3,866	847,266	878,467	16,133	168,864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해양수산부 자산은 전년 대비 9,055억 2,400만원이 증가한 38조 7,719억 8,1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2,179억 9,4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3,143억 5,6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5,525억 8,3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3억 8,100만원 증가한 1,638억 9,4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142억 4,5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991억 4,300만원이 증가한 38조 6,080억 8,7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조 3,659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4억 3,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조 5,589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81억 1,3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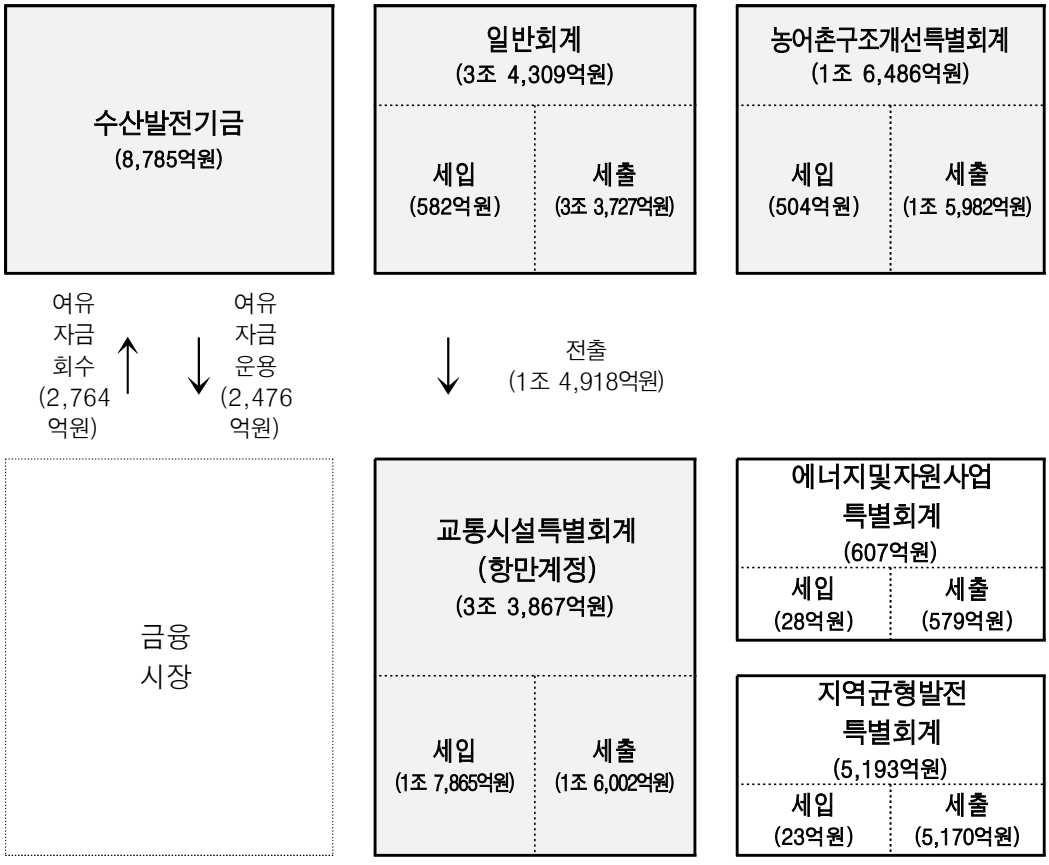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8,771,981	37,866,457	905,524	2.4%
		유동자산	1,209,540	895,184	314,356	35.1%
		투자자산	2,086,275	2,304,219	△217,944	△9.5%
		일반유형자산	7,418,105	7,153,874	264,231	3.7%
		사회기반시설	27,631,131	27,078,548	552,583	2.0%
		무형자산	35,219	44,086	△8,867	△20.1 %
		기타비유동자산	391,711	390,546	1,165	0.3 %
	부 채		163,894	157,513	6,381	4.1%
		유동부채	100,651	102,365	△1,714	△1.7 %
		장기차입부채	592	550	42	7.6 %
		장기충당부채	17,390	3,145	14,245	452.9 %
		기타비유동부채	45,261	51,453	△6,192	△12.0 %
	순자산		38,608,087	37,708,944	899,143	2.4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365,927	4,616,361	△250,434	△5.1 %
	재정운영순원가		4,632,308	5,175,194	△542,886	△10.5 %
	재정운영결과		4,558,938	5,077,051	△518,113	△10.2 %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결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수산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4,918억원이 전출되었음.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2024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381개의 세부사업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 어업인 경영 안정, 재해·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 구현, 어촌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 수산업 생산구조 혁신 등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출자 후 회수된 지원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추후 재투자에 활용할 예정인데, 이러한 회수액의 재투자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회수액을 국고에 반납하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 필요시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재투자 여부가 심사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일반연구비 1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해양수산부는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당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음.

셋째, 침몰선박 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달라 부적정하므로 이러한 집행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해양수산부는 향후 이러한 부적정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과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재이월 관련 절차 등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2025년으로의 이월액이 실제 집행가능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집행가능액을 초과한 이월액을 즉시 반납하고, 향후 타 보조사업에서도 집행가능액을 초과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여섯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은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단위 기준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이 있는 등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관리 개선을 통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펀드 사업: 회수된 지원액 국고 반납 필요

가. 개 요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펀드로는 일반회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의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와 수산발전기금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의 원양어선 안전펀드가 있음.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20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 75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

[202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계획액)
	예산액(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정액(A)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33,050	33,050	-	△362	32,688	29,724	-	2,964	31,851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000	20,000	-	-	20,000	20,000	-	-	20,000
원양어선 안전관리	7,500	7,500	-	-	7,500	7,500	-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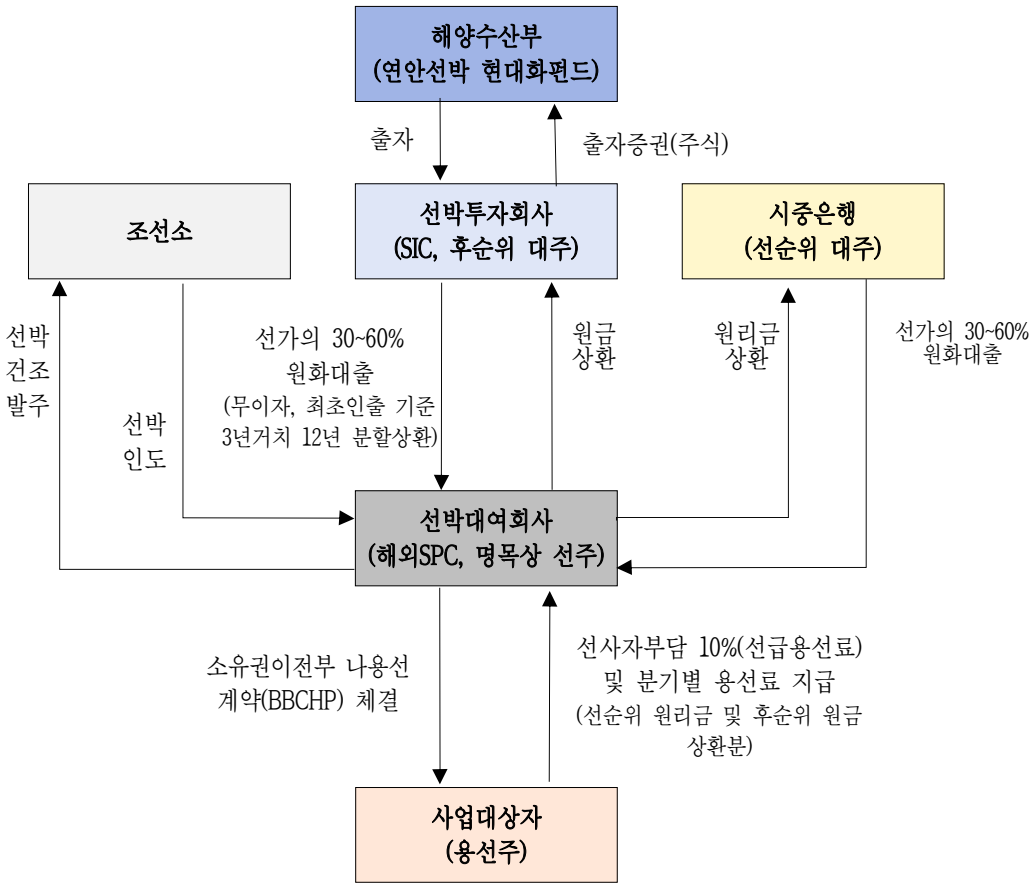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연안선박 현대화 지원(6133-307)(해운물류국)

3) 수산발전기금-원양어선 안전관리(3541-301)(수산정책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선박투자회사(SIC)를 설립하여 정부 출자금 30~60%, 금융기관 선순위 대출 30~60%, 선사 자부담 10%로 선박건조 자금을 조달하고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을 건조한 후 선사에 용선하면, 선사는 용선료 형태로 정부 출자금을 상환(3년 거치, 12년 원금 분할 상환)한 후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구조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구조도]



자료: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선가별 지원 비율]

선가	펀드 (정부출자)	금융기관	자부담
120억원 초과	30%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해양진흥공사 보증)	10%
6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해양진흥공사 보증)	10%
60억원 이하	6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30%(해양진흥공사 보증)	10%

자료: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통해 2024년까지 총 6척의 선박이 건조되었고,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44척의 선박을 건조완료할 계획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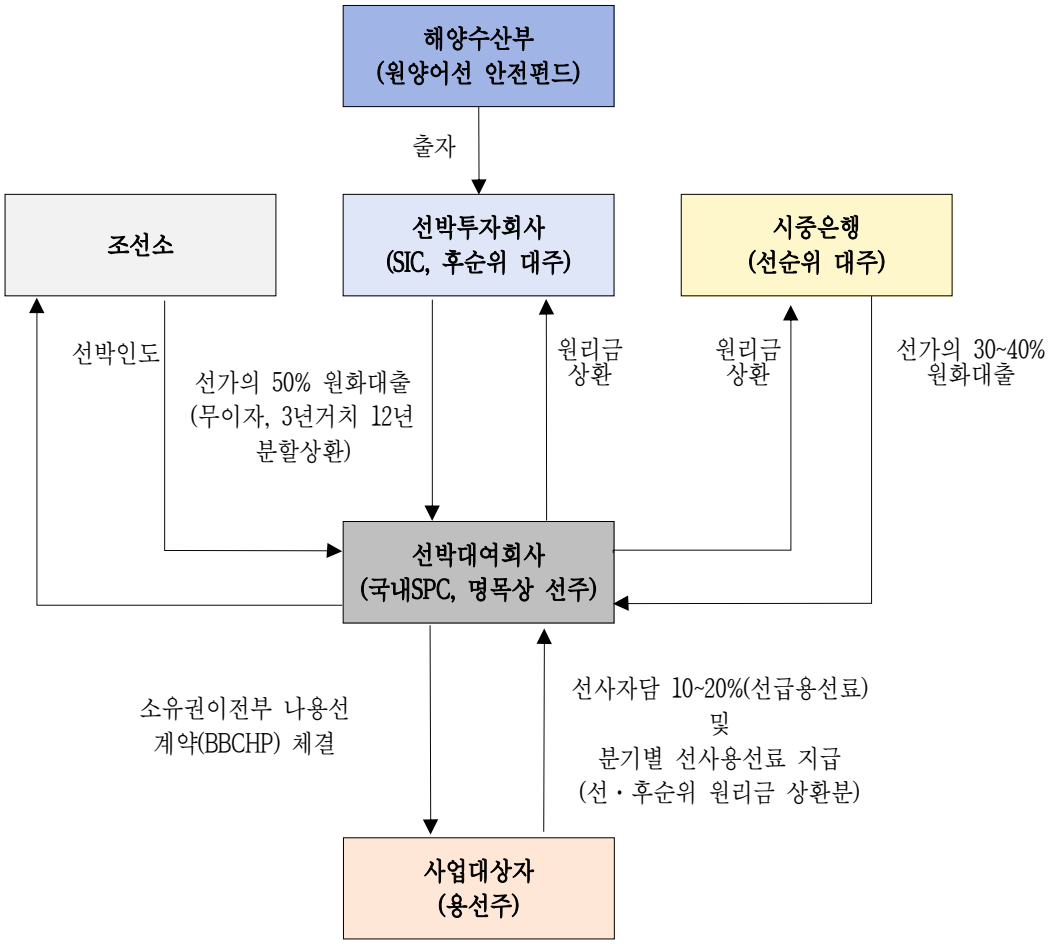
(단위: 척, 억원)

구분	실적										계획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소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계	
선정척수	-	1	-	3	1	1	-	1	12	19	14	10	9	2	3	4	42	61
건조척수	-	-	1	-	3	1	1	-	-	6	16	10	9	2	3	4	44	50
정부 출자액	100	250	400	250	530	385	75	-	200	2,190	200	300	310	-	-	-	1,010	3,000
회수액 중 재투자액	-	-	-	-	-	-	-	-	-	-	243	104	104	104	104	115	774	774

주) 2023년 선정선박 1척 취소, 2024년 선정선박 중 8척 취소됨
자료: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정부 50%, 민간 50%로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받은 선사는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3년 거치, 12년 상환)을 통해 지원금액을 용선료 명목으로 상환하면, 상환이 끝난 후 선사가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함.

[원양어선 안전펀드 구조도]



자료: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펀드 자금 조성 비율]

구 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정부출자	금융기관 대출	선사 자부담
자금 조성	50%	30~40%	10~20%

자료: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통해 2024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건조 완료되었고, 이후에도 매년 1~2척씩 선박의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임.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억원, 척)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선정척수	2	3	-	2	1	1	1	1	1	2	1	2
건조척수	-	2	3	-	2	-	1	2	0	2	2	1
정부 출자액	50	190	180	150	90	75	90	120	125	200*	100	100*

주) 2028년과 2030년 정부 출자(계획)액은 회수금재투자금임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출자 후 회수된 지원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추후 재투자에 활용할 예정인데, 이러한 회수액의 재투자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고, 모태펀드 등 타 정책펀드와 달리 존속기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회수액을 국고에 반납하고 추후 추가 지원 필요시 예산안 등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선박 건조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용선료의 형태로 회수되고 있는 상황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2020년부터 용선료가 상환되기 시작하여 2024년 말 기준 총 243억 1,700만원이 회수되었고,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이 회수될 예정임. 회수된 자금은 별도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추후 회수액을 재투자에 활용할 예정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환일정]

(단위: 백만원)

년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합계
2020	800	-	-	-	-	-	**800**
2021	800	-	-	-	-	-	**800**
2022	800	1,600	1,200	2,000	-	-	**5,600**
2023	800	1,600	1,600	2,000	1,200	-	**7,200**
2024	2,594	1,600	1,600	2,000	1,600	523	**9,917**
2025	2,594	1,600	1,600	2,000	1,600	1,047	**10,441**
2026	2,594	1,600	1,600	2,000	1,600	1,047	**10,441**
2027	2,594	1,600	1,600	2,000	1,600	1,047	**10,441**
2028	2,594	1,600	1,600	2,000	1,600	1,047	**10,441**
2029	2,594	2,042	1,784	2,418	1,600	1,047	**11,485**
2030	2,594	2,484	2,337	2,837	1,600	1,047	**12,899**
2031	2,594	2,484	2,337	2,837	1,600	1,047	**12,899**
2032	649	2,484	2,337	2,837	2,835	1,047	**12,189**
2033	-	2,484	2,337	2,837	3,246	1,047	**11,951**
2034	-	621	1,168	709	3,246	1,047	**6,791**
2035	-	-	-	-	1,623	1,607	**3,230**
2036	-	-	-	-	-	1,205	**1,205**

자료: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경우도 2023년부터 용선료가 상환되기 시작하여 2024년 말 기준 4억 8,200만원이 회수되었고, 2025년부터 2036년까지 매년 20~30억원이 회수될 예정임. 회수된 자금은 별도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도 추후 회수액을 재투자에 활용할 예정임.

[원양어선 안전펀드 상환일정]

(단위: 백만원)

년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합계
2023	-	57.66	-	-	-	-	-	**57.66**
2024	194.30	230.63	-	-	-	-	-	**424.93**
2025	419.09	488.07	500.00	500.00	500.00	-	-	**2,407.16**
2026	432.34	488.07	500.00	500.00	500.00	173.47	-	**2,593.88**
2027	446.02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42	**3,824.38**
2028	460.16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38.48**
2029	474.76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53.08**
2030	489.84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68.16**
2031	505.43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83.75**
2032	521.52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99.84**
2033	538.15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916.47**
2034	555.33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933.65**
2035	573.07	366.05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29.37**
2036	-	-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2,890.25**
2037	-	-	-	-	-	693.87	696.38	**1,390.25**
2038	-	-	-	-	-	520.40	696.38	**1,216.78**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두 펀드 모두 펀드 조성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있으나 펀드 회수액(용선료)의 재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4] 행정규칙인 「원

4) 「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해운법 시행령」
제1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

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와 사업 지침에서 회수액의 재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규 출자 없이 회수된 지원액을 신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집행상 소관 부처의 자율성이 큰 사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운영상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특히 두 펀드 모두 모태펀드 등 타 정책펀드와 달리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수액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할 경우 펀드의 청산 시기 및 펀드 출자액의 국고 회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향후 출자 자금이 국고로 회수되지 않을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5)]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회수액을 국고에 반납하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펀드 형식의 지원은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수요변화 등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나, 지적사항의 취지에 공감하여 향후 펀드의 존속기간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이 경우 존속기간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30년으로 하되, 투자기간과 회수기간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투자기간 도과 후 신규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 신규 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음.

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5) 참고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책목적을 위해 벤처투자모태펀드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펀드 운용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고,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모태펀드는 민간의 과소투자 분야 또는 집중적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와는 그 성격이 상이함.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가 연차별 지원 계획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회수된 지원액은 국고에 납입하고, 연차별 지원 계획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반영하여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2. 시험연구비: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해양수산부의 시험연구비는 2024년 예산현액 580억 7,500만원 중 563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0%)되고, 1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해양수산부 시험연구비 결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도 시험연구비								2025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1031-303)	370	370	-	-	370	370	-	-	360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1033-320)	50	50	-	-	50	50	-	-	141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3150-343)	402	402	-	-	402	390	-	12	400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3131-340)	1,825	1,825	-	-	1,825	1,722	-	103	1,825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 (3131-341)	767	767	-	-	767	761	-	6	767
자율관리어업육성 (3142-300)	130	130	-	-	130	130	-	-	130
양식장관리 실태조사 (3043-301)	788	788	-	23	811	804	-	7	888
수산생물 질병관리 (3041-310)	1,003	1,003	-	-	1,003	981	-	22	1,003

세부사업명	2024년도 시험연구비								2025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양식등 재해대책비 (3443-302)	179	179	-	100	279	231	-	48	279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3140-300)	400	400	-	-	400	287	-	113	400
관상어산업육성 (3140-351)	360	360	-	-	360	331	-	29	360
수산종자산업육성 (3140-305)	232	232	-	-	232	232	-	-	232
내수면자원조성 (3141-303)	100	100	-	△80	20	19	-	1	20
수산물 위생관리 (3041-303)	2,545	2,545	-	121	2,666	2,636	28	2	2,669
원양어업활성화 (3542-300)	277	277	-	△1	276	274	-	2	277
어업인안전보험 (3443-368)	80	80	-	△53	28	27.3	-	-	80
수산공익직불제 (3460-310)	42	42	-	-	42	42	-	-	42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술개발 (R&D) (3045-304)	8,039	8,039	5	-	8,044	7,868	-	176	8,090
수산시험연구 (R&D) (3632-300)	40,265	40,265	628	△523	40,370	39,206	72	1,092	43,674
합 계	57,854	57,854	633	413	58,075	56,361	100	1,613	61,637

나. 검토의견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로 한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업별로 필요한 비목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는 시험연구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만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시험연구비(210-13)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① 일용임금(110-04),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및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유류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고용부담금(320-09)을 단일 비목에서 편성·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경비의 신축적 집행을 통해 관련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은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로 한정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시험연구비 집행 내역을 보면,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여, 시험연구비가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시험연구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예시)]

세부사업명	자금 이체일	건명	금액(원)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술개발(R&D)	2024.2.23.	수산방역과 홍보물품 구입	2,800,000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술개발(R&D)	2024.7.30.	수산방역 업무 홍보물품 제작·구매	4,540,000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술개발(R&D)	2024.8.12.	수산방역과 홍보물품 구입	4,910,000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술개발(R&D)	2024.11.12.	수산방역과 홍보물품구입	4,600,000
자율관리어업육성	2024.7.3.	어업인 홍보물 제작	18,370,000
자율관리어업육성	2024.7.23.	해파리 모바일웹 신고자 홍보물	6,758,400

세부사업명	자금 이체일	건명	금액(원)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술개발(R&D)	2024.6.11.	[정부광고] 해양수산특집 기획기사 지면광고료 지급	3,300,000
수산시험연구(R&D)	2024.12.6.	(일반용역) 2024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전시수조 설치 및 관리	9,872,000
수산시험연구(R&D)	2024.1.23.	인쇄비/저수온 대비 홍보용 다국어 브로슈어	4,950,000
수산시험연구(R&D)	2024.2.29.	인쇄비/수산재해대응 관련 홍보용 UV출력 판넬 인쇄	770,000
수산시험연구(R&D)	2024.3.6.	물품(기후변화 홍보 시트지 등 3종)	880,000
수산시험연구(R&D)	2024.4.12.	홍보물 디자인	330,000
수산시험연구(R&D)	2024.5.27.	대민 홍보용 포스터 제작	110,000
수산시험연구(R&D)	2024.6.10.	현수막/국제협력 홍보/2024 ROK-US Fisheries Panel Meeting	77,000
수산시험연구(R&D)	2024.7.2.	인쇄비-해파리홍보물/모바일웹 신고홍보용	3,715,800
수산시험연구(R&D)	2024.8.14.	임차(8.12,홍보물품 운반)	66,000
수산시험연구(R&D)	2024.8.8.	인쇄비/고수온 대비 홍보용 다국어 브로슈어 500부	4,950,000
수산시험연구(R&D)	2024.9.25.	연구내용 홍보 포스터 인쇄	176,000
수산시험연구(R&D)	2024.11.21.	홍보 기념품 구입(유자·오미자원액, 녹차티백, 꿀)	611,500
수산시험연구(R&D)	2024.11.21.	홍보 기념품 구입(유자·오미자원액, 녹차티백, 꿀)	499,200
수산시험연구(R&D)	2024.11.27.	홍보 기념품 구입(홍삼)	316,000
수산시험연구(R&D)	2024.11.27.	생분해 어구 인증 및 보급사업 홍보용 점자 리플렛 제작	3,468,300
수산시험연구(R&D)	2024.12.26.	홍보 기념품 구입(세정용품 등 4종)	3,819,000
수산시험연구(R&D)	2024.12.26.	홍보 기념품 구입(홍보용 종이가방)	2,865,000
수산시험연구(R&D)	2024.12.19.	수산공학수조 대외홍보용 국문 리플릿 외 1건	1,980,000
수산시험연구(R&D)	2024.12.19.	다목적 어군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홍보용 리플릿 추가 인쇄	3,696,000
수산시험연구(R&D)	2024.12.3.	물품구입(홍보용 리플렛)	825,000
수산시험연구(R&D)	2024.12.23.	물품구매-연구결과 홍보포스터	1,230,9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해양수산부는 홍보 기념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의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시험연구 자료수집 등을 위해 집행한 경비로서 시험연구와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이나, 이는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수용비 등 적정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3.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신규): 근거 법률 제정 전 연구용역 발주 부적정 등

가. 개 요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 및 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억원 중 12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5%)되고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4년도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양공간 통합관리	4,819	-	149	△8	4,960	4,702	-	258	4,443
해양경계 획정관리	1,300	-	-	-	1,300	1,229	-	71	9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일반연구비 1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당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6) 일반회계-해양공간 통합관리(1031-305)(해양정책실)

을 전제로 기본·추진 계획 수립, 국내외 사례 분석, 매뉴얼 마련 및 시범조사와 육·해상 연계 해양지형 분석 등을 위하여 일반연구비 13억원이 편성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근거 법률은 2023년 9월 20일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개정안 3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023년 9월 21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대안의 의결이 보류되고, 2024년 5월 29일 관련 법률안이 제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7)]

그리고 제22대국회에서도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93호)이 발의(2024. 10. 2.)되어 2024년 11월 20일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11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되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4일 연구용역 입찰 공고 후 2024년 3월 26일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일반연구비 1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개요]

- 기간: 2024. 3. 26.~2025. 9. 30. - 용역금액 및 용역사: 12억 2,9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내용 1)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안) 마련 2) 해양관할구역 획정 추진계획(안) 마련 3)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 및 업무처리 규정(안) 마련 4) 시범해역 현황조사 및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술 검토

자료: 해양수산부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동 사업의 예산을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제21대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안을 기반으로 하여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해양경계 획정 관련 법 제정 시 경계 획정이 신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

7) [제21대국회에서 폐기된 관련 법률안]

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의원 대표발의) 2.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그러나 당초 2024년 예산이 근거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기본·추진 계획 수립, 획정 기준 및 업무처리 규정 마련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연구용역은 제21대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안을 기준으로 추진되었는데, 제22대국회 발의안 및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안이 제21대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안과는 다소 상이하고,[8]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의 논의 방향이 큰 폭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에 수행한 연구용역이 활용되지 못할 우려도 있어 재정적 효율성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해양수산부는 2024년 내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연내 준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결과물이 적시에 납품되는지 여부 및 결과물의 내용과 품질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고,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음.

동 사업에서 2024년 발주한 연구용역의 과제 수행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024년 내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26일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 준공금을 지급하였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선금을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9] 최초 선금 90% 지급 후 연말에 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용역비를 100%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34조제1항에서는

---

8) 제22대국회 발의안 및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새만금)에 대해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유예하도록 부칙이 마련되어 제21대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없던 부분이 신규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안 반영 여부에 대한 사항도 제21대국회 의결안과는 내용이 다소 수정되었음.

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
※ 동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 12. 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4.12.31.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선금의 지급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금의 한도만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10)]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2024년 내 완료되지 않고 2025년 9월 30일까지 수행될 예정이며, 준공금을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 지급할 경우 결과물이 적시에 납품되는지 여부와 결과물의 내용과 품질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024년 12월 26일 준공금을 지급하여 용역 대가 전액을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용역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11)] 이러한 선금 지급한도 상향이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전 완수금을 지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12)]

---

10)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11)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12) 정부가 선금 100%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 것은 물품구매나 공사 시행 시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 등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나, 동 용역계약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한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특례 적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4.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사항 반영 필요

가. 개 요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전국 해역에 대하여 과학적・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를 하기 위해 해역의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49억 4,200만원 중 147억원이 집행(98.4%)되고 2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4년도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17,858	17,858	-	-	17,858	17,548	-	310	19,681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14,942	-	-	-	14,942	14,700	-	242	16,66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조사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에 지체 없이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하는데,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도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포함됨.[14)]

13) 일반회계-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1033-320)(해양정책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하여 전국 연안 60개 정점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신속·정확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3년 예비비 등을 활용해 75개 정점(5개 권역) 대상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하였고, 2024년에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정점을 105개(4개 권역 추가)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음.

그런데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사항이 2024년 개정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2025년 6월 기준으로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가 기존의 정기조사와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 판단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추진 당시에는 일정기간만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가 2024년은 물론 2025년에도 동 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중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은 해양의 방사능 오염 관련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및 해양공간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립·운영됨을 감안하면, 체계적인 해양방사성물질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부터 실시 중인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도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1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 · 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조사 시기 및 횟수
2. 측정위치 및 위치도면
3. 측정항목 및 방법
4. 해역구분 및 측정망 종류
5. 그 밖에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 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는 한편, 향후 조사 시기 및 횟수 등 조사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에 지체 없이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 국고부담 개선을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은 악천후 및 외해에서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원활한 방제업무 수행을 위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을 건조·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52억 1,8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5)]

[2024년도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5,218	5,218	-	-	5,218	5,218	-	-	5,21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은 현재 건조 완료 후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비 전액을 매년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부실로 연간 50여억원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여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2022년 5월 건조완료 후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당초 사업설계 시에는 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활동을 수행하고, 평상 시에는 준설 작업 등 수익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건조완료 후 2025년 4월까지 준설 시범사업 1건(2억 9,200만원)만 수행하였고, 매년 100일 이상을 출동대기 상태로 운영 중이며, 연간 50여억원의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2022년(8개월분) 29억원, 2023년 49억원, 2025년 52억원].

15) 일반회계-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1036-305)(해양정책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업체와 업무협의를 하고 관계기관 등 대상 선박 홍보 등 준설작업 수주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으로, 공공기관 1개사 및 민간업체 3개사와 준설 협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기 체결된 업무협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해양오염 대비·대응 임무 우선 수행이 필요한 특수성으로 인해 준설작업 관련 지역범위가 남해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준설사업 계약 시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동원이 우선됨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어 민간 준설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도 설명하였음.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당초 대형방제선 건조 시 운영경비는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평상 시 준설 또는 해양폐기물 수거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여 운영유지비를 충당할 계획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비 자체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박 건조비용 총 700억 1,500만원 중 135억 8,300만원을 준설장비 설치 비용에 집행하였음.

[「준설·폐기물 수거 겸용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중 일부 발췌]

3, 사업의 주요 내용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운영기관(해양환경공단)이 평상 시 준설, 해양폐기물 수거 등 복합적 업무 수행을 통해 운영유지비를 충당**
- **선박유지비용은** 준설 등 복합기능 운영을 통한 **자체조달**(연간 약 62억원)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이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권역과 운영방식을 매뉴얼화하는 한편 빈도가 낮은 대형사고 대응 외의 시간에는 선박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준설 등의 활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준비가 요구된다고 정책제언을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 방제 업무 지원 등 재난 대비 목적으로 건조되어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매년 50여억원의 적지 않은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국고 부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사업(신규, 종료): 부처 간 협의 미흡으로 예산 전액 불용 부적정

가. 개 요

‘(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사업은 민(民)과 군(軍)이 활용 가능한 고출력 병렬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및 고신뢰도 CBM+(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 상태기반 예지정비)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억 8,000만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0%)되었음.[16)]

[2024년도 (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1,080	1,080	-	-	1,080	-	-	1,08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사업은 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의 사업 연기로 예산 전액이 불용된 문제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다부처 사업 추진 시 부처 간 협의를 면밀히 진행하여 예산 편성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3월 제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되었음.

16) 일반회계-(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2046-347)(해사안전국)

[2023년 제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부처명	사업명	사업선정여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CBM+ 기반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	선정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규사업 기획보고서상의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4년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예산에 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음.[17)]

[사업 기획보고서상 부처별·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비율
방위사업청	21	51.5	63.2	46.7	14	9.4	205.8	47%
해양수산부	10.8	33.0	40.5	30	9	8.7	13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	24.9	30.5	22.6	6.7	4.5	99.4	23%
총계	42.0	109.4	134.2	99.3	29.7	22.6	437.2	100

그러나 주관 부처인 방위사업청은 2024년 4월 「24-1차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 해당 사업을 2026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참여부처에 통보하였고, 2024년 6월 제1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의결로 해양수산부의 동 사업은 종료되고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제와 직접 연계되어 방위사업청의 사업 없이 해양수산부 단독 또는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만으로는 사실상 과제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연계된 사업의 착수 시기 조정으로 인해 예산의 불용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재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다부처 사업 추진 시 부처 간 협의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고 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일반회계-민군기술협력(R&D)-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

7.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적정 규모의 출연금 편성을 통한 인건비의 과다이월 방지 필요

가. 개 요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박물관·국립해양과학관·미래해양과학관 등을 건립 및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63억 8,400만원 중 1,110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4%)되고 45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4년도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105,112	105,112	11,272	-	116,384	111,054	4,515	814	80,06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의 박물관 및 과학관 지원 출연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큰 규모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출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금액만 편성 및 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내역사업 및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내역사업은 실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출연금 중 일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고, 특히 인건비의 이월 규모가 연례적으로 과다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해양수산부는 연례적 이월 문제를 시정할 것’(시정)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

18) 일반회계-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해양정책실)

[2021년~2023년 국립해양박물관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이월액)
2021년	3,933	4,441	3,564	**877**
2022년	4,029	4,906	4,105	**801**
2023년	4,098	4,899	4,087	**812**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2023년 국립해양과학관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이월액)
2021년	2,767	3,213	2,425	**788**
2022년	3,652	3,779	2,762	**1,017**
2023년	3,744	4,761	3,228	**1,533**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해양수산부는 연례적 이월 개선을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월별 예산 실집행점검을 통해 분기별 출연금 교부 시 적정 금액만 배정하고(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에 대한 인건비 14억 3,100만원 미배정), 특히 국립해양과학관의 기 누적된 인건비 집행잔액(약 12억원)은 2024년도 회계 결산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4월 국고에 반납하였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음.

그런데 같은 세부사업에서 2024년 개관에 따라 신규로 반영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의 출연금 실집행내역을 보면 7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 출연금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A)	예산 현액						교부 현액	집행액 (C)			
7,413	6,603	6,603	6,603	-	6,603	5,903	6,603	5,904	**698**	-	89.4

자료: 해양수산부

출연금 상세 집행내역을 보면, 이월액 7억원 중 인건비가 6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 예산액 31억 1,200만원 중 19.7%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 출연금 상세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출연금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액)
기관운영출연금	인건비	**3,112**	2,498	-	**614**
	기관운영비	1,990	1,694	234	62
사업출연금	유물 수집 및 관리	587	580	4	3
	전시기획 및 운영	370	362	4	4
	교육 기획 및 운영	213	201	10	2
	학술조사연구	176	153	13	10
	대외교류 및 협력	155	142	11	2

자료: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은 2024년 6월 7일 기관운영출연금 28억 3,000만원 교부 후 11월 11일에 기관운영출연금 잔액 22억 7,2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는데, 2024년 10월까지의 인건비 집행액이 15억 4,200만원에 불과하여 11월에 연내 편성된 인건비 전액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모두 연내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인건비	232	314	331	327	338	455	501	2,498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출연금 교부는 예산 실집행점검을 통해 분기별 출연금 교부 시 적정 금액만 배정하였다는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고, 타 박물관 또는 과학관의 사례와 유사하게 인건비의 이월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출연사업 전반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의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절차 지연, 퇴사자 발생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 6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25년 인건비 예산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이 집행소요 대비 부족하게 편성되었다는 사유로 전년도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집행소요는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8. 침몰선박 관리사업: 사업계획 부실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간 불일치 발생

가. 개 요

‘침몰선박 관리사업’ 은 잔존유 유출 등으로 해양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침몰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위해도 평가 및 잔존유 제거 등을 통해 침몰선박으로부터의 2차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8억 6,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9)]

[2024년도 침몰선박 관리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양오염사고 방지	12,650	12,650	-	-	12,650	12,650	-	-	8,122
침몰선박 관리사업	10,860	10,860	-	-	10,860	10,860	-	-	6,18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선박 규모 및 위해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선박을 선정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 위해도 저감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선박을 대상으로 잔존유를 확인하여 회수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동 사업 예산은 전액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성되고 2024년도 예산액 전액이 수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으로 교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침몰선박 관리사업은 잔존유 확인 없이 잔존유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다른 문제가 있으므로, 잔존유 확인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이에 맞추어 편성할 필요

19) 일반회계-해양오염사고 방지(1036-306)(해양정책실)

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침몰선박 관리사업을 통해 위해도 저감조치 대상 선박 14척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잔존유 확인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2024년 기준 위해도 저감조치 대상 선박 및 작업연도 계획]

연번	선명	지역	선종	총톤수	위해도 평가점수	작업연도	
						확인	회수
1	제헌호	부산 다대포	화물선(시멘트)	2,945	70.5	2019	2020
2	제7해성호	전남 신안	화물선(철광석)	1,579	72	2019	- (잔존유 없음)
3	퍼시픽프렌드호	충남 태안	화물선(원목)	4,417	64.5	2020	2021
4	DURY호	전북 부안	화물선(철강)	5,552	47.5	2020	2022
5	마린스타엠	전남 신안	화물선(고철)	1,596	49	2022	2023
6	알데바란호	전남 신안	화물선(광물)	1,189	50	2022	2023
7	용산호	동해 삼척	화물선(석고)	1,981	50	2023	2024
8	제5영원호	부산 태종대	화물선(석고)	996	49	2024	2024
9	비고마리너호	부산	화물선(컨테이너)	2,905	60	2025	2025
10	알렉산드리아호	부산	화물선	8,328	60.5	2025	2025
11	안나스피라토우호	마산	화물선	15,080	56	2026	2027
12	JIN YING호	인천	화물선(철재류)	3,998	53	2025	2027
13	YISUN호	목포	화물선(고토석)	1,236	42	2026	2027
14	일진3호	울산	화물선(석고)	978	54	(추진예정)	

주) 제5영원호의 잔존유 확인은 2024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2023년부터 확인 작업을 시작함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 예산에는 용산호 회수 55억 1,000만원, 제5영원호 회수 50억원 등 2척의 잔존유 회수를 위하여 10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용산호 회수에 2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제5영원호 회수 비용은 집행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선박 3척에 대한 잔존유 확인과 9척에 대한 현장조사 작업을 추가로 실시하였음.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비교]

구 분	2024년 예산액 (산출근거)	2024년 결산액 (상세 집행내역)
현장조사	3억 5,000만원 ※ 5척×단가 7,000만원	9억 8,000만원 **※ 14척**×단가 7,000만원
잔존유 확인 및 회수	105억 1,000만원 ※ 용산호 회수 55억 1,000만원 제5영원호 회수 50억원	52억 100만원 집행 (46억 7,900만원 이월) ※ 용산호 회수 **25억 2,000만원** **비고마리너 확인 24억 7,000만원** **알렉산드리아 확인 25억 3,000만원** **진잉호 확인 23억 6,000만원**
합 계	108억 6,000만원	108억 6,000만원(이월액 포함)

자료: 해양환경공단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제5영원호 잔존유 회수의 경우 잔존유 확인 작업이 지연되어 2024년 4월 완료되었고, 잔존유 확인 결과 잔존유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회수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그리고 용산호의 경우는 잔존유 회수 방식을 예산 편성 시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포화 잠수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표면공급식 잠수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잔존유 회수 비용이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절감됨.

그런데 기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회수 비용이 절감되자 수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 사업에서는 2023년에는 당해연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제5영원호의 잔존유 확인을 추진한 바 있는 등 연례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2023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비교]

구 분	2023년 예산액 (산출근거)	2023년 결산액 (상세 집행내역)
현장조사	3억 5,000만원 ※ 5척×단가 7,000만원	8억 4,000만원 ※ **12척**×단가 7,000만원
잔존유 확인 및 회수	78억 4,500만원 ※ 용산호 확인 26억 9,500만원 마린스타엠호 회수 24억원 알데바란호 회수 27억 5,000만원	59억 7,700만원 집행 (8억 4,000만원 이월) ※ 용산호 확인 20억 5,300만원 마린스타엠호 및 알데바란호 회수 18억 2,900만원 **제5영원호 확인 20억 9,500만원**
합 계	81억 9,500만원	68억 1,700만원(이월액 포함)

자료: 해양환경공단

이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신규로 잔존유 확인 및 잔존유 회수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2024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을 2024년 집행잔액으로 신규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잔존유 확인 없이 잔존유 회수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상이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일례로, 위해도 저감조치 대상 선박에 대해 잔존유 확인을 우선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잔존유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 설계 및 절차 등이 미비한 상황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위해도 저감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잔존유 확인을 우선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잔존유 회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도 면밀한 계획 하에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사업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9.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재이월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개 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은 단위수협에서 운영 중인 노후화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을 개·보수하여 유류오염 사고를 방지하고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5억 1,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0]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은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리나비즈센터·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341억 600만원 중 331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10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4년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협지도경제 활성화	2,809	2,809	-	-	2,809	2,809	-	-	2,900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515	515	-	-	515	515	-	-	330
해양관광육성	40,836	40,836	348	-	41,184	39,562	255	1,366	33,941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34,106	34,106	-	-	34,106	33,101	-	1,005	28,66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은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전액이 수협중앙회로 교부되었고,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의 97.1%인 331억 1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었음.

20) 일반회계-수협지도경제활성화(3431-301)(수산정책실)

21) 일반회계-해양관광육성(2034-310)(해양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재이월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수협의 2024년 실제 재이월 금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를 위반하였음.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의 2023년 사업대상지는 거제·여수 및 통영 등 3개소로, 이 중 통영은 2023년 국고보조금 14억 9,3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에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다음연도로 재이월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수협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5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2024년 12월 9일 국고보조금 6억 6,700만원에 대해 재이월 승인을 받았음.[22)]

[2023년 교부된 보조금 중 2025년으로의 재이월 승인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조합명	조합별 교부액 (A)	집행액			이월액 (2025년 집행액) (C=A-B)
			2023년	2024년(계획)	계(B)	
2023년	통 영	1,493	-	826	826	667

자료: 수협중앙회

그러나 수협은 2024년에 실제로는 재이월 승인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8억 7,100만원을 2025년으로 재이월하였음.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사유에만 이월할 수 있으며, 재이월은 이월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보조금 재이월은 적절하지 않음.

---

2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4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 2일 재이월 변경 승인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재이월 이후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도 부합하지 않음.

둘째,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재이월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부합하지 않음.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의 내내역사업 중 일부는 2023년 교부된 보조금 중 일부를 2024년으로 이월하였음에도 2024년에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2025년으로 재이월함에 따라 2023년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에 교부된 보조금 중 26억 700만원이 2025년으로 재이월되었음.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의 내내역사업별 재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내내역사업명(지역)	2023년 교부액	2023년			2024년		재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경주)	1,000	-	-	1,000	751	-	249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보성)	1,800	-	-	1,800	504	-	1,296
해양치유 시범지구 조성(경남고성)	4,300	340	-	3,960	2,898	-	1,062
계	7,100	340	-	6,760	4,153	-	2,607

자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서는 보조금의 재이월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만 재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보조사업 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23)]

2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동 사업의 재이월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부서의 장의 승인(결재)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보조사업 담당 실무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재이월을 승인하고 있으며, 재이월 요청 사업이 재이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별도 검토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매월 SOC 협의체를 통하여 사업의 공정 현황을 연중 관리하고 있어 별도로 재이월 승인 관련 내부 승인(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재이월 업무 처리 방식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은 보조금 관리 업무 중 사업 집행 및 사후 관리 관련 업무는 과장 전결로 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24] 해양수산부는 향후 국고보조금 재이월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4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4)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별표] 전결사항(제6조 관련)

1. 공통사항

번호	단위업무		전결권자(○)						장관
			실무급	계장급	과장	국장	실장	차관	
27	보조금 관리	보조금 예산의 내역 통지			○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 현지 지도·점검 등 사업 집행			○				
		사후관리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총 괄〉

10. 세입 총괄: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증가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18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67억 3,400만원 중 504억 3,600만원이 수납(수납률 75.6%)되고, 162억 9,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1,820	31,820	66,734	50,436	16,298	-	75.6	32,171
구조개선 사업계정	24,961	24,961	53,564	41,534	12,030	-	77.5	25,142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6,859	6,859	13,170	8,902	4,268	-	67.6	7,02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대비 과소계상되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미수납액도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최근 3년 결산 내역을 보면, 구조개선사업계정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모두에서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100%를 크게 초과하여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고 있는 상황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연도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예산액	결산액 (수납액)	집행률 (수납률)	예산액	결산액 (수납액)	집행률 (수납률)	예산액	결산액 (수납액)	집행률 (수납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8,749	55,331	192.5	31,998	136,933	427.9	31,820	50,436	158.5
구조개선 사업계정	22,243	40,223	180.8	25,105	128,853	513.3	24,961	41,534	166.4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6,506	15,108	232.2	6,893	8,080	117.2	6,859	8,902	129.8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도 결산 기준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크게 발생한 세입과목은 구조개선사업계정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모두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임.

① 구조개선사업계정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의 최근 4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이 징수결정액 대비 과소계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의 경우 그 차이가 특히 크게 발생하였음.

[기타경상이전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18,692	18,692	-	**18,692**	**31,386**	25,361	135.6	80.8	6,025	-
2022	19,252	19,252	-	**19,252**	**25,690**	18,670	97.0	72.7	7,019	-
2023	21,395	21,395	-	**21,395**	**32,035**	19,332	90.4	60.3	12,704	-
2024	22,037	22,037	-	**22,037**	**48,537**	37,182	168.7	76.6	11,355	-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크나,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00% 미만인데 이는 미수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임.

동 세입과목의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을 보면, 2023년 예산까지는 최근 5개년도 평균 징수액을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격차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예산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년~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21,395,000	■ 최근 5개년 평균 징수액
2024예산	22,037,000	■ 2023예산 × 1.03(물가상승률)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동 세입과목은 국고보조금 잔액 등이 반납되는 계정이므로, 관련 사업의 규모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동 세입과목의 2024년 미수납액은 113억 5,500만원으로 이 중 109억 8,200만원은 관계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라 미수납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미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미수납액 중 관계기관 예산 부족 현황]

납부의무기관	미수납액(백만원)	미수납 내역
전라남도	5,705	2023년 유해생물 구제, 2019년 어업기반정비, **2016년 수산ICT융합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경상남도	1,470	2021년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경상북도	1,003	2023년 유해생물 구제, **2017년 자율관리어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충청남도	838	2021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전북특별자치도	772	**2019년 연근해어선감척**, 2023년 생분해어구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인천광역시	517	선어회가공공장 시설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환수액
울산광역시	328	2023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강원특별자치도	212	2023년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기타(부산, 충북 등)	137	2023년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합계	10,982	

자료: 해양수산부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최근 4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대비 과소계상되고 있는 상황임.

[기타경상이전수입(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5,687	5,687	-	**5,687**	**3,564**	**2,044**	35.9	57.3	1,520	-
2022	5,858	5,858	-	**5,858**	**11,152**	**7,636**	130.4	68.5	3,516	-
2023	6,034	6,034	-	**6,034**	**11,831**	**6,669**	110.5	56.4	5,162	-
2024	6,124	6,124	-	**6,124**	**11,743**	**8,359**	136.5	71.2	3,384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세입과목의 경우에도 전년도의 실제 수납액이 아니라 예산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세입예산을 산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었던 것으로 보임.

[2023년~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6,034,000	■ 2022예산 × 1.03(물가상승률)
2024예산	6,124,000	■ 2023예산 × 1.03(물가상승률)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의 미수납액은 33억 8,400만원으로, 이 중 31억 3,300만원은 관계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라 미수납되었는데,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미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미수납액 중 관계기관 예산 부족 현황]

납부의무기관	미수납액(백만원)	미수납 내역
전라남도	1,237	2023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전북특별자치도	1,027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강원특별자치도	441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경상북도	300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기타(충남, 경남 등)	128	2021년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환수금 등
합계	3,133	

자료: 해양수산부

③ 구조개선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최근 3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비교해보면 2024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기타재산이자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250	2,250	-	1,623	903	744	45.8	82.4	159	-
2023	1,672	1,672	-	1,672	1,160	894	53.5	77.1	266	-
2024	1,722	1,722	-	1,722	**4,188**	**3,761**	218.4	89.8	427	-

자료: 해양수산부

기타재산이자수입(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경우에도 최근 3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비교해보면 2023년부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세입예산액을 크게 초과함.

[기타재산이자수입(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288	288	-	288	246	230	79.9	93.6	16	-
2023	297	297	-	297	**675**	**638**	214.9	94.6	36	-
2024	306	306	-	306	**556**	**534**	174.6	96.1	22	-

자료: 해양수산부

이 두 세입과목의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세입예산을 산출함에 따라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기타재산이자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672,000	■ 2022예산 × 1.03(물가상승률)
2024예산	1,722,000	■ 2023예산 × 1.03(물가상승률)

자료: 해양수산부

[기타재산이자수입(농어촌특별세계정) 세입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297,000	■ 2022예산 * 1.03(물가상승률)
2024예산	306,000	■ 2023예산 * 1.03(물가상승률)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기타재산이자수입(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경우, 특히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RCMS)에 예치된 출연금 이자 수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는

데, 향후 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 이자의 규모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세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타재산이자수입(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중 연구개발비 이자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징수결정액	246	675	556
연구개발비 이자	188	528	495
연구개발비 이자 비중	76.4	78.2	89.0

자료: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11.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연도 중 사업 내용 확대·변경 부적정

가. 개 요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를 받는 단위해역의 수산물 안심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40억 9,300만원 중 37억 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6%)되고, 3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4년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산물 위생관리	25,510	25,510	3,031	-	28,541	26,794	327	1,419	24,489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16,609	16,609	2,347	-	18,956	17,710	2	1,244	15,834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4,093	4,093	-	-	4,093	3,708	-	385	3,38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물 위생관리(3041-303)(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반영 내역과 달리 연도 중 사업내용을 확대·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확대된 사업 내용이 타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은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예비비 6억원을 배정받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23년 7월 예비비 신청 시에는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필증 부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이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명칭 및 수행 방식 등이 변경되었고, 2024년 예산에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으로 반영되었음.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사업과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비교]

분류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사업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개념	양식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후 인근 양식장 어업인에게 거래처, 어상자, 활어차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필증 스티커 발급	주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받는 해역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하고 안심관리 마을 생산자에게 '수산물 안심관리마을 확인서' 발급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2024년에 2023년의 사업 추진 방식과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관리를 받는 해역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40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예산 세부내역]

○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40억 9,300만원
- 수산물 안심마을 관리 등 40억 8,500만원: 40,851건(지정확인서 발급 건수)×10만원(지정확인서 발급 경비 단가)
-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협의: 8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 편성 내역과 달리 사업 내용을 확대·변경하여 지정확인서 발급 뿐만 아니라 안심관리 마을에 대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등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였고, 이러한 사업내용을 토대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였음.

용역은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데, 용역결과보고서상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사업 내용인 지정확인서 발급 관련 경비보다 사실상의 신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안심관리 마을 홍보 및 소비 촉진 관련 경비가 더 많이 집행되었음.

[2024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용역결과보고서 중 사업비 발췌]

□ 수협중앙회

(단위: 천원)

구분	사업계획(a)	집행실적(b)	증감(b-a)	비고
합 계	1,359,432	1,359,432	-	-
□ 직접경비	1,153,408	1,153,408	-	-
○ 여비	4,935	4,935	-	-
○ 유인물비	42,500	42,500	-	-
○ 회의비	15,225	15,225	-	-
○ 임차료	1,500	1,500	-	-
○ 교통통신비	10,100	10,100	-	-
○ 사업추진비	1,079,149	1,079,149	-	-
- 해역관리자 수당, 조합 운영관리비	221,250	221,250		
- 지정확인서 발급	**98,250**	**98,250**		
- 홍보·회계 정산	23,960	23,960		
- 수산물 출하·유통물품 지원	**735,689**	**735,689**		
□ 인건비	160,053	160,053	-	-
□ 일반관리비	45,971	45,971	-	-

□ 한국어촌어항공단

(단위: 천원)

구분	사업계획(a)	집행실적(b)	증감(b-a)	비고
합 계	2,082,168	2,082,168	-	-
□ 직접사업비	1,547,915	1,547,915	-	-
○ 안심관리마을 물품지원	**1,063,648**	**1,064,853**	**+1,205**	**-**
- 유통·출하 물품지원	**923,772**	**923,772**	**-**	**-**
- 조사답례품 제작·배포	**43,087**	**43,087**	**-**	**-**
- 조사원 수당	**51,558**	**51,558**		**-**
- 임차료	**9,578**	**9,578**	**-**	**-**

구분	사업계획(a)	집행실적(b)	증감(b-a)	비고
- 인쇄 및 유인물비	**15,772**	**17,127**	**+1,355**	**-**
- 사무용품비	**2,011**	**2,002**	**△9**	**-**
- 공공요금 및 제세	**300**	**161**	**△139**	**-**
- 안심관리마을 사업안내	**17,570**	**17,568**	**△2**	**-**
○상품유통 지원	**193,622**	**193,622**	**-**	**-**
-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지원	**143,622**	**143,622**	**-**	**-**
- 특별장터·박람회 운영	**50,000**	**50,000**	**-**	**-**
○조사·평가 정책방향 연구	245,000	245,000	-	-
○국내여비	22,625	22,627	△18	-
○회의비	18,000	16,313	△1,687	-
○회계검증비	5,000	5,500	500	-
□ 인건비	416,394	416,394	-	-
□ 일반관리비	117,859	117,859	-	-

자료: 2024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용역결과보고서

이러한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안심관리 마을산 수산물’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출하·유통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안심관리 마을’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율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의 내용과 상이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인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사업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대된 사업 내용은 기존의 사업과 중복가능성도 있어 보임.[26] 또한 해당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1,363억 2,100만원으로 예산 규모도 훨씬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상 당초 편성 사유였던 지정확인서 발급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9,825만원으로 예산 편성액의 1/40 규모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편성된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계상되었음. 특히 지정확인서 발급 실적이 연간 52,150건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직접 소요 경비가 크지 않

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아 당초 예산 편성 시 단가 설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024년 지정확인서 발급 실적]

지역별구분	누적발급수(건)	지역별구분	누적발급수(건)
경기・인천	555	부산・울산・경남	12,171
충남	3,358	제주	2,689 (서면발급 1,892건 포함)
전북	1,515	경북	747
전남	29,968	강원	1,147
합 계		52,150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추진 시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함에 따라 사업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내용과 달리 확대・변경되고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12.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을 위한 점검 및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소비자 물가 안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국산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337억 7,300만원 중 1,337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4년도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36,321	136,321	-	-	136,321	136,257	-	63	151,748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133,773	133,773	-	-	133,773	133,735	-	38	15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지원에 관리비 등 포함 1,317억 7,300만원이,[28)] 지방자치단체 자체 할인행사 지원에 19억 6,2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의 유통경로별 집행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375억 4,900만원, 중소유통 136억 500만원, 온라인쇼핑몰 207억 7,100만원, 전통시장 473억 6,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어 전통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음.

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수산정책실)

28) 1,317억 7,300만원 =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1,316억 5,300만원 + 수산분야 현안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억원 + 할인행사 관리 감독 1,000만원 + 할인행사 간담회 등 1,000만원

[2024년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의 유통경로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계획(A)	집행액(B)	집행비중	집행률(B/A)
대형마트	37,569	37,549	28.6%	99.9%
중소유통	13,605	13,605	10.4%	100.0%
온라인쇼핑몰	20,771	20,771	15.8%	100.0%
전통시장	47,852	47,369	36.1%	99.0%
합계	131,651	131,149	100.0%	99.6%

주) 제로페이 행사는 전통시장에 포함됨

자료: 해양수산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지원의 할인 적용 방식은 할인쿠폰 발행, 구매 금액 구간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 유통경로별로 상이함.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소비처별 할인 적용 방식]

구분	적용방식	할인 한도
대형마트	· 대형마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인쿠폰 발행 · 대형마트 회원 확인을 통해 할인쿠폰 적용 · 대형마트 자체할인 병행	구매금액 합계에서 할인율 20% 적용, 행사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 최대 1만원 * 명절 물가 관리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한도(1→2만원) 및 할인율(20→30%) 상향
온라인 쇼핑몰	·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인쿠폰 발행 · 최종 결제과정에서 할인쿠폰 적용 · 온라인쇼핑몰 자체할인 병행	
중소유통	· 중소유통 업체별 회원 확인을 통해 할인쿠폰 적용 · 중소유통 업체별 자체할인 병행	
전통시장	· 전통시장 참여점포 내 국산 수산물 결제 시 구매 금액 구간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증정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권 최대 2장 지급
제로페이	· 20% 先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대전 전용 상품권 발행	1인당 최대 2만원 (회차별 1인당 최대 10만원 구매가능)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관련 부정환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환급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29] 환급대상은 국산 수산물이며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됨.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확대되면서[30] 이와 관련한 부정환급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 사업의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수산물이나 비(非)수산물 환급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수입수산물 환급 적발은 전체 적발 건수의 52.9%, 비(非)수산물 환급 적발은 전체의 11.8%에 달함. 그리고 허위영수증 발급 적발도 전체의 24.4%에 달하여 비중이 높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부정환급 적발 사례(2025년 5월말 기준)]

(단위: 건)

구분	수입 수산물 환급	비(非) 수산물 환급	허위 영수증 발급	분할결제 권유	일반 음식점 대리발급	영수증 대리발급	상인회 관리부실	합계
2023년	**30**	**-**	17	1	1	1	-	50
2024년	**17**	**6**	5	4	2	1	-	35
2025년	**16**	**8**	7	1	-	-	2	34
합계	**63 (52.9%)**	**14 (11.8%)**	**29 (24.4%)**	6 (5.0%)	3 (2.5%)	2 (1.7%)	2 (1.7%)	119 (100.0%)

주) 전통시장 내 점포단위로 적발건수를 취합하였으며, 하나의 점포에서 여러 유형의 적발 사례가 있을 경우 유형별로 모두 기재함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부정환급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부정환급 적발 시 향후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상인회와 협력하여 사전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 인력도 배치하는 등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특정 시기에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부정환급 여부를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발된 사례 외에도 부정환급이 다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동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과 비교해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2024년 3,513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부정유통 적발

29)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 범위별 환급액>
- 구매금액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1만원 환급
- 구매금액 67,000원 이상: 2만원 환급

3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
(2021년) 34억 3,100만원 (2022년) 56억 9,800만원 (2023년) 621억 1,400만원 (2024년) 344억 5,200만원

건수는 124건으로, 28억 3,300만원 당 부정유통 1건이 적발되었으나, 동 사업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2024년 34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부정환급 적발 건수는 35건으로, 9억 8,400만원 당 부정환급 1건이 적발되어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 대비 부정환급이 적발 비율이 높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면밀히 협의하여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수검 실적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전체 어업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6억 8,700만원 중 10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1%)되고, 6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31)]

[2024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967	2,967	-	-	2,967	2,283	-	684	3,652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1,687	1,687	-	-	1,687	1,030	-	657	1,17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2022년~2024년 수검 목표 인원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수검 실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나잠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검사, 골밀도 검사, 심혈관계 질환 검사, 난청(소음) 검사 등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동 사업은 시작 첫 해인 2022년부터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2022년 11월에 대상자 연령을 확대(50세부터 69세까지 → 45세 이상)하였음에도 실제 수검인원이 목표에 크게 미달(36.8%)하였고, 2023년에도 수검률이 37.4%에 불과하여 수검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그리고 2024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의 연령기준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

통일 등을 위하여 수검대상 연령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5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검대상 인원이 감소였음에도, 수검 목표치를 11,764명으로 크게 상향하였고, 예산도 전년 대비 13억 1,600만원(354.7%) 증액된 16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4년에도 실제 수검실적이 저조하여 수검률이 11.5%에 불과하였음.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수검목표 인원 및 실제 수검인원(2025년 7월말 기준)]

(단위: 명, %)

연도	수검 목표 인원(A)	실제 수검인원(B)	수검률(B/A)
2022년	1,500	552	36.8
2023년	1,800	674	37.4
2024년	11,764	1,350	11.5
2025년	8,246	320	3.9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의 실집행실적도 37.9%에 불과하여 저조하였음.

[2024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C)			
1,687	1,687	1,030	1,030	-	1,687	640	1,687	640	-	1,047	37.9

자료: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동 사업과 유사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4년 목표 검진인원 30,000명 대비 실제 수검인원이 18,687명으로 62.3%의 수검률을 기록하여 해양수산부의 수검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비교하여도 크게 저조하였음.

동 사업은 2023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지방비 확보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24년의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의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주된 원인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이 많아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 중으로,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충남지역에서 병원선을 운행하여 건강검진을 진행하였고, 2025년부터는 검진병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검진버스와 병원선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

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사업 성과가 당초 목표 대비 크게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사업은 해당 사업연도 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2025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검 희망자가 사업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2022년~2025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수요조사 결과]

(단위: 명)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부산광역시	-	-	180	108
인천광역시	-	-	39	39
경기도	-	-	107	84
강원특별자치도	273	52	98	32
충청남도	1,000	127	604	390
울산광역시	-	61	-	50
전북특별자치도	484	107	330	357
전라남도	-	559	1,605	1,605
경상북도	680	-	646	307
경상남도	450	64	839	352
제주특별자치도	566	-	402	165
합 계	3,453	970	4,850	3,489
(수검 목표 인원)	(1,500)	(1,800)	(11,764)	(8,246)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실제 수검인원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수검 희망자 수를 고려하여 향후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검 목표치를 하향조정하여 연간 수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친한세력을 확보하고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55억 7,300만원 중 416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5%)되고, 27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32)]

[2024년도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연안국과의 협력(ODA)	43,647	43,647	1,926	-	45,573	41,679	2,757	1,137	44,95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2024년 신규로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사업 5건 중 2건의 추진이 지연되어 협의의사록 체결 및 1차년도 약정액 지급이 연말에 이루어진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와의 사전 협의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서 2024년 신규로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이 중 3건은 6월에, 나머지 2건은 11월~12월에 국제기구와의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부담금 33억 1,200만원이 12월말에 집행되었음.

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연안국과의 협력(ODA)(3542-302)(해양정책실)

[2024년 신규 협의의사록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국제기구	협의의사록 체결일	2024년 예산 집행일	지급액
동아시아 해역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 사업	IUCN	2024.6.14.	2024.6.23.	1,200
PSMA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	FAO	2024.6.21.	2024.7.2.	434
세계해사대학(WMU) 연안개도국 IUU 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WMU	2024.6.26.	2024.6.26.	500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개발:런던의정서 이행 지원	**IMO**	**2024.11.11.**	**2024.12.26.**	**1,408**
피지·통가·바누아투 저탄소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	**GGGI**	**2024.12.23.**	**2024.12.31.**	**1,904**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협의의사록 관련 국제기구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건이 11월~12월에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국제기구와의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국제부담금이 12월에야 납부된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및 국제기구 일정 협의 등이 미흡했음을 나타냄.

또한 연말에 국제부담금이 납입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당해연도에 실질적인 사업 착수나 성과 창출로 연계되지 못한 한계도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신규로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사전 협의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역사업인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는 실집행단계에서 사업의 추진이 10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사업 추진의 추이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사업은 가나의 수산업 가공 역량 부족으로 수산 자원 낭비 및 가계 소득 창출 한계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수산물 가공·위생·보관시설 개보수,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체계 개선방안 제시, 현지 어민단체 연계 여성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임.

사업기간은 2023년~2026년이고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의 지원을 할 예정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사업 연차별 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계
금 액	10	10	10	10	40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이 사업은 최초 사업연도인 2023년도부터 개보수공사 설계 및 시공 관련 계약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실집행단계에서 8억 8,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차연도 사업이 2024년 9월에야 종료되었음.

[2023년~2024년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예산 현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2023년	1,000	1,000	1,000	1,000	-	1,000	117	1,000	117	883	-	11.7
2024년	1,000	1,000	1,000	1,000	883	1,883	1,009	1,000	126	850	24	12.6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2차연도 사업은 2024년 10월에야 시작하여 2024년도에 교부된 보조금 10억원 중 1억 2,600만원만 집행(집행률 12.6%)되고 8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당초 2024년에 계획된 구조물 시공 등이 2025년에 실시될 예정임.

[현지 수산가공시설 개보수 관련 연도별 공정표]

구분	주요공정	비고
1차연도 (2023)	사업착수 및 설계 부지 정지 및 기초공사 인허가 및 행정절차(설계 관련)	기초조사, 기본·실시설계 매립, 기초 타설 등 현지 행정협의 (준공 완료, '24.10.)
2차연도 (2024)	구조물 시공(골조) 벽체·창호 설치 내부 벽체·바닥 시공 전기·수도 등 인입설비 정비	A~D동 기둥, 벽체, 지붕 등 창호, 단열, 블록 공사 내장재 기존 인프라 보완 ('25.6.-'25.9. 예정)
3차연도 (2025)	전기·기계·배관 설치 기자재 설비	냉장 설비, 조명, 배수관 등 기자재 (훈연장비 등) 지원
4차연도 (2026)	마감공사 준공검사 As-built 최종 문서 작성 최종 인허가 및 인수인계	도장, 천정, 외부 마감 해당 기관 도면, 사용 설명서 포함 가나 수산위원회, 가나 항만청 승인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2025년 3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2차연도 사업 중간보고서에는 건축공사 용역 발주 등이 지연됨에 따라 2차연도의 사업기간을 2025년 9월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동 사업은 이처럼 최초 사업연도부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의 추진 추이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15.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지원대상 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가. 개　요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62억 3,300만원 중 970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3%)되고, 8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3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33)]

[2024년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산 공익직불제	106,233	106,233	-	-	106,233	97,022	821	8,390	111,806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54,002	54,002	-	-	54,002	46,980	793	6,229	53,002
경영이양 직불	466	466	-	-	466	377	-	89	46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은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액 540억 200만원 중 469억 8,000만원이 집행(87.0%)되고 7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2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경영이양 직불’**은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어촌사회를 유지하기

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수산 공익직불제(3460-310)(수산정책실)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액 4억 6,600만원 중 3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9%)되고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은 지원대상 인원을 부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금액이 불용되었으므로, 지원대상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은 부처 단계에서 예산액의 87.0%인 469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2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단계에서 교부액 중 378억 3,200만원만 집행되고 1억 8,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9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에 따라 실집행률도 70.1%로 부진함.

[2024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54,002	54,002	46,980	46,980	-	46,980	37,832	183	8,965	70.1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까지 동 사업의 내역사업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로, 조건불리지역 어가에 대한 직불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3년 법 개정으로 내역사업명이 변경되고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불이 추가되었음.

[법 개정에 따른 내역사업 명칭 및 지원대상 비교]

구분	2022년까지	2023년부터
내역사업 명칭	조건불리지역 직불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 어가	소규모 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 이후 동 사업의 지급대상 인원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소규모 어가,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 모두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

[2023년~2024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 지급대상 인원 비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A)	실적(B)	차이(B-A)	계획(A)	실적(B)	차이(B-A)
소규모 어가	22,665호	16,531호	△6,134호	22,665호	19,536호	△3,129호
어선원	15,000명	7,458명	△7,542명	15,000명	7,502명	△7,498명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	9,417호	5,739호	△3,678호	9,417호	4,683호	△4,734호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아직 사업 초기로 홍보 부족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고, 어업외소득 제한을 초과하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예상 대비 많이 발생하여 지원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34)]

[직불금 지급대상별 예산안 편성 기준 및 지원실적 저조 사유]

구분	예산안 편성 기준	지원실적 저조사유
소규모 어가	ㅇ 소규모어가 직불제 도입 시 직불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허가·면허·신고 어가 수 *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5톤이하 어선업 11,399호, 매출 1억원 미만 양식업 775호, 신고어업 10,490호, 총 22,665호 X 130만원)	ㅇ 아직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도입('23년~) 초기이며, 홍보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실적 추세는 증가세) ㅇ 직불제 운영 과정에서 법·제도 사각지대 발생 (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ㅇ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인한 어황 악화로 어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어업외소득 제한 초과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가 발생
어선원	ㅇ 어선원 직불제 도입 시 직불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원 수 * 연근해 어선(내수면 어선 포함) 승선기록 연간 6개월 이상 존재하는 내국인 어선원 15,000명 X 130만원	ㅇ 아직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도입('23년~) 초기이며, 홍보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실적 추세는 증가세) ㅇ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인한 어황 악화로 어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어업외소득 제한 초과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선원 발생 ㅇ 최소 승선일 요건(6개월)을 만족하는 어선원 수 감소(감소하고 있는 출어일수를 감안할 때 승선일 요건 완화할 필요)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	ㅇ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 어가 중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예상 어가 및 농업직불금 수령 예상 어가를 제외한 어가 수(9,417호)	ㅇ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도입할 때의 예상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중복인 조건불리지역 어가가 많아, 실적 감소

자료: 해양수산부

34) 어업외소득 제한 요건 미충족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 (2023년) 813명, (2024년) 1,395명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2023년 신설되면서 지급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 해양수산부가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내에서 타 직불금을 지속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요건 미충족 비율 등은 타 직불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2024년 결산 결과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지급인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이러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3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에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불용 규모도 컸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향후 2023년과 2024년의 직불금 지급실적 등을 바탕으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의 대상인원에 대한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영이양 직불 사업은 사업목표 대비 성과가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년어업인 유입·정착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경영이양 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도입된 제도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을 영위한 고령 어업인(만 65세 이상~만 74세 미만)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을 완료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함. 직불제 지원단가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최소 연 120만원, 최고 연 1,440만원임.

[경영이양 직불제 지급단가]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연간)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2,400만원 초과
경영이양직불금	120만원	60% 지급	1,44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 사업은 당초 수협중앙회가 실시한 경영이양 직불금 사업참여 희망자 조사 결과 2021년~2030년 기간 중 총 6,720명이 참여를 희망한다는 수치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10년 동안 경영이양 직불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전국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촌계원(약 30,000명)의 10% 수준인 3,0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음.[35)]

35) 이후 대상 연령이 65세~79세로 확대되었음(2026년말까지 한시적).

이에 사업시작 첫 해인 2021년에 연간 수급인원 300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까지의 누적 수급인원은 36명에 불과하고 2024년 신규 수급인원도 6명에 그쳐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함.

[2021년~2024년 경영이양직불금 수급인원 목표 대비 실적]

구분	목표 수급인원	실제 수급인원(누적)	신규 수급인원
2021년	300명	6명	6명
2022년	300명	13명	7명
2023년	38명	30명	17명
2024년	36명	36명	6명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실적 저조로 실집행률도 저조하여 2021년은 불용액 39억 6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1.5%이고, 2022년에도 집행저조로 연도 중 35억원을 이·전용을 통해 감액하여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5.5%에 불과함.

2023년 이후에는 예산액이 2021년~2022년에 비하여 1/8 수준으로 감소하여 실집행률은 예년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나, 누적 수급인원이 여전히 30명대에 머물러 있어 최초 연간 목표 수급인원이 3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적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021년~2024년도 경영이양 직불 사업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C)	이·전용 등(D)	예산현액 (B+C+D)	집행액	실집행액 (E)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E/A)
	본예산(A)	추경(B)								
2021년	3,966	3,966	-	-	3,966	466	60	-	3,906	1.5
2022년	3,966	3,966	-	△3,500	466	466	218	-	248	5.5
2023년	500	500	-	-	500	246	232	-	268	46.4
2024년	466	466	-	-	466	377	361	-	105	77.5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당초 사업의 취지 및 목표와 달리 실적 부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업인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어선청년임대 사업,[36]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37]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38]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3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어선청년임대(3145-303)

경영이양 직불 사업은 이 중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과만 직접 연계되어 추진 중인 상황으로,[39] 경영이양 직불 사업과 청년어업인 유입 및 정착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경영이양 직불 사업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3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청년어촌정착지원(3347-363)

3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장)-양식장임대(3347-367)

39)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자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함.

16.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집행가능액을 초과한 이월액 즉시 반납 필요

가. 개 요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사용 전력사용 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사용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6억 100만원 중 28억원이 집행(집행률 50.0%)되고, 28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40]

[2024년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5,601	5,601	-	-	5,601	2,800	-	2,801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2년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른 양식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1인당 최대 44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금액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함.[41]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수협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어업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수협에 제출하고, 한전이 지원사업 신청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기초자료를 수협에 통보하며, 수협에서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전에 통보함.

해양수산부는 수협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한전이 전기요금 차감액을 정산하여 수협에 자금 이체 요청을 하면 수협이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짐.

4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3440-3720(수산정책실)

41) 44만원 = 234,014kWh(2022년 기준 호당 연간 전력 사용량) × 18.8원/kWh (2022.1월~2023.5월 간 전력량 요금 인상분) × 10%(지원비율)

나. 검토의견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2025년으로의 이월액이 실제 집행가능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집행가능액을 초과한 이월액은 즉시 반납하고, 향후 타 보조사업에서도 집행가능액을 초과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동 사업은 어업인의 사업 신청 및 심사·감면 대상 확정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감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부터 감면 시까지 시차가 소요됨.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게 1인당 44만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44만원에 미달하더라도 2025년 12월까지만 지급할 예정임.

동 사업은 지원 신청 이후 실제 감면까지 시차가 소요됨에 따라 실집행실적이 저조하여 2024년 4월 보조금 28억원이 보조사업자인 수협에 교부된 후 실집행단계에서 19억 4,6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C)			
5,601	5,601	2,800	2,800	-	2,800	854	2,800	854	1,946	-	15.2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을 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582명에 대한 감면이 완료되었고, 감면 중이거나 감면 예정인 지원대상자는 359명이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대상자는 444명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자수(2,481명)				
지원대상(1,941명)			검토 중***	지원제외****
감면완료	감면 중*	감면예정**	444명	96명
1,582명	200명	159명		

* 감면 중 : 지원한도 44만원 미소진자
** 감면예정: 심사·시스템 반영 소요 시간 등으로 인해 2024년 전기료 미감면자로, 2025년 1월 전기료부터 감면예정
*** 검토 중 : 체납여부, 분류코드 등 한전 검토 진행 중
**** 지원제외: 중복신청(83명), 비양식어업(6명), 신청취소(7명)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원대상자 359명과 지원대상 검토 중인 444명을 더한 지원 가능 대상자는 803명으로 이들이 모두 2025년 내 44만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년 집행가능액은 3억 5,332만원에 불과함.

그런데 2025년으로의 이월액은 19억 4,600만원으로, 이월액 산정이 잘못 이루어짐에 따라 2025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15억 9,268만원이 불필요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료 지원 신청을 받음에 따라 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교부한 보조금 잔액을 전체 이월하였으며, 신청자에 대한 지원요건 확인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시 미집행금액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보조금은 연내 집행이 원칙이고 이월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월할 경우에도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만큼만 이월하여야 함.

따라서 보조사업자인 수협은 집행가능액을 초과한 이월액을 즉시 국고에 반납하고, 해양수산부는 향후 타 보조사업에서도 집행가능액을 초과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세 출〉

17.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총괄: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 다수 발생 부적정

가. 개 요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은 항만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항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49개의 세부사업[42]으로 구성되는데, 2024년 예산현액 1조 7,552억 4,600만원 중 1조 5,090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0%)되고 1,015억 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46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43]

[2024년도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1,660,957	1,660,957	94,289	±82,325	1,755,246	1,509,042	101,566	144,637	1,754,48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은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단위 기준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이 다수 있는 등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 개선을 통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42) 교통시설특별회계(40개 세부사업), 일반회계(3개 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6개 세부사업)

43)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등-항만개발 및 관리(5000)(해양수산부)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의 2024년 집행실적을 보면,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단위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해당 예산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등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한 사업이 다수 있음.

우선 세부사업 기준으로 예산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으로 예산액 8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2024년 예산 전액이 불용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800	800	-	-	800	-	-	800	100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은 있으나 내역사업 기준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은 부산항 북항 파제제 사업 등 13개가 있는데, 예산액 기준으로 215억 6,300만원 규모임.

[2024년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은 있으나 내역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부산항	9,368	9,368	42	△4,925	4,485	1,461	2,430	594	4,000
북항 파제제	**5,000**	**5,000**	**-**	**△2,159**	**2,841**	**-**	**2,381**	**460**	**-**
연구조사선부두	3,000	3,000	-	△2,980	20	-	-	20	-
새만금 신항	162,800	162,800	8,988	△2,415	169,373	131,885	9,436	28,052	138,151
방파제(연장) 축조	3,360	3,360	-	△2,780	580	-	-	580	37,041
마리나항만	3,300	3,300	8,465	-	11,765	353	2,517	8,895	1,200
여수웅천마리나	2,485	2,485	4,140	-	6,625	-	2,485	4,140	1,041
안산방아머리 마리나	500	500	4,233	-	4,733	-	-	4,733	100
동해신항	32,361	32,361	5,658	△14,354	23,665	10,925	2,021	10,719	99,960
관리부두 등	2,641	2,641	565	-	3,206	-	600	2,606	283
부산북항 재개발	22,926	22,926	105	4,866	27,897	24,652	436	2,809	1,106
북항 재개발 2단계 재정지원	2,619	2,619	-	-	2,619	-	-	2,619	261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항만 재개발	5,543	5,543	246	△1,537	4,252	3,423	240	589	7,591
항만재개발 총사업비 산정(묘도)	200	200	-	-	200	-		200	-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1,000**	**1,000**	**-**	**△700**	**300**	**-**	**-**	**300**	**4,442**
일반항	69,614	69,614	12,809	△4,760	77,663	68,651	4,201	4,811	98,779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 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300	300	-	-	300	-	300	-	-
부산항 신항만(1단계)	37,880	37,880	4,412	△1,800	40,492	34,168	3,680	2,644	21,312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58	258	360	-	618	-	-	618	-
인천북항	11,100	11,100	-	1,023	12,123	11,965	100	58	3,100
북성포구 투기장 상부시설 조성	100	100	-	-	100	-	100	-	100
울산신항	138,762	138,762	431	3,760	142,953	142,741	-	212	55,710
사후평가	100	100	-	-	100	-	-	100	-

자료: 해양수산부

이 중 부산항 사업의 북항 파제제 내역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역 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23년과 2024년에는 집행실적이 극도로 부진하고, 2024년에는 예산액이 이·전용으로 감액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음.

[북항 파제제 사업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2022년	2,300	2,300	-	-	2,300	1,772	2,300	1,772	132	396
2023년	2,500	2,500	132	**△2,394**	238	**132**	106	**-**	**-**	**106**
2024년	5,000	5,000	-	**△2,159**	2,841	**-**	2,841	**-**	**2,381**	**460**

자료: 해양수산부

기타항만재개발 사업의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관계기관 간 협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2023년~2024년에는 연도 중 예산의 대부분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조정되고, 잔액은 전액 불용되는 등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음.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2020년	1,300	1,300	-	-	1,300	926	1,300	926	124	250
2021년	100	100	124	-	224	127	100	3	-	97
2022년	7,814	7,814	-	△4,177	3,637	7	3,637	7	-	3,630
2023년	1,000	1,000	-	△995	5	-	5	-	-	5
2024년	1,000	1,000	-	△700	300	-	300	-	-	300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는 않았더라도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도 다수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항만보안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60% 미만이었음.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이 60% 미만인 사업(직접수행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집행률 (C/A)	예산액
	본예산	추경(A)								
항만보안시설 확충	6,718	6,718	23	1,037	7,778	3,483	4,016	279	51.8	10,673
마리나항만	3,300	3,300	8,456	-	11,765	353	2,517	8,895	10.7	1,200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10,200	10,200	-	△4,900	5,300	3,105	595	1,600	30.4	9,180
동해신항	32,361	32,361	5,658	△14,354	23,665	10,925	2,021	10,719	33.8	99,960
부산항	9,368	9,368	42	△4,925	4,485	1,461	2,430	594	15.6	4,000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제주외항(2단계) 등 3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실집행실적이 60% 미만으로 저조하였고, 특히 제주외항(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전액이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였으나, 실집행단계에서 예산의 0.1%만 실집행되어 실집행실적이 극도로 저조하였음.

[세부사업 기준 실집행실적이 60% 미만인 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C)		
제주외항(2단계)	**4,535**	**4,535**	**4,535**	**4,535**	**2**	**4,537**	**2**	**4,535**	**-**	**4,535**	**0.1**
화순항	6,222	6,222	6,222	6,222	3,297	9,519	6,037	6,222	3,047	3,175	49.0
추자항	5,100	5,100	5,100	5,100	1,684	6,784	2,572	5,100	1,952	4,212	38.3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60% 이상이나 내역사업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도 진해신항 사업의 준설토투기장(3구역) 내역사업 등 12개 사업에 달함.

[내역사업 기준 집행실적이 60% 미만인 사업(직접수행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집행률 (C/A)	예산액
	본예산	추경(A)									
부산항 신항만(1단계)	37,880	37,880	4,412	△1,800	-	40,492	34,168	3,680	2,644	90.2	21,312
용원수로 정비	9,977	9,977	1,890	△8,968	-	2,899	1,470	137	1,292	14.7	5,453
진해신항	404,734	404,734	322	△9,287	-	395,769	284,603	47,694	63,472	71.9	434,650
준설토투기장 (3구역)	143,242	143,242	50	△9,287	-	134,005	79,572	33,173	21,260	55.6	129,542
남측 방파호안	45,000	45,000	50	-		45,050	2,007	1,278	41,765	4.5	133,611
서컨 배후단지	400	400	31	-		431	31	-	400	7.8	-
평택·당진항	27,330	27,330	166	△2,634	-	24,862	22,242	1,979	641	81.4	71,755
진입도로	1,803	1,803	18	△1,053	-	768	21	747	-	1.2	42,931
창고2동	125	125	28	-	-	153	31	-	122	24.8	3,827
새만금 신항	162,800	162,800	8,988	△2,415	-	169,373	131,885	9,436	28,052	81.0	138,151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14,891	14,891	5,763	△5,000	-	15,654	6,330	4,374	4,950	42.5	-
북측진입도로 등 개설	28,070	28,070	300	-	-	28,370	4,421	2,333	21,616	15.8	34,468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집행률 (C/A)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인천항	16,221	16,221	874	761	-	17,856	13,448	4,391	17	82.9	16,616
영종도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4,509	4,509	-	△102	-	4,407	31	4,376	-	0.7	600
목포항	10,917	10,917	1,335	4,940	-	17,192	16,333	706	154	149.6	18,529
여객부두 개축	1,852	1,852	5	△1,160	-	697	12	685	-	0.7	4,544
일반항	69,614	69,614	12,809	△4,760	-	77,663	68,651	4,201	4,811	98.6	98,779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1,500	1,500	69	△965	-	604	195	407	3	13	8,268
여수신북항	4,831	4,831	669	922	-	6,422	5,662	402	358	117.2	4,327
여수신북항 건축	2,892	2,892	-	△2,400	-	492	89	402	1	3.1	3,939

자료: 해양수산부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60% 이상이나 내역사업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보조사업도 광양항(3단계) 사업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내역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음.

[내역사업 기준 실집행실적이 60% 미만인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C)		
인천남항	100	100	100	100	8,969	9,069	6,891	100	-	2,178	-
아암 지하차도 건설	100	100	100	100	8,969	9,069	6,891	100	-	2,178	-
광양항(3단계)	82,435	82,435	82,435	82,435	75,340	157,775	15,110	82,435	453	142,665	0.5
북측배후단지 조성	851	851	851	851	3,558	4,409	4,006	851	453	403	53.2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81,584	81,584	81,584	81,584	71,782	153,366	11,104	81,584	-	142,262	-

자료: 해양수산부

이처럼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있어,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편성되는 등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는 공사비 상승분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대형공사가 유찰되는 경우가 예년 대비 많이 발생하였고, 항만공사의 특성상 기상여건의 가변성으로 공사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계획 대비 집행실적 및 실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은 실제 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 관리 개선을 통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시 해양수산부의 항만 사업 등의 집행이 저조하여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체계와 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집행관리점검단 신설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44)]

---

44) <부대의견에 대한 해양수산부 조치결과>

ㅇ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은 절차를 거쳐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재정지원시설(기반시설 등)은 정부에서 직접 관리·추진 중

- 진행 중인 항만재개발사업 2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이 지연된 광양항 묘도 재개발사업 재정지원시설(송배수, 폐수)은 설계결과 사업비 증가(추정 335억원→설계 685억원)로 인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진행 중인 예산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 완료 즉시 공사 발주 및 면밀한 사업관리 추진

  * 대상사업 : 광양항 묘도 재개발,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재개발

-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시설은 연결도로 공사 '24.7월 착공 등 정상 추진 중임

- '25년 예산반영 사업에 대해 집행관리점검단을 구성('25.1.)하고 상반기 집행점검 실시 완료('25.3.), 하반기 집행점검 등을 통해 집행율 지속 관리

※ 조치완료일: 2025년 3월 19일

18.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은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국내 기술 중심의 항만자동화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815억 8,4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5)]

[2024년도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광양항(3단계)	176,101	176,101	15,669	837	192,607	192,394	107	105	145,505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81,584	81,584	-	-	81,584	81,584	-	-	5,54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 5월말 기준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의 총사업비는 3,801억 4,200만원으로 국비 50%, 여수항만공사 50% 재원을 분담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2028년으로 7년임.

45)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광양항(3단계)(5050-316)(항만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비 고
	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2022년(1년차)	4,599	2,782	1,817			-	기초자료조사 및 타당성평가
2023년(2년차)	69,000	68,476	474		50	-	총사업비 협의 등
2024년(3년차)	81,584	80,984	162,568	500	100	-	ARMGC, AGV 착수
2025년(4년차)	5,541	3,281	-	1,937	60	263	DTQC 및 우선시공분 착수
2026년(5년차)	56,625	56,000	-	500	-	125	기반시설공사 착수
2027년(6년차)	107,000	105,900	-	1,000	25	75	기반시설공사 및 장비 제작
2028년(7년차)	55,793	55,261	-	437	35	62	사업 준공
합계	380,142	372,684	164,859	4,374	270	525	-

주) 총사업비 중 국고부담분(보조율 50%)만 기재한 것임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광양항(3단계) 사업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내역사업은 당초 2026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완공시기가 2028년으로 늦추어졌는데, 항만자동화 기술 실증 등 동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항만 구축은 해외 대비 상당히 늦은 수준이며, 국내 기업의 스마트 항만기술력도 선진국 대비 뒤처진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광양항에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국내 자동화 항만을 도입하고 컨테이너 부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였음.

동 사업은 최초 계획 시에는 2026년 12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2025년 5월말 기준 2028년 완공 및 2029년 정식개장 예정임.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구 분		최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부지 선정		2020.10.	2020.10.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2020.12.	2020.12.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1.2.	2021.2.	
공공기관 예타면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022.2.	2022.2.	
장비	ARMGC	2023.9.~2028.5.	2024.8.~2029.7.	사업 순연
	AGV	2023.7.~2028.6.	2024.9.~2029.8.	
	DTQC	2023.11.~2027.11.	2025.1.~2029.1.	
기반 시설	현장설명회	2023.12.	2025.2.	
	제영향평가	2023.7.~2024.11.	2023.7.~2025.12.	
	기본설계	2023.12.~2024.4.	2025.2.~2025.6.	
	기본설계 심의	2024.5.	2025.8.	
	실시설계	2024.6.~2024.10.	2025.9.~2026.1.	
	실시설계 수의시담	2024.11.	2026.2.	
본공사 착수		2024.12.	2026.3.	
본공사 완공		2026.12.	2028.4.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지연에 따라 실집행률도 저조하여, 2022년에는 29.3%, 2023년 및 2024년에는 실집행실적이 없고 2024년에 1,422억 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22	4,599	4,599	4,599	4,599	-	4,599	1,346	4,599	1,346	3,253	-	29.3
2023	69,000	69,000	69,000	69,000	3,253	72,253	471	69,000	-	71,782	-	-
2024	81,584	81,584	81,584	81,584	71,782	153,366	11,160	81,584	-	142,206	-	-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사업 지연 및 실집행실적 저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3년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순연되었고, 2024년에는 공사 등 입찰이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이후에는 2029년 정식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동 사업은 항만자동화 기술 실증을 위하여 추진되었고 동 사업의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진해신항의 스마트항만화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공시기가 추가적으로 지연될 경우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19. 마리나 항만 사업: 관계기관 간 협의 강화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리 필요

가. 개 요

‘마리나 항만’ 사업은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처리 기능,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7억 6,500만원 중 3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3.0%)되고, 25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8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46)]

[2024년도 마리나 항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마리나 항만	3,300	3,300	8,465	-	11,765	353	2,517	8,895	1,200
여수웅천마리나	2,485	2,485	4,140	-	6,625	-	2,485	4,140	1,041
안산방아머리 마리나	500	500	4,233	-	4,733	-	-	4,733	1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여수웅천마리나’**는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6억 2,500만원 중 집행액은 없고(집행률 0%), 24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안산방아머리마리나’**는 경기 안산시 대부북동 방아머리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7억 3,300만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되었음.

46)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마리나 항만(5062-301)(해양정책실)

나. 검토의견

여수웅천마리나 사업과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은 2016년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계기관 간 협의 강화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리나 항만 사업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47)]

여수웅천마리나 사업과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은 2015년 거점형 마리나항만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6년 2월 사업시행자인 여수시 및 안산시와 해양수산부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2024년에는 2개 마리나 사업에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공사비가 편성되었으나, 2025년 6월말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황으로 특히 안산방아머리마리나는 실시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임.

[여수웅천마리나 및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 추진 경과]

구분	여수웅천마리나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실시협약 체결	2016. 2.	2016. 2.
사업계획 승인	2020. 6.	2020. 4.
환경영향평가 완료	2022. 1.	2021. 10.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2024. 10.	2021. 10.
사업계획 변경	2022. 6.	2022. 6.

47)「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대상 구역 및 면적
2.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확보 및 이용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분	여수웅천마리나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실시계획 승인 요청	2022. 6.	2022. 12
실시계획 보완 제출	2022. 10.	2023. 2.
실시계획 검토	2022. 11.	2023. 3.~
실시계획 승인	2023. 9.	-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여수웅천마리나는 2023년에서 이월된 41억 4,000만원 전액이 불용되고 2024년 예산 24억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안산방아머리마리나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7억 3,3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여수웅천머리나는 20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려된 후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2024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전행정절차가 모두 이행되었으나 지방비 미확보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중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리고 안산방아머리마리나는 실시계획 과정에서 시화방조제 관련 사업시행자(안산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2025년 3분기 내 안산시와 국토부 간 협의가 완료되면 20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하였음.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설명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시계획 검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협의체 완료 시기는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렇듯 여수웅천마리나 사업과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이에 따라 예산도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 무역항(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신규): 신규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 준비 및 검토 필요

가. 개 요

‘무역항(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은 드론테러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보완대책’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32억 4,600만원 중 3억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1.2%)되고, 27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48)]

[2024년도 무역항(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항만보안시설 확충	6,718	6,718	23	1,037	7,778	3,483	4,016	279	10,673
항만보안시설·장비 신설	4,228	4,228	-	-	4,228	882	3,110	236	8,183
무역항(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3,246	3,246	-	-	3,246	362	2,740	144	5,50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해양수산부가 구축하려는 안티드론시스템은 드론 탐지·식별 장비인 레이더, RF 스캐너,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물체를 탐지하고, 이 물체가 드론 또는 조류 등인지를 식별한 후 불법 드론일 경우 전파차단 장치인 재머를 사용하여 무력화하는 시스템으로 무역항별 사업기간은 2년임.

2024년 예산에는 무역항별로 설계비와 1차년도 공사비 등이 반영되었고, 2025년 예산에는 2차년도 공사비 등이 반영되었음.

48)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해운물류국)

[무역항(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 2024년 예산 세부내역]

○ **무역항(부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14억 7,400만원**
- 설계비 1억 9,340만원 + 공사비 12억 6,200만원 + 감리비 1,560만원 + 부대비 300만원

○ **무역항(인천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10억 5,000만원**
- 설계비 1억 8,360만원 + 공사비 8억 5,340만원 + 감리비 1,080만원 + 부대비 220만원

○ **무역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7억 2,200만원**
- 설계비 1억 2,890만원 + 공사비 5억 8,400만원 + 감리비 750만원 + 부대비 160만원

나. 검토의견

무역항(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준비 및 검토 등을 충분히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4년~2025년 2년동안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2024년도 예산에는 무역항별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반영되었음.

[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관련 연차별 사업비]

항만	총 사업비 (항만공사 분담 전)	국비			관제	RF 스캐너	레이더	EO/IR 카메라	재머	
		소계	2024년	2025년						
소계	176.5억원	88.2억원	32.4억원	55.8억원	4	8	8	8	24	
부산항	67.9억원	33.9억원	14.7억원	19.2억원	2	3	3	3	고정3	휴대6
인천항	64.4억원	32.2억원	10.5억원	21.7억원	1	3	3	3	고정3	휴대6
울산항	44.2억원	22.1억원	7.2억원	14.9억원	1	2	2	2	고정2	휴대4
단가	-	-	-	-	3.2억	3.5억	10억	2.8억	1.3억	0.65억

주) 항만공사 분담률 50% 적용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2024년 12월말 기준 3개 항만에서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관련 실시설계만 완료되고 공사 관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실시설계비만 집행되었고, 공사비는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 2024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실시설계*				공사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부산항	506	362	-	144	1,281	-	1,281	-
인천항					593	-	593	-
울산항					866	-	866	-

주) 부산항·인천항·울산항 실시설계 용역은 본부에서 일괄 추진하여 낙찰차액 1억 4,400만원 발생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2025년 5월말 기준으로도 공사계약의 공고도 진행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실시설계 용역이 2024년 10월 완료된 이후 11월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각 지방조달청에 공사 발주 요청을 하였으나 유사 사례가 없어 조달청 내부 검토 등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고, 이후 입찰 관련 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협의 진행 중 조달청과 상호 협의조정이 불성립되어 2024년 12월에 3개 항만의 조달 계약이 모두 반려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리고 2025년 2월 조달청에 공사 발주 재요청을 하여 2025년 3월부터 사전규격 공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025년 6월부터 공고를 진행하였고 7월 중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추가적인 설명에 따르면 공사 기간은 외자 장비 도입 절차 등으로 인하여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계획과 달리 2025년 내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신규사업 추진 전 사전 준비와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상 신규사업의 경우 본격 추진 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운영 사례와 시스템 도입상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사업의 경우 이러한 것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임.

또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안티드론시스템이 현재 공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도 시일이 장기로 소요되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검토 및 준비를 충분히 선행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21. 혁신어촌조성 사업(종료)·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사업기간 현실화 및 실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등

가. 개 요

‘혁신어촌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낙후된 항·포구의 인프라 개선 및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836억 9,600만원 중 1,836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49)]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64억 3,000만원 중 800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7%)되고, 26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7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50)]

[2024년도 혁신어촌조성·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어촌뉴딜300	164,363	164,363	19,922	-	184,285	184,219	-	66	-
혁신어촌조성	163,863	163,863	19,833	-	183,696	183,695	-	1	-
어촌신활력증진	96,180	96,180	1,023	-	97,203	90,683	2,786	3,734	225,734
어촌신활력증진	85,460	85,460	1,023	-	86,430	80,088	2,661	3,734	214,5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혁신어촌조성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혁신

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어촌뉴딜300(3301-304)(수산정책실)

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어촌신활력증진(3301-303)(수산정책실)

어촌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3년이고,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사업기간은 유형별로 3~5년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유형별 분류]

구분	(유형 1) 어촌 경제 플랫폼	(유형 2)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지원대상	국가어항(연안항·무역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 및 배후마을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마을
사업목표	어촌 경제거점 조성	어촌마을의 생활서비스 제공 등 정주여건 개선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
사업수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 민간투자자 연계	지방자치단체 * 민간앵커조직 연계	지방자치단체
사업기간	4년 (2025년부터 4년에서 5년으로 조정)	4년	3년
사업비	총 사업비 : 300억 원 이내 (민간 100억원 이상 별도) 재정지원 : 300억 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자담 별도)	총 사업비 : 10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자담 별도)	총 사업비 : 5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추진방식	대상 거점어항 주변(5km, 5분 이내) 민간투자 사업을 기반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재정지원은 소득·복지 복합시설 및 주거 등 생활인프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간 교류, 주요 이용시설을 고려해 '어촌생활권'을 구분하고, 돌봄·복지 등 생활서비스 제공 어촌 앵커조직(민간)이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과의 비교	신규 (민간투자 연계)	어촌공간 재생형사업(시범사업)의 본사업 ※ 2024년부터 어촌뉴딜300에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이관됨	혁신어촌조성 내역사업과 유사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첫째, 혁신어촌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상으로는 2024년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 등 실집행단계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유보된 상황이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실제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어촌뉴딜300의 혁신어촌조성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이고 연부율은 1차년도 15~35%, 2차년도 36~45%, 3차년도 20~49%로 설계되었는데,[51] 연례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실적이 30%대 이하로 부진하였음. 이에 따라 매년 최저 1,229억 8,500만원, 최고 5,927억 9,8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2024년에도 4,449억 2,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13.7%로 극도로 부진하였음.

[2019년~2024년 혁신어촌조성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19	171,500	171,500	171,500	171,500	-	171,500	48,513	171,500	48,513	**122,985**	2	**28.3**
2020	430,500	430,500	430,500	430,500	122,985	553,485	166,867	430,500	99,460	**386,577**	41	**23.1**
2021	518,000	518,000	510,331	510,331	386,577	896,908	333,448	510,331	80,078	**561,026**	2,434	**15.5**
2022	514,500	514,500	474,492	474,492	561,026	1,035,518	434,648	474,492	80,078	**592,798**	8,071	**15.6**
2023	278,216	278,216	255,420	255,420	592,798	848,218	295,840	255,420	98,238	**549,089**	3,289	**35.3**
2024	163,863	163,863	163,863	163,863	549,089	732,785	282,689	163,862	22,368	**444,923**	5,173	**13.7**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4년까지 300개 사업대상지의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완공된 사업대상지는 196개에 불과함.

51) [어촌뉴딜300 사업 연부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19년 선정사업	35%	45%	20%
2020년 선정사업	25%	40%	35%
2021년 선정사업	20%	40%	40%
2022년 선정사업	15%	36%	49%

자료: 해양수산부

[연도별 완공 사업대상지 수]

선정연도	선정대상지	완공연도				완공대상지 합계	비 고
		2021	2022	2023	2024		
2019	70	24	30	16	-	70	
2020	120	-	2	43	74	119	취소 1개소
2021	60	-	-	-	7	7	취소 1개소
2022	50	-	-	-	-	-	
합 계	**300**	24	32	59	81	**196**	

자료: 해양수산부

혁신어촌조성 사업의 수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유보된 자금의 규모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각각 지방비 포함 2,000억원 이상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임.

[혁신어촌조성사업 관련 수탁기관 유보액(202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선정연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탁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수탁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2019	34	321,143	311,965	9,178	34	-	-	-	17 (6)	104,434	104,434	-	11	-	-	-
2020	55	482,323	454,002	28,321	55	-	-	-	52 (8)	416,173	412,080	4,093	41	3	-	-
2021	25	217,696	130,756	86,940	2	22	1	-	29	255,749	188,691	67,058	9	20	-	-
2022	16	119,271	26,616	92,655	-	15	1	-	25	234,934	103,076	131,858	1	22	2	-
합계	130	1,140,433	923,339 [81.0%]	**217,094 [19.0%]**	91	37	2	-	123 (14)	1,011,290	808,281 [79.9%]	**203,009 [20.1%]**	62	45	2	-

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탁지구수 중 ( )에 표기된 지구는 지역역량강화사업(S/W) 부분 수탁임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은 개소별 사업기간 및 연부율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실적 제고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에 따라 실집행단계에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실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4년 정부 예산상으로는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관리 및 국회 보고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사업의 실제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의 후속성격의 사업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이와 유사하게 실집행단계에서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현실화하고 실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혁신어촌조성) 사업의 후속 성격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었고, 사업목표 및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따라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됨.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도 실집행률이 24.2%에 불과하고 305억 4,4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유형1	6,953	6,953	6,518	6,518	-	6,518	1,285	6,518	1,285	**5,233**	-	**18.5**
유형2	20,972	20,972	20,384	20,384	-	20,384	4,536	20,384	4,536	**15,848**	-	**21.6**
유형3	13,716	13,716	13,716	13,716	-	13,716	4,253	13,716	4,253	**9,463**	-	**31.0**
합계	41,641	41,641	40,618	40,618	-	40,618	10,074	40,618	10,074	**30,544**	-	**24.2**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21.8%에 불과하고 701억 8,0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이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유형 1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유형1	13,986	13,986	12,826	12,826	3,184	16,445	859	13,261	582	**15,586**	-	**4.2**
유형2	27,907	27,907	26,927	26,927	15,793	43,308	14,920	27,515	7,155	**26,363**	2,025	**25.6**
유형3	39,835	39,835	39,312	39,312	4,970	44,282	16,051	39,312	10,095	**28,231**	-	**25.3**
합계	81,728	81,728	79,065	79,065	23,947	104,035	31,830	80,088	17,832	**70,180**	2,025	**21.8**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도 어촌뉴딜300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사업 추진 지연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각각 지방비 포함 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수탁기관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관련 수탁기관 유보액(202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선정 연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탁 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수탁 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2023	10	26,483	4,541	21,941	-	2	5	3	19	23,849	12,275	11,574	-	9	2	8
유형1	2	11,112	666	10,445	-	-	-	2	3	7,076	306	6,770	-	-	-	3
유형2	1	720	3	717	-	-	-	1	5	2,084	-	2,084	-	-	-	5
유형3	7	14,652	3,872	10,779	-	2	5	-	11	14,689	11,969	2,720	-	9	2	-
2024	3	3,604	666	2,938	-	-	-	3	10	10,215	1,008	9,207	-	-	8	2
유형1	1	2,104	-	2,104	-	-	-	1	2	4,450	-	4,450	-	-	-	2
유형2	-	-	-	-	-	-	-	-	-	-	-	-	-	-	-	-
유형3	2	1,500	666	834	-	-	-	2	8	5,765	1,008	4,757	-	-	8	-
합계	13	30,087	5,208 [17.3%]	**24,879 [82.7%]**	-	2	5	6	29	34,064	13,283 [38.9%]	**20,784 [61.1%]**	0	9	10	10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

이러한 사업 지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일 소요가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이며, 유형 1의 사업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부터는 유형 1의 사업기간을 종전의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연부율도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유형별 사업기간 및 연부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유형1		10%	10%	20%	30%	30%
유형2		10%	10%	39%	41%	-
유형3	'23 선정	13%	30%	57%	-	-
	'24 이후 선정	15%	30%	55%	-	-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수탁기관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어촌뉴딜 300 사업의 추이와 유사하게 실집행단계에서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제1항에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52)]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탁기관에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별 실집행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이 부진한 유형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연부율 조정을 검토하는 등 현실적인 실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22. 귀어귀촌촉진 사업: 연말에 불용 예상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충전한 캐시 등의 국고 반납 필요

가. 개 요

‘귀어귀촌촉진’ 사업은 귀어·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 상담 및 멘토링, 거주지 지원 등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 지원과 어촌소멸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38억 4,300만원 중 37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고, 1억원이 불용되었음.[53)]

[2024년도 귀어귀촌촉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어촌소멸대응지원	8,114	8,114	-	-	8,114	8,014	-	100	6,216
귀어귀촌촉진	3,843	3,843	-	-	3,843	3,743	-	100	2,856.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귀어귀촌촉진 사업은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어촌에서 살아보기, 도시민 기술교육, 우수어촌계지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은 전액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예산액 15억 7,300만원 전액이 수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교부되었음.

[2024년도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결산]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C)			
1,573	1,573	1,573	1,573	-	1,573	1,573	1,573	1,573	-	-	100

자료: 해양수산부

5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어촌소멸대응지원(3347-300)(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귀어귀촌촉진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카카오톡 알림톡 캐시 등을 충전하는 데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미사용한 캐시 등은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귀어귀촌촉진 사업 내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의 수탁기관으로 2024년에 귀어귀촌 상담·안내, 귀어귀촌 홍보 및 교육, 귀어귀촌 플랫폼 운영 및 어촌 정착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음.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와의 위탁계약서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사업비를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54)]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한 2024년 정산보고서에는 민간위탁사업비 15억 7,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었음.

그런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한 2024년 실적보고서를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4년 12월 24일 타스온 메시지 서비스(일반문자 서비스) 캐시 400만원, 2024년 12월 26일 플랫폼 기업메시징(자동문자 서비스) 캐시 550만원, 2024년 12월 30일 카카오톡 알림톡 캐시 1,430만원을 충전하였음.

[카카오톡 캐시 등 충전 내역]

결의일자	세부항목	집행금액(원)
2024.12.24.	귀어귀촌종합센터 메시지 서비스(타스온) 캐시 충전	4,000,000
2024.12.26.	플랫폼 기업메시징 캐시 충전	5,500,000
2024.12.30.	카카오톡 캐시 충전	14,302,880

자료: 「2024년 귀어귀촌 촉진(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사업 실적보고」 일부 발췌

이는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카카오톡 캐시 등을 충전한 것으로, 민간위탁사업비의 집행잔액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위탁계약서에 따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고, 카카오톡 캐시 등은 기관이 외부

54) 「귀어귀촌 촉진(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업무 위탁계약서」
제9조(실적보고) ② 제1항의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각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발생이자의 반납 등) ① 사업비 지급 이후 발생한 이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통제 없이 관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으로 캐시 등을 충전하는 것은 부적정함.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4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 초 사업비 배정 전에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등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산 절감액을 활용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캐시 등을 충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4년 연말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충전한 카카오톡 캐시는 1,430만원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최근 2년간(2023년~2024년) 카카오톡 캐시 사용 내역이 1,06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2년치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말에 충전하는 것은 연초 사업비 배정 전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적정하지 않음.

[2023년~2024년 카카오톡 캐시 사용 내역]

(단위: 원)

구분	2023년	2024년	합계
사용액	7,214,544	3,446,684	10,661,228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으로 카카오톡 캐시 등을 충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집행잔액으로 충전하였으나 미사용한 캐시 등에 대해서는 환불 후 즉시 국고에 반납할 필요가 있음.

【수산발전기금】

〈지　출〉

23.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연으로 인한 직불금 연내 미지급 문제

가. 개　요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42억 1,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5]

[2024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이·전용 등(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피해보전 직불금	1,000	1,000	3,216	4,216	4,216	-	-	1,0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가 지연되어 보조금이 12월 31일에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됨에 따라, 교부액의 99.9%가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직불금 거의 전액이 연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직불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중 가격·총수입량 및 협정상대국 수입량의 발동 요

55) 수산발전기금-피해보전 직불금(3467-300)(수산정책실)

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한도로 지급됨.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 대상품목 선정 기준
ㅇ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중, 아래의 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

① (가격)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수입량)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
③ (협정상대국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
* 시장점유율 ①10%미만: 1.15, ②10~30%미만: 1.10, ③30%이상: 1.05

□ 지원 금액
ㅇ (산출 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지급단가 = (기준가격-평균가격)×95%
** 조정계수 = 수입기여도(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ㅇ (지원 한도)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통상 7월까지 해당연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8월까지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후 9월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12월 최종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에는 계획액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장조사를 거쳐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직불금이 42억 1,600만원이 되어 차액인 32억 1,600만원 증액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음.

수산발전기금의 어업인 소득 안정지원 프로그램(3400)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2024년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관련 타임라인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요청은 12월 27일,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승인은 12월 30일 이루어졌고, 보조금은 12월 31일에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었음.

[2024년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관련 타임라인]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4.1. ~ 7.	▪ '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 '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분석 ▪ 지원대상품목 선정 보고(제1차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행정예고 ▪ 지원대상품목 최종심의 및 결정(제2차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어업인등
2024.8.1.	▪ '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	▪ 해양수산부
2024.8.1. ~ 9.25.	▪ 지원대상품목 생산자 신청	▪ 어업인등 → 시군구
~ 2024.10.11.	▪ 현지(서면)조사	▪ 시군구
~ 2024.10.25.	▪ 현지(서면)조사 결과 알림 및 이의신청	▪ 어업인등, 시군구
2024.10.25.	▪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시군구
~ 2024.11.25.	▪ 지급대상자 확정 후 보고 - 시군구 → 시도 → 해수부	▪ 시군구 및 시도 해양수산부
2024.11.15.~ 2024.11.28.	▪ 지급대상자별 지급액 산정 및 자금 요청 - 시도 → 해수부	▪ 해양수산부 시도
2024.12.27.	▪ **2024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 승인 요청 (해수부→기획재정부)**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2024.12.30.	▪ **2024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 승인 (기획재정부→해수부)**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2024.12.31.	▪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국고보조금 교부(해수부→시도)**	▪ 해양수산부 시도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된 보조금 전액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0.1%에 불과하고, 대상 어업인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2024년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C)			
강원	3	3	3	3	-	3	-	3	-	3	-	-
전남	3,238	3,238	3,238	3,238	-	3,238	-	3,238	-	3,238	-	-
경북	2	2	2	2	-	2	2	2	2	-	-	100.0
경남	971	971	971	971	-	971	-	971	-	971	-	-
제주	2	2	2	2	-	2	-	2	-	2	-	-
합 계	4,216	4,216	4,216	**4,216**	-	4,216	2	4,216	**2**	**4,214**	-	**0.1**

자료: 해양수산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절차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소요가 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지급액 및 지원대상자 등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산정 후 해양수산부에 이를 제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매년 이와 관련하여 지급액 및 지원대상자 관련 재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에 재확인이 예년 대비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2019년~2022년에는 11월말~12월초에 보조금이 모두 교부되었고, 2019년의 경우 교부금액이 2024년보다 컸음에도 12월 초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음.

[2019년~2024년 피해보전 직불금 교부 날짜 및 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교부날짜	교부금액	비고
2019	2019-12-10	5,576	-
2020	2020-12-02	1,896	-
2021	2021-12-01	663	-
2022	2022-11-28	1,133	-
2023	-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없음
2024	2024-12-30	4,216	-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직불금 거의 전액이 연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직불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　타】

24.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연례적 이월 시정 필요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시정요구 66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0건・주의 18건・제도개선 40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0	15	39	(2)	62
예비비	-	-	-	3	1	-	4
합계	-	-	10	18	40	(2)	66

해양수산부는 시정요구사항 66건에 대해 4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5.2%)하고 2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62	39	62.9	23
예비비	4	4	100.0	-
합계	66	43	65.2	23

국회가「2024년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해양수산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해양수산부 관련 2023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24)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체계와 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집행관리점검단 신설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의 ‘연례적 이월문제를 시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부 내역사업에서 인건비가 큰 규모로 이월되었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동 시정요구에 대해 연례적 이월 개선을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월별 예산 실집행점검을 통해 분기별 출연금 교부 시 적정 금액만 배정하고(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에 대한 인건비 14억 3,100만원 미배정), 국립해양과학관의 기 누적된 인건비 집행잔액(약 12억원)은 2024년도 회계 결산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4월 국고에 반납하여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같은 세부사업 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에서 인건비 이월이 큰 규모로 발생하여 반복적인 이월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56)]

[연례적 이월문제 시정 관련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28) 해양문화시설 연례적 이월에 대한 시정과 결산잉여금 관리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해양수산부는 연례적 이월문제를 시정할 것(시정) 해양수산부는 결산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시정)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연례적 이월 개선을 위해 월별 예산 실집행점검을 통해 분기별 출연금 교부 시 적정 금액만 배정 * 지난 7월부터 월별 예산 집행점검을 통해 인건비 일부 미배정(1,431백만원) - 특히, 국립해양과학관의 기 누적된 인건비 집행잔액(약 12억원)은 ’24년도 회계결산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고 반납조치 완료(’25.4) ㅇ 사업출연금 집행잔액 처리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해양문화시설 출연금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시행(’25.1)하고, 각 시설의「회계규정」등에 반영(’25.3)

56) ‘7.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검토의견 관련

해양경찰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95억 2,500만원(153.2%)이 많은 157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1,800만원(190.3%)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388	5,388	5,423	35	6,216	6,216	15,741	9,525	10,318
총수입	5,388	5,388	5,423	35	6,216	6,216	15,741	9,525	10,318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억 6,800만원(0.03%)이 많은 1조 8,971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6억 5,000만원(5.1%)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810,881	1,810,881	1,805,472	△5,409	1,896,654	1,896,654	1,897,122	468	91,650
총지출	1,810,881	1,810,881	1,805,472	△5,409	1,896,654	1,896,654	1,897,122	468	91,650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2억 1,600만원으로, 182억 6,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57억 4,100만원이 수납(수납률 86.2%)되고 25억 1,9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6,216	6,216	-	6,216	18,266	15,741	2,519	6
합 계	6,216	6,216	-	6,216	18,266	15,741	2,519	6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9,162억 1,300만원으로, 이 중 1조 8,971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0%)되고 102억 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8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896,654	1,896,654	19,559	-	-	1,916,213	1,897,122	10,279	8,812
합 계	1,896,654	1,896,654	19,559	-	-	1,916,213	1,897,122	10,279	8,812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해양경찰청 자산은 전년 대비 2,7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4조 3,864억 2,4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3,077억 3,200만원 증가하고 사회기반시설이 48억 1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2억 3,100만원 증가한 242억 7,0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21억 4,700만원 증가 및 유동부채 10억 8,4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698억 5,100만원 증가한 4조 3,621억 5,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049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5억 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7,939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6,1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386,424	4,113,200	273,224	6.6
		유동자산	23,309	63,266	△39,957	△63.2
		투자자산	910	530	380	71.7
		일반유형자산	4,267,298	3,959,566	307,732	7.8
		사회기반시설	68,076	63,275	4,801	7.6
		무형자산	19,625	20,422	△797	△3.9
		기타비유동자산	7,206	6,139	1,067	17.4
	부 채		24,270	21,039	3,231	15.4
		유동부채	8,083	6,999	1,084	15.5
		장기차입부채	16,187	14,040	2,147	15.3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4,362,154	4,092,303	269,851	6.6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04,953	468,425	36,528	7.8
	재정운영순원가		1,793,912	1,753,851	40,061	2.3
	재정운영결과		1,793,912	1,753,851	40,061	2.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해양경찰청은 현장 중심의 구조·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안전 보장과 전략적 경비활동을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총 65개의 세부사업에서 해양영토·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와 수색구조, 해양교통질서 확립과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와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마약수사역량강화 사업은 세목조정을 통하여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를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2.1배 규모로 확대하여 집행하고,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당초 예산 대비 12.8% 규모로 축소하는 등 예산 규모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는 바, 향후 적정 예산 편성 후 예산 반영 범위 내에서 행사 추진 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형헬기(5호기) 1대 도입 사업은 최초 계획 대비 약 2년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헬기의 적기 배치를 위하여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도입되는 대형헬기는 기존 헬기와 기종이 상이하여 조종사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므로 대형헬기 조종인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헬기 조종인력 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 사업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제 함정 및 항공기의 도입 대수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마약수사역량강화 사업: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 규모 임의적 조정 지양 필요

가. 개　요

‘마약수사역량강화’ 사업은 해상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 등 중대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9억 5,900만원 중 9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마약수사역량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범죄수사활동	7,752	7,752	-	-	7,752	7,709	-	43	8,203
마약수사역량 강화	959	959	-	-	959	938	-	21	1,66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마약수사역량강화 사업은 세목조정을 통하여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를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2.1배 규모로 확대하여 집행한 반면,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2) 일반회계-범죄수사활동(3102-301)(수사국)

당초 예산 대비 12.8% 규모로 축소하는 등 예산 규모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 바,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추진 등을 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증가하는 해상 마약범죄에 대응하여 마약수사 관련 국내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예산에 제1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예산 3,880만원,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각각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및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 개요]

○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 개최시기 및 장소: 2024. 10. 30.~11. 1.(2박 3일), 대한민국 인천 ► 주최 및 주관: 해양경찰청 ► 참석자: 마약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 120명 * 외국인사 40명: 미국 FBI(연방수사국)·USCG(해안경비대)· JIATF-W(미 서부 수사정보합동기관)·HSI(국토안보부)·NCIS(해군 수사대), 일본 해상보안청, 콜롬비아, 에콰도르,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호주, 대만 등 해양마약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UNODC, 인터폴) 전문가 * 국내인사 23명: 해상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 국내 마약법집행 유관기관 등 전문가 * 해양경찰청 마약수사전담요원 등 57명 ► 추진목적: 해양 마약밀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국내외 기관 간 해결책 논의 및 첩보망 구축 필요 ► 예산편성액: 3,880만원(일반수용비) ○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 ► 추진목적: 해양 마약범죄 예방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 간 발전적 소통·협력관계 증진 ► 예산편성액: 5,000만원(일반수용비)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의 규모를 확대하고 컨퍼런스 관련 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한편, 회의장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2일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와 임차료로 각각 세목조정하고 총 예산규모도 확대하였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9.2.)	범죄수사활동 (3102-301)	210-01 (일반 수용비)	18	범죄수사활동 (3102-301)	210-07 (임차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회의장소 임차
세목조정 (2024.9.2.)	범죄수사활동 (3102-301)	210-01 (일반 수용비)	54	범죄수사활동 (3102-301)	210-14 (일반 용역비)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진행 용역

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따라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편성된 일반수용비 중 일부인 2,840만원과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된 일반수용비 중 일부인 4,360만원이 세목조정되어 임차료 1,800만원, 일반용역비 5,400만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음.

결과적으로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는 기존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세목조정으로 증액된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를 활용하여 총 8,250만원 규모로 진행되어 당초 예산 3,880만원 대비 2.1배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였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예산 편성 내역 및 실제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편성 내역			실제 집행 내역		
세목	내역	금액	세목	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컨퍼런스 운영비	38.8	일반수용비	행사 간행물 발행 등	10.4
			임차료	컨퍼런스 회의장 임차	18.2
			일반용역비	행사 진행용역비	53.9
합계		38.8	합계		82.5

자료: 해양경찰청

구체적으로 당초에는 별도의 장소 임차 없이 내부 공간 등을 활용하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회의 관련 업무 수행도 내부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세목조정으로 예산을 증액조정한 후 해양경찰청 본청 인근에 위치한 호텔 내의 회의공간을 임차하고 아나운서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음.

한편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의 경우 당초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상반기에 자문위원회를 1회만 개최하여 관련 경비로 64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2.8% 규모로 축소되었음. 그리고 나머지 4,360만원은 세목조정을 통해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하여 사용되었음.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컨퍼런스에 대한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의 관심 및 참여가 높아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자문위원회를 컨퍼런스와 병합하여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컨퍼런스 개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원 중 일부가 참석자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자문위원회가 컨퍼런스와 병합하여 개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경찰청은 컨퍼런스 개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축소 운영한 것으로 보임.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국내·외의 마약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해양 마약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관계도 증진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사성 경비를 당초 예산 대비 과다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축소 운영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2023년에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경비를 당초 예산 대비 2.9배로 확대(2억원→5억 7,000만원)하여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추진 등을 할 필요가 있음.

2.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 불용예상액을 활용한 신규 장비 구매 부적정 등

가. 개 요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체계 구축, 외국어선 감시·단속활동 강화, 해양테러 예방·진압 및 해상경호 업무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37억 5,500만원 중 132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0%)되고, 1억 4,700만원이 이월되어 4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4년도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13,262	13,262	451	42	13,755	13,201	147	407	17,907
특공대 활동 지원	4,112	4,112	-	-	4,112	3,931	-	181	5,199
드론운용	1,797	1,797	-	△1	1,796	1,523	147	126	3,55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특공대 활동 지원’**은 해상테러 예방·진압, 해상경호업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대테러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특공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1억 1,200만원 중 39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6%)되고 1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드론운용’**은 불법 조업 외국어선 감시·추적 및 조난 선박 등 수색구조 활동을 위한 드론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7억 9,600만원 중 15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5%)되고, 1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3) 일반회계-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경비국)

나. 검토의견

첫째, 특공대 활동 지원 사업은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티드론건 1대를 구입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특공대 활동 지원 사업에는 드론탐지기 1대 도입을 위하여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드론탐지기 구매를 위하여 4,8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당초에는 호주에서 제조한 드론탐지기를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드론 위치 탐지 표시방식이 좌표형식임에 따라 현장 운용자들이 드론위치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있어, 모니터상 지도 위에 드론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을 가진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여 운용상 편의성을 제고하고 예산도 절감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드론탐지기 사양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조사	드론쉴드(호주)	타투스카이테크놀리지(중국)
견적 가격	7,590만원	5,610만원
탐지주파수	400MHZ~5.8GHZ	70MHZ ~ 6GHZ
탐지거리	1.5km	4.8km
운영시간	10시간	12시간
탐지표시형식	좌표형식	영상표출(좌표 포함)
기타	무전기식, 1.2kg, 92*160*51mm 동시 탐지기능 : 1대	가병형, 12kg, 470*357*176mm 동시 탐지기능 : 45대
사진		

자료: 해양경찰청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 드론탐지기 도입 예산이 일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불용예상액과 대테러장비구매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중 불용예상액 일부를 활용하여 안티드론건 1대(4,350만원)를 구입하였음.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유관기관에 비하여 드론테러에 대한 방호시스템이 매우 부족함에 따라 안티드론건을 구입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안티드론건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4]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유사하게 2023년에도 해양경찰청은 불용이 예상되는 노후방독면 교체 사업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방탄헬멧 및 진압장비 구입 비용으로 집행하여, 이에 대한 결산 심사 시 국회는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노후방독면 교체 사업 예산으로 계획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드론운용 사업은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하여 2024년 1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기존 직무교육 이수자 중 35.8%가 드론 운영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직무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드론 직무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드론 운영 직무에 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함정 탑재 드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억 5,600만원을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드론 직무교육 관련 집행내역]

○ 드론 직무교육 1억 5,600만원 = 28명(직무교육 대상자) × 557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21년 18명, 2022년 16명, 2023년 33명, 그리고 2024년 28명 등 총 95명을 대상으로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35.8%인 34명이 드론 운영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음.

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드론 관련 직무교육 실시 현황]

연도	집행액	교육대상자 수	교육 수료자 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경험자 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미경험자 수	현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수
2021년	9,400만원	18명	18명	14명	4명 (22.2%)	1명
2022년	9,300만원	16명	16명	11명	5명 (31.3%)	3명
2023년	1억 5,200만원	33명	33명	13명	20명 (60.6%)	12명
2024년	1억 5,600만원	28명	28명	23명	5명 (17.8%)	23명
합계	4억 1,700만원	95명	95명	61명	34명 (35.8%)	39명

자료: 해양경찰청

드론 도입 이후 운영 미흡으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드론 운영 관련 직무교육의 실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교육 수료 인력이 드론 운영 관련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교육 운영의 실효성 및 활용성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을 것임.

또한 전체 함정 탑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수가 2021년~2023년 각각 28명이고, 2024년에는 5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전체 드론 직무교육 이수자 중 드론 운영 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

[함정 탑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종사자 수	28명	28명	28명	52명

자료: 해양경찰청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기존 드론 운영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드론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를 드론 운영 직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사업: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사업은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치안활동비와 외근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64억 3,500만원 중 449억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15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51,516	51,516	-	△5,081	46,435	44,900	-	1,535	49,74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사업은 특정업무경비가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되어 이·전용 등을 통하여 감액조정되고 일부는 불용되고 있으므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인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 등을 통해 적정 예산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약 13억원~65억원이 이·전용 등을 통하여 감액조정되고 약 1억원~15억원이 불용되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이 과다계상되고 있는 상황임.

[2022년~2024년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45,434	45,434	△1,361	44,073	42,970	94.6	97.5	-	1,103
2023	51,516	51,516	△6,558	44,958	44,831	87.0	99.7	-	127
2024	51,516	51,516	△5,081	46,435	44,900	87.2	96.7	-	1,535

자료: 해양경찰청

5) 일반회계-치안 및 외근활동지원(7203-305)(기획조정관)

2024년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특정업무경비 514억 1,700만원, 일반수용비 9,9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이 특정업무경비로 구성되는데, 치안활동비와 대민활동비 모두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

[2024년 특정업무경비 용도별 집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대상	사용용도	집행방식	지급단가	예산액	집행액
경정이하 경찰관	**치안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170**	**26,005,035**	**23,485,949**
	특공대·구조대 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70	599,760	747,009
대민업무 근무자	**대민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200**	**23,334,452**	**18,960,853**
	함·정장 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70~200	1,009,200	1,189,315
	불법조업 단속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70	468,720	488,714

자료: 해양경찰청

이는 2023년에도 동일하여 치안활동비 및 대민활동비가 실제 소요 대비 과다계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됨.

[2023년 특정업무경비 용도별 집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대상	사용용도	집행방식	지급단가	예산액	집행액
경정이하 경찰관	**치안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170**	**25,535,794**	**23,406,022**
	특공대·구조대 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70	599,760	771,775
대민업무 근무자	**대민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200**	**23,803,693**	**18,939,127**
	함·정장 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70~200	1,009,200	1,170,526
	불법조업 단속활동비	현금지급 (정액)	70	468,720	465,301

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치안 및 외근활동비는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연혁적 특수성을 가진 보수 보전성 경비로, 부족할 경우 타 경비에서 이·전용이 곤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있다는 설명임. 또한 예산 편성 시 전년도 편성인원에 신규채용·결원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인력 운용상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최근 3개년간의 이·전용 등을 통한 감액조정 규모 및 불용액을 고려하면 2025년 감액 편성된 규모는 이에 미달하여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추가적인 감액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경찰청은 향후 동 사업의 특정업무경비 관련 지원인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경찰청이 특정업무경비로 지급 중인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민활동비 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

그런데 해양경찰청의 「특정업무 집행계획」에서는 특정업무경비의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치안활동비와 대민활동비로 구분하고, 대민활동비는 대민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접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경찰청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중 지급 대상 및 범위]

□ 지급 대상 및 범위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음
- 치안 및 대민활동비를 포함하여 개인활동비는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
- 연혁적 특수성이 있는 치안활동비(17만원)는 경정이하 경찰관에게 지급하며, 월 30만원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대민활동비는 대민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접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자료: 해양경찰청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이에 따라 실제 예산안 편성 시에도 치안활동비와 대민활동비를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음.

[2024년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예산 산출내역]

ㅇ **치안활동비 지원: 271억 1,262만원** 가. 치안활동비: 265억 1,286만원 나. 특공대 및 구조대: 5억 9,976만원 ㅇ **외근활동비 지원: 251억 9,832만원** **가. 대민활동비: 237억 2,040만원** 나. 함정장 지휘정보비 : 10억 920만원 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 468,720천원 ○ 행정지원: 9,883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편성된 대민활동비를 민원 처리,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의 특성이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인 수사·감사·예산·조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에 명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구조활동 및 검문검색 등 업무 성격상 일부 수사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업무도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치안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및 업무]

부서명	업무 내용
경비함정	▪ 응급환자 이송, 어민 안전지도 및 구조, 선박 해상교통 및 통항지도, 도서지역민·갯바위낚시객 등 해상선박 이용객 안전지도 ▪ 불법 어선 단속 등 범죄 현장 조사(해상 파출소 역할)
파출소	▪ 지역 주민·기관·단체 등 협력을 통한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 민원 처리(피해신고 접수, 민원서류 발급 등)
특공대	▪ 수상·수중 18미터 내 인명구조, 전복선박 대응 등 구조활동 ▪ 해양 테러 용의자 현장 검문검색(여객선터미널 테러 대비 경호경비 등)
구조대	▪ 해양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해양오염 방제 ▪ 대민 선저검사 지원 활동 등 지역 봉사
항공단	▪ 응급환자 이송, 해양 사고 대응(항공 구조), 불법조업 단속, 해양 오염 감시 등
종합상황실 ※2025년부터 지급	▪ 해양사고 최초 신고접수 및 상황처리, 긴급신고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재난대응 관련 지자체 협의 ▪ 범죄상황신고 등 민원 접수 및 처리(야간 및 주말·공휴일의 민원 접수 역할)
VTS ※2025년부터 지급	▪ 선박운항자 대상 해양사고 예방(권고) 및 사고 접수 업무 등의 민원 처리 ▪ 선박운항 관계자간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의 등

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1983년부터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월 20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여 연혁적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당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이를 특정업무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형헬기(5호기) 1대 사업: 사업의 추가적 지연 방지 필요 등

가. 개 요

‘대형헬기(5호기) 1대’ 사업은 광역해역에서 장시간 다목적으로 운용 가능한 대형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06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

[2024년도 대형헬기(5호기) 1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항공기도입	59,925	59,925	1,149	△96	60,978	60,977	-	1	37,796
대형헬기(5호기) 1대	19,461	19,461	1,149	-	20,610	20,610	-	-	2,70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대형헬기(5호기) 1대 도입 사업은 최초 계획 대비 약 2년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헬기의 적기 배치를 위하여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사업은 2023년~2026년(4년)에 걸쳐 도입될 예정으로, 2023년에 1차년도 사업비 11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 예산 기준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도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4년차 사업
- 규격: 좌석수 20개 이상, 최대순항속도 140노트 이상, 항속거리 500마일 이상, 체공시간 4.5시간 이상 등
- 연차별 사업비: 2023년 11.5억원 ⇒ 2024년 195억원 ⇒ 2025년 282억원 ⇒ 2026년 285억원

자료: 해양경찰청

6) 일반회계-항공기도입(3101-301)(장비기술국)

그러나 2023년 추진된 입찰 과정에서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5회 유찰되며 사업비 전액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고, 2024년에도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연이어 유찰되며 4회의 재공고를 통하여 2024년 10월에야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 5월말 기준 신규 헬기의 도입 완료시기는 당초 계획 대비 약 2년 지연된 2028년 10월 예정이고 연차별 사업비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었음.

[2025년 5월말 기준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도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 5년차 사업 ‣ 규격: 좌석수 20개 이상, 최대순항속도 140노트 이상, 항속거리 500마일 이상, 체공시간 4.5시간 이상 등 ‣ 연차별 사업비: 2024년 195억원(2023년 이월 예산 11억 4,900만원 별도) ⇒ 2025년 27억 500만원 ⇒ 2026년 226억원 ⇒ 2027년 21억원 ⇒ 2028년 194억원

자료: 해양경찰청

동 사업은 계약 체결이 2024년 10월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현액 전액을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여,[7] 예산 집행상으로는 2024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계약 체결 시기를 고려할 때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임.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입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찰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형헬기의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대형헬기 도입이 이미 2년여가 지연된 상황에서 공정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요소가 발생할 경우 도입시기가 2029년 이후로 또다시 늦어질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해상에서의 원활한 구조와 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신규 대형헬기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점검을 면밀히 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계약의 특례) ①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 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둘째, 신규 도입되는 대형헬기는 기존 헬기와 상이한 기종임에 따라 조종사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형헬기 조종인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헬기 조종인력 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 5월말 기준 보유 중인 대형헬기의 기종은 S-92로 3대를 보유하고 있고, 2024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대형헬기의 기종은 AW-189로 기존 보유 기종과 신규 도입 기종이 상이함.

[S-92와 AW-189 비교]

구 분	대형헬기 요구규격	S-92(시콜스키사) ※기 도입	AW-189(레오나르도사) ※신규
최대순항속도	140노트(259km/h)	142노트(262km/h)	144노트(267km/h)
최대탑승인원	20명 이상	21명	20명
최대항속거리	500마일(804km) 이상	579마일(933km)	502마일(807km)
최대체공시간	4.5시간 이상	5.8시간	4.85시간

자료: 해양경찰청

주요 성능을 비교해보면, 신규 도입하는 헬기의 성능이 2014년 도입완료된 헬기에 비하여 낮은데, 이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제작사에 구두로 확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잘못 편성하였고,[8] 이후 여러 차례 유찰을 거치며 당초 도입하려고 계획하였던 기종(S-92)을 도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대형헬기가 상이한 기종으로 도입됨에 따라 기존 대형헬기의 조종사라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최대 1년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신규 도입 헬기를 운항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신규로 도입되는 AW-189 조종인력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단시간

8)「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2)신규 대형헬기 도입 사업 관리 강화 등 필요	ㅇ[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사업'은 광역해역에서 장시간 다목적으로 운용 가능한 대형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이 4년('23년~'26년)인데 1년차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대형헬기가 적기에 현장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 - 동 사업은 업체 무응찰로 계약이 유찰되어 2023년도 예산액 11억 4,9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음 **- 유찰 사유는 2022년 2월 발생한 러·우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예산 편성 당시 제작사에 구두로 확인한 금액에 기초한 잘못이 있음** ㅇ[시정요구사항] 해양경찰청은 사업 계획 전에 세부적인 편성근거를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차별 예산 규모를 조정할 것	제도개선

내에 타 조종사로 대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예비 조종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예비 조종인력이 원활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규 도입되는 대형헬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양경찰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종인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헬기 조종인력 운용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음.

5. 함정건조·항공기도입 사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준수 노력 필요

가. 개 요

‘함정건조’ 사업은 해양사고 예방, 구조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을 위하여 경비함정 등을 신규증강 또는 대체건조 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988억 2,300만원 중 1,982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4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9)]

‘항공기도입’ 사업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항공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609억 7,800만원 중 609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함정건조·항공기도입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함정건조	197,717	197,717	1,106	-	198,823	198,253	420	150	157,137
항공기도입	59,925	59,925	1,149	△96	60,978	60,977	-	1	37,79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 사업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제 함정 및 항공기의 도입 대수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9) 일반회계-함정건조(3101-300)(장비기술국)

10) 일반회계-항공기도입(3101-301)(장비기술국)

및 시행(2021. 4. 13. 제정, 2022. 4. 14. 시행)되었음.

해양경찰청은 제정된「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제1차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2023년~2027년)’(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였음.[11]

기본계획에는「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상 연간 함정 및 항공기 도입 목표가 실제 연차별 도입 실적과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024년의 경우에도 기본계획상 함정 중 중형함정 독도전담 1척, 예인정 1척, 대형함정 노후대체 1척, 형사기동정 노후대체 2척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도입되지 않았고, 기본계획상 반영되지 않은 고속단정 7대 노후대체는 예산상 반영되어 도입 중임.

항공기는 기본계획상 대형헬기 및 터보프롭 각 1대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도입되지 않았고 노후 헬기 대체도 당초 3대가 목표였으나 1대만 예산상 반영되어 도입 중임.

---

11)「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 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6. 해양경찰장비 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7. 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상 2024년 도입 목표 및 실제 2024년 도입 현황 비교]

구 분			기본계획	2024년 실제
함정	신규증강	(대형)서해전력	1척	1척
		(중형함정) 독도전담	**1척**	**-**
		(특수정) 화학방제정	1척	1척
		(특수정) 연안구조정	**6척**	**2척(△4척)**
		(특수정) 예인정	**1척**	**-**
	노후대체	**(대형함정) 대형함정 대체**	**1척**	**-**
		(소형함정) 100톤 대체	**4척**	**10척(+6척)**
		(특수정) 형사기동정 대체	**2척**	**-**
		(기타) 고속단정 대체	**-**	**7대**
항공기	신규증강	**대형헬기 1대**	**1대**	**-**
		터보프롭 1대	**1대**	**-**
	노후대체	**노후 헬기 대체**	**3대**	**1대(△2대)**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은 치안소요 및 노후장비 대체 등을 고려한 중장기 도입계획으로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계획대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예산상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중장기 장비 도입·관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장비를 도입·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계획과 실제 실적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본계획의 실효성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사유 중 하나는 기본계획이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기본계획에 재원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2] 기본계획에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저하되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해양경찰청에 대해 시정요구 16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제도개선 14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	14	-	16
예비비	-	-	-	-	-	-	-
합계	-	-	-	2	14	-	16

해양경찰청은 시정요구사항 16건에 대해 1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8.8%)하고 5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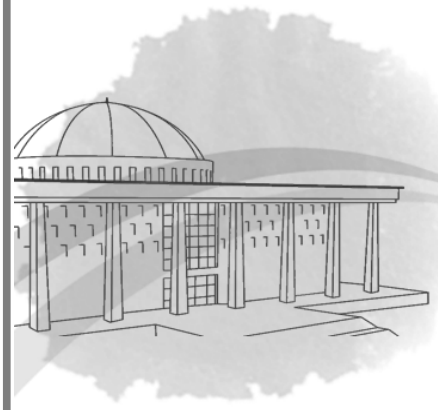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6	11	68.8	5
예비비	-	-	-	-
합계	16	11	68.8	5

국회가「2024년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해양경찰청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해양경찰청 관련 2023년도 결산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년도 결산	(27) 해양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 및 조직 보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효과적인 마약탐지를 위한 특수장비 도입 등 지능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외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086억 5,600만원(△8.2%)이 적은 6조 8,505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63억 9,500만원(5.7%)이 증가됨.[1)]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771,524	2,771,524	2,067,532	△703,992	2,708,665	2,708,665	2,196,834	△511,831	129,302
기 금	4,027,827	4,027,827	4,416,586	388,759	4,750,504	4,750,504	4,653,679	△96,825	237,093
총수입	6,799,351	6,799,351	6,484,118	△315,233	7,459,169	7,459,169	6,850,513	△608,656	366,395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768억 9,000만원(△1.5%)이 적은 11조 3,704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8억 7,500만원(1.0%)이 증가됨.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447,239	8,447,239	8,574,491	127,252	9,065,142	9,065,142	8,906,954	△158,188	332,463
기 금	2,626,424	2,724,015	2,688,078	△35,937	2,453,680	2,482,192	2,463,490	△18,702	△224,588
총지출	11,073,663	11,171,254	11,262,569	91,315	11,518,822	11,547,334	11,370,444	△176,890	107,875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조 6,103억 3,400만원으로, 7조 6,546억 8,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조 6,378억 8,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168억 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57,872	157,872	-	157,872	168,545	155,387	13,158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216,101	6,216,101	-	6,216,101	5,201,992	5,198,910	3,081	-
투자계정	5,729,176	5,729,176	-	5,729,176	4,783,759	4,780,678	3,081	-
융자계정	486,925	486,925	-	486,925	418,232	418,232	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818	70,818	-	70,818	87,219	86,656	563	-
지역자율계정	307	307	-	307	1,441	1,433	9	-
지역지원계정	70,403	70,403	-	70,403	85,314	84,759	554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	6	-	6	455	455	0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2	102	-	102	8	8	0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165,543	2,165,543	-	2,165,543	2,196,929	2,196,929	0	-
합 계	8,610,334	8,610,334	-	8,610,334	7,654,685	7,637,882	16,802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조 3,410억 3,300만원으로, 11조 600억 2,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64억 6,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745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일반회계	5,545,535	5,545,535	20,998	△15,293	±1,447	5,551,240	5,508,722	1,813	40,70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807,514	2,807,514	913	-	±228	2,808,427	2,576,933	260	231,235
- 투자계정	2,298,575	2,298,575	913	-	±228	2,299,488	2,155,456	260	143,772
- 융자계정	508,939	508,939	-	-	-	508,939	421,477	-	87,4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25,970	1,225,970	444	-	±50	1,226,414	1,219,418	4,392	2,604
- 지역자율계정	10,789	10,789	-	-	-	10,789	10,686	-	103
- 지역지원계정	1,200,620	1,200,620	444	-	±50	1,201,064	1,194,172	4,392	2,50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809	7,809	-	-	-	7,809	7,809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752	6,752	-	-	-	6,752	6,752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738,998	1,738,998	28	-	±20	1,739,026	1,739,022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926	15,926	-	-	-	15,926	15,926	-	-
합 계	11,333,943	11,333,943	22,383	△15,293	±1,745	11,341,033	11,060,021	6,465	274,54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9조 5,450억 3,400만원으로, 28조 80억 9,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5조 1,267억 7,000만원이 수납(수납률 89.7%)되고 2조 7,778억 6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035억 1,7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전력산업기반기금	4,501,041	4,501,041	8,679,369	8,639,190	39,640	53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2,350	202,350	207,878	207,878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290,658	9,290,658	11,113,048	11,113,048	-	-
무역보험기금	5,550,985	5,550,985	8,007,797	5,166,654	2,738,166	102,978
합 계	19,545,034	19,545,034	28,008,092	25,126,770	2,777,806	103,517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9조 5,452억 6,600만원으로, 25조 1,267억 7,000만원이 지출(집행률 128.6%)되고 1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246억 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전력산업기반기금	4,501,041	4,501,041	232	4,501,273	8,639,190	136	18,79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2,350	202,350	-	202,350	207,878	-	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290,658	9,290,658	-	9,290,658	11,113,048	-	-
무역보험기금	5,550,985	5,550,985	-	5,550,985	5,166,654	-	205,798
합 계	19,545,034	19,545,034	232	19,545,266	25,126,770	136	224,603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3,489억 2,100만원이 증가된 29조 9,314억 7,500만원으로, 이는 기타비유동자산이 2,918억원, 투자자산이 693억 4,500만원 각각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505억 500만원, 유동자산이 2조 6,631억 3,200만원 각각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9,265억 8,200만원 증가된 6조 4,968억 4,8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1조 7,670억 9,3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223억 3,900만원이 증가된 23조 4,346억 2,7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조 9,819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77억 9,2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조 9,562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56억 700만원 감소됨.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9,931,475	27,582,554	2,348,921	8.5
		유동자산	19,107,501	16,444,369	2,663,132	16.2
		투자자산	5,785,701	5,855,046	△69,345	△1.2
		일반유형자산	3,878,919	3,828,414	50,505	1.3
		무형자산	23,791	27,362	△3,571	△13.1
		기타비유동자산	1,135,563	1,427,363	△291,800	△20.4
	부 채		6,496,848	4,570,266	1,926,582	42.2
		유동부채	165,175	107,268	57,907	54.0
		장기차입부채	3,487,202	1,720,109	1,767,093	102.7
		장기충당부채	619,876	759,148	△139,272	△18.3
		기타비유동부채	2,224,595	1,983,740	240,855	12.1
	순자산		23,434,627	23,012,288	422,339	1.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981,904	9,609,696	△627,792	△6.5
	재정운영순원가		8,271,986	9,174,891	△902,905	△9.8
	재정운영결과		4,956,244	5,931,851	△975,607	△16.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2조 223억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163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1조 3,074억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조 7,071억원을 예수하였고, 674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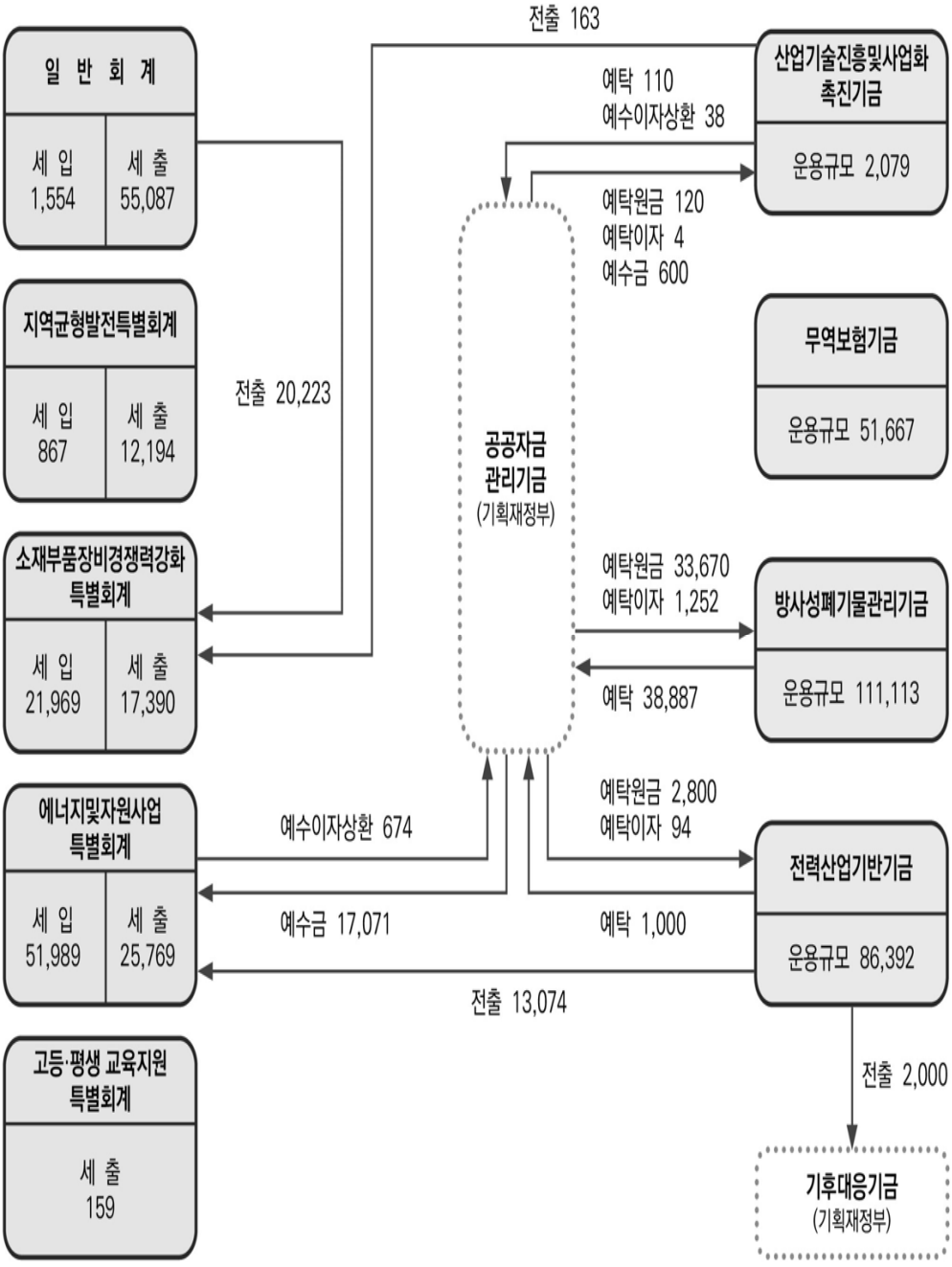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11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3조 3,67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였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12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3조 8,887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800억원의 예탁원금이 회수되었음.

더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600억원을 예수하였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000억원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출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574개 세부사업에서 산업혁신지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무역 및 투자유치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산이 완료된 R&D 종료과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기한 내에 정산금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지침에 규정된 정산 완료기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3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중인 비핵심자산을 조속히 매각하고,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R&D 혁신스케일업(융자)’ 사업에서 이차보전 사업에서 높은 보전금리를 설정할 경우 사업 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 보전금리를 설정하고,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적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넷째,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고 있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구축 내역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에 따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2024년 원전수출계약 및 보증서 발급수요가 없음에 따라 전액 실집행되지 못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예산 교부 및 금융성기금 출연금의 환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사업목적을 가진 출연금이 이를 관리하는 공사의 수입 확대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산업·에너지분야 R&D: R&D 종료과제 정산금 미납액 및 제재처분에 따른 미환수금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 체결·평가·정산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업무 등 R&D 과제와 관련된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함.[2)]

1)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및 정산금 반납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4)]

---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실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5][6]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7]

2)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등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처분(이하 ‘제재처분’)을 부과함.[8][9]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는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분함.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

그리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10]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관련 규정에 반하여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R&D 종료과제에 대해서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기한 내에 정산금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지침에 규정된 정산 완료기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2020~2024년 25,494개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7월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1,480개이고, 정산이 완료된 과제 중에서도 122개 과제는 78억 4,700만원이 국고에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우선,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정산금이 반납되지 않은 과제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반납 법정기한(1개월)을 경과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2020~2024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R&D 과제 정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과제 종료연도	정산완료 되었으나 미반납 금액이 있는 과제		정산 미완료
		과제수	미반납액	과제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년	5	11	-
	2021년	11	239	-
	2022년	2	49	-
	2023년	54	3,314	5
	2024년	11	767	248

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10)「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위: 개, 백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과제 종료연도	정산완료 되었으나 미반납 금액이 있는 과제		정산 미완료
		과제수	미반납액	과제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1년	1	9	-
	2022년	3	482	-
	2023년	10	369	-
	2024년	-	-	1,15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0년	7	113	-
	2021년	8	2,340	-
	2022년	4	69	1
	2023년	6	85	1
	2024년	-	-	66
합계		122	7,847	1,480

주) 2025년 7월 기준 각 연도말 종료된 과제의 정산 현황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다음으로, 연구가 종료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연구비 정산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제6항은 정산업무 처리기한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는 정산을 완료하고 있다는 입장임.[11]

그러나 2022년 이전 종료과제와 2023년에 종료된 일부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규정하고 있는 1년 6개월을 도과하였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

한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는 정산업무 처리기한을 1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차별 연구결과보고서와 단계별 연구결과보고서가 과제 단위로 매년 제출되고 있는 점,[12] 구축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⑥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Management System)에 의해 연구가 종료된 이후 연구비를 정산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13)]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규정한 정산 마감기한에 따르면, 연도말 종료과제가 차차년도에 정산이 완료될 것이므로 국고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산이 완료된 종료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기한 내에 정산금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지침에 규정된 정산 완료기한 1년 6개월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14)]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연구 제채처분에 의한 환수금 미납금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히 환수할 필요가 있음.

2018~2024년 총 7년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제재처분에 의한 환수금 발생액은 422억 4,400만원임.

그러나 2025년 7월 말 기준 전체 환수금 중 122억 4,300만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

[2018~2024년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개)

구분	전체 환수금 (A)	납부한 환수금 (B)	미환수금(C=A-B)			미환수율 (C/A)	미환수 과제 수
				납기가 도래한 금액(D)	납기가 미도래한 금액(C-D)		
2018년	7,765	6,884	881	881	-	11.3	9
2019년	7,174	6,556	618	618	-	8.6	6

13)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제출(2024.12.)→최종보고서 제출(2025.3.)→최종보고서 검토 및 평가준비(2025.4~6.)→최종실태조사/발표평가(2025.7~9.)→최종평가 확정(2025.9~10.)→연구비 정산 및 결과 통보(2025.10~11.)→이의신청(2025.12.)→재정산(2026.1.)→정산금 입금(2026.2., 분기별 반납)'으로 정산 절차가 진행되어 과제가 종료된 이후 정산이 완료되기까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임.

14)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전문기관의 사용실적보고서의 정산 검토 완료를 협약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종적으로 연구개발비 정산이 완료되고 국고에 납입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서도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완료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단위 : 백만원, %, 개)

구분	전체 환수금 (A)	납부한 환수금 (B)	미환수금(C=A-B)			미 환수율 (C/A)	미환수 과제 수
				납기가 도래한 금액(D)	납기가 미도래한 금액(C-D)		
2020년	6,563	5,991	573	573	-	8.7	1
2021년	5,267	2,781	2,486	2,486	-	47.2	6
2022년	3,367	2,754	612	612	-	18.2	5
2023년	7,598	2,518	5,080	5,080	-	66.9	4
2024년	4,510	2,517	1,993	1,993	-	44.2	5
계	42,244	30,001	12,243	12,243	-	29.0	36

주 1) 전체 환수금: 제재부가금 + 연구개발비 환수금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금액은 제외함)
2) 납부한 환수금: 연구수행기관이 전문기관에 납부한 환수금이 아닌, 부처에 최종적으로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즉, 국고 반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환수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부정사용하거나 연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 등이 환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히 환수할 필요가 있음.[15)16)]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반납이 지연되고 있는 정산금과 환수금 전체를 계상함으로써 수입관리에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기술료,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금, 출연금 및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산금을 수납하는 세입항목임.

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미 계좌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법률자문 및 검토를 거쳐 미납금에 대하여 독촉, 내용증명 발송 등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종료된 R&D 과제의 정산결과 국고반납금 및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금을 각 회계/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받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일반회계를 비롯한 8개 회계/기금에서 R&D 과제의 정산금 및 환수금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4년 8개 회계/기금별 R&D 정산금 및 환수금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국고납입액
일반회계	32,800	32,8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866	7,86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23,931	23,931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7,352	7,352
기후대응기금	513	51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36	1,036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158	1,158
전력산업기반기금	8,927	8,927
합계	83,583	83,58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2020~2024년 총 5년간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반납되지 못한 정산금과 2018~2024년 총 7년간 제재처분에 따른 미환수금이 징수결정액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수납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액에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아직 수납받지 못한 금액도 사실상 그 해에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금액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납이 지연되고 있는 정산금과 환수금 전체를 당해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으로 관리하지 않는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여 수입관리에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잠식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가. 개 요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누적 손실로 인해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황을 의미함.[17]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자본잠식 공공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 총 3개 공공기관임.[18]

이들 3개 공공기관의 2024년 당기말 기준 자본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3조 7,630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조 3,216억원, 대한석탄공사는 △2조 422억원으로서 모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

[2024년 당기말 기준 자본잠식 공공기관 자본현황]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한국광해광업공단	48,211	85,841	△37,630
한국석유공사	204,916	218,132	△13,216
대한석탄공사	4,220	24,642	△20,422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재구성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는 공사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2025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국내 마지막 광산인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말에 폐광되면서 사실상 공사의 핵심사업이 모두 사라짐에 따른 것임.

2025년 7월 기준 대한석탄공사는 퇴직 후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20여명의 기존 직원과 신규 채용한 계약직 20여명 등 40여명이 공사의 부채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17)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자산-부채)을 의미하고, 자본금이란 주주들이 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에서 법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함. 통상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잠식으로 간주함.

18)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기업형 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는 공기업형 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는 기타공공기관임.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해당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받아 재정건전화계획을 포함한 자구노력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음.[19]

그러나 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구노력을 살펴보면 ① 기 투자액의 회수실적이 저조하고, ② 기관 자체적인 내부 건전화 노력이 미흡하며, ③ 공공기관 분류의 변경으로 향후 점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3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핵심자산을 조속히 매각하고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2021년 9월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면서 설립되었고, 광물자원공사는 통합 전 5조 9,985억원 투자실적 대비 8,090억원만이 회수됨에 따라 회수실적이 저조하였는데, 통합 후 2024년까지도 총 투자실적 7조 3,387억원 중 1조 4,514억원만이 회수된 상황임.[20]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0)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전/후 자본상태>

(단위: 억원)

항목	2020.12월말		2021.9.9.(청산)		2021.9.10(개시)
	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자 산	15,266	30,207	15,258	34,504	49,762
부 채	3,531	67,535	3,490	70,302	73,792
자 본	**11,736**	**△37,328**	**11,768**	**△35,798**	**△24,030**
항목	**한국광해광업공단**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자 산	50,459	51,949	55,342	48,211	-
부 채	72,642	74,494	80,120	85,841	
자 본	**△22,183**	**△22,545**	**△24,778**	**△37,6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통합 전/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누적 투자 및 회수대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투자실적	회수실적
통합 전(~2021.9.)	59,985	8,090
통합 후(2021.9.~)	73,387	14,514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당기순손실은 △1.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의 니켈가격 하락에 따른 현지 손상차손(△0.9조원)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의 생산설비 노후화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0.1조원)에 주로 기인하고, 공단 자체수입은 연례적으로 계획 대비 적게 수납되고 있음.

[2022~20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체수입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계획)	수납실적	예산(계획)	수납실적	예산(계획)	수납실적
자체수입 계	1,202,169	897,989	792,447	803,583	1,026,584	615,789
- 융자수입	120,890	117,464	115,542	114,023	110,986	109,471
- 임대수입	5,731	7,795	5,724	6,334	6,612	6,755
- 수주용역수입	7,953	5,953	17,669	14,802	6,931	4,968
- 검정용역수입	23	18	23	16	17	16
- 수수료수입	1,067	1,304	-	-	-	-
- 광산물매출	740,005	623,692	509,700	467,341	553,321	336,782
- 배당수입	-	-	-	-	-	-
- 투자사업회수	218,111	52,249	77,009	89,912	216,398	41,713
- 대부투자이자수입	100,335	54,930	53,043	57,892	58,558	-
- 기타수입	8,054	34,582	13,733	53,263	73,761	116,084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가 2014~2024년 투자한 국내 및 해외광구 대상 총 투입비용 대비 회수대금을 살펴보면, 국내사업에서는 15개 광구에 13억 9,480만 달러를 투자하여 22억 6,700만 달러를 회수하였으나 당해 회수액은 동해-1, 동해-2 광구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13개 국내광구에서는 회수 실적이 없었고, 해외광구에서는 총 51개 광구 대상 240억 3,99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128억 9,080만 달러를 회수하는데 그쳤음.

[2014~2024년 한국석유공사 석유개발사업 총 투자 및 회수대금 현황]

(단위: 개, 백만$)

구분	총 개수	투입비용	회수 및 매각대금
국내광구	15	1,394.8	2,267
해외광구	51	24,039.9	12,890.8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재구성

한국석유공사는 투자실적이 향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의 경우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선 매각 대상으로 분류된 자산은 회수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광구의 감가상각 및 낮은 회수대금은 당분간 공사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됨.

마지막으로, 대한석탄공사는 몽골 홋고르 샤나가 탄광을 매각하고자 하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매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대한석탄공사의 자본은 2020년 △1.2조원에서 2024년 △2.0조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누계액 증가 등 영향으로 유형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21)]

[2020~2024년 대한석탄공사 자본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말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 자 산	**911,596**	**970,520**	**965,924**	**859,220**	**421,994**
유동자산	382,518	391,149	379,299	385,810	276,654
비유동자산	529,078	579,371	586,625	473,410	145,340
■ 부 채	**2,105,752**	**2,262,829**	**2,391,708**	**2,501,961**	**2,464,182**
유동부채	1,060,094	1,264,439	1,325,808	1,721,118	1,650,484
비유동부채	1,045,658	998,390	1,065,900	780,843	813,698
■ 자 본	**△1,194,156**	**△1,292,308**	**△1,425,784**	**△1,642,741**	**△2,042,188**
(지배지분)	△1,184,658	△1,276,400	△1,401,075	△1,616,143	△2,013,956
(비지배지분)	△9,498	△15,908	△24,709	△26,598	△28,232

자료: 대한석탄공사

이처럼 세 기관은 기투자액 회수 실적이 미흡하거나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인해 자산 매각 여력이 제한된 상황으로 판단됨.

21) 2024년 자산은 전년 대비 4,37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누계액 △3,448억원 및 재고자산 감소분(전기 1,511천톤 대비 186천톤 감소) △430억원에서 주로 기인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각 지연이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각 기관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핵심 자산을 조속히 매각하고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22)]

22) 참고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측면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였으므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2024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단위: 억원)

기관명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합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한국석유공사	30	1	-	-	190	919	-	-	-	-	220	921
한국광해광업공단	777.1	21.1	80.2	8.2	10.0	15.6	73.1	121.7	2,518	2,518	3,458	2,684
대한석탄공사	재정건전화계획 없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한국석유공사는「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4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 상한을 초과하여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는 대부 초과금액의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본잠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46조제5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음.[23)]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말 기준 대부총액 기준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준 인원이 지원인원의 50%를 초과하고, 금액으로는 그 비율이 80%에 근접하고 있음.

[2024년 한국석유공사의 주택임차 등 지원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대부총액 (A)	한도 초과 대부금액 (B)	비율 (B/A)	지원인원 (a)	한도 초과 지원인원 (b)	비율 (b/a)
주택임차	10,936,307,294	9,118,807,294	83.4%	108	68	63.0%
주택구입	37,510,719,496	27,123,303,940	72.3%	411	192	46.7%
생활안정자금	16,709,200,000	13,344,900,000	79.9%	728	434	59.6%

자료: 한국석유공사

이는 공사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뿐만 아니라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는 노조설득 위해 '노사 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매주 강도 높은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이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면 개선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한국석유공사는 노사협의를 통한 대부 초과금액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본잠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3)「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⑤공공기관이 제4항의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한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탄공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여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채가 대부분 금융차입금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채무 조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퇴직자 발생 및 지역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산업 투자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청산 및 전환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요에서 서술하였듯이, 2025년 6월 말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인 강원도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국내 국영 및 공영 탄광이 모두 폐광되었음.[24]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탄공사와 합의한 대로 약 200명의 남은 직원에게 퇴직을 통보하였고, 대한석탄공사는 퇴직 후 3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20여명의 기존 직원과 신규 채용된 계약직 20여명 등 40여명이 공사의 부채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관 청산 및 통·폐합 여부 등 대한석탄공사 정리방안에 대하여 확정된 바 없으며, 약 2.5조원의 부채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기관의 정리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임.[25]

[2024년 말 기준 부채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말 기준
Ⅰ. 유동부채		1,650,484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866
	1) 단기매입채무	46
	2) 단기미지급금	246
	3) 단기미지급비용	8,508
	4) 유동리스부채	65
	2. 유동금융부채	1,632,086
	1) 단기차입금	1,132,086
	2) 유동성장기차입금	500,000
	3. 유동비금융부채	5,932
	1) 단기선수금	1,698

24) 2023년 전라남도 화순광업소가 폐광되고 2024년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된 뒤, 도계광업소는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이었음. 도계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2025년 7월 기준 국내에는 도계읍에 있는 민영 탄광인 ㈜경동상덕광업소 한 곳만이 남게 되었음.

25) 다만, 대한석탄공사가 수행하던 비축탄 관리 기능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자산 중 매각이 가능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고, 퇴직자 대상 생활안정자금(폐광대책비, 조기폐광특별위로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중이라는 입장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말 기준
	2) 단기선수수익	467
	3) 단기예수금	1,065
	4) 기타유동비금융부채	2,703
	4. 유동충당부채	3,599
	1) 유동종업원급여 충당부채	3,599
Ⅱ. 비유동부채		813,698
	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7
	1) 비유동리스부채	77
	2. 비유동금융부채	800,000
	1) 장기차입금	800,000
	3. 비유동충당부채	13,621
	1)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	13,621
부채 총계		2,464,182

자료: 대한석탄공사

2024년 말 기준 부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부채 총계 2조 4,642억원 중 98.7%인 2조 4,321억원(유동금융부채 1조 6,321억원, 비유동금융부채 8,000억원)이 금융부채이고, 이 중 단기차입금이 1조 1,320억원, 유동성 장기차입금이 5,000억원, 비유동성 장기차입금이 8,000억원으로 차입금 중심의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대한석탄공사는 자산이 4,220억원에 불과하여 자산 처분으로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단기차입금은 청산 개시 직후 곧바로 상환 압박으로 작용하여 청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음.

비금융성 부채 중에서도 종업원 급여 충당부채 36억원과 법적 소송 충당부채 136억원은 사실상 단기간 내에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우선 부채이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신속히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2024년에 실시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 및 도계광업소가 폐광될 경우 삼척에서 1,685명, 태백에서 876명 등 총 2,561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25년 5월 기준 도계읍 입구 8,925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인구임.

이에 정부는 폐광지역을 대체하기 위한 핵심산업으로 태백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및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삼척에는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7월 기준 이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26)]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탄공사의 부채가 대부분 금융차입금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채무 조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퇴직자 발생 및 지역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산업 투자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전환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6) '태백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및 '삼척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2025년 7월 말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음.

【일반회계】

〈세 출〉

3.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높은 보전금리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함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도 R&D 예산액 감액 이후 R&D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0억원 중 65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6%)되고, 64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D/C)	
	본예산	추경(A)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13,000	13,000	-	13,000	6,575	-	6,425	50.6	11,250

이 사업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되어 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하게 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차액(대출금리와 기업 부담금리의 차이)을 지원함.

최대 보전금리는 5.5%p이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리는 최저 0.5%p로 제한하고 있음.

그에 따라 대출금리가 6%보다 작으면 기업은 0.5%만 부담하고, 대출금리가 6%보다 크면 최대 보전금리가 5.5%이므로 기업이 최종하는 최종금리는 0.5%보다 커지게 됨.

27) 일반회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3174-412)(산업기술융합정책국)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2024~2028년
지원내용	이자 차액(대출금리-보전금리=최종금리)을 지원하며, 보전금리는 최대 5.5%p로 하되 최종금리는 최저 0.5%p로 제한
지원조건	3년 이내 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협약금액 대비 2024년 당해연도 감액분의 200%까지 보전
지원대상	2024년도 R&D 수행 기업 중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외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사업에 신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은 목표로 한 대출원금 4,500억원 중 2,220억원의 대출만 시행되었는데, 신청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변경 공고를 통하여 신청 및 접수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제한하기 보다, R&D 예산 감액에 따른 연구비 단절 문제 극복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이 사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30억원 중 65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6%)되었는데, 이는 당초 목표로 한 대출원금 4,500억원 중 2,220억원의 대출이 실행됨에 따른 것임.

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① 부처별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액된 연구비로 협약 변경을 시행하였다는 감액과제 확인서를 발급받고, ②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이차보전 신청을 하면, ③ 13개 취급 은행으로부터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구조임.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574개의 기업이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대출원금 수요는 2,464억 7,000만원이었음. 그 중 실제 대출받은 기업은 538개 기업이고, 실제 대출은 2,220억 3,500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융자추천서 발급 및 실제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융자 전체 수요(융자추천서 발급기관)		실제 대출받은 기업	
대출원금 수요	총 기업수	실제 대출금	기업수
246,470	574	222,035	53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신규사업으로 급하게 편성되면서 사전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용 및 담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 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의 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31일에 변경 공고를 통하여 신청 및 접수기간을 예산 소진 시에서 9월 30일까지로 제한하였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 제도 활용을 독려하는 등 2024년 R&D 예산 감액에 따른 연구비 단절 문제 극복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사업 공고 현황]

구분	날짜	내용
1차 공고	3.18.	신청기간 - 2024.3.2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공고	7.31.	신청기간 - 2024.3.25.(월) ~ 9.3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 사업에서 높은 보전금리를 설정할 경우 사업 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 보전금리를 설정하고,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적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보전금리 5.5%p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2개 이차보전 사업이 설정하고 있는 보전금리 수준에 비해 높은 수치인데, 그로 인하여 평균 대출금리도 6.06%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산업통상자원부 수행 이차보전사업 보전금리 현황]

사업명	대출건수	평균 대출금리	보전금리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541건	6.06%	5.5%p (기업부담 최저금리 0.5%)
친환경차 보급촉진 위한 이차보전	37건	5.49%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차보전	-	-	대기업 2.0%p 중견기업 2.75%p 중소기업 3.0%p

주 1)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2)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업은 기업의 최저 부담금리 0.5%와 정부의 보전금리 5.5%p를 합한 6.0% 이상의 대출금리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 데, 실제 이루어진 541건의 대출 중 246건(45.5%)의 대출금리가 6.0%를 초과하고 있는 등 결과적으로 유사 이차보전 사업 대비 다소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분석됨.[28)]

[2024년 대출금리 분포 현황]

(단위: 건)

합계	대출금리					
	4.0~5.0%	5.0~6.0%	6.0~7.0%	7.0%~	최소값	최대값
541	3	292	208	38	4.71%	9.04%

주)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출 및 이에 파생되는 손실이 모두 금융기관에 귀속되며, 대출금리가 차이나는 이유는 기업 간 신용등급, 담보·보증여부 및 대출기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임.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대출 건별 금리 차이가 최소 4.71%에서 최대 9.04%로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등급 등의 격차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음.

28)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높여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금리를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이득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높더라도 보전금리를 제외한 부분만 부담하기 때문에 높은 대출금리에 둔감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과 수요자의 이해관계는 모두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또한 이처럼 높은 보전금리 설정은 궁극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수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R&D 예산감액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본 사업이 결국 금융기관의 수익을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된 것을 의미함.

실제로 이 사업의 대출금리에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취급수수료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출을 실시한 11개 은행에 대한 취급수수료율은 2.20%에서 3.57%로서 대출금리 중 40% 이상의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 사업 대출을 실시한 11개 은행의 취급수수료율]

은행명	조달금리(A)	취급수수료율(B)	대출금리(A+B)
기업은행	3.42%	2.59%	6.01%
신한은행	3.27%	2.68%	5.95%
하나은행	3.41%	2.61%	6.02%
농협은행	3.47%	2.58%	6.05%
대구은행	3.35%	3.57%	6.92%
전북은행	3.30%	2.20%	5.50%
광주은행	3.54%	2.88%	6.42%
경남은행	3.55%	2.78%	6.33%

주 1) 취급수수료율은 업무원가, 신용원가, 법적비용, 영업마진, 감면금리 등을 반영한 수치임
2)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전금리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그 수혜가 금융기관에 귀결되어 사업 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차보전 사업을 설계할 경우 적정 보전금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차보전 사업 집행 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높아질수록 정부 예산 소요액 또는 기업 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후적 관리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29)]

29) 은행은 여신규정에 따라 기업의 상환 능력에 대해 은행의 책임으로 심사 후 은행의 위험으로 대출여부, 대출 금액 · 금리 등을 결정하므로(산업부-은행 간 협약서 명시 사항) 원칙적으로 산업부가 대출금리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금리를 적용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한 조치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할 필요성은 있을 것임.

4.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 공모 접수율 저조에 따른 사업 지연사례 재발 방지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검체를 확보하여 임상 및 유전체 등을 통합하기 위한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7억 7,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30]

[2024년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D/C)	
	본예산	추경(A)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R&D)	10,777	10,777	-	10,777	10,777	-	-	100.0	21,107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2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9%), 산업통상자원부(17.9%), 질병관리청(36.0%)이 함께 수행하는 다부처 R&D 사업이고, 2024년에는 7개 신규과제와 사업단 운영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비율인 17.9%만큼 편성되었음.

[2024년 산업부 예산지원 금액 및 신규과제 현황]

내역사업명	예산액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운영	○ 94억 1,300만원 신규과제1. 참여자 모집 기관 관리 및 홍보 : 2억 1,000만원 - 1개 과제 x 15억 6,670만원 x 9/12개월 x 17.85%(산업부 비율) 신규과제2.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검체수집 : 15억 6,400만원 - 38개 과제 × 4억 6,130만원 x 6/12개월 x 17.85%(산업부 비율) 신규과제3. 데이터뱅크 구축 및 운영 : 29억 6,300만원 - 1개 과제 x 221억 2,270만원 x 9/12개월 x 17.85%(산업부 비율)

30) 일반회계-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3651-442)(첨단산업정책관)

	신규과제4. 바이오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6억 7,100만원 - 1개 과제 x 199억 4,400만원 x 9/12개월 x 17.85%(산업부 비율) 신규과제5. 인제자원제작 및 검체운송 : 9억 6,700만원 - 1개 과제 x 108억 3,400만원 x 6/12개월 x 17.85%(산업부 비율) 신규과제6.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생산 분석 : 10억 2,000만원 - 1개 과제 x 76억 1,730만원 x 9/12개월 x 17.85%(산업부 비율) 신규과제7. 수요 맞춤형 데이터 이용 지원 : 1,800만원 - 1개 과제 x 1억 3,450만원 x 9/12개월 x 17.85%(산업부 비율)
사업단 운영	○ 13억 6,400만원 신규과제8. 사업단 운영 : 13억 6,400만원 - 1개 과제 x 101억 8,800만원 x 9/12개월 x 17.85%(산업부 비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교부 받은 107억 7,700만원 중 103억 4,700만원을 연구수행기관에 교부하였고, 연구수행기관은 매칭금 8,1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104억 2,800만원 중 57억 9,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55.6%)하고 46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년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45개 기관)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매칭 (C)	교부 현액 (D=B+C)	최종 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E/D)
10,777	10,777	10,777	10,347	10,347	81	10,428	5,799	4,629	-	55.6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2024년 예산 중 13억 6,400만원은 산업부에 배정된 사업단 운영비인데, 총 39명의 정원(정규직 11명, 계약직 28명)으로 구성된 이 사업단은 보건의료 정책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과제를 기획・관리・평가하고 참여자 모집기관 관리・운영지원과 참여자 모집 관리를 위한 홍보 등을 담당함.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단의 인력이 단순 사무직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세부과제 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 등 연구개발과제 전주기 관리, 참여자 모집 및 데이터 수집 관리 등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임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연으로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사업단 운영비 예산액 13억 6,400만원 중 2024년 12월 말 기준 3억 9,200만원이 실집행(집행률 29.0%) 되었음.

해당 집행액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 Ezbaro)에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 등 등록이 지연된 금액은 제외된 것인데, 이를 포함하더라도 6억원(집행률 44.0%)이 최종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정공모기관 협약 체결 지연으로 이후 계획된 현장 컨설팅 및 회의비 등 연구활동비 집행이 순연(4개 부처 전체 연구활동비 집행률 22.2%)되고, 인력채용 지연과 중도퇴사로 인하여 인건비 집행이 미진함(4개 부처 전체 연구활동비 집행률 72.5%)에 따른 것임.

[2024년 다부처 사업단 전체 연구비 및 인건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세목	예산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집행률
연구활동비 등	5,460	1,778	3,682	22.2
인건비	2,181	1,581	600	7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사업단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설립된 비법인 사업단으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어, 일부 직원들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업단의 인력은 사업의 세부과제 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 등 연구개발과제 전주기 관리, 참여자 모집 및 데이터 수집 관리 등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 향후 과제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단계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다소 선정 지연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이후 후순위 단계에서 연구가 순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45개 연구수행기관이 교부받은 103억 4,700만원 중 사업단 운영비 13억 6,400만원을 제외한 89억 8,300만원은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검체수집 등 7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로써, 매칭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90억 6,400만원 중 54억 700만원이 최종 집행되었음.

아래 표를 보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 등록이 지연된 과제도 있으나,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검체수집 과제에서 교부현액 12억 1,500만원 중 3억 9,9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32.8%)되어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과제별 집행액과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과제명	교부받은 금액 (A)	매칭금 (B)	교부현액 (A+B)	집행액	집행부진 사유
참여자 모집 기관 관리 및 홍보	210	-	210	-	참여자 모집기관 선정 지연으로 일정 순연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검체수집	**1,134**	**81**	**1,215**	**399**	**과제 공모 접수 미달로 인한 과제 개시 지연**
데이터뱅크 구축 및 운영	2,963	-	2,963	1,186	위탁용역과제비 지급 일정 지연
바이오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671	-	2,671	2,161	-
인제자원제작 및 검체운송	967	-	967	921	-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생산 분석	1,020	-	1,020	739	위탁용역과제비 지급 일정 지연
수요 맞춤형 데이터 이용지원	18	-	18	1	참여자 모집기관 선정 지연으로 일정 순연
계	8,983	81	9,064	5,407	-

주) 2024년 12월 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기관 및 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일반·암환자·중증·희귀질환자 등 다양한 모집군을 선정하여야 하는 과업에 비해, 인건비·인프라 구축비 등이 최소 수준으로 책정되어 공모 접수율이 저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협약 시

점인 2024년 7월에는 총 39개 과제 중 22개만 체결되고, 그 외 8개 과제는 2024년 10월, 9개 과제는 2024년 12월에 체결되면서 집행이 미진하였다는 입장임.

[과제공고일자 및 실제 협약 시점]

과제 현황	공고 일자 (당초 계획)	협약 일자 (당초 계획)	실제 공고일	실제 협약일
39개	2024.5.	2024.7.	1차: 2024.5. 2차: 2024.8. 3차: 2024.10.	1차: 2024.7.(22개) 2차: 2024.10.(8개) 3차: 2024.12.(9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업은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검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체자원(DNA・혈청 등)을 제작 후 바이오뱅크에 보존하며, 참여자의 임상 및 유전체를 데이터뱅크에 통합 후, 2026년 하반기부터 분양심의를 통해 외부에 개방하는 단계별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

[단계별 연구진행 일정]

단계	일정	내용
1	참여자 모집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희귀・중증질환자와 일반인 참여자 모집 * 1단계 목표: 77.2만명
2	인체자원 제작 및 보존	참여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인체자원 제작 후 바이오뱅크(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보존
3	바이오 빅테이터 생산 및 통합	참여자의 임상(설문・검진 등), 유전체, 공공데이터 등을 데이터뱅크에 통합
4	외부 개방	정밀의료 등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인체자원과 빅데이터를 검증 후 2026년 하반기부터 분양심의를 통해 개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단계 참여자 모집에 지연이 있었고 단계별 연구진행 일정이 계획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후 후순위 단계에서 연구가 순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사업: 법령상 과제시작일과 실제 협약 체결일의 간극의 최소화 필요 등

가. 개 요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사업은 바이오 분야(맞춤형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바이오신소재,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162억 6,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31)]

[2024년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D/C)	
	본예산	추경(A)							
바이오 산업기술개발 (R&D)	116,261	116,261	-	116,261	116,261	-	-	100.0	128,291

2024년도 예산액 중 158억 5,000만원은 2024년을 1차년도로 하는 신규 20개 R&D 과제에 대한 예산이고, 3개 내역사업에 나누어 9개월분으로 편성되었음.

[2024년 신규 R&D 과제에 편성된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개월)

내역사업명	과제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맞춤형 진단・치료제품	2	1,030.7	9/12	1,546
디지털헬스케어	13	1,056.4	9/12	10,300
첨단바이오신소재	5	1,067.7	9/12	4,004
합계	20	-	-	15,8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례에 걸쳐 신규과제 20개를 모두 선정하였으며, 과제 선정일은 2024년 4월 29일(1차), 2024년 6월 26일(2차), 2024년 8월 29일(3차)임.

31) 일반회계-바이오산업기술개발(R&D)(3651-301)(첨단산업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상 연구개발 시작일이 실제 협약시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9조제6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구기관이 사전에 집행한 자체자금을 보전하는 것에 있어서 협약으로 정한 세부 연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소급기간을 최소화하여 국비를 통해 수행되는 연구과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과제에 관한 평가관리지침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기술개발지침’)」 제29조제6항은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32)]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신규과제에 대하여 과제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이 포함된 월의 첫날인 4월 1일, 6월 1일, 8월 1일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로 하여 그로부터 9개월을 1차년도 연구수행기관으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과제가 선정된 이후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과제의 실제 협약체결일은 「기술개발지침」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과 차이가 있음.

R&D 신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 계획서를 바탕으로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도 과제가 종료되는 연도까지 진행될 연구의 세부내용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연구기관 간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실제 협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음.[33)]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술개발지침」에 따른 연구시작시점과 협약체결일이 2~4개월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연구비 지급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3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체결) ⑥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전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3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 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 · 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제별 법령상 협약기간과 실제 협약체결일 현황]

공고 차수	과제명	「기술개발지침」에 따른 1차년도 연구기간	협약체결일
1차 과제선정 (2024. 4.29.)	항균 천연생리활성 소재 포르피린류의 대량 생산 및 제품화 기술 개발	2024.04.01~2024.12.31 (9개월)	2024.06.13
	응급의료자동기록작성지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급 응급실용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개발	2024.04.01~2024.12.31 (9개월)	2024.07.19
	퇴행성 뇌질환 중심 시니어 헬스케어 임상실증 AI플랫폼 개발	2024.04.01~2024.12.31 (9개월)	2024.06.28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헬스 평가 모델 개발 및 상용화 지원(GLOBAL)	2024.04.01~2024.12.31 (9개월)	2024.08.02
	상온 생분해 촉진 고성능 효소 활성화 기술과 이를 적용한 생분해성 고분자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2024.04.01~2024.12.31 (9개월)	2024.08.02
	(2세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증질환 경험자 맞춤 디지털 헬스케어 및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실증	2024.04.01~2024.12.31 (9개월)	2024.07.26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 연속 생산용 디지털 트윈 연계 배양 연속 생산 시스템 개발	2024.04.01~2024.12.31 (9개월)	2024.07.25
	다종의 디지털 표현형 메타데이터 기반 청소년 및 청년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자살 자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2024.04.01~2024.12.31 (9개월)	2024.07.01
	AI기반 진폐 및 호흡기질환자 위험도 예측과 일상관리를 위한 기기, 시스템 개발 및 해외진출 위한 국내외 실증	2024.04.01~2024.12.31 (9개월)	2024.07.31
2차 과제선정 (2024. 6.26.)	항체의약품의 장내 수송체 표적형 경구 약물전달시스템 및 제형화 기술개발	2024.06.01~2025.02.28 (9개월)	2024.08.19
	심장혈관계 생체역학 디지털 시뮬레이터 개발 및 연계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2024.06.01~2025.02.28 (9개월)	2024.09.25
	골면역 제어 기능의 고강도 유무기 융복합 골재생 소재 및 환자맞춤형 정형외과용 제품화 기술개발	2024.06.01~2025.02.28 (9개월)	2024.09.24
	심장혈관계 질환 예측·분석·모니터링 메타 패치 및 생체신호 연속측정 웨어러블 제품 개발	2024.06.01~2025.02.28 (9개월)	2024.09.20
	임상데이터 및 생체신호 기반 심장혈관 생체역학 3D 모델링·시뮬레이션 SW 개발	2024.06.01~2025.02.28 (9개월)	2024.09.20
3차 과제선정 (2024. 8.29.)	심장질환 다중 바이오마커 검출 초소형 패치 개발 및 심장질환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2024.08.01~2025.04.30 (9개월)	2024.10.28
	바이오마커 정량분석이 가능한 신속진단검사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2024.08.01~2025.04.30 (9개월)	2024.11.05
	스테로이드계 소재 생산용 세포공장 기반 의약품 원료 소재 및 활용 기술 개발	2024.08.01~2025.04.30 (9개월)	2024.09.19
	다기관 clinical free text 활용을 위한 LLM 기반의 NER 도구 및 표준화 지원 도구 개발	2024.08.01~2025.04.30 (9개월)	2024.12.16

공고 차수	과제명	「기술개발지침」에 따른 1차년도 연구기간	협약체결일
	중적외선 나노광학 필터 기반 비침습적 심근경색 바이오마커 연속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개발	2024.08.01~2025.04.30 (9개월)	2024.11.22
	친환경 엔지니어링 바이오폴리머 제조용 다이아민 단량체의 탄소길이 맞춤형 바이오공정 기술 및 응용 제품 개발	2024.08.01~2025.04.30 (9개월)	2024.09.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경우 3차에 과제가 선정된 사례 중 2024.12.16.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기술개발지침」에 따른 연구기간이 2024.8.1.~2025.4.30.인 과제는 2024년도 1차년도 연구비 9개월분을 교부받아 실제로는 2024.12.16.~2025.4.30.까지 5개월간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시작시점부터 연구기관은 자체 자금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협약이 체결되고 국비가 교부되면 그 때까지 소요된 자체 집행액을 사후에 보전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연구과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협약이 체결되기도 이전에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는 협약 준수 여부 등 철저한 사후검증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상 연구개발 시작일이 실제 협약시점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술개발지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구기관이 사전에 집행한 자체자금을 보전하는 것에 있어서 협약으로 정한 세부 연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소급기간을 최소화하여 국비를 통해 수행되는 연구과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34)35)]

34) R&D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함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5)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거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먼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이 사업 신규 20개 과제 중 16개 과제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R&D 과제의 선정이 완료된 이후 법정기한 내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개발과제협약을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36][37]

이는 평가가 종료되고 과제착수가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연차별 과제 수행 일정이 전체적으로 순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평가 이후 협약 시점을 예측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협약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협약 체결을 지연시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 사업 신규 20개 과제 중 1차에 선정된 2개 과제와 3차에 선정된 2개 과제를 제외한 16개 과제에서 법령상 규정된 기한을 도과하여 협약이 체결되었음.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체결까지의 기간]

(단위: 개)

구분	선정 후 30일(국제공동과제 60일) 이내 협약 체결			기한 도과
	1차 선정과제	2차 선정과제	3차 선정과제	
과제수	2	-	2	1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협약 내용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연구기관 내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협약 체결이 법령상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입장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20개 과제의 대부분이 법령상 협약 체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차별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R&D 과제의 선정이 완료된 이후 법령상 규정된 기한 내에 협약이 체결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37) 다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는 6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 실집행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1998) 총 3단계 사업 중 마무리 단계로 현재 킨텍스 제1, 2전시장 전시면적 10.8만㎡를 3단계 전시장 건립을 통해 총 17만㎡로 확장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9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8]

[2024년도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킨텍스 3단계 건립	14,500	14,500	14,500	-	29,000	29,000	-	-	11,600

이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1차 보조사업자이고 사업수행기관은 ㈜킨텍스로서, 사업수행기관 수준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100억 5,7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390억 5,700만원 중 20억 4,600만원을 실집행(집행률 5.2%)하고 370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년도 (주)킨텍스 수준에서의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 킨텍스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14,500	14,500	14,500	29,000	10,057	39,057	2,046	14,500	-	37,011	-	5.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8) 일반회계-킨텍스 3단계 건립(1139-314)(무역투자실)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달리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현액 290억원을 전액 1회에 교부하였는데, 향후 보조사업자 수준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2년 기본설계 과정에서 건설원가 급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2023년 1월에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23년 9월 공사에 착수하였음.

그러나 2023년 11월에서 2024년 1월까지 진행된 1~2차 건설사 입찰에서 결과적으로 무응찰로 유찰되고, 이후 2024년 3월부터 5월에 진행된 수정공고에서 단일응찰로 유찰되면서 2024년 8월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그로 인하여 2024년 12월에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체결(패스트트랙)되면서, 사업시행주체인 ㈜킨텍스는 2024년 예산현액 390억 5,700만원 중 20억 4,600만원만 실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함.

[공사 착수 계획 대비 지연 현황]

내용	시점	특이사항
실시설계 및 공사 착수시점	2023.9.	기본설계 과정에서 건설원가 급등으로 2023.1. 총사업비 협의를 통한 사업비 증액
1~2차 입찰	2023.11.~2024.1.	무응찰 유찰
3~4차 수정공고	2024.3.~5.	단일응찰 유찰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	2024.8.	조달청 및 주주협의 후 방식 변경
조달청 기술제안서 심의 완료	2024.11.14.	-
건설사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 (패스트트랙)	2024.12.	-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	2025.1.~8.	-
수의시담 및 본공사 계약	2025.9.~10.	-
준공	2028년으로 변경예정	본공사 계약 이후 현행 사업기간(~2027년)을 1년 연장 예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1월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2024년 예산현액 290억원을 전액 1회로 교부하였는데, 해당 시점은 조달청의 기술제안서 심의가 완료된 직후로서 건설사 우선시공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고, 2023년도 이월금 100억 5,700만원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었음.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출자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수행함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39]

특히 2021~2024년 ㈜킨텍스는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하였는데,[4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사업자 수준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0) <2021~2024년 ㈜킨텍스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	실집행률
2021	20,000	-	20,000	8,791	11,209	44.0
2022	-	11,209	11,209	1,152	10,057	10.3
2023	-	10,057	10,057	-	10,057	-
2024	29,000	10,057	39,057	2,046	37,011	5.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투자처 재선정으로 인한 청산시점 지연 가능성 최소화 필요 등

가. 개 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766억 1,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1]

[2024년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업단지 환경조성	397,197	397,197	-	-	397,197	397,197	-	-	387,478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276,617	276,617	-	-	276,617	276,617	-	-	230,22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산단환경개선펀드 내내역사업(2024년 1,867억 7,000만원)과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5개 내내역사업(2024년 898억 4,700만원)[42]으로 구분되고, 두 내내역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문기관으로서 관리하고 있음.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정부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자금을 토대로 펀드를 결성한 후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시행법인(SPC)에 교부되면, 사업시행법인이 근로 및 정

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산업단지 환경조성(3333-305)(산업기반실, 산업정책실)

42) 휴폐업공장리모델링 268억 2,000만원, 청년문화센터 447억 4,000만원, 혁신지원센터구축 90억 3,500만원, 아름다운거리플러스 62억 5,200만원,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30억원임.

주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됨.[43)]

참고로 2020년 이전 조성된 펀드는 펀드결성시점부터 10년간, 2021년 이후 조성된 펀드는 25년간 펀드를 운용하고, 이후 청산되면 출자금 및 배당이 국고로 귀속됨.[4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체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5개 내내역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거쳐 인천광역시 등 76개 2차 피출연기관에서 최종집행이 이루어지며,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 예산 118억원이, 연차사업에 대해서는 2~3년차 예산 780억 4,700만원이 배정됨.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5개 내내역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내역	
		신규사업	연차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6,820	ㅇ 200 - 1년차 2개 x 100 = 200	ㅇ 26,620 - 2년차 2개 x 2,000 = 4,000 - 3년차 8개 x 2,602.5 + 1개 x 1,800 = 22,620
청년문화센터	44,740	ㅇ 3,000 - 대형(60억) 1년차 20개 x 100 = 2,000 - 중소형(40억) 1년차 10개 x 100 = 1,000	ㅇ 41,740 - 2년차 1개 x 760 + 1개 x 740 = 1,500 - 3년차 32개 x 1,088.75 + 5개 x 1,080 = 40,240

43) 투자분야는 산업집적화촉진분야(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협동화시설 등), 창업·R&D·교육분야(창업·R&D센터, 직업훈련시설 등), 주거·편의·문화 분야(기숙사형 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서비스 분야(판매시설,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관련 산업), 산업기반시설(용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 유통 시설 등)로 설정하고 있음.

44)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843)으로 귀속됨.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내역	
		신규사업	연차사업
혁신지원센터	9,035	○ 신규지원 종료	○ 9,035 - 2년차 1개 x 1,100 + 1개 x 295 = 1,395 - 3년차 3개 x 1,800 + 4개 x 560 = 7,640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6,252	○ 5,600 - 1년차 28개 x 200 = 5,600	○ 652 - 2년차 1개 x 400 + 1개 x 252 = 652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3,000	○ 3,000 - 1개 기업당 200 x 15개 = 3,000	-
소 계	89,847	11,800	78,04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처 재선정으로 펀드자금에 투입된 국고금이 운용기한 내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초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가능한 투자처를 미리 검토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산단환경개선펀드는 2012년 및 2013년 펀드가 최초로 2022년에 청산됨에 따라 각각 154억 4,100만원, 108억 8,100만원의 수익금(총 263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전액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세입으로 수납되었으나, 2011년 펀드는 2026년으로 청산이 지연되었고[45] 2014년 펀드는 '공사' 단계에 있어 청산이 2029년으로 지연됨.[46]

[청산 시점이 도래한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별 진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산업단지	사업내용(투자대상)	펀드결성액			청산계획	청산여부
			총	정부	민간		
2011	반월	호텔 & 오피스텔	606	150	456	2021년	2026년

45) 노후산단 내 호텔건립사업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매출 감소와 매수자 확보 불가로 펀드 만기 연장

46)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결산	2023 결산	2024년			2025 예산
			본예산(A)	결산(B)	수납률 (B/A)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843)	26,322	-	-	-	-	8,5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억원)

구분	산업단지	사업내용(투자대상)	펀드결성액			청산계획	청산여부
			총	정부	민간		
							청산예정
2012	시화	PCB·도금업종 집적화공장	394	160	234	2022년	청산
2013	창원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428	100	328	2023년	청산
2014	구미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888	130	758	2024년	2029년 청산예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청산시점이 지연된 2014년 구미산업단지의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은 최초 선정되었던 사업자의 사업성 악화로 투자계획이 무산되어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따른 것임.

이와 같은 투자취소 사례는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총 41개 투자사업에서 정부투자액(예정) 5,966억원이 투자대상 선정 후 사업성 악화·사업지연 및 부지 미확보 등으로 취소되었음.[47]

이들 투자대상은 선정된 이후 평균 12개월 이후에 취소되었고 대체 투자처를 찾는데 소요된 기간과 펀드 운용기간(10년)을 고려한다면 일부 사업은 2014년의 사례와 같이 청산 시점이 계획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48]

[2015~2024년 선정 후 취소된 사례]

(단위: 개, 억원)

전체 투자사업 수	정부투자액(예정)	최초 선정시점과 취소시점 사이의 기간
41	5,966	평균 12개월(1개월~27개월)

주) 2025년 5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펀드 결성액에 투입된 국고금은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마중물로서, 정해진 펀드운용기간을 거쳐 수익과 함께 청산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국고 및 민간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금 회수지연에 따라 신규 투자여력이 축소되는 등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47) 이는 투자가 집행되기 이전에 사업성 악화 등으로 취소된 것으로, 펀드 결성액이 실제로 집행되기 이전에 취소된 것을 의미함.

48)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취소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금의 대체투자처는 추가 공고를 통해 17건의 투자처(정부투자액 총 3,450억원)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2025년 5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취소된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투자액이 어떠한 대체투자처에 투자가 완료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에서 차이(취소된 사업 총 정부투자액은 5,966억원)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취소 및 대체 투자처 모색으로 펀드자금에 투입된 국고금이 운용기간 내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초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가능한 투자처를 미리 검토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산의 신속집행 기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 이행으로 실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차 피출연기관의 수준에서 건축 단계별 실집행이 가능한 시점에 자금을 교부함으로써 과도한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5개 내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 898억 4,7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2024년 말 기준 인천시 등 76개 2차 피출연기관의 최종집행률은 27.1%이고, 969억 6,7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5개 내내역사업의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전문기관		2차 피출연기관					
	부처 →산단공	산단공 →지자체	교부액 (A)	매칭 (B)	예산현액 (C=A+B)	최종 집행액 (D)	이월액 (C-D)	최종 집행률 (D/C)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5개 내내역사업	89,847	89,847	89,847	43,197	133,044	36,077	96,967	27.1

주) 최종집행액은 2024.12. 사업비 관리시스템상 입력된 금액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금액 입력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신속집행 기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매칭부담금 확보를 위한 국비 교부 요청에 따라 예산을 신속히 교부하였으나,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 및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 외 집행이 지연되어 최종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임.[49)50)]

49) 지자체 행정절차에는 공유재산 심의, 의회 의결, BF(BF: Barrier Free) 인허가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이 포함되고, 계획변경에는 건축비 상승 및 민원 발생 등이 해당함.

5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러나 이러한 신속집행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동 지침에서는 신속집행을 규정함과 동시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출연사업의 실집행 제고를 위해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8)]

3. 예산 신속집행 3-1. 예산 신속집행 기조 유지 나. 신속집행시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속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신속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2024년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피출연기관의 수준에서 건축 단계별 실집행이 가능한 시점에 자금을 교부함으로서 과도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 예산 신속집행 3-1. 예산 신속집행 기조 유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8. 주요 기반시설 지원 사업: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법정기한 미준수 등

가. 개 요

‘주요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건설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4억 2,500만원 중 74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10억원이 불용되었음.[51]

[2024년도 주요 기반시설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주요 기반시설 지원	8,425	8,425	-	-	8,425	7,425	-	1,000	14,428

이 사업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구축,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구축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구축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되고, 각각 여수, 경산 및 부산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임.[52]

내역사업별로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구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과 매칭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414억 6,000만원 중 58억 7,200만원을 실집행(집행률 14.0%)하였고,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283억 5,900만원 중 130억 7,400만원을 실집행(집행률 46.0%)하였음.

[2024년 주요 기반시설 지원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부처		광양만권·대구경북·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피보조기관)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매칭 (C)	예산현액 (D=A+B+C)	실집행액	실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2,000	2,000	2,000	36,460	3,000	41,460	5,872	14.0	33,362	2,226

5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주요 기반시설 지원)(2733-415)(경제자유구역기획단)

52)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배칭되어 사업이 진행됨.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부처		광양만권·대구경북·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피보조기관)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매칭 (C)	예산현액 (D=A+B+C)	실집행액	실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5,425	5,425	5,425	14,588	8,346	28,359	13,074	46.0	15,285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1,000	-	-	-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첫째,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구축 내역사업과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구축 내역사업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함.[53]

그러나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구축 내역사업과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구축 내역사업의 2024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법정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적절하지 못함.

5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고 있는 내역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8조에 따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서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하여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고,[54]「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8조는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분하여 각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55]

두 보고서 모두 일반현황 및 보조사업의 개요를 작성하되,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수행 실적과 목표 미달성 시 원인 분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보고서에는 당해연도 보조사업비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8조제4항에서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등 자기부담금을 구분하고,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6]

---

5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5)「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실적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적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해당 보조사업의 목표
4. 사업수행 실적
5. 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 · 미달성 · 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②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 실적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56)「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실적보고서의 작성) ④ 제1항의 실적보고서와 제2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정산보고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①=ⓙ-ⓚ)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사업비 총액ⓓ-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주4)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자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지 2] 양식

그러나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구축 내역사업에 대한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는 실집행률이 14.0%로 부진함에도 향후 개선계획이 기재되지 않았음.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2023년 이월금도 2024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고 있는 내역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에 명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구축 내역사업은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예산을 전액 불용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구축 내역사업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지방비 미매칭 등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2018~2024년 주요 기반시설 지원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액	교부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금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8	2,400	2,400	-	2,400	-	2,400		
2019	6,405	-	6,405	-	-	-	-	-
2020	1,000	-	1,000	-	-	-	-	-
2021	5,000	5,000	-	5,000	-	-	5,000	-
2022	500	-	500	-	5,000	-	5,000	-
2023	-	-	-	-	5,000	-	-	5,000
2024	1,000	-	1,000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2021년 11월에 신청한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보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3년 9월 5일에 완료되었고, 2018년 9월에 신청한 자연문화재(철새) 보존 영향 검토를 위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이 2024년 7월 24일에서야 승인이 완료되면서[57] 연례적으로 순연됨에 따른 것임.

2024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으나, 그 시점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였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연례적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57) 11~3월, 5~7월은 공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이 승인되었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세 입>

9. 정부출자수입: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기관이 제출한 최신 자료에 근거하여 세입예산안 편성 필요

가. 개 요

‘정부출자수입’ 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출자기관의 경영이익 발생 시 이익 배분계획에 의거하여 이익의 일부를 출자배당으로 회수하는 세입항목으로, 2024년도 예산액 92억 800만원 중 37억 2,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58)]

[2024년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정부출자수입	9,208	9,208	3,721	3,721	100.0	-	-	8,59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출자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송유관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총 6개 기관임.

2024년도 예산액 92억 800만원은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의 배당수입 13억 3,700만원과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배당수입 78억 7,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배당수입이 없었고, 대한송유관공사에게서만 37억 2,100만원을 수납받음.

5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정부출자수입(52-521)(에너지정책관)

[2024년 정부출자수입 예산편성 계획 및 수납실적]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년 예산액	9,208	■ 2023년 말 예상 당기순이익 × 배당성향 × 에특지분 · 대한송유관공사: 39,835백만원 × 34.40% × 9.76% = 1,337백만원 · 한국가스공사: 733,081백만원 × 27.82% × 3.86% = 7,871백만원
2024년 수납액	3,721	· 대한송유관공사: 3,721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6개 출자기관 중 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및 대한석탄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3년 적자재정이 전망되어 2024년도 배당수입을 편성하지 않았음.

나. 검토의견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출자기관은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자기관이 제출한 정부배당수입 관련 최신 자료에 기반하여 정부출자수입 예산을 추계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 한국가스공사가 2023년 1월 제출한 2023년 말 예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추계하였는데, 2023년 1월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연말 당기순이익은 약 7,331억원 흑자가 전망되었음.

그러나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초부터 도시가스 요금 지원액을 상향하였고,[59] 더하여 2023년 전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상승[60] 및 원료비 미수금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연말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낮아지게 되었음.

실제로 2024년도 정부배당안을 기획재정부와 수정하면서 조정하는 기간이었던 2023년 7~8월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이미 △1,048억원 적자 상황이었음.

59)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지원액인 기존 9.6만원에서 59.2만원으로 6배 확대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약 2,044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계됨.

60)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25%, 4월 1.50%, 5월 1.75%, 7월 2.25%, 8월 2.50%, 10월 3.00%, 11월 3.25%, 2023년 1월 3.50%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상향시켰음.

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에 대한 최신 실적을 확인하고, 정부정책 및 공사의 차입금 추이를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했음.

또한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르면, 정부배당대상기업은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을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20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법령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61]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출자기관이 제출한 최신의 정부배당수입 관련 자료에 기반하여 추계할 필요가 있음.

61)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0. 석유수입부과금: 세입예산안 산출의 정확도 개선 필요

가. 개 요

‘석유수입부과금’ 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제18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수입 석유에 대한 부과금을 계상한 세입항목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조 5,600억 6,900만원으로 1조 735억 1,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726억 5,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8억 5,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62][63]

[2024년도 석유수입부과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석유수입 부과금	1,560,069	1,560,069	1,073,515	1,072,658	99.9	857	-	1,498,810

석유수입부과금은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부과기준은「석유사업법」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에 따름.[64]

---

6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6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석유수입부과금(59-593)(에너지정책관)

6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른 2024년도 석유수입부과금 예산편성 계획은 원유/석유제품 9,549억 9,000만원, LNG 6,050억 7,900만원임.

[2024년도 석유수입부과금 예산편성 계획]

■ 석유수입부과금(1조 5,600억 6,900만원)
· 원유/석유제품 : 9,549억 9,000만원
· LNG : 6,050억 7,900만원
- 일반용 5,660억 5,100만원 + 발전용 390억 2,800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급지연 및 수입부과금 인하 등 환급 관련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세입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세입 산출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석유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일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징수한 부과금을 이 세입을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65]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일부 석유정제업자가 2년간 지연된 환급을 일괄 신청함에 따라,[66] 예산액 대비 각각 5,341억원, 4,875억원이 적게 징수결정 되었음.

---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3,800원.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24,242원(2025년 6월 30일까지는 16,730원)으로 한다.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6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66) 환급가능기한은 5년임.

[2023~2024년 석유수입부과금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23	1,453,366	1,453,366	1,453,366	919,222	918,366	63.2	99.9	856
2024	1,560,069	1,560,069	1,560,069	1,073,515	1,072,658	59.5	99.8	85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상 환급가능기한이 5년이어서 석유정제업자의 환급신청 시기를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예상 환급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거 환급실적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급지연 물량 등 특이소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환급에 따른 약 5,000억원의 세입결손은 2024년 에특회계 결산 기준 총세입 1조 8,832억원의 약 20%라는 점에서, 에특회계의 세입 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67]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기준 에특회계 총세입 1조 8,832억원 중 56.9%(1조 726억원)가 석유수입부과금을 통해 수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68] 세입 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환급액을 면밀히 반영하여 에특회계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69]

67) 세입 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세입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고, 일부 예외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하다' 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위반되는 것임.

68) 2024년 결산기준이며, 에특회계 총세입은 내부거래, 보전거래를 제외한 수치임.

69)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결산 당시에도 법정부담금 세입예산의 정확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적용할 계획임. 2026년도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규모 추계방식을 최근 4년간 환급률 평균을 적용하여 추계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조하여 환급지연 신청 및 소급신청 수요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변경하였음.

〈세 출〉

11. 에너지 국제공동연구(R&D) 사업: 해외정부와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집행 부진

가. 개 요

‘에너지 국제공동연구(R&D)’ 사업은 기술 선도국의 협력수요와 국내 기술개발 수요를 매칭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85억 4,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0]

[2024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R&D)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E/D)	
	본예산	추경(A)								
에너지국제 공동연구 (R&D)	28,540	28,540	-	-	28,540	28,540	-	-	100.0	44,018

이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85억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한국전기연구원 등 62개 연구수행기관은 매칭금 21억 8,3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307억 2,300만원 중 190억 2,0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61.9%)하고 117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최종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전기연구원 등 62개 기관)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매칭 (C)	교부현액 (D=B+C)	최종집행액 (E)	이월액	최종집행률 (E/D)
28,540	28,540	28,540	28,540	28,540	2,183	30,723	19,020	11,703	61.9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7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에너지 국제공동연구(R&D)(5801-301)(에너지정책관)

나. 검토의견

일부 과제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국가연구개발과제 공고 권장시점보다 늦게 공고되어 해외 정부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행되는 글로벌 R&D 과제의 준비기간이 해외기관과의 일정 조율 등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 과제 중 이하 11개 과제는 연구수행기관에서의 최종집행률이 2024년 연말 기준 30.0% 미만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종집행률이 30% 미만인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AI 플랫폼 기반 기술 적용 고효율 스마트 전력변환시스템 개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603	-	0.0
ESS용 나트륨이차전지를 위한 핵심 소재 기술 개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32	-	0.0
비불소계 바인더를 적용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각형 셀 기반 20kWh급 ESS 시스템 개발	코리아비티에스	255	7	2.7
수소 및 메탄생산을 위한 미생물전기화학적 유기성 폐자원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한-영 국제공동연구	바이오엑스	254	64	25.2
원자력시설 SC구조 모듈적용을 위한설계,제작,시공 기술실용화	한국수력원자력(주)	787	173	22.0
한국-독일 공동연구를 통한 적응형 AI 기반 분산전원 급전운영 기술개발 및 한국형 VPP 대규모 실증	식스티헤르츠(주)	609	13	2.1
글로벌 VPP 운영 플랫폼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다계층 복합 VPP 자원 통합 제어 기술 개발 및 실증	주식회사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254	37	14.7
냉방·제습·환기청정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모듈형 공조시스템 개발 및 실증	주식회사 휴마스터	567	117	20.6
분산전원 연계 전력 안정 운영시스템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실증	비츠로이엠	567	61	10.8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을 위한 공학적 방벽재 설치 기술 및 최적 재료 설계	주식회사 에이치비씨	253	21	8.3
현지 맞춤형 현장 제조식 수소충전 설비개발 및 실증	현대자동차(주)	1,275	229	18.0

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정부간 협력 과제였으나 2개 과제가 중단되고 2개 과제는 미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재공고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과제가 4개, 노르웨이 정부와 공동연구 추진 합의가 지연된 과제가 1개, 영국 정부와 수행기간 협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였던 과제가 2개, 전략물자관리원의 보안관리과제 여부 판정에 시간이 소요되었던 과제가 2개, 중국 및 체코의 선정평가 통보가 연말에 이루어졌던 과제가 2개임.

[과제별 상세한 집행부진 사유]

과제명	집행부진 사유
AI 플랫폼 기반 기술 적용 고효율 스마트 전력변환시스템 개발	공고 지연(2024.8. 공고) - 정부간 협력 과제 2개 추진중단 및 2개 미지원으로 추가 공고 실시
ESS용 나트륨이차전지를 위한 핵심 소재 기술 개발	공고 지연(2024.8. 공고) - 노르웨이 정부와 공동연구 추진 합의 지연
비불소계 바인더를 적용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각형 셀 기반 20kWh급 ESS 시스템 개발	협약 체결 지연(2024.11. 체결) - 영국 정부와 수행기간 협의에 대한 추가 논의
수소 및 메탄생산을 위한 미생물전기화학적 유기성 폐자원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한-영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 지연(2024.11. 체결) - 영국 정부와 수행기간 협의에 대한 추가 논의
원자력시설 SC구조 모듈적용을 위한 설계, 제작, 시공 기술실용화	해외기관 포함된 국제공동과제에 대한 보안관리과제 여부 판정에 시간 소요
한국-독일 공동연구를 통한 적응형 AI 기반 분산전원 급전운영 기술개발 및 한국형 VPP 대규모 실증	공고 지연(2024.8. 공고) - 정부간 협력 과제 2개 추진중단 및 2개 미지원으로 추가 공고 실시
글로벌 VPP 운영 플랫폼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다계층 복합 VPP 자원 통합 제어 기술 개발 및 실증	협약 체결 지연(2024.12. 체결) - 2024.11.29. 중국의 선정평가 통보 이후 협약 체결
냉방・제습・환기청정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모듈형 공조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공고 지연(2024.8. 공고) - 정부간 협력 과제 2개 추진중단 및 2개 미지원으로 추가 공고 실시
분산전원 연계 전력 안정 운영시스템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실증	공고 지연(2024.8. 공고) - 정부간 협력 과제 2개 추진중단 및 2개 미지원으로 추가 공고 실시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을 위한 공학적 방벽재 설치 기술 및 최적 재료 설계	협약 체결 지연(2024.12. 체결) - 2024.11.말 체코의 선정평가 통보 이후 협약 체결
현지 맞춤형 현장 제조식 수소충전 설비개발 및 실증	해외기관 포함된 국제공동과제에 대한 보안관리과제 여부 판정에 시간 소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서 협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에 예외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여 위 과제들은 협약체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그럼에도 빠른 시일 내에 체결을 완료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최초 공고기간은 2024년 2월 26일에 개시되어 4월 30일까지 약 2달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음.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적어도 1월 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비추어 볼 때, 공고시점이 늦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71]

지침상 이러한 규정은 해외 정부 및 해외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절차 등 외부변수로 인하여 과제수행이 늦어짐에 따라 연차별 계획된 과제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함으로 해석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행되는 글로벌 R&D 과제가 해외기관과의 일정 조율 등 일반적인 R&D 과제보다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82)

> 마.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추진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적어도 1월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전 준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도 중간평가를 앞당겨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법령상 규정된 국고보조금 재이월 사유의 제한적 해석 필요

가. 개 요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청정수소 전환을 위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및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1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 되었음.[72]

[2024년도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소생산기지구축	8,120	8,120	-	-	8,120	8,120	-	-	12,834

이 사업은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과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되며 한국수소연합이 전담기관임.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은 2022년에 착수한 전북 부안, 강원 평창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과 2023년에 착수한 강원 동해, 충남 보령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으로 구분되고, 전담기관인 한국수소연합의 관리비 2억 400만원을 제외한 65억 1,6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전북테크노파크 등 4개 2차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130억 3,600만원 중 24억 8,5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19.1%)하였음.[73]

또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내역사업은 1차 보조사업자인 한국수소연합이 관리비 5,000만원을 제외한 13억 5,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2차 보조사업자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33억 7,5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음.

2023년 이월금과 2024년 예산액은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및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구축비임.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수소생산기지구축(5804-310)(수소경제정책관)

73) 2025년 7월 기준 49억 52만원이 최종집행(집행률 37.9%)되었음.

[2024년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교부액	1차 보조사업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금	교부 현액	실 교부액	교부율	차년도 이월금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6,720	6,720	한국수소연합	204	42	246	162	62.2	71
				6,516	-	6,516	6,516	100	-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1,400	1,400	한국수소연합	50	-	50	38	76	12
				1,350	-	1350	1,350	100	-
내역사업명	**2차 보조사업자**			**교부액**	**전년 이월**	**예산현액**	**최종 집행액**	**최종 집행률**	**이월금**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전북 부안(전북테크노파크)			2,170	1,630	3,800	84	5.0	3,716
	강원 평창(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170	1,630	3,800	1,224	32.2	2,576
	충남 보령(한국중부발전 등)			1,088	1,630	2,718	1,177	43.2	1,544
	강원 동해(한국동서발전 등)			1,088	1,630	2,718	-	-	2,718
	소계			6,516	6,520	13,036	2,485	19.1	10,551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충북 청주(충북테크노파크)			1,350	2,025	3,375	-	0.0	3,375

주 1)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내역사업 2억 400만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내역사업 5,000만원은 1차 보조사업자인 한국수소연합이 집행하는 금액임

2)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에서 한국수소연합의 관리비 2억 400만원 중 7,100만원은 차기 이월되었고, 1,300만원은 불용되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에 포함된 두 내역사업의 2차 보조사업자 재이월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제2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국고보조금의 재이월은 그 사유가 관련 규정에 명백하게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제2호 및 동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74]

7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그러나 두 내역사업의 2차 보조사업자 수준에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의 4개 보조사업자 뿐만 아니라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내역사업의 1개 보조사업자 모두 2024년 최종집행금액이 2023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 이월금 중 일부 금액이 2025년으로 재이월되었음을 의미함.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에서 부안, 평창, 동해는 2024년 집행액이 모두 2023년 이월금이어서 2024년 예산액은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고, 동해는 2023년 이월액이 전액 2025년으로 재이월 되었음.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내역사업 4개 기지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기지명	2023년도 이월액		2024년 예산액		집행부진 사유
	2023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2024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부안 (2022.6~)	1,630	84	2,170	-	· 수전해 스택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수전해 설비 안전 인증을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
평창 (2022.10~)	1,630	1,224	2,170	-	
보령 (2023.12~)	1,630	1,174	1,088	3	· 당초 부안, 평창 사업과 동일한 수전해 설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해당업체(외산)의 미납품 결정 · 다른 공급사 대상으로 설비 도입을 검토(성능 미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성능과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시간 추가 소요
동해 (2023.10~)	1,630	-	1,08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에서 전북 부안 및 강원 평창은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서 문안 조율 등으로 각각 2022년 6월 및 2022년 10월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충남 보령 및 강원 동해는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뿐만 아니라 3차례 재공고가 있음에 따라 각각 2023년 10월 및 2023년 12월에 협약이 체결되어, 애초에 사업 시작시점이 늦었던 문제가 있음.

그 외에도 안전검사 기준 부재 및 공급사 미납품 결정 등으로 추가 지연이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재공고 등으로 사업시작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2023년부터 집행이 부진하였던 국고금이 2025년까지 이월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재이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75)]

또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내역사업은 2023년 이월금과 2024년 예산액이 전액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내역사업은 주관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 및 그 외 4개 참여기관의 협약이 2023년 9월 1일에 체결되었고, 지방비로 진행된 사업부지 평탄화 및 옹벽 시공 등에 당초 계획 대비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음.

그에 따라 국비 지원액이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 물품 구매를 위해 ‘2023년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주요 기자재 물품 구매’의 공고명으로 2025년 3월 13일 최초 공고가 이루어지고, 5월 27일에 건축 및 토목공사 발주가 개시되었음.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협약체결일과 발주 현황]

구분	협약체결일	기자재 발주		발주시작일
		공고일	재공고일	
시기	2023.9.1.	2025.3.13.	2025.3.20.	2025.5.27.

자료: 나라장터 홈페이지

이 내역사업 또한 사업부지 평탄화 등으로 2023년에 이루어져야 할 공고 자체가 2025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재이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기자재 물품 구매(수소추출설비) 건은 발주 자체가 2025년으로 지연되었지만 탄소포집설비는 2024년 10월 1차 공고 후 유찰로 재공

75)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전해 스택 등 주요 설비는 설비 성능, 납기 기한 등 요구조건에 부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기관과 설비업체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따라서 2025년으로 재이월 시에는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이월 하였다는 입장임.

고(2024.12)가 있었고, 탄소액화설비는 2024년 11월 1차 공고 후 기술협상 등에 따라 2025년 2월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대금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에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위 사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조금의 재이월이 가능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제2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제3호와 함께 고려함에 따라 재이월을 승인하여 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월제도는 단년도 회계주의 예외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재이월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국고보고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재이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이월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융자계정)】

〈세 출〉

13.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

가. 개 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석유·가스 및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98억 1,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76)]

[2024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39,817	39,817	-	-	39,817	39,817	-	-	39,000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융자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 381억 6,300만원과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 16억 5,400만원을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에 398억 1,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내역사업명	예산 편성근거	집행내역
국내외 유전개발	381억 6,300만원 = 9개 사업 융자 수요(2,446억 3,400만원)×15.6%(조정률)	398억 1,700만원
해외광물 자원개발	16억 5,400만원 = 3개 사업 융자 수요(98억 4,400만원)×16.8%(조정률)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7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융자계정)-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5447-301)(자원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의 융자수요가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어야 할 금액을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에 추가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었고, 2022년부터 2024년에는 해당 내역사업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국내외유전개발을 위한 융자금으로 대신 집행하였음.

[2021~2024년도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내역사업명	연도	융자사업집행부문				
		융자사업 예산	계획		최종실적	
			금액	건	금액	건
국내외 유전개발	2021년	33,113	33,113	6	33,113	8
	2022년	89,278	89,278	7	90,158	9
	2023년	172,716	172,716	11	175,408	7
	2024년	38,163	38,163	9	39,817	7
해외 광물자원개발	2021년	1,816	1,816	5	-	-
	2022년	880	880	3	-	-
	2023년	2,692	2,692	1	-	-
	2024년	1,654	1,654	3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에는 융자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문 면담을 통해 집행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융자 신청 의사 철회 및 융자 승인요건 미달로 결과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이를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 동일한 지적을 받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2025년부터 두 내역사업을 통합하고[77] 핵심광물자원개발 융자지원비율을 상향하여[78]

77) 2025년도 예산안에는 '해외자원개발융자' 내역사업 1개로 통합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그 수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국회 심의와 달리 불용되어야 할 예산을 다른 내역사업에 연례적으로 보충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13)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	○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예산편성액 전액을 국내외유전개발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예산편성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주의

78) 2024년까지는 민간기업의 광물자원개발 투자비의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14.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연례적인 이차보전금 불용 방지 필요

가. 개 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및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945억 7,500만원 중 2,920억원이 집행되고 25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79)]

[2024년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294,575	294,575	-	-	294,575	292,000	-	2,575	291,038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2024년도 예산액 2,945억 7,500만원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민간융자금(450-04목) 2,870억원과 이차보전금(320-05목) 25억 7,500만원과 장기사용열수송관 민간융자금(450-04목) 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불용액 25억 7,500만원은 이차보전금(320-05목)이 전액 불용된 것임.[80)]

[2024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에너지절약시설설치	**289,575**	**289,575**	**-**	**289,575**	**287,000**	**2,575**	**286,038**
기타민간융자금(450-04)	287,000	287,000	-	287,000	287,000	-	286,038
이차보전금(320-05)	2,575	2,575	-	2,575	-	2,575	-

7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융자계정)-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5139-302)(에너지정책실)

80)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내역사업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고, 장기사용열수송관개체 내역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20년 이상) 열수송관 개체 비용을 장기 및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장기사용열수송관개체	**5,000**	**5,000**	**-**	**5,000**	**5,000**	**-**	**5,000**
기타민간융자금(450-04)	5,000	5,000	-	5,000	5,000	-	5,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업에 포함된 이차보전 내역사업은 2022년에는 보전금리를 3.79%로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민간 자금을 차입 후 은행에 대여하여 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이후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금리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보전금리를 차등하고 있음.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내 이차보전 사업 내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차보전 방식	공단이 민간 자금 차입 후 은행에 대여하여 기업에 대출	기업이 개별적으로 은행 대출 후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이차 보전	좌동
보전금리	3.79%	(중소) 3.0%, (중견) 2.75%, (대) 2.0%	
금리방식	고정	고정/변동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이 사업에서는 수요 부족 등으로 연례적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유사한 이차보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정 보전금리의 설정 및 사업 수요의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이 사업 이차보전금은 2022년 7억 4,600만원, 2023년 15억원, 2024년 25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년 동안 모두 불용되었음.[81]

81) 2022년도 예산 7억 4,6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타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된 7억 4,6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2~2024년 이차보전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년	746	746	-	746	-	-	746
2023년	1,500	1,500	-	1,500	-	-	1,500
2024년	2,575	2,575	-	2,575	-	-	2,57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에는 국내외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3.79%의 고정된 보전금리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고, 2023년에는 지속된 고금리 기조, 높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장기대출 불안정 및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특성상 긴급성 부재 등 사유로 이차보전 수요가 부재하였음.

특히 개요에서 기재하였듯이 2023년에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후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개편하였음에도 수요가 없었음.

2024년에는 2023년 예산보다 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25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개편된 사업방식으로도 수요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금리나 이차보전방식 등 사업방식에 대한 변경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2월에 공고하고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요를 발굴하였으나, 수요자들이 이차보전보다 안정적인 정책융자를 선호함에 따라 이차보전에 대한 수요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2025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입장임.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사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정 보전금리의 설정 및 사업수요의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예산 전액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소재 · 부품 · 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세 입〉

15. 일반회계전입금: 과다한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일반회계전입금’ 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이하 ‘소특회계’)로 전입받는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조 223억 4,4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82)83)]

[2024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전입금	2,022,344	2,022,344	2,022,344	2,022,344	100.0	-	-	2,182,941

소특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68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회계임.[84)85)]

---

8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일반회계전입금(91-911)(산업공급망정책관)

83) 2024년 12월 31일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 개정으로 기존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84)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85)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2020~2024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전입금은 소특회계 세입 총계 대비 90.0%를 초과하고 있으며,[86] 2024년에는 세입 총계 2조 1,969억원 중 2조 223억원(92.1%)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었음.

[2020~2024년 결산 기준 세입 총계 대비 일반회계전입금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A)	2,065,318	2,545,473	2,434,756	2,409,917	2,196,928
일반회계전입금(B)	2,035,289	2,514,098	2,349,279	2,217,000	2,022,344
비중(B/A)	98.5	98.8	96.5	91.9	92.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특회계가 2029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특별회계이고,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으며, 자체 수입원 발굴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세출 사업 중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특회계 지속여부 및 재원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87]

2020~2024년 전년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은 대부분 1조원에 미달하고 있는데,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 12. 31.>

86) 2024년 기준 특별회계 총 21개 중 14개가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출받고 있는데, 그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90% 이상인 특별회계는 소특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3개임.

87)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0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2024년에는 그 금액이 7,288억원임에 따라 1조 2,935억원의 수입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 기준을 초과하였음.

[2020~2024년 전년도 관세 징수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도 관세(A)	78,821	70,585	82,270	103,241	72,883
일반회계 전입금 기준 (B=A*10%)	7,882	7,059	8,227	10,324	7,288
수입 부족액(C)	12,471	18,082	15,266	12,206	12,935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B+C)	20,353	25,141	23,493	22,530	20,223

주) 수입부족액(C): 총 세출액-일반회계 전입금 기준액(B)-세외수입액-전년도 세계잉여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서 소특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비율이 높을 경우 형식상 특별회계일 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특별회계의 자립성이 사라지거나 정책적 특수성이 희석되는 결과를 지양하기 위해서임.

그러나 내부거래를 제외한 소특회계의 세외수입은 정부출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2024년 결산 기준 약 714억원에 불과함.

특히 현재 기준으로 소특회계의 성격에 부합하는 유일한 독자적 수입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이나, 이는 163억원 규모에 불과함.[88]

[2024년 소특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B/A)	
	본예산	추경(A)			
총 계	2,165,543	2,165,543	2,196,928	101.4	2,284,287
정부출자수입(52-521)	4,804	4,804	16,148	336.1	4,757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3,570	3,570	26,121	731.7	14,906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31,806	31,806	29,172	91.7	43,818

88)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기금전입금(91-913)에 포함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B/A)	
	본예산	추경(A)			
전년도이월금(88-881)	-	-	28	순증	-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	71,319	71,319	71,415	100.1	16,965
일반회계전입금(91-911)	2,022,344	2,022,344	2,022,344	100.0	2,182,941
기금전입금(91-913)	31,700	31,700	31,700	100.0	20,9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결국,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부장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기업, 수입업체, 유관 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정부지원 R&D 결과로 나온 기술료 수입을 늘리는 등 독자적인 수입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89]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특회계가 2029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적인 특별회계라는 점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 소특회계에 편성된 세출 사업 중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특회계 지속 여부 및 재원구조에 대해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음.

89) 특히, 부담금이나 수수료는 공급망 지원과 연관된 산업계의 반발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수 입〉

16.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기술료 징수 노력 강화 및 법정기한 내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비 정산 잔액·이자 등의 정산환수금을 수납받는 세입항목으로, 2024년 계획현액은 557억 9,200만원이고 581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90]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기타경상 이전수입	55,792	55,792	58,168	58,168	100.0	-	-	55,794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됨.[91][92]

---

90)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산업기술융합정책관)

9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2) 정액기술료는 연구과제 성공 판정 후 사업화매출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대기업은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의 4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을 납부하는 것이고, 경상기술료는 사업화 실시로 사업화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그 산정방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름.

2019~2024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의 기술료 수입을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기술료 수입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19~2024년 기술료 수납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기술료(A)	기타경상이전수입(B)	비율(A/B)
2019	88,129 (정액 85,229, 경상 2,900)	90,938	96.9
2020	88,604 (정액 81,029, 경상 7,575)	90,825	97.6
2021	71,745 (정액 63,708, 경상 8,037)	73,929	97.0
2022	68,882 (정액 55,898, 경상 12,984)	70,261	98.0
2023	65,228 (정액 45,078, 경상 20,150)	66,520	98.0
2024	56,324 (정액 40,724, 경상 15,600)	58,168	96.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를 수납받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이고, 납부기한이 2019~2024년에 걸쳐 있는 기술료 중 2025년 3월 기준 미납된 기술료는 총 97개 기업으로부터 14억 5,400만원임.

[2019~2024년이 납부기한이나 아직 미납된 기술료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기업수	기술료 미납액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53	43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8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2	519
한국산업단지공단	3	16
계	97	1,454

주) 2025년 3월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촉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되지 못한 기술료를 전수 조사하여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으로 계상함으로써 기금 수입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게 수납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개요에서 보았듯이, 2019~2024년 6년 동안 미납된 기술료가 14억 5,4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촉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581억 6,800만원으로 동일한데 이는 미납된 기술료를 징수결정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위 미납기술료는 비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수준에서 아직 수납받지 못한 기술료이나, 이는 국고금을 통한 연구개발활동에서 발생한 기술료이므로 산촉기금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기술료 중 미납된 기술료도 전수 조사하여 국고로 수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고, 수납 상황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93]

둘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경상기술료 산정을 위한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상기술료 납부 대상 기업들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94]

---

93)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자산 및 수익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기술료 미납액'은 특정사유(기간연장, 감경, 면제 등)에 따른 변동가능성으로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회계상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임.

9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화의 실시로 사업화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와 관련되어 있는데, 2019~2024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전체 기업 중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기업은 2019년 675개(40.1%), 2020년 750개(40.7%), 2021년 962개(35.0%), 2022년 1,511개(40.9%), 2023년 1,378개(31.2%), 2024년 821개(16.4%)이고,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2019년 63개(3.7%), 2020년 92개(4.9%), 2021년 121개(4.4%), 2022년 196개(5.3%), 2023년 282개(6.4%), 2024년 263개(5.3%)임.

[경상기술료 관련 매출실적보고서 제출/미제출 현황]

(단위: 개사, %)

연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수 (A=B+C)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기업수(B=a+b)			미제출 기업수(C)
		계(B)	기한 내 제출(a)	기한 경과 제출(b)	
2019	1,683	1,620	945 (56.1%)	675 (40.1%)	63 (3.7%)
2020	1,845	1,753	1,003 (54.4%)	750 (40.7%)	92 (4.9%)
2021	2,750	2,629	1,667 (60.6%)	962 (35.0%)	121 (4.4%)
2022	3,693	3,497	1,986 (53.8%)	1,511 (40.9%)	196 (5.3%)
2023	4,415	4,133	2,755 (62.4%)	1,378 (31.2%)	282 (6.4%)
2024	5,014	4,747	3,930 (78.3%)	821 (16.4%)	263 (5.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정기한 내에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나,[95]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이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경상기술료 책정을 하지 못하거나 이를 늦게 부과하여 수납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5)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과제신청 자격 검토 시 사전 제외 및 수행 중인 과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중지 등의 방법을 통해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워 관리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전력산업기반기금】

〈총 괄〉

17. 전력산업기반기금 총괄: 기금운용계획변경내역 국회제출 법정기한 준수 필요

가. 개 요

기금운용계획변경이란 기금관리주체가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96]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4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2024년 3월 15일에는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 내에서 1억 2,000만원을 디브레인에 잘못된 비목으로 입력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변경하였고, 그 외에도 2024년 11월 29일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부족에 따른 자체변경과 2024년 12월 17일 및 12월 27일 사업비 증액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변경이 있었음.

(단위 :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변경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3.15	기재부 협의	수소연료 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5203-353)	민간경상 보조 (320-01)	120	수소연료 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5203-353)	민간자본 보조 (320-07)	120	디브레인 입력과정에서 담당자 간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비목 입력
11.29	자체 변경	기금 관리비 (7277-201)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60	기금관리 비 (7277-201)	일반수용비 (210-01)	10	기금 운영·관리에 필수적 경비인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부족
						국내여비 (220-01)	18	
						국외업무여비 (220-02)	15	

96) 주요항목이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근거한 장·관·항이며 최소범위인 항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이란 세항·목으로 구분함.

(단위 :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변경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일반연구비 (260-01)	9	
						자산취득비 (430-01)	8	
		기금 관리비 (7277-201)	임차료 (210-07)	2	기금관리비 (7277-201)	국내여비 (220-01)	2	기금 운영·관리에 필수적 경비인 임차료 예산 부족
12.17	기재부 협의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5202-302)	민간경상보조 (320-01)	5,156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30-97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5,156	경제성이 부족한 초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비 증액
12.27	기재부 협의	농어촌전기공급사업 (5457-301)	민간경상보조 (320-01)	16,866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30-97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16,866	도서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농어촌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사업비 증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내역을 2025년 2월 28일에 1회만 제출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법정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분기별 제출 의무기한 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0조제6항은 기금관리주체가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97]

이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결산 시가 아닌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재정심사권과 통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함임.

이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에 대한 법정 제출기한은 2024년 3월 15일 변경 1건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30일, 그 외 3건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31일임.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내역을 2025년 2월 28일에 1회 제출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6항에 반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분기별 제출 법정기한 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97)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 출〉

18. 해상풍력산업지원 사업(종료): 계획상 사업종료연도를 도과하여 재이월된 사업출연금의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해상풍력산업지원’ 사업은 해상풍력 지원센터 및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84억 8,3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98]

[2024년도 해상풍력산업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해상풍력산업지원	8,483	8,483	-	8,483	8,483	-	-	-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이고, 대한전기협회가 수행하는 해상풍력 지원센터 구축 내역사업(2024년도 예산액 60억원)과 목포시청 등 4개 기관이 수행하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2024년도 예산액 24억 8,300만원)으로 구분됨.

[두 내역사업에 대한 개요]

해상풍력 지원센터 구축	ㅇ 목적 :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단지조성 지원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지원 등을 종합 수행할 해상풍력 지원센터 구축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2공구 연-7 ㅇ 사업기간 및 규모(안) : 2020~2025년(6년), 연면적 6,979.32㎡ ㅇ 사업예산 : 총 477억원(국비 216억원, 지방비 261억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ㅇ 목적 : 해상풍력 관련 대형구조물 및 부품의 제작·선조립·하역 및 통합관리 등을 종합 수행할 센터 구축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만 ㅇ 사업기간 : 2021년~2025년(5년) ㅇ 사업예산 : 총 276.83억원(국비 104.83억원, 지방비 172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8) 전력산업기반기금-해상풍력산업지원(5202-318)(재생에너지정책관)

해상풍력 지원센터 구축 내역사업의 1차 피출연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교부현액 203억원 중 107억 6,500만원을 교부하였고, 2차 피출연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그 중 2,4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0.1%)하였음.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의 1차 피출연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24억 8,300만원 중 24억 6,300만원을 교부하였고, 2차 피출연기관인 목포시청 등 4개 기관은 예산현액 147억 2,300만원 중 40억 6,7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27.6%)하였음.

[2024년 해상풍력산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예산 현액	교부액	교부율	1차 피출연기관	교부액	전년도 이월금	매칭	교부 현액	실 교부액	교부율	차년도 이월금
해상풍력 지원센터	6,000	6,000	100.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6,000	8,200	6,100	20,300	10,765	53.0	9,535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구축	2,483	2,483	100.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483	-	-	2,483	2,463	99.0	20

내역사업명	2차 피출연기관	교부액	전년도 이월금	매칭	예산현액	최종 집행액	최종 집행률	차년도 이월금
해상풍력 지원센터	대한전기협회	10,765	-	-	10,765	24	0.1	10,741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구축	소 계	2,463	6,574	5,686	14,723	4,067	27.6	10,656
	목포시청	-	4,452	4,736	9,188	3,021	32.9	6,167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2,437	1,207	400	4,044	210	5.2	3,834
	녹색에너지연구원	26	856	550	1,432	797	55.7	635
	목포신항만	-	59	-	59	39	66.1	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출연사업으로서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하는 등 한국에너지공단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액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해상풍력 지원센터 내역사업에서 2024년 사업계획서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였으나 건축설계연구용역기간 연장, 설계, 시공 및 감리사 선정절차 등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액이 미집행된 채 이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해상풍력 지원센터 내역사업은 용역을 통한 건축설계가 2024년 8월에 완료되는 등 구축일정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계획서 상의 착공예정일(2024년 10월)을 고려하여 2024년 6월에 예산액 60억원을 전액 교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2024년 2월에 64억 500만원, 2024년 6월에 43억 6,000만원을 대한전기협회에 교부하였음.

[해상풍력 지원센터 내역사업 사업비 교부일]

(단위: 백만원)

구분	시기	금액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24.6.	6,000
한국에너지공단→대한전기협회	2024.2.	6,405
	2024.6.	4,36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2024년 2월 및 2024년 6월은 건축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었으며,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감리단이 선정되었으므로 장비구축을 위한 구축비가 2024년 연내 실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기협회에 교부된 것이라 볼 수 있음.

[해상풍력 지원센터 구축 일정]

시점	일정
2021.1.	건축 기본계획용역
2021.9.	공공건축 사전검토 용역
2022.5.	입주심사
2022.7.	건축설계용역
2022.8.	입주 및 매매계약
2024.6.	**2024년도 예산액 60억원 교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24.8.	건축설계용역 완료
2024.12.	감리단 선정

시점	일정
2025.4.	착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99]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으로 사업종료연도를 도과하여 재이월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의 2차 피출연기관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2023년도 이월액 중 일부 금액을 2025년으로 재이월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23년 이월금 12억 700만원 중 2024년에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10억 5,800만원을 2025년으로 재이월하였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재이월금은 2023년 이월금 8억 5,600만원 중 2024년 집행액 5억 9,300만원을 제외한 2억 6,300만원임.

[2024년도 최종집행액의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종집행액	2023년 이월금 중 집행액	2024년 예산액 중 집행액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10	149 (2023년 이월금 1,207)	61
녹색에너지연구원	797	593 (2023년 이월금 856)	20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9)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8

이는 2차 피출연기관 수준에서 사업출연금(350-02목)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100]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3조를 준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재이월 및 이월 요청을 승인하여 준 것으로 보임.[101]

또한 해당 내역사업은 당초 계획상 2021년부터 4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원래는 2024년이 종료연도이나, 2021년 12월에 시작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1~4차년도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1.12. ~ 2025.12.(49개월)					
총사업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국비	2,000	2,000	4,000	2,483	10,483
	지방비	-	5,800	5,714	5,686	17,200
	합계	2,000	7,800	9,714	8,169	27,683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24년도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서)

이처럼 사업수행기관 수준에서 사업계획서상 종료연도(2024년)를 도과하여 2025년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만으로 이월 및 재이월을 승인하여 주는 것은 투명한 예산관리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월제도는 단년도 회계주의의 예외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재이월의 경우에는 이월의 경우보다 더 제한적인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 이 사례와 같이 사업종료연도를 도과하여 발생한 재이월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00) 보조금의 재이월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나, 사업출연금(350-02목)의 재이월 조건에 관한 법령은 부재함.

101) 2024년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으로 통합되었으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요령에 따라 조치되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부칙
>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13조(사업비 이월 기준) ③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19. 원전수출보증 사업(신규, 종료):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단계적 자금교부 등 금융성기금 출연금의 보다 투명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원전 관련 수출계약을 체결한 중소 및 중견기업이 발주처의 요청으로 수출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활하게 수출보증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 25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0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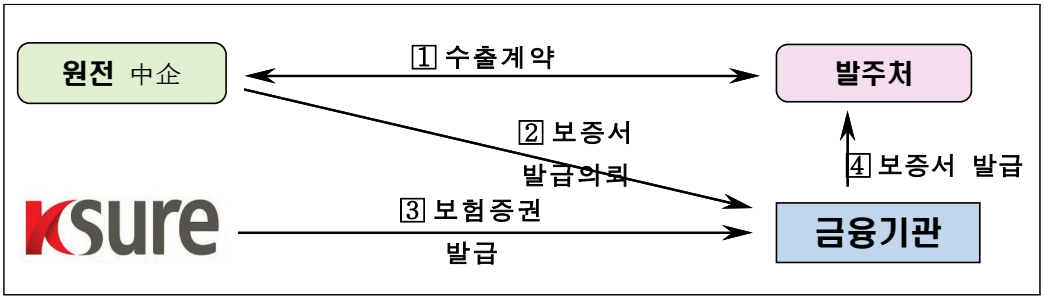
[2024년도 원전수출보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원전수출보증	25,000	25,000	-	25,000	25,000	-	-	-

이 사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 체결 예정인 해외원전사업 수출계약에 대하여 5배의 운용배수를 적용하여 1,25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대신 부담하게 됨.

[원전수출보증 사업의 구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02) 전력산업기반기금-원전수출보증(7403-315)(원전산업정책국)

103) 이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기금사업단에 250억원을 교부하면, 전력기금사업단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 250억원을 재교부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보증서 요청에 따라 최종집행하는 구조임.

또한 2024년도 예산 250억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금융성기금인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되는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이며, 무역보험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당 예산을 관리하게 됨.[104]

나. 검토의견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2024년 원전수출계약 및 보증서 발급수요가 없음에 따라 전액 실집행되지 못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예산 교부 및 금융성기금 출연금의 환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사업목적을 가진 출연금이 이를 관리하는 공사의 수입 확대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2024년 한 해에만 약 8,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될 것을 가정하고 편성된 계획액이나, 202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사업의 기자재 공급 계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직접 수출 건은 대러 제재 관련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 발급 기피 등으로 수출보증보험 수요가 저조하게 되어 전액 실집행되지 못한 상황임.

[2024년 예산편성 당시 원전 수출계약 전망]

계약명	발주사	계약 전망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한국수력원자력	2024.4.~6.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 설비 계약	한국수력원자력	2024.3.~12.
튀르키예 아큐유(Akkuyu)원전 설비 수출	중소·중견기업 직접 수출 계약 건	2020~2023년 계약 건에 대한 보증 수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되는 이 사업 계획액 250억원은 2024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기금사업단에 250억원을 전액 교부한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액 수령하였으며, 「무역보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되었음.[105]

---

104) 「무역보험법」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또한 2025년 5월 현재까지 보증공급 실적이 없음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연초에 교부받은 250억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액까지 무역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처리되었음.[106]

더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협약 해약 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107][108]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보험보증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발급 실적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계약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처럼 연초에 1회 전액 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사례처럼 예산을 교부하고 한 회계연도를 도과하였음에도 보증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및 조건을 설정하여 교부한 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자금의 실소요가 발생할 경우 재교부하는 등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05) 「무역보험법」
제32조(기금의 관리)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106)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 · 회수금 · 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107)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협약서>
제7조(협약의 해약) 협약 해약 시 기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금 잔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08) 정부출연금을 예산으로 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 별도 협약이 없으며 본 사업과 동일하게 무역보험공사 기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운용됨.

20.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사업: 신규인력 적기 확보에 따른 과제 수행 차질 발생 방지 필요 등

가. 개 요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사업은 현재 응용 수준에 있는 기 개발 해체 기술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433억 1,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 되었음.[109)]

[2024년도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43,313	43,313	-	43,313	43,313	-	-	48,366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433억 1,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한국기계연구원 등 111개 연구수행기관은 매칭금 134억 6,8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567억 8,100만원 중 187억 2,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33.0%)하고 380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년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최종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수행기관 (한국기계연구원 등 111개 기관)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매칭 (C)	교부 현액 (D=B+C)	최종 집행액 (E)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E/D)
43,313	43,313	43,313	43,313	43,313	13,468	56,781	18,729	38,052	-	33.0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109) 전력산업기반기금-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5703-344)(원전산업정책국)

한국기계연구원 등 111개 연구수행기관들 중 2024년 12월 31일 기준 최종집행률이 80% 미만인 기관은 55개로 나타남.

상세한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연구비관리시스템인 통합RCMS에 기 집행한 연구비를 등록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해 보였던 기관이 24개, 신규인력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인건비가 이월되어 집행이 부진한 기관이 12개, 공사방식 변경 등 기타 사유로 집행이 부진한 기관이 19개임.

[연구수행기관별 최종집행률 80% 미만인 기관 상세 사유]

(단위 : 개)

과제 수	집행부진사유		
	통합 RCMS 연구비 미등록	신규인력 미확보에 따른 인건비 이월	공사방식 변경 등 기타 사유
55	24	12	19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통합 RCMS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다수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비가 적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제2항제1호는 연구비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10]

그러나 연구비관리시스템인 통합RCMS에 기 집행한 연구비를 등록하지 않아 집행률

11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이 저조해 보였던 24개 기관은 대부분 인건비를 월별로 집행하고 이를 이후 한번에 등록해온 관행에 따라, 2024년 예산현액 93억 2,900만원에 대하여 2025년 3월 기준 집행액은 41억 8,900만원에 불과하였지만, 기집행액을 대부분 등록한 2025년 7월 기준 집행액은 89억 2,300만원으로 그 차이는 47억 3,4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111]

[연구수행기관별 최종집행률 80% 미만인 기관 상세 사유]

(단위: 백만원)

예산액	매칭	예산현액	2025.3. 기준 집행액	2025.7. 기준 집행액	차이
7,081	2,248	9,329	4,189	8,923	4,73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이처럼 일괄지급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사전에 연구비를 지급받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연구비 사용 내역을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할 유인이 낮은데, 이러한 경우 연구비를 연말에 집중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집행실적 파악이 투명하지 못하여 예산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집행한 연구비가 법령상 규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인력 미채용에 따라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연기되어 인건비를 이월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던 과제들은 모두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수행하던 12개 과제였음.

[신규인력 미확보로 인건비가 이월된 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예산액 (A)	매칭 (B)	예산현액 (C=A+B)	최종집행액 (D)	집행률 (D/C)
레이저 절단/해체 기술 고도화 및 실증	75	-	75	17	22.7
중수로 폐수지 탱크내 혼합물 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77	-	77	20	26.0
저방사능 폐수지 열화학적 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74	-	74	16	21.6
중수로 특화 C-14/H-3 함유 폐활성탄 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81	-	81	23	28.4

111) 인건비 외에도 연구장비비 등 일부 다른 비목에서도 집행 후 등록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음.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예산액 (A)	매칭 (B)	예산현액 (C=A+B)	최종집행액 (D)	집행률 (D/C)
원전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	100	-	100	29	29.0
중수로 칼란드리아 절단 및 열수송계통 제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고도화	874	600	1,474	247	16.8
원전해체시 발생하는 고농도/저농도 액체폐기물 통합 처리 기술 개발	110	-	110	21	19.1
확장현실 기반 해체공정 검증 및 교육 시스템 개발	108	-	108	42	38.9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가열분쇄 기반 고도감용 공정 실증	69	-	69	19	27.5
대단위 극저준위 폐기물 제염용 자동화 연마제염 플랫폼 개발	99	-	99	18	18.2
진공 유도가열 및 플라즈마 토치 용융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부피 감용 기술 실증	100	-	100	23	23.0
전해액 재생 기반 전해제염 기술개발	90	-	90	57	6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들 과제들은 2024년 12월에 연구원이 채용되거나 또는 2025년에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2024년에는 인력 채용에 차질이 발생하여 과제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력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024년 이월금과 2025년 예산액을 전액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과제별 향후 인력 채용 및 집행계획]

과제명	집행계획
레이저 절단/해체 기술 고도화 및 실증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내 인력이 2025년도에 신규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4년 계속비 및 2025년 예산 80% 이상 집행 예정
중수로 폐수지 탱크내 혼합물 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7월 주임급(계약직) 2명 채용 시 2024년 계속비 및 2025년 예산 100% 집행 가능
저방사능 폐수지 열화학적 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확장현실 기반 해체공정 검증 및 교육 시스템 개발	7월 선임/주임급 2명 채용 시 2024년도 계속비 및 2025년 예산 80% 이상 집행 가능
중수로 특화 C-14/H-3 함유 폐활성탄 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7월 주임급 1명 채용 시 2024년 계속비 및 2025년 예산 80% 이상 집행 가능
원전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	
원전해체시 발생하는 고농도/저농도 액체폐기물 통합 처리 기술 개발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가열분쇄 기반 고도감용 공정 실증	
진공 유도가열 및 플라즈마 토치 용융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부피 감용 기술 실증	
중수로 칼란드리아 절단 및 열수송계통 제염 실증	2024년 12월 주임급 2명 채용 완료

과제명	집행계획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고도화	현재 참여인력 유지 시 2024년도 계속비 및 2025년 예산 80% 이상 집행 가능
대단위 극저준위 폐기물 제염용 자동화 연마제염 플랫폼 개발	2024년 12월 주임급 1명 채용 완료 현재 참여인력 유지 시 2024년 계속비 및 2025년 예산 100% 집행 가능
전해액 재생 기반 전해제염 기술개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에서 2024년 인력이 채용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의 파견인력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향후 파견인력 복귀 등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연구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인력 미채용에 따른 연구수행과 원전해체 기반 설비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연초에 출연금이 전액 교부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출연금 교부 시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공사방식 변경 등 기타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였던 19개 과제 중 ‘중준위 해체폐기물 물리적/방사선학적 특성분석 시스템 구축 및 R&D 기반 기술개발’ 과제는 259억 6,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억 2,200만원만 최종집행(집행률 0.5%)되고 258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음.

[공사방식 변경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던 과제]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연구수행기관명	예산액 (A)	매칭 (B)	예산현액 (C=A+B)	최종집행 (D)	최종집행률 (D/C)
중준위 해체폐기물 물리적/방사선학적 특성분석 시스템 구축 및 R&D 기반 기술개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16,466	9,500	25,966	122	0.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2024년 5월 착공 후 시공사의 설계 변경 요청에 따른 작업자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처 간 의견 차이로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기성급 지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예산액 164억 6,600만원을 2024년 1월 18일에 전액 교부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에 2024년 4월 3일 전액 교부하였는데, 이는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으로서 공사진행에 따른 실집행 여부가 고려되지 못한 채 2024년 예산액 전액이 연초에 교부되었음을 의미함.[112)]

[동 과제에 대한 산자부와 에기평의 예산교부시점]

(단위: 백만원)

교부기관	시점	교부금액
산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4.01.18	16,46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2024.04.03	16,4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예산을 적기에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13)] 이 과제 연구비 교부 사례는 사업수행기관의 출연금 실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으로 이월된 이 과제 예산액에 대한 집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출연금 교부 시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112) 2025년 6월 기준 2024년 이월금 258억원 중 133억원이 집행된 상황임.

11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8~29

21.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신규): 융자금 사용용도의 사업목적 부합성 여부 검토 필요

가. 개 요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은 원전 기자재 기업 육성을 위하여 원전 중소 및 중견 기업에게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14]

[2024년도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원전생태계금융지원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	-	150,000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기관으로 융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며,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사업접수, 기업추천 및 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그에 따라 계획액 1,000억원 중 3억원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편성되었고, 997억원이 융자금임.

지원대상은「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①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②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③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④ 기타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임.[115]

---

114) 전력산업기반기금-원전생태계금융지원(7403-313)(원전산업정책국)

115)「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호)」
제4조 (지원대상) ①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3.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4. 기타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또한 지원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최대 10년간, 운전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은 시설자금을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의 설치 · 구매 · 이전 · 개체 · 보완 또는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운전자금을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규정하였음.[116)]

[2024년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내용
지원대상	최근 5년간 원전 분야 매출 발생 중소·중견기업 또는 원자력 기술이용기업 (원자력 기술기준 보유기업, 원자력 R&D 참여기업 등)
지원조건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대출기간 포함 최대 10년(5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대출기간 포함 최대 2년(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식	협약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대출금리	(분기별 3년물 국고채 대표금리(변동금리) - 1.25%p) + 은행수수료 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은 일부 지원대상 기업의 융자금 사용용도가 원전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들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원전 분야의 일감 단절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후속 투자가 어려운 원자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116)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호)」
제4조 (지원대상) ② 이 규정에 따른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 및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1. 시설자금 :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의 설치 · 구매 · 이전 · 개체 · 보완 또는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
2. 운전자금 :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목적은 일감 수주실적 개선 및 향후 성장 가능성 확대를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에 있음.

그러나 금융지원을 받은 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폭넓게 설정함에 따라, ① 기업의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나 대출금 대환을 목적으로 지원받거나, ② 동일기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수령한 사례가 나타났음.

① 기업의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나 대출금 대환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사례

A기업은 안정적인 회사운영 및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8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B기업은 경영안정 및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9억원을 지원받았음. 또한 C기업은 기업경영활동을 위해 2억 4,3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D기업과 E기업은 기업에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원을 받았음.

또한 F기업은 국내 운반 하역기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2공장을 증축하기 위한 용도로 40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117] G기업은 상하수도 관련 초음파·레이더 수위계 및 유량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대출금을 대환하기 위한 용도로 76억 9,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118] H기업도 기존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용도로 8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사유 중 일부 사례]

(단위: 백만원, %)

지원용도	기업명	대출사유	대출금리	대출금액
운전자금	A	안정적인 회사운영 및 임금지급	1.75~2.25	810
	B	경영안정 및 사업확장	1.75~2.25	900
	C	기업경영활동	1.75~2.25	243
	D	인건비 지원	1.75~2.25	450
	E	원전관련 원자재 구입 및 인건비 지급	1.75~2.25	810
시설자금	F	2공장 증축	1.75~2.25	4,050
	G	대출금 대환	1.75~2.25	7,695
	H	대출금 대환	1.75~2.25	8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처럼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원되거나 원전 산업과 다소 무관한 측면이 있는 기업들의 공장 증축 및 대출금 대환의 용도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의

117)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②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F 기업을 선정하였음.

118)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②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③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G 기업을 선정하였음.

단기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지원이 원전생태계 활성화라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19]

② 동일기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사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은 총 13개 기업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I 기업은 연구용원자로 관련 생산 및 예비조립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시설자금 17억 6,9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동시에 연구용원자로 관련 인원 유지를 위해 9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았음.

또한 M 기업은 원전 경보계통 전원 공급기 양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시설자금 17억 2,600만원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인건비 9억원을 운전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았고, 그 외에도 L 기업, O 기업, T 기업의 대출사유를 살펴보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목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원대상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처럼

119)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있으며, 기업경영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동 자금이 사용될 우려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음.

○ **도종환 위원** 전력산업 전반 그중에…… 지금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 절박함,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원전산업 육성이라는 목적보다는 융자받아 가지고, 금융 지원받아 가지고 우선 경영이 어려워서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돈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말하자면 이게 원전 분야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였으면 하고 융자를 해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의 경영의 어려움 쪽으로 융자해 주는, 금융 지원해 주는 돈이 쓰이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 수립했고요. 융자 사업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갚아야 되는 거고 시중 금리보다 약간 금리를 낮춰서 주는 거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원전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투자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자금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3389억 원이 편성돼 있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신재생을 생산하는 기업 또 설치하는 신재생기업한테 같이 다 융자를 해 주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 금융 지원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보다는 우선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이 돈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자금, 운전자금 이런 것들이.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예, 최종적인 목적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 제410회 국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023.11.21.) 회의록 p.38~39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들이 각 자금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사례]

(단위: 백만원, %)

기업명	대출사유	대출금리	대출금액
I	(시설자금) 연구용원자로 관련 생산 및 예비조립 공장 신설	1.75~2.25	1,769
	(운전자금) 연구용원자로 관련 인원유지 및 재료비 구매	1.75~2.25	900
J	(시설자금) 제2공장 증축	1.75~2.25	3,260
	(운전자금) 원자력 방화구획재 성능개선개발&각 원자력 현장 운영관련비용	1.75~2.25	900
K	(시설자금) 원전 추기증기배관 검사로봇 개발사업	1.75~2.25	2,700
	(운전자금) 원전 배관 내부점검 및 이물질 제거용 장비개발 인건비 지급	1.75~2.25	450
L	(시설자금) 원자력발전 터빈용 유체윤활 베어링 제작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	1.75~2.25	810
	(운전자금) 원자력발전 터빈용 유체윤활 베어링 제작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	1.75~2.25	810
M	(시설자금) 원자력 발전소 경보계통 전원 공급기 양산 시스템 개발	1.75~2.25	1,726
	(운전자금) 전원 공급기 양산 제작 및 진동저감 시스템 개발 인건비 지급	1.75~2.25	900
N	(시설자금) 생산&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 구축	1.75~2.25	1,800
	(운전자금) 인력 확충 및 제반경비 확보를 위한 운전자금 확보	1.75~2.25	900
O	(시설자금) 핵융합발전설비 제작 기금	1.75~2.25	720
	(운전자금) 핵융합발전설비 제작을 위한 자재비 및 인건비 지급	1.75~2.25	900
P	(시설자금) SMR설비 제조 공장 건축	1.75~2.25	3,537
	(운전자금) 신한울3,4호기 핵연료이송장치 원자재 구입 및 회사 운영자금 확보	1.75~2.25	810
Q	(시설자금) 대출금 대환	1.75~2.25	7,695
	(운전자금) 원전 전원공급기 등 원자재 구매	1.75~2.25	900
R	(시설자금) 원전부품 공급기반강화 및 품목 확대를 통한 부품전문기업 도약	1.75~2.25	270
	(운전자금) 원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건비 및 원소재 확보 비용	1.75~2.25	346
S	(시설자금) 대출금 대환	1.75~2.25	810
	(운전자금) 경영안정 및 사업확장	1.75~2.25	900
T	(시설자금) 미국 Nuscale 제어봉구동장치(CRDM)고온루프시험시설 구축	1.75~2.25	440
	(운전자금) 미국 Nuscale 제어봉구동장치(CRDM)고온루프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비 및 용역비 지급	1.75~2.25	900
U	(시설자금) 원전생태계 구축 생산 SYS. UP-GRADE	1.75~2.25	1,386
	(운전자금) 원자력밸브 생산 재개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인건비	1.75~2.25	9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2024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해소 및 인프라 확보에 기여한 측면은 있겠으나, 그것이 원전생태계 활성화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논의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120)]

2025년에도 1,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수혜기업을 포함하여 금융지원 자금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120)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운영 규정에서 대출 이후 기업이 제출한 자금 사용내역을 수행기관에서 점검하고, 필요시 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하며, 사업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는 입장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 출〉

22.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 추가적인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은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시설 등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817억 9,8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121]

[2024년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81,798	81,798	-	81,798	81,798	-	-	47,916

이 사업은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처분시설건설기반구축, 처분검사건물 신축, 3단계 처분시설 건설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되고, 내역사업간 계획변경에 의해 2단계 처분시설 건설 내역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125억 1,000만원이 초과집행되었음.

[2024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내역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기관	당초	변경 및 집행액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출연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52,591	65,101
처분시설건설 기반구축	출연		24,312	14,175
처분검사건물 신축	출연		2,220	333
3단계 처분시설 건설	출연		2,675	2,189
합계			81,798	81,79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2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5631-301)(원전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내역사업 중 일부 사업의 규제기관 인허가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내역사업의 공사일정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단계 처분시설 건설 내역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증)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2024.8.) 결과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계획변경을 통해 증액이 가능하였던 것은 그 외 3개 내역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준공일정이 순연되었기 때문임.

처분시설건설 기반구축 내역사업은 실증실험덮개 용역 착수가 지연되어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준공일정이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2월로 순연되면서 취득세도 2025년에 납부하게 됨에 따라 101억 3,700만원이 계획변경(감) 되었음.[122)]

처분검사건물 신축 내역사업은 건설·운영변경허가 심사 장기화로 본공사 착수 일정이 순연되어 공사비 및 설계비 18억 8,700만원이 계획변경(감) 되었음.

3단계 처분시설 건설 내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이 2019~2026년에서 2019~2031년으로 5년 연장되었는데, 그에 따라 공사비 및 설계비 4억 8,600만원이 계획변경(감) 되었음.

[4개 내역사업별 변동내역 및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A)	변경 (B)	증감(B-A)	실집행액	변경 사유
2단계 처분시설 건설		52,591	65,101	12,510	65,101	제23차 총사업비 조정(2024.8)에 따라 공사비가 38,061백만원 증가하였으나, 2025년 공사비 반영 금액 21,669백만원 외 추가 공사비 확보 필요
	공사비	49,320	61,830	12,510	62,609	
	설계비	1,236	1,236	-	682	
	감리비	1,978	1,978	-	1,753	
	시설부대비	57	57	-	57	

122) 처분시설건설 기반구축 내역사업의 간접비 101억 6,300만원은 당초 계약기간(2016.8~2019.12)을 초과한 공사기간(2020.1~2024.4)에 발생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으로 편성하여 2024년에 전액 집행되었음.

[간접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간접노무비	경비	부가세	간접비 계
6,611	2,628	924	10,16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A)	변경 (B)	증감(B-A)	실집행액	변경 사유
처분시설건설 기반구축		24,312	14,175	△10,137	14,164	2단계 처분시설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준공 일정 순연(2024.12 →2025.12.)으로 인해 취득세 납부 예산 등 감액 필요
	취득세	9,171	-	△9,171	-	
	처분시설 안전성 확보	4,782	3,816	△966	3,799	
	간접비	10,163	10,163	-	10,163	
	인허가비	196	196	-	202	
처분검사건물 신축		2,220	333	△1,887	333	건설·운영변경허가 심사 장기화로 본공사 착수 일정이 순연되어 사업비 감액 필요
	공사비	1,500	-	△1,500	-	
	설계비	700	313	△387	313	
	시설부대비	20	20	-	20	
3단계 처분시설 건설		2,675	2,189	△486	2,171	사업기간 변경(2019~2026 →2019~2031)에 따라 설계비, 조사평가용역비 등 사업비 감액 필요
	공사비	759	572	△187	466	
	설계비	1,661	1,362	△299	1,449	
	감리비	240	240	-	240	
	시설부대비	15	15	-	16	
합 계		81,798	81,798	-	81,76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 계획변경은「국가재정법」제7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자체변경하여 집행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123)]

그러나 2024년에 이루어진 내역사업간 변경은 2단계 처분시설 건설 내역사업의 총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서, 다른 내역사업에서 감액 조정된 취득세·공사비 및 설계비는 차년도 이후에 다시 반영될 것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각 내역사업의 공사일정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123)「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무역보험기금】

〈지 출〉

23.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보다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 필요

가. 개 요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은 무역보험의 보험금 지급 및 보증채무 이행 등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채권 행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80억 700만원 중 164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1%)되고 16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124]

[2024년도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18,007	18,007	-	18,007	16,405	-	1,602	19,596

이 사업은 채권추심을 통해 보험금과 대위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추심기관 의뢰 시 발생하는 수수료·소송비용 및채권추심업체 평가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세부내역]

ㅇ 무역보험채권관리 비용 등: 101억 2,500만원 - 추심비용: 82억 3,700만원, 제세금 등 5억 3,300만원, 국외지사 신용정보채권관리 12억 3,100만원, 사고조사비용 1억 2,400만원 ㅇ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평가: 78억 8,200만원 - 채권회수대행 관련 추심비용: 3억 2,200만원, 신용정보 구입 61억 3,500만원, DB 구축 및 관리: 12억 3,800만원, 제세금 등 1억 8,700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24) 무역보험기금-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1531-404)(무역투자실)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지급된 보험금이 고액 및 장기 미회수 채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및 추심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기초채권잔액 대비 당해연도 회수금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1.8%, 2021년 2.3%, 2022년 6.1%, 2023년 4.5%, 2024년 5.6%로 그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4년에는 해외 채권은 기초잔액 1조 5,891억원 대비 2,140억원이 회수(회수율 13.5%)된 반면, 국내 채권은 기초잔액 2조 4,965억원 대비 141억원이 회수(회수율 0.6%)되었음.

[2020~2024년 기초채권잔액 대비 당해연도 회수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초채권잔액		48,404	49,279	50,584	41,212	40,856
	국외	14,131	15,324	15,621	16,220	15,891
	국내	34,273	33,955	34,964	24,992	24,965
당해연도회수금		879	1,112	3,081	1,839	2,281
	국외	642	774	2,923	1,703	2,140
	국내	237	337	158	136	141
회수율		1.8	2.3	6.1	4.5	5.6
	국외	4.5	5.1	18.7	10.5	13.5
	국내	0.7	1.0	0.5	0.5	0.6
회수비용		63	66	88	103	8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인 추심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된 채권의 부실화·채무자 파산 및 소재 불명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임.

특히 2023~2024년 기업별 및 해외기업 대상 회수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회수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해외기업 모두 채권 잔액 대비 회수금액이 여전히 저조한 편인데, 현재 지급된 보험금이 고액 및 장기 미회수 채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체 기업 유형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및 추심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3~2024년 기업별 채권잔액 및 회수현황]

(단위: 억원)

구분	유형	2023년			2024년		
		채권잔액	회수금액	추심 수수료	채권잔액	회수금액	추심 수수료
직접회수 채권	대기업	1,482	5	-	1,462	-	-
	중소중견	20,970	128	-	21,200	131	-
	해외	9,754	1,494	-	8,904	1,928	-
	소계	32,206	1,627	-	31,566	2,059	-
추심기관 의뢰채권	대기업	18	-	-	18	-	-
	중소중견	2,495	3	1	2,783	10	2
	해외	6,137	209	47	5,862	212	41
	소계	8,650	212	48	8,663	222	43
합계		40,856	1,839	48	40,229	2,281	43

주 1) 채권 잔액은 연말 잔액 기준
2)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은 국내채권이고, 해외 대상은 해외채권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대응기금】

〈지　출〉

24.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의 정액 사업비 편성 필요

가. 개　요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은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게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액 2,236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25]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223,600	223,600	-	223,600	223,600	-	-	217,000

통상 융자사업은 융자취급수수료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융자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융자사업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수취하게 됨.

이 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공단은 사업운영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를 1.00%로 하고 이와 별도로 공단의 위탁수수료도 0.10%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25)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6232-400)(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별표1> 대출금리]

대출 방식	대출금리	융자취급수수료
간접대출	매년 3분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00%p, 대기업은 1.50%p 차감한 금리를 적용	1.10%p (공단 0.10%p)

주 1) 산정한 대출금리가 1.30%p 미만일 경우 최저대출금리인 1.30%p를 적용
2)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0%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00%p)를 합산하여 1.10%p를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정액의 관리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받을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한 0.10%의 위탁수수료는 2022년 355만원, 2023년 9,010만원, 2024년 1억 8,424만원이 발생하였는데,「탄소중립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공단 정규직 및 계약직 인건비로 집행되었음.[126)]

[융자취급수수료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정규직A	정규직B	정규직C	정규직D	계약직 A	합계
2022	-	-	-	-	3,552	3,552
2023	-	-	-	55,400	34,704	90,104
2024	414	71,183	65,749	35,587	11,307	184,240
합계	414	71,183	65,749	90,987	49,56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업은 개요에서 설명하였듯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1.00%의 융자취급수수료 외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0.10%의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

126)「탄소중립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제2024-193호)」
제7조(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비목으로 편성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1. 융자지원 사업 : 융자사무 수수료(기획평가관리비) 및 자금운용 수익
2. 이차보전지원 사업 : 기획평가관리비

행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융자사업에서는 전담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에특회계 융자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 현황]

(단위: %)

사업명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금융기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1.00
가스안전관리(융자)	-	1.50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	0.70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융자	-	1.5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1.50
녹색혁신금융(융자)	-	1.50

자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별표 2]

에특회계의 융자사업에서 전담기관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가 없는 이유는 그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서 융자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으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제18조 제2항에 따라 융자취급수수료를 모두 금융기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127)]

그러나 이 사업은 융자 대출금리의 0.1%p를 융자취급수수료로 산정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융자 예산금액이 늘어날 때 관리비 증액 소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취급수수료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이 사업은 융자 규모가 2022년 912억원, 2023년 1,470억원, 2024년 2,236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융자취급수수료도 증가한 상황임.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는 등 관리와 무관한 외부 사유에 의하여 인건비 등 관리비로 집행되는 금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취급수수료가 사업 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R&D 사업이나 보조사업과 같이 정액의 관리비를 사업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127)「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5.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실소요를 고려한 기평비 편성 및 철저한 정산관리 필요

가. 개 요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저탄소 및 친환경 산업 집적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액 1,09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28]

[2024년도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109,500	109,500	-	109,500	109,500	-	-	113,700

이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하는 출연사업(사업출연금 350-02목)으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산단특화 탄소저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내역사업별 사업비 중 약 4.97%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음.

[2024년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기평비 현황]

내역사업명	부처 (A)		전문기관 (B)		사업수행자	기평비율 (B/A)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220억원)	=> (22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0억 9,300만원)	=> (209억 700만원)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외 8개 컨소시엄	4.97%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840억원)	=> (84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41억 7,500만원)	=> (798억 2,600만원)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외 9개 컨소시엄	4.97%
산단 특화 탄소저감	산업통상자원부 (35억원)	=> (35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 7,400만원)	=> (33억 2,600만원)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4.9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28)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6131-303)(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실집행 실적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개 내역사업 총 1,095억원을 전액 실집행하였음.

[2024년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22,000	22,000	22,000	22,000	-	22,000	22,000	-	-	100.0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84,000	84,000	84,000	84,000	-	84,000	84,000	-	-	100.0
산단 특화 탄소저감	3,500	3,500	3,500	3,500	-	3,500	3,500	-	-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 공통요구자료)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실소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결산 자료와 달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지출부에 근거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100%에 미달하고 있고, 특히 2024년 3개 내역사업에 배정된 기획평가관리비는 총 54억 4,200만원 중 37억 8,700만원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69.6%에 불과함.[129)]

[2024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출부에 따른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흐름	예산액(A)	집행액 또는 교부액(B)	집행률 또는 교부율(B/A)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산단공 →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외 8개 컨소시엄	20,907	20,906	99.9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산단공 →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외 9개 컨소시엄	79,826	79,825	99.9

129)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상 실집행률은 100.0%이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출부에 따른 실집행률은 미집행액이 있어 100.0%에 미달하여 상호 간 차이가 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흐름	예산액(A)	집행액 또는 교부액(B)	집행률 또는 교부율(B/A)
산단 특화 탄소저감	산단공 →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3,326	3,326	100.0
기획평가관리비	산단공 직접집행	5,442	3,787	69.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로 내역사업별 실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의 약 4.97%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서도 보이듯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이어져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은 2022년부터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은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 규모가 커질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귀속되는 기획평가관리비도 그 필요성 여부와 무관히 함께 커지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됨.

[2022~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A)	기획평가관리비 (B)	비율(B/A)
2022년	43,000	2,134	4.96
2023년	54,400	2,702	4.97
2024년	109,500	5,442	4.9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집행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실소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획평가관리비 집행잔액 16억 5,500만원을 내역사업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함께 반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며, 2025년 7월 초 기준 아직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사유로 기획평가관리비 집행잔액도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음.

특히「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제10조의2 및「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회계연도 중 불용액 등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수행부처는 원칙적으로 발생연도 말일까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동 사업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130][131]

130)「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의2 (집행지침의 작성 · 통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관서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31)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Ⅳ. 기금의 집행・정산・반납・이월・결산 □ 회계연도 중 불용액 등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수행부처는 원칙적으로 발생연도 말일까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을 반납하여야 함 ㅇ 회계연도 중에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반납할 수 있음

【기　타】

2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시정요구 81건(중복 6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6건·주의 50건·제도개선 31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6	49	31	6	80
예비비	-	-	-	1	-	-	1
합계	-	-	6	50	31	6	81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정요구사항 81건에 대해 7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1.4%)하고 7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80	73	91.3	7
예비비	1	1	100.0	-
합계	81	74	91.4	7

주) 2025년 7월말 기준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산업통상자원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2023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망의 관리운영을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투자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한다.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관리 강화 필요’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를 비롯한 3개 내역사업에서 2023년 이월금 중 일부가 2025년으로 재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관리 강화 필요’ 시정요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별 기반시설 사업 집행현장 방문을 통해 실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2025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기타 기반시설 지원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4)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관리 강화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2024.11.~12. 경제자유구역별 기반시설 사업 집행현장 방문을 통한 실집행 가능성 검토 및 차년도 공정계획 점검 완료 - 현장 특이사항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발생 시,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등을 통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정 조치 ㅇ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한 2025년도 예산 감액편성(전년대비 △28.9% 감)으로 연례적 이월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 노력(2024년 34,550백만원 → 2025년 24,576백만원) ㅇ 월별 집행현황 점검, 분기별 집행점검회의 등 사업관리 및 감독 철저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적기 구축 추진

그러나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를 비롯한 3개 내역사업에서 2023년에서 이월된 금액이 2024년에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2025년으로 재이월되었음.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등 3개 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이월금(A)	2024년 집행액(B)	2025년 재이월액(A-B)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450	445	5
세풍산단 간선도로	3,687	2,196	1,491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	2,496	1,554	94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의 융자수요가 없어 불용되어야 할 금액을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 시정요구에 대해 2025년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과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에도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의 융자수요가 없어 불용되어야 할 금액을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반하는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32)]

[해외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3)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예산편성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주의)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2025년 예산서상 내역사업을 통합(국내외유전개발/해외광물자원개발 → 해외자원개발융자) 편성 및 집행공고 ㅇ 예산 집행을 위해 핵심광물 자원개발 융자지원비율 상향(현 30% → 50%) 등 지원조건개선 완료(2024.11. 융자고시 개정 完)

132) ‘13.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 검토의견 관련

특허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43억 400만원(△5.3%)이 적은 6,10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2,900만원(△1.5%)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67,220	867,220	851,542	△15,678	792,258	792,258	727,180	△65,078	△124,362
총수입	629,398	629,398	620,237	△9,161	645,012	645,012	610,708	△34,304	△9,529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6억 1,300만원(△0.5%)이 적은 5,459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5,000만원(3.0%)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67,220	867,220	834,888	△32,332	792,258	792,258	714,531	△77,727	△120,357
총지출	538,838	538,838	529,967	△8,871	548,530	548,530	545,917	△2,613	15,950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922억 5,800만원으로, 7,301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271억 8,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29억 4,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92,258	792,258	-	792,258	730,122	727,180	2,942	-
- 손익계정	654,725	654,725	-	654,725	630,297	627,356	2,942	-
- 자본계정	137,533	137,533	-	137,533	99,825	99,825	-	-
합 계	792,258	792,258	-	792,258	730,122	727,180	2,942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922억 5,800만원으로, 이 중 7,145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2%)되고 777억 2,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92,258	792,258	-	±1,966	-	792,258	714,531	-	77,727
- 손익계정	654,725	654,725	-	±1,966	-	654,725	614,740	-	39,985
- 자본계정	137,533	137,533	-	-	-	137,533	99,792	-	37,741
합 계	792,258	792,258	-	±1,966	-	792,258	714,531	-	77,727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특허청 자산은 전년 대비 114억 9,500만원이 감소한 5,176억 4,2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0억 6,600만원, 투자자산이 71억 3,000만원, 무형자산이 21억 5,200만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70억 2,200만원 증가한 2,537억 7,900만원으로 유동부채 179억 5,0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85억 1,700만원이 감소한 2,638억 6,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특허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59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8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7억 3,4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특허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17,642	529,137	△11,495	△2.2
		유동자산	58,735	61,801	△3,066	△5.0
		투자자산	353,163	360,293	△7,130	△2.0
		일반유형자산	92,460	91,067	1,393	1.5
		무형자산	13,244	15,396	△2,152	△14.0
		기타비유동자산	40	579	△539	△93.1
	부 채		253,779	236,757	17,022	7.2
		유동부채	249,268	231,318	17,950	7.8
		장기차입부채	4,495	5,399	△904	△16.7
		장기충당부채	16	40	△24	△60.0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63,863	292,380	△28,517	△9.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5,958	△69,861	13,903	△19.9
	재정운영순원가		△45,311	△60,337	15,026	△24.9
	재정운영결과		28,509	79,243	△50,734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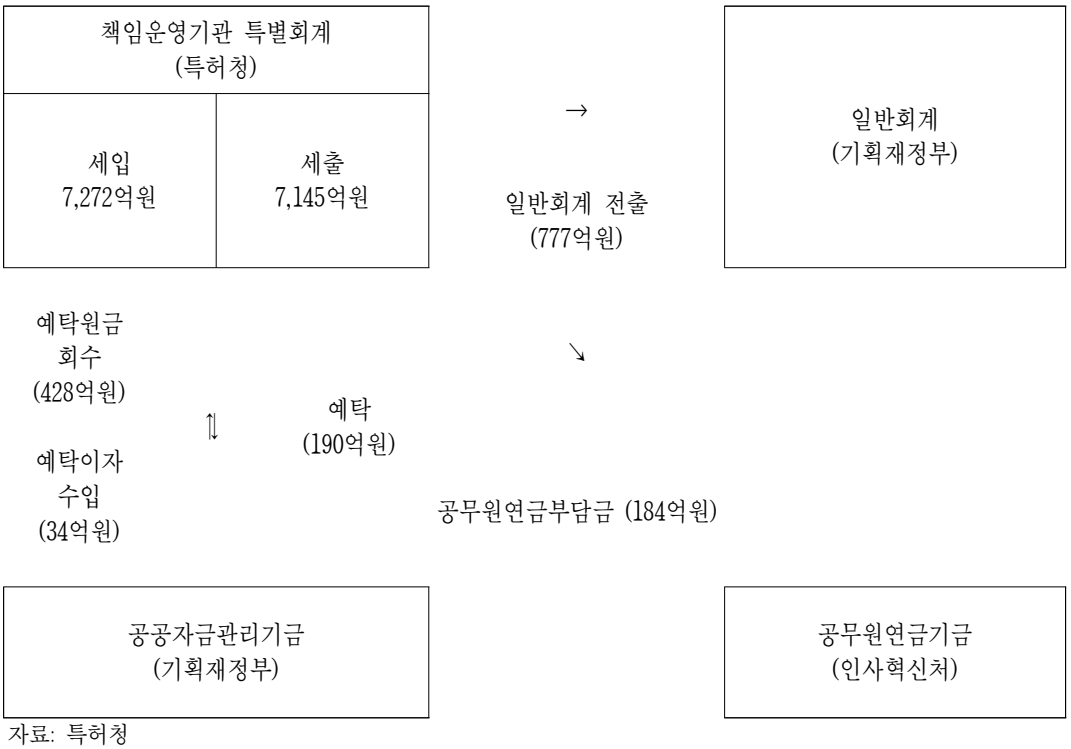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로 777억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84억원이 각각 전출되었고,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90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428억원의 원금이 상환되었고, 34억원의 예탁이자가 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특허청 재정흐름도]



자료: 특허청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신뢰받는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구축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0개 세부사업에서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원,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조성, 심사·심판처리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특허청은 과태료 미납액이 연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등록갱신제 도입 외에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다 철저히 수납을 관리하고, 과태료 세입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금은 별도의 세입항목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둘째, 특허청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기획재정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인건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낙찰차액의 예외적 사용범위로 보기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낙찰차액의 사용에 있어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은 이자금액을 사업재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사업출연금(350-02목)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따라 이자수익을 매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사업수행기관 수준에서 이월하여 소유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된 사용범위에서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넷째,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서 투자기업의 경영악화 및 회수시장 경직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된 16개 자펀드 중 2025년 5월 기준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3개에 불과한데, 특허청은 청산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펀드를 신속히 청산하는 등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입〉

1. 과태료: 장기 미납과태료의 철저한 수납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과태료’는 「변리사법」 제15조 및 제27조[2]에 따라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입항목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고 29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100만원이 수납되고, 29억 4,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3]

[2024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30	30	2,972	31	2,942	-	1.0	30

「변리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면, 2년을 주기로 산정되는 연수교육 실적에 기반하여 교육 미이수가 연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되어 있음.

---

2)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과태료(56-563)(산업재산정책국)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회	연속 2회	연속 3회 이상
연수교육 실적: 없음	150	300	500
연수교육 실적: 50% 미만	100	200	400
연수교육 실적: 50% 이상 75% 미만	75	150	300
연수교육 실적: 75% 이상 100% 미만	50	100	200

자료:「변리사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별표 3]

나. 검토의견

첫째, 특허청은 과태료 미납액이 연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등록갱신제 도입 외에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다 철저히 수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과태료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2021년 16억 7,000만원, 2022년 23억 1,000만원, 2023년 24억 7,500만원, 2024년 29억 4,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2024년 연도별 과태료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당해	이월					
2021	36	36	36	23		23	65.0	100.0	1,670	-
2022	36	36	36	-		-	-	-	2,310	-
2023	44	44	44	42		42	96.4	100.0	2,475	-
2024	30	30	30	498	2,474	31	102.4	1.04	2,942	-

주 1) 2022년도 결산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4년부터 그동안 발생한 미수납액 전체가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반영
2) 미수납액은 2016년부터 당해연도까지의 과태료 미수납액 누계임
자료: 특허청

이를 변리사 의무연수 주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2~2015년(1・2주기)에 발생한 과태료 5억 8,000만원 중 2억 4,000만원(41.4%), 2016~2017년(3주기) 8억원의 과태료 중 4억 5,000만원(56.3%), 2018~2019년(4주기) 5억 5,000만원 중 4억 6,000만원(83.6%),

2020~2021년(5주기) 5억 5,200만원 중 4억 9,000만원(88.8%), 2022~2023년(6주기) 4억 9,600만원 중 4억 6,500만원(93.8%)이 미납되었음.[4)]

[변리사 의무연수 주기별 과태료 부과대상과 납부/미납부/면제·유예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		납부		미납부		면제・유예	
	인원수	과태료	인원수	과태료	인원수	과태료	인원수	과태료
2012~2015년 (1・2주기)	314 (100)	580 (100)	128 (40.4)	140 (24.1)	106 (33.8)	240 (41.4)	80 (25.5)	200 (34.5)
2016~2017년 (3주기)	281 (100)	800 (100)	88 (31.3)	120 (15.0)	128 (45.6)	450 (56.3)	65 (23.1)	230 (28.8)
2018~2019년 (4주기)	169 (100)	550 (100)	31 (18.3)	40 (7.3)	120 (71.0)	460 (83.6)	18 (10.7)	50 (9.1)
2020~2021년 (5주기)	160 (100)	552 (100)	28 (17.5)	38 (6.9)	123 (76.9)	490 (88.8)	9 (5.6)	24 (4.3)
2022~2023년 (6주기)	141 (100)	496 (100)	13 (9.2)	29 (5.8)	126 (89.4)	465 (93.8)	2 (1.4)	2 (0.4)

주 1) 미납부 과태료 금액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임
2) 면제・유예: 휴・폐업, 해외체류, 사망, 법원통보 등에 따른 면제・유예를 의미함
자료: 특허청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변리사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임.

이는 의무연수 미이수, 과태료 미납 등 일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특허청장이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 사실상 의무연수 장기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것임.[5)]

이러한 제도 마련은 향후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별개로 과거 발생한 의무연수 미이수자 대상 미납 과태료를 수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특허청은 과태료 미납액이 연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독촉 등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보다 철저히 수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6)]

---

4) 변리사 의무연수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변리사법 시행령」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에 따라 2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5) 2025년 4월 9일 허성무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4호)이 발의되었고, 2025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둘째, 특허청은 가산금을 과태료 세입항목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과태료(56-563)와 가산금(58-581)은 별개의 세입항목이므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7)]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미수납 과태료에 대하여 2024년 말 기준 7억 9,9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특허청은 해당 가산금을 과태료 징수결정액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2024년 과태료 징수결정액 29억 7,200만원에 가산금 7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8)]

그러나 과태료(56-563)와 가산금(58-581)은 별개의 세입항목으로 분리하여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허청은 과태료 징수결정액 중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결정액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8) 참고로, 2024년 가산금(58-581) 징수결정액은 78,000원에 불과함.

[2024년 가산금 결산]

(단위: 원)

2024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	-	-	-	78,000	78,000	-	-

자료: 특허청

〈세　출〉

2.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낙찰차액 사용 필요

가. 개　요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출원·등록·심판·심사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특허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59억 6,800만원 중 355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3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4년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6,182	36,182	-	△214	35,968	35,589	-	378	32,580

나. 검토의견

특허청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기획재정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인건비로 이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낙찰차액의 예외적 사용범위로 보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동 사업의 결산 내역 중 이용(감) 금액 2억 1,400만원은 일반수용비(210-01) 5,400만원, 관리용역비(210-15) 9,100만원, 일반연구비(260-01) 6,900만원이 인건비 세부사업[10)]의 보수(110-01)로 이용된 것인데, 이는 특허 및 상표 심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431-500)(산업재산정보국)

위해 심사실적 초과 달성자에 대한 초과근무를 추가로 인정함에 따라 인건비가 부족해짐에 기인한 것임.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등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이용 (2024.12.18.)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431-500)	210-01	54	인건비 (7001-100)	110-01	인건비 부족분 재원 마련
		210-15	91			
		260-01	69			

자료: 특허청

이들 금액은 2024년 진행된 계약 건 중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통합감리 및 산업재산권 공보발간 및 표준기술문서 DB 구축 계약 후 낙찰차액에 해당함.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낙찰차액 사용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계약명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24년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21,496,000	10,000	조달수수료(222천원)
	2024년 특허청 일반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629,640	6,360	불용
	2024년 특허청 전산자원 유지관리 사업	5,219,515	79,485	조달수수료(28,164천원), 불용(51,321천원)
	2024년 특허청 전산자원 도입사업(통합발주)	1,781,450	30,221	불용
	2024년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	405,581	54,255	**인건비 이용(54,255천원)**
	24년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	860,440	17,560	조달수수료(7,534천원), 감리예산투입(10,000천원), 불용(26천원)
	24년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 통합감리사업	200,000	50,000	조달수수료(1,711천원), 불용(8,289천원), **인건비 이용(40,000천원)**
	2024년 산업재산권 공보발간 및 표준기술문서 DB구축	1,193,400	132,600	**인건비 이용(120,000천원),** 조달 수수료(9,500천원), 불용(3,100천원)

자료: 특허청

10) 인건비(7001-10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을 전제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의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거나,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 국무회의 등 정책 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 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1)]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한 초과근무수당 추가 인정 등으로 인건비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의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상대적으로 낙찰차액의 규모가 큰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부득이하게 인건비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충당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지침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예외적 사용 가능 범위를 정보시스템 관련 공공요금 부족분,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 등 긴급보강 소요, 국무회의 등을 통해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른 계속사업 부족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찰차액을 인건비 부족분에 집행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11)「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 -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의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 국무회의 등 정책 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미집행된 사업출연금으로 발생한 이자금에 대한 관리규정 정비 필요 등

가. 개 요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억 8,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2)]

[2024년도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1,686	-	-	1,686	1,686	-	-	2,286

이 사업은 일반출연금(350목)으로 편성되었고, 전담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전년도 이월액 100억 1,2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114억 6,200만원 중 66억 9,10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58.4%)하고 47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0~2024년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내 사업출연금의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예산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0	3,750	3,750	3,750	3,750	-	3,750	633	3,117	16.9
2021	9,040	9,040	9,040	9,040	3,117	12,157	1,471	10,686	12.1
2022	3,525	3,525	3,525	3,525	10,686	14,211	2,190	12,021	15.4
2023	550	550	550	550	12,021	12,571	2,559	10,012	20.4
2024	1,450	1,450	1,450	1,450	10,012	11,462	6,691	4,771	58.4

자료: 특허청

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1332-306)(산업재산정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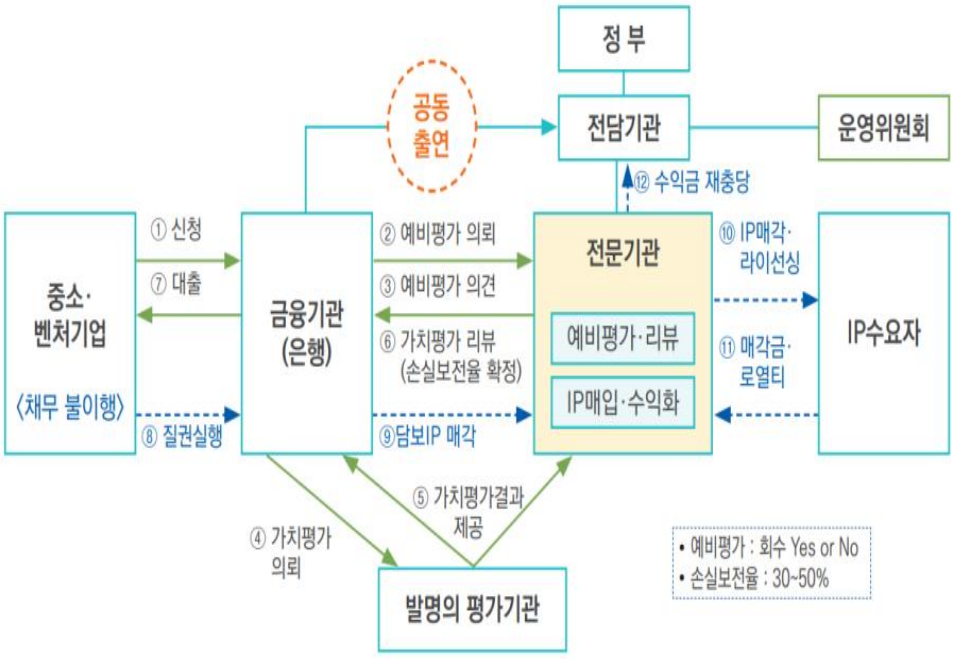
참고로, 이 사업의 수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

우선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IP(Intellectual Property) 회수전문기관의 예비평가·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대출을 실행함.

이후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결정된 손실보전율로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담보 IP를 매입 결정하게 되고, 이때 매입한 IP는 회수전문기관이 아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하게 됨.

회수전문기관은 매입한 IP를 향후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의 구조]



자료: 특허청

나. 검토의견

첫째, 특허청은 사업출연금(350-02목)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사업수행기관 수준에서 이월하여 소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사용범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국발명진흥회는 개요에서 서술하였듯이, 2020년부터 실집행이 100.0%에 크게 미달하여 출연사업 계좌에서 이자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5년 5월 기준 누적 이자수익 규모는 8억 9,100만원으로 나타남.

[2020~2025년 발명진흥회 담보 IP 매입 출연회계 내 이자수익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5	합계
기말 이자수익	16	18	22	397	437	1	891

주) 세후 이자수익 기준임
자료: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자수익금을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계정에 누적하여 적립함과 동시에,[13] 8억 9,100만원 중 3,500만원은 기업신용정보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 구매에 집행하였음.

사실상 대부분의 이자수익금이 집행가능성이 낮은 채로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동 지침에서 이자금액에 대한 반납 또는 이월에 대한 중앙관서장의 승인절차 없이 이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동 지침은 사업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14]

특히, 집행지침의 취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업재

1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사업의 재원) ② 정부와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이외에도 사업을 통한 수익금과 이자수익도 사업재원으로 사용한다.

14)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5

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을 의미함.

또한 대부분의 부처들은 사업성 출연금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출연금이나 보조금과 같이 집행잔액과 이자수익금은 원칙적으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특허청은 이자수익에 대해서 매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사업수행기관 수준에서 이월하여 소유하는 것이 적절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사용범위에서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매입한 IP의 매각대금 및 연간 실시료 수입이 저조한 상황으로 정부지원이 관성화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특허청은 IP의 수익화를 위한 매각 및 실시권 부여 등 실적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수전문기관은 매입한 IP를 향후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전문기관은 2020~2024년 5년 동안 총 307건의 IP를 220억 5,800만원에 매입하였음.

매입 실적을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파산기업으로부터 IP 10건 8억 8,000만원, 회생기업으로부터 IP 60건 43억 4,100만원, 담보 IP 매입당시 휴업 또는 폐업 중이던 기업으로부터 IP 237건 168억 3,700만원을 매입하였음.

[2020~2024년 담보IP 매입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파산 기업		회생 기업		기 타		합 계	
	건수(IP수)	금액	건수(IP수)	금액	건수(IP수)	금액	건수(IP수)	금액
2020	-	-	-	-	3(5)	320	3(5)	320
2021	-	-	2(2)	193	15(27)	1,649	17(29)	1,842
2022	-	-	6(22)	1,692	17(32)	1,721	23(54)	3,413
2023	5(8)	612	7(13)	801	28(47)	2,713	40(68)	4,126
2024	2(2)	268	8(23)	1,655	70(126)	10,434	80(151)	12,357
합계	7(10)	880	23(60)	4,341	133(237)	16,837	**163(307)**	**22,058**

주) 기타 : 담보IP 매입 당시 휴업·폐업 등
자료: 특허청

그러나 매입한 IP를 다시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권 등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수한 비용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IP 77건 5억 8,700만원에 불과함.

[2020~2024년 담보IP 수익화 실적]

(단위: 건, 개, 백만원)

구분	합계			매각			실시권 부여		
	건	IP 개수	금액	건	IP 개수	금액	건	IP 개수	금액
2020	-	-	-	-	-	-	-	-	-
2021	2	2	7	-	-	-	2	2	7
2022	7	23	114	-	-	-	7	23	114
2023	11	18	88	3	4	53	8	14	35
2024	13	34	378	4	10	274	9	24	104
합계	33	**77**	**587**	7	14	327	26	63	260

주) 수익화 실적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특허청

매각 및 실시권 부여 사례 중 일부 건에 대한 세부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4,000만원 및 2024년 1억 5,600만원의 매각 건을 제외하고는 매각액 또는 연간 실시료가 매입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매각 및 실시권 부여 사례]

(단위: 개, 백만원)

매각 등 수익화 연도	구분	매입시점	매입액	매입 IP 개수	수익화 금액 (매각액, 연간 실시료)	수익화 IP 개수
2022	실시권 부여	2021	120	1	50	1
2022	실시권 부여	2022	600	6	12	6
2022	실시권 부여	2022	178	2	4	2
2022	실시권 부여	2022	250	8	7	8
2022	실시권 부여	2022	72	1	0.95	1
2022	실시권 부여	2022	40	2	1	2
2022	실시권 부여	2022	396	3	8	3
2023	매각	2022	120	4	8	1
2023	**매각**	**2022**	**40**	**2**	**40**	**2**
2023	매각	2022	48	3	5	1
2023	실시권 부여	2021	120	1	3	1
2023	실시권 부여	2023	60	2	2	2
2023	실시권 부여	2023	92	1	3	1
2023	실시권 부여	2023	56	2	2	2
2023	실시권 부여	2023	120	2	3	2
2023	실시권 부여	2023	150	2	3	2
2023	실시권 부여	2023	83	1	1	1
2023	실시권 부여	2023	168	3	4	3
2024	매각	2022	48	3	8	1
2024	**매각**	**2024**	**156**	**3**	**156**	**3**

(단위: 개, 백만원)

매각 등 수익화 연도	구분	매입시점	매입액	매입 IP 개수	수익화 금액 (매각액, 연간 실시료)	수익화 IP 개수
2024	매각	2021	175	5	10	1
2024	매각	2024	209	5	100	5
2024	실시권 부여	2020	180	2	10	1
2024	실시권 부여	2024	130	1	2	1
2024	실시권 부여	2024	150	2	4	2
2024	실시권 부여	2024	120	2	4	2
2024	실시권 부여	2024	39	1	0.7	1
2024	실시권 부여	2024	177	3	6	3
2024	실시권 부여	2024	36	1	0.7	1
2024	실시권 부여	2024	220	8	4	8
2024	실시권 부여	2024	653	5	20	5

주) 볼드(bold) 표시한 2건은 매입액과 동일한 금액이 수익으로 발생하였음.
자료: 특허청

이로 인하여 매입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상태는 2020~2024년 중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2024년에는 부채가 210억 5,800만원으로 자산(175억 4,700만원)을 크게 초과하여 자본이 △35억 1,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5억 6,200만원에 비해 크게 악화된 수치임.

[2020~2024년 특수목적회사(SPC) □□사의 재무상태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자산	당좌자산(매출채권, 부가세 등)	2	101	84	146	520
	무형자산(특허권)	312	1,930	4,427	7,330	17,027
자산 총계		314	2,031	4,511	7,476	17,547
부채	장기차입금 등	341	2,158	5,142	9,034	21,052
	미지급비용	-	-	2	4	6
	계	341	2,158	5,144	9,038	21,058
자본	자본금(10만원), 결손금	△27	△127	△633	△1,562	△3,511
부채 및 자본 총계		314	2,031	4,511	7,476	17,547

주 1) 무형자산은 매입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을 인식하였음
2) 장기차입금은 특허권 매입비용(2024년 기준 누적 약 210억원) 지급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임
자료: 특허청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매입 IP 총 307개 중 151개가 2024년에 매입되었는데 통상 IP 수익화에는 매입 후 약 2~3년이 소요되고, 해당 IP는 부실기업이 사용하던 IP를 재활용하는 구조로써 매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금과 같이 매입한 IP 금액에 비해 연간 실시료가 소액이거나, 매각을 통한 수익화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회수금이 매입금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부실기업의 IP 매입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관성화될 우려가 있음.[15)]

수익금이 IP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이라는 점에서, 특허청은 IP의 수익화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5)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제3항은 수익화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담기관의 사업계정에 납부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업재원은 동 지침 제8조 각호에 따라 담보산업재산권 매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4. 모태조합 출자 사업: 민간투자의 유치 실적 제고 및 존속기간 만료된 자펀드의 조속한 청산 필요

가. 개 요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지식재산(IP) 분야에 직접 투자하여 로열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예산현액 114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6]

[2024년 모태조합 출자 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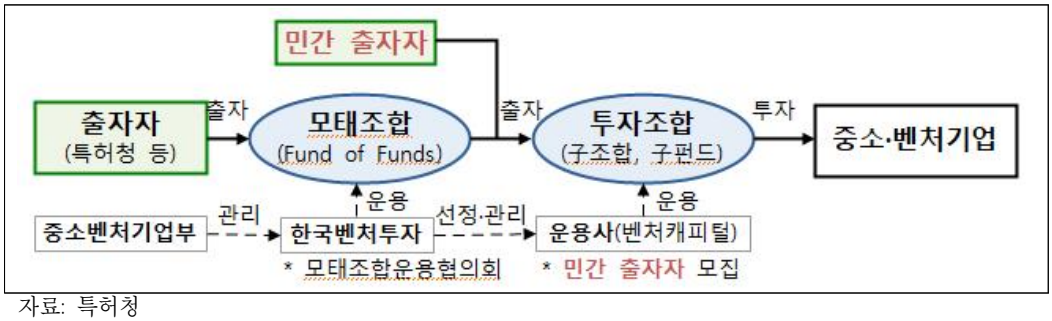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모태조합 출자	11,400	11,400	-	-	11,400	11,400	-	-	8,000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자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펀드는 우수한 IP를 매입·활용하여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임.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문을 통해 결성목표액 및 최대출자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특허청 단독 출자사업은 최대출자비율을 50~80%로 설정하였고,[17] 특허청과 한국성장금융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특허청의 최대출자비율은 10~40%임.[18]

[모태조합 출자 사업 진행절차]



자료: 특허청

1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모태조합 출자(1332-304), 산업재산정책국

17) 특허청의 최대출자비율(공고연도 기준) : (~’16년) 80% → (’17년) 70% → (’21년) 60% → (’24년) 50%

18) 2014.12.~2015.2.에 결성된 펀드의 특허청 최대출자비율은 40%, 2019.11.~2023.1.에 결성된 펀드의 특허청 최대출자비율은 10%임.

나. 검토의견

첫째, 모태펀드는 정부출자금이 마중물로서 민간자금을 유인하여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그 본질임을 고려하여, 특허청은 민간출자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비율을 포함하여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성과평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14~2024년 10년 동안 총 56개 자펀드 중 특허청이 단독으로 출자한 펀드는 38개이고, 한국성장금융 및 모태펀드 중진계정과 공동으로 출자한 펀드는 각각 15개, 3개임.

그러나 특허청 단독출자로 조성된 자펀드 38개 중 31개의 자펀드는 결성총액 중 특허청 정부출자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4~2024년 결성된 자펀드의 정부와 민간출자액 비율]

(단위: 개)

구분	자펀드 총 개수(A)	공고한 정부출자비율	특허청 출자비율 50% 이상 자펀드 수
특허청 단독출자	38	50~80%	31
공동출자	18	10~40%	-

자료: 특허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정부출자비율이 상당히 낮은 자펀드도 있고,[19] 지식재산 분야의 펀드 조성은 민간투자금 유치가 어렵고 시장 성숙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모태펀드 사업은 정부출자금이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적은 정부자금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그 본질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사업을 통해 공고된 정부 최대출자비율을 준수하면서 자펀드가 결성되었다 하더라도 결성총액 중 과반이 정부출자금인 자펀드의 사례가 다소 많이 보이는 현상은 해당 자금이 지식재산 분야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19) 특허청 단독출자 자펀드 중 케0000조합은 총결성액 400억원 중 300억원이 민간출자금이고, 더0000조합은 총결성액 575억원 중 400억원이 민간출자금임.
또한 공동출자 자펀드 중 파0000조합은 총결성액 1,945억원 중 1,922억원이 민간출자금이고, 뮤0000조합은 총결성액 1,316억원 중 1,262억원이 민간출자금임. 단, 공동출자 자펀드의 민간출자금에는 한국성장금융의 자금도 포함된 수치임.

따라서 특허청은 민간출자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비율을 포함하여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민간자금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펀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성과평가와 연계함으로써, 민간출자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투자기업의 경영악화 및 회수시장 경직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된 16개 자펀드 중 2025년 5월 기준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3개에 불과한데, 특허청은 청산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펀드를 신속히 청산하는 등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펀드는 통상 7~8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운용사는 자펀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게 됨.

또한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총회 개최가 원칙이나, 90일 이내로 잔여자산 처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로 청산기간 연장이 가능함.[20]

2014~2024년 결성된 자펀드 중 2025년 5월 기준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는 16개이고, 이 중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3개에 불과함.[21]

[2014~2024년 결성된 자펀드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의 청산 여부]

조합명	결성일	만료일	청산 여부
알○○○○조합	2014-02-28	2022-02-27	O
I○○○○조합	2014-07-11	2022-07-10	X
I○○○○조합	2014-10-31	2022-10-30	O
P○○○○조합	2014-12-05	2022-12-04	X
K○○○○조합	2015-02-10	2023-02-09	X
서○○○○조합	2015-07-06	2023-07-05	O
B○○○○조합	2015-10-02	2023-10-01	X
I○○○○조합	2015-11-13	2023-11-12	X
아○○○○조합	2016-04-25	2024-04-24	X

20)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내용>

참고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공통 내용
(중략) ④ 청산인(운용사)은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 참고로,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2006년 출범 이후 2024년까지 총 28개의 자펀드가 청산되었음.

조합명	결성일	만료일	청산 여부
M○○○○조합	2016-09-30	2024-09-29	X
알○○○○조합	2016-06-21	2024-06-20	X
I○○○○조합	2016-06-23	2024-06-22	X
I○○○○조합	2016-09-09	2024-09-08	X
I○○○○조합	2016-10-27	2024-10-26	X
B○○○○조합	2017-10-17	2024-10-16	X
2○○○○조합	2019-11-15	2024-11-14	X

자료: 특허청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잔여자산 처분이 미완료되어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로 청산기간을 연장하였고, 투자기업의 경영악화 및 회수시장 경직 등의 사유로 잔여자산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처럼 청산이 지연될 경우 민간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지연으로 IP 정책펀드 및 직접투자 시장상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민간투자금 유치 여건이 악화되므로, 정부투자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성급한 청산은 헐값 회수 및 저조한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특허청은 수익성이 더욱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펀드에 대해서는 청산을 신속히 실시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자펀드의 경우에도 청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투자처를 보다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세부내역 간 예산 변경 집행 시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가. 개 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은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선정하여 최대 10년 동안 연 5.5~7.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6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2)23)]

[2024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8,062	8,062	-	-	8,062	5,012	-	50	1,137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7,359	7,359	-	-	7,359	7,331	-	28	739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6,620	6,620	-	-	6,620	6,620	-	-	7,220

이 사업의 1차 보조사업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이고, 그 운영비는 4억 7,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61억 5,000만원이 2차 보조사업자인 경상국립대학교 등 9개 대학에 교부되었고, 2차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61억 5,000만원은 전액 실집행되었음.

---

2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1237-325)(산업재산정책국)

23) 2024년까지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대학(원) 및 실무형 IP 인재양성’(1235-300) 세부사업에서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내역사업이었으나, 2025년부터 고등·평성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어 별도 세부사업으로 조정됨.

나. 검토의견

간접보조사업자가 인건비, 장학금 등의 집행잔액을 사업목적과 거리가 있는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운영비로 변경하게 집행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허청은 보조금 세부내역 간 예산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차 보조사업자인 경상국립대학교 등 9개 대학의 실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건비 및 장학금은 예산 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18억 1,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운영비는 실제로는 3억 600만원이 많은 21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음.

[경상국립대학교 등 9개 지원대학 세부내역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학교명	정부 예산총액 (a+b+c+d+e)	인건비		사업운영비		장학금		유형자산 취득비		기타운영비	
		예산 (a)	실 집행	예산 (b)	실 집행	예산 (c)	실 집행	예산 (d)	실 집행	예산 (e)	실 집행
경상대	750	286	273	149	172	184	175	10	10	121	119
충북대	750	255	243	202	224	188	183	2	0.6	104	100
전남대	750	243	242	257	262	129	125	5	5	117	117
충남대	750	332	332	199	220	100	78	3	3	116	117
경북대	750	310	278	**242**	**305**	82	58	17	16	100	92
강원대	750	299	299	224	236	118	106	6	6	103	104
부산대	550	219	203	**148**	**202**	53	12	45	45	85	88
전북대	550	228	176	**180**	**256**	30	2	31	31	81	84
제주대	550	194	166	218	248	27	23	28	28	83	85
합계	6,150	2,366	2,212	1,819	2,125	911	762	147	144.6	910	906

주 1) 사업운영비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산학협력 활동 소요비용, 무형 인프라 구축(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등 포함
2) 기타운영비는 연구개발비, 여비 등 포함
자료: 특허청

초과 집행된 사업운영비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에서 특히 크게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기존에 있던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 추가로 소요되었으나, 지식재산관리 NCS 기반 문제풀이 APP 개발 용역을 수행하거나 홈페이지 제작 용역, IP 캠프 및 신규 IP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집행되는 등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존재함.

[초과 집행된 사업운영비의 세부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증액 전환 보조 비목	계획 대비 추가 집행 사업비 내용 및 사유	연초 예산	최종 실집행	변경 금액
경북대	운영비	- 지역 내 대학 연계 확대를 위한 대학연합 IP캠프 운영, 대구경북 청소년 IP캠프 운영, CBC 창업경진대회 운영 규모 확대 - 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랜선지식재산토크쇼 추가 실시 - 지식재산관리 NCS 기반 문제풀이APP 개발 용역 수행	242	305	63
부산대		- 교내 수강생 유치를 위한 홍보비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증액 - IP신규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 및 동영상콘텐츠(인공지능과 지식재산, 특허사업화 전략 등) 개발 - 홈페이지 제작 용역 수행 및 IP캠프 및 IP포럼 등 신규 사업 추가	148	202	54
전북대		- IP교육 확산 컨텐츠 추가 개발(특허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 NCS기반 지식재산 직무 가이드) - 교내 재학생 IP인식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역량강화 캠프, 지식재산혁신 포럼, 지식재산기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신규 IP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80	256	76

자료: 특허청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2024년에는 1년차 신규대학을 지원함에 따라 교육부 승인 및 대학 내부절차로 인해 전담교수 및 학위과정 개설이 지연되었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인건비 및 장학금 집행잔액을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사업활성화를 도모하였다는 입장임.[24]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서는 간접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25] 이는 세부내역에서 발생한 집행잔액도

24)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칙적으로는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이에 근거할 때, 인건비와 장학금의 집행잔액을 기존 계획에 없었던 NCS 문제풀이 및 홈페이지 제작 용역 등에 사용하도록 한국발명진흥회가 승인한 점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이 사업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서 전담교수 채용 및 학위 개설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2024년과 같이 인건비 및 장학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는 범위에서 변경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특허청은 향후 보조금 세부내역 간 예산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특허청에 대해 시정요구 1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6건, 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6	6	-	12
예비비	-	-	-	-	-	-	-
합계	-	-	-	6	6	-	12

특허청은 시정요구사항 12건에 대해 1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1.7%)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2	11	91.7	1
예비비	-	-	-	-
합계	12	11	91.7	1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조 2,962억 4,300만원(15.3%)이 많은 9조 7,650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943억 1,900만원(25.5%)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10,210	210,210	291,906	81,696	213,471	213,471	251,428	37,957	△40,478
기 금	7,455,133	6,928,933	7,519,254	590,321	8,255,288	8,255,288	9,513,574	1,258,286	1,994,319
총수입	7,665,343	7,139,143	7,811,160	672,017	8,468,759	8,468,759	9,765,002	1,296,243	1,994,319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737억 3,500만원(△1.8%)이 적은 14조 9,474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70억 3,200만원(7.4%)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032,685	4,035,954	4,025,755	△10,199	3,500,367	3,500,367	3,492,685	△7,682	△533,070
기 금	9,487,842	9,963,648	9,894,689	△68,959	11,449,293	11,720,845	11,454,792	△266,053	1,560,103
총지출	13,520,527	13,999,602	13,920,445	△79,157	14,949,660	15,221,212	14,947,477	△273,735	1,027,032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2,134억 7,100만원으로, 2,570억 4,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514억 2,800만원은 수납(97.8%)되고 56억 1,9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95,171	195,171	-	195,171	226,418	220,904	5,51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629	30,524	105	-
- 지역지원계정	18,300	18,300	-	18,300	24,787	24,787	-	-
- 지역자율계정	-	-	-		4,851	4,748	103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595	594	1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396	395	1	-
합 계	213,471	213,471	-	213,471	257,047	251,428	5,619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6,597억 8,400만원으로, 6조 5,721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11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65억 5,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193,643	6,193,643	-	1,787 △1,787	-	6,193,643	6,107,172	1,111	85,36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73,077	73,077	-	-	-	73,077	73,077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3,064	393,064	-	-	-	393,064	391,870	-	1,194
- 지역자율계정	152,668	152,668	-	-	-	152,668	152,667	-	1
- 지역지원계정	212,265	212,265	-	-	-	212,265	212,261	-	4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7,574	17,574	-	-	-	17,574	17,574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557	10,557	-	-	-	10,557	9,368	-	1,189
합 계	6,659,784	6,659,784	-	1,787 △1,787	-	6,659,784	6,572,119	1,111	86,55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2조 728억 6,800만원으로, 33조 6,224억 8,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4조 11억 4,200만원은 수납(수납률 71.4%)되고 8조 5,653억 8,4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조 559억 5,5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138,894	11,410,110	12,504,678	11,309,555	603,977	591,146
기술보증기금	3,154,269	3,154,269	11,049,510	4,288,086	6,296,615	464,80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508,489	7,508,489	10,068,293	8,403,501	1,664,792	-
합 계	21,801,652	22,072,868	33,622,481	24,001,142	8,565,384	1,055,955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2조 732억 400만원으로, 24조 11억 4,2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8.7%)되고 54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58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138,894	11,410,110	336	11,410,446	11,309,555	5,453	109,605
기술보증기금	3,154,269	3,154,269	-	3,154,269	4,288,086	-	6,82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508,489	7,508,489	-	7,508,489	8,403,501	-	179,446
합 계	21,801,652	22,072,868	336	22,073,204	24,001,142	5,453	295,87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자산은 전년 대비 257억 4,800만원이 증가한 49조 7,613억 1,6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7,859억 9,2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8,013억 7,7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408억 7,700만원 증가한 47조 2,707억 4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9,441억 6,7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151억 3,000만원이 감소한 2조 4,906억 1,2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7조 4,385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51억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조 8,701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83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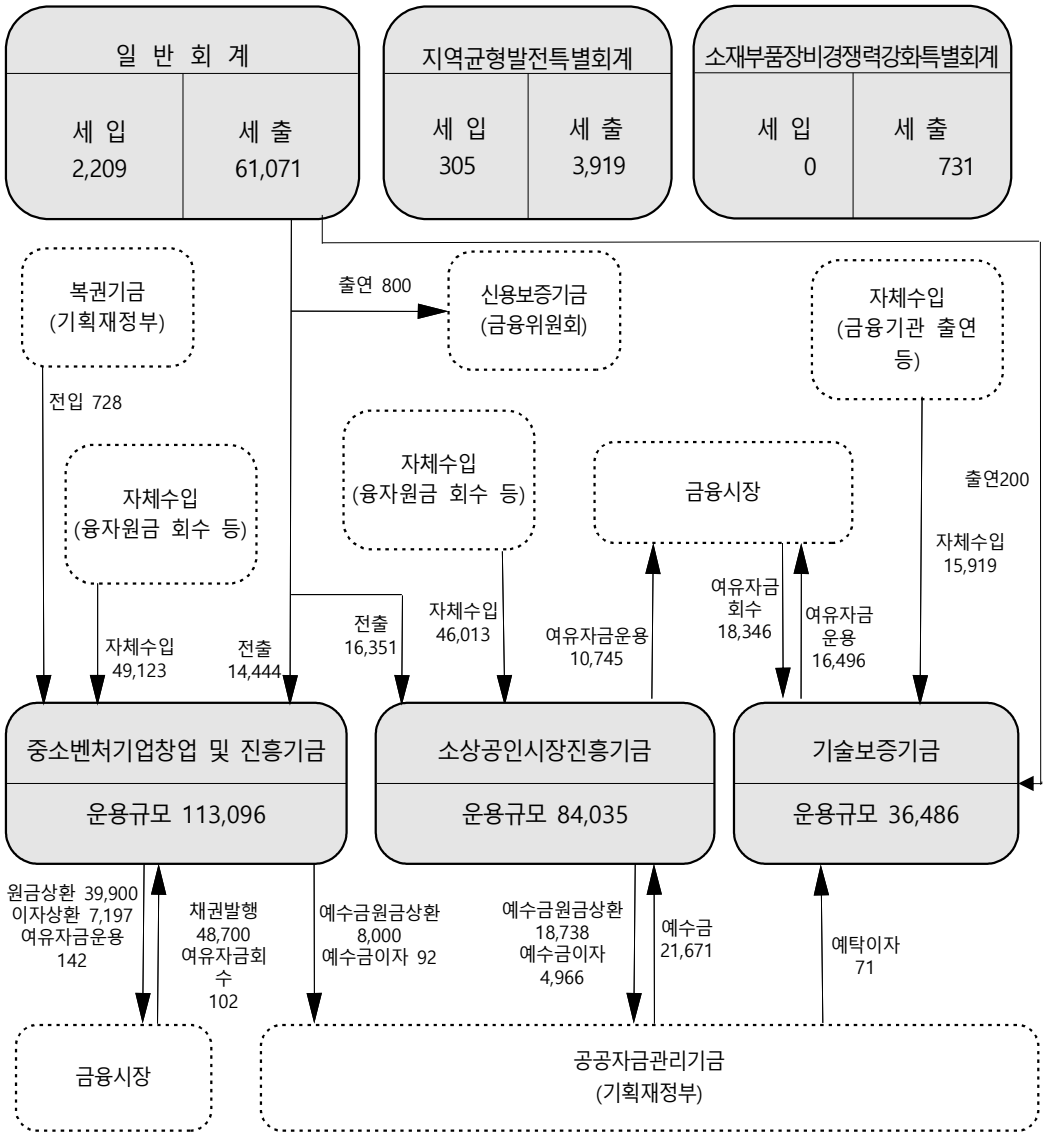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9,761,316	49,735,568	25,748	0.1
		유동자산	13,873,281	13,071,904	801,377	6.1
		투자자산	34,057,611	34,843,603	△785,992	△2.3
		일반유형자산	1,408,323	1,427,666	△19,343	△1.4
		무형자산	18,070	20,526	△2,456	△12.0
		기타비유동자산	404,031	371,870	32,161	8.6
	부 채		47,270,704	46,629,827	640,877	1.4
		유동부채	6,867,572	7,051,711	△184,139	△2.6
		장기차입부채	38,855,776	37,911,609	944,167	2.5
		장기충당부채	1,373,278	1,240,284	132,994	10.7
		기타비유동부채	174,077	426,223	△252,146	△59.2
	순자산		2,490,612	3,105,742	△615,130	△19.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7,438,534	7,073,430	365,104	5.2
	재정운영순원가		7,755,832	7,396,188	359,644	4.9
	재정운영결과		6,870,165	6,541,792	328,373	5.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은 3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와 3개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흐름도]

(단위 : 억원)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모두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총 210개 세부사업에서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의 경우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과정의 지연 및 사용기간·사업기간의 혼선 등으로 인해 수출바우처 정산이 지연되고 있고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중 서비스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둘째,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은 사업연도 중에 사업내용·선정방식 및 사업시기가 변경되어, 연말에서야 변경된 어워즈 행사가 개최되는 등 사업계획 및 집행이 부적정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은 금리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다소 임의적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향후 유통업 관련 미정산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정 산식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정책자금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불용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없이 업무매뉴얼 공유만으로 사업추진의 근거를 삼았는 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 및 협업체계를 면밀히 준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당초 국회 심의와 달리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고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과도하게 발행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사용 문제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환 과정에서 다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연구개발(R&D) 사업: 기한 내 연구과제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일반회계(16개 사업, 1조 2,043억 1,600만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6개 사업, 690억 7,7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9개 사업, 1,186억 2,8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1개 사업, 11억 9,900만원) 등 3개 회계 및 1개 기금의 총 32개 사업에 1조 3,93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수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계획액)
		예산액(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A)							
일반회계	16	1,204,316	1,204,316	-	-	1,204,316	1,204,316	-	-	1,342,565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6	69,077	69,077	-	-	69,077	69,077	-	-	35,7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	118,628	118,628	-	-	118,628	118,628	-	-	115,46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	1,199	1,199	-	-	1,199	1,199	-	-	- (24년 종료)
계	32	1,393,220	1,393,220	-	-	1,393,220	1,393,220	-	-	1,493,74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는 32개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1만 706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직전년도 대비 사업수는 15개, 과제수는 1,496개 감소한 것임. 2024년의 경우 2023년 대비 연구개발 과제 수는 12.3%, 예산액은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24년 범 정부적인 연구개발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사업 및 과제 현황]

(단위: 개, 건, 백만원)

구분	사업 수	과제 수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0년	38	10,698	1,483,456	1,483,456	-	-
2021년	42	10,718	1,722,922	1,722,922	-	-
2022년	51	12,764	1,788,814	1,788,814	-	-
2023년	47	12,202	1,770,056	1,770,030	-	26
2024년	32	10,706	1,393,220	1,393,220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을 독려하고,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결과통보를 법정기한 내 처리하도록 하는 등 R&D 과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과 주관연구개발기관[3] 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는 방식으로 진행됨.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전문기관이 해당 사용실적의 사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최종 정산이 확정되면 그 집행잔액을 국고로 회수함으로써 정산 절차가 완료됨.[4)]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기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약기간 종료일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정산 절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이의신청**	**정산확정**	**납부안내**	**납부확인 및 입금처리**	**국고납입**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부처)
협약 종료 후 90일 이내		정산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	납부기한: 정산확정 통보 후 30일 이내	납부독촉	

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관리지침)를 기초로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 검토해야만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R&D 과제의 실제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정산 이의신청 및 전문기관의 정산 검토 지연 등으로 인해 R&D 과제의 정산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먼저 연구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세부사업에서 수행된 2024년 종료 연구과제의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지연 제출된 사례(118건)가 있었음.

[2024년 종료과제 중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지연·미제출 현황]

(단위: 개, 건, %, 2024.12.31. 기준)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코드)	과제수 (A)	보고서 제출				기타
		기한 내 제출(B)	지연 (C)	미제출 (D)	지연, 미제출 비율((C+D)/A)	
공정품질기술개발(R&D) (2134-305)	368	331	7	-	1.90	30
산학연CollaboR&D(R&D) (2151-302)	105	99	1	-	0.95	5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R&D) (2151-309)	179	170	1	-	0.56	8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R&D (4131-326)	9	8	1	-	11.1	-
중소기업R&D역량제고(R&D) (2134-310)	236	233	1	-	0.42	2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R&D) (2163-307)	18	17	1	-	5.5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2134-302)	789	701	25		3.17	6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특)(R&D) (2134-302)	150	120	2		1.33	28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2134-303)	557	490	8		1.44	59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특)(R&D) (2134-303)	76	67	2	-	2.63	7
창업성장기술개발(R&D) (2134-309)	1,769	1685	56	-	3.17	28
지역특화산업육성+(R&D) (3336-304)	491	484	4	-	0.81	3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3339-305)	19	10	9	-	47.4	-
R&D 사업 전체	5,103	4,725	118	-	2.3	260

주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지연 또는 미제출이 있는 세부사업에 한정하여 도표에 작성함
2) 기타분류는 문제과제, 감액중단과제, 후불형 과제 등으로,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관리에서 제외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에는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정산이 진행되는데,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 결과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5]. 사용실적보고서의 정산 검토는 협약기간 종료일 6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함.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종료과제의 정산결과 통보기간을 살펴보면, 4,843건의 R&D 종료과제 중 1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 바와 달리 180일을 초과하여 정산결과를 통보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전담하는 19개 과제는 2025년 6월 말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인 상황임.[6]

[2024년 R&D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결과 통보 기간]

(단위: 건, 일, 2025.6.30. 기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정산결과통보일까지 기간	60일 이내	61~120일	121~180일	180일 초과	기한 미도래	정산 진행중 (KIAT)	소계
과제건수	673	3,242	893	12	4	19	4,843

주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현황에서 보고서제출 기한내 제출과제 4,725개 및 지연제출 과제 118개를 합한 4,843개 과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미포함 260개 과제는 문제과제, 감액중단과제, 후불형 과제 등임

2) 기한 미도래 과제 4건은 개발기간이 2025년으로 연장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산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기간을 살펴보면, 241건의 R&D 과제 이의신청 중 9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한 바와 달리 30일을 초과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원 등이 연구개발 관련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7]

---

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는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결과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산통보기한 초과 사유로 연구개발비 정산 진행 과정 중 연구개발기관의 비협조(사용실적 보고서 지연 제출, 연락 두절, 담당자의 이직·퇴사 등) 및 RCMS와 IRIS 시스템 간 연계 오류 등으로 기인하였다고 설명함.

7)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신청기간 초과 사유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담당자의 이직·퇴사, 해외출장 등으

[정산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기간]

(단위: 건, 일)

정산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소계
이의신청 건수	232	9	24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살펴보면, 241건의 R&D 과제 이의신청 중 26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바와 달리 30일을 초과하여 정산결과를 통보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원 등이 연구개발 관련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8)]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

(단위: 건, 일)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	30일 이내	30일 초과	소계
이의신청 건수	215	26	24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기관의 사용실적보고서의 적기 제출, 전문기관의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검토가 적기에 이루어져 정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R&D사업 종료과제의 정산 후 연구개발비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부정행위 등에 따른 연구개발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정산 후 미수납액 관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9)]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10)]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로 인해 이의신청 필요 자료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함.

8)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기간 초과 사유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담당자의 이직·퇴사 및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연기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함.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도 2024년 종료과제 5,261건 중 33건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

또한 정산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에도, 2020년도 종료과제 12억 1,300만원, 2021년도 종료과제 21억 4,700만원, 2022년도 종료과제 71억 5,100만원, 2023년 종료과제 100억 2,200만원, 2024년 종료과제 116억 5,800만원이 아직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25.6.30. 기준)

과제 종료연도	종료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국고반납 대상액	국고 반납액	국고 미반납액
2020년	4,077	-	4,077	6,161	4,948	1,213
2021년	3,724	-	3,724	14,233	12,086	2,147
2022년	5,186	-	5,186	16,952	9,801	7,151
2023년	5,608	2	5,606	19,895	9,873	10,022
2024년	5,103	33*	5,070	18,957	7,299	11,658

주) 정산진행 중인 과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개로 총 33개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성격인 연구개발비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역시 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이 미진한 상황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11]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 등에 대

10)「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③ 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제3항의 불인정 금액 및 다음 각 호에 대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 분담금 포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단, 지자체 분담금 회수절차는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

한 제재처분 시 제재부가금 및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4년 연구개발환수금 결정액 28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연도 발생분 수납액은 1억 7,100만원에 불과함. 2020~2024년까지 연구개발환수금 총 결정액은 306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까지 총 수납액은 164억 4,600만원이었으며, 2020~2024년까지 누적 미수납액은 142억 2,200만원임.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미수납액은 140억 6,700만원에 달함.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환수금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2025.6.30. 기준)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계
연도별 환수 결정액(a)		9,848	9,652	4,257	4,109	2,802	377	31,045
연도별 환수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2020	3,126 (31.7)	[해당 없음]					3,126
	2021	4,630 (47.0)	3,991 (41.3)					8,621
	2022	5,530 (56.2)	4,762 (49.3)	1,999 (47.0)				12,291
	2023	5,766 (58.5)	5,271 (54.6)	2,146 (50.4)	1,124 (27.4)			14,307
	2024 (b)	5,904 (60.0)	5,576 (57.8)	2,352 (55.3)	2,443 (59.5)	171 (6.1)		16,446
	2025.6.(c)	5,915 (60.1)	5,624 (58.3)	2,495 (58.6)	2,470 (60.1)	417 (14.9)	57 (15.1)	16,978
2024년 기준 미수납 총액 (d) = (a)-(b)		3,944	4,076	1,905	1,666	2,631	-	14,222
2025.6월 기준 미수납 총액 (e) = (a)-(c)		3,933	4,028	1,762	1,639	2,385	320	14,067

주)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2024년 제재부가금 결정액 126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연도 발생분 수납액은 3억 1,900만원에 불과함. 2020~2024년까지 제재부가금 총 결정액은 259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까지 총 수납액은 26억 8,800만원이었으며, 2020~2024년까지 누적 미수납액은 232억 3,200만원임.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미수납액은 324억 8,300만원에 달함.

[제재처분에 따라 부과한 제재부가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2025.6.30. 기준)

연도		2020	2021	2022	2022	2023	2024	2025.6.	계
적용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a)		132	65	196	967	11,930	12,630	11,535	37,455
연도별 제재부가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2020	66 (50.0)	[해당 없음]						66
	2021	71 (53.8)	17 (26.2)						88
	2022	71 (53.8)	64 (98.5)	0 (0.0)	0 (0.0)				135
	2023	71 (53.8)	64 (98.5)	0 (0.0)	162 (16.8)	391 (3.3)			688
	2024 (b)	71 (53.8)	64 (98.5)	0 (0.0)	162 (16.8)	2,072 (17.4)	319 (2.5)		2,688
	2025.6.(c)	71 (53.8)	64 (98.5)	0 (0.0)	162 (16.8)	2,634 (22.1)	1,576 (12.5)	465 (4.0)	4,972
2024년 기준 미수납 총액 (d) = (a)-(b)		61	1	196	805	9,858	12,311	-	23,232
2025.6월 기준 미수납 총액 (e) = (a)-(c)		61	1	196	805	9,296	11,054	11,070	32,483

주 1)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함
2)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적용 과제에 부과된 2019~2022년 제재부가금의 경우 직접 수납·징수하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후 적용 과제에 대한 2022년 제재부가금부터는 주관·참여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하면, 해당 납부액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납·징수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술정보원의 연구개발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수납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하고 있으나, 향후 중소벤처기술정보원의 수납액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징수결정액을 계상하여 R&D 전문기관 단계에서 미수납된 금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환수금은 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변경의 여지가 크고 확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해 징수결정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12)]

그러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재무상태표 작성 시 발생주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연구개발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역시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징수결정액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연구개발환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이 일차적으로 전문기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처가 위임·위탁한 사항으로서 종국적으로 소관 부처가 관리책임을 지게 되므로, 소관 부처 단위에서 징수결정액을 곧바로 계상하는 것이 연구개발(R&D) 출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차원에서도 적절함.

참고로 부처가 직접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처분인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잦으나,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수납된 금액이 아니라 부과처분된 금액에 대해 징수결정을 하고 불복과정에서는 이를 미수납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환수금 역시 금전적 제재처분인 과징금 및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부과처분액 전부를 징수결정액으로 계상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 수납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 출〉

2. 수출지원기반활용: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및 서비스 미공급 수행기관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18억 6,000만원 중 1,118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고,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4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출지원기반활용	111,860	111,860	-	-	111,860	111,838	-	22	217,36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평가·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14)]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음.[15)]

선발된 참여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지급하는데,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부여하고 참여기업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임. 전년도 수출액 및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대상별 지원한도(3,000만원~1억원)와 지원비율(50~70%)은 상이하게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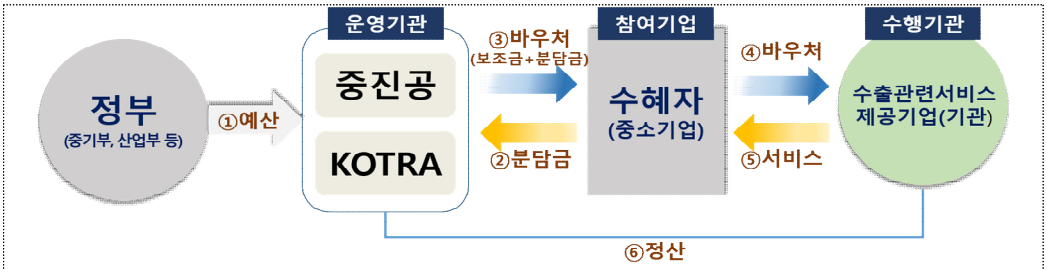
---

13) 일반회계-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글로벌성장정책관)

14)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

15)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업무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을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프로세스(참여기업 기준) 〉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서비스거래	바우처정산
홈페이지 접 수 수출바우처.com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참여기업-운영기관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계약 ·수행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정산 대금 지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과정의 지연 및 사용기간·사업기간의 혼선 등으로 인해 수출바우처 보조사업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참여기업 선정기간을 앞당기고 바우처 사용기한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보조금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정공고일이 늦고 참여기업 신청 접수 후 선정기간이 길어 사업기간 종료일 역시 늦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참여기업 신청공고를 1차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 2차의 경우 2024년 5월 13일에 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보다 1달 늦게 공고하여 1차는 2024년 1월 23일, 2차는 2024년 6월 17일에 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참여기업 신청공고 시부터 선정일까지 1차 70일, 2차 36일이 소요되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1차 87일, 2차 75일이 소요되고 있음.

[2024년 중기부·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비교]

	중기부(중진공) 수출바우처	산업부(코트라) 수출바우처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지원규모	1,116억 9,200만원, 2,964개사	310억 8,000만원, 444개사
공고시점	(1차) 2024.1.23. (2차) 2024.6.17.	(1차) 2023.12.22. (2차) 2024.5.13.
선정시점	(1차) 2024.4.29. (공고일+87일) (2차) 2024.8.30. (공고일+75일)	(1차) 2024.2.29. (공고일+70일) (2차) 2024.6.17. (공고일+36일)
바우처 사업기간	(1차) 2024.4.1.~2025.2.28.(11개월) (2차) 2024.7.1.~2025.3.31.(9개월)	(1차·2차) 2024.2.1.~2025.1.31.(12개월)

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과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보다 유사한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간을 선정일 이전 1~2달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 및 국고보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칫 수출 관련서비스에 대해 전액 자부담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선정공고 전 바우처 사용을 꺼리게 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례를 참고하여 수출바우처 공고일을 최대한 앞당기고 선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참여기업 선정 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2~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사업추진 일정]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모집 공고	21.12.27.	22.4.25.	23.1.27.	23.5.10.	24.1.23.	24.6.17.	24.12.30.	25.4.10.
신청기간	21.12.27. ~22.1.12.	22.4.25. ~22.5.10.	23.1.16. ~23.2.2.	23.7.1. ~24.3.31.	24.1.23. ~24.2.13.	24.6.17. ~24.7.4.	25.1.7. ~25.1.23.	25.4.10. ~25.4.21.
선정일	22.3.18.	22.6.30.	23.3.31.	23.6.30.	24.4.29.	24.8.30.	25.4.14.	25.5.21. (예정)
바우처 사용기간	22.3.1. ~22.12.31. (10개월)	22.7.1. ~23.2.28. (8개월)	23.4.1. ~23.12.31. (9개월)	23.7.1. ~24.1.31. (7개월)	24.4.1. ~24.12.31. (9개월)	24.7.1. ~25.1.31. (7개월)	25.3.1. ~25.11.30. (9개월)	25.4.1. ~25.12.31. (9개월)
사업기간	22.1.1. ~23.2.28. (12개월)	22.7.1. ~23.4.30. (10개월)	23.4.1 ~24.2.29. (11개월)	23.7.1. ~24.3.31. (9개월)	24.4.1. ~25.2.28. (11개월)	24.7.1. ~25.3.31. (9개월)	25.3.1. ~26.1.31. (11개월)	25.4.1. ~26.2.28. (11개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참여기업 수행완료 확인기한	22.12.31	23.2.28	23.12.31	24.1.31	24.12.31	25.1.31	25.11.30	26.2.28
수행기관 정산요청 기한	22.12.31	23.2.28	23.12.31	24.1.31	24.12.31	25.1.31	25.11.30	26.2.28
중기부 정산기간	22.3.1~23.8.4		24.4.1~24.7.18		정산진행중		-	-
사업완료일	2023.9.13		2024.08.27		사업진행중		-	-
결과보고서 제출일 (중진공→ 중기부)	2023.09.13		2024.08.27		-		-	-
정산후 반납일 (중진공→ 중기부)	2023.09.15		2024.08.29		-		-	-

주 1) 각 연도 1차, 2차는 일반바우처 기준임
2) 2024년도 사업은 2025년 3월 사업기간 종료 이후 2025년 7월 말 현재 정산이 진행 중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수출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기간을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인지하여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우처 사용기간 보장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해 가급적 사업기간 내에 기업이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로 인해 사업기간 종료 후 실제 사업비 정산까지 3~4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음. 2022~2023년도 사업의 경우 각각 이듬해 9월 중순, 8월 하순에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2024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 7월 말 현재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공고를 조속히 앞당기고 참여기업 선정기간을 단축하여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보조금 수혜여부를 조속히 확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여기업 공고 시에 바우처 사용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사용기한 도래 후 신속히 정산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16)]

1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조기공고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 중으로, 참여기업의 바우처 사용기간을 보장하면서도 이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임.

둘째,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중 서비스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서비스 미제공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2,770개사 중 1,540개사(55.6%)는 2024년 1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없고, 그 중 775개사(28.0%)는 2022~2024년 3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수행기관 등록 후 서비스 수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현황

(단위: 개사, 건)

구분	2024년 서비스 수행기관 수	서비스 제공 건수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	
		2024년	2022~2024년	2024년	2022~2024년
국제 운송	289	1,015	3,629	179	125
디자인개발	536	1,948	9,258	283	5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79	106	253	55	35
브랜드개발/관리	70	229	616	44	26
서류대행/현지등록	84	171	523	60	43
역량강화 교육	50	278	808	28	14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43	811	2,336	146	108
조사/일반 컨설팅	274	836	2,258	168	114
통번역	59	681	2,209	13	-
특허/지재권	368	2,252	6,327	140	57
해외규격인증	87	629	1,716	30	9
홍보/광고	312	861	3,177	212	116
홍보동영상	319	593	2,061	182	69
사후정산	-	6,608	15,973	-	
합 계	2,770	17,018	51,144	1,540	77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부처의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수출바우처 수행업체 2,770개사 중 1,125개사(40.6%)는 2024년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제공실적이 없고, 504개사(18.2%)는 2022~2024년 3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록 후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참여기업으로부터 선호가 낮아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간 서비스 미제공 수행업체의 경우에는 수출바우처 업체 등록을 취소

하는 등 관리부담을 낮추고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개사)

구분	2024년 서비스 수행기관 수	2024년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			2022~2024년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		
		산자부 사업	중기부 사업	모두 미제공	산자부 사업	중기부 사업	모두 미제공
국제 운송	289	189	179	125	104	125	59
디자인개발	536	347	283	215	248	59	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79	52	55	29	50	35	27
브랜드개발/관리	70	57	44	41	50	26	24
서류대행/현지등록	84	62	60	43	48	43	22
역량강화 교육	50	32	28	23	26	14	12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43	173	146	114	148	108	87
조사/일반 컨설팅	274	211	168	138	189	114	86
통번역	59	26	13	8	17	0	0
특허/지재권	368	215	140	83	192	57	42
해외규격인증	87	44	30	21	25	9	4
홍보/광고	312	247	212	171	219	116	98
홍보동영상	319	192	182	114	146	69	34
사후정산	-	-	-	-	-	-	-
합 계	2,770	1,847	1,540	1,125	1,462	775	504

주 1) 2024년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는 ① (산자부) 2024년 수출바우처(산자부) 사업에 서비스를 한차례도 제공하지 않은 수행기관 수, ② (중기부) 2024년 수출바우처(중기부) 사업에 서비스를 한차례도 제공하지 않은 수행기관 수, ③ (소계) 2024년 수출바우처(산자부) 또는 수출바우처(중기부) 사업 중 아무 곳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수행기관 수(즉, ③은 ①과 ②의 교집합이므로 수가 더 적음)

2) 2022~2024년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는 2022~2024년 3년간 한 차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수행기관 수를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데이터셋 등록·이용·거래 부진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제조분야 디지털전환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 및 제조데이터 거래·유통 등 AI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9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7)]

이 중 ‘데이터인프라구축’ 내역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AI 분석 기반 제조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제조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0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고, ‘데이터 거래지원’ 내역사업은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구매·거래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9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데이터인프라구축 (정보화)	6,900	6,900	-	-	6,900	6,900	-	-	5,836
데이터 인프라 구축	4,000	4,000	-	-	4,000	4,000	-	-	3,186
데이터 거래지원	2,900	2,900	-	-	2,900	2,900	-	-	2,6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스마트공장 지원 과제로부터 제조 데이터셋 수집이 지연되고 있고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AI

17) 일반회계-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2111-305)(지역기업정책관)

도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셋 수집·가공에 만전을 기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제조 데이터셋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제조 AI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에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도입을 지원하고, 지원 과정에서 제조·생산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업의 경우 수집대상 과제에 대해 데이터셋을 가공·등록한 바 없고,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업종 특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 내용에 반영되어 경기도 자동차 업종 특화 데이터셋 30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컨소시엄이 이를 경기 지역특화 플랫폼에 먼저 구축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KAMP 플랫폼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황임.

[연도별 데이터셋 수집대상 과제 현황]

(2025.6.30.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집대상 과제건수	등록건수 (~25.6.)	수집대상 과제건수	등록건수 (~25.6.)	수집대상 과제건수	등록건수 (~25.6.)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정부일반형	-	-	27개	-	40개	-
	자율형공장	-	-	-	-	-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25개	40개	25개	40개	25개	-
공급 얼라이언스		-	-	30개	-	30개	-
AI 실증		100개	100개	-	-	-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	-	15개	-	-	-
합계		100개	140개	97개	40개	95개	-
누계		100개	140개	197개	180개	307개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데이터 거래지원 내역사업 중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사업은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AI 분석 목적으로 가공하는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지원하는 것이고, 제조데이터 상품구매 지원은 제조현장 및 솔루션 공급기업의 제조데이터 상품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두 사업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신청 기업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상품구매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사, 건)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데이터 상품가공	예산	1,250	1,250	1,250	1,250
	신청 기업수	34	26	51	26
	데이터셋 가공건수	25	40	25	47
데이터 상품구매	예산	500	500	250	250
	신청 기업수	66	35	37	31
	데이터셋 구매건수	50	53	25	34

주) 1건의 신청에 대해 여러 형태의 데이터셋이 가공되거나 구매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제조데이터플랫폼(KAMP) 내 데이터셋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무료 제조AI 데이터셋과 실증 제조AI 데이터셋은 등록되지 않았고 유료 제조AI 데이터셋이 52건 신규 등록되었음. 2025년 6월 말 기준 KAMP 내 데이터셋은 총 287개로, 무료 데이터셋 50건, 유료 제조데이터셋 137건, 실증 제조AI 데이터셋 100건이 등록됨.

[KAMP 내 제조AI 데이터셋 등록 현황]

(단위: 건, 2025.6.30. 기준)

구분		무료 제조AI 데이터셋 등록건수(누계)			유료 제조AI 데이터셋 등록건수(누계)			실증 제조AI 데이터셋 등록건수			합계 (2025.6.)
		2023	2024	2025.6.	2023	2024	2025.6.	2023	2024	2025.6.	
기계부품		1(+1)	1(-)	1(-)	0(-)	5(+5)	12(+7)	0(-)	0(-)	22(+22)	35
전자부품		3(+3)	3(-)	3(-)	0(-)	1(+1)	2(+1)	0(-)	0(-)	7(+7)	12
인쇄회로		0(-)	0(-)	0(-)	0(-)	0(-)	0(-)	0(-)	0(-)	2(+2)	2
제약		0(-)	0(-)	0(-)	0(-)	1(+1)	1(-)	0(-)	0(-)	3(+3)	4
화학		0(-)	0(-)	0(-)	13(+13)	21(+8)	21(-)	0(-)	0(-)	6(+6)	27
화장품		1(+1)	1(-)	1(-)	1(+1)	1(-)	1(-)	0(-)	0(-)	1(+1)	3
의류		2(+2)	2(-)	2(-)	0(-)	2(+2)	2(-)	0(-)	0(-)	1(+1)	5
식품가공		5(+5)	5(-)	5(-)	2(+2)	13(+11)	14(+1)	0(-)	0(-)	9(+9)	28
뿌리업종	주조	3(+3)	3(-)	3(-)	1(+1)	4(+3)	21(+17)	0(-)	0(-)	5(+5)	29
	금형	0(-)	0(-)	0(-)	2(+2)	2(-)	4(+2)	0(-)	0(-)	4(+4)	8
	소성가공	4(+4)	4(-)	4(-)	2(+2)	7(+5)	7(-)	0(-)	0(-)	0(-)	11
	용접	5(+5)	5(-)	5(-)	2(+2)	3(+1)	3(-)	0(-)	0(-)	4(+4)	12
	표면처리	7(+7)	7(-)	7(-)	7(+7)	9(+2)	9(-)	0(-)	0(-)	5(+5)	21
	열처리	4(+4)	4(-)	4(-)	1(+1)	1(-)	1(-)	0(-)	0(-)	5(+5)	10
	정밀가공	4(+4)	4(-)	4(-)	3(+3)	9(+6)	10(+1)	0(-)	0(-)	11(+11)	25
	사출성형	5(+5)	5(-)	5(-)	10(+10)	11(+1)	16(+5)	0(-)	0(-)	13(+13)	34
기타		6(+6)	6(-)	6(-)	3(+3)	9(+6)	13(+4)	0(-)	0(-)	2(+2)	21
합계		50(+50)	50(-)	50(-)	47(+47)	99(+52)	137(+38)	0(-)	0(-)	100(+100)	287

주) 괄호 안은 당해연도에 신규 등록된 데이터셋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KAMP 내 제조AI 데이터셋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이후 신규 등록이 없었던 무료 제조AI 데이터셋이 주로 이용(다운로드)되었고, 유료 제조AI 데이터셋이나 실증 제조AI 데이터셋의 경우 이용(다운로드) 횟수가 미미한 상황임.

제조업 AI 전환(AX) 추진은 인공지능을 제조·생산현장에 접목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18] 제조 AI 전환(AX)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인 제조 데이터셋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제조AI 데이터셋을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 거래시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임.

18)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AI 대전환(AX),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 2025.7.16.

[KAMP 내 제조AI 데이터셋 이용 현황]

(단위: 건, 2025.6.30. 기준)

구분		무료 제조AI 데이터셋 이용건수(다운로드)			유료 제조AI 데이터셋 이용건수(다운로드)			실증 제조AI 데이터셋 이용건수(다운로드)			합계
		2023	2024	2025.6.	2023	2024	2025.6.	2023	2024	2025.6.	
기계부품		148	358	196	0	12	0	-	-	149	863
전자부품		501	1,357	595	0	0	0	-	-	51	2,504
인쇄회로		-	-	-	0	0	0	-	-	2	2
제약		-	-	-	0	0	0	-	-	5	5
화학		-	-	-	4	27	6	-	-	6	43
화장품		169	422	245	2	0	0	-	-	3	841
의류		340	795	435	0	0	0	-	-	8	1,578
식품가공		3,092	2,337	989	4	7	1	-	-	77	6,507
뿌리업종	주조	434	1,466	629	1	1	0	-	-	15	2,546
	금형	-	-	-	2	0	0	-	-	13	15
	소성가공	1,163	1,420	684	1	0	0	-	-	-	3,268
	용접	1,803	2,044	931	2	10	0	-	-	20	4,810
	표면처리	3,766	2,818	1,601	6	26	10	-	-	28	8,255
	열처리	1,415	1,376	725	1	2	0	-	-	13	3,532
	정밀가공	3,265	2,788	1,261	3	3	0	-	-	67	7,387
	사출성형	3,308	2,845	1,481	11	17	2	-	-	49	7,713
기타		4,861	3,496	1,633	3	4	0	-	-	5	10,002
합계		24,265	23,522	11,405	40	109	19	-	-	511	59,8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등 제조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지원 과제를 기반으로 KAMP 내 제조AI 데이터셋을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제조 AI 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자 수요가 많은 무료 제조AI 데이터셋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AI 분석 기반 제조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연도마다 고품질의 제조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19] 지역특화 제조데이터가 한번 가공되면 사업연도마다 KAMP에 등록되어 고품질의 제조데이터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9) 참고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은 2025년 3개 컨소시엄에 대해 국비 6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2024년 대비 3배 규모로 사업이 확대된 바 있음.

또한 제조AI 데이터셋의 무료 제공 등을 통해 제조 AI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제조데이터 가공 시에도 데이터전문가가 컨설팅하도록 하고, 제조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제조데이터 가공·구매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등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 AI 도입 활성화에 필수적인 데이터셋 수집·가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제조 데이터셋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제조 AI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판로진출지원 사업: 연도 중 임의적 사업내용 변경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후 변경·승인 부적정

가. 개 요

‘판로진출지원’ 내역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민간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운영하며, 판로지원플랫폼 운영 및 공동브랜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5억 7,000만원 중 164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4년도 판로진출지원 내역사업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마케팅지원사업	26,677	26,677	-	-	26,677	26,568	-	109	21,827
판로진출지원	16,570	16,570	-	-	16,570	16,461	-	109	12,56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중 ‘공동브랜드 지원’ 내내역사업은 민간 유통사와 협업하여 민간 중심의 우수기업 선정행사(어워즈)를 개최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동 사업 예산으로 13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은 사업연도 중에 사업내용, 선정방식 및 사업시기를 변경하여 연말에서야 어워즈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업계획 및 집행이 부적정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과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당초 2024년 공동브랜드 지원사업 계획은 3개(뷰티·푸드·가전) 분야 B2C 소비재 수출기업 중 민간 협업기업이 최종적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하여 2024년 6~7월 ‘브랜드 K 어워즈’를 개최하며, 이후 연말까지 연계지원을 수행할 계획이었음.[21)]

---

20) 일반회계-마케팅지원사업(4835-305)(글로벌성장정책관)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5월 유통 대기업·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K-전략품목을 선정·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10월 10일 변경된 내용의 ‘K-전략품목 어워즈’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게시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공동브랜드(브랜드K) 사업 추진 시 뷰티·푸드·가전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대형 유통사 3사가 협업하여 공개·추천 2개 방식을 병행하여 6~7월 내 행사를 개최 후 연말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K-전략품목 어워즈 사업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가전 분야 및 해당 대형 유통사 1개사를 제외하고 공개 방식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장관 주재로 12월 12일 행사를 개최하였고, 동 사업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 공동브랜드 사업 변경 내역]

구분	기존 계획	변경 계획
사업 내용	공동브랜드 지원(브랜드K)	K-전략품목 지원
모집 선정	- (분야) 뷰티, 푸드, 가전 3개 분야 - (방식) 공개·추천 Two-Track 모집 - (협업) 분야별 대형 유통사 협업 ① 뷰티 - 신00 ② 푸드 - 이00 ③ 가전 - 하00	- (분야) 뷰티, 푸드 2개 분야 - (방식) 공개 모집 - (협업) 분야별 대형 유통사 협업 ① 뷰티 - 신00 ② 푸드 - 이00
어워즈	- (명칭) 2024 브랜드K 어워즈 - (시기) 6~7월 - (내용) ① B2C행사, ② 현장평가, ③ 브랜드K 시상	- (명칭) 2024 K-전략품목 어워즈 - (시기) 12월 - (내용) ① 시상식, ② B2C행사
연계 지원	- (홍보마케팅) 인플루언서 홍보,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굿즈 배포 등 참여이벤트 - (판로지원) 타이틀 권한, 협업기업 연계, 해외전시상담회, 한류마케팅, 수출지원 사업 연계 등	좌동
관리	- (상표관리) 전문 특허법인 위촉을 통한 국내외 상표권 지속 관리 - (기업관리) 사업 개편에 따라 기존 브랜드K 기업은 인증기간 만료시까지 효력 유지	좌동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편 사유로,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은 독자적 브랜드 파워가 약해 저평가된 우수기업에 ‘브랜드 K’라는 국가 인증 브랜드를 부여하여 글로벌

2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해외진출시장진출사업 내 ‘브랜드 K 육성관리’ 사업을 2024년 마케팅지원사업의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 소관 및 사업명을 변경하였음.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브랜드 K 소비자 인지도 및 로고 활용도가 저조하여 한계가 있었으므로 대기업이 직접 선정한 우수기업 제품 명칭인 ‘K-전략품목 어워즈’를 기존 ‘브랜드 K’ 상표와 함께 지원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브랜드 K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로고 활용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22] 종전의 ‘브랜드 K 어워즈’ 대비 ‘K-전략품목 어워즈’라는 수상명칭이 선정기업의 인지도 제고 등의 효과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고, 기존 브랜드 K가 2019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제품선정 및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는 계획변경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당초 계획은 6~7월 우수기업 선정 후 연말까지 선정기업 홍보지원, 협업기간 연계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수기업 선정이 12월 중순으로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기간이 다음 연도 3월까지 연장되어 예산 이월로 인해 단년도 회계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연계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어 연계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변경·승인하여, 변경된 세부사업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사업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舊 중소기업유통센터)은 2024 K-전략품목 어워즈가 12월 12일 개최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19일에서야 동 사업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변경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3일 세부추진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23]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0월 사업내용 변경을 전제로 한 참여기업 모집

22)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브랜드 K 인지도 조사결과 소비자 중 46.6%만 브랜드 K를 알고 있었고, 브랜드 K 활용도 조사 결과 제품 포장에 브랜드 K 상표를 활용한 기업은 24%에 불과하였음.

2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공고를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추진계획 변경 승인이나 보조사업자의 수행상황 점검 등이 누락·지연된 것임.

동 사업계획 변경은 적어도 2024년 10월 변경된 내용으로 모집공고가 게시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이 완료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했으나,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미흡한 사업관리 행태가 드러난 것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24]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기관과 수시로 공유하며 협의하였으나 실무적으로 최종 사업 세부추진계획 변경 절차를 늦게 진행하였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입장임.

5. 공공구매제도운영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부진

가. 개 요

‘공공구매제도운영’ 사업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보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7억 2,200만원 중 57억 400만원이 집행(99.7%)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4년도 공공구매제도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공구매제도운영	5,722	5,722	-	-	5,722	5,704	-	18	5,70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공공기관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을 제시하고,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26].

공공기관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 이외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하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2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28] 「

25) 일반회계-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글로벌성장정책관)

2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8)「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29]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각각의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여야 함.[30]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목표치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제도운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자체수립한 공공구매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제도운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법정 목표를 상회하는 구매목표치를 매년 제시하고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치 대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9)「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3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52억원이고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66.6%으로 목표치 74.9%에 미달하였음. 그 외에도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은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치 대비 미달한 상황임.

[202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2023년			2024년		
		총구매액 (A)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총구매액 (A)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35,999	26,932	74.8	33,338	24,981	74.9
	실적치	30,319	23,958	79.0	**22,836**	**15,200**	**66.6**
기술보증기금	목표치	15,556	12,444	80.0	15,200	13,500	88.8
	실적치	15,117	13,420	88.8	**19,870**	**15,583**	**78.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표치	57,280	45,900	80.1	90,379	63,181	69.9
	실적치	**90,785**	**63,178**	**69.6**	107,728	95,585	88.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목표치	86,078	68,891	80.0	96,784	76,962	79.5
	실적치	**96,784**	**76,962**	**79.5**	75,646	61,350	81.1
㈜공영홈쇼핑	목표치	10,927	5,471	50.1	11,602	5,813	50.1
	실적치	11,602	9,151	78.9	12,053	9,035	75.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목표치	33,681	16,841	50.0	18,684	9,529	51.0
	실적치	28,883	25,898	89.7	12,813	12,615	98.5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목표치	4,960	2,480	50.0	3,900	3,330	85.4
	실적치	7,522	7,140	94.9	4,328	4,198	97.0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목표치	26,534	21,861	82.4	21,881	18,094	82.7
	실적치	21,665	17,915	82.7	**19,332**	**15,127**	**78.3**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목표치	51,125	37,675	73.7	50,000	36,499	73.0
	실적치	**52,283**	**37,886**	**72.5**	**39,590**	**26,974**	**68.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목표치	7,800	5,927	76.0	6,800	5,305	78.0
	실적치	6,711	5,323	79.3	**4,559**	**2,329**	**51.1**
창업진흥원	목표치	25,266	20,971	83.0	23,622	20,079	85.0
	실적치	23,128	19,921	86.1	**23,656**	**19,768**	**83.6**
한국벤처투자	목표치	4,977	3,027	60.8	4,983	3,028	60.8
	실적치	7,381	6,590	89.3	7,019	6,405	91.3

주)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낮은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7억 2,400만원이고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15.9%로 목표치 19.2%에 미달하였음. 그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치 대비 미달한 상황임.

[202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2023년			2024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A)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A)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13,310	4,445	33.4	11,766	2,258	19.2
	실적치	**7,030**	**1,198**	**17.0**	**4,544**	**724**	**15.9**
기술보증기금	목표치	4,736	756	16.0	5,050	980	19.4
	실적치	4,942	954	19.3	4,988	1,256	2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표치	5,250	1,142	21.8	3,972	2,144	54.0
	실적치	3,969	2,128	53.6	**3,654**	**875**	**24.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목표치	8,690	2,465	28.4	8,085	1,680	20.8
	실적치	8,085	1,726	21.3	7,546	2,134	28.3
㈜공영홈쇼핑	목표치	643	97	15.1	407	61	15.1
	실적치	550	414	75.2	363	101	27.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목표치	6,277	4,042	64.4	5,241	791	15.1
	실적치	**8,818**	**2,828**	**32.1**	2,601	1,702	65.4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목표치	1,190	180	15.1	810	122	15.0
	실적치	**1,581**	**172**	**10.9**	304	96	31.7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목표치	1,581	358	22.6	1,447	601	41.5
	실적치	1,433	595	41.5	797	318	40.0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목표치	1,573	344	21.9	2,396	370	15.4
	실적치	**2,284**	**348**	**15.2**	1,482	371	25.0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목표치	672	102	15.2	670	101	15.1
	실적치	421	73	17.3	**410**	**28**	**6.8**
창업진흥원	목표치	1,786	268	15.0	1,572	236	15.0
	실적치	1,560	402	25.8	1,348	276	20.5
한국벤처투자	목표치	555	132	23.8	556	132	23.8
	실적치	**1,005**	**36**	**3.6**	**1,015**	**122**	**12.0**

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낮은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은 40억 1,400만원이고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17.6%로 목표치 14.7% 이상을 달성하였음. 다만,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경우 2024년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치 대비 미달한 상황임.

[202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2023년			2024년		
		총구매액 (A)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총구매액 (A)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35,999	5,367	14.9	33,338	4,911	14.7
	실적치	**30,319**	**4,176**	**13.8**	22,836	4,014	17.6
기술보증기금	목표치	15,556	748	4.8	15,200	2,371	15.6
	실적치	15,117	2,513	16.6	**19,870**	**2,016**	**1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표치	57,280	4,710	8.2	90,379	22,193	24.6
	실적치	90,785	13,853	15.3	**107,728**	**23,873**	**22.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목표치	86,078	15,236	17.7	96,784	11,544	11.9
	실적치	**96,784**	**11,544**	**11.9**	75,646	9,011	11.9
㈜공영홈쇼핑	목표치	10,927	547	5.0	11,602	592	5.1
	실적치	11,602	830	7.2	12,053	972	8.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목표치	33,681	1,416	4.2	18,684	953	5.1
	실적치	28,883	1,747	6.0	12,813	1,845	14.4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목표치	4,960	257	5.2	3,900	190	4.9
	실적치	7,522	1,517	20.2	4,328	709	16.4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목표치	26,534	2,865	10.8	21,881	2,367	10.8
	실적치	21,665	2,344	10.8	19,332	2,930	15.2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목표치	51,125	4,235	8.3	50,000	7,000	14.0
	실적치	52,283	6,760	12.9	**39,590**	**3,877**	**9.8**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목표치	7,800	445	5.7	6,800	373	5.5
	실적치	6,711	554	8.3	4,559	486	10.7
창업진흥원	목표치	25,266	4,231	16.7	23,622	3,543	15.0
	실적치	23,128	5,467	23.6	23,656	4,492	19.0
한국벤처투자	목표치	4,977	633	12.7	4,983	634	12.7
	실적치	7,381	1,315	17.8	7,019	1,348	19.2

주)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낮은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은 4억 100만원이고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1.8%로 목표치 1.1% 이상을 달성하였음. 다만, 기술보증기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및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경우 2024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치 대비 미달한 상황임.

[202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2023년			2024년		
		총구매액 (A)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총구매액 (A)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35,999	394	1.1	33,338	367	1.1
	실적치	**30,319**	**308**	**1.0**	22,836	401	1.8
기술보증기금	목표치	15,556	312	2.0	15,200	1,216	8.0
	실적치	15,117	1,117	7.4	**19,870**	**629**	**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표치	57,280	1,156	2.0	90,379	1,102	1.2
	실적치	**90,785**	**1,084**	**1.2**	107,728	16,974	15.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목표치	86,078	2,939	3.4	96,784	2,267	2.3
	실적치	96,784	2,267	2.3	75,646	1,641	2.2
㈜공영홈쇼핑	목표치	10,927	114	1.0	11,602	134	1.2
	실적치	11,602	215	1.9	12,053	183	1.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목표치	33,681	338	1.0	18,684	206	1.1
	실적치	28,883	302	1.0	12,813	172	1.3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목표치	4,960	349	7.0	*3,900*	*40*	*1.0*
	실적치	**7,522**	**470**	**6.3**	4,328	310	7.2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목표치	26,534	297	1.1	21,881	279	1.3
	실적치	21,665	277	1.3	19,332	555	2.9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목표치	51,125	816	1.6	50,000	870	1.7
	실적치	**52,283**	**798**	**1.5**	**39,590**	**524**	**1.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목표치	7,800	140	1.8	6,800	75	1.1
	실적치	**6,711**	**66**	**1.0**	**4,559**	**20**	**0.4**
창업진흥원	목표치	25,266	403	1.6	23,622	472	2.0
	실적치	23,128	721	3.1	23,656	950	4.0
한국벤처투자	목표치	4,977	82	1.6	4,983	83	1.7
	실적치	7,381	133	1.8	7,019	134	1.9

주)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낮은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고, 목표치 설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기울임 표시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 2023년 장애인기업 구매목표는 3억 4,900만원, 구매실적은 4억 7,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장애인기업 구매목표는 4,000만원으로 전년도 구매실적의 10%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을 전담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 구매목표가 비합리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임.[31]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33억 3,400만원이고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13.2%로 목표치 10.0% 이상을 달성하였음.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경우 2024년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치 대비 미달한 상황임.

[202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2023년			2024년		
		총구매액 (A)	창업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총구매액 (A)	창업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35,999	3,600	10.0	33,338	3,334	10.0
	실적치	30319	3893	12.8	22,836	3,022	13.2
기술보증기금	목표치	86,078	15,372	17.9	96,784	15,294	15.8
	실적치	**96,784**	**15,293**	**15.8**	75,646	12,306	16.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표치	15,556	1,248	8.0	15,200	1,292	8.5
	실적치	**15,117**	**1,000**	**6.6**	**19,870**	**1,503**	**7.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목표치	57,280	4,736	8.3	90,379	7,524	8.3
	실적치	90,785	8,053	8.9	107,728	21,657	20.1
㈜공영홈쇼핑	목표치	26,534	2,134	8.0	21,881	2,010	9.2
	실적치	21,665	2,004	9.2	19,332	2,038	10.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목표치	25,266	2,021	8.0	23,622	1,890	8.0
	실적치	23,128	2,199	9.5	23,656	2,937	12.4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목표치	7,800	630	8.1	6,800	550	8.1
	실적치	**6,711**	**160**	**2.4**	**4,559**	**130**	**2.9**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목표치	33,681	2,695	8.0	18,684	1,513	8.1
	실적치	**28,883**	**1,736**	**6.0**	12,813	1,428	11.1

31)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구매목표비율을 법정의무구매비율(1%)에 가까운 1.02%로 설정하였고, 이는 2024년 전년 대비 신규구매제품이 감소하여 구매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구매목표를 낮게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향후에는 최근 구매실적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임.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2023년			2024년		
		총구매액 (A)	창업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총구매액 (A)	창업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목표치	4,977	429	8.6	4,983	429	8.6
	실적치	**7,381**	**511**	**6.9**	**7,019**	**315**	**4.5**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목표치	51,125	4,091	8.0	50,000	5,500	11.0
	실적치	52,283	4,525	8.7	39,590	5,262	13.3
창업진흥원	목표치	10,927	875	8.0	11,602	940	8.1
	실적치	11,602	1,053	9.1	12,053	996	8.3
한국벤처투자	목표치	4,960	398	8.0	3,900	307	7.9
	실적치	7,522	914	12.2	4,328	479	11.1

주)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낮은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중소기업제품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제품등의 구매 목표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202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치 준수현황]

기관명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
기술보증기금	○	×	○	○	○	×	○	×	×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	○	×	○	×	×	○	×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	○	○	×	○	○	○	○	○
㈜공영홈쇼핑	○	○	○	○	○	○	○	○	○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	×	○	○	○	○	○	○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	×	○	○	○	×	○	×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	○	○	○	○	○	×	○

기관명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	×	×	○	○	×	×	×	×	×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	×	○	×	○	○	×	×	○	○
창업진흥원	○	×	○	○	○	○	○	○	○	○
한국벤처투자	○	○	×	×	○	○	○	○	○	○

주) ○ 표시는 부처 또는 소속기관이 해당연도의 공공구매제도의 목표비율 이상으로 실제 구매한 경우를 의미하고, × 표시는 목표비율 이하로 실제 구매한 경우를 의미함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공공기관등에게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행하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에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제공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이러한 법률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제도운영을 총괄하면서 타 공공기관등의 구매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관련사항을 공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조차 공공구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타 공공기관등의 공공구매 목표치 달성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제도의 주관 부처로서 공공구매 목표를 솔선수범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글로벌창업허브구축 사업(신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의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글로벌창업허브구축’ 사업은 딥테크 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VC) 등이 집적하여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딥테크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창업 거점으로 서울시 마포구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2)]

[2024년도 글로벌창업허브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글로벌창업허브구축	1,500	1,500	-	-	1,500	1,500	-	-	31,885

주 1) 2025년도 과목구조 개편으로, ① 2024년도 ‘글로벌창업허브구축’(5134-311) 세부사업 명칭이 ‘글로벌 창업생태계촉진’(5134-311)으로 변경되었고, ②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사업의 내역사업인 ’ 글로벌 스타트업육성 ‘이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됨

2)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에서 ‘한국형 스테이션 F’[33)]와 같은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을 목적으로 서울시 마포구 홍대 근처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하여 스타트업 입주공간 및 창업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임.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초 개소 예정인 글로벌창업허브 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벤처기업·VC·AC 등의 입주 및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2) 일반회계-글로벌창업허브구축(5134-311)(창업정책관)

33) 스테이션 F는 프랑스 파리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2017년 설립)로 1,000여개 스타트업에게 입주공간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8월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에서 ‘한국형 스테이션 F’와 같은 글로벌창업허브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KDI 연구용역[34]을 통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2024년 7월 서울 홍대 인근 신축 빌딩을 조성지로 선정하였음,[35]

2024년 동 사업 예산은 설계용역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12월에야 설계사업을 개시하였음.

[글로벌창업허브 구축사업 설계용역 공모 및 추진 개요]

□ 설계공모 추진 개요
◦ (공모명) K-DeepTech Town 실내공간 조성을 위한 지명·제안 설계 공모
◦ (공모방식) 지명·제안 공모
◦ (공모주최) 창업진흥원(발주처)
◦ (공모일정) 2024.11.6. ~12.12.
□ 설계사업 추진 개요
◦ (사업명) K-DeepTech Town 실내공간 조성 설계용역
◦ (계약방법) 공모 후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차목)
◦ (계약기간) 2024.12.23.~2025.6.30.
◦ (계약금액) 8억 8,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당초 추진일정에 비해 입지 선정이 지연(2024.2.→7.)됨에 따라 설계기간(2024.3.~12./10개월→2024.12.~2025.6./6개월), 리모델링 공사(2025.1.~12./12개월→2025.7.~2025.12./6개월) 일정이 조정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축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의 소요기간이 길지 않아 2026년 1월 개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설계용역 결과보고를 기초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추진

34)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방향 수립”, 2024.10.

35) 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는 홍대 인근에 조성됩니다. 중기부는 약 100여 곳의 부지 탐색 후, 전문연구기관(KDI)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권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홍대 권역은 기술 스타트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 수도 1위인 지역으로,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유리합니다. 또한, 지하철역(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기차역(KTX),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높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글로벌 상권을 갖춰, 국내는 물론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최근 테크 중심 경제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기업(앵커기업)과 전문 VC, AC 등 혁신 주체, 그리고 국내외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허브로 유치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딥테크 소사이어티(Deep Tech Society)를 구현합니다. 아울러, K-컨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Entertainment Technology)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올해 말 설계 착수, 2025년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계획 발표”, 2024.7.25.)

하게 되므로, 공사 계약의 조달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개소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36]

[글로벌창업허브 추진일정 변경 내역]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월	3~6월	7월	8~12월	1~6월	7~12월	1월
당초	입지 선정							
	설계							
	리모델링 공사							
	창업허브 개소							
현재	입지 선정							
	설계							
	리모델링 공사							
	창업허브 개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사업은 단순 공간 조성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딥테크 소사이어티'를 구현하기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 VC·AC과의 연계, 대기업 CVC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스타트업 민관협업, 글로벌 VC와의 협업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함.

참고로 다른 창업지원시설과의 전략적인 차별성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사전에 기획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된 바 있음.[37]

2025년 7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창업허브 프로그램(안)은 구성하였으나, 이 사업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프로그램 운영기업인 글로벌 기업, 앵커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

36) 2025년 7월 말 현재, 법정심의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리모델링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공사 발주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함.

37) 다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 활용방안이나 타 사업과 구별되는 운영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보인다. 실리콘밸리나 스타시옹 F와 같은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문제는 단순히 공간 마련의 개념이 아니라, 주변 창업시설과의 유기적 조화,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외부 국내·외 창업 및 투자수요를 해당 클러스터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 등이 함께 필요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허브는 그 동안 국내에서 마련되지 못한 300석 이상 공간의 대규모 이벤트 홀을 마련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민간 주도의 추진단에서 결정한다는 기본 방향 외에는 국내의 다른 창업지원시설과의 전략적인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보고서", 2024.10.)

[글로벌 창업허브의 기본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개요
글로벌 프로그램	○ (추진방향) 해외 창업기업을 발굴-유치-정착 일관지원으로 허브 내 글로벌 생태계를 위한 인원 구성 -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이 허브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 마련 ○ (내용) ① 인바운드 프로그램 연계 해외 스타트업 발굴 및 유치, 영어 공용어 사용, 글로벌 전담팀 운영, 주거·정주 지원, ② 해외제도 컨설팅, 외국 허브·아웃바운드 인프라 연계 ○ (절차) 글로벌 AC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해외 기업 발굴 및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컨설팅 등
투자 프로그램	○ (추진방향) 글로벌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입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내용) ① 글로벌 IR, ② 해외 투자 교육·컨설팅 등 ○ (절차) 해외 VC·AC를 파트너사로 허브 유치하고, 입주기업 투자, IR 등 운영, 해외 진출 기업 컨설팅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 (추진방향)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과 개방형 혁신을 위해 앵커기업 등과 매칭·협업 지원 ○ (내용) ① 스타트업 DB 제공, 코디네이터 운영 등을 통해 매칭 지원, ② 개방형 혁신에 대한 협업자금 지원 ○ (절차) 앵커기업, 외부 대기업 등과 협약 체결 및 스타트업과 매칭 지원, 심의 후 협업자금 지원
대학 연계 프로그램	○ (추진방향) 대학이 보유한 인재, 기술력, 장비, 공간 등 딥테크 자원을 원포인트로 허브와 연계 지원 ○ (내용) ① 인턴십 프로그램, ② 대학-입주기업간 공동 문제해결 프로그램, ③ 실증·연구장비 지원, ④ 입주 연계 ○ (절차) 인근 대학, 과학기술대학 등과 업무 협약 체결, 참여 대학에 자금 지원, 대학 창업기업 입주 제공 등 인센티브
네트워크 프로그램	○ (추진방향) 허브 내 강연 등 프로그램을 수시 운영하여, 인재·스타트업이 항상 모이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 ○ (내용) ① 일반 대중·외부 기업 등에 개방된 강연·교육 프로그램, ② 입주기업 밍글링, ③ 타 허브 교류 프로그램 등 ○ (절차) 매주 허브 내 프로그램·행사 구성,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간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주) 심화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역량과 수준을 진단한 후 선별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예정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주체(앵커기업, 투자사, 대학, 해외 창업보육기관, 연구기관 등)별 업무협의를 지속 중인 상황임.

혁신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수 대학과는 2025년 하반기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나 창업보육시설의 핵심이 되는 앵커기업 및 투자사의 경우 아직 참여의사가 확정되지 않고 협의 중인 경우가 다수이고, 글로벌·딥테크의 핵심이 되는 해외 창업보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협의 중인 경우가 다수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하반기에 다양한 혁신주체와 입주협의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입주 운영기관이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하여 2026년 초 글로벌 창업허브 개소와 함께 동 프로그램을 곧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당초 제시한 비전과 같이 글로벌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창업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컨텐츠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 출〉

7.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재난·원자재 가격급등 및 환율 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액은 1,500억원이었으나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850억원을 증액한 계획현액 2,35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8]

[2024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00	235,000	-	235,000	235,000	-	-	550,000

2024년 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 기업의 판매기업 미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발생하자,[39]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액에 상응하는 저금리 융자지원을 시행하였음.

38)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261-302)(글로벌성장정책관)

39) ※ e-커머스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규모
- 위메프·티몬 : (기업수) 4.8만개사, (피해금액) 1.3조원 → (업체당 피해) 2,658만원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개요]

구분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특별협약 프로그램
재원	재정	재정	자체 재원
지원한도	10억원	1.5억원 → 5억원	30억원
금리	3.4% → 2.5%	3.41% → 2.5%	금리: 3.9~4.5% → 3.3~4.4% 보증료: 0.5~1.0% → 0.5%
목표액	300억원→1,000억원	1,700억원	3,000억원
지원실적	1,014억원	465억원	1,033억원
지원건수	368건	1,130건	316건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이 중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통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을 통하여 저리 지원을 시행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금리 3.4%(변동금리)로 300억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피해기업의 지원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급증하자 금리를 2.5%(고정금리)로 낮추고 계획 대비 700억원 증액한 1,000억원을 목표로 지원하였음.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경영애로 사유(e-커머스 미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사유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인 경영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적용 예외
ㅇ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 10억원 한도로 운영하며, 최저 융자지원금액 미적용
ㅇ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이내)
ㅇ (대출금리) 연 2.5% (고정금리)
ㅇ (기타사항)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은 수시접수 가능 및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를 부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금 수시접수를 허용하고,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는 등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지원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이를 통해 2024년에는 362건 1,004억원, 2025년 7월 현재 6건 10억원을 합쳐 368건 1,014억원의 대출지원이 시행되었음.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절차 비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건)

구분	2024년		2025년 7월		총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004	362	10	6	1,014	36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2024년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를 일반적인 지원수준에 비해 우대하여 지원하였는데, 대출금리 하향에 대해 지원대상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리산정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시 피해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이유로 당초 3.4%대 수준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대출금리를 2.5% 고정금리로 낮추었으나, 금리 추가 인하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 일반적인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에 대비하여 어떠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지원 대상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임.

특히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공단의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특별협약 프로그램 중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두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금리를 2.5%로 낮추었으나, 자체재원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의 경우 금리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결과 중소벤처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정책자금 수요가 집중되었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특별협약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원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30% 수준으로 부진하였음.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특별지원 개요]

구분	일반적인 일시적경영애로 지원자금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신청조건	일정 규모 이상 피해조건 필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대형사고(화재 등)로 인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것	해당 조건 미적용
정책 우선도 평가	신청후 기업평가에 앞서 지역본부 별로 개별 신청기업의 아래 항목을 평가(평가 탈락시 기업평가 대상 제외) ①중점지원분야* 해당여부, ②고용창출 여부, ③기술·경영혁신, ④글로벌화, ⑤정책우대 대상여부, ⑥성장잠재력 등 *혁신성장, 지역주력, 소·부·장, 뿌리기술, 초격차·신산업 분야 등	해당 평가 면제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2024년 3분기 기준 2.90%	2.5%(고정금리)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미정산 금액 전체를 피해금액으로 인정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은 동일)
신청기간	지역본부별 별도 신청기간 내 신청	수시신청 (단, 예산 소진시 마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상황별 유연성·긴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고 융자조건의 완화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및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대지원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경우 특정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정책집행이 지연될 수 있어 개별사안마다 완화 조건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그러나 다수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것이 절차적 타당성을 일부 보완할 수는 있으나, 사안별로 융자요건을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임시방편과 같이 정하는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내용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융자 요건 완화 결정을 자문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특히 최근 온라인 유통기업의 미정산 피해 중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고가품 거래 플랫폼 발란 등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조건 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주장 외에

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이 2025년에도 유통업 및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40]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자금의 피해규모별 지원요건 및 지원금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일시적 경영애로 융자의 사유별 지원조건 비교]

구분	코로나 19	e-커머스 미정산 피해	일반 일시적경영애로
피해규모	54조 추산	1.3조원	-
대출금리	(2020~2021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022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2.5%(고정)	정책자금 기준금리+0.5%p

주)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15%이고, 코로나 피해기업 중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2020.2.13.~2020.12.31) 및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2021.3.30~2021.12.31)에는 한시적으로 1.9%(고정금리)를 적용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대규모 중소기업의 피해업종·피해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므로, 과거 피해업종·피해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금리 인하,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융자요건의 완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경제장관회의, 중대본 회의, 재난 대책위원회 등 범부처 대책협의회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적으로 융자요건 완화 결정을 자문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특히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수립하지 않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각종 긴급경영안정지원 대책이 동 계획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41]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한 바 없는 상황임.

---

40) SBS Biz, "제2, 제3 티메프 현실로... 알렛츠, 중간정산일에 사업종료", 2024.8.16.
데일리안, "미정산 포비아 티메프, 홈플러스, 발란까지 유통가 비상", 2025.4.1.
동아일보, "패션- 명품 플랫폼 4곳, 존속 불확실... 제2 발란 경보", 2025.4.24.

4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기업진단 사업: 기업진단 성과 부진에 따른 사업체계 개편 검토 필요

가. 개 요

‘기업진단’ 내역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평가 후 진단기업에게 정책자금, 연수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52억 4,300만원 중 51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42)]

[2024년도 기업진단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0,578	10,578	-	10,578	10,458	-	120	75,588
기업진단	5,243	5,243	-	5,243	5,170	-	73	4,893

동 사업은 기업진단(표준), 기업진단(종합), 공모형 챌린지 진단 등으로 구성됨. ① ‘기업진단(표준)’은 기업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11개분야 200개 표준 솔루션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및 맞춤형 연계지원을 수행하는 것이고, ② ‘기업진단(종합)’은 보다 전문적인 기업분석 모형을 통해 성장로드맵 및 연계지원을 수행하며, ③ ‘챌린지 진단’은 복합위기에 취약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4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중소기업정책실)

[기업진단 유형별 개요]

구분		내 용
표준진단		■ (정의) 기업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연계지원 ■ (대상) 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
종합진단	사전	■ (정의) 진단모형을 통해 기업경쟁력 분석 및 성장 로드맵 제시 ■ (대상) ① 정책자금 중점 지원분야 등 영위 기업, ② 고용·수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대기업, ③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등 시설투자 기업
	사후	■ (정의) 정책자금 지원 후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검증 및 계속기업 여부를 판단 ■ (대상) 직접대출 잔액 5억원 이상 보유기업 우선 실시
챌린지진단		■ (정의) 재무·생산·품질·마케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원인분석,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진단 ■ (대상) 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업 영위 기업
AI진단(자체)		■ (정의)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분석 결과 제공 및 맞춤사업 연계지원 ■ (대상)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보유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나. 검토의견

기업진단 및 연계지원의 실적이 부진하고 동 사업의 효과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적인 기업진단은 AI 기업진단 등을 연계·활용하는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전문가 방문 위주의 공모형 챌린지 진단을 강화하는 등 기업진단 사업규모와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기업진단 지원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진단기반 맞춤형 연계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이 감소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4년 기업진단(표준, 종합)을 3,797건 수행하였는데, 기업진단 건수는 2021년 5,349건, 2022년 5,330건, 2023년 4,50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4년 실적은 직전 3개년 평균인 5,011건의 75.8%에 불과한 상황임. 특히 기업진단 1건당 사업집행액을 살펴보면 2021년 94만 4,000원에서 2024년 139만 8,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건당 기업진단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기업진단을 기초로 한 맞춤형 연계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실적도 갈수록 저조한 상황임. 2024년 맞춤형 연계지원은 6,762건 수행되었는데, 2021년 10,799건, 2022건 10,369건, 2023년 9,557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 6,762건은 직전 3개년 평균인 10,241건의 66.1%에 해당함. 2024년 정책자금 지원금액은 1조 5,204억원으로, 직전 3개년 평균인 2조 1,257억원의 71.5%에 그침.

[2021~2025년 현재 기업진단 지원 현황]

(단위: 억원, 백만원, 건)

구분	기업진단 예산액	기업진단 집행액	기업진단 지원 건수	1건당 집행액 (백만원)	챌린지진단 지원 건수	진단기반 맞춤형 연계지원 건수	진단기반 정책자금 지원 금액
2021년	50.7	50.5	5,352	94.4	101	10,799	22,228
2022년	54.8	54.8	5,278	103.8	52	10,369	22,379
2023년	54.8	54.8	4,404	124.4	103	9,557	16,858
2024년	52.4	51.7	3,797	136.2	100	6,762	14,48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2024년 기업진단 사업은 전년과 비교할 때 동 사업의 예산 감소 규모에 비해 기업진단 관련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진단 예산은 2024년 52억 4,0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4.3% 감소하였으나, 기업진단 건수는 2024년 3,797건으로 2023년 대비 13.8% 감소하였고, 기업진단 연계지원 건수는 2024년 6,762건으로 2023년 대비 28.6% 감소하였음. 중진공 융자예산이 2024년 4조 3,468억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것에 비해 진단기반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2024년 1조 4,483억원으로 14.1% 감소하였음.

[2023~2024년 기업진단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건)

구 분	중진공 융자예산	기업진단 예산	기업진단 건수	연계지원 건수	진단기반 정책자금 지원규모
2023년 (A)	44,071	54.8	4,404	9,465	16,858
2024년 (B)	43,468	52.4	3,797	6,762	14,483
증감률 ((B-A)/A)	△1.4%	△4.3%	△13.8%	△28.6%	△14.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여 역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기업진단 전후 평균 매출액 차이는 2023년 6억 6,000만원으로 2021~2022년 15억원을 초과하였던 것에 비해 감소하였음.

[2021~2024년 기업진단 지원 전·후 성장기여 현황]

구 분	진단 전 매출액(A)	진단 후 매출액(B)	차이 (B-A)	진단기업 약정해지율(C)	미진단기업 약정해지율(D)	차이 (D-C)
2021년	85억 7,000만원	102억 4,000만원	16억 7,000만원	1.79%	5.38%	3.59%p
2022년	123억 7,000만원	139억 4,000만원	15억 7,000만원	1.61%	4.28%	2.67%p
2023년	104억 8,000만원	111억 4,000만원	6억 6,000만원	2.97%	5.61%	2.64%p
2024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2.78%	6.05%	3.27%p

주 1) 2024년 기업진단 성과분석 용역 실시 이후 집계 예정(2025.11.)
2) 약정해지란, 대출 약정 이후 이를 정상 이행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된 것을 의미하며, 약정해지율이 낮을수록 기업이 약정된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진단의 실적 감소와 관련하여, 복합위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감소하고 있고, 2023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진단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견임.

AI 진단은 신청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기업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외부환경, 경영성과, 내부역량 등을 분석한 후 맞춤형 사업을 추천하는 것으로, 비대면 AI 진단을 통해 전문가 방문 없이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영 전반에 대한 강·약점, 성장로드맵 분석이 가능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진단 개요]

□ (개요) 신청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기업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외부환경·경영성과·내부역량 등 분석 후 맞춤사업 추천
* 중진공DB 78만개사, NICE신용평가·한국평가데이터 등 1억 9천만건 데이터 수집
○ (대상) 2개년 표준재무제표* 보유 중소기업 (*신청기업의 재무성과 변화 추이 분석 필요)
○ (방법) PC · 모바일앱에 접속 후 “진단하기” 클릭(약 1분 소요)
○ (제공) 약 15페이지의 진단보고서 제공(무료)

【AI진단 프로세스】

시스템 접속	AI 진단 로그인	시스템 內 “진단하기” 클릭
■ 웹(https://kdoctor.kosmes.or.kr) ■ 모바일앱(BIZ-BRAIN)	■ ID/PW 입력 ■ 로그인 버튼 클릭	■ 결과 및 솔루션 제공 - 평가등급, 외부환경, 경영성과 내부역량, 전략방향, 맞춤정보

□ (특징) AI진단을 통한 개선전략 분석 후 비대면진단을 통한 실행
○ (고객불편 해소) 비대면 AI진단을 통해 전문가 방문 없이도 中企 스스로 경영 전반에 대한 강·약점, 성장로드맵 분석이 가능
○ (비대면진단과의 연계) 설비가동율, 불량률, 재고관리 등에 대한 현재 수준 분석은 현장진단 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연계지원 실시

□ (구성) 외부환경, 경영성과, 내부역량 등 분석을 통한 맞춤 정보

목 차	내용
① 요약	■ 평가등급, 외부환경, 경영성과, 내부역량, 전략방향, 맞춤정보
② 기업현황	■ 기업개요, 재무현황, 인증정보, 수출정보, 종업원 추이
③ 외부환경	■ 산업지표, 산업환경
④ 유사업체 분석	■ (동종업계 유사 매출액 기업) 재무상태, 손익계산, 재무비율 비교
⑤ 경영성과	■ 재무비율, 손익분기점, 비용구조 건전성, 현금흐름 분석
⑥ 내부역량	■ 기술확보, 생산관리, 마케팅 역량 등 기술성·사업성 분석
⑦ 전략방향	■ (성장로드맵 제시) 전략방향, 전략 포지셔닝, 세부 실행내용
⑧ 맞춤정보	■ 중소기업 맞춤 지원사업 정보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를 종합하면, 동 사업은 실적·성과가 감소하고 있고 AI 진단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 진단이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가 방문 위주의 현장 진단인 종합진단 및 챌린지 진단을 위주로 사업내용을 개편하는 한편 AI 진단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진단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연계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신규, 종료): 사업수요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등

가. 개 요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은 비은행권(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의 5~7%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의 이자비용 중 일부를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000억원 중 2,200억원이 집행(집행률 73.3%)되었고 800억원이 불용되었음.[43)]

[2024년도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300,000	300,000	-	300,000	220,000	-	80,000	-

동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임. 2024년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자체재원으로 환급하고,[44)] 비

4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1261-308)(글로벌성장정책관)

44)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개요

□ [참여은행 및 재원조달] 본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 ㅇ 국책은행인 산업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키로 하였으며, 산업 ·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하였다.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ㅇ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 [지원 프로그램] 본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 ㅇ (공통 프로그램)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023.12.20.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함.
  - 이자환급 금액: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ㅇ (자율 프로그램) 은행권은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2조원-1.6조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역대 최대인 2조원+a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

은행권의 경우에는 정부재정 사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45]

구체적으로는, 금리 7%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5%의 낮은 금리로 전환하고 보증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금리 7%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동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부 이자를 비은행권으로부터 환급받고, 비은행권은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음.[46]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2023.12.31.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지원금액 산정기준) 2023.12.31. 기준, 금리구간별 차등 지원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적용금리: 5.0~5.5%→4.5~5.0%)	적용금리와 5% 간 차액 (적용금리: 5.5~6.5%→5.0%)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적용금리: 6.5~7.0%→5.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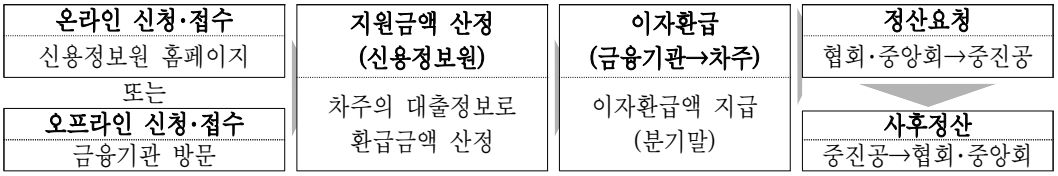
○ (개별 한도) 1년 이상 이자 납입 차주 1년치 금액 일시 지급, 1인당 대출액 1억원 한도· 최대 지원금액 150만원

○ (사업규모) 공급규모 2,970억원 내외(예산 3,000억원)

○ (지원절차) ① (기업)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에 지원금 신청, ② (금융기관) 기업에 이자차액 지급, ③ (금융기관) 협회·중앙회에 지원금액 통지, ④ (협회·중앙회) 취합된 금융기관별 지원금액 중진공에 통지, ⑤ (중진공) 협회·중앙회에 지원금 지급, ⑥ (협회·중앙회) 금융기관에 지원금 보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 사업 사업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약계층을 지원합니다", 2023.12.21.

45) 비은행권 업권별 협회·중앙회는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의미함.

46)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본격 시행", 2024.1.31.

나. 검토의견

첫째,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이자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000억원의 기금재원을 투입한 이 사업을 통해 약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47] 2024년 실제 지원실적은 26만 4,242건으로 총 2,112억 500만원(2024년 4사분기 지원분 포함)이 지원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수요가 과다 추계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 사업의 업권별 환급·정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번	여신업체 명	이자환급 신청건수	2024년 여신업체의 이자환급액 (1/4~4/4분기)	2024년 여신업체의 중진공 정산액 (1/4~3/4분기)	2025년 여신업체의 중진공 정산액 (4/4분기)
1	농협중앙회	112,212	92,462	78,503	13,959
2	산림조합중앙회	3,912	3,399	2,855	544
3	새마을금고중앙회	40,052	39,971	30,923	9,048
4	수협중앙회	13,718	12,697	11,761	936
5	신협중앙회	37,708	32,407	27,369	5,038
6	여신협회	52,628	26,565	20,210	6,355
7	저축은행중앙회	4,012	3,704	2,370	1,334
	소계	264,242	211,205	173,991	37,214

주 1) 동 사업은 여신업체가 이자환급을 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회·중앙회에 기지급금을 보전하고, 분기별 정산결과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수 또는 추가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2) 이자환급 신청건수의 경우 여신업체별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청건수가 중복 집계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수요 부진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에서 800억원이 불용되었고, 비은행권 협회·중앙회로의 보조금 교부액 2,172억 6,300만원 중 1,739억 9,100만원은 연내에 실집행되고 나머지 432억 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실집행되었음.

47) 관계부처 합동,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2024.1.17.

[2024년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비은행권 업권별 협·중앙회	300,000	297,000	217,263	217,263	-	217,263	173,991	217,263	173,991	43,272	-	58.6

주) 동 사업은 당초 예산 전액이 민간경상보조 비목(320-01)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 2월 민간경상보조 30억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비목을 자체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비은행권 협회·중앙회 등에 교부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2,970억원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은 예산안 편성 시 기본요건이 미확정된 상태로 사전 수요예측에 한계가 있었고, 온·오프라인 매체[48]를 활용한 집중홍보 진행 및 미신청 차주 대상 신청 독려 문자 발송 등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신청부진 등으로 인해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와 유사하게 금융지출 수요를 과다추계한 사례가 최근 지속되고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사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6,800억원) 및 2023년 본예산(800억원)에 출연금이 편성되어 9조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누적공급액 1조 6,891억원, 보증잔액 1조 4,652억원에 그친 채 보증공급 사업이 종료되었음.[49]

이렇듯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관련 유사 정책금융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수요의 과다추계로 인한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를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부처(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신용정보원) 및 비은행권 협회·중앙회와의 구체적인 업무협약(MOU) 체결 없이 업무매뉴얼 통보 공문에 의거하여 여신업체와의 이

48) 옥외, 포털사이트, SNS(카카오·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라디오, 일간지 지면 광고, 카드뉴스 등

49)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5.5%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저리대출에 대해 보증(대출액의 90%)을 지원하는 사업임.

자환급액 및 정산절차가 이루어져 보조금 정산·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50]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고 운영기관이 결정되었음. 2023년 12월 은행권이 1조 6,000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을 포함한 자체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에 상응하여[51] 중소금융권 이용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사업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 증액 반영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통합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업무수행 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및 업권별 협회·중앙회에 통보하였으나, 부처-공공기관-민간 협회·중앙회 간 업무분장 및 보조금 교부·정산 등에 대한 업무협약 등의 구체적인 보조금 정산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공문만으로 동 사업이 수행된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이자환급 사업 점검회의(2024.3.25.)'에서 통합 업무매뉴얼 공문 통보로 업무협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함.[52]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비은행권 업권별 협회·중앙회가 2,000억원이 넘는 민간경상보조 교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매뉴얼 공문 통보만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사업 관리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대금 집행 및 정산의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 간 보조금 정산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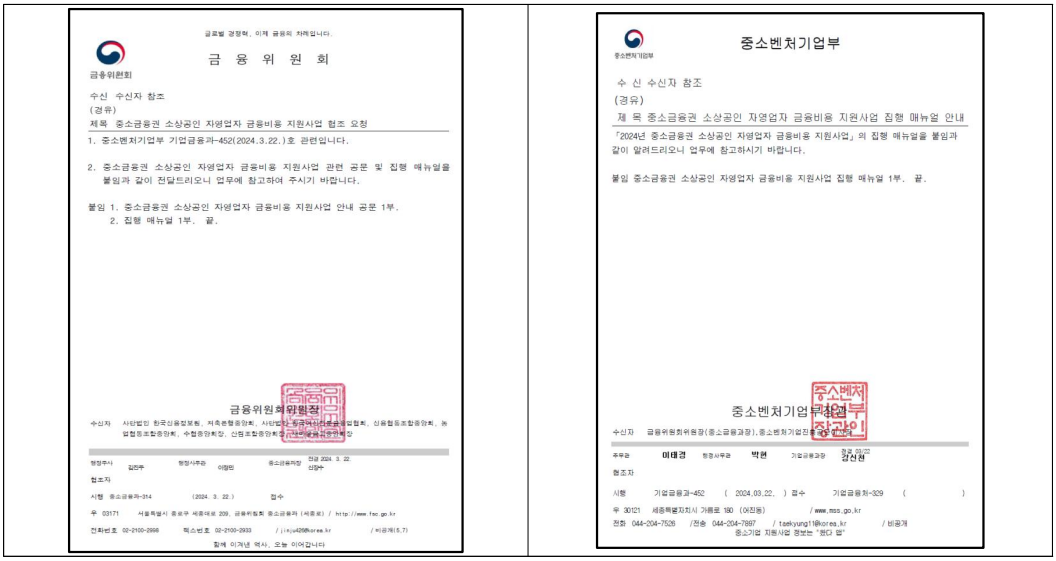
---

50) 금융위원회(신용정보원)는 차주 데이터 집계 및 이자환급액을 산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 환급내역을 사후검증하고 환급액을 정산함.

51) 금융위원회,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2023.12.31.

52)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한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기재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였고, 보조금 관리 이행력 제고를 위해 참여 금융기관이 공문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직접 제출한 「기관별 사업추진계획(보조금 교부신청 서류)」에서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여 금융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하였다고 설명함.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집행 매뉴얼 통보 공문]



금융위원회

금 융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452(2024.3.22.)호 관련입니다.

2.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관련 공문 및 집행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안내 공문 1부.
2. 집행 매뉴얼 1부. 끝.

금융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 저축은행중앙회, 사단법인 [illegible],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illegible]

협조자

시행 중소금융과-314 (2024. 3. 22.) 접수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세종로) / http://www.fsc.go.kr

전화번호 02-2100-2998 팩스번호 02-2100-2933 / jinju426@korea.kr / 비공개(5.7)

함께 이겨낼 역사, 오늘 이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집행 매뉴얼 안내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집행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집행 매뉴얼 1부. 끝.

중소벤처기업부장

수신자 금융위원회위원장(중소금융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주무관 이태경 팀장사무관 박현 기업금융과장 김선웅

협조자

시행 기업금융과-452 (2024.03.22.) 접수 기업금융처-329 (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 www.mss.go.kr

전화 044-204-7526 /전송 044-204-7897 / taekyung11@korea.kr / 비공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는 "원다 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0.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 사업: 구축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 내역사업은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70억 500만원 중 15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21.9%)되고 54억 5,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53]

[2024년도 스마트트레이드허브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글로벌화지원플랫폼	40,261	40,261	-	40,261	34,720	5,453	88	32,141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	7,005	7,005	-	7,005	1,531	5,453	21	552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 사업은 인천공항공사가 물류센터 건물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건물에 투입될 물류 설비를 구축·관리하며, 물류사는 보관·배송 서비스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물류센터 건축설계 및 건축’ 사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물류설비·소방 등 별도설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 중임.

나. 검토의견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 건물 공사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물류 설비 구축 사업 역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사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5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글로벌화지원플랫폼(3152-301)(글로벌성장정책관)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는 2022년 6월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1차·2차 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는 2026년 9월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 계획별 준공 및 운영 개시일정]

기존 계획 (2022년 6월 수립)	1차 연장 (2023년 4월 수립)	2차 연장 (2024년 3월 수립)
2024년 하반기 운영	2025.12월 준공 및 운영	2026.9월 준공 및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추진일정 >

<table>
<tr><th>구분</th><th>2023년</th><th colspan="3">2024년</th><th>2025년</th><th colspan="2">2026년</th></tr>
<tr><td rowspan="3">중진공</td><td rowspan="3">설비구축업체
선정</td><td colspan="5">① 물류설비 구축(설계 및 도입) - 설비구축 감리 포함</td><td rowspan="4">사
업
수
행</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② 정보시스템 구축</td></tr>
<tr><td colspan="2">소방설비 설계</td><td colspan="3">소방설비 시공</td></tr>
<tr><td>인국공</td><td>물류센터
설계사
선정 및
기본설계</td><td colspan="2">물류센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td><td>착공</td><td>물류센터 건축(18개월)</td><td>준공</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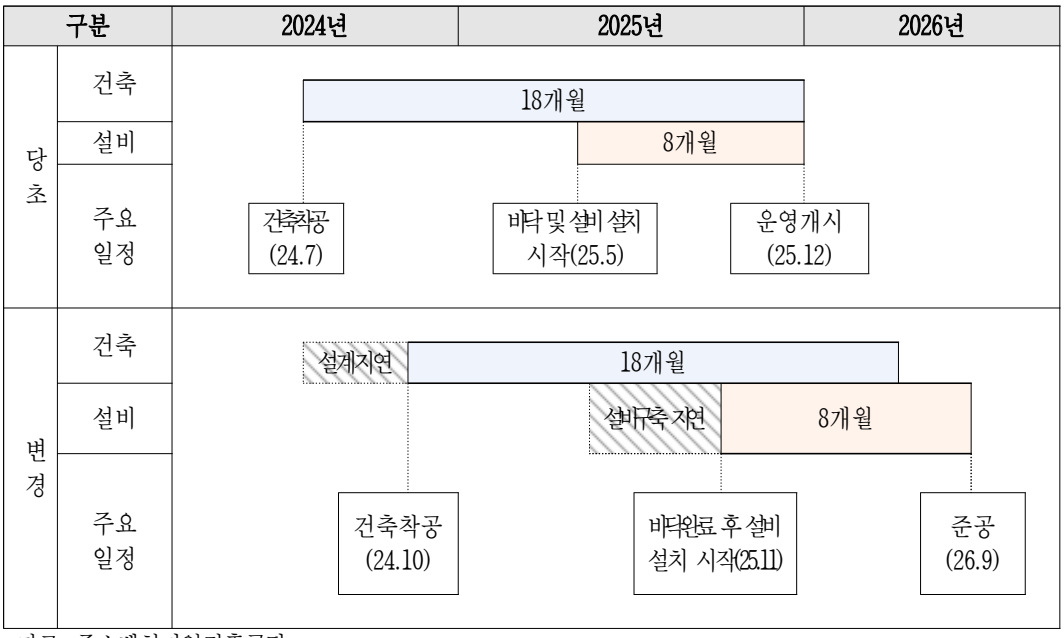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설계 변경, 안정성 강화를 고려한 공정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함.

구체적으로, 물류센터 처리 물량 확대 및 물류설비 동선을 고려하여 당초 1개층에서 2개층으로 건축 규모가 변경되었고, 당초 바닥공사와 물류설비 설치를 동시 추진하였으나 바닥 공사 완료 이후 물류설비를 설치하자는 건축 감리단 공정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물류 설비 설치 공정이 변경되었으며, 그 외에 서울지방항공청의 전파영향성 추가 검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등의 일정이 순연되었음.

두 차례의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해 물류설비 구축 시작 시점이 2025년 5월에서 2025년 11월로 늦춰짐에 따라 설비구축 사업대금의 집행 시기 역시 2025년 11월로 연기되었음. 2024년도 설비구축 사업 예산(66억 5,300만원) 중 12억원은 정보시스템 구축 선금으로 집행하고 54억 5,300만원은 2025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월액은 1차 물류설비 구축용역 잔금 35억 3,700만원과 2차 물류설비 구축용역 선금 19억 1,600만원에 해당함.

[계획 변경 전후 사업일정 비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물류설비 구축사업 추진계획]

구분	물류설비 구축 용역		소방 등 별도설비	합계
	1차	2차		
기간	24개월 (2023.11월~2025.11월)	22개월 (2024.11월~2026.9월)	6개월 (2026.1월~)	-
예산	163억 8,900만원	56억 1,100만원	6억 1,800만원 (2025)	22,618 백만원
	선금 128억 5,200만원(2023) + 잔금 35억 3,700만원(2025)	선금 19억 1,600만원(2025) + 잔금 36억 9,500만원(2026)		
과업	설비 설계 및 발주/제작	설비 발주, 설치, 검사, 시운전, 교육 등	소방시설 구축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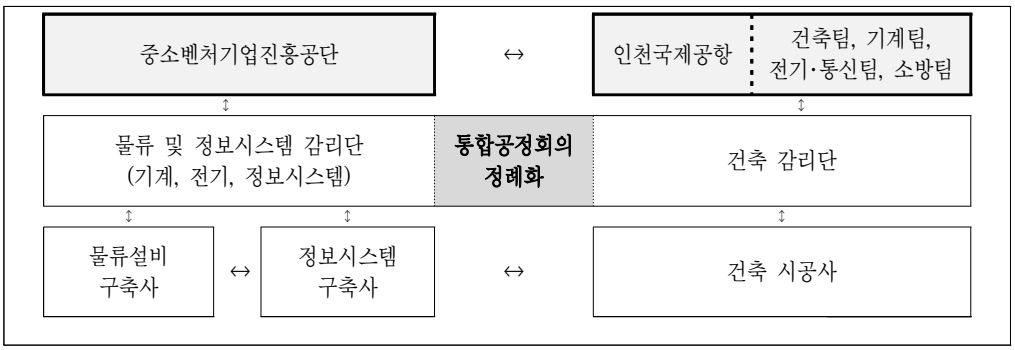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중 2차 물류설비 구축용역 선금 19억 1,600만원의 경우 2025년에 집행될 예정으로 2024년에 집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적절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2차 물류설비 구축 용역이 2026년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재이월 금지 원칙에 따라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54]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55)56)]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 향후 추진 일정(안)]

◦ 물류센터 건축과 물류설비 설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통합 소통체계* 구축 및 공정회의 정례화
* 중진공-인국공 양기관 감리단을 통한 상시소통 및 신속 대응체계



- (2025.03) 물류설비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단 선정
- (2025.12) 1층 물류설비 설치 개시,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 (2026.03) 3층 물류설비 설치 개시
- (2026.04) 1층 물류설비-정보시스템 연동시험 개시
- (2026.07) 3층 물류설비-정보시스템 연동시험 개시
- (2026.09) 물류센터 준공 및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동 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당시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개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해 2026년 9월에야 준공이 완료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더 이상의 사업지연 없이 중소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당초 목적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

54)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55)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진행중인 1차 설비구축 과정(물류설비 설계, 자재 발주, 1층 일부 설치 등)이 2025년 11월 완료 예정이며, 이후 바로 2차 설비구축(1층 잔여분 및 2층 전체 설치)에 착수할 예정(2025년 12월)으로 추가적인 지연 우려는 없으며, 향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임.

56)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류센터 건축과 물류설비 설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통합 소통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사업연계를 통해 2026년 하반기 물류센터는 준공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임.

11. 개발기술사업화 사업(신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수요 과다예측으로 인한 불용 문제

가. 개 요

‘개발기술사업화’ 내역사업은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제품화·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정책자금 기준금리) 또는 이차보전(최대 5.5%p)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2,120억원 중 2,041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되었고 78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57]

구체적으로는 개발기술사업화 내역사업 중 직접융자 2,000억원은 전액 집행완료되었으나, 이차보전금은 계획현액 120억원 중 41억 7,000만원만 집행(집행률 34.8%)되고 78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007,800	2,047,800	-	2,047,800	2,039,970	-	7,830	1,635,800
개발기술사업화	212,000	212,000	-	212,000	204,170	-	7,830	300,000
이차보전금	12,000	12,000	-	12,000	4,170	-	7,830	-

주) 2025년도 과목구조 개편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내 이차보전사업은 2024년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5152-301)에 편성되었다가 2025년에는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에 이관되어 편성됨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연구개발(R&D) 계속·종료과제 사업비가 감액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수요의 과다예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액의 3분의 1만 집행되고 과다한 불용을 야기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차보전 수요를 정확히 추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혁신창업화사업자금 내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R&D)가 감액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대출 시 최대 5.5%p를 이차보전

57)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5152-301)(글로벌성장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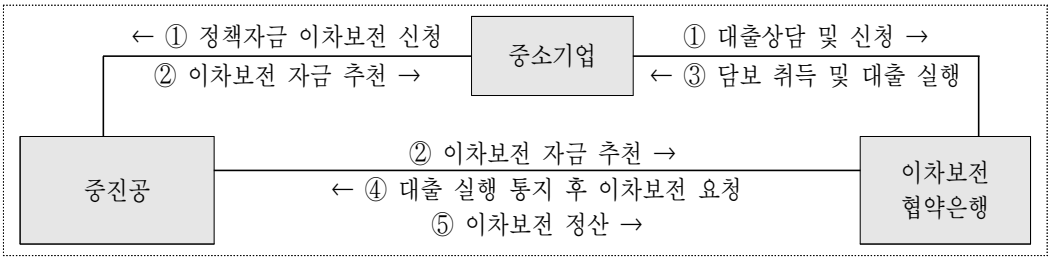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안에 연내 4,300억원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것으로 편성되고, 2025년도 계획안에는 2024년 기존대출 1,492억원과 2025년 신규대출 1,526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것으로 편성되었음.[58)]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 개요]

○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지원대상) 정부 부처 R&D 2024년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담기관(전문기관)과 협약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 지원제외 : 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관 R&D과제 해당기업, ② 융자제한기업, ③ R&D 중단과제 해당기업 ○ (지원내용)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비용 5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전문기관의 증빙자료(확인서 등)에 명시된 금액*(최대 10억원) * 2024년도 R&D 계속·종료 과제 중 협약 당해연도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배 이내 - 이차보전율 : 5.5%p 이내 - 대출기간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 (용도)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운전자금으로 대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지원 방식]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 1,481억원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율 5.5%p가 적용되어 42억원이 집행되었고,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1,596억원의 대출액에 대해 39억 2,000만원이 누적 집행되었음.

58) 동 사업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 내 개발기술사업화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 내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내역사업으로 편성됨.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내내역사업의 이차보전 현황 및 예상]

(단위: 억원, %, 2025.6.30. 기준)

구 분			2024년 2/4분기	2024년 3/4분기	2024년 4/4분기	2024년 실적
개발기술	신규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963	502	16	1,481
		이차보전율	5.5	5.5	5.5	5.5
		이차보전액	3	18	21	42
	누적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963	1,465	1,481	1,481
		이차보전율	5.5	5.5	5.5	5.5
		이차보전액	3	21	42	42
구 분			2025년 1/4분기	2025년 2/4분기	2025년 말 예상	누적
개발기술	신규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115	1,526	3,007
		이차보전율	5.5	5.5	5.5	-
		이차보전액	-	0.6	42	84
	누적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1,481	1,596	3,007	3,007
		이차보전율	5.5	5.5	5.5	-
		이차보전액	19	39.2	120	162

주) 신규는 해당 분기에 신규 이차보전지원에 편입된 대출에 대해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발기술사업화 R&D 이차보전 사업은 R&D 연구개발비 감액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편성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이 감액된 모든 기업에 최대한도로 지원 가능한 규모(4,300억원)로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했으나, 융자신청 저조로 실제 대출은 1,481억원만 실행됨에 따라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R&D 예산 감액에 상응하여 지원대책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R&D 사업지원,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방식 중 이차보전은 사업화 자금에 대한 채무상환의 부담을 지고 민간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업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의 신청기간을 당초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을 9월 말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로 연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기간이 다소 촉박한 측면이 있음.

[2024년도 R&D 감액 이차보전 지원사업 현황]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2024년 예산	120억원	125억원
신청대상	산업부 외 전 부처 R&D 감액사업	중기부 외 전 부처 R&D 감액사업
신청기간	(당초) 2024. 3. 25. ~ 5. 31. (연장) 2024. 3. 25. ~ 7. 31.	2024. 3. 25. ~ 예산 소진시 *실제 신청종료일 : 9. 30.
집행률	34.8% (120억원 중 41억 7,000만원 집행)	50.6% (125억원 중 65억 7,500만원 집행)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나아가 2025년 중소기업 R&D융자(이차보전) 공고에서는 당초 협약금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되어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의 경우 2024년 미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 감액분까지 합산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공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59] 2025년 2/4분기까지 신규대출액이 115억원으로 이차보전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말까지 1,526억원의 신규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60]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차보전 사업에서 높은 보전금리를 설정하는 경우 사업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 보전금리를 설정하고 최소한의 자부담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최대 보전금리 5.5%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하는 5개 이차보전 사업이 설정하고 있는 보전금리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차보전 평균 금리는 5.47%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 최대 보전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최대 이차보전율 수준으로 높게 설정하여 이차보전금을 수익화할 유인이 있음. 이차보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 연구개발(R&D)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당초 지원 목적과 달리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전금리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5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14호, “2025년도 중소기업 R&D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2025.3.31.

60)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2025년 예산의 경우 R&D 감액 기업의 불만·애로사항을 감안하여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모든 R&D 감액기업에 최대한도로 지원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며, R&D 감액 중소기업 대상으로 동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2025년도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이차보전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원 대상	이차보전 공급액	이차보전 지원건수	이차보전 지원율	이차보전 평균금리	이차보전 후 평균 적용금리
신성장기반 자금(융자)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시설 도입기업 중 운전자금 필요기업	160,000	407	①최대 3.0% (중점투자분야,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② 2.0% (그 외 기타)	2.62%	3.06%
신성장기반 자금(융자) (제조현장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88,000	209		2.84%	2.94%
신성장기반 자금(융자) (Net-Zero 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등	18,267	55		2.75%	3.11%
신시장진출 지원자금(융자) (수출기업 글로벌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	228,000	533		3.00%	2.8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개발기술사업화)	·정부 R&D의 2024년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	148,073	753	최대 5.5%	5.47%	0.73%

주)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사업인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과 달리 수혜기업의 최소한의 자부담(0.5%)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수혜기업은 이자부담 없이 원금만 상환하게 되거나 미미한 수준의 자부담만 부담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2024~2028년
지원내용	이자 차액(대출금리-보전금리=최종금리)을 지원하며, 보전금리는 최대 5.5%p로 하되 최종금리는 최저 0.5%p로 제한
지원조건	3년 이내 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협약금액 대비 2024년 당해연도 감액분의 200%까지 보전
지원대상	2024년도 R&D 수행 기업 중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 기업 (1순위) 2024년 계속사업비 50% 이상 감액된 기업(85개 사업, 988개 과제 대상) (2순위) 2024년 계속사업비 50% 미만 감액된 기업(51개 사업, 1,190개 과제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외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사업에 신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 편성 시 기존대출 위주로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하고, 유사 이차보전 사업 편성 시 적정 이차보전 금리를 산정하고 최소한의 자부담을 두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기술보증기금】

〈수　입〉

12. 고정자산매각익: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회수액 현실화 필요

가. 개　요

‘고정자산매각익’은 중소기업 투자주식 및 투자사채·출자전환 주식·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 이익 등을 기술보증기금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193억 5,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17억 5,000만원임(수납률 100.0%).[61]

[2024년도 고정자산매각익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C/B)	
	당초	수정(A)						
고정자산매각익	19,358	19,358	61,750	61,750	-	-	100.0	19,610

나. 검토의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기업의 처분이익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술보증기금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보증연계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회수액을 현실화하여 기금수입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술보증기금은 고정자산매각익을 당초 193억 5,800만원 수납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617억 5,000만원이 징수결정·수납되었으며, 이 중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사업[62]을 통해 취득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61) 기술보증기금-고정자산매각익(69-695)(벤처정책관)

62) 기술보증기금-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2441-303)(벤처정책관)

매각하여 실현한 이익인 중소기업 투자주식 처분익이 606억 8,100만원임.

중소기업 투자주식 처분익은 매년 중소기업의 IPO 일정 등에 따라 변동을 보이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2021년 1,009억 1,600만원 2022년 199억 7,500만원, 2023년 616억 8,200만원, 2024년 606억 8,100만원이고, 해당 연도 고정자산매각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고정자산매각익 처분자산별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고정자산매각익	**102,993**	**23,020**	**62,128**	**61,750**	**19,610**
- 중소기업 투자주식 처분익	100,916	19,975	61,682	60,681	13,960
- 기타투자자산 처분익	2,073	3,002	404	1,010	5,615
- 유형자산 처분익	4	43	42	59	3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중소기업 투자주식 처분익을 과소계상하여 결과적으로 계획액 대비 실적액이 1.4~9.3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주식 처분익은 당초 계획 상 137억원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607억원이 수납되었고, 이와 같은 기금 수입 과소계상은 2021~2023년에도 연례적으로 반복되었음.

[중소기업 투자주식 처분익의 수납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A)	실적 (B)	수납률 (B/A)	계획 (A)	실적 (B)	수납률 (B/A)	계획 (A)	실적 (B)	수납률 (B/A)	계획 (A)	실적 (B)	수납률 (B/A)
고정자산 매각익	112	1,030	917.5	148	230	155.6	151	621	411.0	194	618	319.0
중소기업 투자주식 처분익	109	1,009	927.2	142	200	140.5	139	617	442.9	137	607	44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의 수입 과소계상은 보증가능 재원을 축소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불필요하게 늘릴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참고로 기술보증기금은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재산을 확충할 목적으로 2021년 3,300억원, 2022년 1,120

억원, 2024년 200억원, 2025년 40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 수입의 과소계상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필요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고정자산매각익의 계획액 대비 실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 투자기업 중 일부 기업이 높은 가치를 평가 받아 IPO에 성공함에 따라, 매각차익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높은 수익이 실현된 결과로,[63] 기업공개 시장 분위기, 증시·산업 동향, 정부 정책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벤처투자시장 특성상 IPO 변동성이 높아 IPO 시기나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려워 중소기업투자주식 처분익의 계획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증연계투자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64] 최근 투자기업의 IPO 및 주식 처분실적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 사업의 대상기업의 보유주식 처분에 관한 과소추계 행태를 지양하고 고정자산매각익을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63) [최근 4년간 고정자산매각익 수납률 현황]

구분	IPO 성공기업수	주요 수익 실현 내용
2021년	5개	- 에***(주) 154억원, (주)크*** 621억원의 처분이익 시현 ☞ 2개社의 처분익이 전체 처분익의 77% 이상을 차지
2022년	1개	- ㈜아***** 97억원의 처분이익 시현 ☞ 1개社의 처분익이 전체 처분익의 49% 이상을 차지
2023년	4개	- 나**(주) 424억원 처분이익 시현 ☞ 1개社의 처분익이 전체 처분익의 68% 이상을 차지
2024년	4개	- (주)사*****의 244억원, (주)엔*****의 235억원 처분이익 시현 ☞ 2개社의 처분익이 전체 처분익의 78% 이상을 차지

자료: 기술보증기금

64) 다만, 2011년 동 사업을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1년 하반기부터 중단하였다가, 2012년 6월「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8월부터 재개한 바 있음.

〈지　출〉

13. 구상권회수지원 사업: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후 적극적인 회수조치 필요

가. 개　요

‘구상권회수지원’ 내역사업은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구상채권, 상각채권) 등을 관리하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소송 및 경매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유지 및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지출임. 2024년도 계획액은 165억 8,8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98억원을 증액한 계획현액 263억 8,800만원 중 249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7%)되고 14억원이 불용되었음.[65)]

[2024년도 구상권회수지원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구상권관리	16,688	26,488	-	26,488	25,087	-	1,401	29,153
구상권회수지원	16,588	26,388	-	26,388	24,988	-	1,400	29,053

나. 검토의견

구상채권 회수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납결손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회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보증부실로 인한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기금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을 1,551억 9,400만원 회수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1년 1,805억 400만원, 2022년 1,769억 5,900만원, 2023년 1,754억 8,7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65) 기술보증기금-구상권관리(2441-304)(벤처정책관)

[기술보증기금 구상권 회수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138,900	145,000	130,000	157,013
회수액	180,504	176,959	175,487	155,194
달성율	130.0	122.0	135.0	98.8

주) 현금 회수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2021년 4,906억원, 2022년 4,946억원, 2023년 9,596억원, 2024년 1조 1,677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이와 대비되며, 대위변제액의 증가와 구상권 회수액의 감소는 결국 구상권 미수납액의 증가로 이어짐.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 보증공급 및 부실현황]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
보증잔액(A)	257,045	264,929	266,989	282,803	292,207	293,000
신규보증액	78,208	49,276	42,638	62,948	59,313	60,000
부실잔액	2,834	2,909	3,528	4,544	5,081	5,130
부실순증액	8,737	6,725	7,221	11,879	13,583	13,863
부실률	3.4	2.5	2.7	4.2	4.6	4.7
대위변제액	6,420	4,906	4,946	9,596	11,677	11,354
대위변제율	2.5	1.9	1.9	3.4	4.0	3.9
기본재산(B)	21,504	29,625	34,215	35,341	33,760	29,295
운용배수(A/B)	12.0	8.9	7.8	8.0	8.7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구상권 회수액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6조 9,166억 1,800만원 중 수납액은 1,551억 9,400만원(2.2%)을, 미수납액은 6조 2,966억 1,500만원(91.0%)을, 불납결손액은 4,648억 900만원(6.7%)을 차지하였음.

특히 2024년 구상권 회수로 인한 수납액보다 구상권 장기 미회수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3배 가량으로 많은 상황이고, 불납결손액이 2022년 2,067억 3,400만원에서 2024년 4,648억 900만원으로 2년 만에 2.2배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상권 회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구상권 회수액 수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1~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구상권 회수액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21	138,900	138,900	138,900	6,188,752	180,504	5,749,195	259,053	130	2.9
2022	145,000	145,000	145,000	6,001,157	176,959	5,617,464	206,734	122	2.9
2023	130,000	130,000	130,000	6,410,080	175,487	5,929,794	304,799	135	2.7
2024	157,013	157,013	157,013	6,916,618	155,194	6,296,615	464,809	99	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및 복합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된 보증규모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기업 부실 증가로 구상권 잔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대보증 면제로 채무관계자 수 감소, 파산·면책 및 채무조정 확대, 복합위기 장기화 및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대내외 구상권 회수 환경이 지속 악화됨에 따라 구상권 회수액(현금성 회수)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파산·면책 등 대외채무조정 신청 채무자가 증가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적극 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감면(조정)액도 일부 영향이 있다는 의견임.[66]

[2021~2024년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외채무조정 신청업체 수 현황]

(단위: 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업회생	139	149	219	225
개인회생	284	345	573	566
파산면책	344	341	521	601
합계	767	835	1,313	1,392

자료: 기술보증기금

그러나 대내외 회수환경 악화 속에서도 구상권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아 회수가능성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리하여 회수가능한 구상권에 대한 회수노력에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상권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6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2023.1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　입〉

14.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및 지속가능한 수입·지출 구성방안 모색 필요 등

가. 개　요

‘일반회계전입금’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각종 보조사업 수행, 기금 운영 및 정부 내부지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금액을 기금 수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 1조 6,350억 4,900만원이 전액 징수결정·수납되었음(수납률 100.0%)[67]

[2024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일반회계 전입금	1,635,049	1,635,049	1,635,049	1,635,049	-	-	100.0	3,825,610

‘기금예수금’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하여 기금 수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2조 5,971억 3,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조 1,671억 3,800만원임(수납률 83.4%).[68]

6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일반회계전입금(91-911)(소상공인정책관)

6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금예수금(94-943)(소상공인정책관)

[2024년도 기금예수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금예수금	2,597,138	2,597,138	2,167,138	2,167,138	-	-	100.0	2,274,354

나. 검토의견

첫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축소에 온전히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기금 수입재원으로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하였던 융자원금 및 이자의 회수, ② 각종 보조금 등의 정산액 등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③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④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여유자금 회수로 충당하고 있음.

[2022~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융자원금 회수	재산 수입	기타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자 기금	소계		
2022년	2,413,487	236,003	82,641	2,732,131	41,159,672	-	5,175,634	46,335,306	-	602,142
2023년	2,674,181	305,418	345,326	3,324,925	569,974	-	3,000,000	3,569,974	-	-
2024년	3,736,466	339,715	525,133	4,601,314	1,635,049	-	2,167,138	3,802,187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기금의 지출로 ① 소상공인 관련 각종 보조금 등 경상적 지출,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 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④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⑤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용하고 있음.

[2022~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기금 운영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여유 자금 운용 (순증)
	경상	융자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자 기금	소계			
2022년	44,336,760	3,508,193	47,844,953	-	-	1,761,552	1,761,552	63,074	-	-
2023년	1,036,532	2,945,876	3,982,408	-	-	2,338,794	2,338,794	62,330	-	511,367
2024년	1,333,405	3,559,150	4,892,555	-	-	2,370,447	2,370,447	66,041	-	1,074,4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은 상환의무가 없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상환의무가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있고,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해서는 차환(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후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편성)을 통해 사실상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임.[6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상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환이 계속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결산 기준으로 기금의 자산은 14조 5,936억원, 부채는 21조 63억원으로 순자산이 △6조 4,128억원으로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자산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산(A)	10.12	13.31	14.38	14.70	14.59
부채(B)	10.34	15.79	19.59	20.71	21.01
순자산(A-B)	△0.23	△2.47	△5.2	△6.01	△6.41
부채비율(B/A)	102.2	118.6	136.2	140.9	14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4년 기금 여유자금으로 평잔 기준 1조 7,226억원을 운용하였는데, 이를 회수하여 기금

69)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상성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에 충당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소상공인융자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중 융자회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편성되나, 당해연도 재정상황 및 기금 여유재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입(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으로 계상한 것은 전무하였음. 또한 2024년 말잔 기준으로는 3조 594억원의 여유자금이 운용 가능한 상태로 남겨놓았는데, 이는 순자산 적자 규모를 절반 가량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모임.[70]

[2022~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여유자금규모 (연말잔액)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2	1,447,194	1,345,904 (2.39%)	-	1,345,904 (2.39%)	-
2023	1,972,382	1,476,418 (4.16%)	-	1,476,418 (4.16%)	-
2024	3,059,448	1,722,558 (4.00%)	-	1,722,558 (4.00%)	-

주) 참고로, 2024년 신용보증기금의 수익률은 5.73%(직접운용 4.36%, 연기금투자풀 6.8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익률은 6.21%(직접운용 4.41%, 연기금투자풀 7.38%), 기술보증기금의 수익률은 4.65%(직접운용 4.30%, 연기금투자풀 5.03% 기타 3.41%)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는 이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이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는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여유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으로, 여유자금을 전액 연기금투자풀에 맡기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여유자금 발생 시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규모를 줄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여유자금 중 필요최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기금으로 조속히 회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70)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의 여유자금 수입은 연중 변동성이 크므로 당해 연도 중에는 확정이 불가하고 전년도 말 결산 기준액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구체적으로는, 2023년 말 기준 여유자금은 1조 9,724억원으로 2024년 집행 시 매년 1분기 조기집행을 위한 수지차 발생금액 1.5조원을 제외하고 공자기금 예수금을 4,300억원 축소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융자원금조기회수(8,563억원) 및 사업비잔액반납(4,724억원) 증가 등으로 1조 5,676억원의 여유자금이 증가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여유자금은 1조 744억원 증액한 3조 594억원이 되었다는 것임.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상성 지출 증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가능한 수입·지출 구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융자 원리금의 회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주된 기금수입으로 하고, 사업성 경비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 보조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건비 등의 기금 운영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을 주된 기금지출로 하고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속 가능한 수입·지출 구조를 상환부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 소상공인 융자 지출은 종전의 융자 원리금의 회수금을 기초로 운영되고,[71] ② 보조사업 및 운영경비 등 경상성 지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체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정 출연금 등 자체 재원이 없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특성상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은 결국 미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거나 차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상사업비 지출, 운영비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경상사업비는 2015~2019년에는 4,000~6,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급증하여 2020년 5조 700억원, 2021년 17조 4,400억원, 2022년 44조 3,400억원에 달하였고, 2023년 1조 400억원, 2024년 1조 300억원으로 축소되었으나 2025년 두 차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라 5조 3,800억원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었음.

7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의 경우, 정책지원에 따른 순이자 역마진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일부 필요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사업 수지구조]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자수익(a)	1,484	1,120	984	1,225	2,101	2,543	2,727
이자비용(b)	1,511	1,424	1,542	2,102	3,384	2,958	2,984
순이자역마진(c=b-a)	27	304	558	877	1,283	415	257
대손비용(d)	459	975	672	2,326	2,262	1,603	158
재정부담추계액(c+d)	486	1,279	1,230	3,203	3,545	2,018	415

일반회계전입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상사업비 및 운영비의 합산 금액에 비례하도록 편성되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규모가 확대된 2021~2023년에 일반회계전입금이 지출규모를 온전히 충당하지 못하여 기금 건전성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조 9,800억원, 2022년 3조 2,400억원, 2023년 5,300억원 규모의 지출은 일반회계전입금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하였으며, 2025년에도 두 차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인해 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1조 6,200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충당이 발생하였음.

[연도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경상성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상 사업비(A)	5,222	5,097	4,765	5,032	6,758	50,707	174,465	443,367	10,365	13,334	53,769
기금 운영비(B)	261	286	326	341	399	466	511	630	623	660	686
소계 (A+B)	5,483	5,383	5,091	5,373	7,157	51,173	174,976	443,997	10,988	13,994	54,455
일반회계 전입금(C)	5,639	6,373	5,937	5,937	8,249	50,997	155,177	411,597	5,670	16,350	38,253
차이 (C-A-B)	156	990	846	564	1,092	△176	△19,799	△32,400	△5,318	2,356	△16,202
충당률 (C/(A+B))	102.8%	118.4%	116.6%	110.5%	115.3%	99.7%	88.7%	92.7%	51.6%	116.8%	70.2%

주 1) 2015~2024년도는 결산 기준으로, 2025년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차이가 (+)인 경우 기금 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인 경우 기금 수지 적자에 기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예결산 사업설명자료를 재가공

한편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2] 이는 해당 법률의 전신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012년 개정하면서, FTA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안정적인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3%로 정하게 된 것임.[73]

7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73) 당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3457)은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이는 유통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는 매출감소와 폐업 등의 피해를 입고 제조업 등에서는 수출 증대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시장 개방에 따른 수혜집단으로부터 부담금 부과 형태를 고려한 것임.

그러나 2015년 이후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정 편성기준(관세액의 3%)를 크게 초과하였음. 2024년 기준으로 전년도 관세 수납액은 7조 2,883억원으로 관세 수납액의 3%는 2,186억원인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7.48배 수준인 1조 6,350억원에 달함.

[연도별 전년도 관세액 및 일반회계전입금 배율]

연도	전년도 관세액(A)	전년도 관세액의 3%(B)	일반회계전입금		배율 (C/B)
			당초	수정(C)	
2015년	8조 7,210억원	2,616억원	5,639억원	5,639억원	2.16배
2016년	8조 4,954억원	2,549억원	5,945억원	6,373억원	2.50배
2017년	8조 454억원	2,414억원	5,457억원	5,937억원	2.46배
2018년	8조 5,292억원	2,559억원	5,649억원	5,937억원	2.32배
2019년	8조 8,152억원	2,645억원	7,602억원	8,249억원	3.12배
2020년	7조 8,221억원	2,347억원	8,263억원	5조 997억원	21.73배
2021년	7조 585억원	2,118억원	1조 3,633억원	15조 5,177억원	73.27배
2022년	8조 2,227억원	2,467억원	3조 8,548억원	41조 1,597억원	166.84배
2023년	10조 3,241억원	3,097억원	5,670억원	5,670억원	1.83배
2024년	7조 2,883억원	2,186억원	1조 6,350억원	1조 6,350억원	7.48배
2025년	6조 9,723억원	2,092억원	1조 5269억원	1조 5,269억원	7.30배

자료: 연도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체 수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이라는 정책목적을 고려할 때 기금의 수익성 제고나 재무적 자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임.

이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코로나19 또는 각종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관련 각종 보조사업 등 경상성 지출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당시 재정여력에 따라 임의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금의 본질적인 재원마련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정 편성기준과 무관하게 편성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의 개념은 유지하되, 수출액이 아니라 관세수입에 연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도록 하였고 현재와 같이 전년도 관세액의 3%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개정되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 및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상성 지출의 적정 총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입·지출 구조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15. 기타경상이전수입: 보조금 반납 지체에 따른 국고반납 지연 부적정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각종 보조·출연사업의 집행 및 정산 후 반납금 등의 수입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527억 4,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18억 700만원 중 수납액은 5,418억 700만원(수납률 96.9%)이고 미수납액은 166억 7,400만원임.[74)]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C/B)	
	당초	수정(A)						
기타경상이전수입	52,745	52,745	541,807	525,133	16,674	-	96.9	52,735

나. 검토의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보조사업 중 사업의 완료 및 정산 후 집행잔액이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뒤늦게 반납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당초 527억 4,500만원만 수납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5,418억 7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5,251억 3,300만원이 수납되었음. 이는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보조사업 35조 3,215억 4,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4,465억 3,300만원이 2024년 국고 반납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잔액을 곧바로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뒤늦게 반납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7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소상공인정책관)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2020년 이전 보조사업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교부받은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국고반납액은 103억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 이는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이후에 실제 집행잔액의 국고반납을 뒤늦게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자체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5)]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부분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과 달리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의 국고반납을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상권정보시스템' 내역사업의 경우 2019년도 보조사업을 연내 수행하여 이에 대한 실적·정산보고서는 2020년 3월에 제출되었으나, 실제 집행잔액의 국고반납은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처리되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지연 사유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었고,[76)] 환수금 발생으로 추가 반납건이 발생하였으며,[77)] 2017년 보조금시스템 도입 이전 수기 관리로 누락이 발생하였다

---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6) 2019~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1인당 보조금 집행액이 3배 이상 급증하여, 당초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비 정산 절차를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반납처리가 지연됨(2018~2020년 18건, 83.6억원)

77) 2015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기한 내 정산·반납완료 하였으나, 이후 둔산지점 폐점에 따라 임차보증금 등 추가 환수금이 발생하여 임차보증금 회수로 인한 반납처리가 발생함(2015년 1

고 설명함.[78]

[2020년도 이전 교부한 보조사업의 2024년 집행잔액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교부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전체교부액	189,851	180,025	200,396	93,437	380,978	4,217,489	5,262,176
반납액	1,903	46	8	2,735	1,402	4,220	10,314
반납건수	2	1	2	3	6	9	23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보조금의 집행 후 정산·반납을 체계적으로 규율한 이유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보조금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보조사업의 정산 및 국고반납이 지연되는 경우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하면 기금의 자체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교부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의 반납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기금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기금의 건전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출연사업의 집행관리 및 집행 후 정산·국고반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및 출연금 집행잔액이 조속히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건, 18.9억원)

78) 과거 보조금 시스템 도입(2017년) 이전에 수기 관리 및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정산·반납 누락이 4건 발생함(2015~2017년 0.6억원)

[2020년 이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교부받은 보조사업 중 2024년 집행잔액 국고반납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교부 및 반납현황				피보조·파출연기관 등	비고
	교부 연도	전체 교부액	반납액	예산 과목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4131-316)	2015	30,539	1,891	민간 경상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기간:2015.2.~2016.4. 사업연장승인일:2015.12.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16.2.29. 반납보고서제출일:2023.9.20.
	2019	18,117	11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상권정보시스템 사업기간:2019.1.~2019.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7.24.
	2020	15,991	25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기간:2020.1.~2021.8. 사업연장승인일:2020.12.1. 결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8.14. 내역사업명:사이버평생교육원 사업기간:2020.1.~2021.3. 사업연장승인일:2020.9.25.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7.24.
소상공인 성장지원 (4131-317)	2018	55,300	2,659	민간 경상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기간:2018.1.~2019.4.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19.2.28. 반납보고서제출일:2023.8.14.
	2019	67,051	1,065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사업기간:2019.1.~2020.2. 사업연장승인일:2019.9.25.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8.28.
				민간 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사업기간::2019.1.~2020.2. 사업연장승인일:2019.9.25.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8.28.
	2020	3,368,896	1,244	민간 경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상생협력프랜차이즈육성 사업기간:2020.1.~2021.5.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교부 및 반납현황				피보조·파출연기관 등	비고
	교부 연도	전체 교부액	반납액	예산 과목		
				보조		사업연장승인일:2020.9,~2021.1.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7.25. 내역사업명:소상공인경영교육 사업기간:2020.1.~2021.3. 사업연장승인일:2020.12.16.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06.26.
소공인 특화지원 (4131-318)	2018	27,005	32	민간경상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공인특화지원 사업기간:2018.1.~2019.3.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19.2.28. 반납보고서제출일:2020.12.29.
	2020	49,344	1,993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역사업명: 공동기반시설구축 사업기간:2020.1.~2021.3. 사업연장승인일:2020.4.14.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6.12.
소상공인 재기지원 (4131-319)	2020	171,488	62	민간경상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역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기간:2020.1.~2021.3. 사업연장승인일:2020.10.5.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7.28.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4131-321)	2018	11,132	44	민간경상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기간:2018.1.~2019.6. 사업연장승인일:2018.12.7.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19.2.28. 반납보고서제출일:2020.12.29.
	2019	14,996	59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상공인포털 사업기간:2019.1.~2019.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06.21. 내역사업명: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 사업기간: 2019.1 ~ 2019.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06.21.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교부 및 반납현황				피보조·피출연기관 등	비고
	교부 연도	전체 교부액	반납액	예산 과목		
	2020	18,513	3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상공인포털 사업기간:2020.1.~2020.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6.2. 내역사업명: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 사업기간:2020.1.~2020.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6.2.
중소기업 디지털일자리 지원 (4131-324)	2020	2,000	158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중소기업디지털일자리지원 사업기간:2020.1.~2021.1. 사업연장승인일:2021.1.5.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9.22.
시장상권 경영혁신 지원 (4154-304)	2015	159,312	12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기간:2015.1.~2015.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16.2.29. 반납보고서제출일:2023.9.20.
	2016	180,025	46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기간:2016.1.~2017.11. 사업연장승인일:2017.10.10.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17.2.27. 반납보고서제출일:2024.7.16.
	2017	196,776	2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사업기간:2017.1.~2017.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18.3.2. 반납보고서제출일:2019.11.22.
	2019	274,234	242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 사업기간:2019.1.~2020.12. 사업연장승인일:2019.12.5.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06.21. 내역사업명: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기간:2019.1.~2020.10. 사업연장승인일:2020.7.7.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교부 및 반납현황				피보조·피출연기관 등	비고
	교부 연도	전체 교부액	반납액	예산 과목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2.6.30.
	2020	582,601	718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 사업기간:2020.1.~2020.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2.6.30.
소진기금 기본경비 (7277-200)	2017	3,620	6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진기금 기본경비 사업기간:2017.1.~2017.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18.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3.8.
	2019	4,994	21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진기금 기본경비 사업기간:2019.1.~2019.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10.10.
				민간 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소진기금 기본경비 사업기간:2019.1.~2019.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10.10.
	2020	6,105	3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진기금 기본경비 사업기간:2020.1~2020.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08.14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7277-201)	2019	1,586	4	민간 경상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사업기간:2019.1.~2019.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0.3.2. 반납보고서제출일:2023.08.14.
	2020	2,551	14	민간 경상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내역사업명: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사업기간:2020.1.~2020.12. 사업연장승인일:- 실적・정산보고서제출일:2021.2.25. 반납보고서제출일:2023.8.14.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　출〉

16.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사업(신규, 종료): 수요예측 미흡으로 인한 연도 중 잦은 사업변경 부적정 등

가. 개　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내역사업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2,387억 1,400만원 중 2,387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9)]

[2024년도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한시)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소상공인성장지원	294,625	281,339	-	281,339	281,193	-	146	1,962,42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00	238,714	-	238,714	238,714	-	-	-

나. 검토의견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연중 여러 차례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구상 시에는 현재 활동 중이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26만명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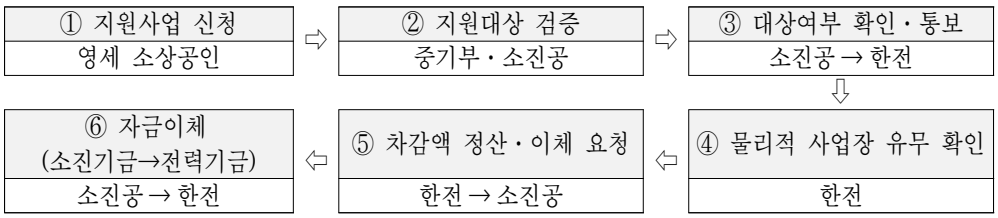
7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2024.1.)]

□ 사업개요(안)
○ (지원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명
○ (지원단가) 사업자 당 20만원 한도

□ 추진체계 및 제출서류
○ (추진체계) ①(소상공인)한전·소진공에 요금차감 신청 → ②(소진공)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한전 통보 → ③(한전)고지서상 전기요금 차감*
* 고지서 청구내역에 전기요금 차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0,000 등) 별도 표기

〈사업 프로세스(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 2024.1.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매출기준 등 사업대상을 3배 이상이나 확대(3,000만원→6,000만원→1억 400만원)하고, 고지서 등의 증빙절차를 완화하며, 지원금액을 확대(20만원→25만원)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내용 변경 내역]

구 분	1차·2차 공고 (2024.2.15.~7.7.)	3차 공고 (2024.7.8.~9.1.)	4차 공고 (2024.9.2.~12.31.)
매출기준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1억 400만원 미만
주요 변경 사항	(직접)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한도액 이상 고지서 첨부	(직접) 한전 고객번호 제출 (비계약) 월 1.2만원 증빙인정	(공통) 고객번호 없이 신청 6,000만원 이하 업종제한
신청건수 (누적)	58만 7,000건	75만 8,000건	124만 3,000건
지원건수 (누적)	31만 6,000건	48만 7,000건	86만 7,000건
집행실적 (누적)	632억 4,000만원	974억원	2,258억 1,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당초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가 사업기간 동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함.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대상 확대 이유로, 사업 도중에 지원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나,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에 대한 분석 및 사업수요 추계가 미흡하였고 과다계상으로 인한 집행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종료 전에 지원금액을 소급하여 늘린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 수를 과다추계하거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 및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구체적으로는 당초 지원대상 기준인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수를 126만 5,000명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 신청자수는 58만 7,000명, 지원자 수는 48만 5,000명으로 각각 46.4%, 38.3%에 불과하였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수도 258만 3,000명으로 예상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자 수는 124만 3,000명 실제 지원자 수는 89만 6,000명으로 각각 48.1%,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소상공인 전기요금 매출기준 변경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추정치]

공고일	매출 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 수(추정)	지원금액
2024.2.15.	3,000만원 이하	126만 5,000명	최대 20만원
2024.7.8.	6,000만원 이하	198만 7,000명	
2024.9.2.	1억 400만원 미만	258만 3,000명	
2024.11.1.	상동	상동	최대 25만원

주) 비활동 업체,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신생기업 제외한 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사업의 지원 대상 예상 대비 실적]

매출 기준	예상 지원 대상 수	실제 지원 실적	비율
3,000만원 이하	126만 5,000명	48만 5,065명	38.3%
3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72만 2,000명	23만 9,108명	33.1%
6,000만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59만 6,000명	17만 1,796명	28.8%
합계	258만 3,000명	89만 5,969명	34.7%

주) 비활동 업체,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신생기업 제외한 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였는데 원칙적으로 국고 반납되어야 할 예산을 사업변경을 통해 집행한 것이고,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대해 자체실적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종료를 앞둔 11월부터 지원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기존에 20만원을 지원 받았던 대상에게 소급적용하였는데, 이는 사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보임.[80]

그러나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보조금이 교부되는 만큼 국가 보조금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미교부잔액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반납 받도록 하고 있는데,[81] 연말 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변경을 통해 국고로 반납되어야 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 부진으로 인해 연도 중에 사업대상 확대, 지원금액 상향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수차례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목표 대비 지원실적만 보고 100% 초과 달성하였다고 성과평가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80)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도중에 지원 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지원 대상 확대는 지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원 단가 상향은 2024년에 전년대비 6% 증가한 월별 평균 최대전력을 고려하였다고 밝힘.

8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Ⅱ. 사업성과평가

성과항목 :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효과성 제고			달성률 : 100%
목표	100점	실적	100점

주요추진 노력 및 성과

◇ 주요성과
- 수혜자 중심의 **7가지 자체개선** 사항 발굴·개선
- 적극행정 통해 **124.3만명 신청완료** 및 **86.7만명 지원완료**('24.12월 말 기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선실적 목표달성**(140%)

○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4가지 개선사항

구 분	주요 개선사항
신청대행	· 모바일 본인인증기술 및 실시간 자동검증 기능 마련 · 기존 온라인신청과 콜센터를 활용한 **유선 신청대행 체계 신설**
고객번호생략	· 지급심사에 필요한 정보(한전 고객번호) 사전확보 · 지급시스템 매칭·전담인력 활용하여 **검증자료 조기확보**
증빙확대	· 신청 직후 수집된 약 3백여개사 증빙 전수조사 · 조사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신속반영하여 **증빙인정범위 확대**
영수증 간소화	· 월 1.2만원 이상 영수증 한장'으로 최대2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증빙 부담 최소화**

○ AI기술활용 및 홍보방식 개선, 업종제한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3가지

구 분	주요 개선사항
AI 보이스봇	· 통화내역, 주요키워드분석 등 AI기술 활용 · AI보이스봇 자동안내 서비스를 신설(신규 홍보방안 마련)
홍보방식 개선	· 기존 문자위주의 개별 홍보방식을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으로 전환 · 기존 대비 약 33% 예산절감
업종제한	· 사업취지를 고려,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업종제한 지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실적 목표달성**(101%)

○ 3차례에 걸친 단계적 **매출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상향**(최대 20만원 → 25만원)을 통한 **정책효과성·신청률 제고**

* **(매출기준)** 연매출 3천만원(2.15~) → 6천만원(7.8~) →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9.2~)

구 분	1차·2차 공고(2.15~)	3차 공고(7.8~)	4차 공고(9.2~)
매출기준	3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1억4백만원 미만
주요 개선사항	(직접)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한도액 이상 고지서 첨부	(직접) 한전 고객번호 제출 (비계약) 월 1.2만원 증빙인정	(공통) 고객번호 없이 신청 6천만원 이하 업종제한
신청건수	58.7만개사	75.8만개사	124.3만개사
지원건수	31.6만개사	48.7만개사	86.7만개사
집행실적	632.4억원	974억원	2,258.1억원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고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이 사업과 유사한 소상공인 경상비용 지원사업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본예산 2,037억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5,659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의 연도 중 변경을 지양하고 사업수요를 면밀히 추산할 필요가 있음.

17.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오픈 지연 부적정

가. 개 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통합·개방하고 소상공인 통계를 제공하며 상권정보 및 소상공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23억 4,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2)]

[2024년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345	2,345	-	2,345	2,345	-	-	2,345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①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개방)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수급·연계하고, 가공·융합하며, 민간에 일부 개방하고, ② (소상공인 통계 제공 등) 소상공인 통계를 대국민·내부에 제공하며, ③ (맞춤형 서비스) 기존 입지분석서비스 이외에 신규 서비스로서 사업장 경영진단, 맞춤형 정보제공, 특색 상권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것임.

이는 사실상 2006년부터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중기부 및 소진공 이외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임.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9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구매 등’을 위해 2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8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131-327)(소상공인정책관)

[상권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 비교]

	상권정보시스템(AS-IS)	빅데이터 플랫폼(TO-BE)
데이터	■ 11종*, 약 200만개 * 상가업소, 매출, 인구, 교통, 부동산, 임대시세, 소득, 지리정보, 행정 ■ 폐쇄적 데이터 제공·운영	■ 18종*, 약 650만개 * 현행DB + POS, 신용카드, 관광, 배달, 택배, 포털, SNS(비정형) 등 ■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생태계 창출
서비스	■ 상권분석 서비스 - 단순 정보 제공 수준 - 정보 문해력 필요 - 연계 지원서비스 부족 - 관리자 관점의 운영 효율화	⇨ ■ 상권분석 서비스(기존) * 향후 분석 항목, 차원 고도화 예정(2025년~) ■ 내 사업장 경영진단 서비스(신규) ■ 이용자 맞춤형 정보 안내(신규)
정책분석	■ 소상공인 통계 정보 부족으로 실태파악 및 적시 지원 미흡 ■ 단순 상가정보 외 수급 불가로 성과측정 불가	■ 전국 소상공인 통계·분석 정보 제공 * 지역별·업종별 통계분석 대시보드 제공 ■ 소상공인24 연계, 빅데이터 기반 정책 성과측정 및 신규 정책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못하고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6개월의 보완을 거쳐서야 정식으로 홈페이지가 공개되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업관리 미흡으로 인해 플랫폼 공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3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계약요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조달청) 후 조달청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8월에야 계약이 체결되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당초 사업기간을 8개월(240일)로 계획하였으나, 데이터 가공·연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으며, 2024년 6월 30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음.

또한 2024년 7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구축사업을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83] 연말

까지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당초 사업기간보다 3개월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 후 곧바로 공개되지 못하였음. 시범오픈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11월 29일에야 개시하였고 정식오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구축사업이 종료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공개하지 않은채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오픈 지연 사유로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관 데이터 협업을 통해 구축하는 대형 정보화 사업으로 21개 정부·공공기관의 데이터 수급 및 정제·점검 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고, 시스템 완성도 제고를 위해 내부직원 - 주무관청, 컨설턴트, 지자체·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전문가 대상으로 시범운영·의견도출 및 개선기간이 필요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플랫폼의 오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의 수급 및 정제·점검,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특히 구축사업이 당초보다 3개월이 연장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축사업의 종료 시 산출물은 플랫폼을 시범운영 형태로라도 공개할 수 있는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어야 함.

즉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구축사업의 진척이 저조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계약기간 재연장 또는 지체상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고 유지보수·운영 사업을 개시한 것임.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플랫폼 구축사업의 지연 및 품질 저하가 초래되는 집행관리 상의 문제점이 다수 있었음.

① 동 구축사업은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구축사업으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가 포함된 3단계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주감리를 통해 요구정의단계감리를 생략하고 설계·종료단계만 반영된 2단계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였음. 이는 플랫폼의 설계 및 구축 단계에서 요구사항 및 과업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의 연장 및 산출물의 완성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② 동 구축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방식(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으

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5월, 6월 두차례 '2024년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경쟁입찰을 공고하였으나, 모두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로 수행되어 정보화사업 전문 위탁관리자에게 정보화사업의 기획·집행·사후관리 단계에서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였음.[84] 그런데 동 구축사업의 사업기간을 3개월을 연장하여 6월 30일에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사업관리를 담당하는 PMO 용역은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4월 30일에 종료하였음.

PMO 용역의 경우 사업 막바지 2달간 집행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의 관리·감독 없이 PMO 용역사업을 중간에 종료하여 용역사업을 내실 있게 완료하지 못하여 효과성이 반감된 것으로 보임.[85]

③ 빅데이터 플랫폼을 실제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내실 있게 구축 완료하기 이전에 구축사업을 종료하고 동일한 업체와 운영·유지보수를 체결하였는데, 운영·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 실제 플랫폼을 정식 오픈하지 못하여 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에 미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시 당초 계획 대비 시스템 오픈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보시스템 감리 및 PMO의 관리·감독을 통해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8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021.4.

85) 중소벤처기업부는 PMO 용역은 4월 30일에 계약이 종료하였으나, 과업 완료 이후 검수평가를 진행시 ‘사업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PMO역할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마무리하기로 조건부 합의’를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진행되었다는 의견이나, 본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관리 사업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종료하도록 하고, PMO 용역업체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에도 용역사업을 (무상으로) 더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용역업체의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보임.

18.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 등

가. 개 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조 7,100억원 중 3조 5,591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9%)되고, 1,508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86)]

[2024년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00	3,710,000	-	3,710,000	3,559,150	-	150,850	4,220,000
일반경영안정자금	1,110,000	1,358,300	-	1,358,300	1,336,128	-	22,172	1,360,000
특별경영안정자금	1,800,000	1,624,077	-	1,624,077	1,495,398	-	128,679	1,790,000
성장기반자금	800,000	727,623	-	727,623	727,623	-	-	970,000
상생성장지원자금	-	-	-	-	-	-	-	100,000

나. 검토의견

(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소상공인 융자가 부실화되는 상황에서 대출부실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한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 경영애로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금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8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 지원(융자)(4151-301)(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요]

○(개요)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직접대출 방식의 정책자금 원금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자 납부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 ○ (요건) ① 다중채무자(2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② 전기 대비 매출액 감소, 중·저신용(NCB 839 이하), ③ 공단자체 모니터링 부실징후 업체 중 1개 이상 요건 해당 ○ (내용) 이용 중인 대출 잔여 상환기간에서 5년(60회) 추가연장, 약정금리+0.2%p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7월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87] 같은 해 12월 상환연장 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바 있음.[88]

구체적으로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기존 상환연장 대상요건 중 '업력 3년 이상,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음. 이를 통해 경영애로[89]를 겪고 있지만 상환가능성[90]이 있는 소상공인은 직접대출 형태의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91]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p를 가산하도록 하였음.[92]

또한 12월부터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 중 ① 다중채무 요건을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에서 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로 완화하였고, ② 매출액 요건도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환연장 제도의 확대는 현재 수취하여야 할 원리금 상환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87)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7.3.

88)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2024.12.4.

89)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됨.

90)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됨.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함.

9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2024.8.16.

92) 종전에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저금리 시기에 대출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해 금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음.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93]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연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수입(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9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결산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산은 14조 5,936억원, 부채는 21조 63억원으로 순자산이 △6조 4,128억원으로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음. 직접대출 잔액 7조 3,560억원과 직접대출 부실률 13.77%를 고려할 때 2024년 직접대출 잔액 중 정상 상환이 예상되는 6조 3,431억원을 모두 상환받더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자금 부실률이 2021년 1.6%, 2022년 2.8%, 2023년 10.0%, 2024년 13.8%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부실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실이 미래로 이연되어 실현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시 상환연장 수혜기업의 부실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심사 기준을 고도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부실이 미래로 이연·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리스크 관리에 임하는 한편, 채권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체 재무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93)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환기간 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에게 상환능력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상환을 지속 유도하는 제도로, 기금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상환연장시 가산금리를 부과(정상차주 +0.2%p, 단기연체차주 +0.4%p)하고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실제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해당 차주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정책자금의 융자부실은 미래로 이연될 뿐 상환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고 정책자금의 관리비용만 증가하며 재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9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면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의 계획 대비 실적 부진

2024년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티몬·위메프 대응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목표 대비 지원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시 신속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자금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나이스 신용평가점수(NCB) 91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리 7% 이상의 대출 또는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이 안되는 대출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5%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여 지원하는 사업임.[95]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요]

○(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대상)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한도) 동일기업(개인·법인) 당 5,000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000만원 이내 한도 적용)
○(금리) 연 4.5% 고정금리
○(기간) 운전자금 10년(거치기간 없음)
○(방식) 은행권 대리대출(15개 은행)
○(계획 및 실적) 2024년 목표: 5,000억원 / 실적: 2,491억원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당초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15개 은행권을 통해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대환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년 동안 2,491억원 지원하는 것에 그쳤음.

한편 2024년 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 기업의 판매기업 미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발생하자,[96]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액에 상응하는 저금리 융자지원을 시행하였음.

---

95) 관계부처 합동,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2024.1.17.

96) 2024년 7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였고, 티몬·위메프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7.22.)'으로 인해 일부 판매자가 상품계약을 취소하고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철수로 환불이 지연되는 등 상황이 악화된 바 있음.
※ e-커머스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규모
- 위메프·티몬 : (기업수) 4.8만개사, (피해금액) 1.3조원 → (업체당 피해) 2,658만원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개요]

구분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특별협약 프로그램
재원	재정	재정	자체 재원
지원한도	10억원	1.5억원 → 5억원	30억원
금리	3.4% → 2.5%	3.41% → 2.5%	금리: 3.9~4.5% → 3.3~4.4% 보증료: 0.5~1.0% → 0.5%
목표액	300억원→1,000억원	1,700억원	3,000억원
지원실적	1,014억원	465억원	1,033억원
지원건수	368건	1,130건	316건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을 통하여 저리 지원을 시행하고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금리 3.4%에 1,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2.5%로 낮추었음.

[2024년 e-커머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

○ (배경) 2024.7.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에 따른 소상공인 유동성 애로 등 피해 발생
○ (대상)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
○ (심사)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 (한도) 미정산 금액(금감원·공정위 확인) 이내 5억원 한도*
*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10.28.)에 따라 대출한도 확대(1.5억원→5억원)
○ (금리) 연 2.5% 고정금리*
* 추석 민생안정대책(2024.8.28.)에 따라 금리 인하(정책 기준금리→2.5% 고정금리)
○ (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현황) 1,130건, 465억원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e-커머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실적은 1,700억원 공급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465억원 지원에 불과하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역시 82건의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에 그쳤음.

[2024년 e-커머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개요]

○ (배경) 이커머스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 (대상) 이커머스 판매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고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원금상환 중이거나, 2025년 8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 (방식) 대출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1년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부여하고 그만큼 만기 연장 * 직접대출의 경우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한 경우 다음 회차부터 1년 유예 ** 대리대출의 경우 익월(T+1월)에 도래하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당월(T월) 말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금융기관(보증기관) 승인을 완료할 필요 ○ (요건)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등은 지원 제외하되, 발생한 연체(원금+이자)는 연체이자 해소 시 지원가능 ○ (지원절차) - (직접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개인은 비대면 전자약정, 법인은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시행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 후,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 (지원실적) 82건, 19.5억원 지원(2025.4.30.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 부진 이유로 소상공인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 금융권 대출을 선택함에 따라 신청이 부진하였고,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의 90% 이상은 미정산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1,000만원 미만)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은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융자 사업의 실적 부진은 결국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이라는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다른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수요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신속한 융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조속히 경감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19.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역과 다른 집행 및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전환 문제 등

가. 개 요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513억 4,800만원은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97]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시중 금융기관(지류) 및 전용 모바일앱(모바일·카드형) 등을 통해 판매되고, 개별가맹점에서 사용됨. 개별가맹점의 소상공인은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등)을 통해 환전을 대리요청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게 됨.

2024년까지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한국조폐공사), 카드형(KT), 모바일형(비즈플레이)으로 발행 및 운영 대행기관이 각기 상이하였으나, 2025년 3월부터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개시되고 한국조폐공사가 지류형·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2024년도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시장경영혁신지원	420,669	420,669	-	420,669	420,669	-	-	1,905,130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	351,348	-	351,348	351,348	-	-	458,673

나. 검토의견

(가)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계획에 없는 집행 변경 부적정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연도 중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9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소상공인정책실)

할인율과 규모를 국회 심사 시의 계획과 달리 조정하여 판매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이 국회가 당초 심사한 내용과 달리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5조원의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하여, 지류형 상품권은 비할인 또는 5%,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5% 또는 10% 할인판매 하는 내용의 계획안이 총 3,513억 4,8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24년 9월 당초 계획에 없던 '2024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지류형 상품권은 10%,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15%의 할인판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음.

[2024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개요]

□ 특별할인판매 개요
○ (할인기간) (1차) 2024.9.2.(월) ~ 2024.9.5.(목), (2차) 2024.9.9.(월) ~ 2024.9.30.(월)
○ (할인율·한도) (할인율) 지류 5 → 10%, 모바일·카드형 10 → 15% (대책에는 모바일·카드형만 발표)
○ (할인구매한도) 1인당 월 200만원
○ (할인규모) (1차) 지류 500억원, 디지털 2,500억원, (2차) 예산 소진 시까지

□ 2024년 특별할인판매기간 중 판매실적

(단위: 억원)

구분	지류	모바일	카드형	합계
비할인	978	3	2	983
5% 할인	782	-	-	782
10% 할인	5,241	99	74	5,414
15% 할인	-	2,833	3,921	6,754
소계	7,001	2,935	3,997	13,93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4조 3,092억원으로, 이 중 9월 특별판매기간 동안 판매 실적은 1조 3,933억원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함.

특히 특별판매기간 동안 계획보다 할인율을 인상하여 지류형 10% 할인판매 5,241억원, 모바일 15% 할인판매 2,833억원, 카드형 15% 할인판매 3,921억원 총 1조 1,995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특별판매기간 중 판매액의 대부분(86.0%)을 차지하고, 연내 총 판매액의 27.8%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보임.

[2024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판매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획액	판매실적			
			전체 판매 실적	1-8월 판매실적 (특별판매 제외)	9월 특별판매 기간 실적	10-12월 판매실적 (특별판매 제외)
지류	비할인	8,000	3,795	2,264	978	553
	5% 할인	6,000	17,697	15,545	782	1,370
	10% 할인	-	**5,241**	-	**5,241**	-
	15% 할인	-	-	-	-	-
	소계	14,000	26,732	17,809	7,001	1,923
모바일	비할인	-	5	0	3	2
	5% 할인	5,000	-	-	-	-
	10% 할인	5,000	5,120	3,599	99	1,422
	15% 할인	-	**2,822**	**0**	**2,833**	**-11**
	소계	10,000	7,947	3,599	2,935	1,413
카드	비할인	-	11	5	2	4
	5% 할인	17,000	-	-	-	-
	10% 할인	9,000	4,487	3,227	74	1,186
	15% 할인	-	**3,915**	-	**3,921**	**-7**
	소계	26,000	8,413	3,231	3,997	1,184
계		50,000	43,092	24,639	13,933	4,520

주) 음영 부분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에는 없었으나, 연도 중에 계획 대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금액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할인판매를 개최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안과 다르게 할인율을 높여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음.

[2025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개요]

□ 특별할인판매 개요

○ (할인기간) 2025.1.10.(금) ~ 2025.2.10.(월)

○ (할인율·한도) (할인율) 디지털 10→15% (지류 제외)

○ (할인구매한도) 1인당 월 200만원

○ (할인규모) 예산 소진시까지

(단위: 억원)

구분	지류	모바일	카드형	합계
비할인	739	-	70	809
5% 할인	1,135	-	-	1,135
10% 할인	-	-5	-6	-11
15% 할인	-	3,330	5,063	8,939
소계	1,874	3,326	5,127	10,3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6월 말 기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조 675억원으로, 이 중 1~2월 특별 판매기간 동안 판매 실적은 1조 327억원임. 특히 특별판매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8,453억원이 판매되었는데, 이 중 계획보다 할인율을 5%p 높인 디지털 15% 할인 판매가 8,393억원으로 특별할인판매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2025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판매현황]

(단위: 억원, 2025.6.30. 기준)

구분		계획액	판매실적		
			전체 판매 실적	1~2월 특별판매 기간	1~2월 특별판매 기간 제외
지류	비할인	8,000	1,699	739	960
	5% 할인	9,000	4,552	1,135	3,417
	10% 할인	-	-	-	-
	15% 할인	-	-	-	-
	소계	17,000	6,251	1,874	4,377
디지털	비할인	-	468	70	398
	5% 할인	23,000	-	-	-
	10% 할인	15,000	5,687	△10	5,697
	15% 할인	-	8,269	8,393	△124
	소계	38,000	14,424	8,453	5,971
계		55,000	20,675	10,327	10,34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넘어서서 발행가능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함.[9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온누리상품권 발행목표를 5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6월 현재 발행규모를 3조 5,000억원(지류형 1조 3,000억원, 디지털 2조 2,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 조정은 온누리상품권 재정보전과 직결되어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주된 심의사항이라는 점에서, 연도 중에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인 상품권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당초 심사내용과 달리 집행한 것이고 향후 계획안 심사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98) 할인율 5%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가능규모는 약 절반으로 감소하고, 할인율 10%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당초 계획의 약 6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됨.

또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의 잦은 조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오히려 향후 할인행사를 기대하여 상품권 구매시기를 늦추는 등 상품권의 정가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한 것과 달리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발행규모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온누리상품권발행 사업의 2024년 계획안은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액을 5조원으로 하면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1조 4,000억원(28%),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1조원(20%),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2조 6,000억원(52%) 발행하도록 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른바 '온누리상품권 깡')의 소지가 있는 지류형 상품권을 축소하고 발행·판매·회수가 전산 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2024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같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추가할인이 없는 경우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초 정책 추진방향과 배치됨.

2024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4조 3,092억원 중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이 2조 6,732억원으로 62%를 차지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7,947억원(18%),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8,413억원(20%)으로 그 비중이 낮은 상황임.[99]

[2024년 온누리상품권의 유형별 당초 판매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판매 계획(목표) (A)		판매 실적 (B)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B/A)
지류	14,000	(28%)	26,732	(62%)	191%
모바일	10,000	(20%)	7,947	(18%)	79%
카드	26,000	(52%)	8,413	(20%)	32%
계	50,000	(100%)	43,092	(100%)	8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임.

99) 발행액 기준으로는, 2024년 지류형 상품권은 2조 6,520억원 모바일 상품권은 7,947억원, 카드형 상품권은 8,413억원 발행되었음.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발행 이후 은행 등에서 판매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여 발행액과 판매액이 다르게 나타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발행 계획액 중 지류형 상품권의 비중을 2022년 57.1%, 2023년 42.5%, 2024년 28.0%로 축소하고 있으나, 실제 발행액 기준으로는 2022년 84.7%, 2023년 63.6%, 2024년 61.8%로 지류형 상품권의 비중을 축소하려는 계획에 비해 실제로는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발행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2025.6.30. 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지류	20,000	30,000	17,000	12,890	14,000	26,520	17,000	3,091
모바일	5,000	4,831	4,000	3,389	10,000	7,947	38,000	14,424
카드	10,000	560	19,000	3,963	26,000	8,413		
계	35,000	35,391	40,000	20,242	50,000	42,880	55,000	17,515

주 1) 2022년 발행계획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발행개시 이후 수립한 계획임
2) 2025년부터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발행·판매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및 사용에 대한 단속 철저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여 할인발행을 통해 지원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책효과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소상공인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인발행한 상품권을 특정 대상의 소상공인에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환급(이른바 '상품권 깡')과 주류 및 금지금(金地金) 등의 구매 등에 활용되어 목표했던 정책효과가 일부 반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먼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특정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이 마늘가게와 허위매장 2개소를 동원하여 이들 3곳이 월 192억원, 2년 간 총 1,300억원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고 62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100]

해당 지적이 제기된 이후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정유통 가맹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449개 업체 중 124개사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거나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구매가 제한된 주류[101]를 우회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 실태조사 개요]

◦ 조사개요: 1·2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조사 실시
- 1차: 5억원 이상 고액매출 가맹점 15개사 대상(2024.10.21.~30.)
- 2차: 1억원 이상 고액 매출 가맹점 347개사 및 주류소매업 의심 가맹점 87개사 대상 (2024.11.11.~12.11.)

◦ 조사결과: 조사대상 449개사 중 부정유통 134개사(30.1%) 적발
- 적발현황: 부정유통 134개사 중 부정환전·유령점포 등 고액매출 62개사, 주류의심 72개사 적발
- 부정유형: 부정환전 26개사, 유령점포 9개사, 사용구역 외 수취 25개사, 허위가맹(주류취급) 73개사, 조사기피 1개사 등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 실태조사 결과]

(단위: 개사, 2025.5.31.기준)

		대상	정상	적발						조치			
				계	부정환전	유령점포	구역외수취	주류취급	조사기피	고발	행정처분	자진취소	처분검토중
1차		15	6	9	7	1	1	-	-	7	8	-	1
2차	고액	347	304	43	14	7	21	1	-	14	30	12	1
	주류	87	15	72	-	-	-	72	-	-	44	28	-
계		449	325	124	21	8	22	73	-	21	82	40	2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편 2025년 1~2월에는 금 가격 상승과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이 맞물려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금 실물(금지금) 구매도 문제된 바 있음.[102] 금지금을 실물로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나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15%를 고려할 때 금지금 구매 후 판매하는 경우 5%p의 할인혜택이 발생하게 되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의 금은방을 통한 금 구매가 문제된 바 있음.

100) SBS, “전통시장서 원평균 매출 192억?...마늘가게 꼼수 걸렸다”, 2024.11.11.
SBS NEWS, “1천억원 대 온누리상품권 사들인 뒤... 보조금 62억원 꿀꺽”, 2025.4.15.

101) 온누리상품권의 업종제한 대상 중 주류 도매업 및 주류 소매업이 포함되어 해당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불가하나, 식자재 마트나 정육점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고 주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연합뉴스, “위스키 살 때 온누리상품권?...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처 논란”, 2024.10.20.)

102) 서울경제, “금값 얼만데 5% 싸게 산다니... 온누리상품권 꼼수 성지 더 키우나”, 2025.2.18.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설명절 특별 판매기간 동안 시계·귀금속 소매업(금은방)에서 6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졌음.

[2025년 설명절 특별판매 기간(1.10.~2.10.) 시계·귀금속 소매업의 온누리상품권 회수액]

(단위: 억원)

구 분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합계
회수(사용)금액	2.9	57.0	2.2	62.1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구매 주체의 왜곡도 발생하였음. 온누리상품권을 자기 의사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아동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경우가 발생한 것임.

2024년 0~5세 아동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76억 3,600만원, 6~10세 아동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169억 4,700만원인데, 해당 아동의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부모 또는 지인의 1인당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명의가 활용된 것으로 추측됨.[103]

[연도별 아동(0~10세)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현재	
		0~5세	6~10세	0~5세	6~10세	0~5세	6~10세	0~5세	6~10세	0~5세	6~10세
지류형	인원	4,605	8,122	2,843	4,873	1,298	2,624	1,286	2,846	-	-
	금액	7,394	13,917	6,532	12,312	7,085	15,513	7,636	16,947	-	-

주) 2024년은 연초부터 11월 30일까지의 구매실적을 반영한 것이고, 2025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금지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할인발행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상품권 가맹점으로의 소비를 유도하여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정책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사용 등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임.[104]

---

103) 국민일보, “갓난아이가 사고 금 구입에 쓰고... 변질되는 온누리상품권”, 2025.5.14.
SBS BIZ, “아기가 온누리상품권 사고 위고비 구매?... 부정사용 그만”, 2025.5.20.

104)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처는 시장보다는 고가 소비처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취급하는 전통시장 인근 약국은 ‘온누리상품권 성지’라 불리고 있다. 비만 치료관리 플랫폼 ‘삐약’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공지까지 게재됐다.
전통시장 인근 가전 매장에서 최신 스마트폰이나 세탁기 등을 10% 이상 할인받아 구매하는 사례도 잦다. 커뮤니티엔 ‘온누리 결제 가능 주유소’, ‘금 거래 가맹점’ 정보도 활발히 공유된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취지에 어긋나는 곳들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술원, 전자담배 판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환의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환과정에서 대행업체 간의 분쟁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려워졌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온누리상품권 대행운영 계약이 2024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플랫폼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동 사업은 2026년 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축·운영,[105]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결제 지원, 콜센터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려는 것임.

상품권 발행액에 기준 수수료율 0.527%를 곱한 금액을 사업 예산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이관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 3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을 오픈하였음.

그러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환 과정에서 업체간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에 지장과 사용자의 불편이 초래되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유사사업 수행 시 이번 온누리상품권 전환 시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점, 병원, 골프장 등 12개 업종에서도 지난해부터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사용 가능 가맹점 수는 지난달 12만 곳을 넘어섰다.(국민일보, “갓난아이가 사고 금 구입에 쓰고... 변질되는 온누리상품권”, 2025.5.14.)

1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에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충전식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존 플랫폼의 기능을 추가·개선하여야 하므로 ‘구축·운영’으로 표기함. 실제로 제안요청서의 ‘통합 운영’ 과업 범위에는 앱·웹에서의 필수 지원사항, 소비자·가맹점 전용 기능 지원사항, 유통·통계 분석지원 서비스 제공 등 통상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과업범위가 다수 기재되어 있음.

첫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사업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명시적으로 별도 편성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수수료를 기초로 수행되었는데, 플랫폼 구축, 플랫폼 운영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각각 명시적으로 편성하지 않아 발행량 증가에 따라 면밀하게 비용이 산정되지 못하게 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온누리상품권 운영 계약이 2024년 말 종료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카드형·모바일→디지털)함에 따라 새로운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의 사전 준비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구축 등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수수료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한 통합운영 대행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였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모바일) 개별의 플랫폼 운영에 따른 소비자 불편·혼란과 이중 관리 등 운영 간 비효율 개선 필요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앱, 시스템, 결제체계 등)을 통합 운영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과 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사업 개요
- 사업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2년간 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결제 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지원, 정보보호 관리 등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557억 7,000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값)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4.12.31.	2025.1.31 ~2025.12.31.	2026.1.1. ~ 2026.12.31.	계약체결일 ~ 2026.12.31.
판매목표액(추정)	-	3.8조원	4.0조원	7.8조원
사업비(추정)	-	271.7억원	286억원	557.7억원
비고	통합플랫폼 개발	사업 1차년도	사업 2차년도	-

① 사업비는 상품권 발행(판매) 예상액(7.8조원)의 기준 수수료율 0.715%(VAT포함)로 산출한 금액으로, 추후 계약금액은 발행(판매)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사업비는 충전, 환불, 가맹점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 발급비(필요시), 간편결제 도입·운영 비용, 전담 콜센터 운영 등 플랫폼 사용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

③ 사업비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실 발행(판매)액에 따른 수수료율*로 계산하여 지급

* 수수료율(VAT포함) = 총 계약금액/총 발행예정액(2년간)

**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실 발행·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 발행액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은 없음

④ 2025년도 이후 사업예산은 정부 예산 확정범위 내에서 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발행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부 예산지원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 중단 시 당사자 간의 협의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2024.6.

동 사업은 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구축 등 및 기존 데이터 이관, ② 신규 플랫폼에서의 충전·환불·가맹점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등 발행·결제 지원, ③ 운영 전담인력 및 콜센터 등 운영, 가맹점 관리. 홍보·마케팅 지원 및 부정유통 관리 등의 업무를 사업범위로 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대해 별도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거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통합 책정하였음.

그러나 사업의 내용 중 발행·결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 상품권 발행액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업예산을 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임.[106)]

현행 방식과 같이 플랫폼 구축사업이나 운영 지원 사업의 대금을 판매·결제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에 연동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경우에 분리산정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참고로 동 사업의 제안요청서에서는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상품권의 실제 발행·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발행액에 따라 수수료율의 변동은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의 수수료율 0.527%[107)]은 상품권 발행규모와 무관하게 유지됨. 그런데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규모(3.8조원)였으나, 이에 더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상생페이백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1조 3,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발행될 예정임.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축·운영사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국회의 심사를 우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과 무관한 고정비용 성격의 사업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에 연동하여 사업대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면밀하게 산정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임.[108)]

---

106)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구축 등 및 기존 데이터 이관' 사업은 상품권 발행에 선행하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축사업 필요 예산은 향후 발행할 상품권 규모와 관계없이 기능 및 투입인력 등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사업비용을 상품권 발행액과 연동시킬 필요가 없고, '전담인력 및 콜센터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지원' 사업은 상품권 발행액보다는 상품권 문의 건수 및 가맹점 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상품권 발행액이 아니라 별도의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사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107) 계약 상 수수료율: 0.527% = 제안요청서 상 수수료율 0.715% × 투찰률 73.7%

108)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구축·운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통합발주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명확하게 사업설명자료 등에 명시되어 국회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각 사업마다 별도의 사업금액 산정 기준을 책정하고 참여업체가 이를 기초로 총액을 제안하도록 하여 사업을 수행하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분쟁을 매끄럽게 조율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통합운영 대행용역 사업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한국조폐공사를 선정하고 9월초 계약을 체결하였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통합운영 대행용역 사업 추진 경과]

○ (2024.6.27. ~ 2024.7.25.)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 (2024.7.30.) 제안서 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4.7.31.) 최종 개찰 (조달청 나라장터)
○ (~2024.8.21.) 기술 협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조폐공사)
○ (2024.9.3.) 계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조폐공사)
○ (2025.2.15.) 기존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중단 및 데이터 이관(비즈플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폐공사)
○ (2025.3.1.)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오픈 (한국조폐공사)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당초 제안요청서 상으로는 2024년 11월까지 신규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이관 등을 마치고 12월에 베타서비스 등 최종 점검을 한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 플랫폼을 정식으로 출시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시점을 2025년 1월 1일 자정부터 개시할 예정이었음.

[당초 계획 상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추진 일정]

추진내용	~2024.7.	2024.8.	2024.9.	2024.10.	2024.11.	2024.12.	2025.1.~
운영기관 선정평가 및 협상, 계약 체결	■						
신규 플랫폼 개발 (인수인계, 이관, 연동 등)		■	■	■	■		
신규 플랫폼 최종 점검 (베타서비스 등)						■	
신규 플랫폼 정식 출시							■
운영 및 모니터링, 민원대응 등							■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2024.6.

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1달 가량 늦어지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데이터 이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통합 플랫폼 오픈일을 3월 초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기존 사업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은 2025년 3월에서야 운영이 개시되었음.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① 시스템 설계도(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이전 문제, ② 불법 하도급 논란, ③ 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 업무·손실 비용 논란 등이 제기되었음.[109]

① 시스템 설계도(ERD) 이전 문제

ERD 자료는 기존 온누리상품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관계를 시각화한 일종의 플랫폼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자가 기존 온누리상품권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ERD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ERD 자료에 대한 정보보안 확약서 작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3개월 가량 지연되었음.[110]

[ERD 자료 관련 논의 경과]

(2024.9.) 신규 사업자의 기존 사업자에 대한 ERD 자료 요청
- 신규 사업자(한국조폐공사)가 기존 온누리상품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중 하나로 기존 사업자(KT, 비즈플레이(주))에게 ERD를 요청
- 추가 회의 및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카드형은 ERD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으나 모바일은 분석이 원활하지 않아 ERD 재요청
(2024.10~12.) ERD 제출자료에 대한 확약서 작성 요청
- 기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업자(비즈플레이(주))가 ERD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규사업자(조폐공사)가 정보 보안을 확약할 것을 요구
(2024.12.) 신규 사업자(조폐공사)가 기존 사업자(비즈플레이(주))에게 ERD 관련 확약서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ERD 최종 제공시기가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어 ERD자료는 미활용되었다고 주장함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9) 서울경제, “사업자 갈등에 온누리상품권 불똥... 소상공인·이용자 혼란 우려”, 2024.12.18.
전자신문, “새해 온누리상품권 삐걱... 사업자 교체에 운영 차질 우려”, 2024.12.19.
디지털데일리, “온누리상품권 진실 공방 2라운드... 조폐공사 vs 비즈플레이, 반박에 재반박”, 2024.12.23.
매일일보, “온누리상품권 갈등 심화... 기술 탈취 둘러싼 진실 공방”, 2025.1.9.
ZDNET코리아, “온누리상품권 논란에 소상공인만 불안... 비즈플레이 vs 조폐공사 갈등 심화”, 2025.1.5.

110)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ERD 자료 관련 논란에 대해, “기존사업자(비즈플레이(주))는 ERD가 고유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신규 사업자(조폐공사)가 외부 기관(용역업체 등)에 유출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계약조건(제안요청서)에 따라, 해당 ERD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동 사업 산출물이므로 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ERD를 수취하여 신규 사업자(조폐공사)에 전달하였으며 보안 확약 및 비밀유지 협약 등에 따라 관리 중에 있고, 해당자료는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 목적 달성 후 공단 감독 하에 파기 예정이다.” 라고 설명함.

② 불법 하도급 논란

신규 사업자의 하도급이 당초 계획 요청서 관련 논란이 제기되었음.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차세대 지급결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공고하고 도급 업체를 선정하였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에서는 "하도급은 허용되나 선불전자지급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111] 기존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의 도급 계약의 내용에 선불전자지급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 하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112]

③ 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업무·손실 비용 논란

신규 사업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오픈 지연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가 신규 플랫폼 오픈 시까지 사업을 연장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추가비용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주장한 바 있음.[113][114]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사업 시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두 업체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자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사업자간 협력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1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2024.6., p.19.

112)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하도급 관련 논란에 대해,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용역은 기 구축한 공사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주한「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는 '전자금융업'을 의미하며,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용역의 경우 '전자금융업'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도급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내용(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함.

113)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일정 연기 관련 추진 경과
- (2024.11.) 신규 사업자(한국조폐공사)가 통합 플랫폼 오픈일자 변경 요청
- (2024.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존 사업자(KT, 비즈플레이)에 운영기간 연장 요청
- (2024.12.) 기존 사업자와의 운영기간 연장 합의, 변경 계약

114) 기존 사업자는 계약연장을 통해 발행수수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수취하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업무나 손실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하기로 했는데, 선물하기 기능, 기존 모바일상품권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해 일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연장으로 추가 과업(설명절 특판행사 등)을 수행함에 따른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기존 사업자가 신규 플랫폼 오픈 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2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재위탁하지 않도록 하고, 상품권 판매 권한을 특정 업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하거나 계약관계법령에 따른 검토 없이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는데,[115] 1년 만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운영과 관련하여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임.

셋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이 2025년 3월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단절, 환급액의 등록기한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3월 초 오픈 시에도 앱 오류 등 사용자 불편이 제기되는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환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였음.

①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 중단 문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이 2025년 1월에서 2025년 3월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기존 온누리상품권 발행 일시중단으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 및 소상공인 매출진작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116]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025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선물하기·기업구매가 중단되었고,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모두 2025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체 서비스(구매·환불·결제·결제취소 등)가 중단되었음.

종전의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데이터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이관을 위한 서비스 중단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2025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2025.1.10.~2.10.) 이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 매출진작의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117]

---

1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앞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재위탁하지 않도록 하고, 상품권 판매 권한을 특정 업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하거나 계약관계법령에 따른 검토 없이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제로페이를 통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법인과 판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2023.12., p.113)

116) 뉴스1, “하필 설 대목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중단 현실로”, 2025.1.12.

117)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중단은 앱 데이터 이관에 따른 필수절차로, 앱 출시 연기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가 생긴 것은 아니며, 유사사례인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에도 2024년 4월 7일간 데이터 이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용 등을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함.

②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정식 오픈 직후 불안정한 시스템 운영

2025년 3월 1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의 정식 오픈된 이후에도 접속·결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잔액 이관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있음.[1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2월 28일 사전 점검을 위해 가오픈하여 정상 운영을 확인하였으나, 오픈 당일인 3월 1일 접속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접속 시 로그인 지연 및 종료현상이 발생하였고, 시스템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오류사항 등의 재점검 및 안정화를 통해 장애 대처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함.

③ 온누리상품권 캐시백 환급 시 과도하게 짧은 등록기한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환 이전에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없던 2025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캐시백 환급 사업(1~4차)’을 추진하면서,[119] 캐시백의 사용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하여 이용자가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120]

즉 ‘온누리 상품권 명절 환급’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캐시백 금액을 이용자의 계정에 바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선물함으로 지급한 뒤 이용자가 직접 등록해야만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짧은 등록기한(1~3차: 5일 내 미등록 시 소멸) 및 보유금액 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121]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액 154억 9,000만원 중 17억 1,900만원이 등록기한 내 등록되지 않아 소멸된 것임.

---

118) 서울경제, “먹통 된 온누리상품권... 통합 앱 오픈 첫날 접속 오류 속출”, 2025.3.1.
조선일보, “두달 늦게 시작한 ”온누리“ 앱, 첫날부터 먹통이었다”, 2025.3.3.
연합뉴스TV, “잔액이관 지연·결제오류 반복... 디지털온누리 불안한 출발”, 2025.3.8.

119)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설 명절 15% 환급행사 개요]
○ (행사기간) 2025.1.10.(월) ~ 2025.2.10.(금)
○ (행사내용)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환급
- 결제 누적액 최소 7,000원 이상, 회차별 최대 2만원, 최대 8만원 한도 지급
-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
○ (환급액) 154.9억원

120) 서울경제, “온누리상품권 17억원어치 소멍...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캐시백”, 2025.5.18.

121)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명절 환급 1~3회차의 환급액 등록기간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통합 및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존 앱 중단 및 이관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수령기한을 짧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또한 등록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환급액’은 이후 온누리상품권 발행예산으로 재사용하였다는 의견임.

[2025년 설 명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5% 환급행사 현황]

차수	지급기간	선물등록 기한	소멸(등록기한종료) 기준 시점	지급액	미수령액
1차	2025.1.10.~1.17.	5일	지급일로부터 5일	29억 575만원	3억 7,383만원
2차	2025.1.18.~1.24.			38억 6,697만원	4억 617만원
3차	2025.1.25.~1.31.			34억 8,069만원	5억 4,272만원
4차	2025.2.1.~2.10.	1개월*	지급일로부터 1개월	52억 3,300만원	3억 9,666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종합할 때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환과정에서 업체간 분쟁 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에 지장과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전환과정의 문제점을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　타】

2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시정요구 65건(중복 5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4건·주의 17건·제도개선 44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4	17	44	5	60
예비비	-	-	-	-	-	-	-
합계	-	-	4	17	44	5	60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정요구사항 60건에 대해 5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6.6%)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60	58	96.6	2
예비비	-	-	-	-
합계	60	58	96.6	2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중소벤처기업부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2) 정부는 각종 펀드출자 사업의 연말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출자 사업의 미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의 운용실적과 성과를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